

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186-01

ISBN -979-11-5598-067-5 9339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 간 사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100년 전 온 민족이 비폭력정신으로 일제강점에 저항했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된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를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정부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광복군을 창설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광복 후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아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통성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번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추진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하나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 100년의 역사』 연구에 착수하여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친 한국의 국방 관련 역사를 국군의 이념, 조직과 정책, 전력증강과 국방개혁, 대비태세와 민군 관계를 대주제로 한 총 10개의 소주제를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기억하고,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을 통해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방 관계자들의 정책수립과 군과 국방에 관심 있는 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시 의병이 일어나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전쟁을 펼쳤고, 1910년 한일병탄 시에는 의병과 뜻있는 이들이 해외로 나가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부대를 창설하여 독립전쟁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들을 규합하여 독립전쟁을 지도하였고, 광복군을 창설하여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바로 이들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제헌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정통성과 법통성을 갖춘 군대로 출범하였습니다.

광복군과 국군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에 군사기구나 제도는 잘 마련되었으나 정부 재정의 궁핍과 모병 여건의 제한으로 실질적인 군대를 편성하지 못하다가, 1940년 충칭 임시정부 시기에 비로소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국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광복군은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였으나 중국, 영국, 미국과 연합작전을 통해 독립전쟁을 펼침으로써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미군정 시기 군정청의 「국군준비계획」에 따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고,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군이 출범하여 부대는 증편되었으나 장비와 물자, 탄약은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유년기를 채 벗어나기도 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유엔군과 함께 위국헌신의 정신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우리 국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군사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격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군의 성장 과정에는 항상 국민의 따뜻한 애정과 배려가 있었으며, 국군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난 지역에 파병되어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시부터 2000년대까지의 국방 역사를 국방 관련 주제별로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편찬한 공간사(公刊史)가 없어 군 내외로부터 관련 자료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있을 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한 권의 책으로 내놓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이 책을 펴낸 집필자(김승기, 최정준 박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감수와 교열을 맡아주신 허남성·장삼열·박민형·서우덕·윤규식·이필중·김주미님, 그리고 감수와 자료 제공을 해주신 국방부와 합참 정책부서, 각 군 연구소 및 역사기록관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장 조 성 훈

목 차

서 문 · 1

제 I 부 국군의 이념, 조직과 정책

제1 장 창군과 이념

- 제1 절 항일투쟁 정신과 사상 · 9
 - 1. 일본제국의 한국 침략 · 9
 - 2. 한국인의 의병투쟁 정신과 독립전쟁 사상 · 11
- 제2 절 광복군의 창설과 이념 · 21
 - 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 21
 - 2.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이념 · 24
- 제3 절 국군의 창설과 이념 · 32
 - 1. 대한민국정부 수립 · 32
 - 2. 국군 창설과 이념 · 39

제2 장 국방조직 변천

- 제1 절 대한민국임시정부기(1919. 4.~1945. 8.) · 47
 - 1.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군사조직 · 47
 - 2. 충칭 임시정부 시기 군사조직 · 53
- 제2 절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 60
 - 1. 미군정의 국군 창설 준비 · 60
 - 2. 국군 창설 · 67
- 제3 절 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 74
 - 1. 국방부분부 · 74
 - 2. 육군본부 · 76
 - 3. 해군본부 · 77
 - 4. 공군본부 · 79

- 제 4 절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 80
1. 국방부분부 • 80
 2. 연합참모본부와 합동참모본부 • 81
 3. 육군본부 • 83
 4. 해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84
 5. 공군본부 • 85
- 제 5 절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 • 85
1. 1970~80년대(1970. 1.~1989. 12.) • 85
 2. 1990년대 초(1990. 1.~1993. 2.):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 연구(818계획)」 시행 • 90
- 제 6 절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 94
1. 국방부분부 • 94
 2. 합동참모본부 • 97
 3. 각 군 본부 • 99
 4.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 105

제 3 장 국방정책 변천

- 제 1 절 대한민국임시정부가기(1919. 4.~1945. 8.) • 107
1.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군사정책 • 107
 2. 충칭 임시정부 시기 군사정책 • 111
- 제 2 절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 115
1.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정책과 주한미군 철수 • 115
 2. 국방정책의 태동 • 120
- 제 3 절 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 123
1. 6·25전쟁기(1950. 6.~1953. 7.) • 123
 2. 전후 정비기(1953. 7.~1961. 5.) • 129
- 제 4 절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 135
1. 국내외 정세 • 135
 2. 국방정책 기본방향 • 138
- 제 5 절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 • 143
1. 박정희 정부(1970. 1.~1979. 12.) • 143
 2. 전두환 정부(1980. 1.~1988. 2.) • 146
 3. 노태우 정부(1988. 2.~1993. 2.) • 149

제 6 절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 153

1.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추진 • 153
2.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예 선진국방 추진 • 159
3. 문재인 정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추진 • 164

제Ⅱ부 전력증강과 국방개혁

제 4 장 전력증강 추진

제 1 절 대한민국임시정부기(1919. 4.~1945. 8.) • 169

1.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 169
2. 충칭 임시정부 시기 • 174

제 2 절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 179

1. 미군정의 국군 창설 준비 • 179
2. 국군 창설 • 183

제 3 절 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 200

1. 6·25전쟁기(1950. 6.~1953. 7.) • 200
2. 전후 정비기(1953. 7.~1961. 5.) • 203

제 4 절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 210

1.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 210
2. 군비확충 • 211
3. 향토예비군 창설 • 212

제 5 절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 • 214

1.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 시행 • 214
2. 방위산업 육성 • 216
3. 전력증강사업(제1·2·3차 율곡사업) • 223
4. 예비군의 전력화 및 정신전력 강화 • 234

제 6 절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 236

1. 전력증강 사업 및 방위산업 육성 • 236
2. 국방정보화 추진 • 260
3. 현재의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 273

제5 장 국방개혁 추진

제1 절 노태우 정부: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818계획)」 추진 • 279

1. 추진 배경 • 279
2. 목표 및 추진 과제 • 281
3. 추진 경과 • 282
4. 추진 결과 • 286

제2 절 김영삼 정부: 「21세기 국방태세 연구」 추진 • 286

1. 목표 및 추진 분야 • 286
2. 추진 경과 및 결과 • 287

제3 절 김대중 정부: 「5개년 국방발전계획」 추진 • 292

1. 목표 및 추진 중점 • 292
2. 추진 경과 • 293
3. 추진 결과 • 295

제4 절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추진 • 299

1.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2020」 • 299
2.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 303
3. 박근혜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 309
4.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 310

제Ⅲ부 전쟁 수행과 군사대비태세

제6 장 전쟁 수행

제1 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 319

1.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과 군제 • 319
2. 북간도 독립군의 독립전쟁 • 320
3. 임시정부의 의열투쟁과 한·중 연합 • 323
4. 한국광복군의 대일 선전포고와 대일항전 • 326

제2 절 6·25전쟁 • 331

1. 전쟁의 배경 • 331
2. 6·25전쟁의 수행 • 333
3. 6·25전쟁의 휴전과 영향 • 347

제3절 베트남전쟁 파병 • 351

1. 파병의 배경 • 351
2. 베트남전쟁 파병: 제1차 파병~제4차 파병 • 352
3.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수행 • 363
4. 베트남전쟁 파병의 영향과 의의 • 367

제7장 군사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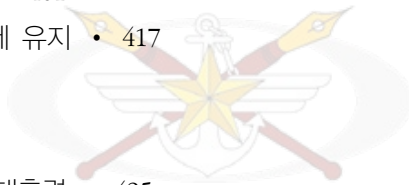
제1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 371

제2절 전면전 대비태세 • 375

1. 휴전선 및 수도권 도발 대비계획 • 376
2.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수립 • 381
3.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 390

제3절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 400

1. 대침투작전 수행 • 401
2.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 417



제8장 교육 훈련

제1절 학교 교육 및 부대훈련 • 425

1. 독립군 및 광복군 양성교육 • 425
2. 미국식 교육훈련제도 도입기(광복 이후~6·25전쟁 이전) • 429
3. 미국식 교육훈련체계 모방기(6·25전쟁~1960년) • 434
4. 교육훈련체계 구축기(1961년~1989년) • 443
5.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기(1990년~현재) • 455

제2절 정신교육 • 464

1. 군 정신전력 체계 • 464
2. 군 정신교육의 변천 • 467

제Ⅳ부 국민과 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

제9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제1절 국방비와 국민경제 •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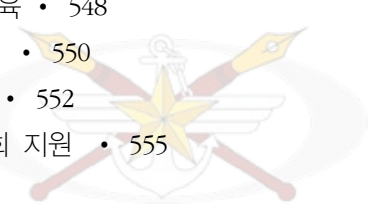
1. 국방비와 국방기획관리제도 • 501
2. 미국의 군사·경제원조 지원 • 505
3. 국방예산 편성과 운용의 변천 • 511
4. 국방예산과 국민경제 • 521

제2절 군 병영문화와 복무여건 개선 • 526

1. 군 병영문화 개선 • 526
2. 병영시설 현대화와 군 의료체계 개선 • 538

제3절 국가시책 지원 • 547

1. 문맹자 퇴치와 공민교육 • 548
2. 국군의 국토개발 참여 • 550
3. 재해복구와 대민지원 • 552
4.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지원 • 555



제10장 국방외교와 국제협력 활동

제1절 국방교류협력 활동 • 563

1. 주변 강대국과 국방교류협력 • 564
2. 지역별 주요 국가와 국방교류협력 • 565
3. 국제 비확산·대확산활동 • 569
4. 다자안보협력활동 • 571

제2절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 573

1. 개요 • 573
2. 부대 단위 파병 • 573
3. 개인 단위 파병 • 585

제3절 다국적군 평화활동 • 586

1. 개요 • 586

- 2. 부대 단위 파병 • 589
- 3. 개인 단위 파병 • 607
- 제 4 절 국방협력 활동 • 608
 - 1. 아크부대 파병 • 609
 - 2. 아라우부대 파병 • 611

맺 음 말 • 615

참고문헌 • 639

찾아보기 • 668



표 목차

〈표 1-1〉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13
〈표 1-2〉 안중근 의사(장군)가 동포에게 보내는 글	17
〈표 1-3〉 한국광복군 성립보고서 내용(일부)	28
〈표 1-4〉 대한제국군으로부터 대한민국국군으로의 인적 계승표	30
〈표 1-5〉 「대한민국 건국강령」 제1장 총강	31
〈표 1-6〉 「한국광복군 공약」	31
〈표 1-7〉 「한국광복군 서약문」	32
〈표 1-8〉 「헌법 전문」	38
〈표 1-9〉 「국방부 훈령 제1호」	42
〈표 1-10〉 「국군 3대 선서」	43
〈표 3-1〉 카이로 회담(the Cairo Conference) 선언문(1943. 11. 27. 공포)	115
〈표 3-2〉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	125
〈표 3-3〉 「휴전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문(일부)」	132
〈표 3-4〉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후 공동성명문	133
〈표 3-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전문	133
〈표 3-6〉 국가목표(1966년 설정)	141
〈표 3-7〉 국가목표(1973년 2차 개정)	144
〈표 3-8〉 국방목표	145
〈표 3-9〉 국방목표(제1차 개정)	147
〈표 3-10〉 국방목표(1994. 3. 10. 제2차 개정)	154
〈표 4-1〉 연대 창설 현황(1946. 1. 15. ~11. 16.)	180
〈표 4-2〉 조선해안경비대 기지사령부 설치현황(1946. 8. 16.~1947. 9. 24.)	183
〈표 4-3〉 사단 창설 현황(1949. 6. 20.)	185
〈표 4-4〉 항공기 보유 현황(1950. 6. 25.)	197
〈표 4-5〉 호국군 창설 현황(1949. 1. 11.)	198
〈표 4-6〉 중공군 개입 전까지 부대 재편성 및 증편현황	201
〈표 4-7〉 국군 감군 현황	204
〈표 4-8〉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현황(1961~1971)	209

〈표 4-9〉 「한국군현대화계획」에 의한 도입 추진 장비 목록	215
〈표 4-10〉 제3차 율곡사업 추진중점	231
〈표 4-11〉 제1·2·3차 율곡사업(1974~1992) 추진결과와 대북한 전력 비교	233
〈표 4-12〉 군사력 건설 단계별 목표 및 중점(1992~1998)	238
〈표 4-13〉 전력정비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1992~1998) 추진실적	240
〈표 4-14〉 주요 전력증강(전력화) 추진실적(1998~2002)	242
〈표 4-15〉 국방정보화 정책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267
〈표 5-1〉 국방 정보화 추진 목표	297
〈표 5-2〉 국방개혁 추진 주요 성과(2010~2012)	305
〈표 5-3〉 국방개혁 2.0 대과제 목록 현황	314
〈표 5-4〉 국방개혁 2.0 완성 후 미래 모습	314
〈표 6-1〉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의 정치적 차이	322
〈표 6-2〉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	327
〈표 6-3〉 6·25전쟁 시 보병부대 전력 현황	340
〈표 6-4〉 6·25전쟁 지원국가 현황	350
〈표 6-5〉 제1차 파병 시 한미 간 합의사항	353
〈표 6-6〉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임무와 기능	358
〈표 6-7〉 연도별 베트남전쟁 파병 현황	361
〈표 6-8〉 대대급 이상 부대 작전 현황(파병 이후~1972. 12.)	365
〈표 6-9〉 장비 현대화 실적	369
〈표 6-10〉 베트남전쟁 참전 연 병력 및 피해 현황	370
〈표 7-1〉 1970년대 대간첩작전 지휘·협조체계	372
〈표 7-2〉 통합방위 지휘·협조체계	373
〈표 7-3〉 6·25전쟁 전(1950. 6. 24.) 38도선 상 국군의 부대 배치 현황	376
〈표 7-4〉 작전계획의 의미	387
〈표 7-5〉 OPLAN 5027의 변천	388
〈표 7-6〉 한미군사위원회의 지휘 관계	391
〈표 7-7〉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1호	393
〈표 7-8〉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2호	394
〈표 7-9〉 전략적 전환계획과 전략동맹 2015의 차이점	397
〈표 7-1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일지	398

〈표 7-11〉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399
〈표 7-12〉 1960년대 적 침투 현황	406
〈표 7-13〉 북한의 땅굴 침투 현황	407
〈표 7-14〉 1960년대 대지상침투작전 전과 현황	408
〈표 7-15〉 대통령 훈령 제18호에 의한 지휘 책임	410
〈표 7-16〉 1970년대 북한의 침투 현황(1971~1980)	414
〈표 7-17〉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명칭	420
〈표 7-18〉 북한의 핵실험 현황	420
〈표 8-1〉 초창기 육군·해군 주요 군사학교의 창설과 재창설 현황	432
〈표 8-2〉 1951년~1958년 교육 훈련 학교 창설 현황	435
〈표 8-3〉 광복 이후~1960년대 초의 육군 장교양성 과정	436
〈표 8-4〉 육군 신병훈련소 창설 현황	437
〈표 8-5〉 야전훈련사령부 훈련 현황	442
〈표 8-6〉 1960년~1980년 초 육군부사관 교육의 변천	446
〈표 8-7〉 실전적 교육 훈련 여건조성	460
〈표 8-8〉 국군 정신전력 체계도	465
〈표 8-9〉 국군맹서(國軍盟誓)	470
〈표 8-10〉 초창기 정훈 관련 주요 간행물 현황	471
〈표 8-11〉 6·25전쟁 기간 중 발간된 간행물 현황	475
〈표 8-12〉 1960년대 연도별 정훈교육 중점	480
〈표 8-13〉 1960년대 발간 정훈교재 목록	481
〈표 8-14〉 1970년대 연도별 정신교육 목표와 중점	485
〈표 8-15〉 베트남전쟁 기간 중 발간한 정훈교재 현황	488
〈표 8-16〉 베트남전쟁 중 위문 공연 현황	489
〈표 8-17〉 1990년대 사병용 기본정훈교육 교재	494
〈표 9-1〉 국방기획관리제도 정비 및 발전과정(1979~2010)	504
〈표 9-2〉 미 군원의 배정 및 국내 도입절차	507
〈표 9-3〉 1959년~1967년 미 군사원조비 운영	509
〈표 9-4〉 베트남전쟁 시 미국의 한국지원 현황	510
〈표 9-5〉 한국 국방예산의 자체 부담률(1953~1962)	513
〈표 9-6〉 한국 국방예산의 재원조달(1964~1975)	515

〈표 9-7〉 한국군 현대화계획 자금배정 내역	516
〈표 9-8〉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 국방예산의 재원(1970~1987)	517
〈표 9-9〉 연도별 국방예산 운용(2000~2017) 현황	520
〈표 9-10〉 군사기술의 민수 파급 사례	523
〈표 9-11〉 연간 방산 수출 실적 및 수출 품목	524
〈표 9-12〉 K-계열 제도 장비 창정비 및 성능개량 사업 통합의 효과	525
〈표 9-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병영정책	532
〈표 9-14〉 박근혜 정부 병영문화 혁신 방안	535
〈표 9-15〉 연도별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현황	536
〈표 9-16〉 연도별 자살 예방 전담 교관 양성 현황	537
〈표 9-17〉 병영생활관 발전과정	541
〈표 9-18〉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542
〈표 9-19〉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543
〈표 9-20〉 「국군 보건의료발전계획(2017~2021)」 중 군 병원 개편 방향	546
〈표 9-21〉 국군 창설~1970년 군의 공민교육 현황	549
〈표 9-22〉 한미합동 도로공사 실적	552
〈표 9-23〉 군 대민지원 현황(2000~2011)	554
〈표 9-24〉 서울올림픽경기대회 국방부 지원체계	557
〈표 9-25〉 미 해군 전력 시험 및 대잠초계기(P-3) 운용	561
〈표 10-1〉 국방협력 협정체결 현황	566
〈표 10-2〉 국방 교류협력 현황(2005~2015)	567
〈표 10-3〉 국가별 군사조약·약정 체결 현황(1948~2015)	568
〈표 10-4〉 우리나라의 국제 군축·비확산활동 참여 현황	570
〈표 10-5〉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	572
〈표 10-6〉 국제 평화유지활동 비교	573
〈표 10-7〉 국군의 유엔 PKO 부대 단위 참여 현황(2017년 4월 말 기준)	574
〈표 10-8〉 동명부대의 주요활동(2018년 11월 현재)	581
〈표 10-9〉 한빛부대의 주요활동	584
〈표 10-10〉 국군의 유엔 PKO 개인 단위 파병 현황(2017년 4월 현재)	585
〈표 10-11〉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 활동 참여 현황(2017년 현재)	588
〈표 10-12〉 국군의료지원단의 국적별 환자 진료 현황	590

〈표 10-13〉 청해부대의 주요활동	606
〈표 10-14〉 한국군의 개인 단위 다국적군 파병 현황(2017년 전반기 현재)	608
〈표 10-15〉 국군의 국방협력 활동 현황(2017년 전반기 현재)	609
〈표 10-16〉 아크부대의 주요활동	610
〈표 10-17〉 아라우부대의 주요활동	611



도표 목차

〈도표 2-1〉 초기 임시정부의 군제와 군구조	48
〈도표 2-2〉 초기 임시정부의 국무원과 군무부 편제표	49
〈도표 2-3〉 창설 초기 광복군 조직체계도	54
〈도표 2-4〉 한·중 합작 시기 광복군 통수체계도	56
〈도표 2-5〉 말기 광복군 조직 기구도	59
〈도표 2-6〉 국방사령부 기구표	60
〈도표 2-7〉 남조선 국방경비대 기구표	62
〈도표 2-8〉 해방병단본부 기구표	63
〈도표 2-9〉 통위부 기구표	65
〈도표 2-10〉 통위부 부대 편성표	67
〈도표 2-11〉 국방부 기구표	69
〈도표 2-12〉 국군 편성표	70
〈도표 2-13〉 국방부분부 기본 조직도	91
〈도표 2-14〉 국방조직도	97
〈도표 2-15〉 합동참모본부 조직도	99
〈도표 2-16〉 육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101
〈도표 2-17〉 해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102
〈도표 2-18〉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조직도(2011. 6. 15.)	103
〈도표 2-19〉 해병대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103
〈도표 2-20〉 공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104
〈도표 2-21〉 2018년 현재 상비병력 수준 및 감축계획	105
〈도표 3-1〉 중·장기 국방발전 목표	157
〈도표 4-1〉 대한광복군총영 조직도와 북로사령부 편성표	171
〈도표 4-2〉 한국군 전력증강 사업 추진 연표	224
〈도표 4-3〉 방위사업청 개청(2006. 1. 1.) 이후 방위산업정책 변화	244
〈도표 4-4〉 「방위사업법」 개정(2014. 6. 1.) 전후 기능 비교표	253
〈도표 4-5〉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 모습(예시)	256
〈도표 4-6〉 한국의 연도별 방위산업 수출액 현황	258

〈도표 4-7〉 국방연구개발 및 주요 무기체계 발전단계	259
〈도표 4-8〉 국방정보화 추진 개념도	264
〈도표 4-9〉 국방통합C4I체계도	265
〈도표 4-10〉 전장관리 정보화 개념도	268
〈도표 4-11〉 자원관리체계 정보화 기능과 구성	269
〈도표 4-12〉 국방 아키텍처 구축 현황	270
〈도표 4-13〉 육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274
〈도표 4-14〉 해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275
〈도표 4-15〉 공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276
〈도표 4-16〉 주한미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277
〈도표 5-1〉 상부 지휘구조의 변천과정(「818계획」 이전)	281
〈도표 5-2〉 육군 부대구조 변화	300
〈도표 5-3〉 해군 부대구조 변화	301
〈도표 5-4〉 공군 부대구조 변화	301
〈도표 5-5〉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계획	312



사진 목차

〈사진 1-1〉 박승환 참령의 모습	12
〈사진 1-2〉 휘순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16
〈사진 1-3〉 안중근의 순국 직전 유묵(보물 제569-23호)	17
〈사진 1-4〉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선언서」	21
〈사진 1-5〉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기념	25
〈사진 1-6〉 한국광복군의 어깨총 도열 장면	26
〈사진 1-7〉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1948. 8. 15.)	38
〈사진 1-8〉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육·해군 사열식(1948. 8. 15.)	39
〈사진 1-9〉 정부수립 직후의 국방부 청사(구 동양척식주식회사, 현 KEB 하나은행 명동 사옥 자리)	40
〈사진 1-10〉 백범 김구가 쓴 친필 盡忠報國(진충보국)	43
〈사진 1-11〉 용산역 순시에 나선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1948. 11.)	45
〈사진 2-1〉 유동열 통위부장(중앙)을 비롯한 조선경비대 간부들	64
〈사진 2-2〉 대통령 합참 부대기 수여(1990. 10. 1.)	93
〈사진 2-3〉 ‘합동참모본부’ 현판식(1990. 10. 5.)	93
〈사진 2-4〉 방위사업청 개청(2006. 1. 1.)	96
〈사진 3-1〉 김구와 장개석 회담 내용 중국측 기록 문서(1943. 7. 26.)	114
〈사진 3-2〉 카이로 정상회담에서 미·영·중 3국 정상	114
〈사진 3-3〉 이승만 초대 대통령(우)과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	122
〈사진 4-1〉 청산리 전투에서 의군부가 사용한 태극기와 독립군기, 그리고 무기들	172
〈사진 4-2〉 홍범도부대가 사용한 수류탄과 탄환	172
〈사진 4-3〉 최초로 인수한 LCI 상륙정	182
〈사진 4-4〉 미제 M1 및 카빈 소총과 일제 99식 소총	186
〈사진 4-5〉 701 구잠함(백두산함)	191
〈사진 4-6〉 AT-6 고등훈련기	194
〈사진 4-7〉 AT-6 기념비행을 마친 조종사들	194
〈사진 4-8〉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차	214
〈사진 4-9〉 육군 제26사단에서 실시된 ‘제2차 번개사업 시사회’(1972. 4. 3.)	218

〈사진 4-10〉 M16소총 생산공장 건설현장(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219
〈사진 4-11〉 M16소총 생산공장(국방부 조병창) 준공식(1973. 11. 29)	219
〈사진 4-12〉 최초의 국산 지대지유도탄(백곰) 시험발사 장면 (1978. 9. 26.)	221
〈사진 4-13〉 국산 105mm 개량 곡사포를 순시하는 박정희 대통령	227
〈사진 4-14〉 KF-5E/F 1호기 출하 행사(1982. 9. 9, 김해기지)	230
〈사진 4-15〉 한국형 K-1 전차(일명 88전차)	233
〈사진 4-16〉 세계정상급 수준 K9 자주포	239
〈사진 4-17〉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246
〈사진 4-18〉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식	247
〈사진 4-19〉 공중조기경보기(Peace Eye)	248
〈사진 4-20〉 국내독자 개발 K2 전차(흑표)	251
〈사진 4-21〉 신형 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II 발사 장면(2012. 4. 19.)	252
〈사진 4-22〉 도산 안창호함 잠수함(KSS-III) 진수식 행사(2018. 9. 14.)	255
〈사진 4-23〉 한국 공군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장면	255
〈사진 4-24〉 한국형 전투기 KFX 실제 크기의 모형(2019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	256
〈사진 6-1〉 맥아더의 한강방어선 순시	334
〈사진 6-2〉 낙동강 전선의 소년병	337
〈사진 6-3〉 국군과 유엔군의 평양 입성 기념 퍼레이드	339
〈사진 6-4〉 흥남철수작전	342
〈사진 6-5〉 휴전회담 당시의 판문점	346
〈사진 6-6〉 정전협정 서명식	348
〈사진 6-7〉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	349
〈사진 6-8〉 제1이동외과병원 창설식	352
〈사진 6-9〉 파병 한국군 태권도 시범	354
〈사진 6-10〉 남베트남인에 대한 기술교육	356
〈사진 6-11〉 수도사단 파병식	357
〈사진 6-12〉 백마부대 환송식	359
〈사진 6-13〉 백구부대 함정 교대식	362
〈사진 6-14〉 작전 중인 청룡부대 대원들	363
〈사진 6-15〉 파월 개선 장병 시가행진	367

〈사진 7-1〉 휴전선 철책 경계근무	378
〈사진 7-2〉 주한 미 제7사단 고별식	379
〈사진 7-3〉 전시 미 증원전력	389
〈사진 7-4〉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교환 각서 서명	395
〈사진 7-5〉 생포 무장공비 김신조	411
〈사진 7-6〉 북한 제1땅굴(고랑포)	413
〈사진 7-7〉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416
〈사진 7-8〉 제1연평해전	418
〈사진 7-9〉 인제지역 추락 북한 무인기	419
〈사진 8-1〉 월로스 한인비행학교	428
〈사진 8-2〉 KMAG의 기관총 교육	430
〈사진 8-3〉 육군 제3훈련소 신병교육	438
〈사진 8-4〉 도미 유학생 환송식	441
〈사진 8-5〉 제2사관학교 제3사관학교로 통합	445
〈사진 8-6〉 육군 제2훈련소 신병교육	447
〈사진 8-7〉 해군사관생도 수업 장면	448
〈사진 8-8〉 해병대 설한지 훈련	450
〈사진 8-9〉 한미 포커스 레티나 연습	452
〈사진 8-10〉 헬리콥터 중대 창설	455
〈사진 8-11〉 육군 제1군단 BCTP 훈련	459
〈사진 8-12〉 육군 KCTC 훈련	460
〈사진 8-13〉 한미연합 공중훈련	463
〈사진 9-1〉 한미원조 한미협정서 체결	508
〈사진 9-2〉 어네스트 존 미사일	515
〈사진 9-3〉 T-50 출고식	524
〈사진 9-4〉 노무현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현장 방문	531
〈사진 9-5〉 콘센트 막사와 생활관	539
〈사진 9-6〉 BTL사업으로 완공된 군 관사	540
〈사진 9-7〉 국군의무 통합부대 창설식	544
〈사진 9-8〉 군의 해안도로 건설	550
〈사진 9-9〉 군의 원유 폐기물 수거작업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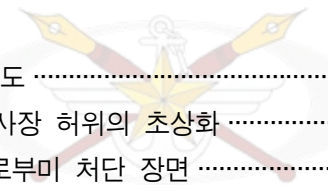
〈사진 9-10〉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 식전행사 지원	558
〈사진 9-11〉 칼빈슨 항공모함	560
〈사진 10-1〉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창설식	575
〈사진 10-2〉 국군의료지원단 창설식	577
〈사진 10-3〉 레바논 평화유지단 부대기	580
〈사진 10-4〉 국군의료지원단 부대기	590
〈사진 10-5〉 동의부대 개원식	594
〈사진 10-6〉 제마부대 1진 파병식	599
〈사진 10-7〉 자이툰부대 창설식	601
〈사진 10-8〉 청해부대 해적퇴치 연합훈련	607
〈사진 10-9〉 아라우부대 수송선 복귀	612



지도 목차

〈지도 1-1〉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경로	24
〈지도 2-1〉 1920년대 무장독립군 단체 활동지역	51
〈지도 4-1〉 초기 광복군 지대 활동지역(1943~1945)	175
〈지도 4-2〉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인면전구작전 참가도	178
〈지도 4-3〉 정대 및 경비해역(1948. 8. 15.)	190

그림 목차



〈그림 1-1〉 박승환 참령 순국도	12
〈그림 1-2〉 13창의대진소 군사장 허위의 초상화	14
〈그림 1-3〉 안중근의 이토히로부미 처단 장면	16
〈그림 6-1〉 청산리전투	321
〈그림 6-2〉 윤봉길의 홍콩 공원 의거	324
〈그림 8-1〉 합동군사대학교 상징물	456

영어 약어

A

AEW Air Expeditionary Wing 비행단
AG Australia Group 호주그룹
AR Able Response 생물방어연습
ARF Asia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G Area Supply Group 군수지원단
ATT Arms Trade Treaty 무기거래조약
AWACS Air Warning and Control System 조기경보통제기

B

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전투지휘훈련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C

CAOC Combined Air Operation Center 연합항공작전본부
CFA Combined Forces Army 한미 야전군사령부
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연합군사령부
CFLCC Coalition Forces Land Component Command 동맹군 지상구성군사령부
CINCPAC Commander in Charge PACOM 미 태평양지역 사령관
CJTF Combined Joint Task Forces 연합합동부대
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CMF Combined Maritime Forces 연합해군사령부
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권한 위임사항
CWIG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한미 연합이행실무단

D

DIM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Economy 외교, 정보, 군사, 경제
DPKO Department of Peace Keeping Operations 유엔 평화유지활동국
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한미억제전략위원회

E

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동아시아전략구상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반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미 경제협조처

F

FE Foal Eagle 독수리연습
FEBA 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 전투지역전단
FMS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FSSG Force Service Support Group 전투군무지원단
FTC Field Training Center 야전훈련사령부
FTX Field Training Exercise 야외기동훈련

G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OP General Outpost 일반전초
GP Guard Post 감시초소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항법장치

H

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헤이그행동규약
HISF 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I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FET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동티모르 다국적군
IRBM Intermediate Range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
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t Forces 국제안보지원군
ISF Iraq Security Forces 이라크 치안전력

J

JLCOM Japan Logistical Command 주일군수사령부

K

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ATUSA Korea Augmentation to the USA Army 카투사

KCTC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과학화전투훈련장

KMAG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미군사고문단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

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쿠르드 자치정부

L

LOA Letter of Assistance 후급약정서

LST Landing Ship Tank 상륙함

M

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원조 프로그램

MRAP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지뢰방호차량

MC Military Committee 군사위원회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군사위원회회의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MEF Marine Expeditionary Force 해병원정군

MIF Multinational Interim Force 다국적 임시군

MINURSO Mission de las Naciones para la organization de UN Referendum
en el Sahara Occidental 유엔 서부사하라 선거 감시단

MINUSTAH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

MNFPO Multinational Forces Peace Operation 다국적평화활동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SA Mutual Security Act 상호안전보장법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NF-I Multi-National Forces-Iraq 이라크다국적군 사령부

N

NA National Authority 국가통수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NPT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NSG Nuclear Supply Group 핵공급그룹

O

OCS Officer Candidate School 간부후보생

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운영전문가그룹

OPCPM Operational Command 작전지휘권

OPCON Operational Control 작전통제권

OPLAN Operation Plan 작전계획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략첩보국

P

PPBS Planning, Programing, Budgeting 국방기획제도

PPBEES Planning, Progra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국방기획관리제도

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지방재건팀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R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환태평양훈련

RNTC Reserve Noncommissioned Training Corps 학생군사교육단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urse 학도군사훈련단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연합전시지원

S

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수색 및 구조훈련

SANACC State-Army-Navy-Air Coordinating Committee 4부조정위원회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
SDD Seoul Defense Dialogue 서울안보대화
SEATO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남아시아조약기구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OF Special Operation Forces 특수작전부대
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안정정책구상 회의
SWAG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전략동맹 공동실무단 회의

T

TDF Tokyo Defense Forum 동경안보포럼
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총수명주기체계관리
TS Team Spirit 팀스피리트훈련
TOR Terms of Reference 관련 약정

U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UFL Ul-chi Focus Lens 을지포커스 렌즈
UNAMI United Nation Assistance Mission for Iraq 유엔 이라크지원임무단
UNAVEM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유엔 앙골라검증단
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유엔 레바논잠정군
UNITAF Unified Task Force 유엔다국적군
UNMIS United Nation Mission in Sudan 유엔 수단임무단
UNMISS United Nation Mission in South Sudan 유엔 남수단임무단
UNOSOM-I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I 유엔 소말리아임무단
UNTAET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동티모르 유엔 과도정부
UNTCOK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유엔임시한국위원단
UNTSO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유엔 정전감시단
USAFIK US Army Forces in Korea 주한미육군사령부
USOM United States Operating Mission 미국 대외지원단
UTC Unit Training Center 부대훈련소
UFG Ul-chi Freedom Guardian 을지프리덤가디언

W

WA 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 체제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부·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 ◇ 부 : 제Ⅰ부, 제Ⅱ부, 제Ⅲ부, ...
- ◇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 ◇ 항 : 1, 2, 3, ...
- ◇ 목 : 가, 나, 다, ...

2. 용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가. 독자가 일반 국민과 군인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쉬운 용어로 썼으나, 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용어에는 각주에 해설을 달았다.

이해가 어려운 전문용어에는 해설을 달았다.

나. 북괴, 중공, 월남, 대만 등은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북한, 중국, 베트남, 자유중국으로 각각 표기하였다.

다. 2개 국가를 줄여 표기할 경우, 남북, 한미는 ·없이 표기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한·일·한·중 등과 같이 ·을 넣어 표기하였다.

라. 한·미 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 한미동맹 등 한미 뒤의 글자는 붙여서 표기하였다.

마. 아래 용어는 정식명칭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칭을 혼용 사용했으나, 장별로 최초 표기 시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했다.

1)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1·21사태

2) 10·19여순사건: 여순사건

3) 한·미 연합군사령부: 한·미 연합사,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 한·미 야전사 등

3.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의 해당 한자를 넣거나 해설·보충한 경우 표기
- “ ” :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 글을 인용하거나 중요 사건·숙어·강조의 표시
- 『 』 : 단행본 서명(書名) 표시, 외국인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 「 」 : 특정 문건명, 조약·협정·각서·선언 표기 (절 단위로 최초 표기시는 「 」로 묶어서 표기, 이후는 빈도를 고려하여 「 」 없이 표기)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의 한글표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될 수 있는 대로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하고 장별로 처음 나올 때는 ()안에 원어를 병기하였다.

5. 영어 약어는 장별로 처음 나올 때에는 한글(영어 약어: 영어 전체 글자) 형식으로 표기하고, 이후로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나, 경우에 따라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영어 약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영어 약어는 종합하여 목차 다음에 표기하였다.

6. 기 타

- 가. 인용문은 다소 어법이 많지 않더라도 원본 그대로 인용했으며, 필요시 () 또는 각주를 이용하여 보충 설명을 했다.
- 나. 주석은 각주로 달았으며, 인용근거는 인용 시마다 저자(발행기관), 책명(자료·논문명), (발행처 소재지: 발행처 또는 인쇄소, 발행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기술했다.
- 다. 표(Table), 그림(Figure), 사진(Picture), 도표(Diagram)는 각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으며, 각 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표기하였다.

서 문

현대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국내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각각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국방정책’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므로 다른 것들에 비해 단연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을 물리쳤으며, 국내외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비태세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근현대에는 국권을 상실하기도 했고, 민족의 분단과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도 했으나, 우리민족과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했으며,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정도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다. 우리 국방은 국가와 민족 생존과 번영의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때를 같이하여 『국방 100년의 역사』 연구에 착수하여 마침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기억하고,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방 100년의 역사』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100년간 한국의 국방 관련 역사를 주요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점에서 『국방 100년의 역사』를 연구 편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비폭력 무저항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며 독립을 요구했으나 바라던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족지도자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쟁하여 자신의 힘으로 독립

을 쟁취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9월에 다른 지역 임시정부들과 논의를 거쳐 통합된 단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임시정부는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전쟁 노선을 시정방침으로 설정하고 군사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0년 9월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광복군에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항거하여 일어난 의병과 한일병탄 이후 국외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한 독립군들이 참여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광복군은 그들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았다. 광복군은 중국·영국·미국군과 연합작전(훈련)을 전개함으로써 연합군의 대일전 승리와 조국의 광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광복 후에는 미군정 시기 국군 창설 준비과정에 광복군의 조직과 제도가 반영되었으며, 국군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공통된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의 요직에 등용되었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기도 전에 연합국에 의해 민족분단이라는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정부수립과 더불어 탄생한 우리 군은 유년기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인한 6·25전쟁으로 동족상잔의 참화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에도 ‘일면국방 일면건설’의 자세로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무기수출국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그간 『한국군사역사의 재발견』(2015. 11.),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2015. 11.),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2019. 6.) 등을 발간한 바 있다. 『한국군사역사의 재발견』은 한국의 전 역사(고대~현대)를 군사사 관점에서 조망해 본 통사이다.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우리 국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통사 형식으로 종합정리하였다.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는 대한제국군과 의병전쟁,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전쟁, 광복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 군사교육을 통·공시적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국방 100년의 역사』는 근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친 기간 국방의 역사를 주요 주제별로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하였다. 이 책의 연구 대상 기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부터 2018년까지 100년이며, 연구 대주제는 ①창군과 이념, 조직과 정책, ②전력증강과 국방개혁, ③대비태세, ④민군관계 등 4가지로 설정하였다. 장절 편성은 4개의 대주제를 4개의 부(部)로 설정하여 세부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첫째, 제Ⅰ부 ‘국군의 이념, 조직과 정책’은 국군 창설의 기본 이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과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1장 ‘창군과 이념’에서 한국인의 항일투쟁 정신과 사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과 이념, 대한민국정부의 국군 창설과 이념을 통해 우리 국군의 이념과 정통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 ‘국방조직 변천’에서는 국방을 실현하는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발전해 왔는가를 정리하였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로부터 국방태세 발전기까지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등 상부구조 위주로 조직의 변천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3장 ‘국방정책 변천’에서는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행동방침인 국방정책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로부터 국방태세 발전기까지 6개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정세와 국방목표,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제Ⅱ부 ‘전력증강과 국방개혁’은 자주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온 전력증강의 추진과 주요 성과, 그리고 군구조의 개선과 국방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방개혁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제4장 ‘전력증강 추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로부터 국방태세 발전기까지 6개 시기로 구분하여 부대 증편, 무기 및 장비 획득, 병력 변동, 예비군 전력 및 정신전력 강화, 국방정보화 추진 등 유·무형전력의 증강을 종합하여 정리 및 기술하였다. 제5장 ‘국방개혁 추진’에서는 국방개혁이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하여 정책화되었던

노태우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 국방정책의 추진 배경, 목표,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였다.

셋째, 제Ⅲ부 ‘전쟁 수행과 군사대비태세’는 우리 민족이 근현대사에서 경험 하였던 세 번의 전쟁이었던 독립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파병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세 번의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스스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안겨주었다. 제6장 ‘전쟁 수행’에서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대한민국의 6·25전쟁,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의 배경, 전쟁 수행, 그리고 영향 및 의의를 살펴보았다. 제7장 ‘군사대비태세’에서 는 총력전 개념에 입각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북한의 끊임없는 공산 화 책동 및 사회불안 조성에 대한 우리의 전면전 대비태세,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8장 ‘교육 훈련’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 지 유·무형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부대훈련, 정신교육의 변천 과 정을 기술하였다.

넷째, 제Ⅳ부 ‘국민과 세계와 함께해온 국방’은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 해 헌신하고, 국민과 함께 공조해왔으며,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왔던 역사를 기술 하였다. 제9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에서 국방비와 국민경제, 군 병영문화와 복무여건 개선, 병영시설 현대화와 군 의료체계 개선, 국가시책 지원 활동을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10장 ‘국방외교와 국제협력활동’에서 국방교류협력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군 평화활동 그리고 국방협력활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이 세계평화 유지에 이바지해 온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정부 시기 독립군과 광복군, 광복 후 국군의 성장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살펴보기 위해 제3장 국방정책 변천, 제4장 국방조직 변천, 제5 장 전력증강 추진 등 3개 장은 국내외 정세변화, 정부·국방부의 정책의 특징 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총 6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6개 시기는 ①대한민국임 시정부기(1919. 4.~1945. 8.), ②국군 창설기(1945. 8.~1950. 6.), ③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④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⑤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 ⑥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등으로 『국방조직변천사』(국방부, 1992)와 『건군 50년사』(국방군사연구소, 1998)에서 설정한 시기 구분¹⁾을 참조하여 5개 시기를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를 추가하였다. 그 외의 장은 국내외 정세변화, 군 내부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특징적인 변화와 변천 등이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시기 구분을 하여 기술하였다.

연구를 위해 참고한 자료는 정부 및 국방부·합참, 각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민간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물은 역사적 사실 관계의 교차 확인과 공간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보충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연구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국방 100년의 역사』가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기억하고,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12-14. 『국방조직변천사』에서는 정부수립 후 국방조직변천과정을 변화가 뚜렷한 특징과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시대를 ①건군기(1948. 8.~1950. 5.), ②전쟁 및 정비기(1950. 6.~1961. 4.), ③국방체제정립기(1961. 5.~1971), ④자주국방기(1972~1989), ⑤818계획 및 국방조직 개선기(1990~) 등 5개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8-12. 『건군 50년사』에서는 국군 발전의 시기를 ①건군기(1945~1950), ②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1961), ③국방체제 정립기(1961~1972), ④자주국방 기반조성기(1972~1990), ⑤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⑥국방태세 발전기(1991~) 등 여섯 개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I부

국군의 이념, 조직과 정책

제1장 창군과 이념

제2장 국방조직 변천

제3장 국방정책 변천

제 I 부 국군의 이념, 조직과 정책

제 1 장 창군과 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 및 대한민국 국군의 창군과 그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든 군대였고, 대한민국의 국군은 되찾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대이다. 따라서 광복군은 국군의 뿌리이고 국방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서 ‘창군 이념’이란 창군기 군이 가졌던 생각의 근본이 되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사상의 의미로 사용하였다.¹⁾ 따라서 창군 이념을 찾기 위해 광복군과 국군이 가졌던 보편적인 정신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제 1 절 항일투쟁 정신과 사상

1. 일본제국의 한국 침략



19세기 후반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일본제국(이하 일제, 또는 일본)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부국강병 및 대외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급속도의 성장을 거듭한 끝에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로 성장해갔다. 1873년 조선에서 쇄국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던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일제는 ‘정한론(征韓論)’ 사상을 토대로 서양제국들이 동양 국가를 침략하던 전략과 전술을 모방하여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1876년 한국과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를 강압적으로 체결하여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끊임없는 강압과 모략으로 한국을 침략하였다.

청일전쟁 승리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Sino-centric world order)에 종지부를 찍고 이 지역의 패자(覇者)로 등장한 일제는 한국에 대한 완전한 지배와 대륙진출을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 지배에 대해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창설’이란 기관이나 단체 등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세움, ‘창군’이란 군대를 처음 만들음을 의미하며, ‘이념’이란 한 국가나 사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본이 되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사상을 말한다.

청·러시아·미국의 양해를 얻게 된 일제는 1905년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한국을 반식민지화하였다. 한일 병탄의 기회를 노리던 일제는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기회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양위시키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급기야 1910년 8월 29일에는 「한일병탄조약(韓日併呑條約)」 강제 체결로 한국을 강점하기에 이르렀다.

「한일병탄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개칭하고, ‘한국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의 반일 저항을 탄압하고 한국 사회를 급격히 식민지적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폭압적인 무단통치(武斷統治)를 실시하였다.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의 직속 하에 ‘조선주차군²⁾’(朝鮮駐紮軍, 한일병탄 이전 ‘한국주차군’이 개칭됨.)을 통솔하여 조선의 방위를 담당하고 조선 안에서의 제반 정무를 통할하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총독은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국왕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체제는 총독과 정부총감 이하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탄압기관, 자문조사기관, 동화정책기관, 경제약탈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총독은 육·해군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 총독과 헌병경찰을 중심으로 한 군사통치기구 형태였다.³⁾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일본군의 육군대장이자 육군대신으로서 한국 통감을 겸임하여 한일병탄을 성사시켰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애국인사들을 검속하고 교원들에게 제복을 입혀 강압적인 교육을 하게 하는 등 이른바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시행하였다. 무단정치는 ‘헌병경찰제도’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헌병경찰제도란 조선 주재 헌병사령관을 총독부의 치안 책임자인 경무총감에, 각 도의 헌병대장을 각 도 경무부에 임명하여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전국의 치안을 유지해 나가도록 한 것으로 헌병과 경찰이 단일명령체계하에서 임무를 수행한 제도였으며,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되었고, 물샐틈없는 정보망을 조직하여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였다.⁴⁾

2) 권석근, 『일본제국군』(서울: 코람테오, 2007), pp.62-63. ‘조선주차군’은 1910년 8월 한일병탄에 따라 기존의 ‘한국주차군’을 개칭한 부대였다. 한국주차군사령부는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3월 20일 일본 도쿄(동경)에서 기존 한성(지금의 서울)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주차대사령부’를 확대 편성한 후, 4월 3일 한성에 도착하여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러일전쟁 준비 일환으로 일본군의 한국 상륙과 주둔, 작전지원을 지원했고, 한국 의병의 항일투쟁을 진압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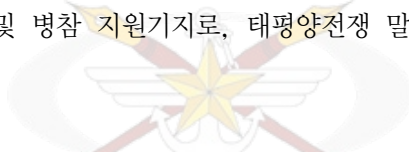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민족전란사 2(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9-10.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민족전란사 2(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10.

헌병과 경찰 외에도 한일병탄 이전부터 주둔하고 있던 일본 정규군인 주차군이 지역경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1910년 한일병탄 당시 한국주차군은 정규 1개 사단(제2사단)이었으나 이와 별도로 일본 본토의 각 사단들로부터 1개 대대씩을 차출하여 임시 편성한 1개 여단(임시파견대)이 전국의 항일 의병부대 초토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병탄 이후에는 ‘조선주차군’으로 개편되어 일본 본토의 사단들이 2년 교대로 한반도에 파견되어 주둔하였다. 따라서 보병 3개 여단 규모의 주차군과 2만 명에 가까운 헌병 및 경찰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를 뒷받침하였다.

일제 식민지통치정책 1단계는 1910년부터 3·1독립만세운동이 발생한 1919년까지로 헌병경찰을 통한 ‘무단정치’를 강행한 때이고, 2단계는 1919년부터 만주침략이 시작된 1931년까지로 3·1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식민통치방식을 무단정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한 때이며, 3단계는 1931년부터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1945년까지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지원하고 한국인을 전쟁터에 동원(징병·징용)하는 정책을 시행한 때이다.

이에 따라 조선 주둔군은 단계적으로 증편되었다. 1916년 상설 2개 사단 주둔이 결정되어 증편을 시작했고, 1918년 5월에는 ‘조선군사령부’가 창설되었으며, 대륙침략 전쟁 기간에는 한반도를 병력 파견 및 병참 지원기지로,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일본본토방위를 위한 작전기지로 활용하였다.



2. 한국인의 의병투쟁 정신과 독립전쟁 사상

가. 항일 의병투쟁 정신

박승환 참령의 순국과 수국진충(守國盡忠) 정신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갑오경장 내각이 단발령을 시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에서 위정척사파 유생들이 을미의병(乙未義兵)을 일으켰으며, 1905년에는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국권을 강탈하자 국권회복을 위해 을사의병(乙巳義兵)을 일으켰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자 일부 시위대 및 진위대 부대들은 이에 저항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으며, 이후 다수의 해산 군인들과 잔류 을사의병(乙巳義兵)이 합류하여 전국 규모의 정미의병(丁未義兵)이 형성되었다.

군대 해산 당일 시위대 1연대 1대대장 박승환(朴昇煥) 참령은 일제의 군대해산에 항거하며, “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군불능수국 신불능진충 만사무석)이라는 유서를 남긴 채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이 유서의 뜻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으로 군인은 모름지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군인정신을 표현한 것이었다. (〈사진 1-1〉, 〈그림 1-1〉 참조)



〈사진 1-1〉 박승환 참령의 모습



〈그림 1-1〉 박승환 참령 순국도(박기태 화백 그림)

그러자 이에 자극을 받은 시위대 1,100여 명(전 병력의 2/3)이 항거에 가담하였으며, 남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항전하였다. 특히 남대문 전투에서는 제1연대 1대대뿐 아니라 제2연대 1대대 병력까지 호응하였고, 일본군은 제13사단 1개 대대 규모가 진압에 투입되었다. 항전에 참가한 시위대 장병들은 병력과 화력이 열세한 상황에서 지치고 탄약마저 떨어지자 병영에서 이탈하여 분산되고 말았다.⁵⁾ 해산 군인들의 항전과 의병으로의 전환은 시들어 가던 의병운동의 기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한국인들이 가세함으로써 의병항쟁은 국권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국내 의병전쟁으로는 1908년 전반기에 전국규모의 통합의진 ‘13도창의대(十三道倡義隊)’가 전개한 ‘서울진공작전(進攻作戰)’을 들 수 있고, 국외 의병전쟁으로는 같은 해 중반기 연해주 연추(煙秋, 현 크라스키노)의 통합의진 ‘동의회(同義會)’가 전개한 ‘국내진공작전’을 들 수 있다.

13도창의대의 서울진공작전과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 13도창의대의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1월에 전국의 의병부대들이 연합부대를 결성하여 서울 동부외곽지역에서 동대문

5) 허경진 역, 『梅泉野錄(매천야록):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개화와 망국의 역사』(서울: 서해문집, 2006) ; 윤병석, 「구한말 군인의 항일의전의 의식」, 백산임성수교수회갑 기념논총발행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서울: 백산임성수교수회갑 기념논총발행위원회, 1991), p.143.

방향으로 실시한 대규모 공격작전을 말하며, 전국규모의 통합의진 13도창의대가 벌인 최초의 대규모 항일투쟁이었다.⁶⁾

1907년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봉기한 이인영(李麟榮)의 관동창의대(關東倡義隊)와 경기도 포천에서 봉기한 허위(許薦)는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몸을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13도창의대’를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에 본격 착수하였다.⁷⁾ 이때 이인영을 ‘13도 총대장(總大將)’으로 추대하였고, 허위를 ‘군사장(君師長)’, 이강년, 민공호, 문태수, 신돌석, 권중희, 방인관, 정봉준 등을 ‘창의대장’으로 세웠다.⁸⁾ 특히 이강년 부대는 해산된 군인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서양식 소총으로 무장한 약 3,000명 규모의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였고, 이강년은 고종의 밀지를 직접 받고 대일항전에 나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⁹⁾

13도창의대의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1월에 전국의 의병부대들이 통합의진을 편성하여

[표 1-1]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동포들아! 우리들은 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야만적인 일본인의 심한 부정과 난폭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교활하고 또 잔인하니 진보와 인도의 적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본인과 그 스파이 부일분자 및 야만의 군대를 격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Menifesto to all C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

Compatriot, we must unite and to consecrate ourselves to our land and restore our independence. We must appeal to the whole world about grievous wrongs and outrages of barbarous Japanese. They are cunning and cruel and are enemies of progress, and humanity. We must all do our best to kill all Japanese, their spies allies and barbarous soldiers.

※ 출처: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日本外交文書』, 제41권 1책, p.819, 856.

-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권(의병항쟁사 1)』(서울: 독립운동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0), pp.504-507.
-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권(의병항쟁사 1)』(서울: 독립운동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0), pp.504-50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30.
- 8) 「13道 倡義大將 李麟榮逮捕의 件」, 金正明 편, 『朝鮮獨立運動』 I(서울: 원서방, 1967), pp.35-55 ; 「일본공사관 기록 - 제3회 이인영 문답조서 : 1909년 6월 21일 조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의병항쟁사』(서울: 삼화인쇄, 1984), p.235.
-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37.

서울 동부외곽지역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실시한 대규모 공격작전으로서 병력 규모는 편제상 48진 약 1만 명에 이르렀다.¹⁰⁾

서울진공작전의 목적은 일제 통감부를 타격하고 통감부와 담판을 지어 「을사조약」과 「정미조약(한일신협약)」 등을 파기하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13도창의대는 해외동포와 각국 영사관에 격문을 보내 ‘자신들의 진공작전은 합법적인 의병전쟁이며, 황제의 칙령에 따라 실행되는 독립전쟁이고, 의병부대인 창의대가 국제공법상 교전단체이므로 전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외 동포에게 보낸 격문은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몸을 바치자’며,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정신으로 항일투쟁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¹¹⁾(‘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은 [표 1-1] 참조)

전국에서 모인 연합의병부대가 대오를 정비하여 서울로 진격할 때, 군사장 허위는 선봉장으로서 정병 300명의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하여 본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후속부대와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잠복 중인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았고 화력과 탄환이 부족하여 일단 후퇴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총대장인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하자 총지휘권을 허위에게 위임하고 일단 작전을 중지하라고 지시하고 고향 문경으로 돌아갔다. (허위의 초상화는 <그림 1-2> 참조)

총대장 중책을 맡게 된 허위는 의병들을 수습한 뒤, 임진강 방면으로 나아가 ‘임진강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였다. 1908년 2월 가평과 적성 방면의 의병 5,000명을 집결시켰으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무기를 제조하였으며,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군율을 엄하게 한 후, 소단위부대를 편성하여 유격전술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허위는 4월 이강년, 이인영, 유인석, 박정빈 등과 연명으로 다시 서울진공을 재개하고자 일전을 준비하던 중 6월 11일 경기도 양평군 유동에서 일본군 헌병에게 붙잡혔다.¹²⁾ 허위는 재판 중에 “동양평화를 위해 한국의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의병을 일으키게 한 자는 이토이며, 그 의병의 대장은 바로 나다.”



<그림 1-2> 13창의대진소 군사장 허위의 초상화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권(의병항쟁사 1)』(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0), pp.504-50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30.

11)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日本外交文書』, 제41권 1책, p.819, 85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30.

12)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20-24, 27-30.

라며 의연하게 순국하였다.¹³⁾

연해주 의병의 국내진공작전과 하얼빈의거의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 연해주 (Primorye) 연추(煙秋, 현 크라스키노)에서의 ‘국내진공작전’은 1908년 5월 연추에서 설립된 연합의병단체 ‘동의회(同義會)’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전개한 작전이었다. 국내진공작전에는 러일전쟁 기간 함경북도에서 러시아군과 연합항일전을 전개하다 1906년초 연해주로 망명한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창설한 ‘창의대(倡義隊)’와 1908년 봄 연해주지역 한인사회 유력인사인 최재형(崔在亨, 한국계 러시아인)이 창설한 ‘동의대(同義隊)’, 그리고 전 주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중(헤이그 밀사 3인 중 1인)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참여하였으며, 부친의 군자금 1만 루블을 전달하였다. 동의회는 같은 해 7월 함경도지역 의병부대(홍범도부대, 경성(鏡城)의병부대)와 연결하여 관북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육로와 해로로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진공군은 최고 지휘관인 도영장(都營將) 밑에 좌영(左營)과 우영(右營)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중근은 우영을 지휘하는 우영장(右營將)으로 선임되어 핵심 지휘관으로 참전하였다. 육로와 해로로 진입한 진공군은 13일간 30여 회의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일본군 국경수비대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영산전투에서 증강된 일본 정규군에게 패하여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다.¹⁴⁾

국내진공작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안중근은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평화의 교란자이고 초대 한국통감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할 기회를 엿보던 중,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초프(В.Н. Кокорцов)를 하얼빈에서 만나 아시아 정세를 논의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대동공보사(大東共報社) 및 동의회, 동지 우덕순 등과 함께 작전개념을 구상하고, 사후대책을 협의한 후 중국 하얼빈으로 이동하였다. 안중근은 10월 26일 아침 9시 30분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처단하였다.(<사진 1-2>, <그림 1-3> 참조)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2권(의병항쟁사)』(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0), pp.243-24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31-3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러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246.

14) 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2009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남북협력사업 기초조사·연구비 지원(2010), pp.9-22. 국내진공작전에 참가한 우덕순의 회고록과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본국 보고 전문에 의하면, 국내진공작전 참가 의병 총수는 두만강 도하 의병 700명, 창의군 후속원병 100~300명, 해로 상륙 의병 등 약 1,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사진 1-2〉 뤼순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그림 1-3〉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면 박영선 화백 그림

의거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안중근은 뤼순 관동도독부 법원 공판정에서 「이토 히로부미 열다섯 가지 죄악」을 조목조목 제시했고, “이번 거사는 한국 독립전쟁의 부분이요, 나 개인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대한국 의병 참모중장(大韓國 義兵 參謀中將)으로서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하여 행한 것이니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주장했다.¹⁵⁾

안중근은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일본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어 감에 따라 조국이 식민지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독립운동 방법과 전략을 바꿔가며 독립운동을 수행했다.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대한제국의 최후 보루인 군대마저 해산당하자 국외 의병투쟁에 나섰으나, 강성한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국제법과 국제역학관계를 이용하여 한국 독립의 방도를 찾고자 했다. 그는 만주가 일본의 영향 하에 들어가면 그만큼 한국 독립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 독립이 유지되지 않으면 동양평화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를 처단한 것이다. 여기서 직시할 것은 하얼빈의거의 본질은 이토 처단이 목적이 아니라, 러시아 조차지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함으로써 국제재판을 통해 일제의 한국 침략 실상과 위장된 동양평화 주장의 허구성을 세계만방에 폭로하고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여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뤼순에서의 국제재판투쟁은 그의 또 다른 독립투

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1권』(서울: 탐구당, 1970), p.435 ; 안중근, 『安應七歷史』, 국가보훈처 편, 『安重根傳記全集』(서울: 思仁코리아, 1999), p.127. 1899년 개최된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육군 포로에 관한 법」에서 의병도 교전단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러시아 관할인 하얼빈이 아닌 뤼순 법정에서 대한국 의군의 참모중장이 아닌 개인의 살인행위로 판결하였다.

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얼빈의거는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대사건이자 한국독립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혀 준 등불이 되었다.¹⁶⁾

안중근 의사(장군)는 뤼순 감옥에서 「東洋平和論(동양평화론)」을 저술했으며, 동포에게 “자유독립과 대한독립의 뜻을 이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고, 순국 직전 ‘爲國獻身 軍人本分(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유묵을 남겼다.(안중근의 유묵 사진은 <사진 1-3> 참조)

그는 「동양평화론」에서 대한제국이 문명개화에 이르지 못해 다른 나라에 예속될 경우 ‘일본의 안전과 동양평화에 화근’이 된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도 통감부 통치는 오히려 대한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양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동양평화란 청·일·한·삼·버마 등 모든 아시아국들이 대등한 독립 상태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어느 한 나라라도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한제국에서 이토의 보호통치에 반발하는 의병이 일어나고 있고, 청·미·러시아 등 열강도 향후 5년 내에 신무기를 개발하여 일본과 교전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토가 생존한다면 대한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드디어 멸망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3년 전부터 이토 처단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 집행 전날 국내외 동포들에게 ‘한국의 자유독립을 회복해 달라’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¹⁷⁾ ([표 1-2] 참조)



〈사진 1-3〉 안중근의 순국 직전 유묵(보물 제569-23호)

[표 1-2] 안중근 의사(장군)가 동포에게 보내는 글

“내가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년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遺恨)이 없겠노라.”

※ 출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10년 3월 25일 자).

16) 장석홍, 「안중근 연구의 쟁점과 과제」, 『제6기 안중근아카데미 강의자료집』(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 2014), pp.114-116.

17) 이 글은 안의사 순국 전날인 1910년 3월 25일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보도됐다.

안중근의 하얼빈의거를 계기로 연해주 일대 여러 계열에 속한 의병지도자들은 다시 단일한 통합의진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¹⁸⁾ 의병지도자 이범윤, 유인석, 홍범도 등은 1910년 6월 21일(혹은 7월 8일) 연해주 암밤비(梓溝)에 모여 통합의진 ‘13도의군(十三道義軍)’ 편성대회를 가졌으로 13도의군 편성에는 안창호와 이갑 등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인사들도 대거 참여하였다.¹⁹⁾ 13도의군 역시 1908년의 국내진공작전처럼 대규모 의병군단을 꾸려 국내로 진입 후 일제 침략세력을 축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²⁰⁾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병탄(併呑)됨에 따라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13도의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박승환 참령과 13도창의대, 연해주의병의 항일 투쟁정신 및 의병전쟁사상과 더불어 만주와 연해주, 국내에서 결성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 그리고 3·1운동 이후 수립(창설)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독립전쟁 수행의 토대가 되었다.

나. 한국인의 독립전쟁 사상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1910년 한일병탄 이전까지의 국권회복운동은 ‘의병항쟁(義兵抗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의병항쟁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에 투철한 유생들이, 애국계몽운동은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자 한 지식인들이 주도한 독립운동이었다. 애국계몽운동에는 1905년 이전에 개화운동을 하던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의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일제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으며, 애국계몽운동가들은 한 국민의 실력이 일본제국의 실력보다 훨씬 열세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선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달리 의병들은 승패를 따지지 말고 국민된 도리만 다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전국적 규모의 무력항쟁을 전개하였으며, 애

18) 독립기념관 편역, 『국역 의암집(毅菴集)』(서울: 제천문화원, 2010) ;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 IV(조선시대 후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302-303.

19) Р Г И А Д В(러시아국동역사문서보관소), ф.1, оп.1, л.73, л.37 ; Г А Р Ф(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ф. 102.00.1910, оп. 1910, л. 210, л. 7.) ; 심현용, 『한러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246. 해외 연합의병단체인 ‘13도의군’이 편성된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암밤비 지역의 자피거우(車巨隅, 梓溝) 마을이라고 적은 러시아문서가 발굴되면서 유력한 장소로 인정되고 있다.

20) 독립기념관 편역, 『국역 의암집(毅菴集)』(서울: 제천문화원, 2010)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서울: 교문사, 1994), pp.80-81. 군자금 관련해서는 전판서 윤용구를 통해 그리고 망명정부 관련해서는 전군수이자 의군참모 서상률을 통해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국계몽운동가들은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는 무력항쟁은 국력 소모만을 가중시키므로 먼저 항쟁 역량을 다진 후에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구국운동, 언론계몽운동, 실업구국운동, 국채보상운동, 신문화운동, 국학운동, 청년운동, 민족종교운동, 국외독립군기지 설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²¹⁾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신민회(新民會)’²²⁾는 국권을 회복하여 공화국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국 규모의 비밀결사단체로서 1907년 4월 안창호, 양기탁, 이동휘, 이회영, 유동렬 등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신민회가 택한 국권회복 기본전략 사상은 국내에서는 국민을 애국주의와 신지식으로 교육 계몽하고 청소년을 민족간부로 양성하여 민족 내부의 실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외에는 국경 부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기지를 설치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두었다가 일본제국주의 야욕이 더욱 팽창하여 일제가 미국, 중국, 또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독립군이 국내로 진입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민족이 총단결하여 민족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²³⁾

신민회는 독립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여건이 안되어 실천하지 못하다가, 1909년 봄 서울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만주, 연해주)로 이주하여 독립군기지를 만들어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여 현대전에서도 승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독립군부대를 창건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1909년 9~10월 일본군이 실시한 소위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에 의하여 의병세력이 거의 소멸되었고,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이 발생하여 안중근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안창호, 이동휘, 유동렬 등 신민회 간부 다수가 헌병대에 구속되었다.

구속된 간부들이 석방되자 1910년 3월 신민회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소극적인 계몽주의적 항일투쟁 방법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독립전쟁만이 구국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독립전쟁전략’을 국권회복운동의 최고 전략으로 채택하고, 국외 독립군기지와 그 핵심체로서

21) 신용하,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53-54.

22) 신용하,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56-60. 1907년 초 안창호가 처음 발의한 대표적인 전국 규모의 비밀결사단체로서 당시 영향력 있고 중요한 지도자급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거의 망라되었다. 신민회는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독립국을 세우고 그 정치체제는 공화정체로 함을 목표로 하였는데, 공화국 수립을 공식적 목표로 정한 것은 한국역사상 최초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민회의 주요 사업은 신교육구국운동, 언론계몽운동, 실업구국운동, 청년운동, 국외독립군기지 창설운동 등이었다.

23) 신용하,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59-60.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²⁴⁾

그리하여 1911년 1월 이동녕, 이회영 등 간부들이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로 망명하여 민단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기관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후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흥강습소 교장은 이동녕, 교감은 김달이 맡았으며, 교원들은 신민회(新民會)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1912년 가을 ‘부민단’을 결성하고 학교를 증축하였으며, 1913년 5월부터 ‘신흥중학’으로 개칭하고 중등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919년 5월 학교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²⁵⁾하였으며, 독립운동 단체 ‘한족회’로 조직을 확충하였다. 신흥무관학교 교원은 대부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고, 중국 및 일본 등 외국사관학교 출신도 일부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8월 폐교할 때까지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독립군 부대에서 활동하였다.²⁶⁾

또한 신민회 간부였던 이동휘, 이종호 등은 1913년 만주 왕청현 나자구에 ‘동림(東林)무관학교’를 설립하였고, 뒤이어 이갑 등은 밀산현 봉밀산자에 ‘밀산(密山)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²⁷⁾

신민회가 설립하는 데 성공한 ‘신흥무관학교’, ‘동림무관학교, 밀산무관학교’는 애국 및 독립정신으로 무장된 우수한 독립군 장교와 간부들을 양성해 내어 그 후 한국민족의 독립운동과 독립군 무장투쟁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²⁸⁾

1910년 12월 ‘안악사건(安岳事件)²⁹⁾’이 발생했고, 이를 일제가 ‘조선 총독 암살미수사건’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신민회 간부 다수가 구속되어(일명 ‘105인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1911년 9월 일제에 의해 전모가 발각되어 신민회는 해체단계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신민회가 주창하고 실행한 ‘독립전쟁론’은 한일병탄 이후 만주지역 독립군기지 건설과 독립운동,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정책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4) 윤병석,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의 시론」, 『사학연구』 27(서울: 한국사학회, 1977), pp.69-72.

25) 신용하,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63.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은 신민회의 ‘新’자와 다시 나라를 일으킨다는 ‘興國’의 ‘興’자를 합친 이름이었다.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p.71-75. 교관 중 이범석은 중국 운남 육군강무당 출신이었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김경천(본명 김광서, 기병 중위)과 이청천(본명 지청천)이 망명해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이범석, 김경천, 이청천이 교관으로 합류하면서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

27) 박영석, 「일제하 재만한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의식 : 경학사의 설립경위와 그 취지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서울: 일조각, 1982), pp.186-190.

28) 신용하,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64.

29) 안악사건은 1910년 11월 안명근(安明根)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가 황해도 신천지방에서 관련 인사 160명과 함께 검거된 사건을 말한다. 일제는 무관학교 설립자금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위한 군사자금으로 날조하여 관련 인사들을 일제히 검거하였으며, 잔인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다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제 2 절 광복군의 창설과 이념

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한국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강화회의에서 주창된 미국 대통령 윌슨(T. 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에 크게 고무되었다. 일제 무단통치에 짓눌려 있던 한국인들은 열강에 대한 독립청원을 통해 독립을 기대했다. 1919년 1월 중국 상해의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프랑스 파리로 보내 독립청원서를 전달했고, 이어 만주, 일본,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각각 발표되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는 민족대표 33명이 「선언서」(일명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때 운집한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선언서」 사진은 <사진 1-4> 참조)



〈사진 1-4〉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선언서」

※출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이렇게 시작된 비폭력의 ‘3·1 독립만세운동’(이하 3·1운동)은 4월 말까지 한국 전역으로 번져

나갔으며, 만주, 연해주, 상해, 미주 등 해외로까지 확산되었다. 이 3·1운동은 일제에 저항해 자주와 독립을 주장한 한국 민족운동사의 대사건이었다. 비록 3·1운동으로 바라던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민족지도자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쟁하여 독립을 쟁취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3·1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민족지도자들이 중국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상하이는 1910년대 초반부터 독립운동기지로 건설된 곳이었고, 1917년에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사들이 ‘대동단결 선언(大同團結宣言)’을 발표하여 전민족의 대동단결과 민족의 대표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한 곳이기도 했다.

1919년 4월 10일 저녁 상하이에 모인 인사들 중에서 29명이 대표가 되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우선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결정하고,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임시의정원은 밤을 세워 회의를 진행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부 구성 작업 결과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로 하며, 내무·외무·군

무·법부·재무·교통 등 6개 행정부서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위원(각 행정부서 총장)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헌법으로 10개 조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의 헌법으로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³⁰⁾ 임시정부의 수립은 한국민족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뒤를 이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민족 역사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게 되었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외에도 러시아의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1919. 3. 17.), 한성(지금의 서울)에서 한성정부(漢城政府, 1919. 4. 23.) 등이 수립되었다. 민족지도자들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법통성을 가진 단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각 지역 임시정부들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 임시정부 중 상하이 임시정부는 3권분립제도에 입각하여 국가기구상 가장 완비된 임시정부였으며, 헌법도 「임시헌장」의 형식으로 러시아령 대한국민의회의 「결의문」이나 한성정부의 「임시약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것이었다. 그리고 한성정부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의 장기 설치 운용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내무총장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통합추진세력(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정부와 상해 임시정부가 주도)은 타협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하되 국호와 연호는 ‘대한민국’으로 삼고 본부를 상해에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만 ‘대통령’으로 개칭하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30)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정원 문서』(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4), p.3.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내용은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여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 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에 아 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여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없고 一切 平等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神敎·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의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情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여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여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는 國土恢復後 滿 一個月 內에 國會를 召集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로 되어 있음.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하 임시헌장)을 기초로 하여 한성정부의 행정부 형태로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하 임시헌법)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1919년 9월 11일 마침내 3·1운동을 직접 계승하여 정통성과 법통을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 형태인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³¹⁾ 임시정부는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9월 15일을 신정부 시정일로 선포하였다.

1919년 9월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임시정부의 통합으로 전 민족의 정치적 통일의 실현을 내외에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주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³²⁾ 「임시헌법」 전문에서는 “아 대한인민은 아국(我國)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였도다.”라고 한 「3·1독립선언」을 인용하여 임시정부가 국내 3·1운동의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10개 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임시헌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³³⁾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출되어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였다.³⁴⁾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이동휘는 상하이로 와서 같은 해 11월 3일 이동녕 내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신규식 법무총장 등과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1920년 3월 30일, 제7회 임시의정원회의(2. 23.~3. 30.)에서는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켜 ‘군무부(軍務部)’를 만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가 군무부를 만주로 이전하려고 했던 목적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을 재편성하여 독립전쟁을 개시하려는 데 있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전개할 실질적인 무장력을 독립군 단체에 기대하고 군무부를 만주로 이전시켜서라도 이들을 지휘·통할하고자 했던 것이나 현실적인 제한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임시정부는 최초로 상하이(上海, 1919. 4.~1932. 4.)에서 상주했으나, 1932년 4월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虹口) 공원에서 일으킨 의거로 인해 일본군의 대대적인 임시정부 요인 검거활동을 피해 항저우(杭州, 1932. 5.~1935. 11.)로 청사를 옮겼다. 그 후 1937년 7월 일본군은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켰다. 임시정부는 중국 내에서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다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35년부터 전장(鎮江, 1935. 11.~1937. 11.)에 머물렀다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31) 신용하, 『한국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153-158.

32) 「임시정부헌법 개헌안의 동기와 성격에 관한 안창호의 제안설명」,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서울: 탐구당, 1967), pp.444-445.

33)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34) 이상룡, 『석주유고』(서울: 고려대 출판부, 1973), p.336.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도 통합정부 성립을 축하하며 계봉우, 유례군 등 2명을 북간도 의원으로 선출하여 임시의정원에 파견하였다.

창사(長沙, 1937. 11. 23.~1938. 7. 17.)를 거쳐 광저우(廣州, 1938. 7. 17.~10. 16.)와 류저우(柳州, 1938. 10. 16.~1939. 3. 10.), 치장(綦江, 1939. 3. 10.~1940. 9.) 등에서 잠시 머물다 최종적으로 사천성 충칭(重慶, 1940. 9~한국)에 정착하였다. 이 때문에 임시정부가 광복군 창설을 본격적으로 서두른 것은 1939년 치장으로 옮겨 간 이후였다.³⁵⁾(임시정부의 이동경로는 [지도 1-1]을 참조)

[지도 1-1]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경로



※ 출처: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 p.262.

194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독립운동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었다. 중일전쟁(1937)을 통해서 중국으로 침략지역을 확대한 일제는 다시 동남아시아로 그 방향을 확대하고 아울러 태평양 방향으로 진출하여 미국과 대응하는 전선을 형성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군은 미 해군기지인 진주만(Pearl harbor)을 기습공격함으로써 미·일 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임시정부는 제20차 국무회의(1941. 12. 9.) 의결을 거쳐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³⁶⁾

2.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이념

가. 한국광복군 창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독립외교 노선’보다 ‘독립전쟁 노선’이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154. ;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262.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4권(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pp.853-854.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더욱 우세해졌다. 임시정부는 산시성(陝西省)지역 한인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선전 및 초모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복군 창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주지역 교포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광복군 창설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1940년 5월/ 임시정부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을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김구의 명의로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 그 요지는 광복군을 편성하여 한·중 연합군으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작전 전개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 군사최고영수가 중·한연합군총사령관 자격으로 광복군을 지휘통솔하며, 광복군의 편성 훈련과 함께 가능한 모든 한인들을 동원하여 선전·훈련·정찰·파괴 등 특무공작에 투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은 중국 국민정부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장 총통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위원회의 실무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광복군이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 예속될 것이 아니고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직접 그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중국군사위원회의 광복군 예속 주장은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광복군 성립문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³⁷⁾

한·중 간 광복군에 대한 지휘관계 설정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임시정부는 단독으로 광복군 창설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청사를 치장(綦江)에서 충칭(重慶)으로 이전하고 중국 측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임시정부의 충칭시대는 그동안의 침체와 수난을 정비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시기였다.

마침내 김구 주석은 1940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발표하고,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창설 기념식)을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重慶)에서 개최하였다. 광복군은 총사령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 참모 이복원, 김학규, 공진원, 유해진, 이준식 등 불과 30여 명으로 창설되었다.(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사진은 〈사진 1-5〉 참조)



〈사진 1-5〉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기념

광복군은 「한국광복군사령부 조직조례」와 「대한민국 임시통수부 관계」를 제정하여 새로운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즉 총사령부를 임시정부의 국군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임시정부

37)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서울: 일조각, 1993), pp.79-82.

주석의 직할로 두고, 총사령이 전군을 통솔 지휘하며, 동원 및 작전계획 등 군령(軍令)은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군사예산과 인사 등 군정(軍政)은 군무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총사령부 기구를 확정한 광복군은 전투부대를 구성하기 위한 모병활동을 하기 위해 전선사령부를 곧바로 시안(西安)으로 이전하고 지대(支隊) 편성에 착수하였다. 제1, 제2, 제3지대를 조직하고 또 시안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 100여 명을 제5지대로 편입시켜 총 4개 지대체제를 구축하였다. 비록 모집 인원이 적어 4개 지대로 편성하였지만, 광복군의 최종목표는 3개 사단 규모의 군을 육성하는 것이었다.³⁸⁾ (<사진 1-6> 참조)



〈사진 1-6〉 한국광복군의 어깨총 도열 장면

1941년 11월 중국군사위원회는 광복군의 중국군에의 예속, 광복군에 대한 임시정부의 간여 배제, 광복군의 활동 영역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복군 9개 행동준승(韓國光復軍 九個行動準繩)」을 제의하였는데, 임시정부는 중국 측의 지원이 필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제의를 수락하였다.³⁹⁾

광복군의 활동은 초모공작, 교육훈련, 선전활동에 중점이 주어졌다. 광복군 창설시 최소 3개 사단을 편성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시킬 것을 계획하였지만 실제 초모활동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중국전선의 일본군 가운데 한인 병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탈영시켜 광복군에 편입시켜 광복군 정원을 30만 명으로 늘린다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1945년 3월 군무부는 「한국임시정부 군사진행계획」을 수립하여 광복군의 활동지역을 만주와 한반도에까지 확대하여 한반도에 지하군을 편성하여 장차 광복군의 국내진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⁴⁰⁾

한편, 양쯔강(揚子江) 일대에서 장태윤호(長泰輪號) 선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민영구(閔泳

38) 박성수, 「임시정부와 8·15광복」, 『한국독립운동사론』(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614.

3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독립전쟁)(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8), p.452.

4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독립전쟁)(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8), pp.458-459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p.475. 1945년 3월 당시 광복군 총병력은 450여 명에 불과했다.

玖)는 중일전쟁에 참가하여 1941년 7월 임시정부와 중국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상선 12척을 지휘하여 양쯔강 마당포대(馬當砲臺) 구역의 강 속에 기뢰를 부설하여 일본 군함의 통과를 저지하는 작전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이후 김구 주석의 요청으로 1942년부터 1945년 8월 까지 광복군총사령부 중교(中校:중령)로 근무했고, 광복 후 귀국해서는 해군에 입대하여 독립운동가 손원일(孫元一)⁴¹⁾과 함께 해군 창설에 기여하였다.⁴²⁾

나. 한국광복군의 창설 정신과 이념

임시정부는 당초 중국 측의 지원으로 광복군을 창설하려 했으나 중국 국민정부가 군사위원회를 통하여 간섭과 예측을 도모하자 이를 거부하고 임시정부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광복군 창설에 나섰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렇게 출발에서부터 독자적인 자주성을 표방한 광복군은 그 정신과 이념에서도 민족정기를 계승하며 민족군대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부하였다.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에 의하면, “일찍이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 시에 끝이어서 성립한 것이다. 환언하면 적인(敵人, 일제를 의미)이 우리 국군을 해산하던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복군은 자신들의 창설일을 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일인 1940년 9월 17일로 보지 않고 이보다 앞선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날로 소급하여 선언했다.⁴³⁾ 이에 관한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 내용은 [표 1-3]과 같다.

41) 「길림성 주재 일본영사관에서 일본외무성에 발송한 기밀번호 제100호 문건」(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손원일은 1909년 5월 5일(음력) 독립운동가 손정도(孫貞道) 목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나 1921년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길림유자회(吉林幼者會)와 여길학우회(旅吉學友會)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1930년 중국의 중앙대학교 항해과 졸업 후에는 중국·독립상선 등에 근무하면서 독립자금을 지원하였고, 광복 다음 날 귀국하여 해군 창설에 기여했다.

42)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서울: 일조각, 1993), p.92, 143, 172, 175 ; 김후향, 『대한민국 독립운동 공훈사』(서울: 대한민국 공훈사발간위원회, 1983), p.540. 민영구는 1909년 7월 21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1세에 부친을 따라 중국 상해로 갔다. 만국항해전문학교(萬國航海專門學校)를 졸업하고 상해화풍운선회사(上海和豐輪船會社)에서 장태윤호 선장으로 재직 중 중일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45년 2월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참모로 활약하던 중 광복을 맞아 귀국하였고,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43)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凡金九全集』 6(대한민국임시정부 3)(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313-319.

[표 1-3] 한국광복군 성립보고서 내용(일부)

“왜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적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국방군 해산을 음모하였다. 그때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대장이었던 박승환(朴昇煥) 장군(참령)은 자기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았다. 박 장군의 총소리는 우리 국군이 적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나팔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는 서울의 적군을 모조리 도살하여 거리를 선혈로 물들였다. … 몇 날이 안되어 의병과 국군이 서로 배합하여 혈전을 계속하였으며, 전후 10년 동안 적에게 도살된 자가 무려 50만이며 적군이 우리에게 섬멸된 것이 무수하였다. 말하자면 1907년 8월 1일 국방군 해산의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 할 것이다.”

※ 출처: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凡金九全集』 6, pp.313-319.

광복군 창군의 주역들이 광복군 창설일을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일’이라고 한 것은 광복군이 구한말 ‘대한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계승한 정통 한국독립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했음을 의미한다.⁴⁴⁾

일제의 대한제국 군대 해산 당시 이에 항거한 시위대의 봉기는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 참령의 자결과 유서는 부하들의 뜨거운 군인정신을 일깨워 급기야 전국규모의 항일 의병전쟁으로 번졌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수국진충(守國盡忠)’의 군인정신은 이후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졌다.

1908년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13도창의대는 작전 전 해외 동포에게 보낸 격문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몸을 바치자’며, ‘독립회복 위국헌신(獨立回復 爲國獻身)’의 정신으로 항일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일정에 체포된 군사장 허위는 재판 중에 “동양평화와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을 일으키게 한 자는 이토이며, 그 의병의 대장은 바로 나다.”라고 주장했으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의연하게 순국하였다.

그리고 ‘대한국 의병 참모총장’ 안중근 의사(장군)의 군인정신도 13도창의대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안중근은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과 남대문 전투를 목격하고 곧바로 의병투쟁을 위해 만주로 떠났다가 1908년 봄 연해주 의병단체 ‘동의회(同義會)’ 창립에 참여하였고, 국내진공작전시 동의군(同義軍)의 핵심 의병장(右營將)으로 참전하였다. 그는 국내진공작전 실패 후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의병결사인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였다. 그때 동지 12명의 손가락 선혈을 모아 태극기에 ‘大韓獨立(대한독립)’ 네 글자를 직접 씌으로써 조국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1909년

44) 박성수, 「임시정부와 8·15광복」, 『한국독립운동사론』(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661.

10월 26일 하얼빈 의거 후 중국 뤄순 감옥에서 순국 직전에 유묵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남겼는데, 이 유묵은 오늘날 군인정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⁴⁵⁾

그리고 신민회(新民會)의 ‘독립전쟁’ 사상은 이 회를 주도했던 안창호, 양기탁, 이동휘, 이회영, 이동녕, 이동삼, 유동렬, 김구 등을 통해 독립군 단체와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노선으로 이어졌다.

일본 측의 자료에 의하면, 1907년 8월부터 1910년까지 의병전쟁에서 의병부대는 연인원 14만여 명이 참가하여 일본군과 2,853회의 전투를 전개했고, 17,779명의 의병이 전사했다. 가장 치열한 의병전쟁이 전개된 1908년의 경우 8만명이 참가하여 1,976회의 전투에 참가하였다.⁴⁶⁾ 하지만 정규군 훈련을 받은 대한제국군이 해체된 상황에서 의병부대의 전투력만으로는 신흥 강대국 일본의 군대를 당해 낼 수 없었다. 항일의병은 비록 전쟁 목적인 ‘구국(救國)’과 ‘독립(獨立)’을 쟁취하지 못하고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잃었지만, 귀중한 정신적 유산을 얻었다. 항일의병의 정신은 ‘수국진충(守國盡忠)’과 ‘위국헌신(爲國獻身)’이었고, 이념은 ‘국권회복(國權回復)’과 ‘자유독립 쟁취’이었다.

의병전쟁은 독립전쟁의 단서를 열었고, 독립군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1908년 연해주에서 최재형, 이범윤, 안중근, 유인석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연해주 의병은 독립군 형성의 선구적 조직이 되었고, 홍범도를 비롯한 함경도 의병은 그대로 독립군으로 전환되었다. 신민회의 계몽주의자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기지를 건설한 것은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의병의 의병전쟁을 계승한 독립군의 독립전쟁이 독립운동 방향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⁴⁷⁾

광복군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대한제국의 국군을 계승하고, 민족사의 정통 국군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의병 및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사의 정통 국군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광복군의 핵심간부들은 거의 만주독립군 출신들로 구

45) 우리 군은 ‘위국헌신’을 대표적인 군인정신과 가치로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 국방부 차원의 모범 장병 포상제도로 ‘위국헌신상(爲國獻身賞)’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육군은 2003년 ‘위국헌신’을 육군 장교단 정신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장병 15만 6천 명의 설문조사와 그룹별 토의, 3성장군회의 등을 거쳐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을 육군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도록 ‘육군 핵심가치’로 재정립하였다.(육군본부, 『위국헌신의 길』(계룡: 육군본부, 2004), p.51, pp.60-62 ; 육군 정책기획과-2118(19. 6. 24.) 육군핵심가치 정립 보고) 해군은 2009년에 취역한 세 번째 214급 잠수함의 명칭을 ‘안중근함’으로 명명하였다.

46) 조선주차군사령부, 『朝鮮暴徒討伐誌』, 『독립운동사자료집 3』(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pp.823-829.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486, p.528. ; 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서울: 한국사연구회, 1968) ;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0), p.168.

4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p.527-528.

성되었는데, 대부분 대한제국군과 독립군의 30여 년에 걸친 항일투쟁 역량을 계승한 역전의 용사들로 ‘건국군’을 자임하였다.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을 비롯하여 참모장 이범석, 그리고 단위부대인 지대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간부들은 1920년 이래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했거나,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 역전의 명장으로 활동했던 독립군 출신이었다. 광복 후 이들 광복군 출신 간부들은 국방부장관, 국방차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장 등 대한민국국군의 상징적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대한제국 국군의 정통성이 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거쳐 대한민국국군으로 이어졌다. 광복군은 바로 자주독립정신을 대한민국국군에게 물려준 군맥의 주체였으며, 대한민국국군 또한 광복군의 법통을 이어받은 ‘광복군의 후예’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⁴⁸⁾ 대한제국군으로부터 대한민국국군으로의 인적 계승을 나타낸 표는 [표 1-4]와 같다.

[표 1-4] 대한제국군으로부터 대한민국국군으로의 인적 계승표

대한제국군 출신 독립군 주요 간부	독립군 출신 광복군 주요 간부	광복군 출신 대한민국국군 주요 간부
노백린(정령), 이갑(정령), 유동열(참령), 이동휘(참령), 신팔권(정위), 안무(정위), 박영희(정위), 김의선(정위), 나중소(부위), 김창환(부위), 박형식(부위), 여준(부위), 이석(부위), 김좌진(참위), 김찬수(참위), 민무(참위), 조성환(참위), 신규식(참위), 이청천(무관학교 입학), 김경천(무관학교 졸업), 황학수(무관학교 졸업, 한국독립군 부사령)	유동열(참모총장), 이청천(총사령관), 이범석(참모장, 제2지대장), 김원봉(부사령관, 제1지대장), 권준(고급참모, 제1지대장), 채원개(작전처장, 제1지대장), 이준식(고급참모, 제2지대장), 김학규(고급참모, 제3지대장), 조성환(군무부장), 황학수(부관처장), 김홍일(참모장), 송호성(고급참모, 제5지대장), 오광선(국내지대장), 조경한(정훈처장), 윤기섭(고급참모)	이범석(국방부장관), 최용덕(국방차관, 공참총장), 김홍일(군단장), 송호성(호국군사령관), 김응조(군정보처장, 준장), 조개옥(호국여단 참모장, 중령), 권준(수도경비사령관), 이준식(군단장), 박시창(군단장), 전성호(연대장, 준장), 오광선(호국여단장), 안춘생(육사교장), 채원개(여단장), 박영준(정훈감), 장홍(관구부사령관), 김관오(관구부사령관), 김국주(관구부사령관), 김신(공참총장), 최덕신(육사교장, 군단장), 김동수(사단장), 유해준(군부사령관), 이성가(육대총장), 송면수(육군정훈감), 김영일(육대총장, 소장), 김용관(소장), 고시복(준장), 민영구(준장), 박기성(준장), 박영섭(준장), 소재현(준장), 장호강(준장), 정희섭(준장)

※ 출처: 전쟁기념관사업회, 『현대사속의 국군(군의 정통성)』, p.3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p.270.

※ 참고: 김좌진 장군이 대한제국군 장교(참위)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주장도 있음(박환, 김주용 등).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의병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3(의병항쟁사)(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25-26.

광복군은 일제의 침략 기구를 모두 박멸하여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군’의 임무를 띠었다.⁴⁹⁾

1941년 11월 28일 제정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建國綱領)」의 총강(總綱)과 「한국광복군 공약(韓國光復軍 公約)」 및 「한국광복군 서약문(韓國光復軍 誓約文)」에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이념과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⁵⁰⁾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광복군의 정신은 조국광복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과 ‘자유독립정신’이었고, 광복군의 이념은 ‘자유독립 회복’, 즉 ‘자유독립국가 건설’이라고 하겠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총강, 「한국광복군 공약」, 「한국광복군 서약문」 내용은 [표 1-5, 표 1-6, 표 1-7] 참조)

[표 1-5] 「대한민국 건국강령」 제1장 총강

1. (생략)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여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종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 공리(公理)임.
3. (생략)
4.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 한 마음으로 국권을 회복)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 ‘내동포에게 바라노니 … 복아자유 독립(復我自由獨立, 우리의 자유독립을 회복) 하라’ 하였다.

※ 출처: 「건국강령」(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제2권(임정편 II)

[표 1-6] 「한국광복군 공약」

- 제1조 무장적 행동으로써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려는 한국 남녀는 그 주의사상의 여하를 물론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될 의무와 권리가 있음.
- 제2조 한국광복군의 군인된 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주의를 군 내외에 선전하고 조직하지 못함.
- 제3조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부합되는 당의 당강 당책을 가진 당은 군 내에 선전하고 조직할 수 있음.
- 제4조 한국광복군의 정신과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군내에 일종 이상의 정치 조직을 둘을 허락하지 아니함.

※ 출처: 「한국광복군 공약」(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

49) 김광재, 『한국광복군』(2007), p.299.

50) 「건국강령」(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권(임정편 II)(서울: 탐구당, 1971) ; 「한국광복군 공약」(1941.11.28.), 「한국광복군 서약문」(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

[표 1-7] 「한국광복군 서약문」

본인은 붉은 정성으로써 좌의 각항을 준수하옵고 만일 배서하는 행위가 있으면 군의 엄중한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을 이에 서약하나이다.

1. 조국광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제를 희생하겠음.
2.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을 철실히 수행하겠음.
3.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법령을 절대 준행하겠음.
4. 광복군 공약과 기쁨을 엄수하고 장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5. 건국강령과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선전이나 정치조직을 군 내외에 행치 않겠음.

※ 출처: 「한국광복군 서약문」(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

제 3 절 국군의 창설과 이념

1. 대한민국정부 수립

가. 광복과 남북 분단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연합국 승리로 굳어지면서 연합국은 전후처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카사블랑카회담(Casablanca Conference, 1943. 1. 14.~1. 23),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 12. 1.), 알타회담(Yalta Conference, 1945. 2. 4), 포츠담회담(Potsdam Conference, 1945. 7. 17.) 등에서 연합국 수뇌들은 전쟁을 일으킨 추축국(樞軸國)에 대해서는 무조건항복을 받기로 결정했다. 특히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한국을 전후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 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고 선언하였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회담에 참석한 연합국 수뇌들은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최후통첩을 선포했다. 이에 일본이 거부하자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8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소련은 8월 8일 자정을 기해 재빨리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로 군대를 진격시켰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갑작스럽게 무조건 항복의 수락을 제의하자, 미국은 일본 본토에 대한 침공계획을 중단하고, 일본본토 점령 및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에 있어서의 38도선 설정은 일본군의 항복접수 절차에 관하여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발표하게 될 「일반명령 제1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8월 10일

료집』 11권(과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6) ; 「한국광복군 서약문」(1941. 11. 28.),

미국 육군성 작전국은 가능한 북쪽에서 항복 받기를 원하는 정치적 이익과 한반도로부터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군이 단시간내 그 지역에 도달할 수 없는 군사적 한계점을 조화시킨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분계선이 바로 북위 38도선이였다. 육군성의 안은 8월 11~12일 미국 3성조정위원회(SWNCC: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에 회부되었고, 8월 15일 트루먼 대통령이 정식 서명하였으며, 태평양지역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와 영국 및 소련 수상에게 전달되었다. 이리하여 스탈린은 한반도에서 진격 중이던 소련군에게 38도선 이북에서 진격을 멈출 것을 지시하였으며, 맥아더는 9월 2일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이, 이남의 일본군의 항복은 미군이 접수한다고 천명하였다.⁵¹⁾

이리하여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은 일제강점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국민국가(nation state) 건설을 위한 한국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항복을 받고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이 정치·군사적 판단에 따라 설정한 38도선은 남북을 분단하는 선이 되고 말았다.

한국이 독립을 회복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연합국의 대일전 승리와 인류역사상 초유의 원자폭탄 투하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겠으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을 통한 적극적 독립외교활동과 한국광복군의 치열한 항일독립전쟁 및 연합작전 참가가 연합국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고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그때를 항일독립전쟁의 적기로 판단하고, 광복군을 창설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광복군은 중국군 뿐만 아니라 영국군 및 미국군과도 연합작전(훈련)을 전개하였으며, 임시정부는 이를 배경으로 중국 군사위원장 장제스(蔣介石)로부터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완전독립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도 한민족독립운동 역사에 있어 찬란한 업적이였다.⁵²⁾

나. 미·소 군정

남한에서의 미군정(美軍政)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 of Allied Powers)⁵³⁾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미국 육군태평양지구총사령관(Douglas MacArthur

51) 국방부, 『국방사 제1집(1945. 8.~1950. 6.)』(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110~11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73~74.

52) 「총재접견한국영수회담기요(1943. 7. 26.)」,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범김구선집』, 제5권(대한민국임시정부 II)(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251~252.

5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2(대한민국의 성립)』(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6.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정식명칭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미 극동군사령부(GHQ, FEC; General Headquarter, Far

육군 대장)은 8월 19일 미 제24군단에 한반도 진주 명령을 하달했다. 당시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군단(사령관: John R. Hodge 육군 중장)은 명령에 따라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였고, 9월 9일 서울에서 미 제7함대사령관 킨케이드(Thomas C. Kin-kaid) 제독이 배석한 가운데 38도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연합군최고사령부 일반명령 포고 제1호」(1945. 9. 7.)에 의하여 미 제24군단은 9월 10일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를 발족하고, 사령관으로 하지 중장이 취임했다. 12일에는 신임 제7함대사령관 아널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으로, 헌병사령관 쉬크(Lawrence E. Schik) 준장을 경무국장으로 각각 임명하여 남한에서의 군정을 실시하였다.⁵⁴⁾

9월 20일 하지 장군은 ‘미 군정청(USAMGIK)’을 38도선 이남에서 조선지역을 통치·지도·지배하는 연합군 지휘 아래 미군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로 선언하고, 미군정이 38도선 이남의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the only Government)’라는 점을 공표했다. 일본 측의 항복을 접수한 하지 중장은 서울에는 제7사단을, 부산과 경상남북도에는 제40사단을, 전라남북도에는 제6사단을, 제주도에 6사단 제20보병연대를 각각 진주시켜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군정요원들에 의한 군정체제는 1946년 1월 14일이 되어서야 본격 가동되었다.⁵⁵⁾

미군정과 일본 도쿄의 맥아더사령부는 국무부에 군정을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으며, 미국 국무부와 육군부·3부조정위원회(SWNCC)·합동참모본부(JCS)는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에 걸쳐 신탁통치 실시 이전에 한국에 적용될 정치·경제적 방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논의의 결론으로 맥아더와 하지 사령관에게 「한국의 미군 점령지역내 민간행정에 관해 미육군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 주는 초기 기본지령」(1946. 10. 13., 이하 기본지령)이 10월 17일 전달되었다. 이 문서는 남한의 점령통치와 민정에 관한 미국의 최초 정책지침이었다.

「기본지령」은 먼저 일본 항복 이후 신탁통치 수립 이전에 한시적으로 한국의 민정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완전한 정치·경제·재정적 통제로부터 한국의 완전한 자유 획득을 민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 일본 통치의 잔재와 비민주적 요소의 점진적 해소라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위의 목표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행정기구와 실정법 등을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⁵⁶⁾

East Command), 미국 육군태평양지구총사령부였고, 이들 사령부의 사령관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대장이었기 때문에 ‘맥아더사령부’라고도 불렸다.

54)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19.

55) 브루스 커밍스,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 『분단 전후의 현대사』(서울: 일월서각, 1983), p.146.

5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2(대한민국의 성립)』(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6.

주한미육군사령부의 「군정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⁵⁷⁾ 첫째, 어떤 외국의 지배도 없이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한국에 수립한다. 둘째, 이와 같이 수립된 한국정부는 한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민주정부를 보장한다. 셋째, 한국인이 독립된 민주국가로서 발전하여 나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과 충분한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돕는다.

이러한 주한미육군의 군정은 군정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민주적 행정절차에 따라 한국인을 훈련하도록 하고, 한국화사업(Koreanization)을 통하여 많은 한국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수행하였다.

북한에서의 소군정(蘇軍政) 「연합군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를 받아들인 소련군 제25군은 치스차코프(I van M. Chistiakov)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여 약 150,000명이 북한에 진주하였다.⁵⁸⁾ 8월 24일에 함흥에 도착한 치스차코프는 함경남도 도지사 등과 회담을 하고 직장이탈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물자의 관외(管外) 반출을 금하고 치안유지 및 일반 행정사무는 도지사와 일반 직원이 담당, 집행한다는 데 합의를 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⁵⁹⁾ 이것은 한국에서 소련군사령관의 명의로 포고된 최초의 공식 문건인데, 여기서 소련은 한국에 대한 정치 일정이 결정될 때까지 일제하의 정부기관과 군사조직을 통하여 통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후, 소련은 각 지방의 자생적 지방행정조직을 해체시킬 것을 지시하고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같은 수를 이루는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10월 12일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소련은 조선에 소비에트 질서를 설립하거나 또는 조선 지역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다.”라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하였다.⁶⁰⁾ 첫째, 북한에서 일본 침략주의 잔재(殘在)를 영구히 근절하고, 이에 따른 정당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허가하며, 둘째, 자유로운 직업동맹의 결성권을 부여하고, 셋째, 모든 무장대(武裝隊)를 해산하고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보안대(保安隊)의 결성을 허가한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소련군정 당국은 북한인민에게 소련군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였다.

57) 러취 소장 후임으로 취임한 주한 미국육군 군정장관(William F. Dean 소장)이 1947년 11월 3일 군정장관 취임석상에서 취임사를 통하여 밝힌 군정목표.

58) Hong Kyu Park, *American-Korean Relations, 1945-1953 : A Study in United States Diplomacy*(Texas: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Press, 1984), p.43.

5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9-20.

6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0. 이 성명서는 앞서 9월 2일에 소련 최고사령관인 스탈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지령 내용(1, 2항은 생략)과 같다.

북한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설치는 바로 이 같은 바를 실행하고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정치도구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며, 이로써 정치적 기반이 마련된 소련은 10월 14일에 김일성(金日成) 환영대회를 평양에서 열고 이후 소련은 좌파(左派) 내 분열 인사를 제거하고 각 도에 결성된 인민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⁶¹⁾

소련이 당시 국내기반이 없었던 김일성을 그들의 이익 대변자로서 내세웠던 이유는 소련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친소(親蘇)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스탈린은 정치사회혁명의 선행조건인 정치권력을 담당할 지도자로서 국내의 비(非)공산주의자는 물론,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토착 공산주의자까지도 될 수 있는 한 배제하고 소련에 망명하여 정치훈련을 받은 자를 택하게 되었다.⁶²⁾

이리하여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북조선분국의 책임자가 됨으로써 북한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신탁(信託)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 이후 조만식(曹晩植)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다가 소련군정에 의해 탄압을 받고 정치노선에서 물러나면서 토착 공산주의자와의 연립(聯立)정권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급부상하였다. 그 후 북한은 공산당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대지주 또는 공산당에 비협조적인 인사, 그리고 소련군정보다 미군정을 선호하는 자들이 38선을 넘어 남하하게 되었고 월남자들의 토지나 소유물은 전 소작인(前 小作人)에게 분배되었으며, 따라서 3·7제(制)의 소작료 실시, 12정(町) 5단보(段步) 농토의 무상분배(無償分配) 등 토지개혁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개혁이 실시되었다.

소련은 군정 실시기관으로서 치스차코프 사령관 휘하에 소련 ‘민정부(民政部)’를 설치하고 민정부장관에 안드레이 로마넨코(Andrei Romanenko) 소장을 임명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6년에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미소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렬되자, 결국 한반도 문제는 유엔총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1947년 9월 17일 한반도 문제가 정식으로 유엔총회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1947년 9월 23일,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자, 미국은 10월 16일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때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외국군은

61)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0-21.

62)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1.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련도 유엔이 한국문제에 관할권이 없으며, 외국군은 통일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철수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대안을 제출했다.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정기총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측 결의안이 채택되어 한국문제에 유엔이 잠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됐다. 「유엔결의안」에 따라 유엔임시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이 설치되자 소련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전력공급을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 28일부터 한국에서 활동했지만, 북한방문은 소련에 의해 거부됐다. 이에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2월 6일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할 지 여부를 유엔소총회와 협의했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한국문제 해결 4개방안’을 유엔에 제시했으며, 이 중 제1안(‘총선거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임무수행 가능한 남한에서만 실시한다’)을 유엔소총회가 채택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1948년 3월 1일 유엔임시한국위원단 감시하에 38도선 이남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포고했으며, 실제 5월 10일에 실시된 남한지역에서의 총선거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소집됐다. 제헌국회는 6월 10일에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6월 11일에 국회 성립을 유엔에 통고했으며, 7월 17일에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단원제와 대통령중심제 헌법(「제헌헌법」)을 제정·공포했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또한 「제헌헌법」과 같은 날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방부를 포함한 행정각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⁶³⁾

그리고 국회는 7월 20일에 이승만 국회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8월 5일에 이법석을 국무총리로 하는 정부조직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8월 6일에 유엔임시한국위원단에 정식으로 정부수립을 통고했다. 또한 정부수립 직전인 8월 9일과 11일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육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 통치권과 국방군 지휘책임은 인수하는 것에 관한 협정」에 각각 서명⁶⁴⁾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완료시까지 일체의 통치 책임과 권한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점진적이고 질서있게 이양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8월 15일 「제헌헌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 의장 루나(Dr. Rufino

63)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정, 시행) ; 「정부조직법」(1948. 7. 17. 제정, 시행).

64)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1948. 8. 9. 및 11. 각각 서명, 8. 11. 발효),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Luna), 미국 육군태평양지구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 주한미육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장군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사진은 〈사진 1-7〉 참조)



〈사진 1-7〉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 축하식(1948. 8. 15.)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점은 「제헌헌법」이며, 「헌법 전문」은 「제헌헌법」의 성격을 잘 정리하고 있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국민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건립한 3·1운동의 독립정신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았다. 비록 연합국 승리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한민족의 독립정신의 결과로 광복을 맞이하고 새롭게 민주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군 또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대로 그 합법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즉 「제헌헌법」(제6조)은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국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였다.⁶⁵⁾ 「헌법 전문」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⁶⁵⁾

※ 출처: 「제헌헌법」(1948.7.17. 제정, 공포), 국가법률정보센터

65) 「제헌헌법」(1948. 7. 17. 제정, 공포),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1#0000>, 검색일: 2020. 4. 10.)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31.

2. 국군 창설과 이념

가. 국군의 창설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과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부 및 행정각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⁶⁷⁾ 조직 구성과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방부’가 설치되고 대한민국 국군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대한 제국 군대의 강제해산 이후 건설된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항일투쟁 전통과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정통성과 합법성을 구비한 대한민국 국군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에 이어서 중앙청 광장에서 역사적인 ‘육·해군의 사열식’이 있었다. 이 사열식은 군악대를 선두로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육군부대, 해군부대, 그리고 특별부대 순으로 행진이 이어졌는데,⁶⁸⁾ 이는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과 세계에 첫선을 보이는 행사였다.(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육·해군 사열식 사진은 <사진 1-8> 참조)



〈사진 1-8〉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육·해군 사열식(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통치 책임과 권한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이양하기로 합의한 협정⁶⁹⁾에 따라,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한미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⁷⁰⁾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67)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정, 시행) ; 「정부조직법」(1948. 7. 17. 제정, 시행).

68) 『서울신문』(1948. 8. 16.)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8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p.9.

69)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 8. 11. 발효) ;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pp.30-32.

70)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mmanding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1948. 8. 24. 서명 및 발효), 국방군사연

부합된다고 간주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며, 미군 철수 완료 시까지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지하되, 국방군의 행정, 인사, 군비증강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미군정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지휘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⁷¹⁾

이에 따라 8월 31일, 유동열 통위부장(오늘날 국방부장관)과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 간에 ‘통위부 사무이양’에 관한 조인식이 있었다. 이 사무이양은 남조선과 도정부의 국방부인 통위부의 수장과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의 수장 간에 업무 승계를 위한 인수인계였다.(정부수립 직후 국방부 청사 사진은 <사진 1-9> 참조)



<사진 1-9> 정부수립 직후의 국방부 청사(구 동양척식주식회사, 현 KEB 하나은행 명동 사옥 자리)

이로써 조선경비대에 관한 이양과 그 지휘권이 완전히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귀속되었다. 유동열 통위부장은 이임사를 통하여 국방군으로의 출발을 기뻐하며 “군대는 국가 민족의 군대요, 어느 당파나 개인의 군대가 아니니 장관의 교체는 다만 당국자의 경질에 불과하며 충국애족의 지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임에 제(際)하여 다만 부탁하는 것은 전 민족이 일심일덕일체(一心一德一體)가 되어 조국의 재건과 방위에 총괄기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민족 차원에서 조국의 재건과 방위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⁷²⁾

대한민국의 통치권 및 국방군 지휘책임을 인수하는 것에 관한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되고 통위부와 국방부 간 사무이양이 이뤄짐에 따라 남조선 과도정부 통위부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1948년 9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에 잠정 편입되고, 9월 5일자로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1948. 11. 30.)과 「국방부 직제」(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7.)가 공포됨에 따라 육·해군본부를 포함한 국방조직의 설치와 편성 대강이 법으로 규정되었다.⁷³⁾

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1945~1980)』(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pp.34-35.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114-115.

72) 『조선일보』(1948. 9. 4.) ; 군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8(과천: 탐구당문화소, p.160.

73) 「국군조직법」(1948. 11. 30.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은 제2조에서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제3조에서는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통수자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군통솔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 국방부장관의 임무를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와 제17조에서는 육·해군의 부대는 정규군과 호국군으로 조직하며, 제23조에서는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시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를 공포하여 국방부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였다.⁷⁴⁾ 이를 근거로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육군총사령부’로 정식 개칭되었고, 사령부 예하부대로 보병 5개 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가 편성되었다. 12월 15일에는 육군총사령부를 다시 ‘육군본부’로 개칭하고, 육군총사령관은 ‘육군총참모장’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해군사령부는 ‘해군본부’로 정식 개칭되었다.⁷⁵⁾ 1949년 10월 1일에는 육군에서 분리하여 공군이 창설됨으로써 육·해·공군의 3군 체제가 정립되었다.

나. 국군의 창설 정신과 이념

국군 창설 정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경비대를 개편하여 국군이 창설되자 이범석 국리총리 겸 초대 국방부장관은 국군 창설의 방향을 “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천명하여 건국이념인 독립정신과 자주독립국가 재건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국군 창설 정신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⁷⁶⁾

이 소명의식은 「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에서 광복군의 임무를 “일제의 잔재를 파괴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광복군이 구현하도록 촉구하면서 그 제5항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군으로 약소민족의 전위대(前衛隊)이며, 중·한 공동의 적을 물리치는 선봉군이자 동아평화의 기간대(基幹隊)”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즉 광복군은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국가건설의 초석이자 세계평화(동양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유수호의 군대(자유수호의 동맹군)라는 것이었다.⁷⁷⁾

74) 「국방부직제」(1948. 12. 7. 대통령령 제37호)

75)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1권(계룡: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5), p.21 ;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대한민국해군사』, 행정편(서울: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1954), p.50 ; 국방부, 『국방사』 제1권(1945. 8.~1950.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230, 361.

76) 장철(광복회 회장), 「광복군과 우리 국군의 정통성」, 『국방소식』 제14호(2002), pp.18-19.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이 제창한 창군의 기본이념은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인 “자주독립과 진충호국(盡忠護國)”의 정신과 통한다.

77) 「대한민국광복군사령부 성립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2권(임정편 II) (과천:

이범석 국방부장관이 언명한 ‘독립투쟁정신’은 일제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해 온 민족정기이며,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건국정신으로 명시되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는 그 시작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라고 전제하고 있다.⁷⁸⁾

의병과 광복군의 ‘위국헌신 정신’과 ‘진충보국 정신’, ‘자주독립정신’은 「제헌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군 창설 정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범석 국방부장관이 언명한 국군 창설 정신은 「국방부 훈령 제1호」를 비롯하여 ‘국군 3대 선서’ 및 ‘국군맹서’, 그리고 후일 제정된 「군인복무령」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국방부 훈령 제1호」은 ‘국방장병에게 보내는 훈령’이라는 제목 아래 1948년 8월 16일 선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군 창설의 목표와 정신을 명시하였다. 국군을 ‘국방군(國防軍)’이라고 규정하여 국군 창설의 목적은 ‘국방’이고, 국군의 정신은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음.) 정신’과 ‘국민을 위한 군인 정신’을 강조하였다. 「국방부 훈령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9] 참조)

[표 1-9] 「국방부 훈령 제1호」

“본관이 금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아울러 대통령령에 의하여 검직하게 되었다. 자에 책임의 지 중지대함을 실감하면서 군정초부터 국군 건립(國軍建立)을 목표로 묵묵히 분투하여 온 전 장병이 국가와 민족의 요청에 보답코자 하는 보국지성(報國至誠)을 위하여 천지신명의 가호를 지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취임초에 예하 관위학교(官衛學校) 부대실정을 파악함에는 시일을 상수(尙需)하는 바이다. 오직 국군건설에 정진하는 장병제군의 동심육력(同心戮力)을 확신하고 좌기 사항을 훈령하니 철저히 준수실천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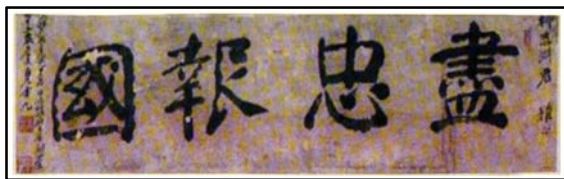
1. 금일부터 아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의 국방군(國防軍)으로 편성되는 영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장병제군은 오직 근면진귀(勤勉盡貴)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으로 새로운 국방군의 절요(切要)되는 시간을 엄수하며 직책을 극진하고 군기를 엄수하며 친애협동(親愛協同)하는 국군의 미덕을 발양하라.
2. 미군정이 결말되고 친정부 수립되는 이 현 전변기(轉變期)에 제하여 확고한 정신으로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방황하지 말고 더욱이 직책에 근면충실하라.
3. 국가신생지제(國家新生之際)인 만큼 쇄신한 정신으로 생기발랄한 청년국군(靑年國軍)을 편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통제력과 예민한 협동력으로 정신단결하여 화평친절히 전국민의 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 전국민을 생명으로 애호하라.”

※ 출처: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 1(1945~1950)」, pp.171~174.

탐구당문화사, 1991). “是大韓民國之建國軍, 是弱少民族之前衛隊, 是打倒中韓共同仇敵之先鋒軍, 是建立東亞平和之基幹隊”.

78) 『대한민국 헌법』(1948.7.12. 제정, 7. 17. 공포)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훈령 제1호」를 통하여 국군을 국방군으로 정의하고,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음.)’을 실천하여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충보국(盡忠報國)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휘호에도 나타난다. 진충보국의 정신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서 참모장과 제2지대장을 역임한 이범석 장군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김구 친필 ‘盡忠報國’ 사진은 <사진 1-10> 참조)



〈사진 1-10〉 백범 김구가 쓴 친필 盡忠報國(진충 보국)

이범석 장관은 정병배양(精兵培養)과 사상통일(思想統一)을 위한 반공정신(反共精神)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사병제일주의(士兵第一主義)와 정훈공작(政訓工作)에 주력하는 것을 ‘2대 지도방침’으로 천명하였다. 그는 정병양성의 대상과 범위를 현역 병사에 국한하지 않고 장차 군에 입대할 모든 청년장정들에게 확대시켜 애국애족 사상과 반공정신의 토착화에 진력함으로써 범국민적 정신전력의 강화를 도모하였다.⁷⁹⁾

그리고 1948년 12월 1일, 국군의 정신적 기초를 담은 장병복무신조로 「국군 3대 선서(國軍三大宣誓)」가 제정되었는데, ‘국군 3대선서’는 전 국군장병이 준수해야 할 복무신조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군인정신의 좌표, 국군의 사명을 강조한 강령이었다.⁸⁰⁾ 여기서는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과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 그리고 ‘반공(反共) 정신’을 강조하였다.([표 1-10] 참조)

[표 1-10] 「국군 3대 선서」

1. 우리는 선열의 혈적을 따라 죽음으로써 민족과 국가를 지키자.
2.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3. 우리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여 국군의 사명을 다하자 였다.

※ 출처: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1945.8.15.~1954. 3. 31.)』(1954), p.163.

국군 3대선서는 군의 사명과 군인정신을 간단한 구호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대 단위별로 매일 일조·일석 점호와 각종 행사 시에 선임자의 선창에 따라 전 부대원이 제창하였다. 국군 3대선서는 1949년에 ‘국군 맹서(國軍盟誓)’로 개칭되었다.⁸¹⁾ ‘국군 맹서’의 내용

79)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147.

80)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54), p.163.

81) 국방부, 『국방부 훈령집』(서울: 동원문화사, 1986), p.350. 「국군맹서」는 1957년 12월 1일 「국방부 훈령」

은 “1.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두만강수에 전승의 칼을 씻자”였다.

국군 이념 국군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족사와 더불어 면면히 내려온 국군의 정기를 계승하는 한편, 의병·독립군·광복군의 자주독립정신과 이념 대립의 현실에 따른 반공정신을 토대로 하는 군의 사상적 지표였다. 미군정 하에서 창설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정부 수립 후 정규 국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주독립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가 국군의 이념으로 형성되었다.⁸²⁾

제2차세계대전이 종전되자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두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시대로 들어섰다.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에서 행한 최초의 시정연설에서 “사상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민족의 자생자립과 세계 민주주의 우방과의 공존공영의 기반을 닦아 우리 민족의 전 역량과 역사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는 부단의 노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 대통령이 자유우방 여러 나라와의 공존공영의 유대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과의 돈독한 친선 유지를 역설한 것은 한국독립의 후원자에 대한 정치도의적 예우만은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 상황에 비추어,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이 없이는 대한민국 정부 존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데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당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공산집단은 소련군의 사주로 북한 전역을 조직적으로 공산화하고, 군대를 창설하여 대규모의 무장군을 육성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의 책동을 지속하였다.⁸³⁾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훈령 제1호」를 통하여 국군을 ‘국방군(國防軍)’으로 정의하고, ‘진충보국 정신’과 ‘국민을 위한 군인 정신’을 강조하였고, 정병배양(精兵培養)과 사상통일(思想統一)을 위한 반공정신(反共精神) 강화를 위해 ‘2대 지도방침’을 설정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정신전력 강화를 추진하였다.(이범석 국방부장관 용산역 순시 사진은 〈사진 1-11〉 참조)

제28호로서 「군인의 길」로 다시 제정되었다.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49.

83)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131-132.

그리고 초대 국방참모총장인 채병덕은 「건군의 기본이념」과 「국군의 사명」을 규정하고 이를 군제(軍政, 軍令, 軍法)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⁴⁾ 「건군의 기본이념」은 「우리는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토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당한 권위를 보유하는 국방군을 창설한다.」라는 것이며, 「국군의 사명」은 「국토와 민족방위, 즉 국방은 외국의 내침에 제하여 국토를 방위하고 민족을 보호하며 주권을 옹호하는 3대 조항을 의미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국군의 사명이 「국방」임을 강조하였다.



〈사진 1-11〉 용산역 순시에 나선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1948. 11.)

이처럼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군정 시기에 국군의 모체 부대가 창설되고, 국제적으로 이념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북한 공산정권의 적화통일 위협이 증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자주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사상, 반공정신이 국군의 이념으로 형성되었다.⁸⁵⁾



84) 「건군의 기본이념과 군제 편제 : 국방부 채병덕」(1),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8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수산경제신문』(1948. 10. 12.) ; 『마산일보』, 1952. 1. 15.) 채병덕 국방참모총장은 신문 연재를 통하여 「건군의 기본이념」과 「국군의 사명」에 대하여 밝혔다.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49.

제 2 장 국방조직 변천

제2장에서는 우리 군의 국방조직(國防組織)의 변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기서는 지난 국방 100년의 역사를 대한민국임시정부기, 국군창설기, 6·25전쟁 및 전후정비기, 국방체제 정립기, 자주국방 강화기, 국방태세 발전기 등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상부지휘구조 수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에서 주요 정세, 국방부분부(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의 구조 및 기능 변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는 한국인이 일본제국에 의해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라 밖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항일독립전쟁을 펼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조직을 국방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기의 정부와 광복군의 군사부문 조직은 ‘군사조직’이라고 표현하였다.

제 1 절 대한민국임시정부기(1919. 4.~1945. 8.)

1.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군사조직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제 정립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을 당시 각료는 법무총장 이시영뿐이었다. 5월 들어 미국에 있던 내무총장 안창호가 들어와 국무총리(이승만이 선출됨) 대리까지 겸하자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각부의 행정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⁸⁶⁾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규정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1919. 4. 25.)은 ‘군대를 편제할 수 있으며, 군무총장은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관 부서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여 군대의 편제와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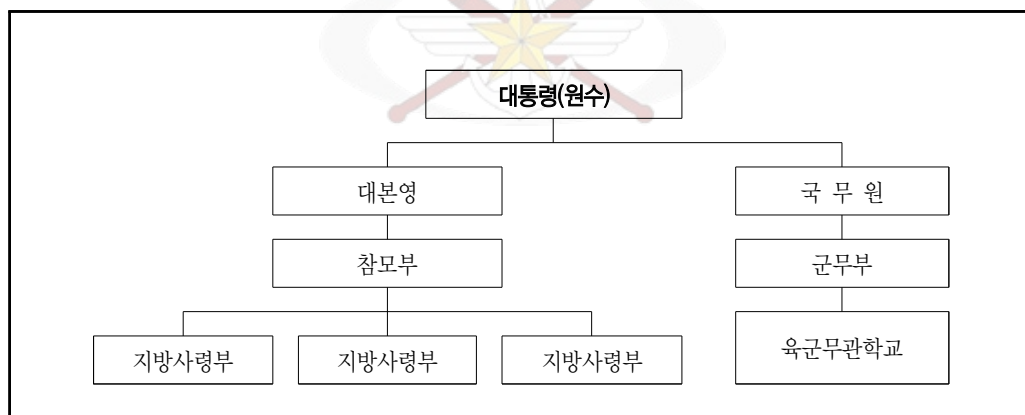
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92.

87)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 ;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1919. 4. 25.)

1919년 9월 15일 업무를 개시한 통합 임시정부는 11월 5일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관제」(1919. 11. 5., 법률 제2호)를 공포하여 군 통수체계와 정부조직 및 제도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정부 조직은 임시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밑에 7부 1국으로 구성된 국무원이 구성되었고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으로 대본영, 참모부, 군사참의회, 회계감사원을 두었다. 임시대통령은 원수로서 ‘군사의 최고통수권자’가 되고, 대본영은 ‘군사의 최고통솔부’가 되며, 참모부는 참모총장을 두어 ‘국방 및 용병에 관한 모든 계획’을 통솔하도록 하였고, 군사참의부는 임시대통령의 중요 사무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무부는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와 육·해군인 및 군속을 통할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각 부서를 감독할 기구로 비서·육군·해군·군사·군수·군법국 등 6개 국(局)을 두었다.⁸⁸⁾

이와 같이 임시정부가 구상한 군대는 현실적으로 구성 가능한 육군 중심의 군대였으며, 군 지휘구조는 육군으로 단일화된 각 작전부대를 총사령관이 지휘통솔하는 군구조를 추구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제와 군구조는 [도표 2-1], 초기 임시정부의 국무원과 군무부의 편제표는 [도표 2-2]와 같다.

[도표 2-1] 초기 임시정부의 군제와 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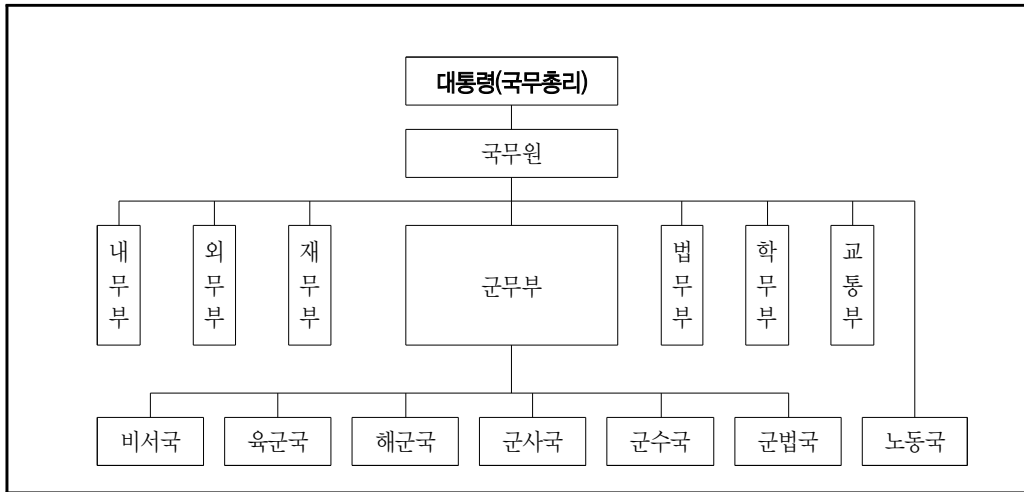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p.95.

또한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18일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발표하여 육군의 편성 및 관제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정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독립전쟁을 실시할 군대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군단으로 편제하고, 군대의 대오(隊伍)는 3개 분대로 1개 소

88) 「대한민국임시관제」(1919. 11. 5., 법률 제2호),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서울: 국가보훈처, 1999), pp.102-108.

[도표 2-2] 초기 임시정부의 국무원과 군무부 편제표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p.95.

대를, 3개 소대로 1개 중대를, 3개 중대로 1개 대대를, 3개 대대로 1개 연대를, 2개 연대로 1개 여단을, 2내지 5개 여단으로 군단을 편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대오의 정원은 분대는 하사 이하 17인을 두되 소대의 제3분대는 하사 이하 16인으로, 소대는 소대장 이하 51인, 중대는 중대장 이하 155인, 대대는 대대장 이하 687인, 연대는 연대장 이하 2,239인, 여단은 여단장 이하 6,189인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임시정부가 계획한 부대는병력의 총 규모는 1만 명에서 3만 명이었다.⁸⁹⁾

이렇게 편제된 육군의 지휘체계를 살펴보면, 대본영 직할 참모본부에 참모총장을 두며, 참모총장은 대통령에 직속(당시 표현은 直隸)되어 국방 및 용병에 관한 군무를 총감독하고, 대본영 직할 총사령부(총사령관)는 원수에 직속하여 부하군대를 통솔하며 지방사령부를 통할하되, 군정 및 인사에 관하여는 군무총장, 동원 및 작전계획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지방사령부(지방사령관)는 총사령부(총사령관)의 관할 하에 구역내 단대를 지휘관리하며 소관내의 징모 및 소집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또한 육군 초급장교를 양성할 목적으로 군무부 밑에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했다.⁹⁰⁾

군대의 지휘통솔을 위한 군인의 등급(계급)은 무관(武官, 간부)과 병원(兵員, 일반병사)

89)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1919. 12. 18.),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서울: 국가보훈처, 1999), pp.178-180.

90)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1919. 12. 18.),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서울: 국가보훈처, 1999), p.184-187.

2종으로 나뉘었다. 먼저 무관은 장관(정장, 부장, 참장), 영관(정령, 부령, 참령), 위관(정위, 부위, 참위), 하사(정사, 부사, 참사)로 구분하였고, 병원은 일등병, 이등병, 삼등병으로 구분하였다.⁹¹⁾ 이처럼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는 대한제국의 군제와 유사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역사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국무총리 이동휘, 군무총장 노백린, 군무차장 김희선 등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한제국 군대 장교출신이라는 것 과도 관련이 있었다.⁹²⁾

그러나 임시정부 초기에는 실질적인 군사조직이 편성되지 않았다. 즉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가 설치되었고 육·해군을 총괄할 군무총장이 구성되었으나 운용할 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임시정부 초기의 육군편성은 사실상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고, 1940년 중경 임시정부 시기 한국광복군 창설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나. 임시정부의 만주지역 독립군 통합 추진

3·1운동을 전후하여 만주지역에서 결성된 무장독립 단체는 서간도의 경우 한족회, 서로군정서, 대한 청년단연합회 등 22개 단체, 북간도와 북만주 지역의 경우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24개 단체 등 총 46개로 추산되었다.⁹³⁾ 임시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독립전쟁 노선을 취함에 따라 만주, 연해주의 무장독립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단체들은 자체 독립군 양성과 기반 조성에 힘쓰는 한편 독립군 부대를 결성하여 대일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군사경험을 쌓아갔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일본의 군사거점을 공격하여 전투경험을 쌓거나 무기, 군수물자를 탈취하여 무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이 결성한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로는 설립 순으로 볼 때, 대한독립단(1919. 4.), 대한군정서(1919. 8.), 대한독립군(1919. 9.), 서로군정서(1919. 11.) 그리고 북로군정서(1919. 12.) 등이었다. 하지만 만주 및 노령지역 독립군의 임시정부로의 통합은 이 무장 독립군 단체들이 임시정부의 지휘권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았다.⁹⁴⁾ 1920년 무장 독립군 단체 활동지역은 [지도 2-1]과 같다.

91)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1919. 12. 18.),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서울: 국가보훈처, 1999), p.188.

92)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p.200-201.

93) 윤병석, 「참의·정의·신민부의 성립과정」, 『백산학보』 7(서울: 백산학회, 1969), pp.113-140 ;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pp.37-38.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79, p.82.

1919년 11월 7일 임시정부 국무원의 특별 국무회의에서는 만주 및 노령지역에 분포되어 각자 활동하고 있던 군정부들을 폐지하고 ‘임시 군정서’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2월 여운형을 만주로 파견하여 각지의 군정부 대표들을 만나 군정부 명칭을 ‘군정서’로 개칭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다.⁹⁵⁾ 1919년 12월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를 마련해 독립군이 주로 분포한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령 연해주 일대를 지역별로 구분해 임시정부 참모부를 중심으로 군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단일한 지휘체제로 독립군을 편제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서간도 군구(하얼빈 이남, 길림성 부근, 봉천성 전부), 북간도 군구(연길부 일대) 그리고 강동 군구(러시아령 일대)로 나누고, 군구제의 사무는 임시로 지방사령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령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된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웠으며, 지방사령부에는 군적부를 비치하고 병적사무 상황은 매년 1월말과 6월말에 군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⁹⁶⁾

서간도지역 한족회의 통합작업은 쉽지 않았다. 유하현 삼원보지역은 1911년부터 이회영 6형제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군 기지를 조성한 곳으로, 3·1운동 직후 국내외 독립운동 지사들이 모여 독립선언 축하식을 열었고, 1919년 5월 독립운동 단체 ‘부민단’을 중심으로 통합운동을 벌여 ‘한족회(韓族會)’를 발족(중앙총장 이탁, 사무총장 김동삼)하였다. 한족회는 본부를 삼원보에 두고 7개의 지방총부와 그 하부의 단위 조직인 20여 개의 지방분부를 설치하였다. 한족회는 부민단의 부속 교육기관인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고, 망명해 온 청년들을 수용하여 군사교육을 시켰으며, 이청천, 이범석, 김경천 등이 교관으로 합류하면서 군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한족회는 임시정부와 협정한 끝에 같은 해 11월 임시정부 방침에 따라 ‘서로군정서’⁹⁷⁾를 발족시켰고, 한족회는 자치단체로서 서로군정서를

[지도 2-1] 1920년대 무장독립군 단체 활동지역



※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101.

96) 「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1919. 12. 18.),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서울: 국가보훈처, 1999), pp.190-191.

97)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42, 서로군정서 임원의

보조하기로 하였다. 1920년에 들어서면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독립군 부대(교성대)를 편성하여 평안북도의 압록강 연안지역에 침투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1920년 5월 말경 조상섭을 정부위원으로 파견하여 임시군구제, 지방사령부 설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족회나 지도자 이상룡은 즉각적인 군사활동을 우선시하면서 독립전쟁에 필요한 재정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⁹⁸⁾ 그러나 일제경찰의 사주를 받은 중국 마적단에 의해 독립군 기지가 초토화됨에 따라 서로군정서는 길림 방면으로 이동했고, 교성대 약 300명은 이청천의 지휘로 백두산지역으로 이동하여 홍범도부대와 함께 밀산으로 이동하여 전력을 보존하였다.⁹⁹⁾

독립전쟁과 독립군단 통합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서간도 안동현의 대한청년단연합회(대한독립청년단 후신)는 독립전쟁 준비를 결심하고, 1920년 4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의용대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청년단연합회는 안동현에 광복군을 조직하고 군무부에 직속한 광복군군영을 조직하기로 임시정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청년단연합회’는 ‘민국독립단’(대한독립단의 민국파), 비밀결사 의용단과 통합하여 7월에 ‘대한광복군총영’(영장 오동진, 참모부장 이탁)을 결성하였다. 안동현의 광복군 조직 방안이 합의되자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여 1920년 7월 「광복군편제안」, 「대한광복군사령부규정」, 「대한광복군영규정」 등을 확정하여 8월 1일부로 공포했다. 그리하여 대한광복군총영은 임시정부 서간도 군구의 지방사령부가 되었다.¹⁰⁰⁾

북간도지역에서는 북간도 군구에 ‘북로사령부’를 설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1920년 4월 19일 임시정부는 임원들(조상섭, 안정근, 왕삼덕 등)을 서북간도로 파견하여 독립군단 통합, 지휘체계 단일화 그리고 지방군구사령부 설치를 논의했다.¹⁰¹⁾ 1919년 12월 임시정부 임원과 왕청현 서대파지역에 본부를 둔 서일의 대한정의단은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총재 서일, 총사령관 김좌진)로 개칭하고, 새로이 행정과 군사 양기관을 설치하되 행정기관은 ‘대한민단’, 군무기관은 ‘동도군정서’와 ‘동도독립군서’로 칭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서일의 대한군정서는 동도군정서(서장 서일, 사령관 김좌진)로, 홍범도부대는 동도독립군서(서장

로는 독관 이상룡, 부독관 여준, 정무청장 이탁, 참모부장 김동삼, 사령관 이청천등이었다.

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102.

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49-50.

100) 윤대원,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의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제133호(서울: 한국사연구회, 2006), pp.133-134 ;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p.48-50, p.21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102.

1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103. 여기서 임시정부 임원 안정근은 안중근 의사의 첫째 동생이다.

및 사령관 홍범도가 겸임)로 각각 개칭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북로군정서는 임시정부의 북간도 군구 지방사령부가 되었다.¹⁰²⁾

연해주지역 무장독립 단체들은 지역 관할 문제 등으로 강동 군구 지방사령부 설치에 합의하지 못했고, 자체적으로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지방군구사령부 설치 문제는 독립전쟁의 시기에 대한 입장과 군자금 확보 등 난제가 많아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마저도 1920년 10월 이후 일본군의 ‘간도 침략’과 ‘경신참변’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다.

2. 충청 임시정부 시기 군사조직

가. 광복군 창설 초기(1940. 9.~1941. 11.)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이 중국의 충칭(重慶)에서 창설되자 임시정부는 10월 1일 「대한민국임시통수부 관제」를 제정, 공포하여 주식에게 국가원수의 지위와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부여했다.¹⁰³⁾ 이어서 10월 9일에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를 공포하여 광복군의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조례는 총사령부의 위상 및 지휘계통, 간부진의 역할 및 부서 등을 규정하였고,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국군임을 명백히 하였다. 즉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식의 직할로 두고(제1조), 총사령(總司令)이 전군을 통솔 지휘하며, 군의 정비·보충·경리 및 위생 등 사무를 관장하고(제2조), 동원과 작전계획 등 군령(軍令)에 관해서는 참모총장(參謀總長)의 지시를 받고, 군사예산과 인사 등 군정(軍政)에 관해서는 군무부장(軍務部長)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제3조)¹⁰⁴⁾ 이러한 조례와 직제에 따라 총사령부의 주요직위자를 구성하였는데, 총사령은 이청천, 참모장은 이범석, 총무(비서)처장은 최용덕, 참모처장은 채원개, 부관처장은 황학수, 경리처장은 조경한, 정훈처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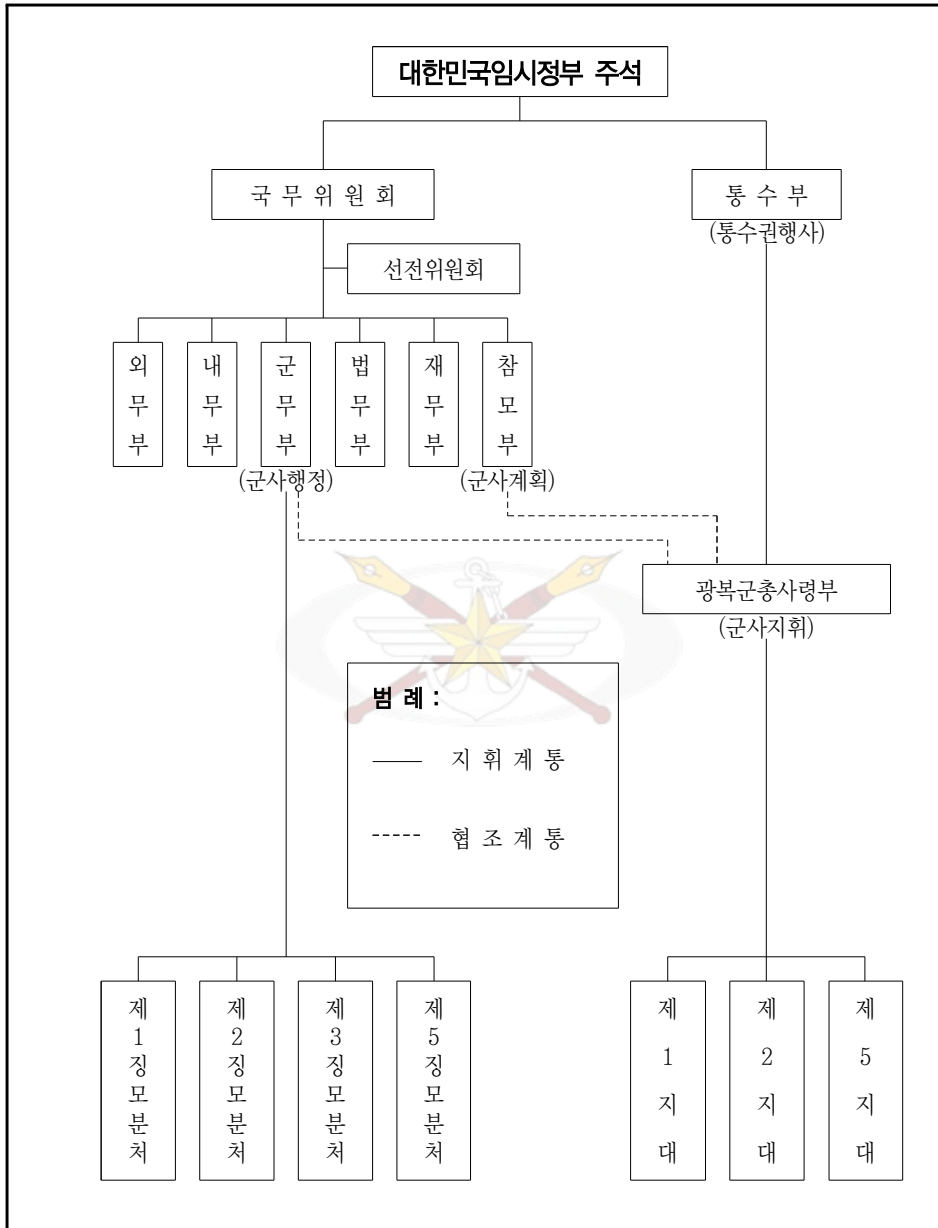
102)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p.217-21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103.

103) 군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서울: 군사편찬위원회, 1970), pp.376-377.

104)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조직조례」(1940.10.9.) 제5조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는 ①비서처(秘書處), ②참모처(參謀處), ③부관처(副官處), ④정훈처(政訓處), ⑤관리처(管理處), ⑥편련처(編練處), ⑦포공병처(砲工兵處), ⑧경리처(經理處), ⑨군법처(軍法處), ⑩위생처(衛生處)를 두며, 각 처(處)에는 처장 1인 및 처원 약간 인, 과(科)에는 과장 1인 및 과원 약간 인을 둔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6조에는 특무대(特務隊)와 헌병대(憲兵隊)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도표 2-3] 창설 초기 광복군 조직체계도

1941. 11. 현재



※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p.228.

조정환, 편련처장은 송호성, 군의(위생)처장은 유진동이였다.

광복군총사령부는 우선 모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1월 ‘전선사령부’를 시안(西安)에 설치하고 임무를 수행했으며, 1939년 시안에 파견되어 광복군 창설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왔던 ‘군사특파단’을 해체하여 전선사령부에 합류시키고, 광복군의 단위부대인 제1·제2·제5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다.¹⁰⁵⁾ 광복군은 병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먼저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상부조직을 기간으로 하여 하부조직을 지대-구대-분대로 확대해 나가는 하향식 편성 방법을 채택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군무부 밑에 모병 업무를 담당할 ‘징모분처(徵募分處)’ 설치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 편성 가용인원의 제약 때문에 지대가 해당 지대 지역의 모병활동을 겸하게 하고, 지대가 편성되지 않은 지역에 ‘제3징모분처’를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제1·제2·제5지대는 모병업무를 병행하였고, 제3징모분처는 신설하여 강서성 상요(上饒)에 파견 근무토록 하였다.¹⁰⁶⁾ 창설 초기 한국광복군의 조직 체계도는 [도표 2-3]과 같다.

나. 한·중 합작 시기(1941. 11.~1944. 9.)

1941년 3월부터 5월 사이 김원봉이 주도하던 조선의용대의 대원 중 80%가 황허(黃河)를 건너 중국 공산당 팔로군 지구인 화북으로 이탈한 사건이 일어났다.¹⁰⁷⁾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는 중국 관내 한국독립운동 세력을 임시정부로 일원화하고 한국무장세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¹⁰⁸⁾ 같은 해 11월 15일 중국 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 총사령에게 “한국광복군은 본회에 귀속시켜 통할 지휘한다”라고 하면서 ‘한국광복군 9개 행동준승(行動準繩)’을 통보해 왔다. 중국 군사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광복군 창설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임시정부에게 광복군이 준수해야 할 규칙 9개 조항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중국 군사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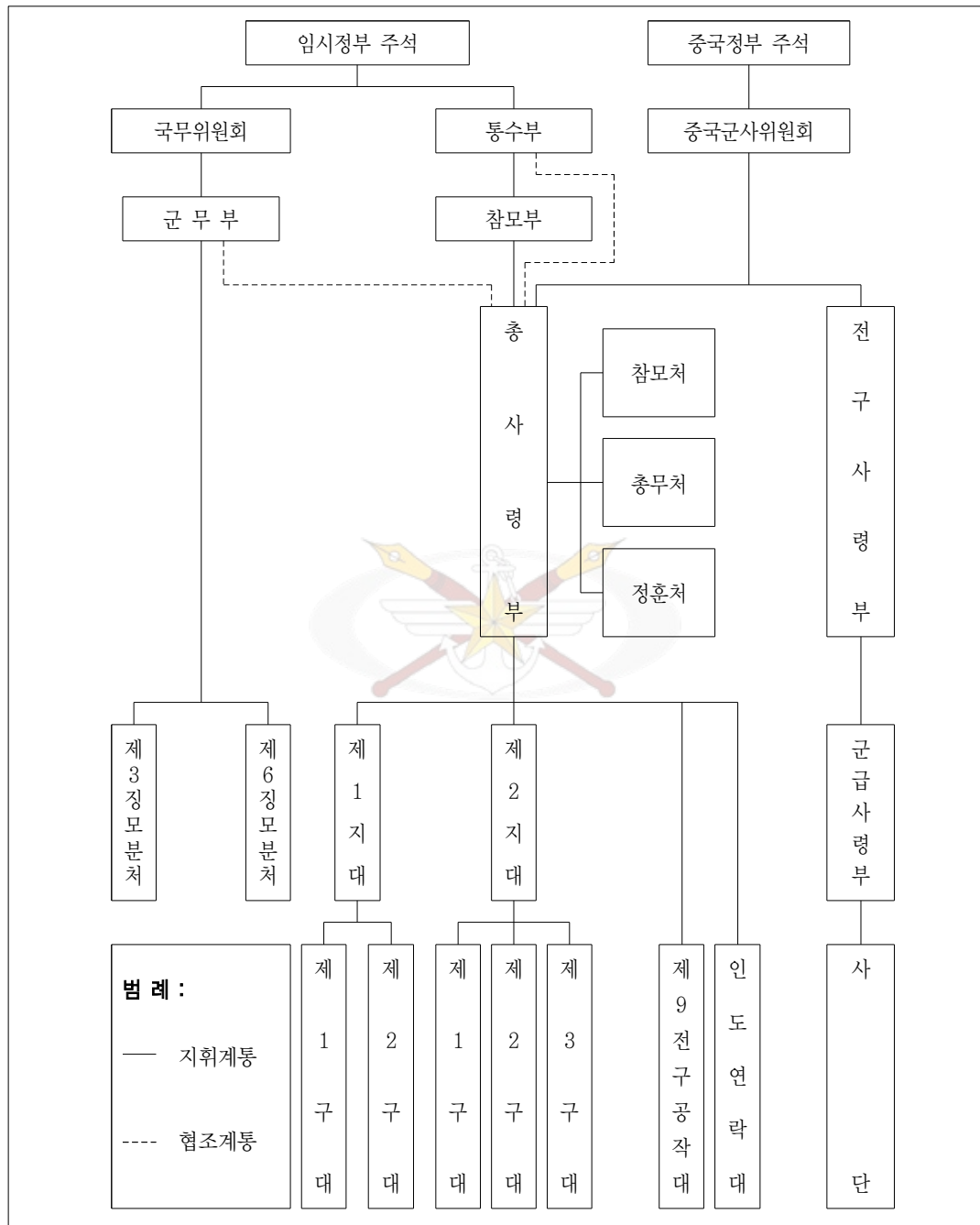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221-222.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223-226.

107) 「조선의용대개편선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pp.523-525 ;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3(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103-115 ;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서울: 일조각, 1993), p.56. 중국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중국군과 연합항일전을 벌이던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1940년 3월부터 뤼양(洛陽)에 집결하기 시작하여 조선의용대 장래 문제를 논의하였고, 1941년 3월 중순부터 5월 하순에 걸쳐 충칭에 있던 본부 인원과 일부 공작원을 제외한 대원 약 80%가 황허(黃河)를 건너 화북으로 이탈했다. 그들은 동북지방을 민족운동 기지로 삼고자 했으며, 1941년 1월 연안에서 결성된 ‘화북조선청년연합회’(회장 武亭)의 무장부대인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되었다.

108) 한시준 외, 『대한민국의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서울: 국가보훈처, 2009), p.106.

[도표 2-4] 한·중 합작 시기 광복군 통수체계도



※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p.238.

원회가 한국광복군을 통할 지휘하고 중국 측 참모총장이 이를 장악 운용한다는 것으로 임시정부의 통수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¹⁰⁹⁾ 중국 측이 제시한 이 ‘9개 행동준승’은 한국광복군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었으나 1941년 11월 19일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광복군의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¹¹⁰⁾ 광복군이 중국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편입되자, 광복군은 기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 측은 광복군 총사령부의 기구가 실제 인원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10개의 참모부서를 3개의 참모부서(참모·총무·정훈처)로 축소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작전기획업무는 참모처에, 서무경리업무는 총무처에 통합시키고, 정훈처는 공산세력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삼민주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독립시켰다. 광복군은 조직 정비와 때를 같이 하여, 군의 계급구조와 복장도 중국군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다. 1942년 4월부터 새로운 편제에 따라 총사령부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였는데, 광복군 총사령에는 이청천 중장을 중국 측이 인준하고, 참모장, 참모처장, 정훈처장, 총무처 경리과장 직위에는 중국 측 인원을 파견하여 집무하게 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중국 측은 광복군과 함께 중국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켰다.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은 광복군 조직 강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대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졌다.¹¹¹⁾ ‘광복군 9개 행동준승’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보게 된 한·중 합작 시기의 광복군 통수체계는 [도표 2-4]와 같다.

다. 광복군 말기(1944. 9.~1945. 8.)

광복군은 ‘광복군 9개 행동준승’에 의하여 1941년 11월 말부터 중국군의 지휘감독을 받다

- 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140-141 ; 추현수, 『자료 한국독립운동 3』(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pp.250-251.
- 1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0), p.47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140, p.142. 광복군 창설 이후 광복군은 미주 및 멕시코지역 교포들의 독립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이 자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1941년 12월부터 중국 국민정부의 군원과 재정원조에 크게 의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용대의 주력이 화북지역으로 이탈한 사건이 중국 국민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임시정부는 현실적으로 중국 측의 ‘9개 행동준승’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1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229-231. 임시정부는 중국 측의 조선의용대 광복군 편입 조치에 따라 조선의용대장 김원봉을 예우하기 위해 광복군 총사령부에 부사령관직을 신설하여 그에게 소장 계급을 부여하고 부사령에 임명하였으며, 지대 개편시 제1지대장을 겸임하도록 조치하였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1942년 말부터 1944년에 이르기까지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원봉체제를 유지하였다.

가, 1944년 9월에야 비로소 중국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폐기 원칙이 결정되었음을 통고 받았다. 이에 임시정부는 중국 측과의 새로운 군사협정 체결을 모색하면서 광복군이 임시정부로 귀속될 것에 대비한 사전 준비로 자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잠행조직조례(暫行組織條例)」¹¹²⁾를 확정하였다. 그 후 한·중 간에 새로운 군사협정인 「원조한국광복군판법(援助韓國光復軍判法)」을 체결하였으며, 1945년 5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광복군은 임시정부로 완전히 귀속되었다. 이에 따라 광복군총사령부 조직은 경리처장을 제외하고 전원 한국인 장교들로 구성되어 새출발을 다짐하게 되었다. 이때 광복군은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당시 중국군 소장으로 복무중이던 김홍일(중국명 王逸署)을 광복군 참모장으로 기용하고 개정된 편제표에 따라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진용에 의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인 8월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참모장 김홍일은 중국군으로 복귀하였고, 제2지대장 이범석 참장이 다시 참모장 직을 수행하게 되었다.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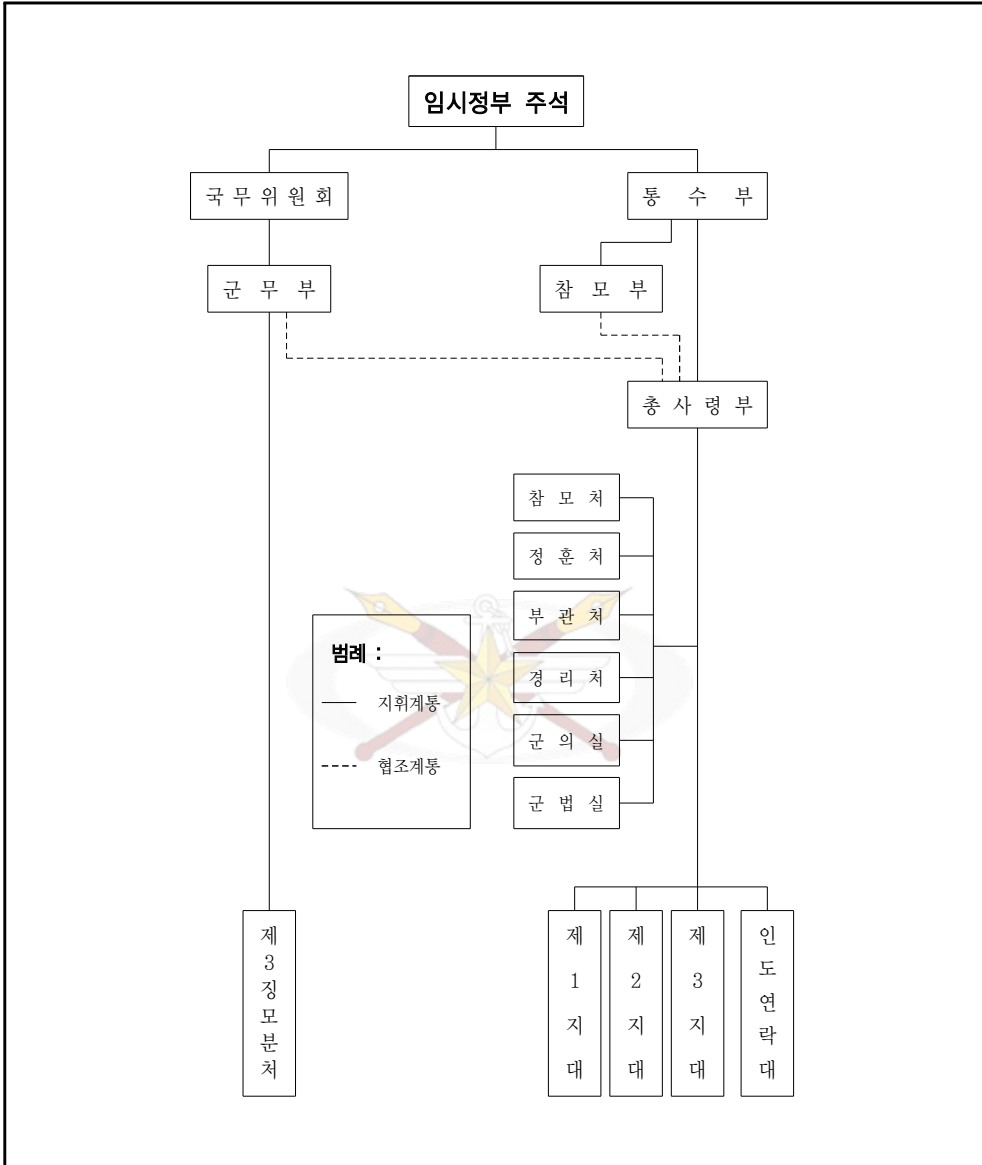
1944년 말 이후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자 일본군 부대를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입대하는 한인 병사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 초모활동도 활발해져 광복군은 각 지대 인원을 대폭 증가시키고 지대 편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제2지대는 예하에 각각 3개 구대를 완편하게 되었고, 제6정모분처를 개편하여 제3지대에 편입시킴으로써 광복군은 비로소 3개 지대를 완편하였다.

1945년 5월 제3지대의 개편이 완료될 무렵, 광복군과 미군의 특수부대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전략첩보국) 간에 군사합작이 이뤄져 미 OSS에 의한 제2·제3지대 요원 특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훈련반이 설치되었다. 말기 광복군의 조직기구도는 [도표 2-5]와 같다.

1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임정편 I)(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0), p.481, pp.460-463.

1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242-243.

[도표 2-5] 말기 광복군 조직 기구도



※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p.247.

제 2 절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1. 미군정의 국군 창설 준비

가. 국방사령부

현재의 대한민국 국방기구는 1945년 11월 13일 주한미육군사령부 「군정법령 제28호」로 설치된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 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¹¹⁴⁾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 US Army Forces in Korea, 미 제24군단)가 9월 12일 설치한 군정기구는 군정장관(Governor General)을 중심으로 총무처(總務處, Secretariat)와 8개 국(局, Bureaus)을 두었다.¹¹⁵⁾

[도표 2-6] 국방사령부 기구표

1945. 11. 13.



※ 출처: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 「군정법령 제28호」(1946. 11. 13.) ;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역사 일지(1945-1950)」, p.11.

114)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177.

115) 중앙행정기관·총무처행정관리국 편,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서울: 총무처, 1980), p.90. 총무처 밑에는 총무, 기획, 회계, 인사, 공보, 지방 등 6개 과(課)를 두고, 8개 국은 재무·광공·농산·공공안전·학무·법무·체신·교통국 등이었다.

주한미육군사령부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준비계획안」을 심의 검토한 결과, 우선 경비 대책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 28호」에 의하여 ‘국방사령부’와 ‘군무국(軍務局)’을 설치하였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경무국(警務局)을 군무국과 함께 국방사령부 산하에 두었고, 군무국에는 육군부와 해군부를 두었다.¹¹⁶⁾ 이 기구가 곧, 국군으로 발전하는 모태(母胎)가 되었다. 국방사령부의 기구표는 [도표 2-6]과 같다.

나. 남조선국방경비대

하지 중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사령부(2대 부장 ; Arthur S. Champeny 대령)는 1945년 12월 2만 5,000명 규모의 경비대 창설계획인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였다. 군정 당국은 뱀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응준(李應俊, 대한제국 무관학교와 일본육사 26기 졸업)을 국방사령부 고문으로 임명하여 국방군 창설을 위한 작업에 참여시켰으며, 이응준은 군의 주둔 위치, 편성방법, 병력, 모병방법, 장비 및 교육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뱀부계획을 토대로 1946년 1월 15일 군정청 국방사령부 군무국 관할 아래 ‘조선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를 창설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 부대를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호칭하였다.¹¹⁷⁾ 그리하여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연대 제1대대 A중대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태릉 : 현 육군사관학교 자리)에서 입대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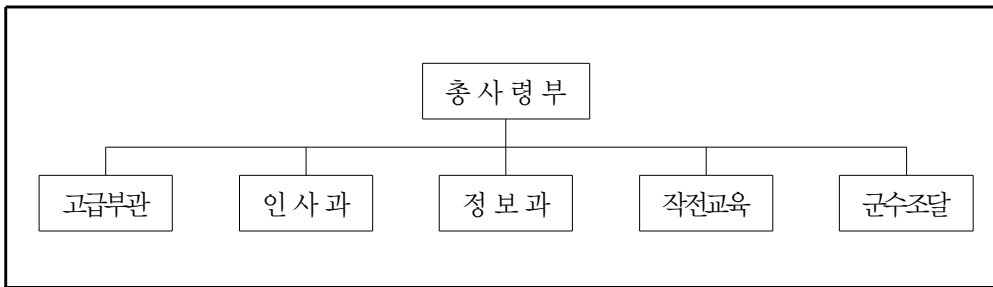
A중대의 창설을 효시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제1연대 본부에 ‘남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사령부 군무국 참모기능을 흡수하여 모병 및 인사업무를 전담하였다. 그리고 군정청 당국은 1월 24일 미국 육군 제24군단 예속 보병 제40사단이 해체됨에 따라 제40사단의 위관급 장교 8명을 군정요원으로 추가 편성하여 총 16명을 단기간 교육을 실시한 후, 각 도에 창설된 중대에 2명씩을 파견, 중대장으로 임명하였다. 남조선국방경비대 기구는 [도표 2-7]과 같다.

116)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1962), p.256.

117)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 「군정법령 제86호」(1946. 6. 15.).

[도표 2-7] 남조선 국방경비대 기구표

1946. 2. 7.



※ 출처: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 제1권(1945-1950)』,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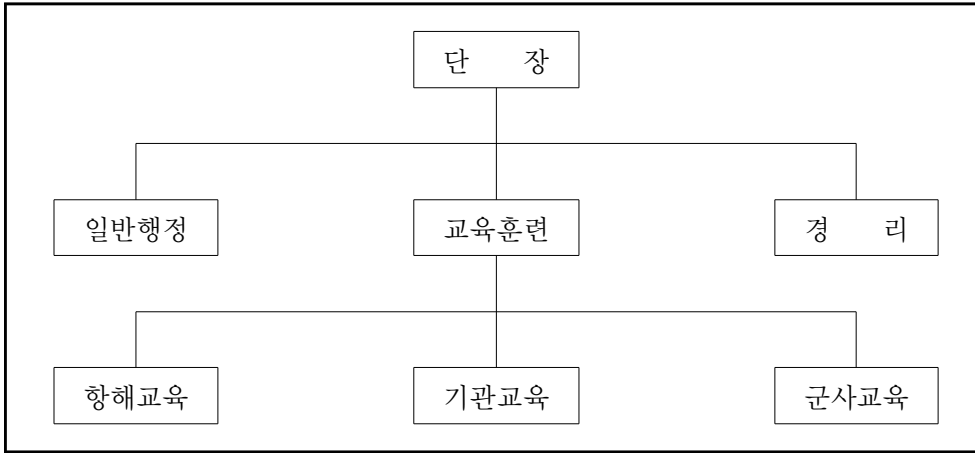
다. 해방병단

1945년 11월 1일 유일한 해사관계 조직체였던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 회장 손원일)는 교통국 해사과(海事科)의 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정청과 절충하여 해안경비(Coast Guard) 조직편성을 건의하였다. 군정 당국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11월 11일 인원 70명으로 서울 관훈동에서 ‘해방병단’ 결성식을 갖고, 11월 14일 경상남도 진해에 해방병단 본부(현 해군통제부 자리)를 설치하였다.¹¹⁸⁾ 1946년 1월 14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42호」에 의하여 교통국 해사과의 해안경비 업무가 국방사령부로 이관되자, 해사과에 소속되어 있던 ‘해방병단(海防兵團)’(조선해안경비대의 전신, 해군의 모체)은 국방사령부로 정식 편입되었다.¹¹⁹⁾ 해방병단본부 기구는 일반행정, 교육훈련, 항해교육, 기관교육, 군사교육 및 경리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기구표는 [도표 2-8]과 같다.

한편, 해방병단은 1월 17일 진해에 해군병학교를 설립하고, 기관과와 통신과를 설치하여 1945년 12월에 모집한 사관후보생의 교육훈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조함창(2월 1일)과 해군병원(2월 21일), 해헌대(3월 3일), 군악대(4월 2일)가 조직되면서 해안경비대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자, 진해기지를 중심으로 기지도 계속 확장하였으며, 1946년 4월 15일에는 인천기지를 설치하고, 60명의 대원을 인천기지에 배치하였다.

118)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188-189.

119)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정훈국, 1954), p.5.; 주한미육군사령부, 「군정법령 제42호」(1946. 1. 14.).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1집, p.189.

라. 국방부와 통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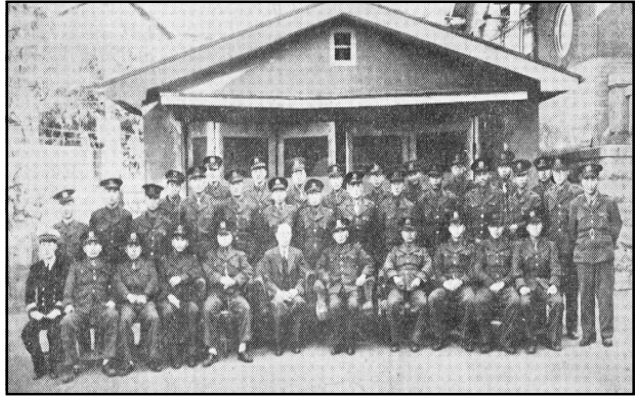
미군정 당국은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3호」로, 국방사령부 지휘 감독하에 있던 경무국을 경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분리하고, 같은 날 「군정법령 제64호」로 군정청 집행부서의 국제(局制)를 부제(部制)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사령부는 ‘국방부’로 개편하고, 국방사령부 산하에 있던 군무국은 국방부의 국으로 편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무부’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군정 당국의 조치는 한국인의 자력으로 민주정부를 운영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정 당국은 행정기구의 정비와 이에 따른 인원의 확보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조직체제가 급속도로 구축되어 갔다. 국방부의 임무와 기능은 국방사령부와 별다르지 않았으나, 국방사령부가 창군업무의 준비단계였다면, 국방부는 이미 편성된 부대의 증편과 장비 지원 업무 그리고 인사관리 업무 등의 시행 단계에 임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라는 명칭은 1946년 3월 20일부터 서울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한 소련 대표가 미군정청 기구의 명칭 ‘국방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옴에 따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군정 당국도 미·소가 공동으로 한국의 신탁통치와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던 상황에서 소련을 자극하지 않고자 ‘국방’이란 개념보다 ‘국내치안’이란 의미를 담은 용어로 바꾸어 1946년 6월 15일 「군정 법령 제86호」로 ‘국방부’

를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이 ‘국방’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조선시대 말기 군제의 삼영 가운데 하나인 통위영을 따서 ‘통위부(統衛部)’로 호칭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한국 측은 국내경비부를 ‘통위부’로 호칭하게 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6년 9월 12일 한국 측 ‘유동열’을 통위부장으로, 미국 측 국내경비부장 ‘프라이스(T. E. Price) 대령’을 통위부 수석고문관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사진 2-1〉 참조)



〈사진 2-1〉 유동열 통위부장(중앙)을 비롯한 조선경비대 간부들

한편, 1947년 5월 17일부터 군정청 행정기구상 북위 38도선 이남을 통치하는 주한미육군사령부의 군정청 한국인기관이 남조선의 과도정부 성격으로 발전됨에 따라 미군정 당국은 이 기관을 ‘조선 과도정부’라고 부르고 공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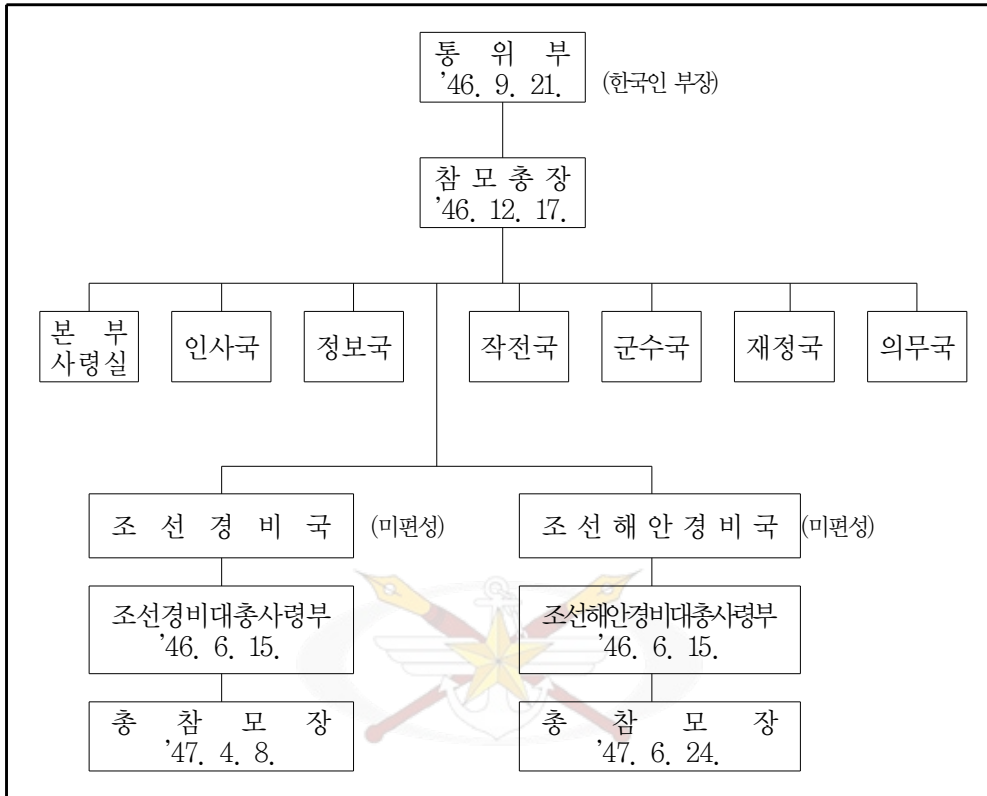
그리고 12월 17일에는 통위부의 기구개편에 따라 참모총장제를 신설하고, 참모총장(이형근 중령)으로 하여금 조선경비대 및 조선해안경비대를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경비대는 종래의 경비임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 방위 임무로 확대되었다.

또한 군무국을 폐지하였고, 이미 설치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조선국방경비대사령부는 ‘조선경비대사령부’로 각각 개칭되었으며, 해방병단은 명실공히 해안경비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조선경비국(Bureau of Korean Constabulary)과 조선해안경비국(Bureau of Korean Coast Guard)이 설치되었으며, 조선경비대는 조선경비국 관할 아래, 조선해안경비대는 조선해안경비국 관할 아래로 편성되었으며, 해방병단은 연안해상과 도서를 순찰, 경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조선경비청과 조선해안경비청의 규정을 마련하여 경비대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국과 청으로서의 기능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통위부 기구표는 [도표 2-9]와 같다.

[도표 2-9] 통위부 기구표

1946. 9. 21.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1집, p.194.

마.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1947년 4월 8일 총참모장제를 신설하고, 총참모장(초대 김상겸 대령) 산하 각 참모부의 과직제(課職制)를 처로 승격시키고, 법무처, 검찰감실, 통신과, 군감대의 특별참모기구를 신설하였다. 또한, 각 도에 편성된 연대를 지역별로 묶어 12월 1일부로 서울, 부산, 대전에 각각 1개 여단을 창설하고, 제10·제11·제12·제13·제14·제15연대가 계속 창설되어 제4·제5여단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통위부는 1948년 5월 정부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전후하여 5만 명의 병력으로 확충하기 위한 국방부 증강에 박차를 가한 끝에, 새로이 기술병과부대를 창설함으로써 경찰 예비대가 아닌 정규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주한미육군철수계획」이 발표

됨으로써 조선경비대를 국토방위와 국내치안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강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구를 다시 개편하여 처를 국으로, 통신과를 통신처로, 군감대를 군기사령부로, 법무처를 법무국으로 각각 승격시키고, 공병처와 병참처를 설치하였다.

바.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 기구는 일반참모부 외에 특별참모부, 그리고 일반부대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으며, 해상과 해안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조선해안경비대는 창설 후, 8개월 동안 미국 해군 예비역장교 2명과 아나폴리스(Annapolis)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미국 육군 장교 1명이 지휘 감독하였다.¹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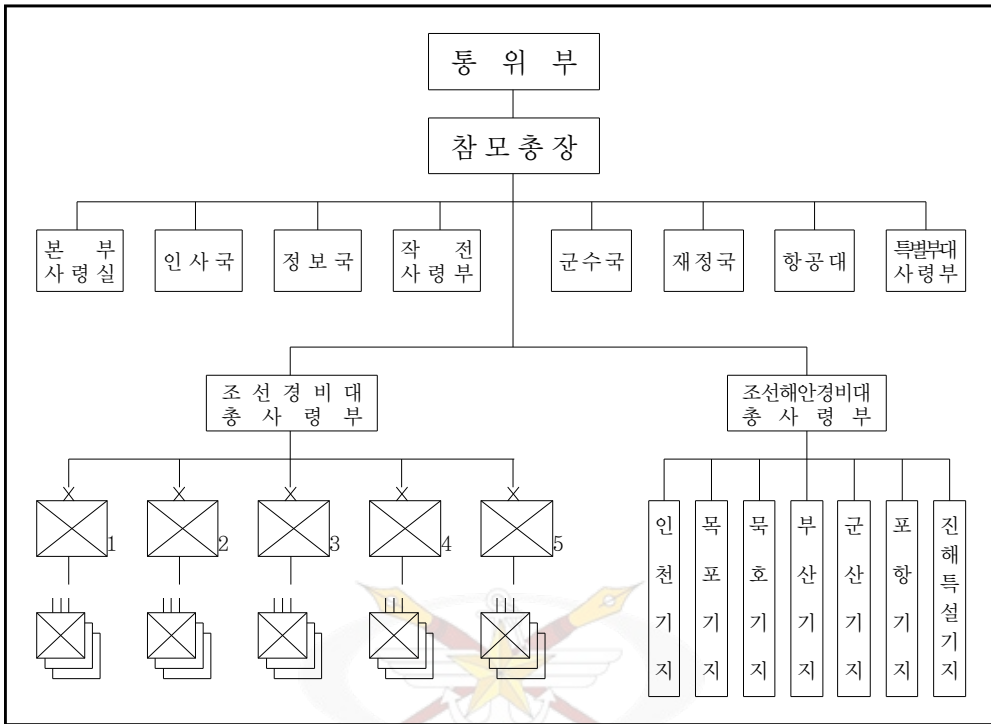
각 기지에는 군정 당국의 육군 위관급 장교들이 배치되어 기지를 운용하다가 1946년 9월 미국 해안경비대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된 15명의 고문단(단장: George E. McCabe 대령)이 파견되어 본격적인 부대 편성에 착수하고, 처음으로 무선 통신체계를 갖추는 등 획기적인 면모로 발전하였다.

특히 해상 활동에 절대적 요건인 선박 확보를 위하여 일본 및 필리핀에서 도입한 18척의 각종 선박을 인수하였다. 9월 15일 처음으로 상륙정(Landing Craft Infantry) 2척을 비롯하여 디젤선 1척, 증기선 2척, 상륙정 2척을 인수하였으며, 인천기지와 묵호기지에서 도 각종 디젤선과 증기선을 인수받았다. 이 선박들은 미국 정부가 대여한 것으로 당시 고문단장은 “상당한 수준으로 훈련된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9월 12일 군정당국이 행정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진해에 특설기지사령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걸친 해안경비대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해안경비대 업무가 본격화되자 1948년 5월 24일 통위부의 기구개편을 계기로 조선해안경비대 총참모장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해안경비대 병력은 1946년 11월 30일 현재 장교 165명, 사병 1026명에 불과하였으나 정부수립 직전까지 병력은 3천 명으로, 함정은 1백 5척으로 증강되었다.

정부수립 직전 통위부의 부대편성은 조선경비대의 15개 연대를 5개 여단으로 편성 완료하고 항공부대와 조선해안경비대의 7개 기지, 그리고 2개 정대의 전투부대를 증편하였다. 정부수립 직전 통위부의 부대편성표는 [도표 2-10]과 같다.

12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1962), p.14.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1집, p.201.

2. 국군 창설

가. 국방부분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과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 조직 구성과정을 거쳐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방부’가 설치되고 대한민국 국군이 출범하였다. 8월 24일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한미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¹²¹⁾에 서명하였고, 8월 31일에는 유동열 통위부장(오

121)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Commanding Interim

늘날 국방부장관)과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 간에 통위부 사무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이양하였다. 그리하여 9월 5일에는 통위부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의 명칭을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국군조직법」(1948. 11. 30., 「법률 제9호」)과 「국방부직제」(1948. 12. 7., 「대통령령 제37호」)가 제정됨에 따라 12월 15일부터 통위부가 ‘국방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각각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으로 정식 편입 및 법제화되었다.¹²²⁾

「국군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방기구의 설치 및 조직 편성의 대강(大綱)을 정하고 군정 및 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군을 조직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되고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영(令)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관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에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며,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설치하고, 육·해군본부에는 각각 육군총참모장과 해군총참모장을 두고, 각 군 총참모장은 국방부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군을 통리(統理)하며, 예하 부대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¹²³⁾ 한편 공군은 육군에 속한 항공병과를 필요시 독립된 공군으로 조직하도록 준비기간을 두었다. 또한 「국방부직제」가 공포되어 국군의 기능이 발휘되게 되었다. 국방부 기구표는 [도표 2-11]과 같다.

국방부는 비서실과 제1·제2·제3·제4국 및 항공국의 본부기구와 육군본부, 해군본부 기구로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육·해군의 작전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하고 참모총장이 의장이 되어 참모차장, 육군 및 해군 총참모장과 참모부장, 국방부 제1·제2·항공국의 각 국장, 그리고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육·해군 장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참모총장 제도와 연합참모회의가 1949년 5월 9일 국방부 기구간소화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육·해군본부의 총참모장 제도만 유지되었다.¹²⁴⁾ 1949년 10월 1일부로 국방부 항공국과 육군항공사령부를 통합하여 공군이 창설됨에 따라 국방부 편제는 명실상부하게 육·해·공군의 3군 체제로 전환되었다.¹²⁵⁾ 「공군본부직제령」(1948. 10. 1. 대통령령 제254호)에 따라 총참모장(초대: 김정렬 대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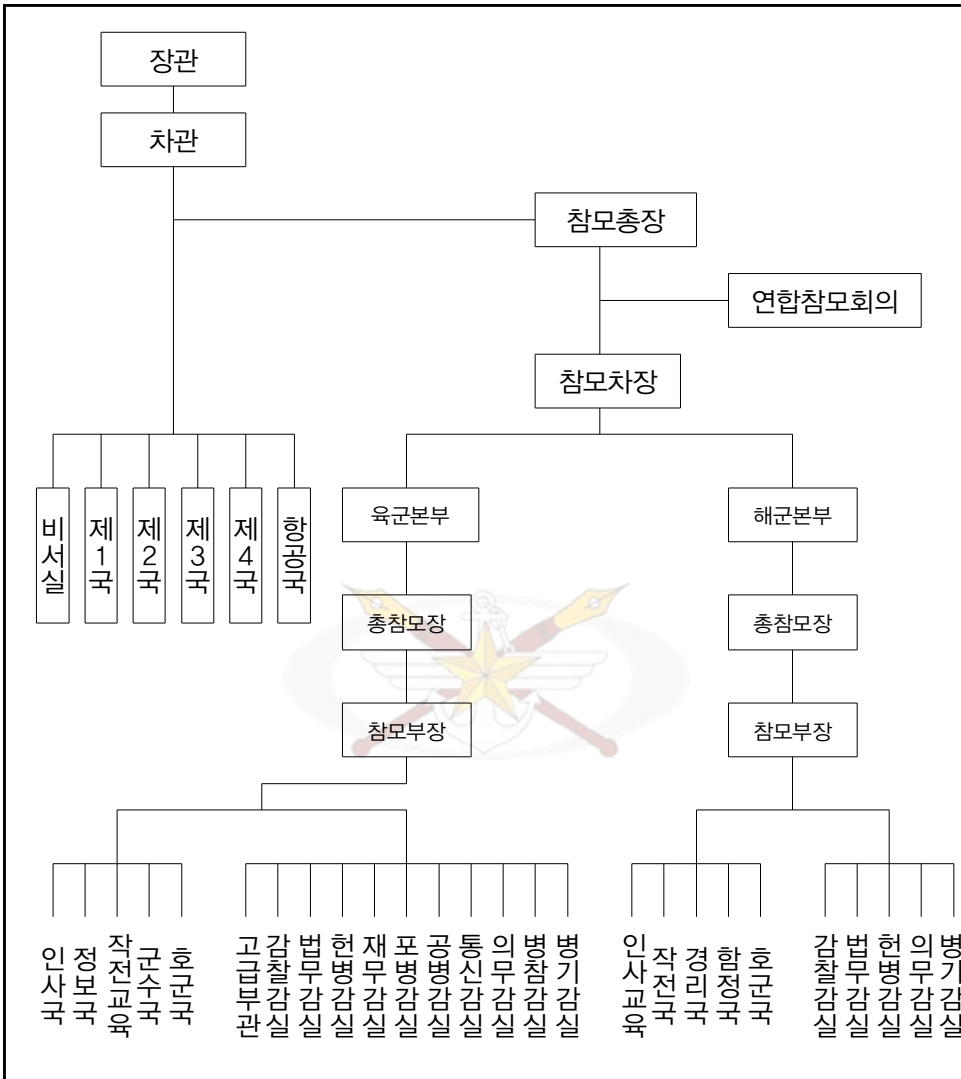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1948. 8. 24. 서명 및 발효),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pp.34-35.

122) 「국군조직법」(1948. 11. 30. 제정, 법률 제9호) ; 「국방부직제」(1948. 12. 7. 제정, 대통령령 제37호) ;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43.

123)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33-36. 「국군조직법」 제정 당시 제헌국회의 외부·국방위원회에서는 군정·군령의 이원화를 주장하였으나 정부 제출안대로 채택되었다.

124)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37.

125)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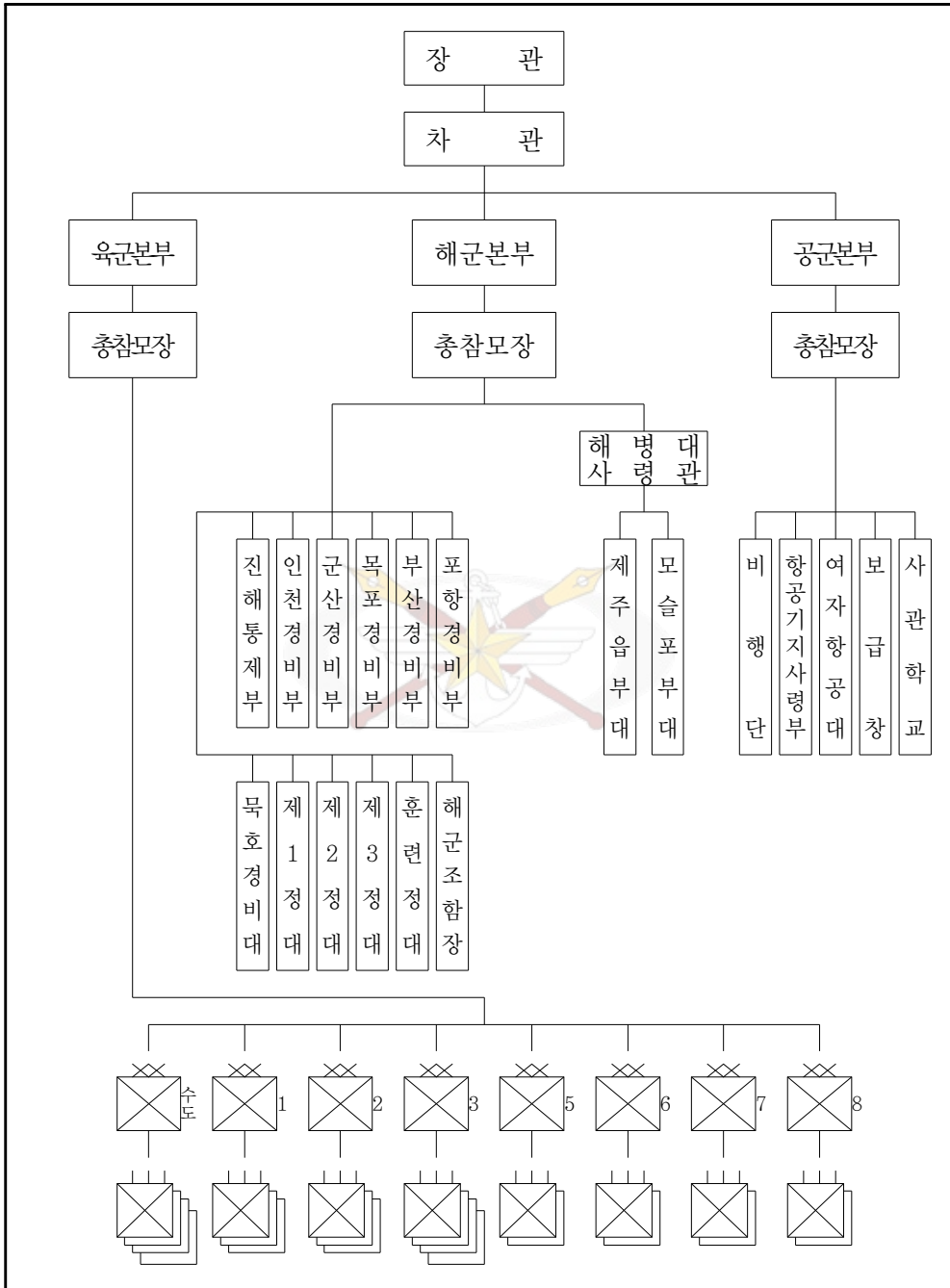
※ 출처: 「국방부직제」(1948. 12. 7. 대통령령 제37호); 국방부, 『국방사』 제1집, p.225.

참모부장(초대: 박범집 대령), 그리고 인사, 정보, 작전, 군수의 일반참모부와 고급부관실 등 감실을 설치하였다. 예하 부대로는 비행단, 사관학교, 항공기지사령부, 보급창, 공군병원, 여자항공대 등 부대를 육군으로부터 분리시켜 개칭하거나 신설하여 공군에 편성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1948년 12월 8일 일본인이 경영하던 유항상공주식회사(용산공장)와 조선 유지주식회사(인천화약공장)를 상공부로부터 인수받아 12월 15일 육군병기공장을 창설하고,

[도표 2-12] 국군 편성표

1949. 10. 1.



※ 출처: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pp.15-29; 국방부, 『국방사』 제1집, p.228.

제1·제2공장으로 명명하여 병기와 화약연구 및 제조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영등포에 위치한 삼화정공주식회사를 접수하여 제3공장으로 증설하고 1년간 운영한 후, 1949년 12월 15일 국방부 일반 명령에 의하여 병기생산을 통할할 목적으로 국방부 직할로 병기행정본부를 설치하였다.

병기행정본부(초대: 채병덕 소장)는 병기의 연구 개발과 각 군의 병기행정업무를 통할하고, 발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¹²⁶⁾ 특히 군 병기공장과 민간 병기생산공장(조선 알루미늄 공업 주식회사, 인천 기호전업주식회사)들을 관할하여 각군에서 소요되는 병기, 탄약, 총기와 부속품 생산을 지도 감독하고, 후송 장비의 정비수리 등 병기업무의 지원 행정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국군 편성표는 [도표 2-12]와 같다.

나. 육군본부

육군은 1948년 9월 5일부터 육군으로 호칭되었지만, 「국군조직법」(1948. 11. 30.)에 의하여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또한 육군본부는 12월 7일 「국방부 직제」의 공포에 따라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를 ‘육군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육군총사령부는 예하에 보병 5개 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은 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으로 총원 50,490명이었다.¹²⁷⁾

육군총사령부는 12월 15일에 다시 ‘육군본부’로 개칭하고, 육군총참모장(초대: 이응준 육군 준장)과 참모부장(초대: 정일권 육군 대령) 밑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의 일반참모부와 호국군국, 그리고 고급부관실, 감찰, 법무, 헌병, 재무, 포병, 공병, 병기, 병참, 의무의 각 감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다 1949년 5월 9일 국방부가 기구 간소화 방침에 따라 육·해군을 통할 지휘하던 참모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직접 통솔하게 됨에 따라, 5월 12일 육군본부는 참모부장제를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 2개 참모부장제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¹²⁸⁾

1949년 5월 12일 육군의 부대편성은 병력 확장계획에 따라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어 총 8개 보병사단(1개 사단은 3개 연대로 편성), 1개 기갑연대 및 1개 독립연대, 그리고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성하였다.¹²⁹⁾

126) 국방부 전사편찬회,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54), pp.245-251.

127)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39.

128)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39-40.

129)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 1(1945~1950)』(서울: 육군 군사연구실, 1951), p.270. 8개 사단은 수도·1·2·3·5·6·7·8사단이었다.

다. 해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해군본부 해군은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육군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해군은 1948년 8월 16일 「국방부훈령 제1호」로 이미 ‘해군’으로 호칭되었으며, 9월 1일 해안경비대가 국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9월 5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해안경비대 총사령부도 해군총사령부로 개칭되고 다시 12월 15일 해군본부로 기구를 개편하여 해군 본부는 해군총참모장(손원일 해군 준장)이 해군의 용병작전을 통할하고 예하 각 학교 및 함대, 부대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¹³⁰⁾

해군본부는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 호국군국 등 5개 국과 병기, 의무, 헌병, 법무, 검찰 등 5개 감실로 개편하고, 해군의 예하부대 편성은 해안경비대의 기구를 계승하여 운영하다가 1949년 5월 해군사관학교, 해병대, 해군기지 등 부대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과 「통제부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편성·운영하였다.¹³¹⁾ 또한 진해특설기지에 통제부를 설치하여 사령관(김성삼 해군 대령)을 임명하고 인천, 군산, 목포, 포항, 부산, 목호 등 해군기지에 경비부를 두었다.

한편 해군은 병기행정 업무를 해군총사령부 군수처를 통하여 육군본부로부터 총포와 탄약 및 자동차 부속품 등을 보급 받았으나, 1949년 2월 15일 병기감실이 설치됨에 따라 해군병기의 제작 및 수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해군병기감실 기구는 병기공창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병기감실에는 기술과와 정비과를 두고 산하기구인 병기공창에는 총무, 조병, 연구, 의무의 각 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병기공창은 1949년 5월 조선착암기공장을 접수하여 병기공창을 창설하고 기술진은 문관(현재의 군무원)으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¹³²⁾

해병대사령부 해병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여수·순천10·19 사건(1948. 10. 19. 발생)의 전훈에 따라 수륙양면 작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49년 4월 15일 해군의 예속부대로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여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되었으며, 1949년 5월 5일 「해병대령」(1949. 5. 5. 공포, 「대통령령 제88호」)에 의하여 법적으로 추인되었다. 당시 초대사령관은 신현준 중령이었으며, 병력은 1949년 3월 28일 해군에서 편입된 장교 26명과 하사관(현재의 부사관) 54명, 신병(해병대 병 제1기생) 300명 등 총 380

130)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40-41 ;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54), p.24.

131)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41.

132)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서울: 해군본부, 1954), p.71.

명이었고, 부대는 본부, 근무중대, 방첩대, 경리대, 2개 소총중대로 편성되었다. 해병대는 1949년 8월 1일 장교와 하사관을 해군에서 증원 받고, 해군 제14기 중 440명을 해병대 병제2기로 특모하여 2개 대대 규모로 증편되었다.¹³³⁾

해병대는 창설 이후 1949년 8월 29일 진주로 이동하여 4개월여 주둔하면서 진주 일대에 출몰하는 공비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주읍부대와 모슬포부대로 증편하여 제주도민의 민심수습과 한라산 일대의 무장저항세력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¹³⁴⁾

라. 공군본부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국방부 항공국과 육군항공사령부를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공군본부직제」(대통령령 제254호, 1949. 10. 1.)에 따라 총참모장(초대: 김정렬 대령)과 참모부장을 중심으로 인사, 정보, 작전, 군수의 일반참모부와 고급부관실, 재무, 법무의 감실을 두었다.¹³⁵⁾

또한 예하부대로서는 이미 설치된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비행부대를 비행단으로, 항공기지부대를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하고, 여자항공교육대를 여자항공대로 각각 개편하고, 공군병원과 보급창을 신설하였다.

공군은 창설 당시 병력 1,600여 명과 경비행기 20대를 보유하고 수원, 군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지구에 기지부대를, 그리고 비행부대를 비행단으로 개편하여 3개 비행중대와 정비중대로 증편하였다. 또한 공군본부의 특별참모 기구를 확장하고 헌병대(1950. 1. 5.)와 정훈감실(1950. 4. 1.)을 신설하였다.

6·25전쟁 직전 공군의 병력은 장교 242명, 사병 1,570명, 후보생 85명으로 총 1,897명이었으며, 이 중 조종사는 102명이었다. 그리고 비행기 보유수는 L-4 10대, L-5 10대, AT-6(건국호) 6대였으며, 전투용 비행기는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133) 해군본부, 「해군본부 편제 발령 제6호」, 해병대 편성(1949. 6. 1.) ;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70년사』(화성: 해병대 사령부, 2019), pp.17-18.

134)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70년사』(화성: 해병대 사령부, 2019), pp.27-28.

135) 국방부 전사편찬회,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54), p.31.

제 3 절 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1. 국방부본부

전쟁 발발 당시 우리 군은 육군은 보병 8개 사단, 2개 독립연대 규모의 부대와 병력 약 94,000명, 해군은 어뢰정 28척을 주함정으로 하는 3개 해상방어대와 1개 훈련정대로 편성된 7,700명, 해병대 2개 대대 규모로 편성된 병력 1,166명, 공군은 연락기등 소형 항공기 22대와 병력 1,800여 명 규모의 비행단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본부는 비서실, 제1국(군무국), 제2국(정훈국), 제3국(관리국), 제4국(정보국), 항공국과 육군, 해군, 공군으로 편제되어 있었다.¹³⁶⁾

국방부는 전투부대의 증·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무, 군수관리, 정훈 등 전투부대 지원을 위한 관련기구를 보강하면서 국방체제상의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인력자원의 전시소요를 체계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업무를 담당하던 제4국을 ‘병무국’으로 개편(1951. 8.)하는 동시에 ‘정보국’은 그 업무를 각 군으로 이관하고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업화하고, 병무행정체제를 확대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제4국은 징·소집 및 기타 인력동원과 복원, 군사원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육군본부의 고급부관실 징모과(徵募課)와 각 군의 군사원호에 관한 기구가 제4국으로 흡수됨에 따라 육군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 소속으로 예속 변경하였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전황이 회복되면서 국가적으로 전사(戰史)편찬 업무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는 10월 중순부터 정훈국 예하에 임시기구로 ‘전사편찬회’를 편성하여 이병도 박사를 비롯한 사계 권위자들에게 전사기록 및 편찬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1951년 1월 15일 정훈국 예하의 정식기구인 ‘전사편찬회’로 개편하고 공식적으로 전사편찬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5일 우리 군 전사편찬의 효시인 『한국전란 1년지』를 발간하였다.

1950년 11월에 설치된 ‘포로심사위원회’는 전쟁 중 발생한 북한군 포로의 석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포로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산을 비롯한 대구, 대전, 인천과 기타 필요한 지방에 지구포로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총무과에서 담당하

136)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49.

던 상전업무를 독립시켜 제1국에 상전과를 설치하고, 훈장 및 기장(紀章) 수여와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고 비서실을 정부의 각 부처와 균형을 맞추도록 제1국의 총무과에 흡수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직할로 설치(1949. 12.)되었던 ‘병기행정본부’를 국방부 제5국으로 개편(1952. 3.)하여 ‘군수 및 재산관리국’으로 개칭하고 관리국인 제3국을 ‘경리국’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육·해·공군의 군수업무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제3국이 경리업무만을 관장하고 군수업무는 제5국에서 관장하게 하여 제5국을 전문화된 기구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제5국에 예속되었던 제1, 제2조병창을 통합하여 ‘조병창’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연구소’와 함께 국방부 직할로 운영하였다.

「국무원 공고 제30호」(1952. 3.)에 의거 ‘계엄사령부’를 경상북도 대구시에 설치하고, 국방부 직할로서 지방별로 지방계엄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계엄사령부의 임무는 「계엄법」 및 「계엄법 시행령」에 의거 제반 계엄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계엄사령부의 기구는 행정, 법무, 동원 및 치안과와 계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1952년 8월 23일에 ‘임시합동참모회의’를 대통령 직속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 각 군의 용병작전 및 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 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¹³⁷⁾ 이상과 같이 전쟁 중 국방부 기구는 필요에 따라 소폭적인 증·창설과 개편을 거듭하였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성립되자,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계기로 안보체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한의 재침에 대비하여 전력증강에 전력을 기울였다. 1953년 7월 유사시 향토방위를 위해 「민병대령」(1953. 7. 23., 「대통령령 제813호」)에 의거 국방부 직속으로 ‘민병대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민병대총사령부는 전국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단위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과 및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유사시 향토방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¹³⁸⁾

휴전 직후 육군은 총 5개 군단, 20개 사단 및 10개 예비사단, 그리고 5개 관구사령부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2군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전·후방으로 2원화된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휴전 다음 해인 1954년 2월 17일에는 「합동참모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73호」, 1954. 2.

137)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52-53. ‘임시합동참모회의’의 임무는 군사에 관한 대통령 자문, 국방정책 및 계획 건의, 각 군의 훈련 및 작전, 기타 상호 관련사항 심의 등이며, 의장은 각 군 총장이 윤번제로 맡았고 회의장소는 윤번제 의장이 소속된 각 군 본부였다.

138)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52. 민병대총사령부는 민병대 폐지 결정에 따라 1955년 5월 해체되었다.

17.)에 의거 국방부장관 비상설 군령 자문기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설치¹³⁹⁾하였으나 5월 3일부로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 직속 군사보좌기관으로 ‘연합참모본부’를 설치하고, 연합참모회의를 운영하였다.¹⁴⁰⁾

그리고 조병창과 과학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1954년 7월 14일 「대통령령」으로 ‘국방부 과학연구소’를 설치하였다.

1955년 2월에는 「국방부직제」가 4번째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특징은 국방부 직제에 포함되었던 육·해군 본부 직제를 별도로 분리하여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직제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2. 육군본부

육군본부는 1949년 5월 개편된 편제에 따라 운영되다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8일 수원으로 이동하였으며, 전시편제로 개편되었다. 특히, 지역별로 부대를 창설 운영하기 위해 군 편성관구와 각 지구별 편성관구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편성관구는 전시 병력동원과 후방전투 임무수행을 위해 신병보충에 역점을 두고 예비 및 지원부대를 지휘하여 전쟁 초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제1군단과 제2군단이 창설되었고, 연이어 재편성 과정을 거쳐 5개 사단과 제3군단이 창설되었다.

1950년 7월 대민관계의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부’를 설치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작전과 치안상 필요한 민간인과의 협조와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부산과 마산 지구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하의 사법, 행정에 속하는 계엄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또한, 민사부는 육군의 각 사단과 해군의 통제부사령부에 ‘민사과’를 두어 민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육본에 군사 및 민사 사항을 관장하는 기구로 ‘국민방위국’을 설치(1951. 1.)하고, 청년방위대 자문단을 해체하였으며, 국민방위국은 1951년 5월 제5군단과 예비사단을 창설할 때까지 운영하였다.¹⁴¹⁾

139) 「합동참모회의 규정」(1954.2.17. 대통령령 제873호). 합동참모회의의 임무는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정책 및 계획을 건의하고, 육·해·공군의 훈련, 작전, 보급, 기타 상호연관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140)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53 ;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개혁사』(서울: 한성에드림, 2011), p.122. ‘연합참모본부’의 임무는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방정책 및 계획을 건의하며, 육·해·공군의 연계 협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대통령령 제895호」, 1954. 5. 3.)

141)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54.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술적 선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작전국에 ‘신경전과’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선전업무의 운용을 통할하고 선전자료 준비와 배포 및 정보수집 평가 등 신경전 훈련의 기술적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사(戰史)업무의 일원화와 전사기록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사감실’을 설치하고 예하부대의 전사업무 감독, 작전사료와 업무기록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전시 예비병력 보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육본에 ‘병무감실’을 신설하고 3개 예비연대와 3개 보충연대 및 1개 장정대기소를 통할하도록 하였는데, 병무감실은 각 훈련소의 입소 장정의 보충과 예비병력의 운용감독 및 근무단을 통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정훈대대를 해체하여 정훈감실로 개편하고 종군작가단과 군가보급단을 두었으며, 병무, 홀병(恤兵), 수송, 전사(戰史) 등의 감실과 직할부대를 연이어 창설하였다.

휴전 후 전방지역에 제28, 제29보병사단과 제5, 제6군단과 이 부대들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제1야전군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후방지역에 10개 예비사단과 5개 군관구사령부와 이 부대들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제2군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전·후방 부대의 임무구분을 이원화한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3. 해군본부



해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7일부로 작전지휘권을 잠정적으로 진해통제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해군본부를 전시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진해통제부사령부에서 전시임무를 수행하였다. 해군의 작전본부는 부산에 위치하면서 유엔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편성은 해군본부의 기구를 축소시켜 국은 부로, 감실은 담당관제로 개편하였으나, 그 후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하고, 특별참모부는 담당관제로 개편하였다. 긴급사태가 완화되고 군 작전이 정상화됨에 따라 다시 해군본부로 개칭하고, 국과 감실로 환원하여 작전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업무를 단일화하였으며, 군수국은 동원업무만을 담당하고 선박의 징발과 징용은 작전국이 담당토록 하였다.¹⁴²⁾

한편, 1951년 2월 육·해·공군이 방공사령부(防空司令部)를 설치함에 따라 해군본부 작전국에 방공과를 설치하고 해군본부 예하 통제부와 경비부 작전과에 방공대를 설치하여 대공방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사(戰史)편찬업무 수행을 위해 작전, 인사, 군수, 정훈, 함정, 법무, 통신의 국장 및 감과 사학자 3명으로 ‘해군전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군사』·『작

142)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56.

전사』 편집과 사진업무를 담당하였다.¹⁴³⁾

1953년 2월에는 적 통신망의 포착 분석과 통신관계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참모총장 직속으로 통신정보대를 설치하였으며, 해군본부 작전국을 폐지하고 작전참모실과 기획참모실을 통신감, 정보감, 기상 및 수송관을 각각 참모로 개칭하는 한편, 기획·작전·통신·정보 참모는 제1함대의 참모업무도 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군의 업무가 확대되자 같은 해 5월 해군본부의 기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작전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 그리고 신설된 후방참모부장 간의 업무를 분장토록 개편하였다.

정전협정 조인 이후 해군정책과 군작전의 유기적인 운영과 원만한 협조체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해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작전·행정·후방 참모부장 이외 감찰총감을 두어 작전본부를 운영토록하고 인사, 함정, 경리, 의무 등 4개 국과 병기, 정훈, 시설, 홀병, 헌병 등 5개 감실을 두었으며, 함대사령부와 후방지원부대를 편성하였다. 1954년 10월에는 기획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작전본부에 기획총감실을 신설(1954. 10.)하고 해군의 기본계획서 작성과 해군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조정하여 해군운영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의 통계와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1955년 3월 해병대에 대한 지휘 권한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작전본부내 해병대 보좌관 직위를 두었다. 1956년 2월에 개정 공포된 「해군본부 직제」에 따라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제, 장비, 기술, 작전, 교육훈련, 후방지원과 해군에 관한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고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이외 작전·행정·후방 참모부장을 두도록 기구 개편을 거듭하는 가운데, 1957년에 이르러서 합리적인 해군의 편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해병대는 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해군본부 소속부대로서 부대편성은 사령관을 두고, 그 밑에 참모장과 인사·정보·작전·후방국 등 4개 국과 통신, 헌병, 의무, 재정, 정훈, 법무 등 참모부를 편성했으며, 휴전에 이르러는 부사령관과 참모장 이외에 작전교육국과 보급·병기·수송·공병부대 등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완전한 기구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55년 2월 이후부터 1959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개편을 지속하였는데, 기구 개편의 특징은 제1차에는 의무감실을 편성하였고, 제2차에는 대외과견부대와 해군함대 연락반과 국방연구 기간요원 등을 설치하였으며, 제3차에는 기획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을 편성하였다.¹⁴⁴⁾

143)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56.

144)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57-58. ;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해병20년사 1949. 4. 15.~1960. 12. 31.)』(서울: 해병대사령부, 1961), pp.129-130.

4. 공군본부

전쟁 직전 공군본부의 편성은 참모총장과 참모부장 밑에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4개국과 고급부관실, 재무, 법무, 정훈감실로 구성되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여의도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김포기지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으며, 보급창은 군수국으로 통합하고 비행단과 정찰 비행대대 및 근무부대를 전시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어서, 1950년 10월에는 병참감실을 설치하였고, 공군본부가 대구로 이동하면서 작전사령부를 설치하였으나, 이듬해 1월 해체했고, 감찰감실, 일반참모비서실 및 홀병감실을 각각 설치하는 등 기구를 확장하여 작전과 행정으로 구분된 참모부장을 두었으며, 1952년 5월 재정국을 경리국으로 개편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시설감실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53년 5월에는 작전참모부장을 기획참모부장으로 개칭하였다.¹⁴⁵⁾

휴전 후에는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갖추기 위해 후방지원 업무의 강화의 일환으로 군수국의 체제를 정비, 보급, 조변, 장비심사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개편하였으며, 공군본부 직할로 특별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공군본부의 서울 및 부산 분실을 해체하였다.

그리고 공군 현대화의 필수 기능인 통신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작전국의 통신과를 통신감실로 개편하고 항로관제, 조기경보, 기상통신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공군은 1958년 7월 현대화된 통신장비 시설을 갖추으로써 전술적 운영체제를 완비하였으며, 8월 1일 제11전투비행단의 창설로 전술체제의 전환점을 이룩하였다. 또한 작전과 행정의 양 부장제를 단일화하여 지휘계통을 일원화하고 후방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단일 참모부장제로 개편하였다.¹⁴⁶⁾

1960년 12월 「공군본부직제」가 「국무원령 제116호」에 의거 개편되어 편제·장비기술·작전·교육훈련·후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참모총장 및 차장 이외에 참모부장과 비서실을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일반참모부로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경리 등 5개국을 두었고, 행정, 법무, 감찰, 정훈, 시설, 통신감을 특별참모부로 두었으며, 기획실과 본부사령실을 두도록 하였다.

145)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58-59.

146)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59-60.

제 4 절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이 시기의 국방기구는 5·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의 탄생, 경제개발계획 추진 및 베트남 파병,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격증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체제의 정립과 병행하여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1961년 군사 정부는 행정관리기구의 정비강화 방침에 따라 정부기구의 개편과 함께 군에서 시행 중이던 ‘기획제도’를 일반행정기관에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기획제도를 정착시켰다. 그 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기구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1961년 10월 2일 「법률 제734호」로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획과 집행업무를 분리하고 각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직능별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연합참모본부를 축소하여 국방부 내의 부서인 연합참모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각 군에서는 참모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 및 특별 참모본부를 개편하였다.

1960년대 중반 국방부는 베트남 파병(1965)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에 파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자체 방어력을 파병 이전의 수준으로 증강하기 위해 국군의 정원 상한선을 60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조정하여 육군 1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여단을 창설하였으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는 예비군을 창설(1968. 4. 1.)하고, 이에 따른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군의 현대화와 국산병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1967년의 해군 56함 격침과 1968년의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및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북한의 대남도발 격화와 「닉슨 독트린」에 의거한 주한미군 감축 추세에 따라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 국방부분부

5·16군사정변 후인 1961년 10월 2일 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국방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제2공화국 이래 2명씩으로 운영하던 차관과 차관보를 각각 1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총무국을 군무국으로, 관리국을 군수국으로, 경리국을 관리국으로 개편하고, 연합참모국을 신설함으로써 국방부 기구를 군무국, 정훈국, 병무국, 군수국, 관리국, 연합참모국, 총무과 등 6국 1과로 조정하였다.

1963년에는 제5차 「헌법」 개정(1962. 12. 26.)에 따라 새로운 체제의 「정부조직법」과 더

불어 「국방부직제」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2인으로 구성되었던 차관보를 3인(관리, 인력, 군수)으로 하고, 각 부서도 총무과, 기획국·재정국·병무국·인사국·군수국·시설국·정훈섭외국(政訓涉外局)으로 개편하여 관리차관보는 기획국과 재정국을, 인력차관보는 병무국과 인사국을, 군수차관보는 군수국과 시설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무회의와 법제위원회를 두어 군무회의에서는 장관에 대한 국방정책 자문과 지시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위원회는 국방부에 관련되는 법령의 심의와 공포 및 국회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¹⁴⁷⁾

1967년 6월 7일에는 베트남파병(1965. 10.)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훈국에 ‘월남(베트남)과’를 신설하여 파병 관련 지원활동을 비롯한 위문활동 및 장병과 그 가족 간의 연락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8년 7월 24일에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예비군국과 의무국을 신설하고 정훈섭외국(政訓涉外局)을 정훈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기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일부 부서의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특히 예비군국은 북한의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등 대남도발이 격화됨에 따라 1968년 4월 1일 창설된 예비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신설되었다.¹⁴⁸⁾



2. 연합참모본부와 합동참모본부

1961년 7월 5일 국방부는 「법률 제746호」에 따라 연합참모회의와 연합참모본부를 폐지하였다가 10월 2일 국방부본부에 ‘연합참모국’을 설치하였고, 1962년 6월 23일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연합참모국은 그 기능이 제한되어 군령업무 수행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국군조직법」 1차 개정(1963. 5. 20., 법률 제1343호)에 따라 1963년 6월 1일부로 ‘합동참모회의’와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고, 연합참모국은 8월 26일 폐지하였다.¹⁴⁹⁾

신설된 합동참모회의(이하 합참)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이하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필요시 해병대사령관 포함)으로 구성하고 합참의장은 본회의의 회무(會務)를 장리하며, 합참을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동참모회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전략지침, 전략기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

147)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63.

148)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63-64.

149) 『국군조직법 개정법률』(1963. 5. 20. 제정, 법률 제1343호) ; 「각령 제1325호」(1963.6.1.)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정 ;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1992), p.66, 207.

과 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본부)는 본부장 및 인사기획국, 전략정보국, 작전기획국, 군수기획국 및 행정실을 두어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합동참모회의(이하 합참)’가 최초로 법률상 상설 군령기관으로 설치되었다.¹⁵⁰⁾

1965년 6월 14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1개 전투사단 증파를 요청 받은 정부는 6월 23일 증파부대의 편성 및 부대 목록 건의와 협조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단’을 합참 작전국에 잠정 설치하였으며, 이듬해인 1966년 6월 23일에는 베트남파병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참본부의 기구에 일부 증·개편하였다. 즉 비서실에는 육·해·공군의 상황을 파악하게 될 합동상황실을 신설하였으며, 인사기획국에는 베트남파병 인사를 담당하게 될 합동인사과를, 전략정보국에는 주외무관의 운영을 담당하게 될 수집운영과를, 작전기획국에는 군의 편제 및 특전업무를 수행하게 될 편제과와 특수전과를, 그리고 군수기획국에는 베트남파병 군수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합동군수과를 설치하는 등 5과 1실을 증·개편하였다.¹⁵¹⁾

또한, 1967년 2월 17일부로 합동통신체계의 연구발전과 군통신전자업무의 기획·통제·조정과 합동통신 절차에 관한 기술 및 통신장비의 표준화, 그리고 통신보안과 「군통신전자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할 수 있도록 작전기획국의 통신전자과를 독립된 국으로 승격시켜 ‘통신전자국’을 설치하였다.

한편 정부는 1968년 1월에 발생한 북한의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격증하는 대남침투 공작에 대처하기 위하여 1월 30일 대간첩대책기구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중앙대간첩대책회의의 상임위원이 되고 합참본부장이 간사가 되었다. 이어서 2월 1일부로 합참본부에 ‘대간첩대책본부’가 창설되었으며, 이의 구성은 합참본부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이 되고 그 밑에 대간첩작전기획국과 대간첩통신전자국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의 기획국장을 비롯하여 합참본부의 전략정보국장과 작전기획국장, 각 군(해병대 포함)의 정보 및 작전의 참모부장과 내무부, 법무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관계기관 대표가 실무진이 되어 이 기구의 업무를 심의 및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따라 한국의 방위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1968년 5월 27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이해 6월 12일에는 주한미군

150) 「국군조직법 개정법률」(1963. 5. 20. 제정, 법률 제1343호). 법률 제12조 1항. 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151)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68.

사령부 내에 ‘한미연합기획참모단’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5일부로 한미연합기획참모단을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내에 설치하였는데, 단장은 미국군 측에서, 부단장과 행정장교는 한국군 측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한국군 합참의장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미공동방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방위계획」 참모연구 및 참모 보고를 준비하고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¹⁵²⁾

3. 육군본부

1960년대 육군 편제는 육군지휘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자원의 전력화, 그리고 전력의 기동화 및 전시적응의 보장을 목표로 육군운용에 필요한 주요부대의 창설과 기타 부대의 해체 등 증·개편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본부의 기구도 조정되었다. 기간 중 육군본부 기구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는 1962년 3월 21일에는 북한의 기만적 평화공세 및 간접침략을 저지하고 분쇄한다는 목표 아래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작전참모부의 특전처를 특전감실로 개편하였다. 개편된 특전감실의 임무는 육군의 심리전 및 대비정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연구하며, 유격활동에 대한 발전과 지원, 그리고 적진에서의 아군포로 탈주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1964년 4월 14일에는 민사군정감실을 민사감실로 개편하여 작전참모부장의 감독하에 민사업무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군의 전반적인 민사업무 시행상태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한편 육군은 1967년부터 지휘조직의 합리화와 작전지휘체통의 전력화 및 기동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육군 전반에 걸쳐 편제조정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11월 1일 작전참모부의 전력평가과를 동원과로, 작전처의 민방위과를 계획과로, 기획동원과를 동원과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어서 12월 29일에는 기획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기획통제실을 모체로 한 ‘정책기획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8년 4월 1일 “일하며 싸우자”는 향토방위의 신념으로 예비군이 창설됨에 따라 병비국(兵備局)을 ‘예비군부’로 확대 개편하였다.¹⁵³⁾

152)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68-69.

153)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70-71.

4. 해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해군본부 해군은 1960년대에 임전태세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전술의 고도화, 지휘권의 확립, 그리고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 기구를 작전체제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수지원체제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구를 개편하였으며, 1970년에는 중간관리기구의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과단위를 담당관제로 개편하였다.

1962년 12월 1일 해군본부는 일반참모조직으로 체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사국과 행정참모부를 통합하여 인사참모부로, 함정국(함정행정국)과 병기감실을 통합하여 군수참모부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해군본부는 참모총장 밑에 작전, 인사, 군수의 일반참모부를 구비하게 되었다.

1963년 9월 1일에는 정부방침에 의거 해군본부에서 관장하던 수로국의 업무를 교통부로 이관하고 그 대신 교통부에 해군파견관실을 설치하여 수로국의 업무를 협조하다가 수로관실을 해군본부의 부서로 설치하여 해군의 수로업무를 지원하게 하였다.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는 1961년 1월 1일 사령부의 일반참모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체제를 일원화하여 일반참모부의 기구를 정립하였으며, 1964년에는 설치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전시켜 ‘군사발전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병대의 기본전략정책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기간 중 해병대사령부 기구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병대의 기획관리업무는 1959년 4월 13일 개편된 관리국이 기획감실 업무와 분리하여 예산·통계·감사·국고(國庫)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오다가 5·16군사정변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기획업무가 체계화되자 1962년 6월 1일 기획감실을 관리국에 통합시키고 기획감실을 해체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국은 기획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1964년 12월 21일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정책연구위원회를 잠정 설치하여 해병대의 모든 정책문제 및 기구개선과 병력조정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968년 6월 1일에는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의 정원을 책정하여 1965년 청룡부대 파월 시 부대장(제1여단 및 청룡부대) 충원을 위해 취했던 단일 참모부장 제도를 양개 참모부장제도로 환원하였다. 1971년 7월 1일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기구의 관리개선 방침」(1970.2.6.)에 의거 사령부의 국을 참모부로 개편하여 인사·정보·작전·군수·관리 참모부로 편성하고, 각 부의 과를 개편하였다.¹⁵⁴⁾

154)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73-74.

5. 공군본부

공군은 전력 증대와 더불어 병력의 증원과 기술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구의 개편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의 참모 편성은 1960년 12월 개편된 단일 참모부장제로 운영해 오다가 1962년에 작전참모부장·행정참모부장제로, 1969년에 군수참모부, 1970년에 기획참모부를 증설하여 점차적으로 일반참모 형태로 그 기능을 발전시켰다. 기간 중 공군본부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1962년 9월 공군본부는 단일 참모부장제에서 작전참모부장·행정참모부장 양부장제로, 특별참모인 통신감실과 시설감실을 일반참모격인 통신전자국과 시설참모국으로, 그리고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실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의 기구는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관리국·통신전자국·시설국 등 7개 국과 특별참모인 감사감실을 비롯하여 의무·행정·법무·정훈·안전·기획·군종 등 8개 감실로 편성 운영하였다. 1969년 1월 20일 공군본부는 작전참모부장·행정참모부장제에서 일반참모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참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참모부장제를 신설하여 3개 참모부장제로 운영하였는데, 신설된 군수참모부장은 군수·관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정책의 발전 및 계획집행의 감독업무를 비롯하여 타군과의 군수상호지원에 대한 협조업무를 수행하였다. 1970년부터 1971년까지 공군본부는 일반형 참모 형태로 참모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1970년 10월 1일에는 기획관리참모부를 신설하여 작전참모부의 기획국과 군수참모부의 관리국을 이관시켜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군의 기획 및 정책발전과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 그리고 타군과의 기획·관리·업무상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¹⁵⁵⁾

제 5 절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

1. 1970~80년대(1970. 1.~1989. 12.)

1970~80년대의 국방정책은 대체적으로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자주국방 달성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군의 과학화 및 정예화를 위한 방위산업, 전력증강, 예비군의 전력화, 정신전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70년대 국방부는 자주국방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기구를 개편하였고,

155)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75-76.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방기획관리기능의 최신화가 요구되어 1971년에 미국의 ‘계획예산제도(PPBS, 기획·계획·예산분석 기능)’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약 8년간의 연구와 훈령 제정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1979년에 “국방기획제도”를 훈령화(「국방부 훈령 제253호」)하고 1980년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1980년대 들어 국방부는 “간소한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병력의 소수정예화와 중간지휘체제의 폐지를 기조로 군구조를 축소했으며, 초전 3일 작전개념에 부합된 전시동원계획을 발전시켰고, 유사시 예비군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비군 지휘체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기획제도”를 약 3년간 시행한 결과 그 제도가 미국의 계획예산제도의 외양만 모방한 것일 뿐 실제 군사력 건설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유기적 총괄체제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자원 낭비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1983년부터는 ‘계획예산제도(PPBS)’ 기능에 집행(Execution) 기능과 평가(Evaluation) 기능을 추가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로 개정(「국방부 훈령」 제308호)하여 1986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¹⁵⁶⁾

1980년대 말기 국방부는 2000년대를 지향하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란 민족사적 대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을 목표로 군사지휘의 적응성과 육·해·공군의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하고 3군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818계획)」을 연구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가. 국방부분부

1970년 2월 28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1970.1.1.)에 따라 정책 및 기획기능 부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당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관·차관·차관보·국장 밑에 담당관을 두도록 하여 12개 과를 폐지하고 6개 과와 13개 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71년도 후반에는 국방정책의 수립 및 연구와 국방에 관한 모든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국의 방위산업담당관을 격상시켜 군수차관보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방위세를 재원으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년간의 「제1차 울곡계획(’74~’81)」을 통해 전력증강을 꾀하였으나 군별 소요제기로 투자가 분산되고 전력의 물적 증가로 유지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으로 대북한 전력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156)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79-81.

울곡계획('82~'86)에서는 초전대응을 위한 긴급전력 확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구조 및 부대구조도 한국 여건에 부합되도록 지휘계통을 단순화하고, 유사기구를 통·폐합하여 고급사령부의 편성을 소수 정예화하였고, 행정부서의 병력을 최소화하였으며, 병과별로 운영하던 학교기관을 전투, 기술, 행정기능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주국방체제 확립에 따른 전시동원업무 및 방위산업 업무 강화와 전·평시 인력수급제도를 확립하고 유사기구 통·폐합으로 합리적인 기구로 재정비하며, 정신전력 강화와 국방보도 업무의 체제를 개선한다는 목적 아래 「국방부 직제」를 개편하였다. 즉, 1975년 8월 군수국의 운영과와 소요계획과를 통·폐합하여 '군수계획과'를 설치하고, 방위산업국의 연구개발과와 개발차관과를 폐지하고 '지상장비과', '해상장비과', '항공장비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방위산업계획담당관을 '방위산업계획관'으로, 차관 산하 비상계획담당관과 예비군국을 폐지하고 관리차관보 산하 '동원예비군국'으로 개편하고, 국방투자사업의 통제 및 조정을 위해 차관 산하 '투자사업조정관'을 신설하였다.¹⁵⁷⁾

1977년 9월 국방부는 방위산업 업무의 보강을 위해 방위산업국을 폐지하고, '방산 1국(3개 과)', '방산 2국(5개 과)', '방산 3국(5개 과)'을 신설하였다. 특히, 1977년 12월과 1979년도에는 방위산업 업무를 정착하기 위해 방산 2, 3국의 5개 과를 폐지하고 국방조직관리기구의 보강, 그리고 자주국방태세 전환에 따라 매년 증가되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관리차관보 밑에 '예산편성국'을 신설하고, 차관 밑에 '전자계산담당관'을 신설 운영하게 되었다. 1981년 11월에는 현행조직체계상 불합리한 기구를 개선하고 국정지표의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한다는 '정부조직 정비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관리·인력·군수·방위차관보를 '제1·제2차관보'로 축소 조정하고 기획국, 예산편성국과 차관 밑의 전자계산담당관을 통합하여 '기획관리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기획관, 계획평가관, 예산편성관 및 전자계산담당관을 편성하였다.¹⁵⁸⁾

그리고 유·무형전력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85년에는 「전력증강계획」과 「운영유지계획」을 통합하여 「국방중기계획」을 단일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개혁과 평가분석 기능을 제도화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와 문서체계를 조정하였다.

1989년 3월에는 「국방기획관리 잠정운영 지침」을 보완하여 「국방부훈령 제390호」(1983. 4. 25.)¹⁵⁹⁾를 확정함으로써 국방자원의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다.¹⁶⁰⁾

157) 국방부, 『국군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79.

158)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79-80.

159) 「국방부 훈령 제390호」(1989. 4. 25)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개정령'.

160)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81.

또한 예비전력 강화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예비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국가잠재전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지속하도록 육군본부에 동원참모부를 편성하여 동원 및 예비군 분야의 일관된 정책과 업무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중간지휘기구를 창설하여 동원업무체제를 확립하고 자원, 관리를 전산화함과 아울러 제2군지역 동원사단의 전개위치를 조정하는 등 초전전투능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역예비군의 부대 편성도 행정구역별로 통·폐합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예비군 중대장을 5급 군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통·리대를 지역 특성에 따라 50~80명 규모의 소대로 조정 편성하고, 소대장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우수한 자원을 소대장으로 확보하는 등 하부조직을 강화하였다.¹⁶¹⁾

나. 합동참모본부

1972년 7월 합동참모본부는 자주국방기에 합참의 역할에 부합되는 기구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선 전략정보국에 '기술정보과'와 기획관리국에 '연구개발과'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1973년 4월에는 전략정보국을 '정보국'으로 하고 작전기획국을 '작전국'으로 각각 개칭하는 한편, 인사기획국과 군수기획국을 폐지하고 '전략기획국'과 '동원국'을 각각 신설하였다.

1975년에는 「국방조직법」 4차 개정(1975. 12. 31. 법률 제2829호)에 따라 합동참모회의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로, 합동참모회의의장이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으로 개칭하였으며, 직제 개정(1976.6.)으로 동원국을 폐지하고 '연구개발국'을 신설하였으며, 각국의 명칭도 기능별 명칭을 없애고 서수(序數)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즉, 정보국을 '제2국'으로, 작전국을 '제3국', 전략기획국을 '제5국', 통신전자국을 '제6국', 연구개발국을 '제7국'으로 하였다.

1981년 9월 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참 제2국을 '국방정보본부'로 개편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체계를 변경하였으며, 1982년 1월 합참의 직제 개정에 따라 각국의 명칭을 다시 작전기획국, 전략기획국, 통신전자국, 연구개발국, 행정실 등의 기능별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1984년 10월 국방부의 「국방기획관리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합참에서는 「장기합동군사전략기획서」와 「합동전략목표기획(JSOP)」 및 「합동무기체계 목표기획서」를 통하여 군사전략 및 목표소요를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1986년도에 개정된 「합참 직제」에 따라 합참은 「방산과」를 신설하고 각 군과 합참에서 수행하던 통신보안 업무는 국방부 정보본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고, 1988년에는 작전기획

161)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82.

국의 특수전과, 전자전과, 교리발전과, 전략기획국의 군사협력과와 무기체계국의 유도통신 체계과 등의 무기체계 기능을 보강하였다.

또한, 장차 남북대화 시 군사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비통제실’을 잠정적으로 설치(1989.1.)하였으며, 무기체계국에 무기체계연구관을 신설하여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을 비롯하여 신규 무기체계의 타당성과 시험평가 채택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각 군 본부

육군본부 육군은 자주국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전투발전과 군비관리를 위한 체계분석 및 평가분석 기능과 예비전력보강에 따른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육군본부를 개편하였다. 즉 1970년대에는 군원이관에 따른 물자개발의 필요성과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전투발전사령부를 모체로 육군기술연구소와 조병위원회 그리고 1970년 3월 인간관계개선위원회를 통합하여 ‘육군연구발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연구발전과 전투발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1971년 초 연구발전업무가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령부는 전투발전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력증강에 따른 전투발전 소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육군의 전투발전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1981년 5월 육군의 전투발전과 교육훈련을 명실 공히 통합 관장하도록 육본 교육참모부를 확대 개편하여 ‘육군교육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982년 5월 육군본부는 특별참모부의 기구축소와 기능조정 방침 아래 전략기획참모부를 비롯하여 사업조정실, 병기감실, 병참감실, 수송감실, 경리감실을 폐지하고 ‘정책기획실’을 신설하고, 화학감실을 비롯한 통신, 부관, 항공, 공병 등 각 감실에 대하여 기술, 체제, 기록, 전술 등의 연구와 발전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¹⁶²⁾

해군본부해군은 1973년 10월 해병대를 흡수 통합함에 따라 해병대가 수행하던 상륙작전, 도서방어, 상륙작전부대, 교육훈련 기능을 흡수하고 이에 부합되는 기구의 개편과 해군의 주요정책수립 및 평가분석담당 기구의 보강에 중점을 두었다. 즉 해군본부에 참모차장을 2인으로 증원하여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각각 전담 수행토록 하고, 해군본부의 해병보좌관을 폐지하고 대신 ‘해병참모부’를 신설하였으며, 그밖에도 특전감실을 폐지하고 경리감실과 병기감실을 신설하고 관리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83년

162)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84-85.

에는 조함 및 체계평가분석 업무와 연구개발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를 조정하여 경리감실, 함정감실, 보급감실, 병기감실은 폐지하고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1987년 12월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어 해병대는 해군본부의 기구로부터 독립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해군의 참모차장도 1인으로 재조정되고, 해병참모부도 해체하였으며, 해군의 주요정책수립 및 분석담당 기능을 보강하고 ‘정책기획실’을 신설하여 기존의 기획관리참모부 소관의 해군 기본정책 수립업무와 연구분석실 소관의 회계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연구분석실을 폐지하는 등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다.¹⁶³⁾

공군본부 공군은 정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정보부를 일반참모체제로 개편하였으며, 무기체계와 방위산업 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직체제로 개편 운영하였다. 즉 1972년에는 정보부의 정보 및 재외무관업무 이외에 심리전 업무를 추가하여 정보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975년에는 정부참모부로 승격시켰고, 재무감실을 경리감실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83년 2월에는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따른 무기체계 및 방위산업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분석실’을 신설하였고, 경리감실을 해체하여 예산편성 수행과 외환관리 등 자금관리를 기획관리참모부로 이관하였다. 또한 항공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과 집행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단’을 잠정기구로 설치하였으며, 1987년에는 전시의 화생방업무와 참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군본부 및 작전사령부에 ‘화생방담당관’을 신설하였다.¹⁶⁴⁾

2. 1990년대 초(1990. 1.~1993. 2.):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 연구(818계획)」 시행

「818계획」 최종 연구안은 1989년 11월 16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9호」로 공포됨에 따라 10월 1일부로 국방조직은 ‘합동군제하의 통제형 합참의장제’로 전환 시행되었다.

가. 국방부본부 개편

국방부본부 조직개편 추진은 처음에는 특검단이 「국방부 구조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 1월 10일 818계획사업단의 일부로 편성된 ‘국방부 본부사업

163)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8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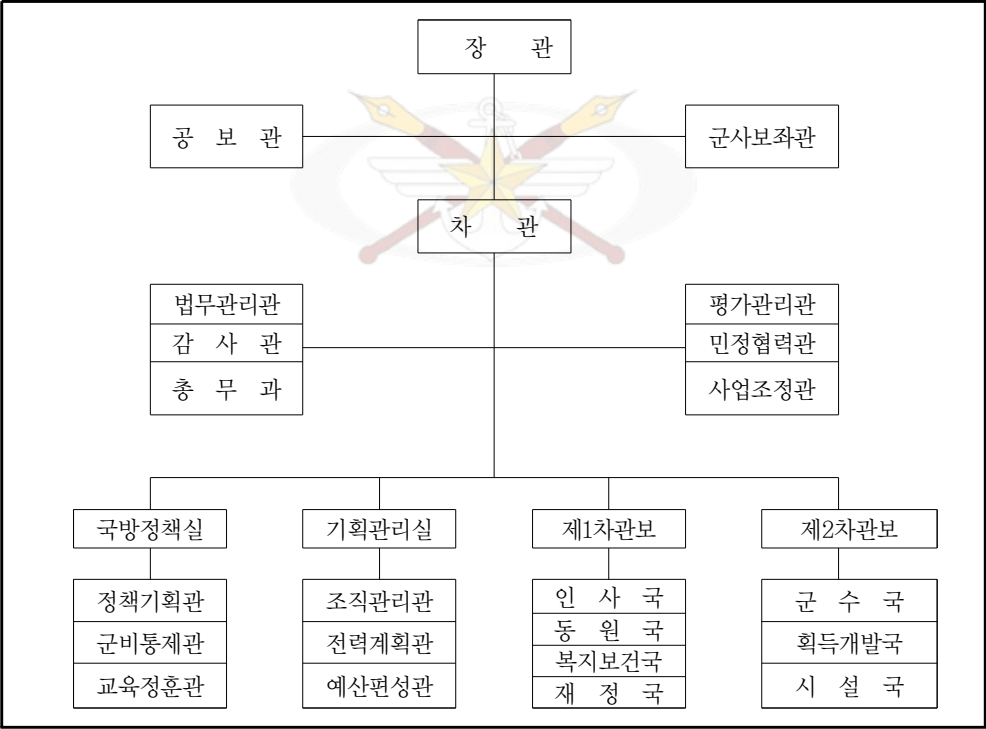
164)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86.

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국방부 본부사업단은 전문가의 조언과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직제 개편안」을 작성하여 대통령 재가(1990. 12. 27)를 받아 1991년 3월 28일부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대통령령 제13335호」)에 따라 개편되었다.

우선 기본구조 면에서, 기획관리실 외에 ‘국방정책실’을 신설하여 정책업무를 통합관장하게 하였다. 개정령에 의한 국방부분부 기본 조직은 [도표 2-13]과 같다.

하부조직 면에서는, 기존의 잠정기구들을 통·폐합함으로써 기존의 21국 91개 과에서 20국 79개 과로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도 2명의 차관보를 별정직 1급으로, 국장급은 기존의 3개 직위(감사관, 예산편성관, 재정국장)에서 5개 직위(민정협력관, 공보관 신설)로, 과장급은 기존의 31개 직위에서 35개 직위로 확대하였다. 개편 이후 일반직 대 현역군인의 비율이 66% : 34%에서 68% : 32%로 조정되었다.¹⁶⁵⁾

[도표 2-13] 국방부분부 기본 조직도



※ 출처: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pp.188-189. ;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노태우 대통령정부 5년』, p.580.

165)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노태우 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p.578-579. 국장급 이상 직위는 17% : 83%에서 33% : 67%로, 과장급 직위는 34% : 66%에서 44% : 56%로 조정되었다.

업무 내용 면에서는, 전·평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국방정책실’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협상 및 군비통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정훈정책 기능을 강화하였다.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4개 국(관)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방조직 및 제도발전과 각군 부대계획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기능을 보강하였다. 국군장병의 사기·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무관리 기능과 분산된 복지 기능을 통합하여 ‘복지보건국’으로 개편했다.¹⁶⁶⁾ 무기체계발전의 고도정밀화에 부응하고 전력증강 사업체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율곡업무체계를 재정립하고, 관련 기능을 조정하여 제2(군수)차관보 중심의 책임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방산국을 ‘획득개발국’으로 개칭하여 종합획득계획을 수립하고, 획득방법 및 기종결정 기능을 일원화하였으며, 획득정보 및 기술협력 기능을 보강하였다. 또한 투자사업조정관실을 제2(군수)차관보 통제기구로 조정하여 사업조정국으로 개편, 율곡사업의 조정통제기능을 보강하였다.

이 조직개편은 개정의 차원을 넘어 개혁을 시도한 것이었다. 1948년 창군과 함께 국방부 직제가 공포된 이래 그동안 수 십 차례 직제를 개정하였으나, 대부분이 군구조의 변경이 없이 상황적 요구에 따라 기능 및 인력을 가감하는 수준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818계획」 이후 국방부분부 조직개편은 격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위주로 재정비되었으며, 국방조직의 문민화, 3군 간의 균형화, 그리고 인력의 전문·정예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나. 합동참모본부 개편

「818계획」 군 구조 개편의 목표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적절한 전쟁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즉 국방부는 「818계획」을 통해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자주적 군사전략을 정립하고, 군사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3군 통합차원의 군사력을 건설하며, 건설된 군사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군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0월 1일 「합동참모본부직제」 개편(1990. 9. 29, 「대통령령 제13109호」)에 따라 합동군제 개념에 맞게 군령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참의 기능과 편성을 대폭 보강하여,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으로 현재와 같은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를 창설하게 되었다.(〈사진 2-2, 2-3〉 참조)

166)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노태우 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579.



〈사진 2-2〉 대통령 합참 부대기 수여(1990. 10. 1.)



〈사진 2-3〉 ‘합동참모본부’ 현판식 (1990. 10. 5.)

※ 출처: 합동참모본부, 『합참60년사』, p.29.

합참의 임무는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군사작전 등 군령에 관한 사항과 군사력건설 소요제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었으며, (제1조) 이에 따라 합참은 전략기획본부, 정보본부, 작전본부, 지원본부, 지휘통제통신실, 민사심리전실, 전비태세검열실 및 군사연구실 등으로 편성되었다. (제2조) 이리하여 합참은 한미 연합지휘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3군 균형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4월에는 「818계획」 후속조치 일환으로 「합동참모본부 직제령」(1992. 4. 14.)¹⁶⁷⁾에 의거 미래의 전략환경에 대비하고 합참의 효율적인 작전지휘와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2인의 합참차장제를 도입하였으며, 직위를 본부장은 중장, 부장은 소장, 부차장은 준장으로 편제하였고, 공통직위는 육·해·공군을 2:1:1의 비율로 보직하게 되었으며, 정보기능은 국방정보본부 겸 합참정보참모본부로 겸직 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¹⁶⁸⁾

다. 각 군 본부 개편

「818계획」의 시행으로 각군 본부는 계룡대로 통합 이전¹⁶⁹⁾하게 되었고, 기능도 필수 정책 위주로 대폭 감축하여 전력기획참모부, 정보작전참모부로 통합 조정되었다. 육군본부의 민심참모부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였고, 해군본부는 참모부 내 해병대요원을 조정하고, 해병대사령부의 기능을 보강하였다.¹⁷⁰⁾ 해병대는 「국군조직법」 개정(1990. 8. 1. 법률 제

167)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방부, 『국방조직 관련 법령집』(서울: 국방부, 2010), p.277.

168)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II (1992~1999)』(서울: 국방부, 1999), pp. 344~345.

169) 육·공군본부는 1989년, 해군본부는 1993년에 계룡대로 이전하였다.

170) 「국군조직법」 개정(1990. 8. 1. 「법률 제4249호」)으로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게 명시함에 따라

4249호)으로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¹⁷¹⁾ 이에 따라 해병대는 연합사 작전통제부대 및 합참 작전 계선부대로서 임무수행 기능을 보강하였다. 1992년 12월 1일에는 해병대 부대를 상륙작전의 주 임무부대로 운영하고 연합사의 전략예비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합해병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공군은 예하부대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군의 현 조직 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참모부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¹⁷²⁾ 1990년 12월 20일 전투발전단을 창설하고, 1991년 5월 15일에는 제19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1991년 7월 1일 육군방공포병 중 중·고고도 대공방어 기능이 공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군은 방공포병사령부 및 예하 3개 여단, 방공포병학교를 창설하였다. 방공포병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공군은 방공작전에서 지휘권 단일화를 통한 방공작전의 제 요소 통합은 물론, 통합방공작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6 절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1. 국방부분부

군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 군은 이미 1990년 10월에 상부 지휘구조를 3군 병립제에서 합동군제로 전환하였으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위기관리능력의 제고와 자주적 합동군사기획 및 통합군사력 운용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등의 조직 및 기능체계를 보완하였다. 이후 미래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사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구조를 개선시켰으며, 향후 과제로 병력집약형 부대구조를 장비 및 기술집약형으로 전환시키고,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력이 강화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삼 정부 들어 1995년과 1997년에 국방부는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태세의 조기 실현과 미래지향적인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합

해병대사령부의 임무와 사령관의 권한 및 참모부서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해병대사령부의 기구는 일반참모부와 법무, 감사실과 공병, 통신, 정훈참모실 등 1개 감찰실만 있던 부서가 5실로 보강되었다.

171) 개정전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국군조직법」은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로 개정되었다.

172)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Ⅱ(1992~1999)』(서울: 국방부, 1999), p.23.

참, 각 군 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화·정보화 등 국방환경의 변화추세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요한 국방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각 군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5년 국방부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7개 부서에 분산되어 수행하던 13개 유사 기능을 통합, 자원획득 및 관리 위주로 개편한 결과, 종래의 7국 13관 79개 과에서 7국 11관 74개 과로 개편되어 2개 관 5개 과가 감소하였으며, 1969년 2월에 창설된 ‘특명검열단’을 해체하여 전비태세 검열 기능은 합참에, 울곡감사 기능은 감사관실로 통합, 보강하였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9%의 인력이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비율이 37%에서 43%로 높임으로써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1997년 국방부 조직개편 시에는 국방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분부의 조직을 개편했는데,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방부분부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기구를 통합하여 ‘방위사업실’을 신설, 방위사업실장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를 책임지고 직접 관장토록 하는 대신, 기구신설 및 인원증원을 억제하는 정부조직관리 방침에 부응하여 ‘국방정책실’을 폐지하고, 제1차관보가 국방정책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였다.¹⁷³⁾

김대중 정부 들어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의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하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경제난에 따른 국방운영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초 국방부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조직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¹⁷⁴⁾ 국방부는 ‘21세기 신국방’ 개념에 따라 미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국외도입에서 국내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방산협력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조직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였다. 특히 2001년도에는 전력획득사업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획득실의 ‘분석평가관’을 차관 직속으로 개편하였으며, 전력증강분야 연구개발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관’을 신설하였다.¹⁷⁵⁾

노무현 정부 들어 국방부는 2005년 4월 「국방부 문민화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관리관, 인사국장 및 군사시설국장의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등 국방부 조직을 일반공무원과 현역군인이 조화를 이루도록 인력구조를 개편하였다.

173) 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정부 국정5년자료집』(서울: 공보처, 1997), p.575.

174) 국방부, 『국방부사 1998~2000』(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221.

175) 국방부, 『국방부사 2001~200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189.

2006년 1월 1일에는 ‘21세기 선진 정예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방위력개선 사업을 전담할 ‘방위사업청’을 신설¹⁷⁶⁾하는 한편, (〈사진 2-4〉 참조) 「국방개혁 2020」 과제를 추진하고 미래 안보 및 국방전략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자율·책임·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실(室)·국(局) 체제를 본부제·팀제로 전면 개편하였다.¹⁷⁷⁾ 국방부는 2007년 지속적인 국방개혁의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23호」)을 제정하고, 국방개혁 전담기구인 ‘국방개혁실’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방위력 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관리본부에 전력정책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방부 문민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역군인 23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였다.¹⁷⁸⁾



〈사진 2-4〉 방위사업청 개청(2006. 1. 1.)

※ 출처: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는 2008년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3월에는 「정부조직법」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 각 본부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인사복지실, 전력자원관리실로 개편하였다. 7월에는 국방개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관급 장교를 보직하도록 되어 있던 국방개혁실장을 장관급 장교 이외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9년에는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大課) 체제로 변경하였고, 대북·대미·국제정책 기능을 보강하도록 개편하였다.¹⁷⁹⁾ 국방개혁실은 존속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며 국방개혁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12년에는 국방개혁실을 해체하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구조·국방운영개혁 추진실’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방위사업법」 개정(2014. 11. 10. 시행, 「법

17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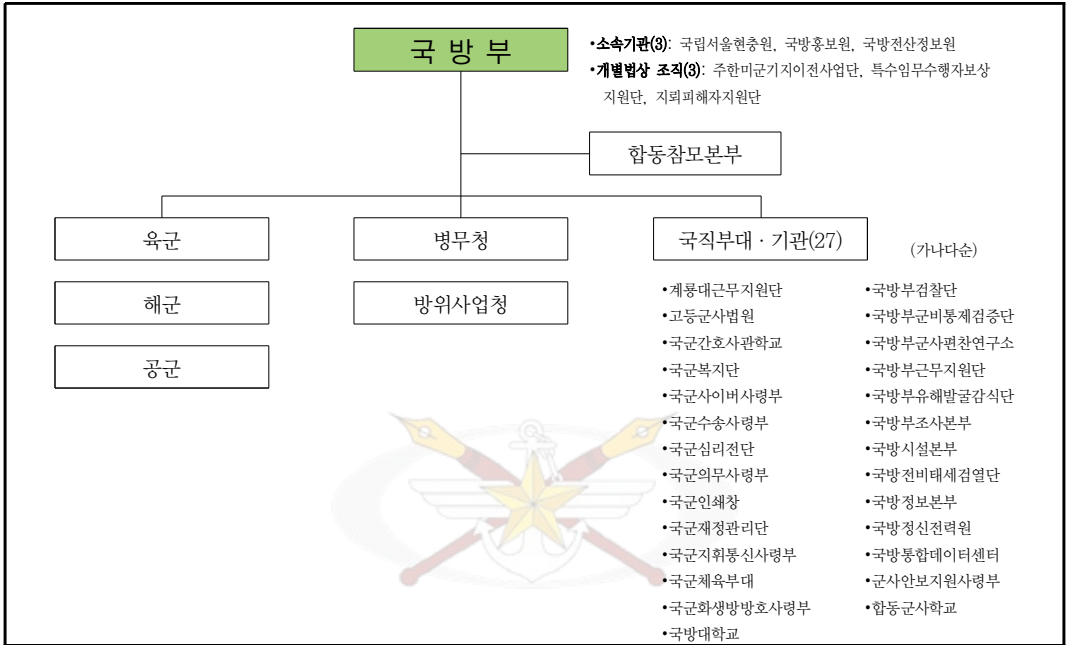
177) 「대통령령 제19232호」(2005. 12. 30.) ; 「국방부령 제587호」(2006. 1. 1.) ; 국방부, 『국방부사 2004~200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674. 국방부분부 기구 개편. 기존에는 기획관리실, 정책실, 획득실, 인사국, 동원국, 군사시설국 등 3실 3국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혁신기획본부, 정책홍보본부, 인사복지본부, 자원관리본부 등 4본부와 15관(官) 67팀이 되었다.

178) 국방부, 『국방부사 2007~200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683.

179) 국방부, 『국방부사 2007~200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685, p.688.

를 제12559호)에 따라 기존 방사청에서 수행하던 「국방중기계획」의 작성과 무기체계·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 인력을 국방부로 조정하였다. 2018년 말 당시 국방조직도는 [도표 2-14]와 같다.

[도표 2-14] 국방조직도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294.

2. 합동참모본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한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로 전환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위기관리능력의 제고와 자주적 합동군사기획 및 통합군사력 운용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5년 조직 및 기능체계를 보완하였다. 특히, 기능의 중복, 또는 업무담당 폭이 작은 조직은 통·폐합하여 개편하였다. 본부장 형태의 참모 편성을 합참차장 중심의 일반 참모형태로 참모부를 편성·조정하여 합참차장이 전·평시 참모업무 및 군사작전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유사기능과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였으며, 무기체계와 전력 소요 및 시험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합참의 조직개편 결과 종래의

3개 본부 및 4개 참모부가 6개 일반참모부로 개편되었고 13%의 인력이 감축되었다.¹⁸⁰⁾

1997년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개편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위기관리능력 제고와 효율적인 합동군사기획 및 군사력 운용을 위하여 임무기능을 재정립하여 전력평가참모본부와 군구조발전부를 신설 편성하였으며, 유사기능과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4개 본부장, 3개 참모 및 4실 체제를 갖추었으며, 11%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 합참은 「국방개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을 재조정하였다. 합참은 1998년 12월에서 1999년 5월까지 상부조직 및 기능을 개편·정비하였다. 합참은 신속한 작전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전자참모부와 작전참모본부의 C4I조직을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하였으며, 1998년 12월 정보참모본부에 정보융합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에 인사참모부와 군수참모부를 통합하여 인사군수참모본부로 승격시키는 등 합참이 통수권자의 전쟁지도를 보좌하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기획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였다.¹⁸¹⁾

2003년에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전시임무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보완하였다.

2004년에는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제 구축을 위해 1단계 개편을 완료했으며, 2단계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역점을 두고 효과기반작전의 중요성, 합동성 및 통합성 강화에 필요한 합참 기능 및 조직을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¹⁸²⁾

이상과 같이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을 개편하면서 합참 중심의 작전수행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합참은 국방개혁과제로 선정된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제 구축’을 2008년도에 완료하고 합참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해 나갔다.¹⁸³⁾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후속조치 일환의 국방조직 개편은 합동작전 수행여건 보장 및 현행작전 수행기능 강화,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따른 시험평가기능의 합동참모본부로의 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였으며, 2011년 초에 시행되었다.¹⁸⁴⁾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미래사령부의 연합지휘구조를 반영하고 합참의 전구작전지휘 및 군령보좌 임무와 기능 수행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국방부 조직진단 결과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180) 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정부 국정5년 자료집』(서울: 공보처, 1998), p.574.

181) 국방부, 『국방정책 1998~2002』(2002), p.109.

182) 국방부, 『국방부사 2004~200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233~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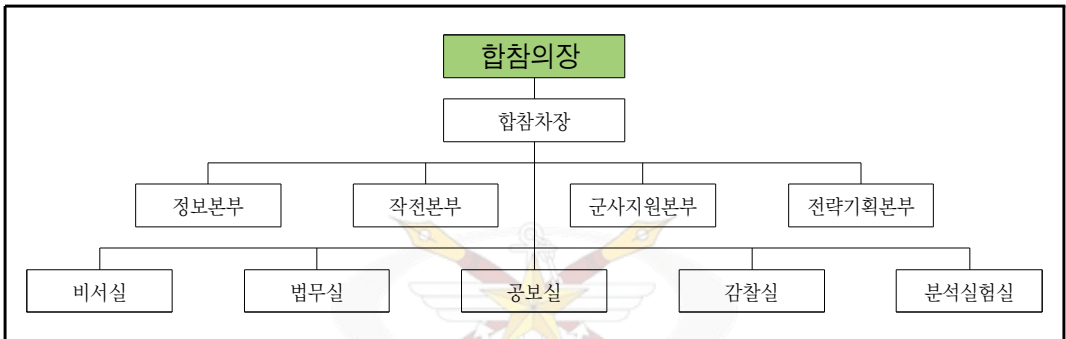
183) 국방부, 『국방부사 2007~200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682.

184) 국방부, 『국방부사 2010~20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664.

추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면서 합참에 새롭게 부여되는 임무·기능 편성 보강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8년 말 당시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또한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과 계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합참은 비상설기구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¹⁸⁵⁾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합동참모본부 조직도는 [도표 2-15]와 같다.

[도표 2-15] 합동참모본부 조직도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42.

3. 각 군 본부

1995년 조직개편으로 각 군 본부는 합참에서 수행하여 왔던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기능을 각군에서도 수행토록 하였으며, 정보·작전 참모부가 통합됨과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통신 및 전산 기능을 통합하였다. 또 육군의 동원업무를 기능에 따라 각 참모부로 이관하였고, 인사업무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인사운영감실을 인사참모부에 통합했으며, 기행병과의 감실을 육군에서 4개, 해·공군에서 각각 2개씩 통·폐합하였다. 그 결과 육군본부는 잠정기구를 포함하여 종전의 6부 15감실에서 5부 11감실로 축소되었고, 20%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해군본부는 5부 12감실에서 4부 11감실로 축소되어 15%의 인력이 감축되었고, 공군본부는 5부 10감실에서 4부 10감실로 축소되어 인력이 11% 감축되었다.¹⁸⁶⁾

185)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으로 변경되었다.

186) 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5년 자료집』(서울: 공보처, 1998), p.574.

1999년 1월에는 국방부 및 합참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보체계실과 분산된 정보작전참모부 C4I기능을 지휘통신참모부로 통합하였고, 2001년 1월에는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용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성하였다. 각 군별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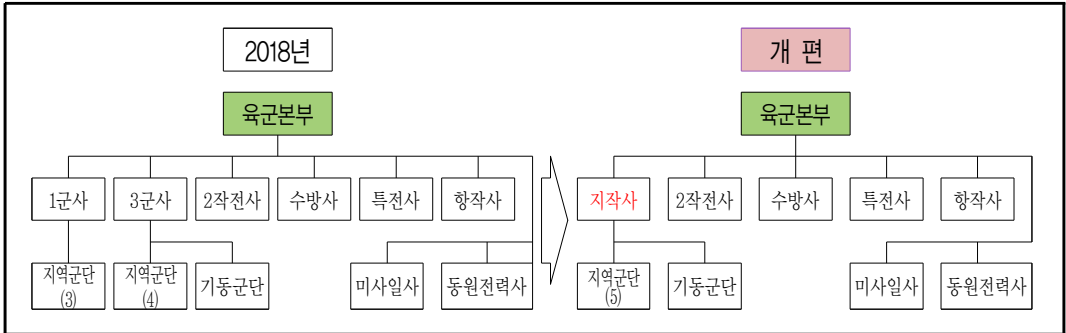
육군본부 육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제1·제3군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안보 여건상 지휘구조 변화로 인한 안보취약점 노출이 우려되고 한미 연합작전 지휘체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점이 고려되어, 보다 장기적인 미래 군 구조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잠정 유보하였다. 또한 제대별로 분산되어 지상부대의 전술적 지원 위주로 운용되던 육군항공사를 전략적·작전적·공세적 운용이 가능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이하 육군 항작사)로 1999년 4월에 개편하였다. 예하 제대도 권역별로 지원전력, 전략 예비전력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강습여단을 육군 항작사에 예속 전환하였다. 이처럼 제병합동작전 수행체제가 구비됨으로써 육군 항작사는 제한된 독립작전과 공세주축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6월에는 단일형태의 특전사 부대구조를 다양한 위협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부대로 개편하는 한편, 화생방전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육군 예하에 1999년 6월에 창설한 화생방방호사령부를 2002년 2월 다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로 전환하여 화학전 및 대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였다.

육군본부는 2010년 방위력 개선사업과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했다. 국방부의 3단계 조직개편 기본지침을 토대로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1단계는 2013년 1월 1일부로 전력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통합하고, 2단계로 2013년 말까지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기존의 ‘부-처-과’ 체계에서 ‘부-과’ 및 ‘대과’ 체계로 개편하고 차장 직위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3단계는 2012~2030년 미래 편제시안을 기초로 부대 유형별 세부 편성안을 보완하였으며, ‘How to Fight’ 개념 구현이 가능한 미래 전술제대 참모부 편성안을 반영하였다.

2018년 말 현재 육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군단 및 사단 수를 조정하되, 드론봇 전투체계와 위리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지상작전 지휘 및 수행을 위해 제1·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지상작전사령부는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됨.) 제2작전사령부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향토사단을 지역방위사단으로 개편하고, 광범위한 후방지역에서의 감시체계

운용, 수색정찰·타격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단과 항공단 등을 편성함으로써 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전후방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할 것이다. 육군의 2018년 현재 부대 구조 및 개편계획은 [도표 2-16]과 같다.¹⁸⁷⁾

[도표 2-16] 육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84.

해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전력 확보 및 조직 간소화를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대구조를 개편하였다.¹⁸⁸⁾ 해군본부는 1993년 6월 17일 서울 대방동 시대를 마감하고 계룡대로 이전하여 군정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참모부서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였고, 2함대사령부의 평택 이전 등으로 해군 조직을 개선하였다. 해군은 1999년 11월 13일 2함대사령부의 이전에 따라, 인천해역 방어를 위해 1999년 7월 1일 201방어전대를 모체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창설하여 인천 서쪽해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해병대는 1994년 4월 4일에는 상륙작전 시 전투근무지원을 담당하는 상륙지원단을 창설하였다.

해군본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1년 해양 및 군사정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하였다.

안보정세 변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고 해군력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으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해군본부 ‘처’를 없애고 「부-과장 업무체계」로 개편, 기존의 4부 8실 20처 88과(675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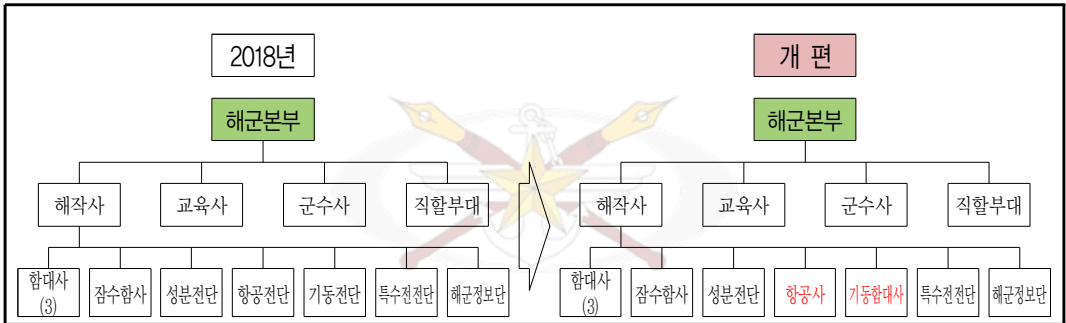
187)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18), p.84.

188)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Ⅱ (1992~1999)』(서울: 국방부, 1999), pp.21~22.

2013년에는 4부 8실 11차장 63과(655명), 2014년에는 4부 9실 11차장 66과(679명)로 개편하였다.

2018년 말 현재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해양관할권과 해상교통로 등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동전단은 원·근해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구축함 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기동함대사령부로 개편한다. 항공전단은 넓은 해역에 대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 등 전력 증강 및 임무 확대와 연계하여 항공사령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해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은 [도표 2-17]과 같다.¹⁸⁹⁾

[도표 2-17] 해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85.

해병대사령부는 2010년 사·여단 하부구조를 보강했으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서해5도와 NLL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참모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6월 15일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대통령령 제22974호』)하였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정보처와 작전처의 인원을 보강하고, 화력처와 그 예하에 항공지원작전본부를 편성함으로써 우리 군 최초의 육·해·공 합동참모로 편성된 합동작전사령부이며, 육·해·공군 전력으로 증강되었다.¹⁹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조직도는 [도표 2-18]과 같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권을 부활하는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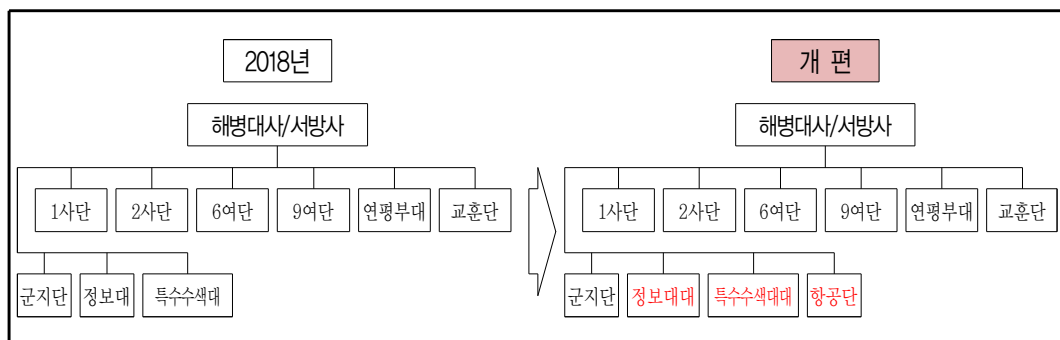
189)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18), p. 85.

190)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해병대 70년사』(화성: 해병대사령부, 2019), p.296.

담은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 (안)」이 2011년 6월 23일 제정됨에 따라 해병대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고,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13년도에는 기획기능을 조정하였고, 2014년도에는 작전참모처와 화력참모처를 개편함으로써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간의 유기적인 합동업무 체계를 강화하였다. 2021년에는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2018년 말 현재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사령부는 군정 기능 수행은 물론 상륙작전 등 연합·합동작전 수행 및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항공단, 정보대대 등의 편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해병 및 상륙사단은 연대를 정보·기동·화력 능력이 보강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여 전략적 기동부대로서 다양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다.¹⁹¹⁾ 해병대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은 [도표 2-19]와 같다.

[도표 2-19] 해병대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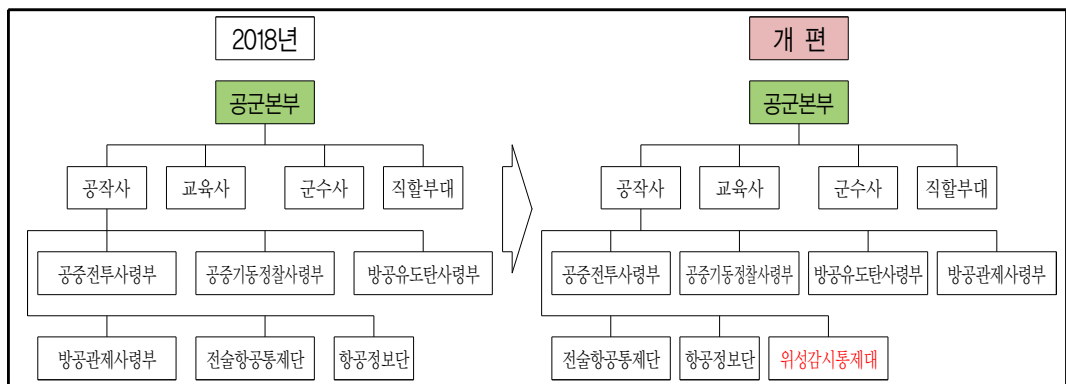
191)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해병대 70년사』(화성: 해병대사령부, 2019), p.296. 해병대는 2017년 12월 상륙기동헬기 2대를 해병1사단에 배치 후 2018년 1월 10일 인수식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항공단’을 창설하고, 향후 상륙공격헬기도 도입하여 공지기동해병대 건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군본부 공군은 1996년 12월 2일에는 ‘제20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2010~2011년 공군본부는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공군본부의 임무 수행과 공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3년~2014년 국방 기능 조정 및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였고, 공군본부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조직진단 결과를 조직 개편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부로 공군본부의 처를 없애고 ‘부-과제’로 운영하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전력기획참모부는 전력기획처와 전력소요처를 통합하여 ‘전력처’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참모부’로 참모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투발전 업무를 교육사로, 전력운용계획 업무를 정보작전지원참모부로 이관하였다. 인사참모부는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한 편제조정을 시행하였고, 여성 관련 직위의 편제를 상향 조정하였다. 정보작전지원참모부는 작전지원처의 편성 및 업무조정에 따라 편제를 조정하였고, 작전과와 작전계획과를 작전과로 통합하였다. 재경근무지원단의 복지시설 관리 및 일부 재경지역 지원 업무를 공군본부로 이관하였고, ‘관리’ 병과의 명칭을 ‘재정’으로 변경하였다. 이 밖에도 ‘항공사업지원 TF’, ‘세계군인체육대회 공군5종경기 지원 TF’, ‘정찰자산 전력화 지원 TF’, ‘국방인사정보화 공군추진 TF’ 등 한시적 TF를 편성 운영하였다.

2018년 말 현재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전자전기 등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 ‘전자전전대’, ‘감시통제비행전대’를 창설할 예정이고,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한반도 상공의 위성 활동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광역다층방어를 위해 탄도탄감시대 증편, 패트리엇 성능 개량, 천공 및

[도표 2-20] 공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86.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포대 편성 등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공군의 2018년 현재 부대구조 및 개편계획은 [도표 2-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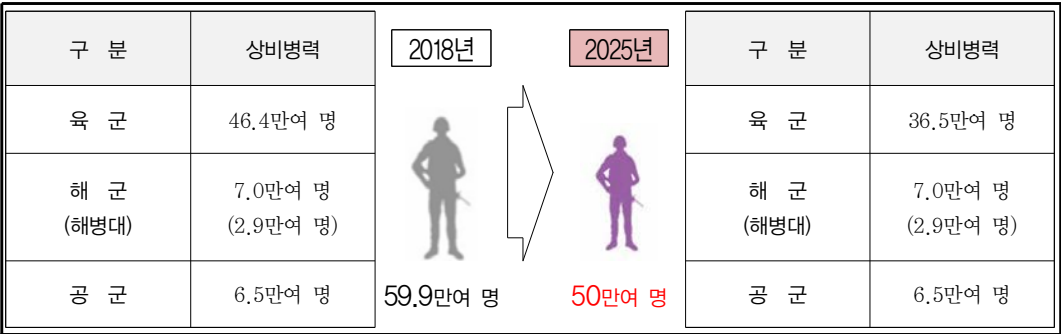
국직·합동부대 개편 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롭게 창설되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수행했던 군내 사찰 및 동향감시 등의 임무를 삭제하고, 군 보안, 방첩, 관련 정보수집 및 작성, 처리, 안보사업 수사, 기타 군사안보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의무개혁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2018년 8월 9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최근 증대되는 국내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하였으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직과 임무 수행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향후 국직·합동부대는 부대별 임무 수행의 효과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할 것이다. 27개의 국직부대 중 불필요한 행정, 지원조직을 감편하고, 인력구조를 현역 일변도에서 민간인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부 국직부대는 통합하거나, 그 기능을 각 군으로 전환시켜 군별 전문성과 특성을 강화하도록 개편할 것이다.

4.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상비병력 감축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전투 분야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하고,

[도표 2-21] 2018년 현재 상비병력 수준 및 감축계획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86.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87.

그 직위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전투부대로 전환되는 군인은 전투 필수직위에 보강하여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력은 강화될 것이다.

먼저 상비병력 감축은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 가용 병역자원,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육군병력은 36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을 유지할 것이다. 상비병력은 기술집약형의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력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정예화할 것이다. 비전투 분야 근무 인원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병력을 보강할 것이다. 아울러 첨단무기와 장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투력은 강화될 것이다. 2018년 현재 상비병력 수준 및 감축계획은 [도표 2-21]과 같다.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는 우리 군을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정예화하고 청년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되며, 공군의 경우 추후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며, 개인의 입대일자별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역일 계산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장 국방정책 변천

국방정책은 국가목표와 국가안보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가 설정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 국군창설기, 6·25전쟁 및 전후정비기, 국방체제 정립기, 자주국방 강화기, 국방태세 발전기 등 6개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세, 국방목표,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단 대한민국임시정부기는 한국인이 일본제국에 의해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라 밖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항일독립전쟁을 펼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정책을 국방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기의 정부와 광복군의 군사부문 정책은 ‘군사정책’이라고 표기하였다.

제 1 절 대한민국임시정부기(1919. 4.~1945. 8.)

1.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군사정책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파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강화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회의에 한 가득 기대를 걸고 외교적 노력에 의해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청원외교 노선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파리 강화회의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그 해 6월 28일 패전국의 배상의무만을 명시한 「베르사이유조약」을 체결하였다.¹⁹²⁾ 임시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파리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각각 유럽과 미주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임시정부로 승인받고자 독립청원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특히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미주에서 ‘구미외교위원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독립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구미외교위원부는 1919년 8월 임시정부가 워싱턴 D.C.에 설치한 외교행정업무 주관부서로서 당시 독립외교의 중심이었다.¹⁹³⁾ 반면 임시정부의 외교적

19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민족전란사 2(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5), p.45. 베르사이유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연합국 측 31개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강화조약이다.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 Wilson)이 제안한 '14개 조의 평화원칙'(1919. 1)을 기초로 하여 「베르사이유조약」이 체결된 후 유럽에서는 '베르사이유 체제'가 형성되었고, 아시아에서는 1921년의 워싱턴회의에 따른 '워싱턴 체제'가 구축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이 양대 체제에 의해 국제질서가 유지되었다.

1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p.96~97.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연해주와 만주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던 이동휘, 이동녕, 이시영 등은 연해주와 만주의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대일 무력항쟁론을 주장하였다.

9월 통합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운동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11월 3일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대외정책의 기초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12월 12일 특별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한 시정방침을 작성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것의 핵심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청원외교보다는 무장혈전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국무원은 ‘무장독립전쟁 노선’을 시정방침(施政方針)으로 정하고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삼았다.¹⁹⁴⁾

1920년 1월 열린 신년축하회 자리에서 안창호는 국무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설하면서, “진실로 독립전쟁을 주도할진대, 반드시 일제히 이동휘의 명령을 복종할 것”과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을 반대하는 자”라며 이동휘의 독립전쟁 방침에 힘을 실어 주었다.¹⁹⁵⁾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은 1920년 2월 2일 발표된 「국무원 포고 제1호」¹⁹⁶⁾와 1920년 3월 2일 밝힌 14개 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군사관계에는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인 독립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개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개전 준비작업으로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의용병을 모집해 훈련하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작탄대(炸彈隊) 편성하며 비행기대(飛行機隊) 설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¹⁹⁷⁾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시정방침이 ‘독립전쟁 노선’으로 채택되자 기존의 외교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지역에서 모금된 애국의연금과 독립공채 등 자금의 관리는 구미외교위원부가 계속 맡았다. 구미외교위원부는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임했지만, 후일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임시정부가 초기에 전개한 외교활동은 사실상 독립을 청원하는 외교로서 별로 효과가 없자 그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1925년에는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당분간 활동이 금지되었다.

194) 『독립신문』(1920. 3. 4.)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97.

195) 『독립신문』(1920. 1. 8.) ; (1920. 1. 10.)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서울: 범우사, 1998), p.223.

196) 「국무원포고 제1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2호』(대한민국 2년 2월 12일)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161-162.

197)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서울: 천풍인쇄, 1976), pp.107-111.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2006, pp.51-5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73.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위한 노력은 3·1운동 이후 형성된 기존 독립군부대를 단일한 독립군단으로 통합 편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1919년 11월 7일 임시정부 특별군무회의에서 군정부를 폐지하고 ‘임시군정서’를 두기로 결정하였다.¹⁹⁸⁾ 이에 따라 서간도의 군정부인 대한군정서는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군정부인 북로독군부는 ‘북로군정서’(동도군정서 : 서장 서일, 사령관 김좌진, 동도독립군서 : 서장 및 사령관 홍범도)로 개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군정서를 독판부, 정무청, 위원회로 구성하고 하부에 군정기구를 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1919. 12. 18, 제2장 제1절 참조)를 발표해 육군의 편성 및 관제에 표현된 군사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고, 독립전쟁을 실시할 육군의 규모는 1~3만명 내외로 하되 2~5개 여단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시군제에 따라 「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1920. 2, 제2장 제1절 참조)를 마련해 지방군구사령부 설치에 착수하였다. 지방군구사령부는 총사령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군대를 통솔하고 기타 군사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만주와 연해주 등 각지에 분포된 독립군단들을 군무부 예하에 예속시켜 단일한 지휘체제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서북간도와 러시아령을 서간도군구(하얼빈 이남 길림, 봉천 일대), 북간도군구(연길 일대) 그리고 강동군구(러시아령 일대)로 나누고 임시정부 임원을 파견하여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임시정부는 육군과 해군에 각각 비행대를 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1919년 11월 임시정부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서 ‘군무총장은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육군국에는 육군비행대를, 해군국에는 해군비행대를 두어 관할한다.’라고 규정했다.¹⁹⁹⁾ 또한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에 대비한 군대를 편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군적등록을 시작했다. 안창호는 1920년 1월 3일 상해 대한민단에서 열린 신년축하회 연설에서 “독립전쟁이 공상이 아니라 사실이 되려면, 대한의 이천만 남녀노소가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모두가 군적에 등록, 군사훈련을 받자”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정부는 군적등록사업과 함께 「육군임시군제」에 규정된 ‘국민군’ 편성에 착수했다. 상해에서는 1920년 2월 중순 군적등록사업을 위임받은 애국부인회가 상해 동포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군적등록사업을 펼쳤다. 18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군적은 갑·을 양종으로 나누어 갑종은 매일 1시간 이상, 을종은 매주 2시간 이상 군사교련을 받도록 했다. 국민군을 대표한 선우혁은 “우리는 이미 군적에 등록하여 국가에 몸을 바쳤으니 우리의 성충을 다하여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를 맹서한다”라고 선언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서북간도와 노령, 국내에서도 국민군

198)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 문서(동문편)」, 연세대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 『제6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 1』(서울: 중앙일보사,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p.194.

199) 「대한민국임시관제(續)」, 『독립신문』, 1919년 12월 2일 ;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령: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201.

편성이 추진되었으나 군사지식을 갖기 위한 교육훈련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²⁰⁰⁾

임시정부는 ‘육군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무부 관할 하에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한다’는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 규정에 따라 1920년 3월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육군무관학교는 중학 이상의 학력이 있고 19세 이상 30세 이하인 대한민국 남자로 입학케 하여 초급장교가 되기에 필요한 교육을 수(授)하기로 한다”라고 했다. 육군무관학교는 1920년 12월 제2회 졸업식을 끝으로 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1930년 1월 안창호·이동녕·안공근·조완구 등은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한국독립당은 당의 강령(綱領)에서 “엄밀한 조직 하에 민중적 반항과 무력적 파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천명했는데, 여기서 무력적 파괴는 대체로 유격활동과 파괴공작이었다.²⁰¹⁾ 일제가 한국과 중국인을 이간질할 목적으로 조작한 ‘만보산사건’(1931. 7. 2. 발생)으로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점차 나빠졌고, 이어 1931년 9월 만주사변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일제의 침략은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만주국 설립(1932. 3. 1.) 이후 일제의 침략이 중국 관내로 뻗어나가자 한인의 만주지역 독립운동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위축된 독립운동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열투쟁 단체를 지원하거나 산하조직으로 운영하며 항일투쟁을 지속해 나갔다. 1926년 1월 조직된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를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독립운동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만주침략이 본격화되자 의열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30년 11월경 별도로 특무공작대를 조직하기로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권과 책임을 김구에게 일임했다. 이리하여 김구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을 결성하였는데, 당시 조직원은 약 80여 명으로 안공근·엄항섭·안경근·손창도·백구파·김의한·김홍일 등이 주요 단원이었고, 비밀 유지를 위해 단장과 특무공작원이 직결되는 체제로 조직하였다.²⁰²⁾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의열투쟁은 이봉창의 사의 일본 도쿄 일왕폭살 미수사건(1932. 1. 8.)과 윤봉길의사의 중국 상해 일제 천장절행사 폭살사건(1932. 4. 26.)이었다. 한인애국단의 일련의 의열투쟁은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제의 만주사변과 상해침략으로 위축된 중국인의 반

200)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Ⅱ)(계령: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p.202-203.

201) 노경채, 『한국독립당 연구』(서울: 신서원, 1996), p.288.

202)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Ⅱ)(계령: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p.248-249.

일운동 기세를 크게 높여 이후 한·중 항일연대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2. 충청 임시정부 시기 군사정책

임시정부의 창군(創軍)계획은 1940년 5월 9일 한국국민당, 재건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3당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한국독립당은 당의 당강(黨綱)과 당책(黨策)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창군계획을 확정했다. 즉 당강 제6조에서 “국방군을 편성하기 위해 국민의무병역을 실시한다”로, 당책 제3조에서 “장교 및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광복군을 편성한다”로 규정함으로써 한국독립당이 광복군 창설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²⁰³⁾ 그리하여 한국독립당은 국민당정부를 상대로 광복군 창군 교섭을 벌였다. 중국 내에서 군대를 창설하는 사안이고, 군대 편성과 유지는 물론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중국정부의 협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국독립당의 창군 교섭과 제의는 장제스에게 보고되었고, 장제스는 광복군 창군 지원을 인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지원과 원조는 곧바로 실행되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 군정부 실무자들이 한국광복군을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킬 것을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조를 받아 광복군을 창설하려던 계획이 중국군사위원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임시정부는 독자적인 힘으로 광복군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건립을 위한 경비를 미주 동포들에게 요청했다.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은 중국 측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복군 창군을 추진했다. 우선 광복군을 창설하고 중국의 원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5일 내외에 한국광복군 창설을 알리는 「한국광복군선언문」을 공포했다. 임시정부는 이 선언을 통해 독립성과 자주권을 가진 광복군을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틀 후인 9월 17일 충청의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역사적인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를 거행했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했지만 중국군사위원회는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로부터 광복군을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임시정부 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중국정부는 1941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 판공청은 광복군총사령 앞으로 ‘한국광복군행동준승9개항’(이하 9개준승)을 보내왔다. 9개 준승은 광복군을 중국군사위원회에 직예

2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495.

(直隸)하고 중국 측 참모총장이 장악 운용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광복군 행동에 대한 8가지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광복군에 대한 임시정부의 통수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임시정부는 굴욕적인 9개준승을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1월 28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하고 ‘한국광복군 공약’, ‘한국광복군서약문’을 발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9개준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광복군공약’과 ‘서약문’은 광복군이 비록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있지만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이고, ‘건국강령’을 신봉하는 군대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다.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12월 국내의 동포를 대상으로 공포한 ‘포고문’에서 중국정부의 9개준승을 받아들였다는 사실과 함께 ‘광복군이 중국 최고통수부의 절제와 군령에 복종하는 것은 영·불연합군처럼 국제법상의 이론과 실제에 부합되는 연합군이고, 이 역시 중국 국경 안에서만 한정되며, 광복군은 의연히 대한민국의 국군임을 강조했다.²⁰⁴⁾

임시정부가 충청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1940. 9. 17.)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무렵인 1941년 12월 7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전쟁이 발생했다. 일제가 미국의 주요 해군기지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한 것이다. 1910년대 이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본이 중국, 미국 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연합국들과 함께 대일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독립전쟁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미·일간의 전쟁은 임시정부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바였고, 예견한 일이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12월 10일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했다.²⁰⁵⁾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는 임시정부가 이미 선전포고를 한 다른 연합국들과 함께 일본과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며,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독립된 교전단체로서 인정받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²⁰⁶⁾

태평양전쟁 발발을 계기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교전단체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교활동에 적극 나섰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가 연합국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받게 되면 독립을 획득하고 정부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특히 임시정부는 대미외교에 적극 나섰는데, 그 이유는 일제 패망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주도할 세력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1941년 ‘주미외교위원부’를 워싱턴 D.C.에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대미외교를 담당하게 하였다.²⁰⁷⁾

20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헌법·공보)』(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249.

20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임시의정원 V)』(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42.

206)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282.

207)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p.285-286.

당시 임시정부나 이승만이 미국을 상대로 전개한 임시정부 승인외교의 논리는 「무기대여법」에 의한 군가·재정원조와 정부 승인이 국내외 한인들의 대일항전을 낳을 것이고, 중국과 미주 등지에서 효과적인 대일 연합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광복군이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원조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미국은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고 국내 인민의 신임을 확보하는 절차를 결여하고 있으며, 다른 항일 단체와 비교해 배타적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정부 불승인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후처리는 일정기간 국제신탁통치로 한다는 안이 연합국들 간 묵시적 동의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승인정책은 이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²⁰⁸⁾ 그러나 1942년부터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국은 영국이 태평양에서 일본군에게 밀리고 있으므로 승리를 위해서는 중국이 일본과 더 적극적으로 잘 싸워 일본군을 중국대륙에 더 묶어두고, 소련이 참전하여 일본군의 주력 중 하나를 만주에 더 묶어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 결과 중국과 소련의 국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한 참전을 자원하므로 미국과 영국으로서는 작은 힘이라도 일본에 대한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1943년 5월 중국 군사위원장 장제스(蔣介石)에게 양국의 전쟁역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 수도의 중간지점인 이집트에서 수뇌회담을 갖자고 제의함으로써 동년 11월 22일 ‘카이로수뇌회담(Cairo Summit Conference)’이 성사되었다.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의 요청에 대해 중국 총재 장제스가 응함으로써 1943년 7월 26일 중경의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한·중 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김구 주석은 “영국과 미국이 일정기간 국제공동관리의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중국측은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 요구를 지지관철해 달라.”고 요청하자, 장제스 위원장은 “한국측의 독립을 지지관철하기 위해서 영국·미국 측의 국제공관(國際共官) 주장에 대해 역쟁(힘써 싸움)하겠다.”고 공약하였다.²⁰⁹⁾ <사진 3-1> 참조

11월 22일 개최된 카이로회담에서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성명을 카이로회담에서 즉각 발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 수상 처칠은 한국의 독립 보장이 인도의 독립운동을 직접 촉발할 것이라고 보고 적극 반대하였다. 장제스는 영국측 입장에 반대하면서 루스벨트의 지지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조를 매우 중시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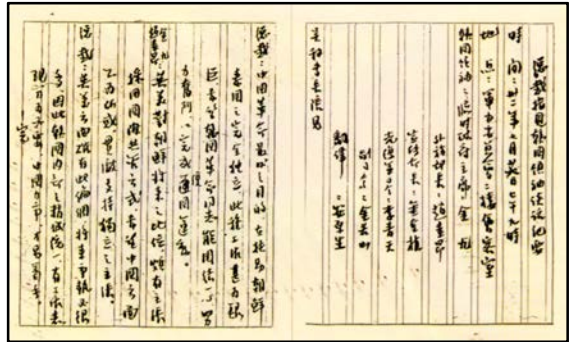
208) 정용욱, 「태평양전쟁기 임시정부의 대미외교」,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하)』(서울: 국가보훈처, 1999), pp.112-113.

209)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522-526.

때문에 영국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영국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카이로 회담 선언문이 1943년 11월 27일(추후 선언 공식일자는 12월 1일로 합의됨.) 채택 공포되었다.²¹⁰⁾(카이로 회담 관련 <사진 3-2>, [표 3-1] 참조)

카이로 선언에 대해 한국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의 독립 보장’에는 환호했지만, “in due course(적당한 시기에)”에 대해서는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들은 ‘in due course’의 내면적 의미는 미국의 입장인 ‘40년간의 공동 신탁통치 후 완전한 독립’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²¹¹⁾ 하지만 세계 열강이 특정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공동으로 약속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독립을 열망하는 100여 개 약소 민족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국의 독립 보장만이 문서로 약속되었던 것이다. 비록 미약하지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한국광복군의 연합작전과 임시정부의 독립외교가 중국을 움직였고, 중국이 미국을, 그리고 미국이 영국을 움직였기에 미·영·중 열강들이 ‘제2차세계대전 후 한국의 자유독립 보장’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구와 장제스의 한·중회담의 결과는 한국민족의 독립역사에 있어서



〈사진 3-1〉 김구와 장제석 회담 내용 중국측 기록 문서 (1943. 7. 26.)

※ 출처 : 『총재집간한국영수회담기요(1943. 7. 26.)』, 백범 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편, 『白凡金九全集』, 제5권 대한민국 임시정부 II, pp.251-252.



〈사진 3-2〉 카이로 정상회담에서 미·영·중 3국 정상

210) U.S. Department of State, *In Quest of Peace and Security: Selected Document on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51*(Washington: U.S. Govt. Print Office), 1951, p.10. ;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530-531.

21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3,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p.869 ; Truman, Harry S.,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56), p.316. 1943년 12월 28일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소련 스탈린 등 3국 정상이 비밀리에 개최한 ‘테헤란 회담’에서는 ‘한국이 완전독립을 획득하기 전 약 40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 신용하(2006), pp.531-532.

획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²¹²⁾

[표 3-1] 카이로 회담(the Cairo Conference) 선언문(1943. 11. 27. 공포)

… 위의 3대국은 한국 민중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In Quest of Peace and Security: Selected Document on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51, p.10.

한편 광복군은 '9개준승'에 의하여 중국군의 지휘감독을 받다가 1944년 9월 8일에 중국 측으로부터 이를 폐기한다는 원칙이 결정되었음을 통고받았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10월 23일 광복군이 임시정부로 귀속될 것에 대비하여 자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집행조직조례'를 확정했다. 그리고 1945년 4월 4일 한·중 간에 새로운 군사협정인 「원조한국광복군판법(援助韓國光復軍辦法)」이 합의되고, 이 법이 5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광복군은 임시정부에 완전히 귀속되었다.²¹³⁾

제 2 절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1. 미국의 대한(對韓)군사정책과 주한미군 철수

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극동의 세력균형이 대미 우호 관계에 있는 장제스 통합하의 중국, 대일참전의 대가로 만주에서 이권을 회복할 소련, 그리고 일본을 단독 점령하여 이를 거점으로 할 미국 등 3대국에 의하여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²¹⁴⁾

212)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538.

213)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령: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31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239-242.

214) U.S. Department of State, *MacArthur Hearings*, Part 1, p.695 ;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4), p.132.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 미국은 지리적으로 3대국의 이해와 세력의 교차가 예상되는 한반도가 그중 어떤 국가의 독점적 지배에 들어갈 경우,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국제적 공동지배하에 두기 위한 신탁통치의 구상이 미소공동위원회(1946. 1.~1947. 5.)의 결렬로 무산되고 통일 정부의 실현이 좌절됨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재평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1차적으로 4대국(미·영·소·중) 회의에 위임하고, 2차적으로 이를 다시 유엔에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한반도문제가 관련 열강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대한인식에 연유한 조치였다. 이처럼 미국의 대한정책은 항상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와 힘의 작용을 의식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²¹⁵⁾

그런데 1947년 중국 대륙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다. 즉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세력관계가 역전되어 중국공산당군(이하 중공군)이 전전선에 걸쳐 총반격을 개시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1949년 10월 1일에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하였는데,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더욱 소극적인 형태로 굳어져 갔다.

미국은 극동에서 대소(對蘇)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중·소 간의 이해 대립을 촉진시켜 그들의 상호밀착을 방지하는 한편, 조속히 대일강화를 실현하여 일본 열도를 전략거점으로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두 가지 방향을 모색하였다.

1948년 3월 미 합동참모본부 정책기획실장 케넌(George F. Kennan)과 만난 자리에서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자기 나름대로의 극동전략을 표명했는데, 극동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계선은 아시아의 동해안을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적 과제는 적대국이 아시아의 항구에서 수·륙 양면으로 도전해 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²¹⁶⁾ 케넌도 맥아더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4일 맥아더의 착상에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서(이른바 ‘PPS-23

215) 이용희,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국제정치학논총 제6집』(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67), p.24.

216)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The Far East*/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Vol VIII(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pp.531-538.

호')를 작성, 국무장관 마샬(George C. Marshal)에게 제출하였다.²¹⁷⁾

케난의 이 전략구상은 그 후 미 국무성·육·해·공군 합동조정위원회(SANACC: State-Army-Navy-Air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검토 끝에 정식으로 미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되었으며, 국가안보회의는 “미국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체 건의서(「NSC-8」²¹⁸⁾)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4월 케난의 이른바 ‘극동에서 도서전략(島嶼戰略)’을 트루먼 대통령이 정식으로 승인하자, 미 행정당국은 “미국은 한국의 방어나 안보에 관한 일체의 공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서 미국이 자동적으로 교전 당사국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한국 사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대한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했다.²¹⁹⁾

이는 분명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우선주의에 입각한 세계전략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즉 우선적으로 주요 전략지역인 유럽에 대소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극동에서의 대소 무력충돌을 회피하려는 미 군사당국의 이때까지의 일관된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나. 주한미군 철수



미국 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감군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인한 지상병력의 부족을 이유로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하기 시작하였으며, 1947년 8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스티코프(T. F. Stykov) 소련 대표가 한반도 점령군의 공동 철수를 제기하였다.

그해 가을 미 합동참모본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정식으로 건의하였는데, 국방예산의 삭감과 병력의 부족 외에도 특히 극동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이 군사적 부담이 된다는 점과 만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기지를 둔 미국의 해·공군이 능히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217) 「PPS-23」: 케난이 국무장관에게 보내 보고서(1948), p.534.

218) 「NSC-8」, 한국문제와 관련된 미 국가안보회의 보고서(1948, 4, 2.)

219) Truman, Harry S., *Memoirs by Harry S. Truman*, 1955, p.375 ; Kennan, George F., *Memoirs(1925~1950)*, 1967 ; George F.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July 1947), pp.566-582. 케난이 이 논문에서 주장한 대소봉쇄전략은 「NSC-20/4」에 의해 미국의 공식 세계전략으로 채택되었다.(김영호, “한국전쟁 직전 미국 합참의 비상전쟁계획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지원 논문(2001).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국무·육군·해군·공군부 '4부조정위원회(SANACC)'²²⁰⁾에서 담당하였다. 1948년 1월 14일 4부조정위원회의 극동소위원회(Far Eastern Subcommittee)는 「한국에서의 미국 정책(SANACC 176/35)」²²¹⁾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합참의 검토를 거쳐 4월 2일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되었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4월 8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NSC 8)」²²²⁾으로 채택되어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갖춘 통일·자주 정부 수립, 한국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보장,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 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표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점령을 종결 짓는 것을 부목표로 설정하였다.²²³⁾

이에 따라 미국은 1948년 12월 31일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국방경비대의 증강 및 훈련, 무기·장비 지원 등을 실행방침으로 정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후 적정 규모의 군사고문단(KMAG: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실제 주한미군의 철수는 1948년 9월 15일부터 비밀리에 개시되어 1949년 6월 29일에 완료되었다.²²⁴⁾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①국제문제상 소련이 북한군을 남침시킬 가능성은 없다. ②중공군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③북한의 군사력과 군 장비는 남

220) SANACC(4부조정위원회)는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함에 따라 공군을 포함하여 SWNCC(국무부-육군부-해군부 3부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었다.

221)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0~1951, vol. III*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p.7-8.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신정부를 1948년 8월 15일까지 수립하고, 11월 15일까지 점령군의 철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남한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예산, 인력, 장비의 범위 내에서 국방경비대를 증강하고 신정부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22)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Korea(NSC 8)”(1948.4.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자료총서: Docu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1, pp.1-14.

NSC-8은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과정에서 결정적인 정책 건의는 「워드마이어 보고서」와 1947년 9월 25일 「미 합동참모본부의 각서(Memorandum of Joint Chiefs of Staff)」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국무부 요구에 대하여 이 보고서와 각서는 1947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계획 및 전략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내용에서 한국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주한 병력과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실질적인 증강이 없이는 한국에 미군을 유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오히려 약점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51.

223) 박동찬,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p.127-129.

224) 조이현,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35(서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6), p.271.

한에 비하여 열세이므로 북한이 자기 의사로는 남침기도를 못할 것이다. ④남한군은 수에서나 장비에 있어 북한군에 비하여 우세하다. ⑤미군 철수시 군장비를 남겼으므로 한국군은 상당한 양의 총탄을 보유하고 있다. ⑥로버츠 준장이 지휘하는 미 고문단의 보고와 제안 및 국회의 할당액에 따라 새로운 군원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²²⁵⁾

주한미군의 철수로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인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북한의 남침징후도 점차 증가하였으나, 한국군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은 미군철수 이후의 군사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증강 및 군사원조 요청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었다.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과격한 반공정책으로 인한 북진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원에 인색했던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주된 이유는 당시 중국공산당 정부의 등장에 따라 미국의회 내에 대두된 강력한 ‘한국 포기론’이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 중국대륙이 공산화됨에 따라 그 주변에 위치한 한국도 결국은 공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원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이었다.

미 의회에서 ‘한국 포기론(拋棄論)’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중공문제의 불간섭(不干涉)과 일본열도의 확보라는 전략개념이 담긴 대(對)아시아정책을 발표하였다. 한반도가 소외된 이 발표는 전국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로 알래스카(Alaska), 알류산(Aleutian)열도, 오키나와(Okinawa), 필리핀(The Philippines)을 차례로 연결하는 태평양 방위선의 확보가 미국 방위에 필수적인 선(線)이라고 피력하면서,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철군에 따른 군사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원(軍援)인 육군 병력 65,000명을 기준으로 한 소요장비 및 소수의 해군함정과 미 군사고문단(KMAG)의 설치를 반영한 데 그쳤다.

북한의 군사력을 현대화한 소련의 대북한 군사정책에 비하면, 극히 소극적이고도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미 군사 당국은 미국의 전략공군이 소련에 비하여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소련이 극동에서 국지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침공을 기도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1950년 초 기준으로 한국군은 약 98,000명의 병력으로 보병 8개 사단이 편성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군원기본계획」 장비 지원기준은 65,000명선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

22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49.

비부족 현상은 심각하였고, 더구나 중화포, 전차 및 항공기는 보유하지도 않았다.²²⁶⁾ 훈련 상태는 1949년 말까지 육군의 67개 대대 중 28개 대대만이 제1단계 훈련인 중대 전술훈련을 완료했으며, 이 중 20개 대대가 대대전술훈련 단계에 있었다.²²⁷⁾ 반면 북한은 적화통일의 목적을 갖고 소련의 지원 아래 소련식 공격 위주 군사체제를 갖추고 전 사단급 기동훈련까지 마쳤으며, 인민군의 증강과 군수물자 비축 등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²²⁸⁾

2. 국방정책의 태동

가. 국가정책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북한에서는 소련군정 당국이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즈음, 남한은 미군의 진주가 지연되면서 사회는 좌우익의 세력 다툼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는 화폐의 남발로 악성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북한에서 송전되던 전력마저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전하자 남한은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해외동포의 귀국과 북한 주민의 월남 등으로 정부수립 직전까지 200여 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유입되면서 국민의 생활고는 극도에 달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박사는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하고 남북통일의 실현을 위한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²²⁹⁾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국토 분단에서 야기되는 북한에 대한 안보상의 대비책이었다. 그러나 국가안전을 위한 절대 우위의 요소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력 유지에 있었지만, 당시 국방력의 육성은 국민경제의 영세성과 국가정책의 빈곤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수립 초기의 국가경제 조성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군의 장비, 시설 등은 거의 미국 원조에

226)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338-339. ;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56.

227) Office of the Chief, KMAG, "Status of Training, KA", *Sen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Annex No. V, RG 554, Entry No.A-1 1355, Box 29.

228)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4), p.357. 북한군은 소련 특별군사사절단과 고문단의 지도 아래 군비증강과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하여 이미 1949년 말에 전 사단급 기동훈련과 특수부대의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22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7.

의존해야 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통일’과 ‘산업 재건’을 「2대 국가목표」로 하였으며,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방, 치안, 내무, 산업노동, 문교, 사회, 외교, 식량, 대일 배상요구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당면과제정책으로 발표하였다.²³⁰⁾ 이 중 국방 및 치안은 정예국군을 위한 조직·편성을 우선으로 하여 국방에 필요한 정책을 촉진한다는 방침 아래 이에 기초가 되는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건국사업에서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모두를 국방에 충당한다는 방침 아래 시행되었다.

당시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 및 산업과 방위역량이 열세한 가운데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지원 없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방 및 치안을 우선으로 하여 미국에서 경제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재정상의 수지균형과 통화 및 공채 발행의 통제 등 경제안정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리하여 국군은 「한미 잠정적군사안전협정」(1948. 8. 24.)에 따라 정식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국군 증강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훈련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국가 재정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한미 협정」(1948. 9. 11)과 「한미 경제원조협정」(1948. 12. 10.)을 맺어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1948년 9월 3일 정부는 ①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실천과 생존권의 확보 그리고 우방국과의 친선 및 인류문화의 공헌, ②국가경제의 위기극복과 산업재건 및 경제부흥을 위한 정치전개, ③시급한 사상의 통일로 사회기풍을 숙정하고 관기를 쇄신한다는 「3대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²³¹⁾

특히, 이 중 현실적으로 가장 긴요한 문제는 국토분단과 북한에 대한 안보상의 대비책인 ‘사상통일’이었다. 그러나 국가안전을 위한 절대 우위의 요소가 강력한 군사력 유지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잠재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당시의 여건하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국방력의 육성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조직에 의하여 국방부를 설치하고 국군을 창설하였으나, 민족자본의 영세성과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자주적인 국방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정치·경제·외교활동 차원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23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7.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는 1949년 4월 2일 제70차 국회 본회의에서 신 회계연도에 대처할 정부의 당면 주요정책의 목표를 발표하였다.

231) 1948년 9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 참조.

나. 국방정책의 기초 : 연합국방(聯合國防)

「헌법 전문(前文)」에 “3·1독립정신으로 재건된 민주독립국가로서 항구적인 국제평화유지와 자손만대의 자유행복을 확보하는 국제간의 친선유지와 평화애호의 국시(國是)를 중심으로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정책의 기초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이 대통령은 정부수립 선포 기념사에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다. 모든 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 대소 강약의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상호간에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 … 모든 미국인과 모든 한국인 간에는 한층 더 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초대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1948년 8월 16일 취임 즉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국제 공산세력의 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의 군사역량이 규합되어야 하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군의 군사지원을 받아 공동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연합국방’을 시책의 기본으로 삼아 강력한 지상군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을 천명하였다.²³²⁾(〈사진 3-3〉 참조)



〈사진 3-3〉 이승만 초대 대통령(우)과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

연합국방을 국방정책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당면한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따른 대비와 이를 가상 적으로 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의 국방의 역량이 연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정책이었다. 따라서 육·해·공군의 건설에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연합국방을 토대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의 군사역량을 규합하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232)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54), p.161 ; 대한민국건국10년지 간행회, 『대한민국 건국 10년지』(서울: 대한민국건국10년지 간행회, 1956), p.333.

작전협력을 받는 공동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대미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안으로는 광복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정병배양(精兵培養)과 사병 제1주의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이에 기본이 되는 ‘반공정신 강화’를 시책으로 펴나갔다.²³³⁾

제 3 절 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1. 6·25전쟁기(1950. 6.~1953. 7.)

가. 전쟁 초기 상황

광복 이후 한국국민의 공통된 염원은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국토의 분단상태에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조국분단의 조속한 종식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만이 민족의 생존과 국토보존을 위한 유일한 활로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염원은 장부수립 초기 ‘국가목표’ 설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이 점차 격화되고 남침위협이 증대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종래의 평화적 통일을 지양하고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창하였다. 정부는 당시 표면상으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적극적인 대한군사지원을 호소하면서 자체방위를 위한 군사력의 육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불법남침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는 전시에 대한 국방정책을 정립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으로서의 군사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채 전쟁의 참화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정부는 25일 오전 11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부로부터 전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혼미하여 회의를 일단 연기하였다가 오후 2시에 2차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이 전황을 낙관적으로 보고함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국군의 반격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긴급명령 제1호」를 하달하고 주한 미국대사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통하여 북한의 남침을 미국과 유엔에 보고하도록 관계 장관에게 각각 지시하였다. 그러나 전황이 시시각각 불리하게 전개되어 수도 서울이 적의 위협권 내로 접어

233)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간행회, 『대한민국 건국 10년지』(서울: 대한민국건국10년지 간행회, 1956), pp.334.

들자, 6월 27일 오전 3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후 일단 정부를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6월 27일 정부와 국회가 수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전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육성 방송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믿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피난을 가지 않았다.

한편 일본에 위치한 미 극동군사령부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로 북한의 남침 상황을 파악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사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후,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한국의 38도선 이남에서 한국 전선에 투입될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미 해·공군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6월 30일 미국정부는 미 극동군사령관의 지상군 투입 건의를 받고 이를 즉시 수락하고 미 해군과 공군에게 38도선 이북지역의 적 공격목표에 대한 공격권을 부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 사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의 공식 요청으로 6월 26일 04:00(현지시간 25일 14:00)에 열린 긴급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북한군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자유진영의 32개국이 이를 지지하였다. 이어 7월 중순에는 52개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를 지지하게 되었고,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 지휘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여 가결시키고, 미국으로 하여금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7월 8일 미 트루먼 대통령은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육·해·공군 병력 총 34만 1,000여 명과 국군이 함께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지연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국방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전쟁 발발 전인 1950년 1월 26일 미국과 「한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았다. 전쟁 중인 1952년 1월부터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원조법인 「상호안전보장법」에 따라 군사원조 중심의 대미 원조를 받았으나, 1,500만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한 혜택은 기대에 못 미쳤으나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집단안전보장 조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휴전 전까지 유엔회원국 16개국으로부터 전투부대를 지원받았고, 5개국으로부터 의료지원, 20개국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지원받아서 북한 및 중공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당하게 되자 국방정책다운 정책을 정립하지 못한 채,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대미·대유엔 외교활동에 주력하면서 전시 국민총력전체제를 갖추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당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로서,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증강과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비를 증액하였고, 군수산업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후방의 치안을 확보하면서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방위군 창설, 여자의용군 창설, 학도군사훈련의 실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다.²³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유엔군이 전쟁에 참전하게 됨에 따라 맥아더 미국동군사령관이 유엔군총사령관에 임명되고 그에게 유엔기가 전달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의 육·해·공군 3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요지의 공식서한을 발송하였다.²³⁵⁾([표 3-2] 참조)

[표 3-2]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공동군사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작전중인 국제연합의 모든 육·해·공군 부대는 귀하의 통제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음에 감하여(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출처: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pp.629-630.

이상과 같은 요지의 서한이 발송된 직후에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작전지휘권의 인수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보냈으며,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지휘체제는 일원화되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은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두게 하여 작전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전쟁지도 역량을 통합하여 전쟁을 조속히 승리로 이끌게 함으로써 유엔군의 북한점령이 국토통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였다.²³⁶⁾

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국의 군사지원은 종래의 소극적인 지원책으로부터,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자, 미국의 자체 군수지원 계통으로 직접 보급되는 장비, 탄약 및 물자의 지원이 활발해졌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선에서 군사력 전개와 더불어 국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피복, 유류, 총포, 탄약, 차량, 공병

234)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57.

235)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629-630.

236)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57-58.

장비, 물자 등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함정 등 대형 장비에 이르기까지 미군과 같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직접지원의 형식으로 국군에게 보급이 되었다.

국방비 증액 편성 정부는 전쟁의 수행과 전후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군비의 유지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 및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국민총생산(GNP)의 6.1%, 정부 일반재정의 50.7%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편성하였다. 이 국방비는 전쟁기에는 주로 전란수습비특별회계와 일부 일반회계로, 휴전기에는 국방비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연평균 국내재원 65.3%, 외원재원(대충자금) 34.7%로 구성되었다. 국방비의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봉급과 급식비를 포함한 개인유지비가 전체의 77.2%였으며, 부대유지비는 17.9%였고, 전력증강비와 전투준비비는 각각 2.3% 및 2.6%에 불과하였다. 군별로는 육군예산이 전체의 77.8%였고, 해군은 해병대를 포함하여 10.9%였으며, 공군은 5.7%, 국방부분부 및 직할부대가 5.6%를 차지하였다.

전쟁 첫해인 1950회계연도의 경우 정부 재정 규모는 1,056억 원이었으며, 그중에서 국방예산은 250억 원으로 23.7% 수준이었다. 그러나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 전쟁이 일어나 정부는 전쟁 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7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정부 예산은 2,915억 원으로, 국방예산은 정부 재정의 51.1%인 1,490억 원으로 확정하여 집행되었다.²³⁷⁾

군비 확충 전쟁 초기 국군의 전투력은 북한군보다 월등히 열세였으나, 개전 이후 유엔군의 지원과 미 극동군사령부를 통한 미국의 직접 군사지원에 힘입어 국군은 군비를 증강하고 확장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육군은 3개 군단과 18개 사단의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보병부대 창설에 따른 병과별 지원부대 및 7개의 전차중대, 야전포병단이 창설하였다.

전쟁 중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재정부담과 NATO의 군사력 소요에 대한 지원의 이행 문제, 그리고 일본 방위군 부활 등을 고려하여 국군의 확장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개최되자, 정부는 군비증강을 끈질기게 추진하였고, 이때 부임한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미 8군사령관은 이를 지지하였다. 이어 새로 부임한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6월에 2개 사단 증편안을 미국 정부에 건의하였고, 11월 1일에는 「육군 20개 사단 확장계획」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11월에 12, 15사단이 창설되었고, 육군의 정원도 46만 3,000명으로 증가하였다.

237)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437-440.

‘육군 20개 사단으로 확장안’은 1952년 1월 집권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정책인 한국전쟁의 조기 종결, 한국군의 증강,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보병 2개 사단의 창설에 이어서 추가로 20, 22, 25, 26, 27사단과 3군단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쟁 전에 8개 사단과 지원 및 특과부대 94,000명 수준에서, 휴전 당시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확장되었으며, 병력은 55만 명으로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²³⁸⁾ 해군은 1개 함대를 주축으로 통제부, 정비부, 그리고 창급 부대를 갖추게 되었으며, 함정에 있어서도 PC, AMS, JMS, PF, PCS, LSSL 등의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고,²³⁹⁾ 병력도 전쟁 전 6,956명에서 14,86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해병대는 4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1개 전차중대로 편성된 제1전투단과 연대규모의 도서부대, 그리고 지원부대 등으로 전쟁 전 1,166명에서 22,174명으로 증가되어 20배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미군과의 연합전투 참가로 전투능력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공군은 2개 비행단과 통신, 기상, 관제, 기지, 특수부대 등 지원부대를 갖추게 되었고, 병력도 전쟁 전 1,897명에서 1,1451명으로 증가되어 5배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국군의 군비확충은 전쟁 전 미국의 소극적인 군사지원정책에서 6·25전쟁으로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직접적인 군수계통에 의한 적극적인 군사지원정책으로 전환한 결과였다.²⁴⁰⁾

군수생산공장의 창설 국방부는 육군병기공창을 국방부직할로 흡수하여 1949년 12월 ‘병기행정본부’를 창설하고 시설확충과 기술향상에 주력하였으며, 1950년 6월 전쟁 직전 부산에 제1조병창을 창설하고 인천 제2공장을 제2조병창으로 개편하였고, 병기와 탄약의 학리적 연구와 시작(試作)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연구소’를 창설하였다. 그 후 전쟁의 발발로 부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시설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 파괴됨에 따라 부산의 시설만을 이용하여 수류탄의 생산과 노획병기의 정비 등에 주력하였다. 1951년에 접어들어 각 조병창은 일본으로부터 수류탄 자재, 뇌관도입선을 수입하여 타격식의 수류탄을 다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99식소총탄환과 대한식(大韓式)소총 그리고 대인마(對人馬)지뢰와 30kg 폭탄도 제조하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는 병기·탄약에 대한 제조기술의 완전 해결과 최신식 제조연구시설의 연구조사 및 시설도입을 추진한 결과, 같은 해 연구제조 기

238) 20개 사단 중 28, 29사단은 휴전 후 창설되었다.

239) PC, AMS, JMS, PF, PCS, LSSL 등은 제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이 사용하던 전함으로 지금은 모두 폐기되었다.

240)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58~61.

기를 목표량의 90%까지 도입·확보하게 되어 조병기술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²⁴¹⁾

예비병력 확보정책 정부는 1950년 12월 21일에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고 제2국민병역에 해당하는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을 동원하여 ‘국민방위군’을 창설하였다. 국군의 계속적인 북진으로 막대한 병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들 장정을 훈련시켜 병력 동원에 충당하려는 것이 이 국민방위군을 창설한 주 목적이었다. 그 후 1951년 1월 4일 이후 전황의 변동에 따라 국민방위군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국민방위군의 매직(賣職)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방위군의 간부들이 50억 원의 국고금과 식량을 비롯한 물자를 부정착복하여 수많은 장정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양식과 의류 등 보급품의 부족사태를 빚어 1,000여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병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1951년 5월 「국민방위군 폐지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국민방위군은 해산되고 간부 11명은 구속기소되어 그 중 5명은 군법회의의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다.²⁴²⁾

전쟁기간 중 북한의 남침을 응징하기 위해서 여성들까지 군복무를 열망함에 따라 1950년 9월 6일에는 애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여성 500명을 선발하여 육군훈련소에 ‘여자의용군 교육대’를 창설하였다. 여자의용군은 후방 및 지원부대에 배치되어 타자, 통신교환, 대적방송 등 기능직과 특수행정 분야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 부대는 한국여군의 효시가 되었다.

국방부는 전쟁기간 중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양질의 자원을 적기에 제공할 목적으로 1950년 7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등 4개 지역에 ‘지구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여 신병보충기구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해당지역 방위 임무와 전시 소요 병력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으며, 육군의 재편성 시기인 1951년 4월에 체계적인 병력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었다.²⁴³⁾

241)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64.

242)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62-63.

243) 김중기 편저, 『한국군사사』(창원: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4), pp.283-286.

2. 전후 정비기(1953. 7.~1961. 5.)

가. 국내외 정세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미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극동전략의 기본개념인 핵무기의 독점과 전략공군의 보유를 배경으로 한 도서전략을 수정하여, 한국과 타이완이 포함된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알류산열도-일본-한국-오키나와-류큐-타이완-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전쟁을 국지전으로 제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전쟁 중인 1951년부터 휴전 후인 1954년 사이에 미국은 필리핀과의 「미·비상호방위조약」(1951. 8.)을 효시로 「호주, 뉴질랜드,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ANZUS, 1951. 9.), 「미·일안보조약」(1951. 9.),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 「동남아집단방위조약」(SEATO: 1954. 9.), 「미·중화민국(현재의 타이완)상호방위조약」(1954. 12.)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과 대등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였다.²⁴⁴⁾

이로써, 아시아에서도 집단안전보장체제가 형성되고, 또한 소·중·북한 등으로 구성된 북방(北方) 3각(三角)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자유중국 등 남방(南方) 4각(四角)관계가 미국을 주축으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때부터 이러한 세계 전략차원에서 국지적(局地的)인 제한전쟁과 정치·경제적인 준군사적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해외기지의 확보를 중요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방위선에 연한 한국과 대만 및 기타 도서에 설치한 해외기지를 계속 유지하여 공산권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소련의 남진정책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로서, 1951년 9월 8일(~14일) 연합국 51개국(연합국 영토로부터 독립한 국가를 포함)과 일본이 참석²⁴⁵⁾하여, 미국 안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대일본 강화조약」을 조인(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포기)하였다.

소련은 남진정책을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소련이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①모든 연합국의 군대는 일본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하며, 일본 영토에 군대 또는 군사기지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②일본은 대일전쟁에 참가한 국가와의 연합 또는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의무를 져야 하고, ③소야 및 네무로 해협, 일본 해안과 쓰가루 및 쓰시마 해

2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878~896.

245) 인도, 유고슬라비아, 버마, 중화민국(별칭 자유중국)은 불참.

협을 비무장화해야 하며, ④정치·군사적인 것을 불문하고 파시스트 및 군국주의가 일본 영토에 부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소련의 「평화조약 수정안」은 소련이 일본과 미국을 단절시켜 일본의 주권을 제한함으로써 소련의 영향권 내에 두려는 데 그 속셈이 있었으나, 1956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對日) 강화조약」이(49개 연합국 대표가 참석 조인) 체결됨으로써 소련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그 후 소련은 소·일 공동선언(1956. 10.)을 계기로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만을 개선한 채, 대일 경색(梗塞)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소련은 대(對)중공정책에서 중공이 전 대륙을 석권하기까지 중공을 은밀히 지원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남진정책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보고 강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대중공종속화(從屬化)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을 계기로 밀착되어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밀월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공의 대북한정책 중공(현재의 중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에 만약 북한이 유엔군에게 패배할 경우,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면 완충지대가 소멸되어 국경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²⁴⁶⁾

그리하여 중공은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외교 및 안보적 차원을 감안하여 한국전에 개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중공은 공산정권 수립 전인 1949년 3월 18일 이미 북한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및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공은 이른바 ‘의용군’이라는 명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후, 이해 10월 26일 ‘중공인민세계평화옹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 정당 사회단체를 총동원하여 항미원조협회를 결성하고 거국적으로 한국전 수행을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6·25전쟁의 참전을 본격화하였다.

중공은 소련과는 달리,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항미원조(抗美援朝)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북한과의 상관관계에서 소련과 대등한 경쟁적 상대로 부상하였다.

이외에도 중공은 전쟁기간 중 전쟁물자의 무상(無償)원조는 물론, 1954년부터 1957년까지 4년간 3억 3,6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의 국민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1958년 10월 10일에 이르러서야 북한에서 군대를 철수했다.²⁴⁷⁾

2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26.

247) 중앙정보부, 『중·소의 대북한 지원』(서울: 중앙정보부, 1973), p.42.

북한의 대남정책 휴전 이후 북한은 무력남침에 의한 적화(赤化)통일 계획을 한때 포기하고, 대남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채택하여 남한에 반정부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위장(僞裝)평화공세와 지하당(黨) 재건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전환은 전쟁으로 폐허화된 북한의 경제복구와 군비재건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전쟁의 경험으로 한국국민의 반공의식 고조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한미 간에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2월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발표된 흐루시초프의 대서방에 대한 평화공존노선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전략방향을 평화통일공세를 적극화하는 한편, 대남침투공작의 기지로 일본의 조총련(朝總聯)을 활용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군사적으로는 1956년 말까지 ‘전후 복구기’로 정하고 육·해·공군의 대폭적인 부대증편과 장비보강에 주력하였다. 특히, 휴전 이후 북한이 대남적화공작을 목적으로 한 각종 도발을 자행하여 1953년부터 1961년까지 휴전협정 위반사건만도 1,365건에 달하였다.²⁴⁸⁾

국내정세 1950년대의 국내정세는 정치·사회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둘러싼 개헌 파동으로 정국(政局)불안이 지속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이 당선되었으나 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가 실시되어 ‘4·19혁명’이 일어나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붕괴 후 국회가 새롭게 제안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가결시켜 새 헌법으로 1960년 8월 12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결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국회는 대통령에 윤보선(1960. 8. 12), 국무총리에 장면(1960.8.19)을 각각 인준함에 따라 내각책임제의 제2공화국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헌법에 따라 출범한 정부는 성급하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과 과감한 혁명과업을 요구하는 청년·학생층의 계속적인 집단 시위, 그리고 경제적인 역조로 인한 국민생활의 팍박과 민주당 내의 끈질긴 파벌투쟁 등으로 사회불안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실패한 장면 내각에 대해 지도역량이 미숙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어 갔다.

정부는 휴전 이후 1960년 말까지 전후 복구사업과 생산수준의 조속한 회복 및 악성 인플레이션의 수습을 통한 대내외의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원조물자 도입에는 미국의 국제협조처를 통한 원조가 83.7%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

24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4.30.) ;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93.

국의 무상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특히, 1955년부터는 미국 「공법 제480호(Public Law 480)」에 의하여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농산물의 판매대금은 우리나라 국방비를 조달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었다.²⁴⁹⁾ 재해복구사업은 1953년 12월 14일 한미 간에 체결된 「경제 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에 의하여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전쟁의 참화에서 점차적으로 복구되어, 1960년에 이르러서는 전쟁 전의 수준을 능가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였다.

나. 국방정책 방향

정부는 남북통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군사분계선의 설정으로 국토가 분단된 채 휴전이 성립되자, 휴전을 전쟁의 종결로 간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전쟁이 정지된 정전 개념에 입각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정전 개념은 이 대통령이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9일 전국민에 대하여 발표한 [표 3-3]과 같은 성명에 명백히 반영되었다.²⁵⁰⁾

[표 3-3] 「휴전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문(일부)」

“..... 우리의 변함없는 결심은 중공군이 북한에서 물러나지 않고는 평화나 휴전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간에 협의되기를 우리의 통일문제가 몇 달 기한으로 정지되는 것뿐이니 우리의 목적에는 변경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 협의된 것은 3개월 이내에 개최하기로 예정된 정치회담에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는 유엔 16개국과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통일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으며, 비록 유엔제국이 다시 전쟁을 재개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 유엔제국은 이에 합심하여 우리를 원조할 것으로 믿는다.”

※ 출처: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p.315.

이와 같은 이 대통령의 성명은 중공군이 북한에 체류하는 한 한국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과, 정치회담에서의 통일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것이 결렬될 경우 전쟁은 속개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경우 유엔 참전 16개 국의 공동작전에 의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정책적 주장이었다.

249)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의 원조』(서울: 박영사, 1962), p.90.

250)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서울: 공보처, 1953), p.315.

또 하나 정전 후 안보적 차원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것이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이었다. 1953년 8월 8일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은 서울에서 한미 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고, 조약 원안에 가조인한 다음, 공동성명에서 [표 3-4]와 같이 발표함으로써 미군의 한국주둔을 명백히 밝혔다.²⁵¹⁾

[표 3-4]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후 공동성명문

“오늘부터 이 공동방위조약이 발효하게 되는 날까지 사이에 한국에 있는 양국 군대는 유엔 군사령부에 소속되며, 동 사령부는 휴전조약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이다. 이 기간 중에 공산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한국에 불법적인 무력침공을 가하는 일이 생길 경우, 한국군을 포함하는 유엔군사령부는 그와 같은 불법공격을 동 사령부 자체와 휘하 군대에 대한 공격과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반격을 가할 것이다. 양국 정부는 공동방위조약이 발효하게 된 이후, 미국이 한국에 주류하게 할 군대의 지위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국 측의 시설과 인원의 사용에 관한 협약을 즉시 상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할 것이며, 한국에 있는 유엔군의 지위와 그들에 대한 한국 측의 시설 및 인원의 사용은 현재대로 계속될 것이다.”

※ 출처: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p.313.

그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卞榮泰)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체결되었으며, 1954년 7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11월 17일 정식 발효되었다.²⁵²⁾ 이 조약의 전문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²⁵³⁾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1945~1980)』, p.154.

251)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서울: 공보처, 1953), p.313.

252) 서주석,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 과정』(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pp.197-198 ; 홍용묘, “이승만 시대의 한미관계,” 김계동, 『한미관계론』(서울: 명인문화사, 2012), pp.73-74.

253)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1945~1980)』(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p.154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1954년 11월 17일에 합의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에서 재확인되었다. 특히 제2조에서 작전통제권 문제는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둔다.”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전후에도 계속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고 규정한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안전판’의 의미가 컸다. 그리고 작전통제권의 행사기간을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서 언급한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으로 바꾸었다.²⁵⁴⁾

또한 한국군의 최종적 규모와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에 육군 661,000명, 해군 15,000명, 해병대 27,500명 공군 16,500명 등 모두 72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매년 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규모는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²⁵⁵⁾ 또한 1957년 7월 1일 미 국방부 명령으로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해 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은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라 미군 자체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한국군의 규모와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등이 규정되어 전후 한국 군사체제를 규정한 기본문서였다.

정부는 휴전 후 전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안보체제 강화에 주력함과 아울러 북한의 재남침에 대비한 전력증강에 최대의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맥락은 휴전 후 ‘연도별 국방주요시책’에 반영되어 매년 승계되었으며, 1960년도 국방주요시책인 ①장비의 현대화와 군사력의 증강, ②정병주의 구현, ③군기 확립, ④군수지원의 강화 등을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국방정책의 방향은 제2공화국 정부도 계승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다.

2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63.

255) 그렉 브라진스키 저, 나종남 역,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서울: 책과함께, 2011), p.63.

제 4 절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1. 국내외 정세

가. 국제정세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소 간에 이루어진 「핵실험 금지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다. 즉 1963년 8월 5일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이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하고 1968년 7월 유엔총회에서 「핵확산금지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정세는 전쟁억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대립에서 긴장완화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국제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1960년대의 세계정세는 국지분쟁이 증가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분쟁의 대부분은 경미한 국지전으로 끝났으나, 6일 만에 끝난 ‘제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더욱 확장시킨 결과가 됨에 따라 주변 아랍국들의 뿌리 깊은 불만을 심화시켜 중동문제 해결의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국제 정치사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사건은 ‘베트남전쟁’이었다. 1961년의 게릴라전으로부터 미국의 개입으로까지 확대된 베트남전쟁은 1965년부터 정규전으로 돌입하면서,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었다.

한편 1969년 7월 25일 미국은 소위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의 선언으로 아시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1970년 미국과 중공 간의 핑퐁 외교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북경 방문은 미·중공 화해라는 국제정치적 대변혁을 일으켰다.

동·서진영 간의 군비축소회담 시작 등을 계기로 1960년대 말부터 세계는 데탕트의 조류가 흘렀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념을 초월한 국제무역의 증진 등으로 더욱 깊어갔으나, 미·소는 여전히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였으며, 동서 간에는 대립요인들이 그대로 상존함으로써 국지분쟁에 대한 불안요소는 제거되지 않았다.²⁵⁶⁾

나. 북한정세

북한은 미·소 대결의 상징이었던 1962년 쿠바사태에서의 소련의 패배와 베트남전쟁에

256)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11-113.

대한 미 케네디 행정부의 점진적인 대규모 군사력의 개입이 간접적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5·16군사정변 이후 반공을 국시로 삼는 한국의 반공주의적 정부의 출현이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베트남전쟁의 확대, 한·일 조약의 체결, 중공(현재의 중국)의 문화혁명 등 당시 아시아지역에서 급변하는 정세를 고려하여 스스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친소 정책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은 대외적으로 1961년 7월 6일에는 소련과, 7월 11일에는 중공과 각각 「우호협력조약」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²⁵⁷⁾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軍事路線)'을 채택하여 군비증강에 주력하였다.²⁵⁸⁾

한편 김일성은 1965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북반부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국제 혁명역량 강화'라는 「3대 혁명론」을 발표하는 등 대남 적화위협을 고조시키는 강경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한 북한의 기본 군사정책은 '4대 군사노선'이었고, 군사전략은 '자위(自衛) 군사전략'이었으며, 196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4기 5차 중앙위원회에서 '구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대하여'라는 의제로 회의를 열고 '전쟁준비 노선'을 확정하였다. 이 노선은 북한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竝進)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독자적인 전쟁준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²⁵⁹⁾

다. 국내정세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어 과도정부(권한대행 허정)의 관리아래 내각책임제 개헌에 이어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장면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2공화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의 내분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의·주장, 그리고 과도한 선동과 시위 등으로 사회는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졌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朴正熙) 육군 소장(당시 제2군 부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정변이 성공함으로써, 장면 내각은 9개월간의 단명으로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군사정변 세력은 정부의 입법·행정·사법 3권을 장악하고, 정국을 수습하여 일반사회의 일대 변화를 추

25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pp.943-946.

2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p.367-385.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이다.

25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20-124.

진하였다. 같은 해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 법의 효력은 「헌법」에 우선하였다.²⁶⁰⁾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하여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선거가 실시되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이겨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 175석 중 민주공화당이 110석을 획득하게 되어 ‘제3공화국’이 탄생하였다.²⁶¹⁾

1965년 3월 23일 한·일 양국은 합의점을 찾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및 경제협력 등에 관한 부속협정」에 조인하게 되었으며, 국회의 비준을 얻어 1965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한·일 국교는 정상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을 연대하는 동북아시아의 반공보루(反共堡壘)가 형성되었고, 국교정상화 후의 경제협력으로 한·일 양국의 교류는 증진되었다.

한편 미국과 베트남(한국에서는 ‘월남’으로 통용)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병하게 되었다. 1966년에는 1개 군단 규모로까지 확대되었으며, 1973년 3월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연인원 31만 3천여 명이 참전해 베트남을 도왔으며 국위를 선양하였다. 이러한 국군의 해외파병으로 한국은 군사적 성과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 확보는 물론, 국군 장병들의 송금수입과 양국 간의 경제협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 연 10%라는 실적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안보대책에서 제3공화국 전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심한 갈등과 파란을 겪으면서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연평균 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83달러에서 123달러로 증대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1967년부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그 결과 연평균 9.7%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1인당 GNP는 123달러에서 275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2억 5,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수준을 넘게 되었고, 경부(京釜)고속도로의 건설과 국토건설 계획을 착수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는 1967년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0배에 달했으며, 1968년 1월 21일에 자행된 북한 124군 부대의

260)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 6. 1. 최고회의령 제42호)은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6월 1일 자로 제정·공포함으로써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여 혁명정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었다. 동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 내각의 권한, 사법에 관한 지시통제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261) 제3공화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1963.10.15)와 국회의원 선거(1963.11.26)를 거친 후 1963년 12월 17일에 정식 출범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제3공화국 초대 대통령(박정희)의 취임과 동시에 민정으로 정권이 이양되었다.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그 이틀 후인 1월 23일의 동해상에서 일어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에 큰 위기상황을 가져왔다. 1968년 11월 2일에는 또 다시 울진·삼척지구에 120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약탈과 살인행위를 자행하였으며, 1969년 4월 15일에는 북한에 의해 미 정찰기 EC-121기가 동해에서 격추되어 심각한 안보위협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국제정세의 새로운 사태에 직면한 한국은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힘겨운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한 미국방장관회의를 연례화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특별 군원 1억 달러를 받게 되어 군장비 증강과 군수산업 기반조성, 공군력 강화 등 국군현대화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국방정책 기본방향

가. 5·16군사정변 시기(1961. 5.~1963. 12.): 국토방위태세 및 우방과의 유대 강화

5·16군사정부는 정변의 목표가 내포된 「혁명공약(革命公約)」²⁶²⁾을 「정부 기본시책」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第一義)로 삼고 반공태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시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국방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목표」는 첫째,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둘째,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셋째, 간접침략을 분쇄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두었다.²⁶³⁾

262)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회의의결, 제2호」(1961. 10. 1.), 「혁명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현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립경제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민간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63)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25.

이와 같은 국방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은 ①간접침략 분쇄, ②자유우방과의 유대 공고, ③구약과 부패일소 및 군기확립, ④국가자립경제 확립, ⑤국토통일을 위한 전력배양 등이었으며, 이 기본방향은 1963년 12월 제3공화국 출범 전까지 유지되었다. 군사 정부는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연도별 국방기본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1961년도 국방기본시책」은 국방체제의 정비 및 군장비의 현대화 촉진을 비롯하여 집단 안보체제의 형성, 교육훈련 및 병무·군 인사운영 개선, 군·관·민 유대강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밖으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6·25전쟁 참전 16개국과 동북·동남아시아 우방국과의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적 유대와 국군의 지위를 향상하고, 안으로는 「군 인사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상응하는 보직 원칙을 채택하여 각 계급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함으로써 보수의 공정성을 기하고 정년제(停年制)를 실시하며, 또한 병원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래의 국방부 및 내무부에서 처리하던 징·소 집업무를 국방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침 아래 시책을 펴 나갔다. 이외에도 국가방위 차원의 국토건설 사업과 대민지원 차원의 재해복구 사업에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국방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62년도에는 국군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군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방과의 집단방위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여 시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모든 형태의 북한의 간접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역량과 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1963년도에는 군기확립과 교육훈련 강화,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 시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강력히 시행하였다.

나. 제3공화국 시기(1963. 12.~1969. 12.): 국가안보체제 강화 및 베트남 파병

제3공화국 정부는 공산주의 침략을 분쇄하여 조국통일을 이룬다는 전제 아래에서 ‘자주·자립·번영’을 「국정의 지표(指標)」로 삼았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시책의 기본 방침을 ‘자립경제 기반구축’에 두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갔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전보장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대공방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국방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이 국방력 강화에 기본적인 목표를 둔 정부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대미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자주국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²⁶⁴⁾

264)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27.

기간 중 국내외정세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사태의 악화와 중공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따른 군사력 강화로 아시아지역에서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특히 베트남사태는 미국의 적극적인 전쟁개입 정책과 우방국에 대한 전쟁지원 요청으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냉전시대가 예고되면서 한국도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이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와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을 유발하여 남북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에 따른 국방정책은 ①미국과의 군사적 유대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 강화, ②미국의 요청에 의해 1964년부터 시작된 베트남파병정책 추진, ③국군현대화 계획 추진을 위해 베트남전 참전요청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부여했던 군사지원의 확대, ④북한의 간접침략대비 강화, ⑤군의 국토건설과 대민사업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등이었다. 이는 정부의 국정 최고 목표가 조국 근대화와 자립경제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장비의 효과적인 활용을 의미했다.²⁶⁵⁾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강화는 기존의 미국과의 유대를 지속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요구로 인해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안전보장체제가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점이었다.

국군의 베트남파병정책은 제3공화국의 국방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즉 파병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과의 군사적인 유대가 공고화되었으며, 국군의 현대화계획과 나아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결정한 군사지원의 증가로 가능했다. 베트남파병정책은 1960년대 후반의 주요 국방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의 지원과 동남아 및 서구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1964년 5월 9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 베트남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1964년도에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140명을 파병하였고, 1965년도에는 자체 경비병력과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부대에 이어 국군 1개 사단 등 정규전투부대의 참전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군 현대화는 베트남전 파병 결정으로 가속화되었으며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 보상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확대를 공식화함에 따라 군장비의 현대화와 무기의 증강은 물론, 군수산업이 확대되었다.

제3공화국의 국방정책은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활동을 견제하고 장비 현대화와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64년도의 국방시책은 첫째, 자유 우방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26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28.

강화, 둘째, 군 현대화에 의한 방위력의 향상과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 유지, 셋째,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 넷째, 교육훈련 강화 및 장비의 질적 향상, 다섯째,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군 장비의 효과적인 평시활용을 단행한다는 원칙 위에 수립되었다.

1965년 10월을 전후하여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이 이뤄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충분한 수준의 한국군 유지를 위한 군사지원, 베트남 지원에 대한 긴밀한 협조’에 합의함에 따라 파월 전투부대 지원과 한국방위를 위한 3개 예비사단의 장비지원 문제가 해결되었다.

국방부는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국가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²⁶⁶⁾ 이 기본시책에 제시된 「국가목표」는 [표 3-6]과 같다.²⁶⁷⁾

국방부는 새로 제시된 「국가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기본정책과 동남아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의 지원과 동남아시아 및 서구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처하여 한국군 예비사단을 전투사단화하고, 베트남전선에 적절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표 3-6] 국가목표(1966년 설정)

1.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토를 통일하고 영구적 독립을 보전한다.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3. 국제적 위신을 확립하여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p.154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국가목표」를 구현할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²⁶⁸⁾ 첫째, 자유우방과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대베트남 군사지원을 계속한다. 둘째, 현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장비 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예비군사력의 보강으로

266) 국방부,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서울: 국방부 행정자료실, 1966),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은 제1장 총론(전망, 국가목표, 국방정책의 방향, 국방정책 중점 요약)과 제2장 국방부 목표 및 방침으로 구성되었다.

267) 국가목표는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에 처음 제시되어 있으나 언제 설정되었는지 그 근거가 없으며, 그 후 1970년 안전보장회의 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서』 작성 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설정된 후 1972년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1973년 2월 16일 부분 수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68) 국방부,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국방부 행정자료실, 1966), p.6.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견지하며, 국토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한다. 셋째, 장비급여의 개선, 군 인사관리의 적정 및 민주·반공·군인정신의 함양으로 군의 기본자세 확립과 안정을 기한다. 넷째, 군사조직의 정비·후방지원체제의 개선 등으로 국군의 자주 발전책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다섯째, 국방관리를 효율화하여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국토건설 및 대민사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국가기본시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기본시책」으로는 베트남 군사지원을 비롯한 국군병력 및 장비의 증강과 한미 군사외교를 통한 대한원조의 추가획득,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 그리고 미국의 상호방위 책임의 재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시책의 기초는 1969년까지 지속되었다.

1968년 이후 격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도발이 계기가 되어 대두하게 된 국방력 강화문제가 1969년에 들어와서 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함께 향토예비군의 무장실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 의한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해군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직후인 1968년 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전선(慶全線) 개통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자주국방태세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²⁶⁹⁾ ①종래의 유엔 중심의 국방태세에서 자주적 국방태세로 전환하고, ②향토예비군 250만 명을 무장화하며, ③무기생산공장을 연내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의 유엔군 중심의 의존적 국방에서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개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출발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존슨 미 대통령은 박대통령에게 포터 주한 미 대사를 통한 친서에서 한국 측의 요구인 확고한 방위보장에 대한 군사원조 증가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한국 측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같은 해 2월 11일 미 대통령 특사로 밴스 국무장관을 파견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과 군사원조의 증가 그리고 작전권 이양 및 판문점 비밀회담 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한미 양국은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침략이 계속 된다면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즉시 결정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경우, 언제나 즉각적인 협의를 한다는 양국 간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주요 내용은 매년 연례적으로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며, 한국의 계속적인 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예비군에 대한 경무기 공급 등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6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66.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69년도 국방정책 기본시책은 자주적인 국방체제를 확립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자유우방과의 대공 공동방위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산침략을 단호히 분쇄하고 실지를 회복하여 국토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었다.²⁷⁰⁾ 1969년도의 국방정책 기본시책의 특징은 그동안 정부시책으로 추진돼 오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국력의 신장으로 국방정책도 대미의존 일변도에서 자주국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²⁷¹⁾

제 5 절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

1. 박정희 정부(1970. 1.~1979. 12.)

가. 국내외 정세 및 자주국방 강화 추진 배경

1969년 7월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에 이어 1970년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 방침을 공식 통보하고 이어서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하게 되자 정부와 국민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재정 능력과 자주국방 기반체제 미비로 자주국방정책 추진이 제한되었으나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에 대한 선행조치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수립된 「한국군현대화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1970년 들어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국방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 채 ‘선경제개발 후자주국방’을 추진하던 종래의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바꿔 ‘자주국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게 되었고,²⁷²⁾ 정책의 핵심은 국내외적인 정세 하에서 국방의 자립적 기반을 완성하여 북한의 침략기도를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⁷³⁾

27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37. 정부가 설정한 『1969년도 국방 기본시책』의 목표는 첫째,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며 군 경계태세의 완벽을 기하여 적의 침입을 분쇄한다. 둘째, 장병의 정신무장과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셋째, 장비를 현대화하고 군사시설의 요새화와 이의 보강을 촉진한다. 넷째, 잠재전력을 배양한다. 다섯째, 군사력 증강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여섯째, 자유우방과의 군사유대를 공고히 하고 베트남전을 계속 지원한다. 일곱째, 국가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

271)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37-138.

272)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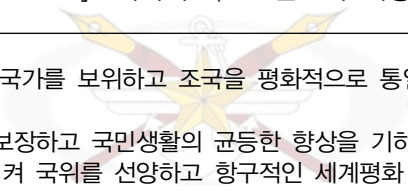
273) 국방부, 『국방백서 1968』(서울: 국방부, 1968), p.136.

그리하여 국방부는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를 공식화하여 이를 기조로 삼아 자주국방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추진하였다.

나. 국가목표 개정과 국방목표 신설

「국가목표」 개정 앞의 제3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존 「국가목표」는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을 수립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된 바가 있으나 그 제정 근거가 불확실하였다.²⁷⁴⁾ 이 국가목표는 부분 개정되어 『1970년도 국방기본시책』에 반영되었으며, 1970년 국가안보회의의 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서』를 발간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었다.²⁷⁵⁾ 그 후 「국가목표」는 1973년 2월 16일 제23회 국무회의 의결(의안 번호 제367호)을 통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부분 개정되었으며, 이후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²⁷⁶⁾ ([표 3-7] 참조)

[표 3-7] 국가목표(1973년 2차 개정)

- 
1.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구적 독립을 보전한다.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3.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 유지에 이바지한다.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p.195.

국가목표는 국가가 제반 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본적 가치로서 「헌법 전문(憲法 前文)」에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지와 국가행동 지침이 잘 나타나 있다.²⁷⁷⁾ 따라서 국가목표는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 초석이 되며, 또한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274) 국방부 행정자료실,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1966).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은 제1장 총론(전망, 국가목표, 국방정책의 방향, 국방정책 중점 요약)과 제2장 국방부 목표 및 방침으로 구성되었다.

275) 국방부, 「1970 국방기본시책」, p.3.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서』에 제시된 1차 개정 「국가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토를 통일하고 영구적 독립을 보전한다.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3. 국제적 위신을 확립하여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276)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95.

277)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3』(서울: 국방부, 1992), p.16.

「국방목표」 제정 1970년대 초반까지 국방부는 일관된 국방목표 설정 없이 ‘연도별 국방부 기본시책’에 따라 시책을 설정해 왔었다. 그러나 자주국방이 절실해지면서 국가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군의 베트남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선행조치로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한국군현대화 5개년계획(1971~1975)」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2년 12월 29일 「국방목표」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이 국방목표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의 역할과 국가보위를 위한 군사력의 운용개념, 그리고 전·평시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밝힘으로써 국방정책방향과 군사전략목표 설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때 설정된 국방목표는 [표 3-8]과 같다.²⁷⁸⁾

이와 같이 국방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국가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방기본정책 수행에 대한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표 3-8] 국 방 목 표

1. 국방력을 정비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한다.
2.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한다.
3.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한다.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pp.195~196.

다. 국방 기본시책

자주국방 강화 대체적으로 1970년대 「국방기본시책」은 국가목표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주국방 달성에 목표를 두고 각종 체제 개혁과 강인한 정신무장, 군의 과학화 및 정예화를 기하기 위해 방위산업, 전력증강, 예비군의 전력화, 정신전력 강화 등의 정책이 중점 추진되었다.

1970년과 1971년에 ‘자주국방’은 국방시책의 기초가 되었고, 1972년에도 총력안보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강조되었다. 1971년 말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총력안보의 개념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안보태세가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로서는 국가 경제가 개발단계에 있어서 자주국방태세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비용의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가 관건이었다.

27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95~196.

국방부는 1972년에 제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73년 국방기본시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정책 구현을 위해서 ①각종제도를 개혁하고, 강인한 정신무장과 군의 과학화를 통해 군의 정예화를 기하며, ②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하고, ③「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조 위에서 자유우방과의 군사협력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 1970년대 후반에는 자주국방 강화뿐만 아니라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큰 진전이 있었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한미 연합지휘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창설하였다.

한미군사위원회는 1978년 7월 한미안보협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이는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반도 방위문제를 관장하는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실무적인 최고 군령기구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8년 7월 28일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와 지휘관계를 규정한 「전략지시 제1호」가 하달되었고, 한미 간에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같은 해 11월 7일 창설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한국방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양국의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한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였다.

2. 전두환 정부(1980. 1.~1988. 2.)

가. 국방목표 개정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1970년대에 형성된 자주국방정책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되었다. 기간 중 국방정책의 핵심은 ‘미국과의 집단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한 억제전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전력증강사업을 통한 군의 현대화’였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유지된 것은 1980년대의 국제정세는 전반기 신냉전시대에서 후반기 탈냉전시대로 변화하였으나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틀은 유사하더라도 국내의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

국방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발전적 변화가 있었다. 우선적으로 국방정책의 지표가 되는 「국방목표」를 개정했다. 1972년 12월 29일에 최초로 설정된 국방목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 1980년대에 들어서 개정된 국방목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군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방 분야의 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 28일 국방부 정책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목표를 [표 3-9]와 같이 제1차로 개정하였다.

[표 3-9] 국방목표(제1차 개정)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pp.195-196.

수정된 국방목표에는 국가이념과 국가이익의 보호 및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군사력의 역할(억제와 방위),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 부여, 국방정책의 목표와 목표달성 수단과의 구분이 고려요소로서 포함되었다. 국방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군의 역할과 국가보위를 위한 군사력의 적극적인 운영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역할과 군사력의 평시 운영개념인 억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사력 운용의 정당성을 밝힌 것이다.

셋째,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전시와 평시의 군사력 역할과 군사력 운용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주변전략과 정세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²⁷⁹⁾

최초로 설정된 국방목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망라하여 전·평시 군사전략 목표 설정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나. 국방정책 기본방향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980년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은 대체로 첫째, 군사대비태세

27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45.

의 완비, 둘째,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셋째,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유지, 넷째, 총력방위태세의 강화 다섯째, 정부시책의 적극 추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주국방태세와 한미연합방위체제, 그리고 정부시책 적극 추진 분야는 내용 면에서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²⁸⁰⁾

먼저 자주국방태세 확립 면에서 보면,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적정 군사력 건설과 더불어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전투력을 향상하고 동시에 국방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독자적인 대북한 우위의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력증강사업인 제2차 울곡사업이 제1차 사업의 기반 위에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사업과는 달리 고정된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추진 중에 발생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이 가능한 연동계획으로 진행하면서 연구개발의 환경과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전력증강 사업을 통해 국군을 현대화하면서 국방정책의 운용과 군사력의 효율적인 건설 및 유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기법인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이를 조기에 시행함과 동시에, 미국의 군원중단에 따라 종래의 미국식 병과 종합관리체제를 3군 공통품목의 통합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자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면에서 보면, 첫째, 한미군사위원회회의를 활성화하였다. 연합방위 전력증강을 위한 한미 간의 공동노력과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방안 등 정책차원의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 기간 중에는 주도면밀한 한미연합 군사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양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둘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부여된 임무에 부합되는 연합군사력의 소요 및 기타 기능에 관하여 군사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작전통제부대의 합동 및 연합연습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합정보활동에 협조하고 「작전통제부대 목록」의 발전과 장비의 현대화 및 지원을 건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⁸¹⁾

마지막으로 정부시책 적극 추진 면에서 보면,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기술인력의 양성은 물론, 국민의 군대로서 대민지원, 도로 확·포장공사 참여, 저축장려, 군 새마을 운동, 헌혈, 재해대책 지원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군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며, 특히

28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46.

281)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77-278.

국가대사인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변모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문턱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노태우 정부(1988. 2.~1993. 2.)

가. 제2의 창군을 위한 국방정책 기본방향

제6공화국 탄생과 함께 출범한 노태우 정부 국방부는 민족자존과 민주화합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민족자존 시대에 대비한 국방의 자주화에 관한 문제,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위상 정립의 문제 그리고 국방전담집단으로서 전문적인 군사능력의 확보에 관한 문제 등에 직면하여 진일보한 발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제2의 창군'을 표명했다.

노태우 정부 전반기에는 당시 군이 추진하고자 했던 '제2의 창군'이란 창군 41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철저한 자기성찰과 혁신의 자세로 긍정적인 요소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제도와 규정 그리고 관행을 개선하여 민족자존과 민주화합의 시대정신에 부응,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당면한 국토방위는 물론 민족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2의 창군' 의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군은 자주국방을 기조로 '국방의 자주화', '군대의 선진화', '군사의 과학화'를 「국방 3대 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여기서 '국방의 자주화'는 장기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민족자존의식에 합당한 자주적인 국방을 이룩하는 길이었다. 또한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투철한 자위정신을 함양하고 군 지휘구조를 발전시키며, 국방력의 지속적인 건설을 통해서 독자적인 대북우위의 대응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완성시키는 길이이도 했다.²⁸²⁾

노태우 정부 전반기 「국방정책 기본방향」은 북한의 대남무력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민족자존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①군사대비태세의 완비, ②자주국방태세의 확립, ③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그리고 ④국가총력방위태세 강화로 설정하고

282)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pp.20-25.

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²⁸³⁾

특히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군구조의 발전과 전력구조의 개선, 그리고 전략, 작전 및 전술교리 등 무형전력을 포함한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독자적인 대북한 우위의 군사력 건설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했다. 지속적인 자주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가용 국방예산의 확보가 절실히 요망되었으며, 확보된 예산의 전력증강 투자비율을 향상하는 한편, 전략기획 및 계획, 방위산업 및 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신데탕트 시대를 맞아 미국 측은 동맹국과의 역할 분담, 특히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 요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주둔군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민족자존을 지향하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많은 방위비의 분담을 적극 수용하게 하고 나아가서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자주국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안보협의를 통해서 방위비 분담 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한미 간의 동반자적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나. 전환기 국방과제 해결을 위한 국방정책 기본방향

전환기 국방과제 1991년도에 들어 노태우 정부는 전환기 안보상황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및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을 ‘국방정책 기본방향’으로 재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전환기 국방과제’를 설정하고 국방정책을 조정 시행하였다.

전환기 국방과제는 ①안보상황의 이중성을 고려한 국방태세 확립, ②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에 따른 국방태세의 근원적 재정립, ③남북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방태세 기획, ④새로운 민군관계 발전 및 군의 위상 정립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²⁸⁴⁾

첫째, 안보상황의 이중성문제를 살펴보면, 기간 중 우리 군이 당면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국내·외의 안보환경이 상반되는 이중적 흐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공산주의 종말에 따른 전 세계적인 탈냉전의 추세, 북방정책의 성과에 의한 중·소의 대북 군사지원 제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및 외교적 고립, 그리고 한국의 국력 및 국제적 위상의 현저한 상승과 정치적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했다. 그리

283)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pp.25-34.

284)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5년』(서울: 공보처, 1992), pp.539-541.

고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까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방비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위기의식도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화해’와 ‘대비’의 이중적 상황 논리가 상충하는 여건하에서 국가보위의 최후보루인 군의 정책적 선택은 현존 위협에 대한 확고부동한 국방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평화 지향적인 미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비해야 했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문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I :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I)’에 따라 주한미군을 3단계에 걸쳐 감축·철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1단계(1990~1992)로 당시의 유엔군사령부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 지상군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지상군 5,000명, 공군 2,000명 등 총 7,000명을 비전투요원 위주로 철수시키며, 2단계(1993~1995)에는 1단계 말에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전력증강 성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주한미군 부대를 재편성하여 6,500명을 철수시키며, 3단계(1996~)에는 1·2단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국군 주도의 방어태세가 갖추어질 경우, 최소화된 필요 인원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실제 1991~92년에 지상군 5,000명과 공군 1,987명 등 총 6,987명이 철수했으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1년 11월 제2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1993년부터 시행될 제2단계 감축계획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철수의 가시화는 궁극적으로 제반 국방분야의 ‘한국화’라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셋째, 남북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기획하는 것이다. 기간 중 안보환경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세계적인 탈 이데올로기 흐름이 동북아의 냉전 고도인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남북 간의 긴장완화 및 협력적 공존구도로 펼쳐지며, 21세기에는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확산과 이에 따른 남북대화의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군사적 대치관계를 어떻게 완화, 해소시키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기회적 상황의 전개는 자연히 ‘군비통제’ 분야를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시켰다. 군비통제는 남북한이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쌍방의 군사력 수준과 배치태세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므로, 자연히 남북 당사자는 물론, 주변국과의 군사관계, 주한미군과 전술핵, 정전협정의 대체 등 우리 안보의 근본적인 문제와 깊숙이 맞물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었다.

넷째, 새로운 민군관계 발전 및 군의 위상 정립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부터 과거 군의 정치 개입,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해소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군은 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의미가 없고, 민의 후원 없이는 존립할 수도 없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집단이므로, 민주 시민사회와의 건전한 관계 형성은 군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필히 성취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국방정책 기본방향 이에 대한 노태우 정부 후반기 국방부는 ‘국방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전환기 국방과제’에 초점을 두고 제반 국방정책을 발전시켰다. 즉, 전환기 안보상황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및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중적 접근에 의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을 강조한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는 바, ①우선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총합안보태세를 강화하고, ②‘힘’에 의한 전쟁억제를 기조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비통제 방책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평화공존 및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를 발전시키며, ③사회적 전환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은 물론 이를 통해서 군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발전’은 전환기 국방과제 해결에서 새로우며 최우선시되는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 중 발생한 전략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21세기를 지향한 ‘자주국방’, ‘한국방위의 한국화’ 노력은 피할 수 없는 국방 최대의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규모만 잔류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은 정치 및 군사적 대국화를 지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표출하였으며, 남북한의 대치구조도 협력적 공존구조를 거쳐 통일구조로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는 바, 이는 우리의 국방태세를 군사전략, 군구조, 지휘체계, 군사력, 무기체계, 인력구조, 운영체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근본부터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는 최소한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0년 후의 위협에 대응할 무기체계와 국방인력은 바로 현시점에서의 결정과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 6 절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1.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추진(1993. 2.~2008. 2.)

가. 김영삼 정부(1993. 2.~1998. 2.)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좌표 국방부는 1990년대의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추세를 고려해 볼 때, 이 시기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상당 기간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지속될 것이나 21세기에는 새로운 전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따라서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의 좌표’는 ‘자주국방만이 진정한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제로 삼았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위협 및 급변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①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②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미래의 전략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총체적인 안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²⁸⁵⁾

또한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정부주도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과거 ‘성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군 내부에까지 비화되어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해지던 불편 사항들이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방개혁 노력은 대내적으로 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신뢰를 증진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선진 민주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희망찬 미래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개막을 불과 몇 년 앞둔 당시 시점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

국방목표 2차 개정 국방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 등 전략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위협의 범위 및 성격이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1년 11월 28일 1차 개정한 국방목표를 1994년 3월 10일 2차로 개정하였다.

국방목표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안보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위협의 범

285)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서울: 국방부, 1995), pp.21-23.

위 및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산권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등 역사적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력양성, 무기체계 획득 등 통일한국군에 적합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군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미래의 국방설계는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2차 개정(1994. 3. 10.) 국방목표는 [표 3-10]과 같다.

[표 3-10] 국방목표(1994. 3. 10. 제2차 개정)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p.302.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이전에는 단순히 군사적 무력침공만을 국가보위의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탈냉전시대를 맞아 안보개념이 군사위주의 개념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보개념으로 변화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대상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었다. ‘적’을 ‘외부’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주적(主敵) 개념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 국가안보를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 북한을 ‘적’으로 한다는 명시적 표현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을 바꾸자, ‘주적’ 표현과 관련한 국내외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백서 1995』 이후부터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였다.²⁸⁶⁾

둘째,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를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역의 안정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참여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286) 국방부, 『국방부사』 제5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144.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2000년 6월 15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적대대처가 약화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된 시점에서 국방부는 2000년 12월 발간된 『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적 개념 문제는 남북한 간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국방정책 기본방향 김영삼 정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은 ①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②대내외 군사관계 발전, ③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발전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새롭고 시급한 국방정책은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력에 걸맞은 중·장기 차원의 국방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였다. 즉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전략과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방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의 토대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대북 군사관계 발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남북 군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포기를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군비통제정책을 발전시켰다.

둘째, 대외 군사관계 발전이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기본축으로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미 안보협력 구도를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동안보이익의 창출과 안보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인접 국가들과의 군사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화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군사교류 협력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정예 군사력 정비이다. 미래 전쟁양상의 과학화 및 첨단화 추세와 한반도 전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군사력의 전반적 재정비를 요구하였다. 군은 현재의 병력위주 전력구조를 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 핵심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효율적 자원관리 정책 발전이다. 인력 분야에서는 총체적 국방인력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정원·인력운영·예산편성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상비병력의 예비전력 연계 체제도 강화하였다.

다섯째, ‘4대 국방현대화 과제’ 추진이다. 우리 군은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2년 7월부터 ①인력관리 현대화, ②정보 현대화, ③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후 국방정보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④C4I²⁸⁷⁾ 현대화를 추가하여 1995년부터 ‘4대 국방현대화 과제’를 추진하였다.

287)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

나. 김대중 정부(1998. 2.~2003. 2.)

국방발전 기본개념과 중·장기 목표 제시 국방부는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군의 임무와 역할, 국방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정책 발전의 기본개념’과 정책목표 및 정책기조를 설정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중·장기 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1998년 『국방기본정책서(1998~2012)』 초안을 작성하여 1999년 2월 산하 연구기관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방의 청사진으로서 중장기 국방기획 및 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국방기본정책서』를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30일 창군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 발전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북한의 위협에 중점 대비하되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도 동시에 대비하고 국력에 합당하게 능력에 기초한 적정 국방력을 구축하여 국가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며, 대외적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쌍무적·다자적인 전략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국방의 최우선적인 과제였지만, 이와 함께 장차 예상되는 미래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 등 새로운 도전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국방을 설계해 나가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과 미래 국방을 위한 국방태세의 정비에 10~20년이 걸리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방발전 기본개념’을 수립하였다.

첫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국방정책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즉 미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의 틀을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개념에 의해 건설된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²⁸⁸⁾

둘째, 능력에 기초한(Capability-Based) 국방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국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하여 국가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이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특정 위협 시나리오에 기초한 국방발전을 추구할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이 제한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국방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대외적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전략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완전무결한 독자적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대외 군사관계를 활용하여 국방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상의 ‘국방발전 기본개념’을 토대로 군이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방

288)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2), p.25.

발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방발전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여 달성해야 할 '군의 모습'이며, 이는 국방의 모든 조직과 체계, 수단과 방법, 제도와 절차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방발전 목표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서 군은 국방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2003년)까지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 기간에 축적된 기반을 발판으로 중기 이후부터 한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국방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방부의 중·장기 국방발전 목표는 [도표 3-1]과 같다.

[도표 3-1] 중·장기 국방발전 목표

중 기 목 표	장 기 목 표
• 사기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 국군 • 자긍심 넘치고 사명감 투철한 전문직업군 •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군대 •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	• 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한 소수 정예의 상비군 • 첨단 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 •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 ※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발전

국방정책 기초 국방부는 국방목표를 달성하고 군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국방발전 기본개념'과 '중·장기 국방발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기간 국방정책을 다중적이고 신축성·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 기초」를 ①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 ②선진 정예국방을 건설, ③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 ④한미 동맹관계 및 주변국 안보협력 강화, ⑤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등이었다.

여기서 새롭게 중요시되었던 기초는 '선진 정예국방 건설'이었다. 이는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정보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 국가위상에 부합되는 군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기조였다. 방위태세의 자주화를 위해 자주적 군사전략 수립 및 정예 군사력 건설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인력의 정예화는 소수정예의 상비군 구조로의 전환, 동원전력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이루어 내고자 했다. 무기체계의 과학화는 국내 무기생산력 및 군사과학기술 향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으며, 운영체계의 합리화는 국방운영 조직 및 제도, 절차 등을 개선하여 실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방의 정보화는 실시간 정보유통 보장 및 업무수행의 과학화, 합리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하고자 했다.

다. 노무현 정부(2003. 2.~2008. 2.)

평화변영정책과 자주국방 2003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변영정책’을 천명하였다. 평화변영정책은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의 진전을 병행 추구하는 등 평화와 변영의 균형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변영 추구를 ‘평화변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①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상호신뢰와 호혜주의, ③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등의 4대 추진원칙 아래,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적으로는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며, 미·북과 일·북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변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룬다는 추진전략을 견지하였다.

평화변영정책에서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우선 대북억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동안 우리 국방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하는 국가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국과 주한미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으며, 일부 국민들 사이에도 그러한 심리가 형성되어 안보·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확고하게 지켜내고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한·미동맹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자주적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미동맹과 대 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으로 병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 군사력에서 대북 열세를 극복하고, 군 운영체제를 효율화하며, 미래 동맹의 변화·발전에 대비하여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중요사안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자주국방은 다음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대북억제 가능한 전력을 구축하고, 둘째, 국방개혁으로 군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며, 셋째, 이를 기반으로 연합지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자주국방은 물질적 요소도 갖추어야 하지만 정신전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군은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자주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발전하고자 했다.

국방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의지와 국방지침을 구현하고 정부의 ‘평화변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자주적 선진국방’이란 자위적 방위역량과 국방태세를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 동맹관계와 대외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닌 선진적 운영체제를 갖춘 국방의 총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물론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④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으로 설정하여 군의 역량을 집중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 중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동맹이나 대외 군사협력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자주적인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비롯된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으로서 우리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주한미군 재조정, 동맹비전 공동연구와 지휘관계 협의, 연합군사능력 발전 등 최근의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아울러,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 잠재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적 기술능력 확보와 방위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기평가와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제한된 국방재원 범위에서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관리체제로 혁신하기 위해 국방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이명박·박근혜 정부 : 정예 선진국방 추진(2008. 2.~2017. 5.)

가. 이명박 정부(2008. 2.~2013. 2.)

북한 대남강경정책과 군사도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내세워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해 왔다. 2008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후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체제를 결속하는 데 주력했으며,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체제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874호」 채택과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벼랑 끝 전술’²⁸⁹⁾을 구사하면서 체제 유지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대남강경정책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08년 초반부터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 측 당국자의 일방적인 추방(2008. 3. 27.),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2008. 11. 12.),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차단(2008. 12. 1.)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9년 상반기까지 전면대결태세 선언(2009. 1. 17.), 정치·군사합의 무효화 선언(2009. 1. 30.), 서울불바다 발언(2010. 6. 12.) 등 대남 위협과 강경 조치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2009년 하반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대남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대청해전(2009. 11. 10.), 서해 북방한계선(NLL) 향해금지구역 설정 및 해안포사격(2010. 1.), 금강산 남측 자산 동결(2010. 1. 8.) 등의 도발과 강경조치를 자행하였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약 2.5km의 우리 영해에서 초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켰다.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한 이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고, 7월 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우리의 대북조치에 대해 전면전, 3차 핵실험을 운운하면서 위협하였다.²⁹⁰⁾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의 해병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로 170여 발의 포격을 자행하였고,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도발로 해병 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의

289)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과정에서 취해온 일종의 극단적인 협박전술이다.

290)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서울: 대한민국 정부, 2011), p.12, p.141 ;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p.256-262.

만행을 규탄하였다.²⁹¹⁾

이같은 북한의 연이은 고강도 국지도발은 한국의 안보가 일대 위기에 직면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북한의 주요 도발 목적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성공을 배경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해 정치·경제적 양보를 강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며,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 데 있다는 분석이 가능했다.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초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비전’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정예화’는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완전성이 구비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구현이 가능한 첨단전력이 확보된 상태를 말하며, ‘선진화’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 가운데, 법과 규정 및 지휘체계 내에서 운용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병영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강군’은 전사적 기풍으로 충일한 군대,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강한 훈련으로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말한다.²⁹²⁾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8대 ‘국방정책 기초’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였다.²⁹³⁾ 8대 ‘국방정책 기초’는 ①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②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③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④선진 군사역량 구축, ⑤정예 국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⑥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⑦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육성, ⑧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등이었다.

3대 중점 추진정책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그리고 2011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 대한 포격도발,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직접적이며 무모한 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①적의 도발에 대비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②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 ③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3대 중점 추진정책’으로 선정했다.²⁹⁴⁾

첫 번째 정책은 적의 도발에 대비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였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뿐만

291)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p.266-267.

292) 국방부, 『국방부사(2010~20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84.

293)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p.34-37.

294) 국방부, 『국방부사(2010~20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85-89.

아니라 도발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세력까지 강력하게 타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서북도서와 접적지역에 대한 정밀감시·표적탐지·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함은 물론, 대공·대유도탄 방어능력, 체공·대기전력 등 ‘즉각 응징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1년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고, K-9포상·헬기 격납고, 차량 대피호 등 방어진지를 요새화했다. 아울러 민간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소를 보강하는 등 서북도서 지역의 생존성 보장을 강화하였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2013. 3. 22. 유효화)을 발전시켰다.

두 번째 정책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이었다. 우리 군은 전·평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①전투형 군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투임무 중심으로 부대를 운영하였고, 행정적인 업무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했다. ②전투형 군대 육성의 핵심인 전문성과 합동성을 겸비한 유능한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개선하였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야전이 연계된 교육체제로 개선하고, 전장상황에 부합하는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였다. 합동성 강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2011. 12. 1.)하였고, 육·해·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③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해 개인별로 즉각적인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전사를 만들고 부대별로 야전성을 배양할 수 있는 부대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④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켰고, 간부 중심의 적정 인력구조를 유지하여 직업안정성 제고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세 번째 정책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이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전투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반 복무여건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체감 복지향상, 병영시설 현대화, 의료체계 혁신, 병영문화 선진화 및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①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기초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군인의 보수체계를 계급·임무·근무환경 등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해 나갔으며,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제도를 시행하였다. ②국민 생활 및 의식 수준의 향상 등 사회발전 추세에 부응하고자 노후·협소한 병영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과 병영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장병들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였다. ③군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질병에 대한 사

전 예방체계 강화, 장병들의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진료 접근성 향상과 사단급 이하 의료역량 확충, 민간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④싸우면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의 근원적 기반이 되는 병영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각 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부대 단위로 의사소통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악습 척결 ‘봄’을 조성하였다.

나. 박근혜 정부(2013. 2.~2017. 5.)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초 박근혜 정부 국방부도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을 ‘7대 국방정책 기초’로 선정하였다.²⁹⁵⁾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초’,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였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었다.²⁹⁶⁾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국방운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4대 중점’으로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여기서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이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295)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34-35.

296)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36-37.

었다. 이를 위해 생산적인 군 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해 나갔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해 나갔다.

3. 문재인 정부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추진(2017. 5.~현재)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비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안보분야 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국제사회 공조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의 포괄적인 추진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유능한 안보’는 우수한 첨단전력, 실전적인 교육훈련 및 강인한 정신력 등을 토대로 우리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여, ‘강한 힘’으로 대내외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튼튼한 국방’

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적극 대응하여 싸우면 이기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⁷⁾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국방정책 기조’로는 ①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⑥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 등 ‘6대 기조’로 선정하였다.²⁹⁸⁾

여기서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이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방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파병 성과의 확대·발전을 통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전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이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97)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34.

298)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35.

제 Ⅱ 부

전력증강과 국방개혁

제4장 전력증강 추진

제5장 국방개혁 추진

제Ⅱ부 전력증강과 국방개혁

제4장 전력증강 추진

‘전력증강’이란 일반적으로 군사력 건설에 따른 전투력 향상을 뜻하며, 본질적으로는 유·무형 전력을 포괄하나 대체로 유형전력인 무기체계와 신형 장비의 개발과 운영 등을 가리킨다.¹⁾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와 국군 창설 이후 베트남전 참전 전까지의 시기에는 국가재정과 국방비의 부족으로 신형무기 및 장비의 도입과 운영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적에 비해 유형전력의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은 피나는 교육 훈련과 정신력, 지략 등 무형전력을 강화하여 꾸준히 전투력을 향상시키면서 상황에 맞도록 전투력을 운영하였다.

여기서는 병력, 부대, 무기체계, 예비전력, 정신전력 등 유·무형전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난 국방 100년의 역사를 대한민국임시정부기, 국군창설기, 6·25전쟁 및 전후정비기, 국방체제 정립기, 자주국방 강화기, 국방태세 발전기 등 6개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세와 전력증강의 특징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제1절 대한민국임시정부기(1919. 4.~1945. 8.)

1.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가. 임시정부로 통합된 만주지역 독립군부대

임시정부는 1920년 2월 「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를 마련해 만주 및 연해주 일대의 독립군 부대를 서간도 군구(하얼빈 이남, 길림성 부근, 봉천성 전부), 북간도 군구(연길부 일대) 그리고 강동 군구(러시아령 일대) 등 3개 군구로 구분하며, 각 군구에는 지방사령부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군무부 예하 독립군으로 편성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²⁾ 그러나 각 지역

1) 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서울: 국방부, 2019), pp.846-847.

2)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서울: 천풍인쇄, 1976), p.139-141.

에 지방군구사령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독립전쟁의 시기에 대한 입장과 군자금 확보 문제 등 난제가 많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1920년 9월 북경에서 박용만, 신채호, 신숙 등이 군사통일촉성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지휘권 행사문제로 끝내 결정이 유보되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북간도 왕청현 서대파지역에 본부를 둔 ‘대한정의단’(大韓正義團, 대표 서일)은 북로군정서로 개칭하고 북간도 군구 지방사령부가 되었으며, 서간도 안동현에 본부를 둔 ‘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영장 오동진, 참모 부장 이탁)은 서간도 군구 지방사령부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북간도의 북로군정서의 전력증강 과정을 살펴보면, 3·1운동 전부터 왕청현 서대파 지역에는 서일(徐一)등이 대종교(大宗教) 계통의 ‘중광단(重光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청년교육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3·1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3월 24일 중광단의 조직을 대일 무력항쟁을 위한 군사조직으로 전환하면서 ‘대한정의단’으로 개편하였으며, 병력 모집과 훈련에 착수하였다. 대한정의단은 8월에 구한국 무관학교 출신으로 서울 오성학교 교감을 역임한 김좌진이 입단함으로써 조직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김좌진 책임하에 군정부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연해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등 군대의 조직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군정서 총재 서일은 직접 연해주로 출장을 가서 비밀리에 무기를 구매하여 기지로 반입하기도 하였다.⁴⁾ 이 해 12월 임시정부와 협의가 이뤄져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총재 서일, 총사령관 김좌진)로 개칭하고 북간도 지방군구사령부가 되었다. 북로군정서는 1개 사단 규모의 독립군을 양성하여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한다는 원대한 포부아래 사관연성소(교장은 김좌진이 겸무)를 설치하고 400여 명의 생도를 모집하여 교육시켰다. 그리하여 북로군정서군은 사관연성소 생도 제1회 졸업 시기인 1920년 9월 현재 700여 명의 병력이 소총 500여 정과 기관총 등 화기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다.⁵⁾ 이후 북로군정서에 소속되었던 동도독립군서(대한독립군, 대한민국민군, 대한군무도독부군 연합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동도독립군서와 동도군정서(전 대한군정서)는 청산리 대첩에서 각각 연합항전을 전개하여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으니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 노력의 성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광복군총영’은 1920년 7월 결성되었다. 대한광복군총영은 5월 이후 임시정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104.

4) 당시 연해주에는 러시아 혁명 이후 적군(赤軍, 공산혁명군 과격파)과 백군(白軍)이 내전을 치르고 있었고, 일본군이 그 틈을 이용하여 연해주를 확보하고 한인무장독립세력을 제거하려고 대병력을 출병시켜 놓고 있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서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연해주를 거쳐 본국으로 귀환한 체코군이 많은 무기를 연해주 지역에 남겨 놓고 떠남에 따라 무기 구입이 쉬웠다.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56-58.

부의 직속기관이 되어 독립전쟁을 수행하였으며, 대한광복군총영이 출범한 1920년 한 해 동안 일본군경과 78회의 교전을 했고, 일제 주재소 56개소를 습격하였으며, 면사무소 및 영림창 소각 20개소, 일제 경찰 사살 95명 등 큰 전과를 올렸다.⁶⁾

그러나 이러한 통합노력마저도 1920년 10월 이후 일본군의 ‘간도침략’과 ‘경신침변’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임시정부의 지방군구사령부로 통합된 서간도 군구 대한광복군총영의 조직과 북간도 군구 북로사령부의 편성은 [도표 4-1]과 같다.

[도표 4-1] 대한광복군총영 조직도와 북로사령부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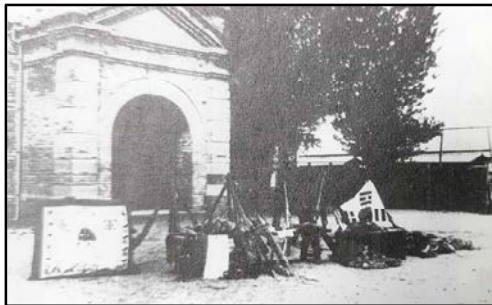
서간도 군구 대한광복군총영	북간도 군구 북로사령부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대한광복군총영:총영장 대한광복군참리부:참리부장 비서 협찬 군사부 참의부 재정부 경리국 소집국 소집국 군영 별동대 참사	■ 사령관 : 채영 ■ 참모장 : 조옥(조성환) ■ 제1연대장 : 홍범도 • 제1대대장 : 안무 • 제2대대장 : 최성삼 • 제3대대장 : 최경천 ■ 제2연대장 : 김좌진 • 제1대대장 : 김규식 • 제2대대장 : 한경서 • 제3대대장 : 이춘범 ■ 제3연대장 : 최진동 • 제1대대장 : 허정옥 • 제2대대장 : 김일구 • 제3대대장 : 김소흥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p.104, 110.

독립군의 무기는 실로 다양하였다. 일반 군총으로는 러시아제 5연발총과 단발총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밖에도 미국제나 독일제, 심지어는 일제 총까지 섞여 있었다. 권총류로는 루가식을 비롯해 7연발·남부식 등이 사용되었다. 중무기로는 기관총과 속사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폭탄이라고 부르던 수류탄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제의 한 정보기록(1920. 8.)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독립군이 확보한 무기는 군총 3,300정, 탄약 19만 5,300발, 권총 730정, 수류탄 1,550개, 기관총 9정 등으로 추산되었다.⁷⁾ (〈사진 4-1, 4-2〉 참조)

6)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Ⅱ)』(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pp.50-51.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권』(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pp.193-



〈사진 4-1〉 청산리 전투에서 의군부가 사용한 태극기와 독립군기, 그리고 무기들

※ 출처: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p.202.



〈사진 4-2〉 홍범도부대가 사용한 수류탄과 탄환

※ 출처: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p.202.

나. 한인애국단 창설

일제가 일으킨 만주사변(1931. 9. 19. 발발)으로 말미암아 임시정부는 침체된 한국 독립운동을 활성화하고, ‘만보산사건’(1931. 7. 2.)⁸⁾으로 조성된 중국인의 반한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게 되었다. 일제의 중국 침략으로 높아진 중국인들의 반일 분위기와 일제에 의하여 조작된 한·중 간의 갈등 상황을 일변시켜 임시정부의 침체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대일 특무공작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그 임무와 책임을 김구에게 일임했다.⁹⁾

이렇게 하여 임시정부의 비밀결사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이 1931년 11월 결성되었다.¹⁰⁾ 창설 당시 조직원은 약 80여 명으로 안공근·엄항섭·손창도·백구파·김의한·김현구·김홍일·손두환·이덕주·유상근·이수봉·최홍식 등이 주요 단원이었고, 조직의 비밀유지를 위해 단장과 특무공작이 직결되는 체제였다.

이런 한인애국단의 조직적 성격은 『한인애국단 선언』에서 잘 드러난다. 즉 “우리가 허다

19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8(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p.213. 1920년 서로군정서의 경우, 청산리대첩 직전에 약 400명의 무기 운반대원을 중·러 국경의 삼차구(三岔口) 방면으로 파견해 총 1,600정의 총기를 반입하였다.

8) 1931년 7월 2일 중국 길림성 장춘현 만보산지역에서 일제가 벌일 술책으로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벌어진 유혈사태를 말한다. 일제의 술책을 통해 중국인들은 일제의 침략이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믿게 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9) 도진순 주해, 김구 저, 『백범일지』(서울: 돌베개, 1997), pp.326-327 ;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367.

10)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366.

한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끝끝내 폭렬한 행동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사선을 쫓겨난 우리 한국 사람인지라. 이 길을 버리고는 또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이 성공되지 못하는 날까지는 이런 폭렬한 행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한국인의 폭렬한 행동은 민족독립을 위한 피치 못할 결과물이며, 이후 본격적인 폭렬한 행동이 전개될 것임을 선언했다.¹¹⁾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희생을 돌아보지 않는 폭렬한 행동'이란 1920년 3월 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에서 밝힌 14개 개전준비 사항 중 하나인 '작탄대(炸彈隊) 편성'과 관련이 있다.¹²⁾ '작탄대'란 목표로 하는 인원을 제거하고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폭탄을 투척하거나 총격을 가하는 특수임무부대를 뜻한다. 임시정부는 항일 독립전쟁을 위해 정규군부대뿐만 아니라 비정규군부대도 준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인애국단의 특공작전 제1호로서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원 이봉창은 일본의 수도 도쿄로 가서 일왕 쇼와(昭和)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수류탄의 성능이 좋지 못하여 일왕 폭살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으로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으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본 내각이 총사퇴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수통형 폭탄 1개를 투척하여 상해 파견 일본군총사령관, 일본해군 제3함대사령관, 일본군 제9사단장, 주중국 공사, 상해 총영사, 상해 거류민단장 등 군부 및 정부 수뇌 7명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혔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거사는 한인애국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윤봉길의 상해 거사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첫째, 윤봉길의 상해 의거는 일제의 만보산사건 조작으로 붕괴된 한국과 중국 양민족 간 연대를 다시 회복하고, 중국 영토안에서 독립운동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침체에서 부활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셋째, 군사적, 정치적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일본군이 중국 관내로의 확전을 단념하고 1932년 5월 5일 중국 측과 긴급히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이유는 윤봉길 거사로 인한 국제적 대일 압력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한국민족의 독립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국내외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이 매우 완강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¹³⁾

11) 엄항섭, 『屠倭實記(도왜실기)』(서울: 국제문화협회, 1946), pp.65-67.

12)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pp.107-111.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51-5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73.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에서 '개전 준비작업으로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의용병을 모집해 훈련하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작탄대(炸彈隊)를 편성하며, 비행기대(飛行機隊)를 설립'할 것을 설정했다.

13)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387-389.

다. 한인 비행가 양성소 설립

임시정부는 미래 독립전쟁에 공군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해 1920년 1월 육군 및 해군 비행대 편성을 시도했다. 특히 안창호는 군무부를 통해 미국에 가 있던 군무총장 노백린에게 비행대를 편성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노백린은 1920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월로우스에서 쌀 농장을 경영하던 김종림(金鍾林)등의 도움으로 폐교였던 키타 학교(the Quint School)를 비행장 부지로 임대받아 ‘한인비행가 양성소’를 설립하였다.¹⁴⁾ 비행학교 설립이 가능했던 이유는 3·1운동 이후 고무된 미국의 한인청년들 중에 비행술을 배우거나 미해군 비행학교에 입학했던 배경이 있었다.¹⁵⁾ 이 경험은 임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한 공군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다. 대한민국민회(大韓人國民會)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된 비행가 양성소는 무선통신 장비를 갖춘 비행기 3대와 교관 1명, 정비사 2명을 두고 비행술과 정비술을 훈련시켰다. 교관으로는 미 레드우드(Redwood) 비행학교 교관이 초빙되었다. 노백린이 상해로 떠난 후에는 김종림과 대한민국민회가 맡아 운영하였다. 그러나 1920년 11월 비행훈련비 마련 등 재정난으로 비행학교가 폐지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1923년 권기옥을 중국 운남 육군항공학교에 보내 비행사로 육성하였다. 권기옥은 여류비행사로 중국 군에서 10여 년 근무하며 실전감각을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 군벌段祺瑞(段祺瑞)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정항공학교에서 1등 비행사가 된 최용덕을 영입하여 비행대를 조직하도록 하였다.¹⁶⁾

2. 충청 임시정부 시기

가. 한국광복군 지대 편성

광복군의 상부조직을 구성한 후 임시정부는 장병 모집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령부를 산시성 시안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그곳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화북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그곳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이주해 있어 초모 및 선전활동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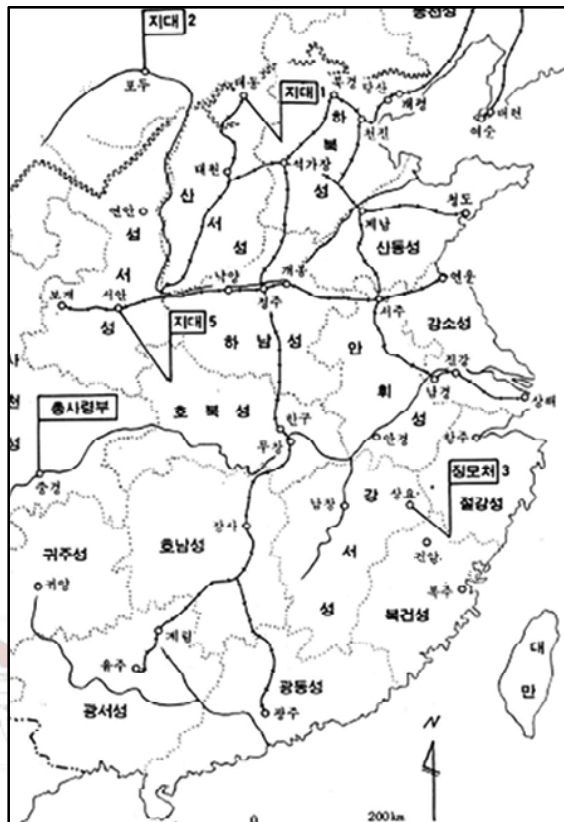
14) 주요한 편저, 『안도산전서』(증보판)(서울: 사단법인 홍사단 출판부, 1999), p.816. 안창호는 “비행대를 이용해야 인심을 격발케 하고 또는 장래 국내에 대폭발을 촉기하려 함이라”며 비행기 구입을 시도하였다.

15) 황민호·홍선표, 「한인비행가양성소의 개소와 운영」,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283.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91.

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시안으로 이전한 총사령부는 곧바로 예하 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다. 우선 충칭에서 총사령부를 따라 파견되어온 인원과 이미 이곳에서 초모활동을 벌이고 있던 군사특파단 단원을 중심으로 제1, 2, 3지대를 편성하고, 1941년 1월 시안에서 독자적으로 초모활동을 하고 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광복군 창설 3개월 만에 예하부대로서 4개의 지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지대의 편성은 병력이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의 인원으로 지대를 편성하고 향후 초모활동을 통해 지대의 규모를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었다.¹⁷⁾ 총사령부 창설 1년 만인 1941년 말에 광복군은 총 300여 명이었으며, 1945년 4월까지 광복군의 병력은 6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모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지도 4-1] 초기 광복군 지대 활동지역(1943~1945)



※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p.223.

이유는 만주지역과 달리 인적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 점령지에서 모병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¹⁸⁾ 초기 한국광복군 지대의 활동지역 지도는 [지도 4-1]과 같다.

광복군 제1지대는 지대장은 이준식, 간부로는 노태춘, 안춘생, 노복선, 조인제, 이석화, 김자동, 이건우, 이영여 등으로서 전원이 군사특파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중국의 군관학교를 거쳐 초급 장교 이상의 군복무 경력과 활동 경험을 가진 군사 간부들이었다. 지대장 이준식을 비롯한 9명이 제1지대의 창설요원이 되어 산시성 지역으로 진출하여 활동했다.

제2지대는 총사령부의 간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대장에 공진원(고운기), 간부에 나태섭(왕중양), 고시복(고일명), 지달수, 유해준, 이육해 등이었다. 이들은 총사령 이청천과

17)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2), pp.316-318.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독립군항쟁사』, 민족전란사 2(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261-262.

관련이 깊은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제2지대는 군무부로부터 초모활동의 임무를 부여받아 징모 제2분처를 겸임하여 1942년 2월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로 나가 활동했다.

제3지대는 제1·2지대와 같이 실제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다만 지대장만 임명하고 대원들은 없이 편제상으로만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제3지대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인원은 편성 당시의 제3지대 구성원이 아니라 1942년 3월 제3지대가 징모 제6분처로서 안후이성(安徽省) 푸양(阜陽)으로 떠날 때 구성된 인원이었다.

제5지대는 무정부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중심이 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 편성되었다. 전지공작대의 광복군 편입은 창설 초기 광복군이 거둔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 총사령부가 시안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지역에는 군사특파단과 전지공작대의 두 개의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1939년 11월 결성된 직후 시안으로 이동한 전지공작대원 16명은 중국군 제34집단군 내에 설치된 한국청년훈련반에 입교하여 3개월 과정의 군사훈련을 받고 중국군 소위로 임관하여 활동했다. 그들은 1940년 5월부터 초모활동을 벌였는데, 제34집단군 태항산 유격대 정훈부에 배속되어 태항산 능천에 거점을 마련하고 적 후방 공작에 투입되었다. 이들의 초모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어 6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을 초모했다. 초모된 인원들은 시안으로 후송되어 한국청년훈련반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리하여 처음 28명이던 전지공작대 인원은 1940년 말 약 100명으로 증가하였다. 제5지대가 편성됨으로써 광복군은 창설초기부터 4개 지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4개 지대로 출발한 광복군은 곧 이어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역으로의 이탈사건¹⁹⁾과 제5지대장 나월환의 암살사건이 있었다. 중국은 조선의용대 이탈사건을 계기로 김구와 김원봉을 통해 이뤄지던 두 개의 지원 창구를 김구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켰다. 중국군사위원회는 1942년 5월 총사령부에 부사령 편제를 증설하여 김원봉을 부사령에 임명하고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시켰다.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면서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무장 세력이 모두 광복군으로 통일되었다. 한편 제5지대장 나월환이 대원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직후 제5지대를 기존의 제1·2지대와 통합하고 새로운 제2지대로 편성하였으며, 총사령부 참모장 이범석을 지대장으로 임명했다.

19)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2), p.280. 1940년 3월부터 뤼양(洛陽)에 집결했던 조선의용대원들은 1941년 3월 중순부터 5월 하순에 걸쳐 충칭에 있던 본부 인원과 일부 공작원을 제외한 대원 80%가 황허(黃河)를 건너 화북으로 이탈했다. 그들은 1942년 7월 결성된 화북조선독립동맹의 무장부대인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되었다.

나.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파견

1937년 중국대륙을 침략한 일제는 동남아시아 일대로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1942년 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군은 장차 독일군과 중동에서 만나겠다고 하면서 미얀마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미얀마침공을 계기로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미얀마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1942년 겨울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총사령부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후 민혁명당) 측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작인원의 파견을 요청했고, 민혁명당에서는 최성호, 주세민 2명을 인도에 파견했다. 인도에 파견된 이들은 전방에 배치되어 대적선전 공작에 투입되어 활동했고, 영국군 측에서는 이들의 활동에 크게 만족하여 총사령부 안에 대적선전대(對敵宣傳隊)를 특설했다. 이것이 광복군이 인도·미얀마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활동이 유익하다고 판단한 영국군 측에서 더 많은 인원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영국군의 요청은 민혁명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1943년 5월에 민혁명당 총서기 김원봉과 인도 주둔 영국군 총사령부 대표 콜린 맥켄지(Colin Mackenzie) 사이에 「조선민족군 선전연락대 파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조선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영군의 완전 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은 재인영군(在印英軍)의 항일작전을 협조하고 영군은 조선민족혁명당의 대일투쟁을 협조하기 위하여” 조선민족군 선전연락대를 파견하기로 하고, 선전연락대의 구성(10인~25인), 임무(대적선전), 복무기한(6개월을 1기)과 조건, 대원들의 대우 등을 규정했다.²⁰⁾

이 협정의 주체는 민혁명당이었지만 이를 실행하는 문제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승낙과 광복군총사령부에서 맡게 되었다. 광복군총사령부는 인도에 파견할 대원을 선발했다. 선발 기준은 신체조건과 함께 어학 능력이 중시되었고, 제1, 2지대에서 모두 9명을 선발하여 ‘인면전구공작대’를 편성했다. 공작대원 9명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비행기 편으로 1943년 8월 29일 인도로 파견되었다.²¹⁾

영국군에 배속된 공작대는 임팔(Imphal)전선에 투입되었다. 임팔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미얀마와 접경지역으로 영국군과 일본군이 대접전을 벌이고 있던 곳이었다. 광복군 공작대가 임팔전선에 투입된 것을 1944년 초였다. 이들이 임팔에 도착한 직후 영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대접전이 벌어졌다. 인면전구공작대의 인면전구작전 참가도는 [지도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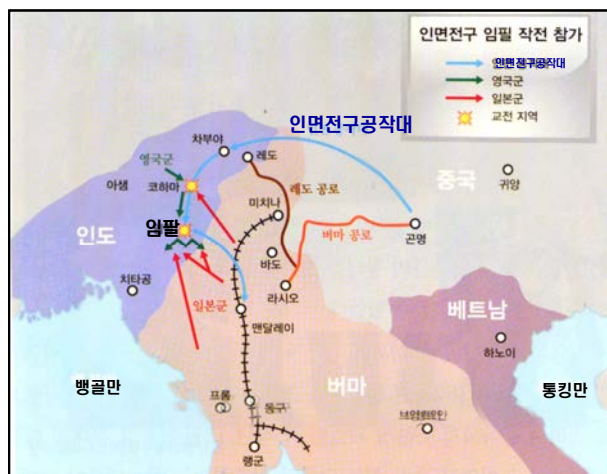
20)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Ⅱ)』(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2), pp.327-328.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p.211-212 ;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Ⅱ)』(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2), p.280.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대승을 거두었다. 광복군의 주요 임무와 활동은 대적 선전공작이었다. 심리전을 담당한 공작대의 활약으로 일본군에서 탈출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본군의 작전계획을 사전에 탐지하여 영국군이 일본군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광복군 공작대의 활약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영국군에서는 더 많은 인원의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군사위원회 측은 일부 대원 교체만 할 뿐 추가 파견을 승인하지 않았다.

광복군 공작대원은 임팔전선에 이어 미얀마 탈환작전에도 참여했다. 이 작전은 영국군, 인도군, 중국군과 미군까지 동원된 작전으로 1945년 5월 랭군을 탈환하고, 7월에는 일본군을 완전히 패퇴시켰다.

[지도 4-2]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인면전구작전 참가도



※ 출처: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 p.332

다. 공군 창설 추진

임시정부는 공군창설계획을 세워 대일항전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1943년 7월 6일 국무위원회에서는 최용덕(崔用德)의 「공군건설계획안(空軍建設計劃案)」을 채택하여 군무부 직할로 '공군건설위원회(空軍建設委員會)'를 설치하고 공군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²²⁾ 8월 19일 동 국무회의에서는 「공군설계위원 선임안(空軍設計委員選任案)」을 가결하고, 군무부 공군설계위원(空軍設計委員)으로 최용덕(崔用德)·윤기섭(尹琦燮)·김철남(金鐵男)·이영무(李英茂)·김진일(金震一)·권기옥(權基玉)·이연호(李然皓)를 선임하였다.²³⁾

1944년에는 「한국 현단계 공군건설개시공작(韓國 現段階 空軍建設開始工作)」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한미공동작전 및 장차 공군의 기초를 확립하는 기본 골격으로 삼았는데, 이 계획에는 한국항공대(韓國航空隊)를 편성하여 미국 공군과 연합작전으로 광복군의 작전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22)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대한민국 25년 8월 4일).

23)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대한민국 25년 10월 8일).

최용덕(崔用德)등 5명의 비행사와 김진일(金震一)등 6명의 기계사가 소집되었다.²⁴⁾ 당시 이 공군창설계획이 시간·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광복군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역량을 결집하여 대일전을 전개하며 장차 국군의 정규 공군 창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제 2 절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1. 미군정의 국군 창설 준비

가. 조선경비대 증편

남조선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 제1대대 A중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동시에 중대에서 대대로, 대대에서 연대로 단계적으로 부대를 확대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4월 1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제8연대 제1대대 A중대를 창설함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수립한 창군계획, 이른바 ‘뱀부계획(Bamboo Plan)’상 목표한 대로 각도에 1개 중대 내지 1개 연대의 편성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 후 제주도(濟州島, 전라남도 관할)가 1946년 8월 12일 제주도(濟州道)로 승격됨에 따라 11월 16일 모슬포에서 제9연대 제1대대 A중대가 창설됨으로써 남한 9개도에 9개 연대 창설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남조선국방경비대 병력 총수는 5,453명에 달했다.²⁵⁾ 남조선국방경비대 연대 창설 현황은 [표 4-1]과 같다.

24) 「한국 공군의 창설 계획」(194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한국광복군 Ⅱ)(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5명의 비행사는 최용덕(崔用德)·이영무(李英茂)·정재섭(鄭再燮)·최철성(崔鐵城)·권기옥(權基玉) 등이었고, 6명의 기계사는 김진일(金震一)·장성철(張聖哲)·장기형(張基亨)·이사영(李士英)·염온동(廉溫東)·왕영재(王英載) 등이었다.

25)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1962), p.23; 국방부, 『국방사 제1집(1945. 8.~1950. 6.)』(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297.

[표 4-1] 연대 창설 현황

1946. 1. 15. ~ 11. 16.

연대 명	초대 지휘관(A중대장)		부대 창설일/ 위치
	지휘관	재임 기간	
제1연대	정위 채 병 덕	1946. 1. 15. ~ 6. 1.	1946. 1. 15./ 태 릉
제2연대	정위 이 형 근	1946. 2. 28. ~ 4. 22.	1946. 2. 28./ 대전비행장
제3연대	정위 김 백 일	1946. 2. 26. ~ 10. 27.	1946. 2. 26./ 이 리
제4연대	부위 김 흥 준	1946. 2. 15. ~ 5. 25.	1946. 2. 15./ 광 주
제5연대	참위 박 병 권	1946. 1. 29. ~ 3. 1.	1946. 1. 29./ 부 산
제6연대	참위 김 영 환	1946. 2. 18. ~ 2. 26.	1946. 2. 18./ 대 구
제7연대	참위 민 기 식	1946. 2. 7. ~ 1947. 5. 21.	1946. 2. 7./ 청 주
제8연대	부위 김 중 갑	1946. 4. 1. ~ 12. 7.	1946. 4. 1./ 춘 천
제9연대	부위 장 창 국	1946. 11. 16. ~ 1947. 6. 1.	1946. 11. 16./ 제 주 모슬포

※ 출처: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 1(1945~195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 육군본부, 『창군전사』

※ 본 표에서 각 연대 창설 일자 및 지휘관 명은 A중대 창설일 및 A중대장 임명 기준.

1946년 6월 15일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남조선국방경비대에서 개칭된 조선경비대는 1947년 12월 1일 「통의부 일반명령 제69호」에 따라 이미 편성된 9개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 대전, 부산에서 각각 제1·제2·제3여단을 창설하였으며, 이어서 1948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제10연대(강릉), 제11(수원), 제12(군산), 제13(온양), 제14(여수) 및 제15(마산)연대 등 6개 연대가 추가로 창설됨에 따라 각각 3개 연대로 구성된 제4·제5여단을 창설하였다.

이처럼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비하여 조선경비대를 총 5개 여단, 15개 연대 규모로 증편하였으며, 후방지원부대를 보강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총 병력은 50,490명(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에 달하였다.²⁶⁾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군은 부대만 편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339 ;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일지 1(1945~1950)」(1951).

성되었을 뿐, 장비는 1947년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M1 소총과 일본제 99식 소총뿐이었다.²⁷⁾

다만 미군정 당국은 미군 철수에 따른 장비 이양에 대비하여 대구, 서울 및 진해의 3개소에 각각 제1·제2·제3훈련학교를 설치하고, 이미 6월 27일부터 조선경비대 화기 요원들을 소집하여 미군이 양도할 지원화기(M3 105mm 야포, 57mm 대전차포, 2.36" 로켓포, 60mm 및 81mm 박격포, 경기관총 등)의 운용 요령을 교육했다.²⁸⁾

그 후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비로소 미군이 사용하던 화기들이 점차 이양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M3 105mm 야포 52문이 양도되었고, 57mm 대전차포는 전량 이양되었지만 쌍안경, 조준기 등의 부속품이 없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박격포와 중기관총은 거의 인계되지 않았고 지급된 소총과 자동화기 중에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이 20~40%나 포함되어 있었다.²⁹⁾

1948년 9월 4일 미 육군으로부터 연락기(L-4형) 10대를 처음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나. 조선해안경비대 증편

「군정법령 제86호」(1946. 6. 15.)에 따라 ‘해방병단’에서 개칭된 ‘조선해안경비대’의 주요 임무는 해안 및 도서경비였으나 점차 그 직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기구 확장 및 부대증편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1946년 9월 1일 미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파견된 미 해군 고문단(U. S. Coast Guard 소속) 매케이브(George E. McCabe) 대령(조선해안경비대 수석고문관) 등 15명을 맞아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³⁰⁾ 즉, 이들 고문단 요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9월 15일 미 해군으로부터 최초 LCI(상륙정) 2척을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9월 중에 진해, 인천 및 묵호기지에서 디젤함 및 증기함 등 수 척을 인수하여 본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339 ;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일지 1(1945~1950)』(1951).

2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31.

29)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38.

3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18 ; Capt George E. McCabe, USCG, *History of U.S. Coast Guard Detachment Korea, 2 sep 46 to 25 Feb 1947*, copy in OCMH Files. 해군본부 전사실,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서울: 해군본부 전사실, 1954), pp.27~28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계룡: 해군 역사기록관리단, 2016), p.95.

격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 인수한 LCI는 500톤급 상륙용 함정으로 병력 3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초창기의 조선해안경비대로서는 최대 최강의 함정이기도 하였다.(〈사진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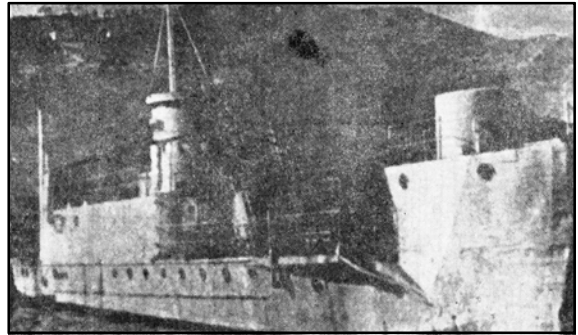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함정은 1946년 9월 15일부터 1948년 1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LCI 6척, 소해정(JMS 및 YMS) 29척 및 유조선(YO-1) 1척 등 총 36척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해안경비대총사령부 산하의 기구 확장과 기지 증설이 이루어졌다. 1946년 10월 1일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를 진해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한편 10월 1일 자로 진해기지에 특별기지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46년 8월 16일 인천기지 김포파견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8월 18일에는 목포 기지를, 8월 22일에는 목호기지를 설치하였고, 1947년 1월 6일에 군산기지를, 2월 8일에 포항기지를, 9월 24일에 부산기지를 각각 설치하였다.³¹⁾

이로써 조선해안경비대는 대소함정과 함께 동·서·남해안에 7개 기지, 2개 수영(제주, 여수) 및 2개 파견대(김포, 주문진)를 각각 확보하고 실질적인 해안경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조선해안경비대 기지사령부 설치현황은 [표 4-2]와 같다.

해안경비대 조함창에서는 일본군이 폐기한 100톤급 보트 1척과 스팀선 2척을 보수하여 운항하도록 하였으며, 1946년 7월 17일에는 300톤급 철함을 자력으로 건조(연인원 8,500명, 건조비 430만 원)하여 1947년 2월 7일 ‘충무공정’으로 이름을 붙여 취역(就役)시켰다.³²⁾ 1947년 8월 17일에는 8·15광복 제2주년 기념행사로 각 기지에서 출동한 함정 11척(기함: 충무공정)으로 해안경비대 창설 이래 최초의 함정 편대훈련을 인천 근해에서 실시하였다.

이처럼 해안경비대의 해상방위력이 점차 향상되자 8월 30일에는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대로부터 북위 38도선 이남의 해상 경비임무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15일 부산항에서 제1특무정대, 12월 9일 여수항에서 제2특무정대를 각각 편성하였다. 1948년 6월



〈사진 4-3〉 최초로 인수한 LCI 상륙정

31) 해군본부 전사실,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서울: 해군본부 전사실, 1954), pp.36~37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 pp.94~96.

32) 해군본부 전사실,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서울: 해군본부 전사실, 1954), pp.37~38.

24일에는 통위부 기구 개편에 따라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 산하에 총참모장제를 신설하고, 그 예하에 특별기지를 포함하여 7개 기지와 2개 정대(艇隊)를 보유하고 해상 방위와 정규 해군 창설을 위한 해군력 증강에 주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해군으로 편입될 당시의 조선해안경비대의 병력은 3,000여 명, 함정(선박 포함)은 105척(총 13,000톤)에 달하였다.³³⁾

[표 4-2] 조선해안경비대 기지사령부 설치현황
1946. 8. 16.~1947. 9. 24.

부 대 명	창설일	사 령 관	위 치	예하 수영 · 파견대
인천기지	1946. 4. 15.	대위 백진환	인 천	김포파견대(1946. 8. 16.)
목포기지	1946. 8. 18.	중위 왕홍경	목 포	제주수영(1947. 6. 21.)
목호기지	1946. 8. 22.	중위 정궁모	목 호	주문진파견대(1947. 3. 26.)
진해특설기지	1946. 10. 1.	중위 김성삼	진 해	
군산기지	1947. 1. 6.	대위 이상열	군 산	
포항기지	1947. 2. 8.	중위 한갑수	포 항	
부산기지	1947. 9. 24.	중위 박진동	부 산	여수수영(1947. 7. 1.)

※ 출처: 해군본부 전사실,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 인천기지는 해방병단 시절 설치되었다.
※ 사령관 계급은 1946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계급 호칭으로 표기했다.

2. 국군 창설

가. 육군

부대 증편 정부수립과 더불어 조선경비대는 2년 10개월 만에 정규 육군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재발족하게 되었다. 당시 육군의 부대편성은 5개 여단, 15개 연대와 1개 지원부대(사령부 직할 잠정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병력 수준은 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으로 총 50,490명에 달하였다.³⁴⁾

33) 해군본부 전사실,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서울: 해군본부 전사실, 1954), p.50.
34) 육군본부 군사감실, 『공비토벌사』(서울: 서울: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4), p.187.

국군 편입 직후인 1948년 10월부터 연대 증편에 착수한 육군은 11월에 ‘여순10·19사건’과 주한미군의 철수 단행에 자극을 받아 급속히 증편되어 이듬해 6월 말까지 제16연대로부터 25연대까지 보병연대를 계속 창설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방부에서는 장차 육군의 발전에 긴요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미군정하에서 창군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과거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에서 활약하던 고급 장교와 민간 인재들을 대거 군문에 기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⁵⁾

연대의 증·창설 과정을 살펴보면, 1948년 10월 28일 마산에서 제16연대가 창설된 것을 비롯하여 11월 20일에 시흥, 포항 및 광주에서 제17, 제18 및 제19연대가 창설되었으며, 광주의 제4연대가 해체되면서 제20연대가 신편되었다. 11월 25일에는 잠정특별부대사령부 산하의 수색대가 미군으로부터 경장갑차 22대를 인수하여 수색단으로 승격되었으며, 12월 10일에 다시 기갑연대로 개편되었다.

1949년 1월 7일 서울에서 제7여단이 추가 창설됨으로써 육군은 6개 여단 19개 연대와 1개 기갑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1일에는 제7여단이 제1, 제9, 제17 및 제19연대를 배속받아 수도여단으로 개편되었고, 같은 날 광주에서는 제19연대 일부 병력을 기반으로 제21연대가 창설되었다. 4월 15일 대구에서 제6연대가 해체되어 제22연대가 신편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마산과 대전에서 제23연대와 제25연대가 각각 창설되었다.

보병연대 증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던 1949년 5월 12일에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던 ‘여단의 사단화 계획’이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실현되었다. 「국군조직법」 제3장 제13조의 “육군에는 평시에 사단과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둔다.”라는 조항에 따라 기존 6개 여단은 모두 사단으로 승격, 개편되었으며, 6월 20일에 강릉과 서울에서 제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사단급)가 각각 창설됨으로써 육군 증강 목표인 8개 사단 편성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규군으로 재발족한 후 8개월 만인 1949년 6월 말 당시 8개 사단, 22개 연대와 1개 기갑연대로 급성장하였다. 1949년 6월 말 기준 사단 창설 현황은 [표 4-3]과 같다.

사단의 기본편제는 기간 부대인 3개 보병연대와 직할부대인 본부 및 본부중대를 비롯한 포병대대, 통신중대, 병기 정비중대, 의무대대, 병참중대, 공병중대 및 군악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병력은 장교 625명, 사병 9,936명인 총 10,561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방 사단만이 겨우 3개 연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기타 사단은 2~3개 연대의 부족한 병력을 유지하였으며, 더욱이 장비 면에서는 전 사단이 여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³⁶⁾

35)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pp.208-209.

36)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육군본부, 1970), p.203.

[표 4-3] 사단 창설 현황

1949. 6. 20.

사단명	창설 사단장	창설일/위치	부 대 편 성
제1사단	대령 김석원	1949. 5. 12./ 서울	1949. 5. 12. 제1여단 승격
제2사단	대령 유승렬	1949. 5. 12./ 대전	1949. 5. 12. 제2여단 승격
제3사단	소장 이응준	1949. 5. 12./ 대구	1949. 5. 12. 제3여단 승격
제5사단	준장 송호성	1949. 5. 12./ 광주	1949. 5. 12. 제5여단 승격
제6사단	대령 유재홍	1949. 5. 12./ 원주	1949. 5. 12. 제6여단 승격
제7사단	대령 이준식	1949. 5. 12./ 서울	1949. 5. 12. 수도여단이 수도사단으로 승격, 1949. 6. 20. 7사단으로 개칭
제8사단	준장 이형근	1949. 6. 20./ 강릉	1949. 6. 20. 제10, 21연대를 기간
수도경비 사령부	대령 권 준	1949. 6. 20./ 서울	1949. 6. 20. 제2, 제17연대, 기갑연대, 포병단 및 독립 제1대대를 기간

※ 출처: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pp.177-178, p.204.

그 후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육군에 병과제도가 수립된 이래 육군본부 각 병과감실 감독 아래 병과부대가 증·창설됨으로써 보병사단에 대한 병과 지원 기능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역시 긴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임무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증·창설된 병과부대를 살펴보면, 먼저 포병부대로는 제2 및 제3포병학교(1948. 6. 26.), 육군포병연대(1949. 6. 20.), 포병연대 예하 포병대대의 사단 배속(1948. 6.~10.), 육군포병학교(1949. 10. 15.) 등이 증·창설되었다. 공병부대로는 제1공병단(1948. 8. 20.), 육군공병학교(1948. 11. 25.), 육본 공병감실(1948. 12. 1.), 사단 공병대대(1949. 5.~9.) 등이 창설되었다. 통신부대로는 제51통신대대(1948. 5. 20.), 육군통신학교(1948. 8. 26.), 제1통신단(1949. 1. 6.), 병기부대로는 병기단(1948. 8. 9.), 육군자동차학교(1948. 10. 5.), 병기감실(1948. 12. 15.), 제33탄약보급중대(1949. 6. 10.), 병참부대로는 병참대대(1948. 1. 1.), 피복창(1949. 4. 1.), 지구보급창(1949. 8. 1.), 의무부대로는 제1의무단(1948. 9. 28.), 제2육군병원(1948. 10. 5.), 육군군 의학교(1948. 8. 15.) 등이 각각 증·창설되었다.

미군장비 인수 1948년 8월 24일 한미 간 체결된 「과도기에 있어서 군사안전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비로소 미군이 사용하던 화기들이 점차 인도되기 시작하였다. 당초 약속했던 대한군원(對韓軍援)은 지상군 5만 명분의 장비와 6개월분의 예비품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그 후 병력 기준은 6만 5천 명 선으로 증가 조정되었다.³⁷⁾ 이와 같은 미군 장비의 인수는 미국의 「잉여재산처리법」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원가로 환산하면 5,600만 달러에 상당하였고, 이 중에는 일본에 보유하고 있었던 100만 달러 상당의 미군 잉여장비도 포함되었다.³⁸⁾ 그러나 M-2 105mm 곡사포를 비롯한 57 및 75mm 대전차 무반동총 등 비교적 성능이 좋은 무기는 모두 철수하고, M-3 105mm 곡사포와 37 및 57mm 전차포 등 도태장비에 가까운 구식 무기만 넘겨주었다. 더욱이 이들 포의 대부분은 조준기 등 부속품이 없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양된 소화기와 자동화기는 60~80%가 미제였을 뿐 나머지는 일본군의 구식 무기였다.³⁹⁾ 당시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개인화기 미제 M1 및 카빈(Carbin) 소총과 일제 99식 소총 사진은 <사진 4-4>와 같다.



<사진 4-4> 미제 M1 및 카빈 소총과 일제 99식 소총

※ 일제 99식 소총(장총). 일본군 99식 소총은 장소총(長小銃)과 단소총(短小銃) 두 종류가 있었다. 단소총은 길이 111cm, 무게 3.8kg.

※ 출처: NAVER 지식백과 검색(2020. 4. 10.).

37)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210.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210.

39)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38.

한국군이 보유한 무기 중 가장 위력이 있다는 M-3 105mm 곡사포는 사거리가 7km에 불과하여 당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사거리 12km의 소련제 122mm 야포보다 성능이 훨씬 뒤떨어진 것이었다. 더구나 북한의 고성능 전투기와 전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장비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장갑차 19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들 무기와 함께 5,100만 발의 탄약이 이양되었으나 중요 탄약은 주한 미 군사고문단 측 통제 아래 보관되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다양한 차량장비가 인계되었는데 이들 장비도 제2차세계대전 때부터 사용해 오던 매우 낡은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무기와 장비의 이양은 한국군이 다만 대내적인 소요사태를 다스려 치안을 유지하고 38도 경계선을 경비하는 데 족할 정도로 육성한다는 미국 정부의 ‘대한 군원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종료된 1949년 7월 이후 육군의 병력은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 측의 장비 지원 기준은 6만 5천 명 선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원조상태가 부진하여 상당한 장비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⁴⁰⁾

1950년 3월에 육군본부는 전반적인 군수체계를 재정비 강화하여 장비 관리, 보급경로, 폐품 회수 및 상호조정 절차를 개선하였다. 병참규정도 새로 제정하여 전투예비품 확보를 위한 장비 및 물자의 분배 우선순위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병기들을 상태별로 구분하여 과감히 입고 또는 폐기 조치하였으며, 예하 각 사단의 박격포와 기관총 및 자동화기도 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회수하거나 정비하도록 하였다. 육군본부는 차량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투예비량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등록제를 실시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1950년 3월에 병기감실 계획에 따라 고장 차량 5백 대를 회수하여 부평 병기재생중대에서 1일 2대의 엔진을 재생시키는 등 정비유지에 힘썼다.⁴¹⁾

국내 생산 국군 창설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만으로는 늘어나는 군수 소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방부에서는 국내조달 가능품목을 재검토하고 초보적이거나 자체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보충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 산업체의 시설과 능력이 너무 빈약했고, 국가 재정마저 곤경했던 때라 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1948년 11월에는 중앙에 조달부대가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미 고문단 측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미미하게나마 국외로부터 긴요물자를 구매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품도 조변하여 군 소요의 일부를 충당하였다. 이 조달부대가 미 경제협조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기술자 및 국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군수물자

40) 국방부, 『국방사 제1집(1945.8.~1950.6.)』(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338-339.

41)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pp.206-208.

의 국내 생산능력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산업체의 기능이 회복될 경우 병참 100%, 의무 95%, 공병 45%, 통신 25%, 병기 15%를 국내에서 현지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⁴²⁾

그러나 초기의 자체 생산 군수물자는 1949년 6월부터 가동한 동대문 피복공장이 생산 납품한 1일 1,200착의 전투복과 800착의 근무복이 처음이었으며, 이때 육군 병참부대에서는 군화와 피복의 재생에 착수하여 1일 1,200착의 전투복과 500여 족의 군화를 수리해 내고 있을 뿐이었다. 육군이 가장 역점을 둔 자체생산 사업은 소화기와 탄약 분야였다. 육군은 우선 소화기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장차 무기개발을 위한 기술을 축적하고 당시 시급했던 예비병력에 대한 소화기 지급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소화기의 자체 생산계획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채병덕 소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진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이 문제였다. 육군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부평에 있는 구 일본군 조병창을 인수하였으나 오랜 방치로 시설이 너무 파손되어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었다. 이 시설은 광복 전까지 일본군이 소화기와 부품을 생산하던 곳이었으며, 채병덕 총참모장은 광복 전 일본군 소좌로서 이 조병창의 제3공장 책임자였다. 육군본부는 1949년 1월 15일 정부 귀속업체인 유항상공주식회사 용산공장과 조선유지주식회사 인천공장을 접수하여 각각 제1 및 제2공장으로 지정하고 이를 모체로 육군 특별부대 소속으로 ‘육군 병기공장’을 창설하고 소화기의 부품생산에 착수하였다.⁴³⁾ 제1공장은 인수 즉시 시설을 보완하면서 소화기를 정비하고 99식 소총 부속품과 수류탄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제2공장은 3개월간 시설복구와 기계정비를 하였다.

이해 12월 15일 국방부에 ‘병기행정본부’가 설치되어 병기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병기행정본부는 1950년에 들어와 병기감실에 배정된 예산을 병기생산에 전용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삼화정공주식회사’를 제3공장으로, 인천에 있는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와 ‘기호전업주식회사’를 생산감독공장으로 각각 지정함으로써 병기 생산능력을 확충하였다.

이리하여 제1공장에서는 육군과 경찰에서 요구하는 총포의 수리정비, 그리고 제2공장에서는 요구하는 각종 탄피를 생산하는 한편, 권총 제작 연구에 착수하여 그 시작품(試作品)을 생산하고 있었고, 제2공장에서는 주로 마찰식 수류탄을 생산하면서 무연화약 제조방식 연구에 성공하여 점차 화약공장으로 발전해 나갔다. 제3공장은 정밀기계 연구와 시작품 제작

42)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97.

43)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p.224.

에 착수하여 주로 제1공장에서 단조한 부속품을 정밀가공하고 총포의 부속품을 생산하였으며, 조선알미늄공업과 기호전업에서는 자재 일체를 관급 받아 주로 99식 소총의 탄피와 탄환을 생산하였다. 그 후 병기행정본부는 각 군 및 경찰에서 파견된 대표로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 권위 있는 기술자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기생산과 기술개발 문제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1950년 6월 15일 부산에 ‘제1조병창’을 신설하고 인천에 기존의 제2공장을 ‘제2조병창’으로 개편하여 병기생산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육군과학기술연구소’도 창설하여 병기개발의 합리적인 연구와 기술의 발전을 시도하였으나 이 계획은 전쟁 발발로 중단되고 말았다.

나. 해군

장비 보강 해군이 국군으로 편입될 당시 보유했던 인수 함정 수는 총 33척(36척 중 3척 손실: 납북 2척, 좌초 1척)⁴⁴⁾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제조 연령이 오래된 노후 함정들로 계속 보수하고 정비해야 운항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전체 함정의 80%에 해당하는 27척이 낡은 소해기구만 비치한 소해정들이어서 작전과 경비 임무 수행에 애로가 많았다. 해군은 정규군 편입 직후 각 관구(管區)의 경비구역을 연해선에서 해상 1해리 또는 3마일 이내의 연해역(沿海域)까지로 연장하고⁴⁵⁾ 기존 동·서 양해의 2개 특무정대를 3개 정대 및 1개 훈련정대 구역으로 재편성하였으나 함정 능력의 부족으로 영해 경비와 적의 연안침투 봉쇄, 밀수선 단속, 조난선 구조 및 해상수송 등 날로 늘어나는 잡다한 임무를 감당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군 정대별 경비해역은 [지도 4-3]과 같다.

1949년 3월 미 국가안보회의가 대한군사원조를 관리하는 기본정책을 수립하면서 한국 해군에게도 약간의 함정과 무기, 그리고 수리 부속품을 제공하기로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그에 대한 조치는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해군에서는 자구책으로 자체로 함정을 건조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해 6월에 해군본부 내에 ‘함정건조기금각출위원회’(위원장: 손원일 총참모장)를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전 장병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자 매월 봉급에서 성금을 각출하였는데, 장교는 월봉 총액의 10%, 병조장은 7%, 병조 이하는 5%씩을 헌납하였다.⁴⁶⁾ 이 운동은 점차 확대되어 해군부인회가 봉사를 통한 수익금을 기탁하였고, 국방부와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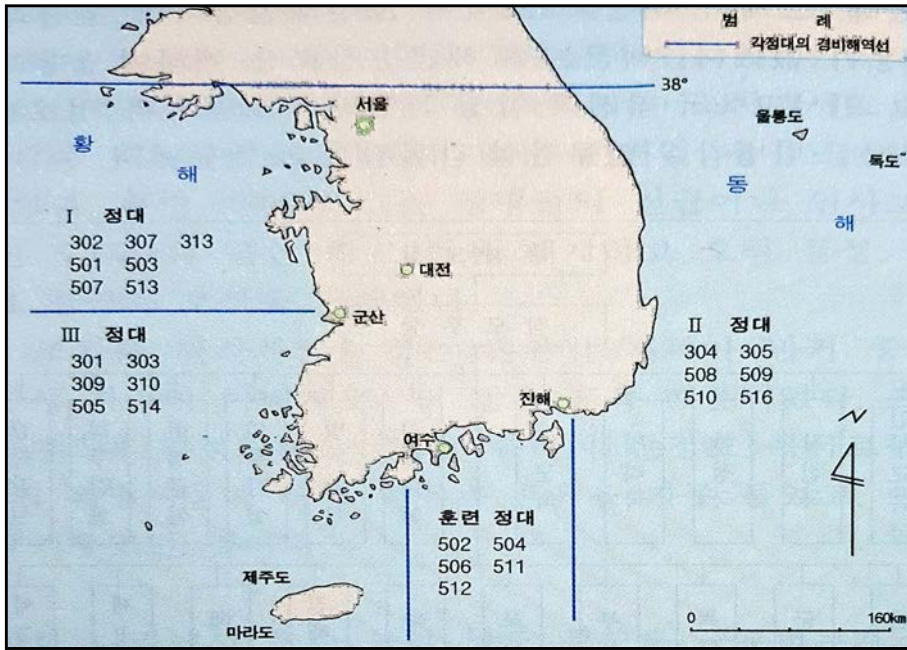
44)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서울: 해군본부, 1954), pp.31-32, 46-47.

45) 「군정법령 제189호」(1948.5) 제3조 ‘해안경비대의 직무구성’.

46)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서울: 해군본부 전사실, 1954), p.69.

[지도 4-3] 정대 및 경비해역

1948. 8. 15.



※ 출처: 해군본부, 『해군 30년사(1945-1975)』, p.1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584.

기관에서도 적극 호응하였으며 마침내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불과 2~3개월 만에 목표했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해군에서 자체 함정 건조능력을 재검토한 결과 아직 시설 및 기술상의 문제점이 많은 데다 또한 그 경비가 구매가격보다도 더 소요될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기로 하였다. 10월 초에 손원일 제독은 이 함정의 구매와 추가 군원 교섭, 그리고 미 경제협조처(ECA)가 해사국에게 구입해준 지남호를 한국으로 회항(回航)하는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으로 건너간 손 제독은 1949년 10월 17일 구잠함(PC) 1척을 구입하여 11월 말까지 정비를 끝낸 다음, 12월 26일 뉴욕항에서 이를 '701함'으로 명명하고 박옥규 중령을 함장으로 하여 한국으로 출발시켰다.(<사진 4-5> 참조) 손 제독은 미국에 잔류하여 계속 함정인수를 위한 대미 절충을 벌인 끝에 구잠함 3척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때 구입한 것은 선체와 주엔진뿐이었고, 기타 필요한 정비와 개조비는 미국 측에서 부담하였다. 1950년 5월 이 함정 3척의 인수 요원이 항공편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잔여 정비와 포의 장비를 끝내고 5월

27일 이름을 각각 702함, 703함 및 704함으로 명명한 다음 미국을 출항하였다.

이리하여 해군은 근대식 대체장비를 갖춘 구잠함 4척을 새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중 701함은 4월 10일에, 702, 703함은 7월 16일에 704함은 7월 25일에 각각 진해항에 입항하였다.⁴⁷⁾



부대 증편

해군부대의 증편은 1948

〈사진 4-5〉 701 구잠함(백두산함)

년 9월 5일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해군총사령부’로 개칭되고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에 의해 정규 해군으로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해군의 발족에 대하여 미국이 주도한 의도적 군비증강의 결과라는 공산국의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한동안 공식적인 인정을 유보하고 있었다.⁴⁸⁾ 이에 불구하고 해군은 부대증편에 박차를 가하여 1949년 5월 5일 「해병대령」이 공포되어 해군 내에 해병대가 창설된 것을 비롯하여 5월 7일 「해군기지 설치령」에 의하여 기지 건제부대의 범위가 규정되었다. 6월 25일에는 「통제부 직제령」에 의하여 진해 군항에 통제부가 설치되었고, 「경비부직제령」에 의하여 종전의 기지 단위부대가 경비부로 승격되었다.

이리하여 진해통제부는 군항 구역의 방어를 위하여 진해만 해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비와 출사(出師)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각 경비부는 육상(해안 포함)과 해상으로 경비책임구역을 확정하여 한국 어획구역(MacArthur Line⁴⁹⁾ 기준)내 불법 선박

47)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소이어(Robert K. Sawyer)는 6·25전쟁 직전에 한국 해군의 함정 현황에 대하여 그의 저서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에서 “각종 함정 105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어선을 포함한 58척 만이 이용 가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49.

49) 제성호의 논문,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대응」의 ‘Ⅳ. 2차세계 대전의 전후처리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https://blog.naver.com/dokdowar/100054614238>, 2020년 4월 15일 검색) 참조.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로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는 1946년 6월 22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 일명 「맥아더 라인 설정에 관한 각서」(SCAPIN 1033호)를 발표하였다. 이 각서에 의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 맥아더는 일본의 남획을 막기 위해 일본 열도 주변에 일정 선을 그어 일본 어선이 그 밖으로 나가 조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 조업한계선은 통상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으로 불린다. 상기 각서는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의 앞으로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Liancourt Rocks)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이 어업과 포경

의 침입 방지와 기타 연안경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1950년 3월 2일에는 해군 기지에 대한 보호법으로 「해군기지법」이 공포됨으로써 전시나 내란 시 작전해역에 민간선박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어해면이 고시되어 해상작전에 원활을 기하였다.

해군의 병력 관계는 애초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육군 사단화계획」에 따른 잠정 인가병력 75,000명의 10%인 7,500명 수준으로 육성하려고 하였으나 육군의 후방지역 작전요소의 증가로 말미암아 육군 병력확보에 우선을 두게 됨으로써 이 계획은 지연되었다. 1949년 1월 말 기준으로 3,541명(장교 369명, 사병 2,947명, 생도 225명)이던 해군 병력은 3월 초에 4,00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해 말부터 1950년 초 사이에 함정세력 증가와 해병대 창설에 힘입어 병력이 급증하여 6월 25일 현재 총 6,956명에 달하였다.

해병대는 1945년 4월 15일 수륙 양면작전의 수행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군의 예속부대로서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되었으며, 5월 5일 「해병대령」(1949. 5. 5., 「대통령령 제88호」)이 공포됨에 따라 해군기지 경비부대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해병대는 신현준 중령을 초대사령관으로 하여 해군에서 편입한 장교 26명, 하사관(지금의 부사관) 54명, 병 300명 등 총 380명의 병력으로 2개 소총중대와 본부 및 근무중대로 편성된 보병대대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⁵⁰⁾

그 후 해병대는 1949년 8월 1일 2개 대대규모로 증편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 당시에는 병력은 장교 66명, 사병 1,100명으로 총 1,166명이었고, 장비는 99식 수총 및 M1 칼빈 소총과 권총을 비롯하여 LMG 6정, HMG 3정, 60mm 박격포 42문, 81mm 박격포 2문을 보유하였다.⁵¹⁾

다. 공군

장비보강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발족한 직후 항공기지부대는 육군의 통신 및 연락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최초로 보유하게 되었다. 즉, 1948년 9월 1일 김포군 송정리에서 김포비행장 내로 이동하여 기지 운용준비를 끝내고 9월 4일 주한미군으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된 지역들에서 독도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곧 맥아더 라인도 독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따라서 일본의 어부들과 모든 선박들은 독도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독도수역 12해리 이내에 들어가지 못함을 명백히 선포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50) 국방부, 『국방사 제1집(1945. 8~1950. 6)』(1984), pp.242-243 ;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70년사』(화성: 대한민국해병대, 2019), p.17.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662.

로부터 L-4형 연락기 10대를 인수하였는데, 이 연락기는 제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전투지역 후방에서 정찰, 연락 및 통신수단으로 활용하던 시속 160.9km, 항속 거리 483km의 구형 기종이었다. 항공기지사령부는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90여 명의 기성 조종사들에게 이들 연락기에 대하여 1일 2~3시간씩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미국 정부는 L-5형 연락기 10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을 내려 12월 23일에 인도되었는데, 이 L-5형 연락기는 시속 205km, 항속 거리 508km로 1ton까지의 화물운반도 가능한 다소 개량된 항공기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연락기 지원은 육군 항공파견대에 통신 및 연락 지원능력을 향상해 주었으나 한국 측에서는 작전경험상 전투기가 더욱 필요했다. 당시 북한 공군은 소련제 신예 전투기 20대를 보유하고 있고 야크(YAK) 전투기의 추가도입에 대비하여 조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때라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가 더욱 시급하였다.

항공사령부는 1949년 초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북한군의 항공력 현황을 분석 보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에 군사원조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대통령은 무초 대사와 로버트 장군을 통하여 미국 정부에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주미 대사 장면과 특사 조병옥에게 지시하여 미국의 정책수립가들에게 이러한 원조 요청 내용을 적극 이해시키도록 조치하였다. 두 대표는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현격한 군사력 불균형에 따른 공산도당의 무력침략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對韓) 군원(軍援)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 특사는 4월 10일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미국 정부에 전투기 75대, 폭격기 12대, 연락기 및 정찰기 30대, 수송기 5대와 공군 3천 명의 육성을 위한 기타 장비를 원조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⁵²⁾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국내외의 군원 요청 활동도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확약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한편,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작성한 애국기 헌납 추진방안이 국방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됨으로써 1949년 9월 25일 정부는 범국민적인 ‘애국기 헌납운동’ 전개를 선언하였다. 9월 30일 국회에서도 이 애국기 헌납운동에 대한 긴급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 전체가 솔선하여 기금함으로써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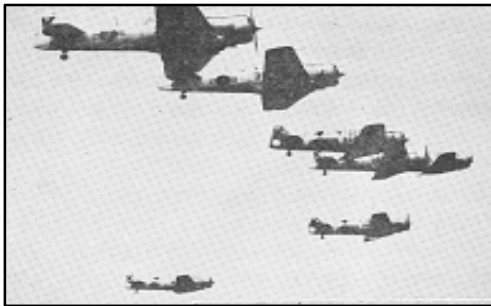
이리하여 항공기 헌납 모금운동은 공군의 창설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공무원, 각급 단체, 일반 국민, 그리고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해외 교포까지 헌금을 보내와 연말에는 목표액인 2억 원을 초과하여 3억 5천만 원이 모금되었다.⁵³⁾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604.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p.603-604.

항공기 구매대상의 물색은 모금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최초엔 미국 정부와 직접 교섭하였으나 항공기 판매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됨으로써 일본에 있는 항공회사와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구매알선을 의뢰한 결과 일본 주재 미국 에어캐리어(Air Carrier) 극동대리점에서 중개한 캐나다제 AT-6 고등훈련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입계약은 이해 10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 내용은 AT-6 고등훈련기 10대에 27만 달러와 기당 2정씩 장착될 7.76mm(Cal-30) 기관총 20정, 실탄 5천 발, 그리고 수리 부속품 1년분을 포함하여 3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당시 한화 약 1억 9천만 원)를 지불하기로 하였다.⁵⁴⁾

1950년 3월에 AT-6 훈련기가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착 즉시 조립되었다. 5월 14일, 여의도 기지에 이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다수의 시민,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AT-6 훈련기에 대한 명명식이 있었다.〈사진 4-6〉, 〈4-7〉 참조) AT-6 훈련기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전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건국기(建國機)’라고 칭하였다.⁵⁵⁾



〈사진 4-6〉 AT-6 고등훈련기



〈사진 4-7〉 AT-6 기념비행을 마친 조종사들

이처럼 한국이 국가 자력으로 AT-6 연습기를 구입하는 중에도 전투기 군원의 시급성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을 이해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었다. 주한미대사관에서는 미국의 1950회계연도의 대한 추가 군원인 980만 달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390만 달러에 상당하는 항공기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국 국무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본 주재 미 극동군사령부 기지에서 F-51형 전투기를 신형기(F-84,

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p.606-607.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1967), p.608.

F-86)로 교체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1950년 3월 6일 무초 대사에 게 폐기하는 F-51 전투기를 한국에 이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⁶⁾ 무초 대사는 “만약 F-51 전투기가 과도하게 낡은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필요성에는 충족될 것”이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미 국무성에 이 전투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 국무성은 전투기를 한국에 원조하는 문제는 그에 앞서 전투기를 운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및 지상 시설, 유류 및 예비품 충당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해결과 조종사 및 정비사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투기 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는 1950년 4월 28일 북한군 이진순 중위가 월남할 때 몰고온 소련제 스토르모비크기(IL-10 전투기)를 넘겨 달라는 미 공군 측의 요청을 받자, 그 보상으로 한, 두 대의 F-51기와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해 보았으나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다.⁵⁷⁾

그러나 이와 같은 전투기 도입을 위한 노력들은 한국 공군에 연락기를 보유한 항공파견대를 유지한다는 미 국가안보위원회의 현행 기본지령을 개정시킬 수 없었으며, 그 개정을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미 국무성이 그 취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노력은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공군의 창설 항공부대는 기구의 확장, 병력증원 및 연습기 도입 등 각 분야에서 착실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1개 독립군으로 창설하는 데는 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항공부대의 지도급 간부들은 공군의 창설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고문단 측과 부단한 교섭을 벌이고 군 내 지도층을 설득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도 계속 건의하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항공기를 얻어 낼 방법과 관련하여 공군의 창설 문제를 숙고한 끝에 「국군조직법」 제정 과정에 이 문제를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법의 초안에 대한 한미 합동심의에서 이 문제는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미 군사고문단 측은 공군이 독립적으로 창설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독립적으로 공군을 유지할 경제력도 없고 고문단 측에서도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인원조차 없다고 반대하였다. 특히 로버트 군사고문단장은 “원래 공군이란 육군의 비둘기통신대가 발전한 것으로, 현재 한국의 육군은 초창기이므로 통신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항공대가 필요할 뿐이고 공군 창설은 육군이 충분히 성장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원칙적으로 반대의 견해를 설명하였다.

56) 서동구 역, 『한반도 긴장과 미국』(서울: 대한공론사, 1977), pp.53~54., 「Muccio 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1950.3.16.)

57) 「Muccio 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1950.3.16.), p.101, 「미 국무성 본드의 한국회담 비망록」(1950. 5. 10.)

이와 같은 고문단 측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대한지원방침」에 근거를 둔 것이었지만, 한국 측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결국 쌍방의 의견과 주장을 조정한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국군조직법」 제23조에 “본 법에 의하여 육군에 속한 항공병이 필요한 때에는 독립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⁵⁸⁾는 막연한 조문을 삽입함으로써 공군 창설에 관한 논란은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리하여 1948년 12월 15일, 이 법이 공포되어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될 때 육군과 해군은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나 공군은 탄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육군항공사령부본부는 1949년 1월 14일부로 항공사령부, 항공기지부대, 항공비행대 및 항공사관학교로 각각 전문화하여 개편됨과 동시에 2월부터 8월 사이에 항공장교 45명과 항공병 1,163명을 모집 육성해 냄으로써 병력 충원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 기간 중인 6월 28일에는 국방부 내에 항공국(국장: 박범집 중령)을 설치함으로써 공군의 창설 기반을 더욱 굳혔다. 10월 1일, 마침내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육군항공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육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공군으로 창설되었는데, 이때 공군의 병력은 1,616명, 항공기는 연락기 20대였다.⁵⁹⁾ 같은 날 「공군본부직제」(1949. 10. 1., 「대통령령 제254호」)에 따라 항공국과 항공사령부 본부기구를 통합하여 공군본부(초대 총참모장: 김정렬 대령)를 설치하여 예하부대 개편에 착수하였다.

육군항공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단장: 이영무 대령)으로, 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사령관: 장덕창 대령), 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교장: 이근석 대령),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자항공대(대장: 이정희 대위)로 각각 개편하였으며, 육군항공사령부 의무처를 모체로 한 공군병원(원장: 장덕승 중령)과 보급중대와 자동차중대를 통합한 공군보급창(창장: 서현규 대위)을 각각 신설하였다. 예하 부대 중 가장 중추가 되는 비행단은 3개 비행중대와 1개 정비중대로 편성되었는데, 비행기의 1일 점검, 연료보급, 부분품 교체 등의 부대정비는 비행중대 내 정비소대에서 담당하게 하였고, 여기서 능력이 초과하는 정비와 야전정비는 정비중대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12월 19일에는 항공기지사령부 산하에 종래 사용하던 여의도와 김포의 기지 외에 5개 기지(수원, 군산, 대구, 광주, 제주)에 기지부대를 신설하였는데, 이 부대들은 유사시 공군비행단의 신속한 전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⁶⁰⁾

공군은 창설 이후 각 교육기관을 통하여 장교 70명, 정비사 78명, 사관생도 97명, 항공병 342명 등을 추가로 모집, 육성하여 1950년 6월 25일 현재 병력은 장교 242명, 하사관

58) 「국군조직법」(1948. 11. 30 제정, 시행), 제7장 부칙 제23조.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p.600-601.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p.93-94.

60) 국방부, 『한국전쟁사연구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6), p.83.

및 병 1,570명, 후보생 85명의 총 1,897명으로 증가하였다.⁶¹⁾ 당시 조종사 수는 102명이었으나 비행기의 부족으로 42명만이 작전 분야에 종사하였는데, 그나마 AT-6 훈련기는 훼손을 우려하여 숙달된 조종사 12명에 한하여 조종하도록 제한하였으므로 나머지 30명의 조종사들은 L-4 및 L-5형 연락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훈련을 유지하였다. 6·25전쟁 직전 한국 공군 보유 항공기 현황은 [표 4-4]와 같다.

[표 4-4] 항공기 보유 현황

1950. 6. 25.

기종 \ 구분	인수	구입	계	사고/고장	보유수
L-4 연락기	10	—	10	2	8
L-5 연락기	10	—	10	6	4
AT-6 훈련기	—	10	10	—	10
계	20	10	30	8	22

※ 참고: 연락기 사고·고장 8대는 월북 2대, 훈련 및 작전 중 사고 6대임.

※ 자료: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1949. 10. 1.~1953. 7. 27.)』, p.66.



라. 예비군 편성

호국군 국군 창설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국방부는 자주적 국방을 위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병력 확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히 통제해 왔으며 당시 국내 병역법마저 지원병제도였기 때문에 정규군을 증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므로 차선의 방책으로 ‘호국군’을 창설하였다.

이는 국내 잉여 인력자원을 사전에 예비전력으로 육성하였다가 장차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가 도입되면 현역화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는 수많은 문맹(文盲) 청년들에게 예비적인 군사훈련을 하여 필요시 정규군에 즉각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1948년 11월 20일, 긴급 「대통령령」으로 「호국 병력에 관한 임시 조치령」이 공포됨으로써 ‘호국군’이 창설되었다. 호국군의 조직에 관해서는 11월 30일 자로 공포된 「국군조직법」

6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1949. 10. 1.~1953. 7. 27.)』(서울: 공군본부 정훈감실, 1962), pp.64-6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626.

제12조와 제15조에 “육군과 해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서 조직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법률에 따라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서 조직하는 예비군임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병원(兵員) 구성은 지원제에 따라 호국군 복무를 지원하는 청년들로 조직하며, 이들의 신분은 장병 모두 예비역으로 특기에 따라 전투부대와 특수부대 요원으로 구분하여 각자 거주지에 주둔하고 있는 현역부대에 소속되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⁶²⁾

[표 4-5] 호국군 창설 현황

1949. 1. 11.

여 단	연 대	위 치
제101여단	제101연대	서울
	제111연대	수원
제102여단	제102연대	대전
	제103연대	전주
제103여단	제113연대	온양
	제105연대	부산
	제106연대	대구
제106여단	제107연대	청주
	제108연대	춘천
	제110연대	강릉

※ 출처: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p.226.

12월 29일에 육군본부 호국국(국장: 신웅균 중령 유임)은 예하 「호국군 부대 편성계획」을 완성하여 1949년 1월 7일에 호국군 제101여단(단장: 오광선 대령), 제102여단(단장: 정승열 대령), 제103여단(단장: 안병범 대령), 제106여단(단장: 권준 대령) 등 4개 여단을 편성하였고, 1949년 1월 10일에는 그 예하에 10개 연대를 창설하여 1월 11일부로 각 여단에 편입시켰다. 호국군 창설 현황은 [표 4-5]와 같다.

육군본부는 호국군 연대 병력충원에 주력하는 한편, 3월 4일 서울 용산(제1지구 경리대 위치)에 본부 직할로 호국군 간부훈련소(소장: 신웅균 중령)를 설치하고 간부육성을 준비하였다. 4월 1일부로 호국군국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내에 호국군사령부(사령관: 송호성 준장)가 창설됨으로써 육군본부 직할의 호국군 여단이 이 사령부 예하로 예속이 변경되었다. 7월 16일, 호국군 제105여단이 추가 편성됨으로써 제103연대와 제113연대는 제105여단으로, 제107연대는 제102여단으로 각각 예속 변경되었으며, 청주의 제106여단이 춘천으로 주둔지를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호국 육군은 5개 여단, 10개 연대로 증가하여 총 병력이 20만 명에 달하였으나, 무기와 장비는 단 한 정(대)도 없었고 다만 교육훈련 시에 현역부대에서 일제 38 및 99식 소총 몇 정을 빌려다가 활용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호국군은 복잡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진통을 겪은 끝에, 1949년 8월 6일 새로운 「병역법」(지원제를 징병제로 개정)이 공포됨으로써 8월 31일부로 해체되었다.

62) 국회사무처, 『국회사(제헌국회, 제2대, 제3대 국회)』(서울: 국회사무처, 1963), p.44.

청년방위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모든 청년단체들을 하나로 결합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교시에 따라 당시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던 청년단체 중 5대 단체(대동청년단, 청년조선총동맹, 국민회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서북청년회)와 군소 20여 개 단체는 각자의 고집과 전통을 버리고 단합하기로 합의하고 1948년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대한청년단(단장: 신성모)의 결단식을 거행하였다.⁶³⁾

대한청년단 단원들은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아래 그 조직은 급속히 확대되어 나갔다. 서울에 있는 9개 구지부(區支部)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개 도지부, 17개 지방 또는 특별지부, 180개 시지부 및 4,230개의 읍, 군 또는 가두지부(街頭支部)가 편성되었으며, 단원 수는 남녀 정규단원 수만도 200만에 달하였고, 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800만 단원임을 자처하였다.⁶⁴⁾ 대한청년단은 ‘반공’과 ‘국방’을 이념으로 한 3대 강령⁶⁵⁾을 내걸고, 주로 단원의 사상적 무장을 통하여 불순세력의 타도와 사회 치안유지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처럼 국가보위와 치안을 위한 활동의 비중이 점차 커지자 단원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선 각 지부에서 간부 요원 720명을 선발하여 2차로 나누어 육군 보병학교(경기도 시흥) 배속장교교육대(대장: 이명재 중령)에 입교시켜 40일간의 군사훈련을 이수하도록 한 후 예비역 소위로 임관 배출하였다.

1949년 8월 6일, 「병역법」 개정(「법률 제49호」)에 의해 호국군이 해체되자, 이 대통령은 당시 긴박한 국방정세를 고려하여 민병 20만의 조직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1월 초에 「병역법」 제77조에 따라 대한청년단 조직을 근간으로 ‘청년방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병역법」 제77조는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11월 15일, 육군본부 교도국을 개편하여 청년방위국(국장: 김종평 대령)을 설치하였으며, 청년방위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방위학교’를 창설하였다. 12월 1일에는 충남 온양에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교장: 박승훈 대령)를 개설하고⁶⁶⁾ 청년방위대 간부요원을 선발하여 1950년 1월 16일부터 1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방위 소위로 임관 배출하는 한편, 과거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해체 후 개편된 호국군의 장교들을 우선 청년방위간부훈련학

63)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 건국 10주년』(서울: 건국기념사업회, 1950), pp. 303-305. 조선민족청년단(단장: 이범석)은 1949년 2월에 가입. 호국군의 병력수준에 관해서는 1948년 10월 초 국회에서 「국군조직법」을 심의할 당시에 육, 해군 모두 현역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호국 육군은 10만 명, 호국 해군은 1만 명 수준으로 규제한 바 있었다.

64)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 건국 10주년』(1950), p.305.

65)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 건국 10주년』(1950), p.306. ① 심신을 연마하여 국가의 간성이 되자.

② 이북 동포와 합심하여 통일을 완수하자. ③ 파괴분자를 숙청하고 세계평화를 보장하자.

66) 「국방부 일반명령 제72호」(1949. 12. 1.)

교에 입교시켜 2주간의 보수교육을 마치게 한 후 고급 간부로 등용하였다.

이리하여 전국 시, 도, 군, 면 단위에서는 기존 대한청년단 조직을 활용한 청년방위대 편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각 시, 도에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단장 계급: 방위 중령), 군 단위에 연대급에 해당하는 방위 지대(지대장 계급: 방위 소령), 면 단위에 대대급에 해당하는 방위 편대(편대장 계급: 방위 대위), 리 단위에는 중, 소대급에 해당하는 구대(구대장 계급: 방위 중위) 및 소대(소대장 계급: 방위 소위)를 각각 설치하였다. 청년방위대는 1950년 4월 말에 편성이 완료되었다.

제 3 절 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1. 6·25전쟁기(1950. 6.~1953. 7.)

정부수립 후 국방부는 38도선을 방어하는 한편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만 명 수준의 군비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부대의 증편과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장비원조를 미군 측에 요청하였으나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반도 군사정책의 결과로 바라는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육군은 8개 보병사단과 2개 독립연대의 전투부대와 대대 규모의 병과별 지원부대를 보유했으며, 병력은 총 94,000여 명이었고, 주요 장비로는 M3 105mm 곡사포가 최대 구경 화기였으며, 그 밖에 2.36"(인치) 로켓포와 57mm 대전차포 등을 장비하고 있었다. 해군은 3개 함대와 훈련정대로 구성된 해상작전부대와 이 작전을 지원할 통제부 및 6개의 경비부로 편성되었으며, 병력은 7,700여 명이었고, 함정으로는 PC, AMS, JMS 등 경비정 28척과 보조함 43척을 포함하여 모두 71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2개 대대 1,100여 명 수준이었으며, 81mm 박격포를 비롯한 일부 공용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화기로 장비되어 있었다. 공군은 소규모의 비행단과 작전지원부대인 항공기지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병력은 1,800여 명 수준이었고, 항공기는 AT-6 고등훈련기 10대, L-4 연락기 8대, L-5 연락기 4대 등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⁶⁷⁾

이에 비해 북한은 10개의 전투사단과 1개의 전차여단을 주축으로 한 전투부대에 T-34 전차, 122mm 곡사포, 120mm 박격포 등으로 중무장한 육군과 30척의 어뢰정 및 9,000여 명의 육전대로 구성된 해군, 그리고 1개 항공사단에 IL-10, YAK-9 등 전투기를 비롯한 220여 대의 항공기로 장비된 공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67)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27.

이와 같이 우리 국군은 군비에 북한군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열세한 상태에서 기습남침을 받게 되었으며, 그 미비한 군비마저도 개전 초기에 심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자력으로는 북한군을 저지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개전 직후 참전하기 시작한 유엔군의 지원과 미국의 군사원조 특히 직접군원에 힘입어, 국군은 군비를 지속적으로 재건·증강·확장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가. 육군

육군은 1950년 7월 지연작전을 수행하면서 초기작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은 8개 사단을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재편성하였다가, 반격작전기를 이용하여 1950년 말까지 3개 군단 10개 사단으로 증편하였으며,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전후 자주국방을 목표로 「20개 사단 확장계획(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1952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8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였다.⁶⁸⁾ 전쟁 발발 이후 중공군 개입 전까지 부대 재편성 및 증편현황은 [표 4-6]과 같다.

[표 4-6] 중공군 개입 전까지 부대 재편성 및 증편현황

주요부대	제1차 재편성 (1950. 7. 5.)	제2차 재편성 (1950. 7. 15.~24.)	증 편 (1950. 8.~11.)
상 황	• 지연작전 – 6·8사단 안전하게 철수 – 6개 사단 전제 상실 • 수도·1·2사단 재편성 • 전투장비 부족	• 한·미군 간 전선조정 • 2사단 해편 • 1·2군단 배속부대 조정 • 3사단 육본직할	• 낙동강 방어선 형성 • 복진 • 국군 재건 추진 – 5개 사단 완편화 – 10개 사단으로 증편
제1군단	• 1950. 7. 5. 군단 창설 – 수도·1·2사단 배속	• 수도·8사단 배속	• 수도·3사단 배속
제2군단		• 1950. 7. 15. 군단 창설 – 1·6사단 및 3사단 23연대 배속	• 6·7·8사단 배속 – 7사단 재창설
제3군단			• 1950. 10. 16일 창설 – 9·11사단 신편 배속
육본 직할		• 3사단 완편 – 태백산맥 지휘체계문제	• 2·5사단 재창설
미 제1군단			• 1사단 배속

※ 자료: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pp.361-402 ;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 pp.332-335 참조.

68)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1987), p.337. 「20개 사단 확장안」은 1952년 1월에 집권한 아이젠하워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한정책(한국전쟁의 조기종결, 한국군의 증강과 미군의 투입 감축)에 의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육군은 개전 당시에는 전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으나 1950년 11월부터 전차부대 편성에 대비하던 중 미군으로부터 M36 전차가 인도되기 시작함에 따라 1951년 10월 5일 2개의 전차중대를 시작으로 전차부대를 증설하기 시작하여 휴전시에는 3개의 전차대대(9개 중대)로 증강되었다. 1950년 7월 초부터 미군의 직접군원으로 M2 105mm 곡사포를 보급받게 되자 ‘야전포병단’을 창설하여 사단에 1개 대대씩을 예속조치하였으며, 이를 모체로 1953년 1월부터 ‘사단포병단’을 창설하였다. 이리하여 보병연대 직접지원 및 사단 일반지원 개념의 화력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육군은 휴전 당시 3개 군단 18개 사단의 전투부대와 대대·단·창급 지원부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때 병력은 약 550,000명이었고, 그밖에 M36 전차, 155mm 곡사포, 4.2" 박격포 등 중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나. 해군

해군은 3개 정대로 해상을 봉쇄하며, 북한 해군에 대응하던 중 1950년 6월 27일부터 미 해군의 전개와 유엔 해군의 참전에 따라 한국 해군은 미 해군과 연합작전을 벌였으며, 7월 14일에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됨에 따라 유엔해군사령관(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서 제해권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 1950년 8월 16일에는 제1정대를 모체로 제1함대를 창설하고 1951년 1월까지 그 외의 정대도 이에 통합함으로써 해상세력을 함대체제로 발전시켰다. 그 후 해군은 함대의 세력이 점차 증강되자 1952년 8월 1일을 기하여 진해에 ‘제1함대사령부’⁶⁹⁾를 설치하는 한편, 함대의 조직을 6개 전대(호송·서해·동해·남해·수송·소해전대)와 어뢰정(PT) 편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해군은 휴전 시까지 1개 함대를 주축으로 통제부, 경비부 그리고 창급 지원부대를 갖추게 되었으며, 병력은 14,863명으로 증가하였고, 함정은 PC(경비함), AMS(소해정), JMS(소해정) 외에 PF(호위함), PT(어뢰정), PCS·LSSL(상륙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50척의 전투용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해병대는 1950년 9월 1일 해병 제1연대를 창설하였고, 제1연대는 미 해병 제1사단과 더불어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서울을 탈환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1951년에 3개 독립중대를 편성하고 동·서해안 전략도서에 상륙시켜 도서를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모체로 도서부대가 창설되었다. 해병대는 증편을 거듭하여 휴전 시에는 제1전투단(4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1개 전차중대로 편성), 연대규모의 도서부대, 해병막사, 그리고 해병

69) 제1함대사령부는 1953년 9월 10일 한국함대로 개편됨.

교육단을 편제하게 되었으며, 총 병력은 22,174명으로 증가하였고, M36 전차, 105mm 곡사포 등의 중장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공군

공군은 6·25전쟁 이전까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여 개전 초에는 다만 정찰·연락임무만을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7일 미 공군의 전개와 유엔 공군의 참전으로 제공권을 확보한 가운데 군비증강을 추진하여, 1950년 7월 2일에는 미 공군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함으로써 최초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항공전력을 비행단과 정찰비행대로 재편성하였다.

1951년부터, 공군은 단독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미 공군으로부터 추가로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하여 같은 해 8월 1일부로 비행단을 제1전투비행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52년도에는 「공군 확장 3개년 계획(안)」을 수립 추진하여 항공전력을 증강함으로써 1953년 2월에는 1개 전투비행단(제10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제1훈련비행단)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공군은 휴전 시 2개의 비행단과 통신·기상·시설·기지·특무부대 등 지원부대를 갖춘 공군으로 확장되었으며, 병력은 11,481명으로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F-51 80대를 포함하여 110대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군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후의 국방에 대비한 군비확장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육군이 3개 군단 18개 사단, 해군이 1개 함대, 해병대가 1개 전투단, 공군이 2개 비행단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총 병력은 약 600,000명에 이르렀다. 장비면에 있어서도 근대적인 중장비와 전투용 함정 및 전투기를 갖추게 되었다.

2. 전후 정비기(1953. 7.~1961. 5.)

국토가 양분된 채 휴전이 성립되자 정부는 전쟁의 종결이 아닌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간주하고 전후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재침에 대비하여 전력증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1953년 10월 1일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1954년 11월 17일에는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휴전 후에도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육군의 전력 규모는 전쟁개시 직전 8개 사단 약 10만 명 규모에서 휴전 직후 20개 사단 약 60만 대군으로 증강되었다.

북한이 「정전협정」상의 ‘군비증강 금지조항’(제13조 D항)⁷⁰⁾을 위반하며 계속 군비증강을 꾀하자, 1957년 6월에 이르러 유엔군 측은 이 조항의 준수의무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군은 신형장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순조로운 군비확충을 실현하게 되었다.⁷¹⁾ 그리하여 국군의 군비증강이 진행되던 중 이러한 군비증강이 한미 양국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1958년에 이르러서는 국군의 병력규모를 720,000명 수준에서 630,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었다. ([표 4-7] 참조)⁷²⁾

[표 4-7] 국군 감군 현황

군 별	휴전후 병력 수준 (1954. 11. 17. 책정)	감군전 규정병력 (1958)	감군 병력 (1958)	감군후 병력수준 (1959년부터 적용)
육 군	661,000	658,460	- 93,460	565,000
해 군	15,000	15,000	+ 1,600	16,600
해병대	27,500	27,500	- 1,500	26,000
공 군	16,500	19,040	+ 3,360	22,400
계	720,000	720,000	- 90,000	630,000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 p.330.

이때 국방부는 93,000여 명의 육군 병력을 감원했지만 공군은 3,000여 명을 증원하여 총 90,000명의 병력을 감축하게 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국군은 장비의 질적 현대화와 화력의 증강을 꾀하면서 1960년대를 맞이하였다.

가. 육군

군구조 정립 육군은 전쟁기에 양적으로 팽창된 부대를 전방작전, 후방지원, 교육훈련의 3대 기능으로 재편성하여 군구조를 정립하고 이를 기간으로 군을 발전시키기로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12월에는 제1군사령부를, 1954년 7월과 10월에는 교육총본부와 제2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하였다.

제1군사령부는 1953년 12월 15일 강원도 인제에서 창설되었으며, 주 임무는 군단과 사

70) 「정전협정」 13조 D항. “한국 국경 밖으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금지한다.”

71)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06~107.

72)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30.

단을 지휘하여 전방방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제1군사령부는 1954년 3월 21일 당시 미 제 10군단 지휘하에 있던 한국군 제1·제2·제3군단의 지휘권을 이양받았으며, 1954년 12월 2일 제5군단을 추가로 배속받아 총 4개 군단(제1, 2, 3, 5군단) 16개 사단을 지휘하여 155마일 전선 중 84마일을 담당하게 되었다.⁷³⁾

제2군사령부는 195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창설되었으며, 창설 후 약 2개월간 육군본부와 미 후방기지 병참사령부로부터 사령부 임무수행에 관한 교육, 특히 병참기능 및 군수운영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아 군수지원사령부로서의 기능 발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제2군사령부는 1955년 2월 1일부로 육군본부 직할의 군수기지창을 비롯한 군수시설과 휴전 후 신편된 5개 군관구(제1, 2, 3, 5, 6군관구), 그리고 10개 예비사단을 예속 받아 후방지원(군수지원, 예비군관리)과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담당하였다. 군수지원체제가 구축되자 1955년 4월부터는 육군본부로부터 육군본부 직접통제하에 실시 중이던 육군에 대한 군수지원임무를 제2군사령부가 인수하여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7월부터는 해·공군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공통지원임무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수행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책임을 미 제8군으로부터 인수하게 되었다.⁷⁴⁾

교육총본부는 1954년 7월 6일 전남 광주에서 창설되었으며, 학교 및 훈련소를 예속 받아 교육기관의 총괄사령부로서 교육훈련을 전담하였다. 교육총본부는 창설 이후 1958년까지 17개 병과학교, 3개 훈련소(제1·2·여군훈련소), 교재청을 지휘감독하는 강병육성기구로 발전하면서 육군의 교육훈련계획은 물론 전술교리, 장비 및 화기의 발전연구, 장병의 주특기교육 등 교육훈련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았다.⁷⁵⁾

감군과 재편성 육군은 1958년 말에 단행된 「한국군 감군계획(減軍計劃)」에 따라 2개 사단과 93,000여 명의 병력을 감축하게 되었고, 1959년에는 육군본부 조직에 ‘일반참모부장제’를 도입하였으며, 제2군사령부의 전군 군수지원임무와 교육총본부의 행정·기술병과학교 교육업무를 육군본부가 직접 맡게 되었고, 1960년도에는 ‘군수기지사령부’를 창설하여 육군본부가 직접통제하던 전 군수지원부대를 군수기지사령부 예하로 전환시켰다. 이와 같이 육군은 육군본부의 개편과 군수지원체제 및 교육제도의 개선에 따라 1960년대를 앞두고

73)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389-390 ;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창군~1995)』(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7), pp.67-68. 당시 5개 군단, 20개 사단 중 제6군단과 4개 사단(제1, 5, 12, 28사단)은 한미제1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다.

74)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90 ;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창군~1995)』(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7), pp.77-79.

75)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392-393 ;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창군~1995)』(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7), pp.91-94.

‘군수기지사령부’를 창설(1960. 1.)하는 한편, ‘교육총본부’를 해체(1960. 5.)하는 등 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제1군·제2군·군수기지사령부 체제로 재편성되었다.⁷⁶⁾

주요 사령부의 발전 과정을 보면, 먼저 제1군사령부는 1958년까지 4개 군단, 16개 사단으로 전방방어임무를 수행하였으나, 1958년 12월 24일에는 감군계획에 따라 제20사단과 제22사단을 해체함으로써 14개 사단으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이 해 4월 1일부로 제6군단을 예속받게 됨으로써 5개 전방군단(제1, 2, 3, 5, 6군단) 모두와 18개 전방사단 모두를 지휘하는 야전군으로 발전하였다.⁷⁷⁾

제2군사령부는 육군의 제도개선에 따라, 1959년 1월 1일부터 전군 군수지원 임무가 육군본부(군사참모부)로 이관됨으로써 예하 각 병과기지창을 비롯한 전군에 대한 군수지원부대를 육군본부로 예속전환시킨 후, 후방지역방어와 예비군관리업무를 전담하였다. 그 후 제2군사령부는 1960년 6월 1일에 광주에서 창설된 전투병과교육사령부(보병·포병·기갑학교)를 예속받았으며, 이에 육군으로부터 예속전환된 화학학교와 항공학교를 배속시켜 상무대를 전투병과학교 기지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60년에는 4개의 군관구와 10개의 예비사단, 5개의 병과학교 그리고 자체지원 병과지원부대 및 경비부대를 지휘하여 후방지역 방어 및 경계, 예비군관리, 전투병과학교 교육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⁷⁸⁾

군수기지사령부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의 직접통제 하에 전군의 군수지원 임무를 전담할 중간사령부로서 1960년 1월 15일 부산에서 창설되었다. 이 사령부는 창설된 후 주로 부산에 위치한 2중 군수시설을 비롯한 각 지원병과 기지창재생창생산창을 육군본부로부터 인수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육해공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제2관구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이 부대가 수행하던 경상남도 지역에 대한 후방지역 방어 및 경계임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⁷⁹⁾

교육총본부는 1959년에 이르러 육군본부가 종전까지 시행한 집중적이고 단일화된 교육체제로서는 현대화를 지향한 다양화 추세에 군사교육소요를 충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행정·기술병과학교는 병과감이 직접관장하게 하며, 전투병과학교는 별도관리하기로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다음해인 1960년 5월 31일부로 해체되었다.⁸⁰⁾

76)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94.

77)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94 ;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창군~1995)』(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7), p.71.

78)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97 ;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창군~1995)』(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7), pp.80-81, p.83.

79)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98. ;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창군~1995)』(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7), pp.80-81, pp.98-100.

80)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399.

그밖에 육군은 기간 중 제1고사포여단, 제1공수특전단, 여군대대 등 직할부대를 창설함에 따라 1960년 당시 제1군·제2군·군수기지사령부를 주축으로 18개 사단과 10개 예비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병력은 총 565,000명이었다. 주요 장비는 미국의 군원에 의존하였는데, 군원장비로는 1957~1959년까지 M4A3 전차 495대와 차량 20여 중 54,955대를 도입하였으며, 1954~1960년까지 155mm 평사포 1개 대대와 8인치 곡사포 3개 대대분의 화기를 비롯하여 이미 장비된 105mm 및 155mm 곡사포 등 각종 총포를 보유하였다. 한미간 추진된 신형장비 교체계획에 따라 1963년까지 전량 교체를 목표로 1960년에 신형 2½톤 디젤 차량 4,747대, M47 전차 215대가 도입되었다.⁸¹⁾

나. 해군

해군 해군은 1953년 9월 10일에 제1함대를 ‘대한민국함대’(이하 한국함대)로 확대 개편한 후, 1955년~1956년 사이에 미 해군으로부터 DE(호위구축함) 등 30여 척의 함정을 인수하여 함대조직을 증편하였으며, 1957년도에는 함대에 항공대를 편성하는 등 함대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 이로써 해군은 1960년도까지 한국함대를 2개 전단, 2개 전대 그리고 함정 훈련단 및 항공대로 증편함과 아울러 통제부와 경비부 편성도 정비하는 한편 공창의 시설 능력도 크게 발전시켰다. 또한 경비부와 통제부의 조직이 정비되었고, 공창시설이 확장되는 한편, 보급기구와 교육기관, 의료시설이 보강되었고, 과학연구소 등 특수부대도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해군의 병력은 16,000여 명이었으며, 함정으로는 DE 2척을 주축으로 한 전투용 함정 63척을 보유하였다. 한국함대는 1954년 9월~1955년 3월 사이에 유엔해군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함대에 대한 작전권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영해의 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⁸²⁾

해군 진해공창은 1954년 11월 13일 3,000톤급 건선거(建船渠) 공사를 완공(1951. 6. 착공)함으로써 한국해군이 보유한 모든 전함의 자체수리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진해공창의 조함(造艦)·조병(造兵)·조기(造機)공장의 시설 및 기술능력을 발전시켜 함정을 수리 및 정비하는 한편, 일부 소형함정을 건조하기도 하였고, 함정에 필요한 각종 부수장비와 기계를 제작하였다. 1954년 6월 진해공창에서 수상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자 이의 운용에 대비하여 함대에 건공반을 편성하였으며, 이 반은 발전을 거듭하여 1957년 7월 함대

81) 육군본부, 『육군사 제2집』(서울: 육군본부, 1960), p.132; 육군본부, 『육군사 제3집』(서울:육군본부, 1960), p.161; 육군본부, 『육군사 제4집』(서울:육군본부, 1960), pp.84-85. ;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405-406. 1954~1956년까지 군원장비와 1954~1960년까지의 도입 현황은 자료부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82)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411-413.

항공대로 증편되었고, 장비된 단발수상기로 해상초계, 함포탄착수정, 해난구조, 긴급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1955년 5월~8월 사이에 당시 해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함정인 PF(호위함)의 수리에 성공하여 공창의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⁸³⁾

해병대 해병대는 1954년 2월 1일 제1전투단을 기간으로 제1여단을 창설하여 파주 금촌에 주둔하면서 상륙작전부대로서 조직을 정비하여 서부전선 및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고, 1954년 3월 17일 미 해병대 제1사단의 한국 철수로 인해 작전지역에 대한 작전권을 인수하였다. 1955년 1월 15일에는 제1여단을 기간으로 제1상륙사단을 창설하여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륙훈련을 하다가 1959년 3월 12일 금촌에서 포항으로 이동하였다.⁸⁴⁾ 동해안의 여도·모도·사도·황토도·웅도·양도 부대와 초도·석도 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진해로 철수하여 제2연대의 모체가 되었으나,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했던 서해부대는 계속 잔류하여 5개 전략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4년 3월 1일 미 해병대 제1사단이 한국을 철수하자 이 지역에 대한 작전권을 인수하였다.

당시의 해병대 병력은 23,764명이었으며, 장비는 M47 전차, 105mm 곡사포 등 중장비와 LVT 등 상륙용 장비, 그리고 O-1, U-6 등 관측용 항공기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다. 공군



정전 후 공군은 북한군의 증강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영공은 자체 능력으로 방위할 수 있는 군비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제10전투비행단을 제트화하고, 전술부대를 확장하며, 작전지원부대를 창설하여 전술공군작전체제를 추진하는 것을 당면사업으로 하였다. 공군은 1954년 3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공군 고위회담과 11월 27일 오산에서 개최된 한미군사회담 공군분과위원회에서 한국 공군력 증강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미국 측은 1개 제트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C-46 수송기를 도입하는 등 한국공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55년도에 제10전투비행단을 제트비행단화하고 제5혼성비행단을 창설하였으며, 6월과 8월 미공군으로부터 F-86 전폭기 14대와 T-33 훈련기 10대를 인수하였고, 관제정보부대와 항로보안단을 창설함으로써 전술공군작전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⁸⁵⁾

83)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414-415.

84)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70년사』(화성: 해병대사령부, 2019), pp.117-121. 제1상륙사단은 「대통령령 제1468호」(1959. 3. 30.)에 따라 정식으로 사단 승인을 받았다.

85)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422-423.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완전한 제트비행단으로 전환된 것은 F-86F 68대를 추가로 인수하게 된 1956년 4월

공군은 유엔군의 「정전협정」 제13조 D항(군비증강 금지)의 폐기선언(1957. 6.)을 계기로 전력증강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1958년 8월 1일 제11전투비행단이 창설됨으로써 전술공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⁸⁶⁾

[표 4-8]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현황(1961~1971)

연 도	무 상 군 사 원 조		대외군사판매 차관(100만 달러)	활 율
	달러화(100만 달러)	원화 환산(100만 원)		
1961	263.4	34,242.0		1달러: 130원
1962	136.9	17,797.0		
1963	160.4	40,902.0		1달러: 255원
1964	140.0	35,700.0		
1965	120.0	30,600.0		
1966	172.0	43,860.0		
1967	170.4	46,860.0		1달러: 275원
1968	263.0	72,325.0		
1969	146.0	40,150.0		
1970	155.0	44,950.0		1달러: 290원
1971	346.0	110,720.0	15.0	1달러: 320원

※ 출처: 경제기획원, 「예산개요(1962~1972)」; 국방부, 「국방예산통계(1961~1971)」

※ 무상군사원조 중에는 포장수송비 및 UN지원비 등 포함.

또한, 공군은 1957년 후반기부터 추진한 현대화계획에 따라 1958년도에 군원으로 신예기인 RF-86F 정찰기, H-19D 구조용 헬리콥터, LT-6G 공중통제기를 도입하였으며, 1960년도에는 F-86D 요격기(邀擊機)와 T-28A 훈련기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도에 공군 병력은 총 22,057명으로서 정전 당시보다 배로 증가하였고, 보유한 항공기는 F-86D 21대, F-86F 135대, RF-86F 12대를 비롯하여 C-46 18대,

1일이었다.

86)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 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426-427. 제11전투비행단은 최초로 F-86F 2대를 인수한 후 단계적으로 전폭기를 도입하여 1960년 4월 전투비행 전대를 완성하였다.

H-19 4대, T-33A/ T-28A 32대 등 총 274대로서 정전 당시 F-51 전폭기, L형 연락기, T형 연습기 등 프로펠러기 총 110대였던 데 비해 수적, 질적으로 크게 증강되었다.⁸⁷⁾

제 4 절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1.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한국은 미국의 대한군사원조가 직접군원에서 정상군원⁸⁸⁾으로 전환된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연평균 2억 8,5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1961년에 등장한 케네디 행정부는 군사원조보다 경제원조에 더 중점을 두는 외국원조 방침을 갖고 있어서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점차 감소하였다. 1961년에는 2억 6,340만 달러, 1962년에는 1억 3,690만 달러, 1965년에는 6·25전쟁 이후 가장 적은 1억 2,000만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1966년부터는 한국군의 월남파병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현황은 [표 4-8]과 같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기까지 한국의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196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비 총액(1964년도)의 60% 이상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했으며, 한국군의 장비는 물론이고 장비의 운영유지비까지도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로 충당하였고, 한국 정부의 예산은 겨우 병員유지(兵員維持)를 위한 급식과 급여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후,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국방비의 자주적 부담 비율이 점차 높아져 1968년도에 들어서서 국방비 총액의 50% 선을 넘게 되었다.⁸⁹⁾

1968년에는 북한 무장공비의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갑자기 고조되자 미국은 한국에 추가군원 1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 추가군원으로 F-4D 팬텀 전폭기와 대간첩작전 장비를 도입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전력의 증강이나 부대구조의 변화 없이 기존 전력의 유지에만 주력했으나 한국군의 월남파병

87) 국방부, 『국방사 제2집(1950. 6.~1961.5.)』(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p.431-432.

88) 미군은 한국전쟁 시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그들의 육·해·공군 예산에서 직접지원(직접군원)하던 것을 1956년부터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대의원조자금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 대의원조자금에 의한 원조를 정상군원이라고 한다.

89)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239.

대가로 1966년의 「브라운 각서」에 의거 1967년부터 미 군원으로 일부 전력증강이 이뤄졌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상황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의 도발은 날로 격화되고,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괌 독트린(Guam Doctrine)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닉슨 독트린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군 현대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한국 안보가 불안해졌으나, 월남전 특수로 한국의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1969년부터는 한국 국방재원의 절반 이상(1969년 국내재원이 51.7% 점유)을 한국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대미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2. 군비확충

가. 육군

기간 중 각 군의 주요 군비의 변천사항을 살펴보면, 육군은 1개 전투사단의 창설과 3개 예비사단을 준전투 사단화하고, 4개 나이키(Nike) 및 호크(Hawk) 방공포병대대와 2개 기갑여단을 창설하였다.

1965년 10월 수도사단이 월남에 파병된 데 이어 1966년 9월 보병 제9사단이 증파됨에 따라 전방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966년 7월 보병 제32예비사단을 전투사단으로 완편하여 제2군사령부로부터 제1군사령부로 예속을 변경하고, 이해 9월 보병 제51예비사단을 창설하여 제2군에 예속시켰다.

그리고 포병은 1966년 8월 8인치 곡사포 2개 대대가, 1968년 8월에는 최초의 자주포병인 8인치 곡사포대대가 각각 창설되었다.

방공포병은 항공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기존 고사포로는 중·고고도 및 고속항공기에 대한 대공사격이 제한됨에 따라 1964년 4월 국군 최초의 호크 방공유도탄부대인 제111 호크 방공포병대대, 다음 해 6월에는 제222 나이키 허큘리스 방공포병대대를 각각 창설하여 새로운 지역방공 개념에 따라 배치 운용하였다.

기간 중 기갑전력은 1967년부터 국군 파월 때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대한군원에 의해 국군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전차의 질적 향상을 위해 M36 및 M4A3E8 전차를 M47 및 M48 전차와 장갑차로 점차 교체하고 부대구조를 조정함으로써 현대전에 적합한 부대로 개편하였다.

이외에도 육군은 전투부대의 각종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부족장비를 보강함과 아울러 전방 방어지역에 대한 거점과 수도권 방어를 위한 각종 전술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해군 및 해병대

해군은 1962년 7월 1일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PCE급 함정과 1963년 5월에 도입한 구축함(DD급)을 제1전단 예하에 배치함으로써 구축함 시대를 맞이하였다.

1966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해상침투를 봉쇄하기 위해 해군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축함 등 각종 함정의 지원을 미국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기간 중 DD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총 44척의 각종 전투함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1967년부터 고속정과 해상초계항공기의 도입 그리고 각 함정의 레이더 소너(수중음향탐지기)를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간첩작전 및 해·공 입체작전능력을 강화하였다.

해병대는 1965년 10월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을 창설하여 월남에 파병하였고, 제5여단과 155mm 1개 곡사포대대를 창설하여 동 여단으로 하여금 제1여단이 담당했던 김포반도와 강화도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제1여단은 제1상륙사단에 복귀시켰다.

다. 공군

공군은 「항공기 현대화계획」에 따라 1965년부터 F-5A 전폭기를 도입하여 마하(Mach)시대를 열었으며, 1969년에는 F-4 D 전천후폭격기 17대를 도입함으로써 ‘마하 2’의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공군은 기간 중 작전 및 전술부대의 창설, 작전사령부의 설치, 유도탄의 도입, 방공관제정보부대의 확장, 그리고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에 대한 정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군수사령부의 신설 등으로 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로써 공군은 제공권 획득을 위한 대공 및 방공작전을 비롯하여 후방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 전술항공통제, 전술항공정찰 및 공수지원 등 각종 임무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공군은 1969년 말 당시 작전사령부 예하에 3개 전투비행단, 1개 방공관제단, 1개 공수비행단, 2개 전투지원전대와 공군본부 예하에 1개 훈련비행단과 군수사령부 등 지원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향토예비군 창설

기간 중 군비 면에서 특기할 사항은 향토예비군의 창설이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지하공작활동을 통한 종래의 남한 적화전략을 바꾸어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를 전·후방에 침투시켜 마치 북베트남이 대남베트남 게릴라전을 수행하듯이 한국을 교란

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는 한국을 극도로 교란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여건이 성숙되면 정규전 및 비정규전을 동시에 병행하여 한국을 강점하려는 북한의 기본전략이었다.

향토예비군의 창설 동기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1월 23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대한 처리 시 미국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에 치중하고 한국방위 문제를 경시한 데 대한 정부의 한국 안보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2월 6일 미국 측에 북한의 침략 행위에 단호한 ‘힘의 보복과 응징’을 요구하고, 이러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미국의 보장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전선개통식(慶全線開通式)’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① 종래의 유엔 중심의 국방태세에서 자주적 국방태세로 전환하며 ② 향토예비군 250만 명의 무장화와 ③ 무기생산 공장을 연내 건설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다.⁹⁰⁾ 박 대통령의 하동 발표에 따라 이해 3월 7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3월 15일부터 전국 191개 시·구·군에 현역 대대장이 파견되어 향토예비군을 조직하기 시작하여 4월 1일 대전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이 거행됨으로써 향토방위전력이 조직화되었다.

향토예비군부대의 지휘관리는 1968년 3월에 파견된 현역 대대장들이 조직을 편성한 후 군의 통수계통으로 이루어졌고,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은 경찰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향토예비군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에 군·경 간 협조가 어렵고, 업무체계가 이원적으로 복잡하여 창설 2개월 후인 5월 25일 각 경찰서장에게 예비군의 지휘관리권을 이양하고 군 지역사령관이 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예비군 조직을 지휘관리하기에는 경찰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비역 출신 간부급 예비군과 경찰 간에 잦은 마찰 등으로 1971년 7월에 예비군에 대한 지휘관리권이 다시 군으로 환원되었다. 군은 후방사단장이 지역별로 부대를 전개해 전개부대를 통해서 예비군을 지휘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예비군의 조직은 거주지 단위인 ‘지역예비군’과 직장 단위인 ‘직장예비군’으로 구분하였고, 편성 대상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하사관, 제1예비역 병 그리고 필요시 제2예비역 병과 지원자로 하였다.

1969년부터 예비군 편성은 그 임무에 따라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으로 구분되었으며, 동원예비군은 육군 출신 예비역장교, 준사관, 하사관과 30세 이하의 예비역 그리고 방위소집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로 편성되었다.

1969년 말에는 4,210개 지역중대와 960개 직장중대에 병력은 총 222만여 명에 달하였고, 예비군 무장은 창설 당시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기 중 91,210정의 소총을 지급

9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66.

하였으나 그 후 연차적으로 군원도입, 정부매입, 직장 자체구입 또는 현역군의 대체 구형 장비 재활용계획에 따른 전환 등의 방법으로 예비군의 무장이 강화되었는데, M1 소총 29만 8천여 정, 카빈총 39만 8천 정, 기관단총 8만 6천여 정 등 총 78만 3천 정이 예비군에게 지급되었다.

제 5 절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

1.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 시행

1969년 7월 25일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따라 1969년부터 주베트남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보장되면 1972년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요지의 서한을 닉슨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닉슨 대통령은 5월 26일 “1971~1975년 기간 중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위한 군원 제공”을 제의해 왔으며, 미국은 7월 5일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할 것임을 정식으로 통고했다.⁹¹⁾(〈사진 4-8〉 참조)



〈사진 4-8〉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차

그리하여 1970년 7월 21~2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3차 한미 국방부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협의하였으며, 1971년 7월 12~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이 요구한 15억 9,600만 달러 규모의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집행된 자금은 총 11억 4,610만 달러⁹²⁾로, 기간을 1977년까지로 2년이나 연장하면서

91) 주한미 제7보병사단은 1970년 후반부터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1971년 3월 27일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주한미군은 인가병력이 63,000명에서 43,000명으로 감소하였다.

92) 국방부, 『국방사 제4집』(2002), pp. 418. 「한국군 현대화계획」에 배정된 내역은 무상 군원 9억 8,800만 달러(신규 군사원조가 8억 4,190만 달러, 초과품 장비비가 1억 4,610만 달러),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차관) 5억 2,820만 달러 등 총 15억 1,620만 달러였다. 그러나 신규 군사원조 8억 4,190만

도 지원액은 최종적으로 9억 8,800만 달러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5억 2,82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은 FMS 차관으로 대체되어 한국의 제1차 전력증강사업(울곡사업)에 포함됨으로써 당초 「한국군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초래되었다. 「한국군현대화계획」에 의한 도입 추진 장비 목록은 [표 4-9]와 같다.

[표 4-9] 「한국군현대화계획」에 의한 도입 추진 장비 목록

구 분	장비명(목표 수량)
항 공 기	F-5A/B/E(10/25/99), F-4E(16), RF-5A(8), T-37(25), T-41(27), S-2(8), O-123(16), O-1/2/6(28/14/42), OH-23(77), C-130H(6)
해상장비	함정 DD/PG/MRS(2/1/2), CPIC(1), 소해함(2), LVT(62), PGM 건조(3), 구축함(2), PGM 무장(5)
화력장비	발칸포(88), HJ(4), 자주포 8인치/175mm(99/13), 견인포 105/155mm(135/52), 박격포 81mm/4.2”(343/60), 90mm 무반동총(217), 106mm 무반동자주포(91), 기관총(8,740), M-16소총(613,528)
기동장비	전차(284), M-48전차 생산(421), 장갑차(4개 대대 212)
유 도 무 기	TOW대전차로켓(114기, 1,080발), HARPOON(21기, 9발), 호크(1개 대대 24기), NIKE(6개 포대)

※ 출처 : 국방부, 『대한(對韓)군원현황』, pp.33-35.

※ 무상군원 신규장비 도입기간 : 1971~1976, 무상군원 초과품 도입기간 : 1971~1975, 차관장비 도입기간 : 1974~1977

※ 목표연도인 1977년까지 도입이 완료되지 못한 장비 : UH-1H 헬기, M-16소총, M-48 전차 생산, HARPOON

1971년도에 배정된 무상군원 자금으로 획득한 장비는 F-5 A/B 항공기를 포함한 각종 항공기, DD급 구축함을 포함한 각종 함정, 어네스트 존(HJ) 로켓 발사대와 8인치 자주포를 포함한 각종 화력장비, 5톤 트럭을 포함한 각종 기동장비, TOW 유도탄 및 전차 탐조 등 등이었다. 그리고 1971년에 배정된 FMS 차관 1,500만 달러는 한국이 M-16 소총 및 탄약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군현대화계획」과 관계없이 획득한 자금이었으며, 이 공

달러에는 정상 군사원조(부대 운영비, 교육·훈련비 등) 3억 7,01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장은 1972년 3월에 착공되어 1973년 11월에 준공되었다.⁹³⁾ 이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가 신형으로 대체되었고, 1973년 3월에는 주월한국군이 신형 편제장비를 가지고 철수함으로써 한국군 장비현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방위산업 육성

가. 국방과학연구소 설립과 「방위산업 10개년계획」 수립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구상이 처음 공식화된 것은 1970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를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력의 배양을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했고, 2월 2일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전담할 부서의 설치를 임충식(任忠植)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수국 산하에 ‘군수산업육성담당관실’을 설치하여⁹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의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 조치였다.⁹⁵⁾ 그리하여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조직제」(「대통령령 제5267호」)가 공포되어 국방부 예하 국립연구소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서울 홍릉에 설립되었으며, 이로써 군사과학기술의 제공,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및 업체 연구활동 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방위산업은 국가방위상 전략적 요청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장기적인 국방수요 판단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육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민간연구기관(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실무요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방위산업 10개년계획(1971~1981)」을 수립하였다.⁹⁶⁾ 이 계획은 전반기인 1971년~1976년까지는 ‘기반조성단계’로 총포, 탄약 및 기본병기를 국산화하고, 후반기인 1977년~1981년까지는 ‘기반완성단계’로 전차, 항공기, 유도탄, 함정 등 정밀무기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⁹⁷⁾

93) 국방부, 『국방사 제4집』(2002), pp. 418-419 ; 국방부, 『대한군원현황』(1978), p. 4.

94) 1971년 12월 15일 국방부 기구개편에 따라 군수국 방위산업담당관을 폐지하고, 군수차관보 밑에 ‘방위산업담당관’을 신설하였다.

95)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약사』 제1권(대전: 국방과학연구소, 1989), p. 5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200-201.

96)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진회사』(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88), p. 60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 31-32. 이 계획에는 탄약, 소총, 박격포 등 방위산업을 위해 당장 필요한 품목 12개가 선정되었다.

97)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1970년 4월 25일 박 대통령은 ‘민수산업의 육성보완을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구축’이라는 방위산업 추진전략에 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즉 민간 업체의 산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관리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기술 측면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사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무기의 주요 부분별로 생산업체를 지정하되, 지정공장의 평상시 작업량을 민수용 80%, 방산용 20%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시에는 전 능력을 방위산업에 전용토록 하였다.⁹⁸⁾

1971년 1월 박 대통령은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목표를 밝혔는데, 첫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6년까지 최소한 이스라엘 정도의 자주국방태세를 갖출 것을 목표로 총포·탄약·통신기기·차량 등 기본병기를 국산화하고, 둘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0년대 초까지 전차·항공기·유도탄·함정 등 정밀무기의 국산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목표와 ‘민수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기반구축’ 방침(1970. 4. 25.)은 1970년대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의 기본방침이 되었다.⁹⁹⁾

그러나 1979년 박 대통령이 10·26사건으로 사망하고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가 출범하면서 신군부가 국가통치체제를 장악하였다. 이때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미사일개발사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까지 연구소를 이끌던 주요 인사들이 강제 퇴직되었고, 연구소 조직이 대폭 축소되면서 900여 명의 연구소 직원이 강제적으로 감축되었다. 이리하여 연구소의 정원은 1970년대 후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1982년 말 시험발사 단계에 있던 현무(NHK-2) 미사일 개발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¹⁰⁰⁾ 1983년초에는 서울에 있던 연구소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의 대전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소의 근무 분위기는 침체되었으며, 우수인력이 대거 이탈하게 되었다. 1984년에 「무기체계 획득관리 업무절차」 등이 제정되고 연구소의 자율적 운영이 배제되었으며, 국방부 관리가 강화되면서 무기체계가 체계개발 대상으로 선정되고 예산이 배정, 승인되어야 연구개발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들은 장기화되고 새로운

pp.31-32.

98)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김정렴 회고록』(서울: 중앙일보사, 1991), p.327.

99)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약사 제1권』(대전: 국방과학연구소, 1989), p.58, 90.

100) 조영길, 『자주국방의 길』(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pp.176-182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141-142. 1980년 7월 심문택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갑자기 경질이 되었고, 9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정원이 대폭 감축되면서 ‘공직자 정화’라는 명분으로 당시까지 연구소를 이끌어 오던 이경서 박사(부소장)와 강인구 박사 등 간부급 핵심요원 30여 명을 포함한 70여 명이 해임되었다. 1982년 12월에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연구소 800여 명의 직위가 감편되었고, 190여 개의 단위부서 중 미사일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약 70개 부서가 해체되었다.

무기체계 개발 도전에 소극적인 양상이 전개되었다.¹⁰¹⁾

그러다 1983년 아웅산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면서 중단되었던 백곰-Ⅱ 사업이 현무지대지 유도탄 개발로 재출발하게 되었고, 천마사업 등 고도정밀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연구개발은 1981년대 130mm 다연장 로켓 기본형 개발, 1982년대 기만용 무인항공기(솔개) 개발, 1983년대 견인 곡사포 105mm 및 155mm 개발, 1984년대 한국형 소총(K2)과 K-200 한국형 장갑차를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1985년 155mm 자주포 사격시험과 지대지 유도무기(현무) 시사회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참관하였다.¹⁰²⁾

나. 번개사업과 자동소총 공장 건설

번개사업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에서 방위산업 건설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197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에게 즉시 국산 병기 개발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¹⁰³⁾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여 한 달 만에 기본병기 시제품 8종을 만들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¹⁰⁴⁾ 제1차 시제품 개발에 이어 1차 시제품 시험결과를 수정·보완하는 제2차 시제품 개발(사업명 ‘제2차 번개사업’)에 착수하였고, 1972년 4월 3일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제26보병사단에서 ‘제2차 번개사업



〈사진 4-9〉 육군제26사단에서 실시된 ‘제2차 번개사업 시사회’(1972. 4. 3.)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방위산업50년사』, p.23.

10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의 초석 40년(1970~2010)』(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10), pp.214~215.

10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의 초석 40년(1970~2010)』(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10), p.215.

103)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48. 박 대통령의 추가 지침을 받은 청와대 경제제2비서관 수석비서관 오원철은 「병기개발계획」(사업명 ‘번개사업’)을 수립하였는데, 개발할 병기의 모델명과 수량을 정하고, 제1차 시제품을 12월 30일까지 제작하고, 1차 시제품에 대한 시험 후 결함을 보완하여 2차 시제품을 이듬해 3월 1일까지 제작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104)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47~51. 개발한 시제품은 M1 소총, 카빈 소총, 60mm 및 81mm 박격포, 기관총, 신형 3.5인치 로켓발사기, 대인 및 대전차지뢰 등이었다.

시사회'를 갖고 시제품 종합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번개사업은 최초의 방위산업이었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시작되었다.(<사진 4-9> 참조)

자동소총 공장 건설 정부는 250만 향토예비군을 경장비로 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화기 및 장비와 긴급 비축용 탄약을 제조하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설득하였다. 그 결과 1968년 5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군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M16 자동소총 공장을 건설한다."는 조치에 합의하였다. 이후 한국 및 미국 국방부, 미국의 '콜트(Colt)' 총기회사는 M16 소총 공장 건설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온 끝에 3년 만인 1971년 3월과 4월에 정래혁(丁來赫) 국방부장관과 멜빈 레어드(Melvin R. Laird) 미 국방장관이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대망의 M16 소총공장 건설이 실현되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 계획의 목적은 한국에 M16 소총의 생산 설비를 건설하고 6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약 60만 정의 M16 소총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이 계획에 소요되는 약 7,200만 달러 규모의 총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4,200만 달러의 신용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¹⁰⁵⁾



〈사진 4-10〉 M16 소총 생산공장 건설현장(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방위산업50년사』, p.23.

이에 따라 1972년 3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에 M16 소총 및 탄약 공장인 조병창 확장 건설에 착수하여 1973년 11월에 완공하고, 즉시 정상 생산에 들어갔다. 이 조병창은 실질적인 한국 방위산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자주국방력 배양을 위한 방위산업이 태동되었다.¹⁰⁶⁾(〈사진 4-10〉, 〈4-11〉 참조)



〈사진 4-11〉 M16 소총 생산공장(국방부 조병창) 준공식(1973. 11. 29)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방위산업50년사』, p.23.

105) 국방부 전차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차편찬위원회, 1981), pp.466-473.

106) 육군본부, 『병기병과 50년사(1946~1996)』(대전: 육군종합군수학교, 2001), pp.222-223 ; 국방부, 『국방사 제4집』(2002), p.418 ;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한국 방위사업 50년사』(서울: 한국국방안보포럼), p.23. 이 조병창은 1981년에 민영화되어 대우정밀공업으로 개명되었고, 2006년에 S&T

당시 우리 군의 개인 기본화기는 M1 소총과 카빈 소총이었는데, 1975년경부터 전방부대를 시작으로 모두 M16 소총으로 대체되었다. M16 소총은 특수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재로 사용하여 강도가 높고 M1 소총보다 훨씬 가벼웠으며, 연발사격이 가능했다. 국산 M16 소총은 1985년부터 K2 소총이 등장하면서 폐기되었다.

다. 백곰 사업

1971년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친필 ‘극비’ 메모로 비밀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오원철 경제제2수석비서관에게 내렸다. 그 메모에는 “1단계로 1975년까지 200km 내외 사거리의 국산 지대지유도탄 개발”이라는 요지의 지시가 적혀 있었다. 박 대통령의 비밀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방부(보안사령부, 합참 정보국), 중앙정보부(8국)가 참여하는 ‘미사일개발계획단’(위장 명칭 ‘항공공업개발계획단’이 1972년 5월 1일부로 발족했다.¹⁰⁷⁾ 구상회 박사는 미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교육을 위한 초청장을 받아 1972년 5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방산연구소들을 견학했는데, 이 견학은 구체적인 유도탄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¹⁰⁸⁾

항공공업개발계획단은 1974년 5월 「항공공업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974년에는 유도탄 개발을 위해 대전에 연구소를 착공했고, 197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은 미사일 설계 기술, 추진제 제조기술, 관성항법장치(INS) 등 3가지였다.¹⁰⁹⁾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이던 지대공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Nike Hercules)를 기본 모델로 삼아 모방·개발할 계획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나이키 허큘리스의 원(原) 개발자인 미국의 맥도넬 더글러스(McDonnell Douglas)사와 협상하여 예비설계는 공동연구로 하고, 나머지 2, 3단계의 본 설계는 맥도넬 더글러스사가 전담하는 조건으로 하되, 예비설계에 180만 달러, 본설계에 2,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여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승인을 얻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경서 박사를 포함한 15명이 미국으로 가서 맥도넬 더글러스 연구원들과 함께 예비설계를 위한 공동연구를 하였으며, 1976년에 공동연구를 마쳤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미

대우로, 2012년에 S&T모티브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

107) 조영길, 『자주국방의 길』(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pp.79-81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127-128.

108) 구상회, “한국 미사일 개발의 산증인 구상회 박사 회고,” 『동아닷컴』(1999)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128-129.

109)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130.

사일 독자설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0만 달러 상당의 설계 계약은 진행시키지 않았다.

1976년에 충청남도 대덕에 미사일을 연구·제작하는 ‘대전기계창’을 설립했고, 1977에는 태안에 미사일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안흥시험장’을 완공했다. 추진제 제조기술은 프랑스의 기술과 미국의 추진제 제조설비를 조합하여 완성된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관성항법장치¹¹⁰⁾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개발하고자 하는 나이키 허큘리스는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지령유도방식이었으므로 관성항법장치 없이 개발이 가능했다. 그리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대전기계창 항공사업부’가 미사일 제조에 들어갔다.¹¹¹⁾

국방과학연구소가 채택한 미사일개발전략은 미국의 지대공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완전히 지대지미사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한국이 개발하고자 하던 미사일은 비록 미국의 미사일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유도탄의 외형만 같을 뿐 유도용 소프트웨어, 유도조종장치, 기체, 추진기관 및 탄두 등은 모두 개량하거나 새로 개발한 것들이었다. 진공관 회로를 반도체로 바꾸고, 유도조종장치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었다. 한국이 고성능 추진제 개발능력을 확보하자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1975년부터 1976년 사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대사, 미 국방부 안보담당 차관보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180km, 탄두 무게를 440kg으로 제한하라고 압박했다.¹¹²⁾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 1978년 4월 11일 ‘백곰’ 미사일의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8차에 걸친 시험발사에서 5번을 성공하면서 9월 16일 국산화율 90%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도탄이 개발되었다. 9월 26일 정부는 ‘세계 일곱 번째 미사일 개발국’이라고 선포하고, 안흥시험장에서 귀빈들을 초청하여 ‘한국형 중장거리 지



〈사진 4-12〉 최초의 국산 지대지유도탄 (백곰) 시험발사 장면(1978. 9. 26.)

※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의 초석 40년(1970~2010)』

110)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서울: 합동군사대학교, 2014), p.49. 관성을 이용하여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로서, 비행체의 위치와 속도, 경로, 비행거리 등을 판단하여 고도, 속도, 자세 등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11)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130~131.

112)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134~135.

대지유도탄(일명 ‘백곰’)을 시험발사하여 성공하였다. 이때 백곰의 사거리는 180km였다.(〈사진 4-12〉 참조)

위컴(John Wickam) 주한미군사령관이 합참 임동원 대령의 안내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따졌다. 그리고 위컴 사령관은 1979년 7월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1979년 9월 우리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180km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서한으로 전했다. 이 서한이 이른바 「미사일 개발 자율규제 서한」으로서 우리 측의 일방적이고 자율적인 지침을 통보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쌍방 협정과 같은 구속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통상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불리고 있다.¹¹³⁾

라. 방위산업 육성 지원

전문화·계열화제도 1973년 3월 5일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하였으나, 이 법의 명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반대를 고려하여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했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산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산업체 간에 과당경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당 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산 물자 및 해당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전문화·계열화제도’를 도입했다. 전문화 업체는 무기체계 완성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체계종합업체)를 말하고, 계열화업체는 구성품 및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화·계열화제도는 지정된 업체에게 특정분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국가적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기술개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전문화·계열화제도는 방산물자·방산업체지정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방산보호 육성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전문화·계열화제도는 1983년 6월 국방부 지침으로 규정화되었고, 이후 시대에 따라 기본방침과 개념이 조금씩 바뀌었다. 1993년 12월 14일 국방부와 산업자원부 공동 훈령으로 「전문화·계열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주·부전문업체 개념을 삭제하고 전문화 업체는 2개 이내로 지정하고, 계열화 업체는 1개를 원칙으로 지정하여 각 분야별로 1, 2개 업체가

113)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137-139.

개발 및 생선을 담당하는 독과점체제를 구축했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973년 3월 5일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1983년에 법의 명칭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칭했다. 이 법에는 방위산업, 방산물자, 방산업체 등 용어에 대한 정의, 방산육성기본계획 수립 지침, 방산업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소속의 군수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군수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방위산업 보호·육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 만이 갖는 수요의 제한, 신뢰성과 보안성 유지, 경쟁원리의 제약, 신축성, 단명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1977년 11월 21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고,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발전과 방산물자의 조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¹¹⁴⁾

한국의 방위산업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본병기의 성능개량과 일부 고도정밀병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생산목표의 조기달성에 역점을 둔 결과, 자본과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전문화 생산체제가 미약하였고, 생산시설과 장비생산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군 소요물량의 한정 등의 이유로 가동률이 저하되어 일부 방산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군에서만 필요하고 민수용도는 전혀 없는 병기제작기체는 직접 구입해서 방산공장에 대여해 주는 등 방산 업체의 경영상의 압박을 덜어 주도록 최대한 지원하였다. 1983년부터는 방산업체가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의 장기소요량을 이들 업체에게 사전 통보하고 통합집행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방산업체 전문화 관리방침을 마련하고, 1985년에는 「부품국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의 고도정밀화 및 대형화로 국내개발에 따른 경제성 및 생산능력의 제약으로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획득시 해외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절충교역제도(OFF-SET)를 수립·시행하였다.¹¹⁵⁾

3. 전력증강사업(제1, 2, 3차 율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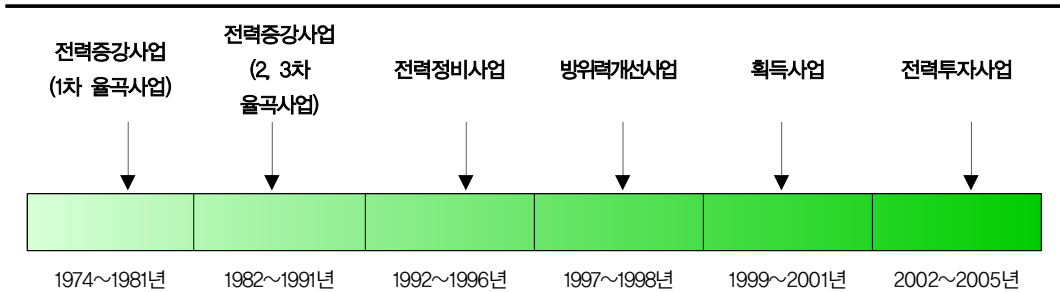
1966년 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대가인 이른바 「브라운 각서」에 의해 한국군에 M-48 전차와 주월 한국군에 M-16 소총이 지급됨으로써 미미하나마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었다. 그리고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한 선행조치로 수립된 「한국군 현대화계획(1971~1975)」으로 일부 장비가 신형으

11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진회사』(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88), pp.61-62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61.

115) 국방부, 『국방백서 1989』(서울: 국방부, 1989), p.214.

로 교체되었고, 1973년 3월 주월 한국군이 신형 편제장비를 가지고 철수함으로써 장비 현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1973년 당시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군 전력의 50.8% 수준밖에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¹¹⁶⁾

[도표 4-2] 한국군 전력증강 사업 추진 연표



※ 출처: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서울: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2013), p.7.

이처럼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이 크게 변하고 북한과의 전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되자, 정부는 1973년을 ‘총력안보의 해’로 설정하면서 국가동원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예비군의 전력화를 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하여 예비군 편성, 교육훈련 및 장비의 혁신작업 등 자주국방을 가장 우위의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병행하여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국방8개년계획, 율곡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기간 중 국방부는 1974년 당시 미군의 군원 이관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던 「한국군 현대화계획(1971~1975)」을 바탕으로 수립된 「제1차 율곡사업(1974~1980)」을 7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했지만 추진간 1년을 연장하여 1981년에 완료했으며, 이어서 제2차 율곡사업(1982~1986), 제3차 율곡사업(1987~1992)을 수립, 추진하였다.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은 1974년 전력증강사업(일명 국방8개년계획, 제1차 율곡사업) 착수 후, 국내 여론과 개혁의 요구를 감안하여 [도표 4-2]와 같이 전력증강사업(제2·제3차 율곡사업)¹¹⁷⁾, 전력정비사업, 방위력개선사업, 획득사업, 전력투자사업 등으로 그 명칭이 바

116) 국방군사연구소, 『진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300.

117) 국방부는 전력증강 추진과정에서 율곡비리가 발생하여 국방획득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자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획득 관련 조직 및 제도를 개선하였고, 율곡사업 명칭도 전력증강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제2·3차 율곡사업은 전력증강사업 명칭과 혼용되다가 율곡비리문제로 1992년에 전력정비사

뀌며 지속 추진되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대체로 전력증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 제1차 울곡사업(1974~1981) : 기본병기의 국산화

사업목표 및 추진경과 197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은 자주적 군사력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에 내려보냈다.¹¹⁸⁾

- ①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에 착수
 - ② 작전지휘권 인수 시에 대비한 장기 군사전략의 수립
 - ③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제외한 주요 무기와 장비를 국산화
 - ④ 장차 1980년대에는 이 땅에 미군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가정하여 독자적인 군사전략, 전력증강계획을 발전

이러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목표 및 군사력 증강에 관한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7월 12일 이를 각군에 하달하는 한편, ‘국방7개년계획 투자비 사업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군이 건의한 「군장비 현대화계획안」을 조정, 보완하였으며, 이 건의안은 1974년 1월 16일 합동참모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국방부는 「제1차 전력증강계획(제1차 울곡계획)」을 수립하여 2월 25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최초의 자주적 전력증강계획이 확정되었다.¹¹⁹⁾ 당초 제1차 울곡계획의 대상기간은 1974~1980년까지 7개년이었으나, 1978년 1월 정부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77~1981)과 연계성 유지를 위해 1981년까지 1년을 연장하여 ‘전력증강8개년계획’(일명 ‘국방8개년계획’)이 되었다. 이 전력증강 사업의 요지는 대상기간을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개년으로 하고, 사업계획의 기본전략은 한미연합 억제전략에 두며, 한미군사협력체제 유지, 주한미군 계속 주둔 보장, 현 휴전상태의 최대 연장, 그리고 방위전력의 우선적 발전과 자주적 억제전력의 점차적 형성을 전략개념으로 하였다.¹²⁰⁾

업으로 개칭되었다.

118) 김성호,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관리』(서울: 국방부정책연구위원회, 1990), p.40 ; 이원형 외,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국방부, 1994), p.22.

119)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301 ; 서우덕 · 신인호 · 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82-83. 국방부는 보안유지를 위해 「전력증강계획」을 「울곡계획」이라고 가명칭을 붙였다. 이 명칭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침입을 예견하고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던 울곡 이이 선생의 호를 딴 것으로 유비무환 사상을 본받고자 하는 뜻이 내포된 것이었다.

12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06 ; 국방군사연구소,

제1차 육공사업의 전력증강 목표는 당시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북 방위력 확보’에 두었다. 그래서 노후장비를 대폭 교체하고 지상기동력과 화력의 현대화, 수상 전력의 현대화, 항공 및 방공전력 증강, 전투사단 개편, 전방진지 축성,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하는 전방위적인 전력증강이 추진되었다.¹²¹⁾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지침은 ①국방비 가용액은 GNP의 4% 수준(전력증강비가 없었던 당시 국방비는 GNP의 약 4% 수준이었음)을 유지하며, ②투자비는 15억 2,600만 달러로 계획하고, ③전력증강 투자를 위하여 효율적인 국방관리를 통해 운영유지비를 최대도로 절약하며, ④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⑤증강 우선순위는 대공·대전차 억제능력, 공군력 증강, 해군력 증강, 예비군 무장화 순이었다.¹²²⁾

한편 북한은 1972년 8월 28일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비난성명 발표 후 9월 3일부터 43회에 걸쳐 해상도발을 자행했으며, 1973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1~2척의 경비정으로 7차례에 걸쳐 휴전 후 20년 동안 존중돼 온 백령도와 소청도, 대청도, 연평도 등의 부근 우리 영해를 침범해 왔다. 북한의 이와 같은 해상도발은 서해안 해주만 출입항로의 확보, 12마일 영해의 현실화, 도발에 대한 국군의 반응탐색 및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이를 역선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1973년 12월부터 범국민적으로 벌이기 시작한 방위성금 모금액은 1975년 말 당시 모금액이 161억 3,400만 원에 이르렀다.¹²³⁾

한편, 자주국방을 조기에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고 인도차이나반도가 적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에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75년 7월 16일 「방위세법」(법률 제2768호)을 제정, 공포하였다.

「방위세법」 제1조에 “방위세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의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라는 의미는 바로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신설 다음해인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간은 방위세 징수계획액 전액을 전력증강투자비로 계상하였으나 방위세 규모가 육공 투자비 재원을 초과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하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301.

121)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88.

122)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06~207.

123) 국방부, 『국방백서 1988』(서울: 국방부, 1988), pp.193~194 ;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66~268.

기 위해 초과되는 차액은 국방 일반투자사업(시설공사, 장비·물자획득 및 운영유지)에 배분 투자되었다.

1974년 2월 착수 당시 제1차 울곡사업의 예산은 15억 2,600만 달러였으나, 물가상승, 석유파동, 북한의 위협증대와 전력증강, 방위세금 활용,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 제2사단 철수 선언 등으로 4차에 걸쳐 계획 수정이 이뤄지면서 약 50억 달러 규모로 증액되었다. 국방부는 이를 서해안 주요도서 방어구역 보강, 수도권 방위, 향토예비군 장비보강, 해양경찰대 통신장비, 국군 지상장비 구입, 해군의 신예함정 건조, 공군기 도입 등에 각각 사용하는 등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¹²⁴⁾

사업추진 성과 육군은 사단전력이 전투사단·예비사단 개념에서 전투사(戰鬪師)·전준사(戰準師)·후경사(後警師)의 개념으로, 다시 상비사단·동원사단·향토사단의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보병연대 부대구조도 4각 편제로 개편되어 인원 위주 개념에서 인원과 장비를 합친 개념으로, 걷는 기동력에서 달리고 나르는 기동력으로 변모하였다. 즉, M-1 및 카빈 소총, LMG 경기관총이 M-16 소총, M-60 기관총으로, M-47 및 48계열 전차가 M-48A3 및 88 한국형전차(일명 K-1 전차) 개발로, 구형 105 및 155mm 야포가 신형 개량포(사거리 연장포)로 대체되었다.(<사진 4-13> 참조)



〈사진 4-13〉 국산 105mm 개량 곡사포를 순시하는 박정희 대통령

※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그리고 불과 10여 대의 헬기와 O-1기를 보유하고 있던 육군 항공전력이 UH-1H, AH-1J, 500MD 헬기 등 무장헬기가 대폭 늘어나는 등 양적인 증강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제2차세계대전형의 군대에서 현대화된 군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해군은 구형 구축함이 도태되고 한국형 구축함 및 경비함 그리고 각종 대·중·소형 미사일 고속정(PGM, PKM, PK)이 증강되었으며, 대잠초계기 및 대잠헬기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대잠감시장비의 확보로 주요 해역의 수중감시체계 강화 및 대잠수함 공격능력이 강화되었다. 그 외에도 해상수송능력과 소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북한의 대상륙전에 대비하여

124)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08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88.

서해 5개 도서 및 수도권 서부축선 방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사시 다양한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해병사단 및 여단이 증·창설되었다.

공군은 F-4D/E의 도입 및 F-5E/F의 국내 조립생산으로 구형 전투기인 F-86을 도태시키고 신형 항공기로 대체시키는 한편, 최신예기인 F-16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레이저 유도폭탄, CBU 폭탄, 매브릭(Maverick)탄, 사이드 와인더 (Sidewinder) · 스패로우(Sparrow) 공대공 유도탄, 채프(Chaff)탄, 방공체제 자동화 등 정밀기술 무기체계 및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양적, 질적 향상을 이룩하였다.

제1차 울곡사업의 추진으로 각군은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전력증강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북한군 전력의 54.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¹²⁵⁾

나. 제2차 울곡사업(1982~1986) :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목표 및 추진경과 제2차 울곡사업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추진되었다. 「제1차 울곡계획」은 1974~1981년간에 3조 1,402억 원을 투자하여 주로 북한 군사력과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주요 전력을 증강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였으나, 투자가 분산되고 무기체계 선정에 착오가 일어난 데다 운영유지비가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대북한 전력비가 1973년의 50.8%에서 1981년에는 54.2%로 8년 동안에 불과 3.4%의 격차를 줄이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울곡계획」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남북한 간 전력격차 해소는 점점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¹²⁶⁾

이에 국방부는 「제2차 울곡사업」의 전력증강 목표는 「제1차 울곡사업」 추진결과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고려하여 「제1차 울곡사업」에서 완수하지 못한 대북전력의 보완에 중점을 둔 ‘방위전력 보완 및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전쟁지속능력의 확장 및 유·무형 전력의 균형발전을 통한 자주적인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군별로는 육군은 초전대응전력과 수도권 방위전력을 증강하고, 해군은 전투함정과 유도탄 전력을 증강하며, 공군은 신예항공기와 유도탄 전력을 증강하되 1988년 이전까지는 주요전력을 모두 확보하여 북한의 남침을 초전에 격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²⁷⁾

125)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군인공제회, 1994), p.37.

126)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68-269.

12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69 ; 서우덕·신인호·

「제2차 율곡계획」은 1982~1986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 1983년 예산개혁작업이 진행되면서 전력증강 계획의 방식을 변경하였다. 즉 「제1차 율곡계획」 추진시 적용하였던 목표지향형의 「고정계획(Fixed Program)」으로부터, 시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변화요인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이를 새로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동계획(Rolling Program)」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부터 「제2차 율곡계획」이라는 계획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¹²⁸⁾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처하고 자주국방체제의 굳건한 확립을 위해 전 국민이 1973년 12월부터 벌인 방위성금 모금운동으로 1988년 8월 말까지 총 609억 원이라는 거액이 모금되었다.¹²⁹⁾ 모금된 방위성금은 F-4D 팬텀기와 500MD 헬리콥터 구입 및 한국형 장갑차 개발 등 군사장비 보강(55.4%)과 방어진지 구축(13.0%), 예비군 전투력 보강(5.8%), 군사시설 보강(25.8%) 등에 투자되었으며, 특히 국민의 숭고한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결정에서도 신중을 기하고자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방위성금은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나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을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1988년 9월 8일 폐지되었다.¹³⁰⁾

한편, 자주국방을 조기에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고 인도지나반도가 적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한반도에는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는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75년 7월 16일 「방위세법」(「법률 제2768호」)을 제정, 공포하였다.

「방위세법」 제1조에 “방위세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의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라는 의미는 바로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신설 다음해인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개년간은 방위세 징수계획액 전액을 전력증강투자비로 계상하였으나 방위세 규모가 율곡투자비 재원을 초과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과되는 차액은 국방 일반투자사업(시설공사, 장비·물자획득 및 운영유지)에 배분 투자되었다.¹³¹⁾

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146.
 128) 김성호,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관리』(서울: 국방부정책연구위원실, 1990), p.48.
 129) 국방부, 『국방백서 1988』(서울: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1988), pp.193-195. 방위성금의 헌납자별 내역은 일반국민 172억 3,305여 만 원, 기업체 130억 2,900여 만 원, 학생 및 교직원 158억 5,930여 만 원, 해외동포 및 기타 약 9억 원, 은행 이자 138억 8,000여 만 원이었다.
 13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66.
 131)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67-268. 당초 「방

사업 성과 육군은 기간 중 보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동원 및 향토사단 등 19개 사단급 부대를 창설하였으며, 후방지역작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후방지역에 군단 사령부를 신설하고, 수도권 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도경비사령부를 군단급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증편하는 등 지휘구조를 개선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등의 AN-2기에 의한 공중침투, 땅굴을 이용한 지하침투 등을 봉쇄하고 이를 조기에 분쇄하기 위하여 전략부대인 특전여단을 창설하였다.

또한 한국형 K-1 전차(일명 88전차)를 개발하는 한편, M-47/48 계열 전차의 성능을 개량하여 대북한 수적 열세를 질적으로 보완하였고, 토우(TOW) 대전차미사일, 그리고 기존의 M-113 장갑차에 추가하여 이탈리아에서 경장갑차를 도입하는 동시에 한국형 K-200 장갑차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함으로써 기갑 및 대기갑 능력과 기동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155mm 자주포, 다련장 로켓포 그리고 중고도 방공무기인 호크의 성능을 개량하여 저고도 방공무기인 발칸포와 함께 실전에 배치함으로써 기동력과 함께 화력이 대폭 향상되었고, 휴대용 대공유도탄 자브린을 도입하여 수도권과 이에 인접한 주요시설에 배치함으로써 방공전력도 크게 증강되었다.

해군은 중·소형 고속정, 한국형 구축함, 초계전투함, 유도탄정 등을 개발 및 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한편, 기뢰탐색함의 개발로 소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대잠초계기를 도입하여 대잠작전능력을 크게 증강하였다. 또한 해병부대에는 신형 상륙돌격장갑차(LVT 7A1)를 도입, 배치하여 상륙작전능력 보강 및 기동력을 향상시켰다.

공군은 전투비행대대의 수적 증강과 병행하여 F-86 구형 비행단을 신형 비행단으로 대체하는 등 공중전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F-4D/E 팬텀기의 추가 도입과 KF-5E/F 전투기(제공호)의 국내생산 및



〈사진 4-14〉 KF-5E/F 1호기 출하 행사(1982. 9. 9. 김해기지)

※ 대한항공과 삼성정밀이 미국의 노드롭 사 및 GE사와 기술제휴로 1980년부터 1986년까지 국내에서 68대 조립생산)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 방위사업 50년사』, p.372.

위세법」은 그 시한을 1980년 말까지로 하였으나 1979년 1차 연장조치를 취해 1985년 12월 말까지로 5년을 연장하였고, 1985년에 다시 2차로 1990년 12월까지 5년을 연장하여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배치, 그리고 최신예기인 KF-16 전투기를 확보함으로써 고성능 다목적 임무수행을 보장하였다. 무장 면에서 전 방향 공격이 가능한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하여 공군의 작전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KF-5E/F 1호기 출하 행사 사진은 〈사진 4-14〉 참조)

그러나 기간중 전력증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총전력은 북한 대비 60.4%에 그쳐 독자적인 대북한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목표에는 미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¹³²⁾

다. 제3차 율곡사업(1987~1992)

사업목표 및 추진경과 제3차 율곡사업(1987~1992)은 전두환 정부 시기 계획하여 착수되었으나, 노태우 정부 들어 탈냉전과 민주화 등 국내외적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로 전환하여 추진되었다. 국방부는 국방자원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간 중 “대북 방위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억제전력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한국형 전투기, C3I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분야에 중점을 두면서도 남북 군비통제 측면과 미국의 지원변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증강을 도모하였다. 국방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시의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1987년 전력증강사업 추진중점을 [표 4-10]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군은 억제전력 위주, 해·공군은 긴요전력 위주로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육군은 기계화보병사단의 개편과 기갑 및 포병의 전력증강에, 해군은 전투함정 및 유

[표 4-10] 제3차 율곡사업 추진중점

추진 중점	지상 전력	• 초전 대응전력 완비 • 전략예비 조기 확보 • 장거리 지대지 유도탄 확보 • C3I체계 발전 • 후방 기동타격전력 확보
	해상 전력	• 해상 우세권 확보를 위한 공세 위주의 전력 증강 • 각종 작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항공 전력	• 공세 위주의 정예 항공전력 증강 •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제 작전능력 구비 • 공수, 탐색, 구조능력 향상 • 방공관제능력 향상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 p.155.

132)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70~271.

도무기의 증강에, 그리고 공군은 전술기의 질적 정예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동 기간 중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력보강 및 대북 방위전력의 조기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¹³³⁾

제3차 율곡사업(1987~1992)은 전두환 정부에서 계획되어 초반기에 추진되었으나,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가 탈냉전과 민주화 등 국내외적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목표를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로 전환하였다. 걸프전에 따른 정세변화와 교훈,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경, 평시작전권 전환에 대비, 그리고 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긴장완화 및 남북한 군비통제 등을 고려하여 전력증강 추진방향을 전환했던 것이다.

특히 노태우 정부는 대선공약인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준비 차원에서 육·해·공군의 통합 전투수행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전력의 균형발전에 집중하였다. 「818 군구조 개혁」을 통해 전력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해·공군력을 보강하고자 노력하였다.

추진 성과 「제2차 율곡사업」이 초기 대응능력과 수도권 방위력 확보에 중점을 둔 시기라고 한다면, 「3차 율곡사업」은 한마디로 공세능력과 첨단 무기 확보에 매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중점 증강분야를 보면, 지상전력은 한국형 전차 및 장갑차의 양산 및 배치, 공격헬기 및 다목적 헬기의 대량 확보, 기계화사단 추가창설 및 포병전력의 자주화였으며, 해상전력은 한국형 구축함 건조사업 착수, 호위함, 초계함, 중·소형 고속정의 양산 배치와 잠수함 확보였고, 공중전력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착수, 방공작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고고도 방공무기의 육군에서 공군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이 기간 우리 군은 수적인 증가보다는 상위 무기체계에 대한 선별적 확장을 통하여 질적 성장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3차 율곡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장비와 무기체계는 획기적으로 증강되었다.¹³⁴⁾ 1990년대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무기체계는 대부분 이 시기 율곡사업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¹³⁵⁾ 전력이 증강되었다. 당시의 군사력 건설은 주로 F-5 전투기의 기술도입생산과 한국형 구축함 등의 함정 건조, 야포 및 88한국형 전차(K-1전차)와 토우(TOW)대전차 미사일, 장갑차의 개발 및 생산이라는 수준에 이르렀다.¹³⁶⁾ (〈사진 4-15〉 참조)

또 일부 첨단정밀무기체계는 기술도입을 통해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은 방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환기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

1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154~155.

134) 국방부, 『국방부사』 제5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124.

135)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군인공제회, 1994), p.37.

1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사』 제5집(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123~124.

기 위한 방산업계의 주도적 참여 유도
에 역점을 둔 시기였다.¹³⁷⁾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전력증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은 남한에 비해 약 1.6배, 장비는
2~26배의 우위를 보였다. 제3차 울곡
사업이 종료된 1992년 말 북한대비 우
리 군의 전력은 71%에 그쳐 독자적인
대북한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¹³⁸⁾ 제1·2·3차 울곡
사업(1974~1992) 추진결과와 대북한
전력 비교표는 [표 4-11]과 같다.



〈사진 4-15〉 한국형 K-1 전차(일명 88전차)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 방위사업 50년사』

[표 4-11] 제1·2·3차 울곡사업(1974~1992) 추진결과와 대북한 전력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비 교
		1974	1992		
병 력		60만 명	65.5만 명	103만 명	1:1.6
부 대	사 단	27	50(해병포함)	53	1:1.1
	여 단	5	21(해병포함)	99	1:4.7
장 비	전 차	841	1,800	3,800	1:2.1
	야 포	2,077	4,500	10,300	1:2.3
	헬 기	14	600	290	2,1:1
	전투함	26	190	434	1:2.4
	잠수함	0	1	26	1:26
	전술기	197	520	850	1:1.6
	지원기	116	190	480	1:2.5

※ 출처: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p.46.

137)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5년』(서울: 공보처, 1992), p.596.

138)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국방부, 1994), p.40, 47.

4. 예비군의 전력화 및 정신전력 강화

가. 예비군의 전력화

1968년 4월 1일 창설된 향토예비군은 온갖 역경과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군경과 함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총 전과의 60%란 혁혁한 작전성적을 올림으로써 북한의 전쟁도발과 대남침투를 저지 억제하는 후방방위의 주력을 이루었다.¹³⁹⁾ 기간 중 예비군 지휘체제는 예비군의 지휘관리를 육군이 전담하던 것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74년 6월에 김포 및 강화도지역, 7월에 용진군지역, 9월에 제주도지역의 예비군 지휘관리권을 차례로 해군에 이양하였다.

수도권지역에 집중된 예비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75년 7월 서울한수이북지역에 2개 훈련단(60·71훈련단)과 한수이남지역에 1개 훈련단(63훈련단)을, 동해안지역에 1개 훈련단(68훈련단)을 각각 창설하였다. 1976년에는 전시지휘 공백을 메꾸고 전·평시 1원화된 지휘체제를 유지하며, 전개대대의 지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간 지휘기구로 충청도지역에 2개 훈련단(62·67훈련단)을 창설하였으며, 1977년에는 전라도(61·65훈련단)와 경상도(69·70훈련단)지역에 각각 2개 훈련단을 추가로 창설하여 후방사단이 담당하던 예비군 업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1978년에는 전시에 제60 및 제71훈련단의 전방전개에 따른 지휘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남지역에 제100훈련단을 추가로 창설하여 평시에는 강남 5개 지단을 지휘하다가 전시에 제60 및 제71훈련단 이하의 8개 지단을 포함, 총 13개 지단을 지휘하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다.¹⁴⁰⁾ 1981년에는 예비군 전력강화계획 및 후방지역 방어체제 강화를 위하여 현역군이 배치되지 않은 시·군에 예비군 관리대대를 창설, 전개하여 행정구역과 일치된 지휘관리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9년 이래 특정지역, 해안, 내륙 취약지역, 중요시설 및 도서지역의 예비군 무장비율이 80%로 배정되어 왔으나 1975년에는 전·후방전력화부대의 무장비율을 100%로 방침을 변경하여 개인화기는 1인당 1정, 공용화기(AR, LMG, M79)는 소대 당 1정으로 확보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공용화기중 자동소총(AR)과 경기관총(LMG)은 현역군에서 전환하고, M79 유탄발사기는 율곡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다. 탄약은 설정된 기본휴대량과 전투예비량을 확보하였고, 통신장비는 전 중대에 체신전화기를 확보하였으며, 전력화 예비군 부대는 작전지휘용 무전기를 지급하였다. 또한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3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11.

14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4집(서울: 육군본부, 1984), p.254.

방산장비인 탄띠, 탄입대, 수통 및 수통피, 반합, 판초우의, 압박붕대 등 개인장구를 전력 화계획 소요로 조변 확보하였으며, 1978년부터는 배낭과 방한복 일부를 조변(현지 조달) 보급함으로써 기후에 관계없이 원활한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예비군의 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1980년도에는 예비군 무장기준을 재설정하여 기동대는 81mm 박격포 및 57mm 무반동총까지 장비시켜 화기중대 수준으로 증강하였고, 타격대는 60mm 박격포와 LMG 경기관총, M79 유탄발사기 등을 장비시켜 화기소대 수준으로 증강하였으나 현역군의 도태 또는 전환된 노후 구형무기로 장비되어 있어 완벽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장비 현대화가 요망되었다.

나. 정신전력 강화

전쟁에서는 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의 전쟁의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창설 초기부터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정훈국을 설치하여 장병의 사상무장, 정신무장 교육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정훈국은 육군 정훈감실로, 다시 국방부로 소속이 바뀌면서도 장병들의 애국애족 사상과 반공정신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다.¹⁴¹⁾ 6·25전쟁 중에는 ‘정훈대대’를 창설, 주요 전선지역별로 대적, 대민, 대장병 선전 선무공작 등 눈부신 활동을 통해 장병 사기진작과 전투의지를 고양하였다. 정부는 1960년대 말까지 반공을 국시로 하여 철저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군 또한 정신교육으로 반공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왔다. 그 결과 정신교육은 이념교육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지휘관들조차 정신교육은 의례 정훈장교가 실시하는 것으로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격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 책동과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로 인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국방에 관한 자주적 신념을 장병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대공방위태세의 제1요소가 되는 정신무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141) 국방부, 『국방사』 제1집(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4), p. 224.

제 6 절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1. 전력증강 사업 및 방위산업 육성

김영삼 정부 들어 군사기밀 유지 차원에서 금기시되었던 방위력개선사업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1993년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무기체계 및 기종 결정, 조달계약, 국산화 추진 등의 분야에서 118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¹⁴²⁾ 특별감사로 국방부 및 군 고위 관계자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무의 부적절성에 관한 지적보다는 일부 특정사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 여파로 ‘율곡=비리’, 즉 방위력개선사업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춰지게 되었다. 그 후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가 실시되면서 사명감으로 율곡사업에 종사한 국방부 관계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전력증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게 되었다.¹⁴³⁾

걸프전쟁(Gulf War, 1990. 8.~1991. 2.)은 ‘현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전쟁이 될 것이며, 미래 전에서의 승패는 전자공학이나 신소재 제조기술 등 각종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무기체계와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영삼 정부 초기 국방부는 ‘자주국방만이 진정한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제로 삼아, 현실적인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의 구축은 물론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미래의 전략환경에 대비하여 총체적인 안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발전’을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의 좌표」로 삼았다.¹⁴⁴⁾ 그리하여 1995년부터는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의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을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발전’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그 중점 추진과제로 ‘4대 국방현대화 과제’

142) 국가기록원, 『율곡감사관계철』(1290816-99999999-1983-000004-001)의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보고」, pp.179-226. 감사원의 율곡감사(1993. 4월~7월) 결과에서 KFP사업, UH-60헬기사업, 중형수송기(CN235M)사업, 고등훈련기(HWAK)사업, CH-47D헬기사업, 공대공유도탄사업, 해상조계기(P-3C)사업, 잠수함사업, 구축함(KDX)사업 등에 대한 방산물자 소요에서 운용배치까지 업무전반의 타당성, 적절성, 적합성, 유효성 등이 지적되었다.

143)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215-216.

144) 국방부, 『국방백서 1993~1994』(서울: 국방부, 1994), p.18.

를 설정하였다. 4대 국방현대화 과제는 ①인력관리 현대화, ②정보 현대화, ③국방과학기술 현대화, ④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그리고 정보) 현대화 등이었다.¹⁴⁵⁾

여기서 ‘인력관리 현대화’는 21세기 정보화시대와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군의 효율적 인력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체적 국방인력관리체계의 완비, 인력의 기술집약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의 구축, 군의 직업성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 현대화’는 우리 국방발전의 최우선 과제로서 최근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따라 자주적 정보능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군은 2000년대 초까지 독자적인 정보수집수단으로 북한의 군사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을 두고, 조기정보 자산의 단계적 확보, 정보전파 자동화체제의 구축, 정보전문요원 양성 및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는 “필요한 무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쓴다.”라는 원칙하에 우선 국내 개발이 요구되는 주요대상 과제를 선정, 개발함과 아울러 연구개발체제와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갔다.

그리고 C4I 현대화는 미래 전쟁수행체계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서 이는 제반 군사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 및 통합하여 전투력 발휘의 승수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전장관리체계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국형 지휘소 자동화체계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지휘소 중심의 ‘선견, 선결, 선행의 전쟁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아울러 이를 통해 합참 중심의 통합전력 발휘를 가능케 하고, 군별·제대별·기능별로 실시간 전투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국방정보관리체계 기능과도 상호 연계시켜 2000년대에는 선진국형 C4I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 ‘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 사업’은 이후 정부의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통해 이어지고 「국방중기계획」 형태로 수정·보완되면서 전력증강사업,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국방정보화가 발전을 거듭했다.

가. 김영삼 정부: 전력정비사업(1992~1996)과 방위력개선사업(1997~1998) 추진

사업목표 및 추진경과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의 기본목표를 ‘대북한 우위의 군사력 확

145)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서울: 국방부, 1996), pp.23-24.

보와 대주변국 억제력을 위한 전력확보'에 두고, 목표지향적 정예 군사력 건설에 주력하였다.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 단계별 목표 및 중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정비사업의 분야별 군사력 건설 중점을 설정하고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첫째, 지상전력은 ①입체고속기동전 수행(기동군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갑 및 기계화보병사단)을 위한 공세주력전력을 중점 보장하며, ②'질' 위주의 병력절약형 전력구조(차기보병사단 개편, 2군 향토사단, 기갑부대)로 개선하고, ③공세 기동전력(기갑 및 대기갑, 항공, 공병기동지원장비)을 확보하며, ④화력의 질적 향상(자주화, 장사거리화, 사격지휘 전산화)을 기하고, ⑤전략목표 타격능력(FROG 및 SCUD 위협대비전력)을 구비하며, ⑥군사지원능력(전쟁긴요장비 및 물자, 탄약, 편제장비 확보)을 강화하는 데 두었다. 둘째, 해상전력의 ①수상전력은 노후 구축함과 고속정을 교체하고, 구축함을 확보하며, 대함·대공 유도탄 및 신형 어뢰 등 탑재무기체계를 개선하고, ②수중전력은 잠수함을 증강하며, 탐지 및 무장체계를 개선하며, ③항공전력은 해상초계기(P-3C) 및 해상작전 헬기 및 상륙헬기를 확보하고, 항공기에 의한 대함 및 대잠능력을 향상시키고, ④상륙전력은 상륙함을 획득하여 여단급 상륙돌격능력을 확보하며, ⑤해상 예비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두었다. 셋째, 공중전력은 ①조기경보능력(전장감시, 탐색사각지역 해소, 장거리 레이더 보완)을 신장하고, ②한국형전투기사업(KFP)으로 다목적 고성능기인 F-16 120대를 확보하며, ③대형수송기와 훈련기를 확보하고, ④야간 저고도 침투 및 정밀 폭격장비를 확보하며, ⑤F-4E 항공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⑥전자전 장비의 창정비능력을 구비하고 탄약 비축시설을 확보하는 데 두었다.¹⁴⁶⁾ 정부의 군사력 건설 단계별 목표 및 중점(1992~1998)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군사력 건설 단계별 목표 및 중점(1992~1998)

구 분	1990년 중반 이전	1990년 중반 이후	2000년 초반 이후
목 표	대북 방위전력 확보	대북 및 대주변국 필수 핵심전력 확보	대주변국 억제전력 확보
중 점	• 대북 취약분야 집중 보강 (기동, 화력 등)	• 공세기동전력 • 억제효과가 큰 응징보복 무기체계 • 전략 조기경보 및 전장 감시전력 • 전쟁지속능력 확보	• 핵심 보복적 억제전력 (조기경보, 타격수단) 확보

※ 출처: 국방부, 『국방부사 1992~1994』, p.114.

146) 국방부, 『국방부사 1992~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114~115.

1996년 12월 10일 국방부는 전력정비사업의 명칭을 바꾼 「방위력개선사업 제도개선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하였다. 이 제도 개선안은 형식적인 틀에 얽매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무기획득 절차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전력화 기간을 단축하고, 무기획득 전 과정에 공개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국방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서 간 중첩된 기능조정과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내의 최고 우수인력을 선발, 장기 보직하여 방위력개선분야의 전문성을 제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¹⁴⁷⁾

추진 실적 국방부는 군 및 부대구조 개선을 통해 행정 병력을 줄여 획득된 병력으로 전투력을 증강하여 전방 및 수도권 방위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한국형 전차 및 장갑차의 생산과 중무장 전투헬기의 도입으로 기동전력을 증강하고, 155mm 자주포, 다연장 로켓의 생산 등으로 포병화력을 증강하였으며,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의 대량 도입으로 방공전력을 증강하였다.(K9 자주포 사진은 〈사진 4-16〉 참조)

또한 중형고속정, 초계전투함, 함대함 유도탄 등을 생산 및 도입하여 해상전력을 증강하였으며, F-16 전투기, T-59 훈련기, CN-235 수송기, UH-60 중형강습헬기 등을 도입하여 항공전력을 증강하였다.¹⁴⁸⁾



〈사진 4-16〉 세계정상급 수준 K9 자주포

※ 1989년 개발 착수 1996년 6월 출고, 구경 155mm, 최대 사거리 40km.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 방위사업 50년사』, p.201.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세계 방산물자 교역은 1,131억 9,9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226억 4,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였다. 당시 방산수출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16위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 28위 수준이었고, 해외수입에서는 5년간 53억 4,500만 달러 어치를 수입하여 무기 구입비 지출면에서는 세계에서 5위를 기록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주된 수출품이던 재래식 무기, 탄약 등이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세계적 첨단무기 선호 분위기로 인해 함정·항공은 방산시장에서 매력력이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

147) 서용원·김민욱,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0), p.36.

148) 국방부, 『국방부사 제4집(1992~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119.

계의 핵심기술 개발과 꾸준한 시장개척 활동이 선결과제였다.¹⁴⁹⁾ 기간 중 전력증강 추진실적은 [표 4-13]과 같다.

[표 4-13] 전력정비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1992~1998) 추진실적

구분	실투자액	전력증강 추진결과		북한대비 전력수준
전력정비사업 (1992~1996) / 방위력개선사업 (1997~1998)	23조 6,600 억 원	육 군	한국형 K-200 장갑차 생산 배치 사격지휘 장갑차 (K-277) 도입 배치 한국형 구난전차 생산 전투장갑도저 생산 155밀리 신형 자주포(K9) 생산 배치 대포병 레이더(AN/TPQ-36) 9대 도입 다연장 로켓 18기 생산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천마) 개발 지대지 유도무기, 강습헬기(UH-60) 저고도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264기 도입	75%
		해 군	잠수함(KSS-I), 군수지원함, 상륙함 건조 호위함, 초계함 각 2척 건조 고속정 18척 건조 해상초계기(P-3C) 배치 고성능 해상감시 레이더 6대 배치	
		공 군	F-16전투기 ¹⁵⁰⁾ 도입 배치 T-59 항공기 20대 도입 공군 기본훈련기(KT-1) 개발 중형 수송기(CN-235M) 도입 배치 HH-60 헬기 16대 확보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1998』(서울: 국방부, 1998), p.113;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2』, p.17.

나. 김대중 정부: 획득사업(1999~2001)과 전력투자사업(2002~2003) 추진

사업목표 및 추진경과 김대중 정부는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 등 새로운 도전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국방발전 기본개념’을 수립하여, 북한의 위협에 중점 대비

149) 서용원·김민욱,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서울: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2020), p.39.

150) 한국전투기사업(KFP: Korea Fighter Plan)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0대의 기술도입생산 계약(1단계: 완제기 12대, 2단계: 조립생산 36대, 3단계: 면허생산 72대)에 의하여 2000년 초까지 예상되는 한국공군의 노후장비를 보충함과 동시에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하는 국방정책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능력에 기초한 국방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국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하여 국가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했다. 1999년 4월 15일 국방개혁추진위원장 산하에 ‘군사혁신(RMA)기획단’을 발족시켜 10개 군사혁신과제를 설정했는데, 전력증강방향으로는 감시정찰, C4I체계, 정밀타격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NCW(Network Centric Warfare) 중심의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정보전 기술, 고에너지 레이저 등 첨단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획득정책의 기본목표를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장비·물자를 경제적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하고, 주요 핵심체계에 대하여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¹⁵¹⁾

또한 1999년에 『국방과학기술기획서』를 발간하고 14개 중점 추진 무기체계와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신개념의 미래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의 전력증강사업은 ‘획득사업 또는 전력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고, 정보화 과학군 건설 및 육·해·공군 전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¹⁵²⁾

2001년부터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가 가능한 정보화·과학화된 첨단군사력 건설’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한 ‘첨단 정보·과학군의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2001년 5~6월에 국방부는 국방비의 지속적인 하향 배분에 따른 전력투자비 압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력투자 방향을 재정립하였다. 재정립된 전력투자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³⁾

첫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현존 전력의 미비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전투 긴요전력의 지속적인 보강과 현대화를 추진하며, 현용 장비의 성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정비 소요에 대한 적기 투자 등 현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둘째, 미래 첨단전력체계 개발 능력의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과 부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독자개발 및 국제협력 개발 등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획득은 과거의 체계획득 중심에서 기술축적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셋째, 전력투자방향 재정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 전력투자 방향을 우선 「2003~2017 국방획득개발계획」에 반영하고, 「2003~2007 전력투자 중기계획」에 반영하며, 「2002년 전력투자예산편성 및 2001년 재투자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각군 및 부서별로 당면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151) 국방부, 「'01~'15 획득개발계획서」(1999. 12).

15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서울: 방위사업청, 2008), p.19.

153) 국정홍보처, 『김대중 대통령 국정운영백서』(서울: 국정홍보처, 2003), pp.615~616.

2002년부터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현존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의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으로 재설정하였다.¹⁵⁴⁾ 군사력 건설 사업은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따른 중·장기 기획과 향후 5개년간의 예산을 연결시켜 매년 5년 단위의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은 2003년 2월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가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였다.¹⁵⁵⁾

[표 4-14] 주요 전력증강(전력화) 추진실적(1998~2002)

전력구분	무기체계명	전력화 수량	획득방법
기동타격	K1A1 성능개량전차	44대	연구개발
	지휘용 장갑차	212대	연구개발
	K-9 자주포	92문	연구개발
	대구경다련장	33기/110발	국외도입
	BO-105 정찰헬기	12대	기술도입 생산
	한국형지뢰살포기	43셋	연구개발
해상/상륙	KDX-1 구축함(광개토대왕함급)	3척	국내건조
	209급 잠수함	3척	기술도입 생산
	해상작전헬기 2차	13대	국외도입
	상륙돌격장갑차 2차	22대	기술도입 생산
	어뢰음향대항체계	6식	연구개발
	소해함	1척	국내건조
공중/방공	KF-16 전투기	70대	국외도입
	AGM-142	100발	국외도입
	중형수송기	8대	국외도입
	기본훈련기	50대	연구개발
	30mm 자주대공포	3문	연구개발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18기	연구개발
C4I	전술통신체계	21식	연구개발
	FM무전기	13,323대	연구개발
	다중채널 VHF장비	364대	연구개발
	백두사업	4식	국외도입
	금강사업	4식	국외도입
	장거리 레이더	4대	국외도입
	무인정찰기	4대	연구개발

※ 출처: 국정홍보처, 『국민의 정부 5년 국정자료집 1(정치, 외교, 통일, 국방)』, p.619.

154)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2』(서울: 국방부, 2002), pp.18-19.

155) 국방중기계획 업무는 1999년 1월 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전력계획관실(전력계획과)에서 획득정책관실로 이관되었다.

추진 실적 기간 중 국방부는 K-9 자주포, K1A1 성능개량 전차,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무궁화 군사위성, 기계화보병사단, 214급 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및 F-15K 전투기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김대중 정부시기 전력화된 무기체계의 주요 전력증강 실적은 [표 4-14]와 같다.

다. 노무현 정부: 전력투자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2003. 2.~2008. 2.)

사업목표 및 추진경과 노무현 정부 국방부의 군사력 건설방향은 미래 전쟁양상에 부합되도록 ‘탐지에서 타격(Sensor to Shooter) 체계’를 구축하되, 한반도 전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확보’, 전술·작전·전략 제대에 걸친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정보(C4I)체계 구축’, 그리고 ‘중심표적에 대한 전략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장비·물자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¹⁵⁶⁾

첫째, 미래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기술개발중심 연구소로 발전시키고, 신규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현용 무기·장비의 성능 개량을 촉진하고, 획득 전 과정에 경쟁원리를 확대 적용한다.

셋째,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해외로부터 구매할 때는 전력화 지원요소를 패키지로 하여 확보하고, 현용 무기체계와의 상호연동성과 운용성을 충족시켜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한다.

넷째, 국내산업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전력투자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섯째, 획득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와 절차상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사관리제도를 발전시켜 획득업무의 투명성·합리성·전문성을 증진한다는 것이었다.

2003년 말 언론에 보도된 군납비리의 영향으로 2004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에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구성하여 국방획득업무체계에 대한 대규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에 국방부본부, 각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획득조직을 통합하여 2006년 1월 국방부 외청으로 ‘방위사업청’

156) 국방부, 『국방백서 2004』(서울: 국방부, 2004), pp.39-140 ; 국방부, 『국방백서 2006』(서울: 국방부, 2006), pp.139-140.

을 신설하여 모든 획득업무를 관장하게 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했다.¹⁵⁷⁾(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산업정책 변화는 [도표 4-3] 참조)

[도표 4-3] 방위사업청 개청(2006. 1. 1.) 이후 방위산업정책 변화

구 분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철 학	자주국방의 기반 확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산업
기본개념	보호와 육성	개방과 경쟁
정책방향	1. 전문화·계열화 제도 2. 방산물자·업체지정제도 3. 방산원가 및 계약특례제도 4. 방산육성기금 5. 정부예산 100% 투자 6. 군 소요 위주의 개발	7. 전문화·계열화 폐지 8. 1물자-다업체지정확대 9. 복수연구개발제도 도입 10. 이차보전제도 11. R&D업체투자제도 도입 12. 수출지향 개발 권장

※ 출처: 서우덕·신인후·장삼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p.99.

동시에 2006년 1월 「방위사업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 훈령(국방획득관리규정)」으로만 수행되던 방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방획득관리규정」을 대체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이 2007년 「국방부훈령」과 「방위사업청훈령」으로 각각 제정되고, 그동안 방위산업 육성의 근간이 되었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다.¹⁵⁸⁾

이와 함께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전문화·계열화 제도¹⁵⁹⁾」를 2008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방위산업의 개방 및 완전경쟁체제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가시화했다. 이후로 방위산업의 제도와 환경은 개방과 경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업체 주관 연구개발의 비중도 점차 높아도록

15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5.12.28., 대통령령 제19200호)

158) 서우덕·신인후·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219.

159) 서우덕·신인후·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261-263.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산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산업체 간에 과당경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산물자 및 해당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전문화·계열화제도를 도입했다. 전문화 업체는 무기체계 완성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체계종합업체)를 말하고, 계열화 업체는 구성품 및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했다. 국방연구개발의 기획,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리하여 국방품질관리소의 기능으로 부여하면서 국방품질관리소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기획·평가 기능과 품질관리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시장 중심의 방위산업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방산수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이를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제화했다 ‘국방개혁 2020’은 군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전력구조 첨단화를 통해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충 및 방위충분성 전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독자적인 미래 ‘네트워크중심전(NCW)’¹⁶⁰⁾ 수행능력을 보장하는 전력증강과 현존 기반전력을 보강하고, 기술의 자주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의 기반강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07년 2월 22일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는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며,¹⁶¹⁾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C4ISR 및 정밀타격전력을 집중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이 추진되었다.¹⁶²⁾

또한 국방부는 2007년 10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최초의 정책서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발간하여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국방과학기술 비전으로 제시했다.¹⁶³⁾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정책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중기(2010년~2014년) 목표는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 선진권 진입’에, 장기(2015년~2024년) 목표는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에 두어 국방과학기술 세계 8대 강국에 진입하고 무기수출 10위권 수준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으로는 ①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로서 NCW 및 무인화 기술을 위주로 하는 핵심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과 SW 등 무기체계 운용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②국방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방연구개발비용을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높이고, 국방연구개발체제 효율화를 위해 ACTD(신개념기술시

160) 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서울: 국방부, 2019), p.249.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든 전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전쟁 방법. 전 작전 요소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전장가시화를 달성하고 시스템 통합체계를 이용하여 신속한 지휘결집과 효과적인 타격을 실시함으로써 전력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감지기, 교전 및 정보 격자망 이론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적시에 정확한 의사결정과 하달이 가능하며, 감지기와 무기체계들을 연결하여 표적식별 즉시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16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는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가, 2014년 10월 23일 박근혜 정부 때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에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162)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220.

163) 국방부,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07), pp.19~31.

법)¹⁶⁴⁾, M&S(모델링 및 시뮬레이션)¹⁶⁵⁾ 기반연구개발[또는 SBA(시뮬레이션 기반획득)]¹⁶⁶⁾ 등 첨단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③국방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방기술 기획·평가체계 정립 및 전문성 확보, 시험평가 기반 강화,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연구소화, 업체 주관 연구개발 및 성능개량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④민군기술협력 강화 등 국가과학기술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⑤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국제공동개발을 강화하는 것 등 다섯 가지를 설정했다.

추진 실적 첫째, C4I·전자전 전력은 고도의 기동전과 타격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장차전 양상을 고려하여 전술통신체계와 다중채널 VHF 장비가 지속 전력화되었고, 통신중계용 전술차량, 전자식 교환기를 보강하였다.

둘째, 기동·타격전력은 대구경 다련장(MLRS), K-9 자주포, K1A1 전차 등 대화력전에 대비한 전력증강과 전쟁지속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였다. 셋째, 해상·상륙작전전력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부합하고 미래의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입체전 수행능력에 적합하도록 KDX-Ⅱ 구축함, 상륙돌격장갑차 등의 주요 전력과 어뢰, 기뢰 등을 전력화하였다. 넷째, 공중·방공전력은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KF-16,



〈사진 4-17〉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 국방과학연구소가 1991년 개발에 나서 삼성항공(현 KAI)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2005년에 전력화되기 시작
※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164) 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서울: 국방부, 2019), p.607. ACTD(신개념기술시범)는 이미 성숙된 기술을 이용하여 3년 이내에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는 사업 또는 제도를 말한다.

165) 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서울: 국방부, 2019), p.343.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이란 방위력개선사업의 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와 유사한 가상상황을 조성하여 각 요소들의 효과를 측정·평가해 주는 도구 및 수단을 말한다. 모델링은 전투체계, 전장환경, 자연 및 인공현상 또는 절차 과정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는 논리적인 표현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고, 시뮬레이션은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을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위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166) 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서울: 국방부, 2019), p.249. SBA(시뮬레이션 기반획득)이란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 무기체계의 획득이나 연구개발을 모델링 및 모의실험(M&S)기법과 도구를 통해 모의, 분석 기반으로 수행하는 획득방법을 말한다.

F-15K, F-5E/F 등)를 확보하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전력화하였다.(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진은 〈사진 4-17〉 참조) 기간 중 차기전투기 사업과 장거리 레이더, 공대공 및 공대지 유도탄을 전력화하는 등 공중 수행능력을 한 차원 강화하였다.¹⁶⁷⁾

라. 이명박 정부: 방위력개선사업(2008. 2.~2013. 2.)

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 건설의 목표는 ‘북한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예군사력 건설’이었으며, 방위력개선사업의 중점은 첫째, 전장인식 분야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별로 실시간에 전술정보를 수집·분석·처리·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지휘통제 분야는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에서 작전수행을 보장한다. 셋째, 지상전력 분야는 현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및 국지도발 대비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주요부대 개편 전력의 적기 확보를 통하여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넷째, 해상상륙 전력분야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통제해상교통로 보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다섯째, 공중전력분야는 작전영역 내의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장거리 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한다. 여섯째, 방호 및 기타 분야는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전력을 확보하며, 생존성 증대를 위해 화생방 전력을 보강하는 데 두었다.¹⁶⁸⁾

사업추진 실적은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강도 높은 국지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을 보강했다.¹⁶⁹⁾ 감시 및 대잠능력의 향상을 위해 고성능 영상감시체계, 이동형 수중탐색음 탐기, 초계함 성능개량 등의 긴급전력을 확보했다. 적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사진 4-18〉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식

※ 출처: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70년사』

167) 국방부, 『국방부사 제8집(2004~200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578-580 ; 국방부, 『국방부사 제9집(2007~200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605-607.

168) 국방부, 『국방부사 제9집(2007~2009)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584-585.

169) 국방부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2020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었다.

전력으로는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실시간 탐지 수단을 확보하였고, 자동화사격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장사정포 은닉 동굴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 등 전력을 확보했다.

연평도포격도발과 관련하여 적이 서북도서 또는 접적지역에서 도발하면 적극적 억제개념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구축했다. 2011년 6월에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 5개 도서지역의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어사령부’를 창설하였고, 서북 도서지역을 요새화했으며, 적 도발 시 도발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음향표적탐지장비, 대포병레이더, K-9 자주포 등을 전력화했다.(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식 사진은 〈사진 4-18〉 참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증)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표적 시설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켰고, 적 중심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를 확보하고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보강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C4I체계, 감시·정찰능력, 타격 능력을 보강했다. 공중조기경보기(Peace Eye)를 획득하여 자주적 조기경보통제체계를 구축했으며, 2011년 최신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성공했다.(공중조기경보기 사진은 〈사진 4-19〉 참조)



〈사진 4-19〉 공중조기경보기(Peace Eye)

차기전투기(F-X) 사업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도탄고속함, 차기호위함, 1,800톤급 잠수함(장보고-Ⅱ) 등 타격전력을 확보했다. 또한 전면전과 미래·잠재적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기동헬기, K-2 전차 등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지스급 구축함(광개토-Ⅱ)을 배치하였고, 차기구축함 및 3,000톤급 잠수함과 공중급유기 사업을 추진하였다.¹⁷⁰⁾

방위산업 육성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나 정책지원을 마련하지 않아 방위산업이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그동안 부진하던 업체 주관 개발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011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던 무기체계개발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을 업체 주관 개발로 전환시키도록 한 것은 그나마 성과였다.

국방연구개발 분야에서는 2008년부터 신개념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에서 성숙되어 있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170) 국방부, 『국방부사 제10집(2010~20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580~582.

하는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개념 기술시범)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다. 2009년 7월에는 연구개발수행 업체나 시제제작 업체도 기존의 1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업체 연구개발체제를 도입하여 규정화했다.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던 전문화·계열화제도가 2008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완전경쟁체제로 진입했으며,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2009년 1월~3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업체선정 시 중소기업 가점제도 도입, 중소기업 우대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마련 등의 제도가 포함되었다.¹⁷¹⁾

2010년 10월 대통령 소속 미래기획위원회는 ① 국방연구개발체제 개혁, ②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③ 국방경영의 민간자원 활용 등을 내세우며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했다.¹⁷²⁾ 이는 국내 방위산업 및 관련 정책은 내수 중심에서 수출 지향으로, 국방획득사업체제는 경쟁형·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해외시장 개척 확대에 따른 수출 대상국 및 수출기업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0년 북한의 우리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2011년에는 잦은 군사도발과 함께 기만적 대화공세를 펴는 등 강온 양면전술을 폈으며, 2012년 4월과 1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긴장국면을 지속 조성했다. 국방부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2020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는데,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북한은 2011년에 잦은 군사도발과 함께 기만적 대화공세를 펴는 등 강온 양면전술을 폈으며, 2012년 4월과 1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긴장국면을 지속 조성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안)」을 수립하여 2012년 11월에 대통령 최종 재가를 받았다. 이 국방개혁안에 따라 조기경보 및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구조를 전장인식, 지휘통제, 지상, 해상 및 상륙, 공중, 방호 및 기타 전력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전력구조 발전방향을 수정하였다.¹⁷³⁾ 첫째, 전장인식 분야는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별로 실시간에 전술정보를 수집·분석·처리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지휘통제 분야는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지휘통제·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¹⁷⁴⁾에서 작전수행을 보장한다.

171)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221.

172) 미래기획위원회, 「국방산업 2020 전략 추진방안」, 보도자료(서울: 청와대 춘추관, 2010. 10. 19.).

173)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125.

174)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125.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NCOE: Network

셋째, 지상전력 분야는 현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및 국지도발 대비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주요 부대 개편 전력의 적기 확보를 통하여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넷째, 해상 및 상륙 전력 분야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통제 및 해상 교통로 보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다섯째, 공중전력 분야는 작전영역 내의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 여섯째, 방호 및 기타 분야는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전력을 확보하며, 생존성 증대를 위해 화생방 전력을 보강한다.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부로부터 획득업무를 분리하여 '방위사업청'을 개칭한 이후 획득체계의 타당성 논란이 지속 발생하게 되었다. 소요-획득-운영유지간의 연계성 저하와 국방정책과 획득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일관성 저하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국방획득 관련 전조직 및 기능이 방위사업청으로 집중됨으로써 사용자인 각군의 요구사항 반영이 제한되는 등 기관 간 업무분장 적절성 논란 등이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국방분야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증요구에 부합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2008년 3월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을 구성하여 2011년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2010년 12월에 국방부와 방사청 간 기능조정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추진하였으나, 국회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2년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012년 7월 제19대 국회에 동 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기계획 수립, 시험평가 계획수립 및 판정,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정책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의 임무를 전담토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방위사업법 개정안」 내용(국방부와 방사청 간 기능조정)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다.¹⁷⁵⁾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해외기술도입생산보다는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한국형 독자 모델의 개발, 그리고 기존 야전에 배치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기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기간 K1A1 전차, K55 자주포, KF-16 전투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이란 탐지수단, 지휘통제기구, 타격수단 등 전장의 여러 전투요소들을 네트워킹하여 전장상황 공유를 통한 정보우위로 지휘 속도 향상, 신속한 작전전개, 공격 치명성 제고, 생존 능력 향상과 같은 통합적·효율적인 전투력을 창출하는 작전환경을 말한다.

175) 국방부, 『국방부사 제10집(2010~201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560.

기 등의 일부 성능개량을 추진했다. 그리고 차기 전차(흑표),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KFX 전투기(탐색개발), KUH 기동헬기(수리온), 울산-I 전투체계, 장보고-III 전투체계 등을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페루와 「국제방산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¹⁷⁶⁾

마. 박근혜 정부: 전력증강사업(2013. 2.~2017. 3.) 추진

전력증강사업 국방부는 현존·미래의 북한·잠재적·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되, 북한 현존위협 대비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지식 중심의 질적 첨단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군사력 건설의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전력을 증강시켜 나갔다.¹⁷⁷⁾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하여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¹⁷⁸⁾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분야별 전력증강 방향을 살펴보면, 전장인식 분야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제대별로 전장가시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무인정찰기와 다목적 실용위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한다. 지휘통제 분야는 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분야별, 제대별 지휘통제체계들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물리적·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생존성과 방호력도 증대시켜 나간다.

지상전력은 공세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능력을 구비한다. 제대별 작전 책임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동성, 화력, 방호력, 정밀성을 향상시키고 자동화된 전투체계를 구비한다.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 다련장, 한국형 기동헬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K2전차 사진은 <사진 4-20> 참조)



〈사진 4-20〉 국내 독자 개발 K2 전차(흑표) *1995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2014년 6월 전력화됨.

※ 출처: 한국국방안보포럼, 『한국 방위사업 50년사』, p.161.

176)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223.

177) 국방부, 『국방부사 제11집(2013~2014)』(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654.

178)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해상전력은 주변 해양통제 능력과 입체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한다. 우리 해양권익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상, 수중, 항공전력을 구비한다. 이지스함, 차기구축함, 차기잠수함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2010년 2월 1일과 2015년 2월 1일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를 각각 창설하였다. 상륙전력은 대형수송함과 상륙기동헬기를 추가로 전력화하고 제주도 통합방위를 위해 2015년 2월 1일 ‘제주기지전대’와 ‘제9해병여단’을 창설하였으며, ‘해병대 항공단’도 창설할 계획이다.

공중전력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전략목표에 대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한다. FA-50, 차기전투기(F-X), 한국형 전투기(KF-X)를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인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간다.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우주 기반 감시전력 등도 확보하여 원거리 공중작전과 전천후 타격능력을 향상시킨다.

방호전력은 항공기와 탄도탄에 대한 방어능력과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호능력을 향상시킨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거리 대공유도무기와 같은 대탄도탄 방어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시 인명과 시설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호능력을 보강하며 사후관리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¹⁷⁹⁾

사업추진은 특히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¹⁸⁰⁾ 구축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핵 및 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하기 위해 지상·해상·수중에서 발사되는 탄도·순항 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탄 및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했으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와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여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해 나갔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로 보복할 경우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



〈사진 4-21〉 신형 지대지탄도 미사일 현무-II 발사 장면 (2012. 4. 19.)

※ 사거리: 현무-2A는 300km, 현무-2B는 500km, 현무-2C는 800km.

※ 출처: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p.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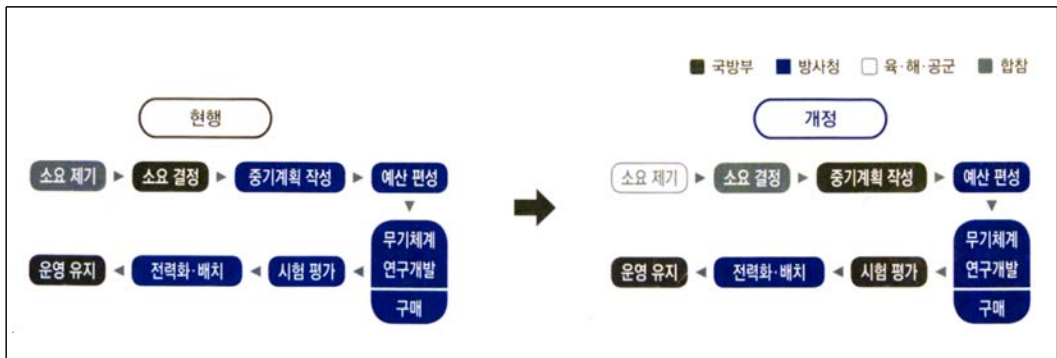
179)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85-86.

180)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된다.

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¹⁸¹⁾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다.(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Ⅱ 사진은 〈사진 4-21〉 참조)

방위산업 육성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기능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집행 기능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도록 「방위사업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판정을 담당하며, 합참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등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방위사업법 개정 전·후 기능 변화는 [도표 4-4] 참조) 이러한 기관 간 기능 조정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기관별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도표 4-4] 「방위사업법」 개정(2014. 6. 1.) 전후 기능 비교표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99.

방위사업청은 「2013-2017 방위산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 군의 방위산업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었다. 2012년 방위사업청에서는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 도약을 방위산업 육성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 목표는 세계수준의 방산기업 10개 육성, 국방과학기술 수준 선진 8위권(G8) 진입으로 설정하였다.¹⁸²⁾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난 2006년 방산수출액은 2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

181)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182) 서용원·김민욱,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0), p.46.

년에 23억 5,000만 달러, 2013년에는 34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에는 36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우리의 방산 수출액은 세계를 놓고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방산수출 1% 점유율에 불과했다. 튼튼한 국방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했다.¹⁸³⁾

바. 문재인 정부(2017. 3.~현재)

전력증강 기본방향 국방부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 핵·WMD 위협 대비 전력은 최우선으로 증강하고, 정책·전략적 영향이 큰 북한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은 대북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긴요 전력을 우선 확보한다. 테러·사이버위협과 전면전 위협 대비전력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강한다.

전장 기능별로 보면, ①전장인식전력은 군 정찰위성, 다목적 실용위성과 다양한 유·무인 정찰항공기, 신호정보수집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별 전장가시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②지휘·통제·통신전력은 제대별, 분야별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고속·대용량의 디지털 기반 통신체계 등을 통해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능력을 확보하고 적시적인 결심지원과 지휘통제 능력을 확충하여 네트워크화된 작전환경을 구축한다. ③지상전력은 K계열 전차 및 자주포, 230mm급 다련장, 한국형기동헬기, 장거리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대별 작전책임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동력·화력·방호력이 향상된 자동화 전투체계와 신개념의 지능화 탄약을 조기에 확충해 나간다. ④해상전력은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능력과 입체적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잠수함(KSS-III), 해상초계기,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한다. ⑤공중전력은 F-X, 한국형전투기(KF-X)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공중급유기, 정밀유도무기 등도 확보하여 원거리 공중작전과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킨다. ⑥방호전력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EMP(전자기 펄스) 및 화생방 방호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전쟁 초기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시설·장비의 방호

183) 서용원·김민욱,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0), p.49.

능력도 보강한다.¹⁸⁴⁾(도산 안창호함 잠수함 사진은 〈사진 4-22〉 참조)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4.1조 원을 투자하여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미래지향적 군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테러, 재해·재난 등 점증하는 비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활성화 여건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

먼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북한의 도발 징후를 탐지·식별할 수 있는 감시정찰전력과 탐지·식별된 정보를 통합·전파하여 타격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지휘통제 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탐지·식별된 표적을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과 은밀 타격이 가능한 F-35A 등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발사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매-Ⅱ와 패트리엇의 성능개량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정밀유도무기, 군위성통신체계-Ⅱ 등을 확보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편 미래지향적 군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사진 4-22〉 도산 안창호함 잠수함(KSS-Ⅲ) 진수식 행사(2018. 9. 14.)

- ※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 기술만으로 건조한 3,000톤급 중형 잠수함.
- ※ 출처: 청와대



〈사진 4-23〉 한국 공군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장면

- ※ FX 사업 일환으로 F-35A 2대가 2019년 3월 29일 청주기지에 도착.
- ※ 출처: 영상은 공군 제공.

184)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91-92.

지상전력은 정찰용 무인항공기, 230mm급 다련장 등을 확보하여 감시 및 타격 범위를 확장하고, K2 전차, 105mm 곡사포 성능개량, 81mm 박격포-Ⅱ 등의 신규 장비를 전력화함으로써 운용병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다. 해상 및 상륙전력은 광개토-III급 구축함(Batch-II) 등을 전력화하여 수상 및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함으로써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공중전력은 F-35A 스텔스기와 한국형 전투기(KF-X) 등을 전력화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하여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¹⁸⁵⁾ (한국 공군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장면과 KFX 모형 사진은 <사진 4-23, 4-24> 참조)



〈사진 4-24〉 한국형 전투기 KFX 실제 크기의 모형(2019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

※ 4.5세대 전투기이며, 2021년 전반기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

국방 연구개발체계(R&D) 활성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책임국방을 구현하고 첨단기술이 전쟁 양상을 주도하는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재의 R&D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추격형 R&D’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신기술이 무기체계를 선도·창출하는 창의적·도전적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방 R&D 수행체계를 개

[도표 4-5]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 모습(예시)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99.

185)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93.

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도전기기술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인 기술기획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 모습(예시)은 [도표 4-5]와 같다.

방위산업 활성화 첫째, 방위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¹⁸⁶⁾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방산 분야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여 신규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 부처, 민간업체, 연구기관에서 방산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등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둘째,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방산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개발·생산·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SW) 등 전략 부문과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수출 잠재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컨설팅 지원, 수출 마케팅전략 수립을 포함하는 맞춤형 패키지 정책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산기업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업도 육성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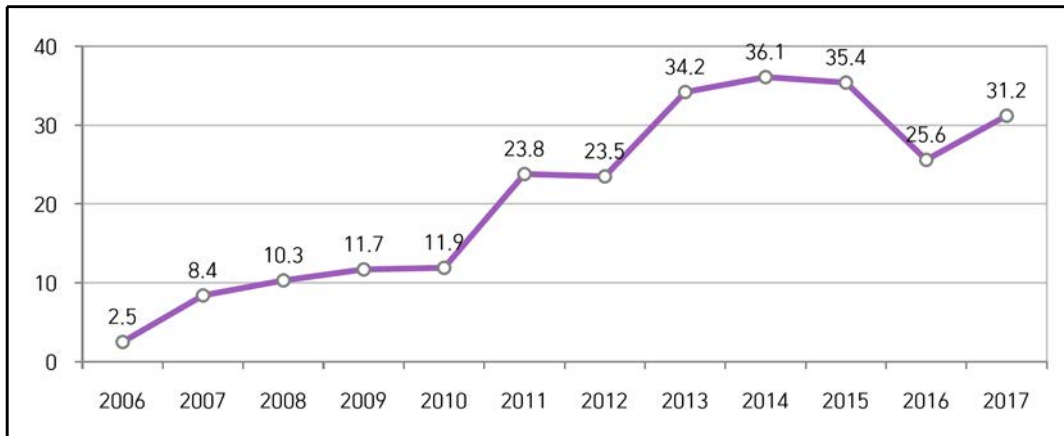
셋째, 맞춤형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매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신흥시장은 군사교류 및 경제지원과 연계하여 방산협력을 모색하고, 방산 선진국은 대응구매·공동개발 중심으로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방산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연도별 방위산업 수출액 현황은 [도표 4-6]과 같다.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구매국의 요구사항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방산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능동형 수출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까지 방산기술

186)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방산물자지정제도는 1973년 「군사물자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군수물자(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면서 도입되었으며, 해당 물자의 개발을 수행한 업체에게 일정 기간(최소 5년) 양산 독점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p.264~265.)

[도표 4-6] 한국의 연도별 방위산업 수출액 현황

단위: 억 달러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02.

획득 중심의 절충 교역¹⁸⁷⁾ 제도를 방산육성, 수출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협력¹⁸⁸⁾ 제도로 전환하고 가치추적¹⁸⁹⁾ 제도 및 산업협력 쿼터제¹⁹⁰⁾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 국방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발전단계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이래 50년 동안 수많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력화함으로써 세계수준 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에 기여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의 전력화(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방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발전단계를 ①1970년대를 ‘모방기’, ②1980년대를 ‘성장기’, ③1990년대를 ‘도약기’, ④2000년대를 ‘선진권 진입기’로 구분하고 있다.¹⁹¹⁾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모방기인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 도입하여 배치한 무기체계를 역설계하거나 기술자료 묶음(TDP)을 가지고 모방 설계하여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둘째,

187)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는 교역

188)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는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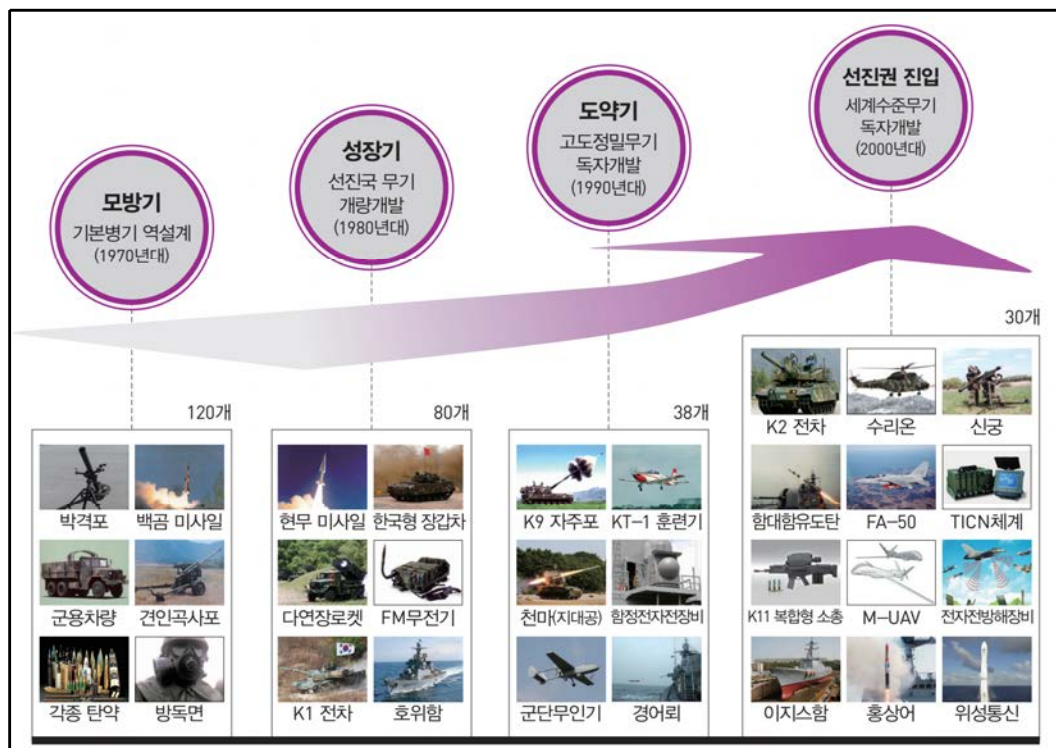
189) 국외업체가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절충교역 의무를 미리 이행하고 축적한 가치를 향후 사업에 활용

190)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기본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국내 업체의 부품, 기술용역 등으로 계약하도록 하여 방산육성 및 수출 기회 확대

19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40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16), pp.8-10.

성장기인 1980년대에는 선진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참조하여 유사하거나 개선된 성능의 독자적인 한국형 무기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었고, 셋째, 도약기인 1990년대에는 재래식무기뿐만 아니라 고도정밀무기체계들까지도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넷째, 선진권 진입기인 2000년대에는 세계 수준에도 손색이 없는 성능의 첨단 정밀무기체계들도 독자적으로 적극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¹⁹²⁾ 국방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발전단계 도표는 [도표 4-7]과 같다.

[도표 4-7] 국방연구개발 및 주요 무기체계 발전단계



※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40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16), pp.8-10 ; 서우덕 · 신인호 · 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p.198. 국방과학연구소의 도표를 서우덕 교수가 보완한 것임.

192) 서우덕 교수 제공 자료(2020.5.8.)

2. 국방정보화 추진

가. 김영삼 정부(1993. 2.~1998. 2.)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대중적 확산으로 정보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록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감으로써 21세기에는 세계 일류국가로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전략하에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8. 4.)을 제정하여 정보화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방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방정보화가 정부의 세계화 전략에 의한 핵심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전산 및 통신병과의 통합 등 국방정보화의 통합기반을 마련하였다. 1995년 4월 12일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촉진정책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정보화정책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보좌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정보체계국'을 신설하였다.¹⁹³⁾

정보체계국은 국방정보화 발전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사업을 총괄 관장하는 한편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비용 집계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나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부수적인 개념의 전산화 수준이 아닌 21세기 정보화시대 전쟁에서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보유전력을 적시에 통합운용케 하는 자동화된 지휘통제체계(C4I)와 방대한 국방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는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국방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정보체계국은 1996년 초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계획(1996~2000)」과 연계된 「국방정보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정보체계국은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우선적으로 정보화 관련 조직과 제도 및 절차를 정비하여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촉진정책과 연계하여 첨단 정보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¹⁹⁴⁾

국방정보체계 건설 우리 군은 1996년 21세기 정보화시대 전쟁에 대비한 새로운 전력체계로 국방정보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집중적인 건설을 추진했다. 국방정보체계는 크게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행동케 하는 국방통합지휘통제체계(C4I), 평시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와 이의 기반이 되는 국방정보고

193) 「대통령령 제1485호」(95. 4. 12) 정보체계국 신설.

194) 대한민국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5년 자료집』(1997), p.576.

속도로를 제공하는 정보통신기반체계로 대별하여 건설했다.

국방통합C41체계 건설은 전장 정보지식의 우위 확보와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자동화,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체계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합동참모본부를 정점으로 한 각군 작전사급 전략 10개 제대의 지휘소자동화체계를 개발해 왔으며, 육·해·공군별 지휘통제체계 건설을 추진했다.

육군은 군단급 이하 전장기능별 지휘통제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군은 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구축하여 운용하였고, 공군은 이미 운영 중인 자동화방공체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수집수단에 의해 생성되는 군사정보를 종합관리, 분석하고 이를 지휘관의 판단, 결심, 통제를 지원하는 군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휘통제 자동화체계와 상호 연동하여 운용되도록 계획을 발전시켰다.

아울러 국방통합C41체계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상용기술을 이용한 체계구축 개념과 전장의 지휘관에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투원을 위한 체계구축개념을 발전시켰다.

국방통합 자원관리체계 건설은 핵심분야인 기획·인사·군수·물자·시설·무기체계 획득·조달·동원관리 기능을 ‘자동화된 조달 및 수명주기 지원체계(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System)’¹⁹⁵⁾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군 차원의 기능별 통합시스템 위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총 840억원을 투입하여 예산관리, 인사종합관리, 종합군수지원, 동원관리 등 16개 체계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에서부터 보급, 정비 등 전 수명주기 과정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자동화관리, 활용토록 하는 국방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문서없는 국방업무 수행체계 구현 계획을 발전시켰다. 또한 교육훈련 분야는 위계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전자모의훈련 시스템 등 자동화된 훈련지원체계를 민·군 협력으로 개발하였다.

정보통신 기반체계는 모든 국방요원이 전장이나 사무실 등 어느 장소에서나 플러그만 연결하면 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고속도로와 완벽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였다. 컴퓨터체계는 전군 단일 네트워크에 의한 자동화된 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에 대비하여 여단 및 전대급 이상 자원관리 단위부대에 주전산기를 보급하였다. 개인용 컴퓨터

195)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에서부터 보급, 정비 등 전 수명주기 과정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자동화 관리, 활용토록 하는 조달 및 수명주기 지원(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개념이다.

(PC)는 주요 정책, 행정관리 부서의 관리자 1인당 1대, 실무자 2인당 1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면에서는 광역통신망(WAN)의 경우 1997년 당시 사·여단급 이상 240개 부대의 접속을 완료하여 전군 단일 네트워크에 의한 주요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근거리 통신망(LAN)은 1997년 당시 군사령부급 이상 기관 및 부대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노후된 통신회선을 영상, 화상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의 유통이 가능한 초고속망 체계로 교체하는 계획을 정부의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여단급 이상 주요 제대의 영내 노후회선을 초고속망으로 교체했으며, 전시 생존성, 신뢰성 향상을 위해 무궁화위성 등을 이용한 군 위성통신체계 구축계획을 발전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정보통신시스템 구축확대에 따른 역기능 방지와 완벽한 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 통신 보안장비를 개발하였고, 해킹, 바이러스 등 새로운 정보침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적인 정보보호대책을 검토, 발전시켰다.

정보화 환경개선 국방정보화 추진과 효율적인 정보체계 건설 및 운용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조직, 제도 및 교육 등 환경여건의 총체적인 개선을 추진하였다.

조직면에서는 1995년에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통신·전산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통합, 확대 개편한 데 이어 1997년에는 통신·전산 병과를 통합하였으며, 국방전산소 정보체계관리소로 발전시키고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군 정보화 전담 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민수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분야 민·군 겸용기술협력체제 구축계획을 발전시켰다.

제도면에서는 1996년에 「국방정보체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방정보체계 획득 및 관리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1차 개정을 통하여 획득단계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또한 군별, 기능별로 구축된 정보체계 상호간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절차를 강화하여 1996년에는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등 8개 분야 34개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1997년에는 정보화 관련 국제, 국가표준 등 상위표준 가운데 국방표준으로 준용 가능한 85개 분야를 국방표준으로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정보화 교육훈련면에서는 정보화 인력의 체계적 양성,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국방관리 업무수행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 교육훈련 정책을 발전시켰다. 특히 지금까지 실무자의 개인용 컴퓨터 활용에 중점을 주었던 이용자 교육 훈련은 최신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소개 등 정보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다양한 정보화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을 관리계층으로 확대하였다.

관리계층을 중점 교육하는 이유는 관리계층의 정확한 이해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정보화 추진의 실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 행정관리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국방부 간부요원을 대상으로 국방정보체계 연구소에서 실·국장급 이상 최고관리자 교육과정과 과장급의 중견관리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김대중 정부(1998. 2.~2003. 2.)

결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하였듯이 미래전에서도 정보와 지식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및 감시, 정찰)¹⁹⁶⁾과 장거리 유도무기가 연동된 정밀공격으로 대량 파괴와 살상 없이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정보체계국은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12월 31일 ‘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되었다.¹⁹⁷⁾ 정보화기획관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 1월 조직 개편시 정보화기획관실을 차관 직속으로 개편하였고, ‘정보체계사업단’을 신설하였다.

정보기획관실은 2000년에는 「국방정보화기획서」, 「국방정보화 종합발전계획서」 및 「국방 CIO(정보화책임관)¹⁹⁸⁾ 운영규정」 등 14건의 국방정보화 관련 각종 기획·계획서 및 정보화 관련 지침·규정을 수립하고 재정비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추진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방정보화기획서」는 미래전 수행개념의 변화, 국방운영환경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국방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발간 배포됨으로써 정보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국방정보화 종합발전계획서」로 보완되어 국방정보화의표 달성에 기여하였다.¹⁹⁹⁾

국방부는 2001년을 ‘국방통합정보체계 발전의 원년’²⁰⁰⁾으로 삼아 국방정보화 목표인 ‘정보·지식 중심의 정예 정보화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에 주력하였다. 국방정보화 추진개념도는 [도표 4-8]과 같다.

196)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Reconnaissance : C4I체계와 SR체계를 연동한 복합체계로서, 탐지수단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에 의하여 작전을 지원하는 미래의 핵심 기반체계.

197) 「대통령령 제16008호」(1998. 12. 31.)

198)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1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392~393.

200) 국방부 「군무회의」(2001. 1. 12.)

합동전장관리정보체계 발전 미래전의 승패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 하는 일련의 주기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합참 차원의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중심으로 각 군의 전술 C4I체계를 상호 연동시키고,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며, 지속적으로 기능 및 성능 개량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원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전·평시에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정보체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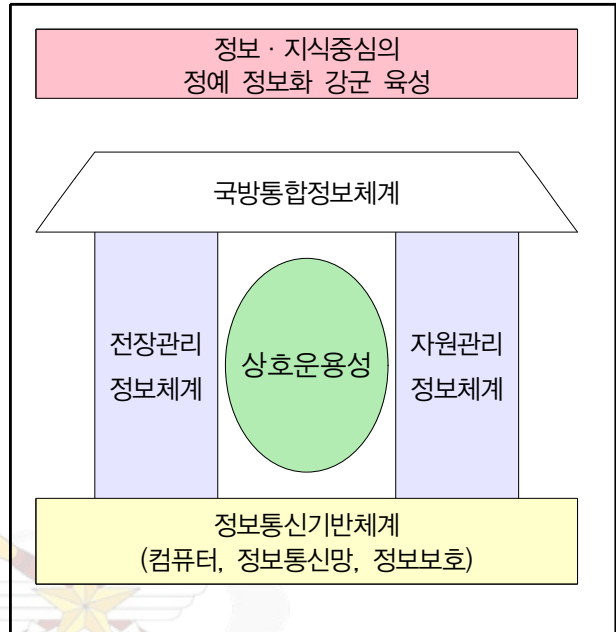
지휘소자동화체계는 1999년부터 합참과 육·해·공군의 주요 전략부대의 지휘소 기능을 자동화하고, 예하 전술부대의 전문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였다. 향후 지휘소자동화체계는 전·평시에 작전수행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

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능과 성능을 개량하고 각군의 전술C4I체계는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여 지휘소자동화체계를 중심으로 상호 연동시켰다. 그리고 합동작전 차원에서 감시체계와 타격체계를 연동시킨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방통합C4I체계도는 [도표 4-9]와 같다.

지상전술C4I체계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장기능을 자동화하여 실시간에 전장을 확인하면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기반체계를 구축하였고, 감시체계와 타격체계를 연동시키고 지휘결심을 위한 핵심체계 개발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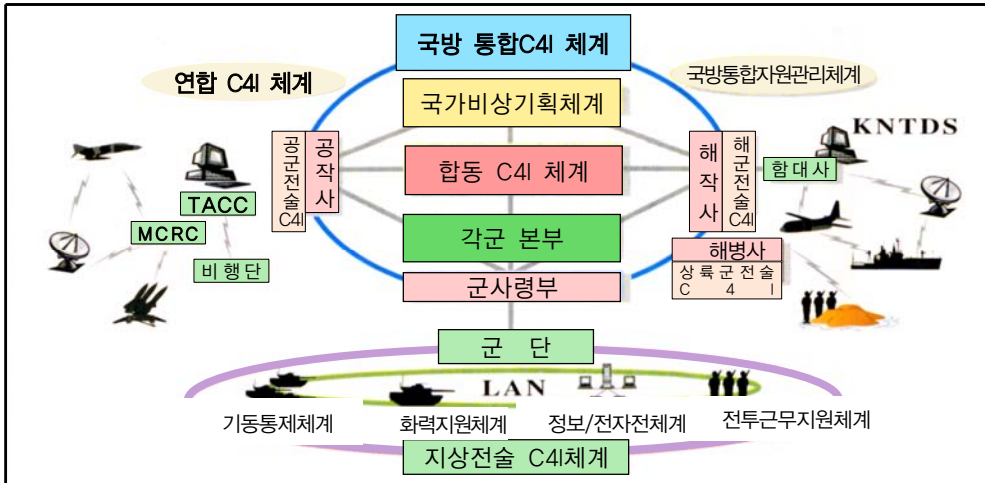
해군전술C4I체계는 당시 일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의 운용지역을 확대하여, 해상 상황을 실시간에 파악하고 통합적인 해상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2002년에 체계개발을 위한 개념연구를 수행하고 2006년까지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도표 4-8] 국방정보화 추진 개념도



※ 출처 :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p.164.

[도표 4-9] 국방통합C4I체계도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126.

공군전술C4I체계는 중앙방공관제체계(MCRC)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었으나, 2002년에 체계 개발을 위한 개념연구를 수행하고 2006년까지 공군 전술제대에 대한 지휘통제와 항공작전 수행절차를 자동화시킨 지휘통제체계를 MCRC에 연동시켜 공군전술C4I체계를 구축하였다.²⁰¹⁾

자원관리정보체계 인사관리정보체계는 장성 및 영관장교 인사관리, 조직정원관리, 보직관리 등의 응용체계를 각군 및 기관별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체계들 간의 상호연동 및 통합을 위해 2002년에 인사업무 절차개선(BPR)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예산관리정보체계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의료관리 정보체계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병원 및 일동병원을 대상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2001년부터 대전병원 등 전국의 군 병원으로 확대하였다.²⁰²⁾

정보통신기반체계 전쟁수행 및 국방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생산·관리·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반체계로서 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2002년 당시 정보통신망은 국가 초고속 기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전산망과 전화망, 지휘소 자동화망의 회선 통합을 추진하였고, 편성 대대급 이상을 대상으로 광역통신망(WAN)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근거리통신망(LAN)은 70% 수준을 구축하였다. 또한 컴퓨터체계의 경우 주

201)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2), pp.166-167.

202)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2), p.168.

전산기는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90% 수준으로 보급되어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였고, 개인용 PC는 '1인 1PC' 구현을 목표로 '컴퓨터 보급지침'에 의거 92% 수준을 보급하였다.²⁰³⁾

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2003. 2.~현재)

1)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화된 군사력 건설

국방정보화 목표 및 추진전략 21세기 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 정보화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는 크게 국가정보화 정책, 정보기술의 발전, 전장 및 국방경영환경의 변화로 구분되었다. 전장 및 국방경영 환경은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마비, 교란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새로 포함된 5차원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국가가 시간·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²⁰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발달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u-KOREA(2004)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산업 전략으로 「u-IT839전략」을 추진하였다.²⁰⁵⁾

우리 군은 새로운 전쟁개념인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이 도래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여 군을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 집약 형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방경영의 저비용·고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국방정보화는 정보기술(IT)과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하여 국방업무체계의 전반을 정보·지식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정보화의 목표'를 '정보·지식 중심의 정예 정보화 강군 육성'으로 설정하고, 전투원 위주의 정보체계 및 기반체계의 조기구축으로 2010년까지 정보우위의 통합전장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²⁰⁶⁾

국방정보화 정책은 사용자(전투원) 중심의 정보체계를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203)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2), p.170.

204)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정보화와 관련하여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주변환경에 내재된 모든 사물 및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205) 국방부, 『국방부사 제8집(2004~200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804 ; 정보통신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839전략 기술개발 master plan 수립』(2004.6.), 「u-KOREA(2004) 정책이란 IT 신기술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확산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206) 국방부, 『국방부사 2001~200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871-873.

운용성과 표준화 기반 위에 목표지향적이고 점증적·진화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정보화 정책의 단계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국방정보화 정책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단 계	목 표	추 진 전 략
1단계(2005~2009)	• 기반/ 핵심체계 구축	• 정보통신망 중심의 기반체계 구축
2단계(2010~2015)	• 통합정보체계 완성	• 유비쿼터스 중심의 기반체계 구축 • 응용체계 성능개량 및 체계 통합 • 유비쿼터스 환경 구비
3단계(2015~2020)	• 차세대 선진체계 구축	• 지능화된 선진 정보체계 구축

※ 국방부, 『국방백서 2004』, p.153.

이에 국방부는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업무수행 패러다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6년 4월 『국방정보화 정책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국방정보화 정책서』는 「국방기본정책」과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투사하여 ‘정보·지식 중심의 정보화 강군 육성’을 비전으로 한 「국방정보화 비전 2015」를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정보환경 보장’을 비전으로 한 「국방정보화 비전 2022」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추진전략에 따라 전장관리체계, 자원관리체계, 정보통신기반체계,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계, 정보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핵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유통 및 관리 능력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²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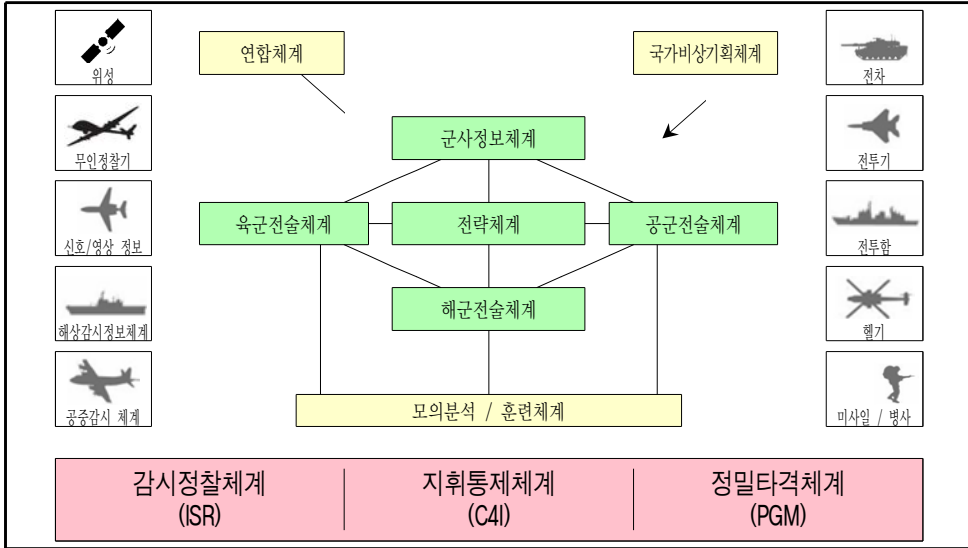
전장관리 정보화 전장관리 정보화는 미래전장 개념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보기술 능력을 전력요소에 부가하여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체계, 정밀타격체계와 같은 전장의 모든 전력요소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전장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휘통제체계, 군사정보체계, 모델링 & 시뮬레이션체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²⁰⁸⁾ 전장관리 정보화 개념도는 [도표 4-10]과 같다.

첫째, 지휘통제체계의 구축 내용을 보면, 합참은 합참본부와 각 군의 주요 전력과 작전부대의 지휘소 기능을 자동화했으며, 예하 전술 부대와의 전문을 송·수신할 수 있는 지휘소자동화

207) 국방부, 『국방부사 제8집(2004~200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803-804.

208)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154.

[도표 4-10] 전장관리 정보화 개념도



※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155.

체계(CPAS)를 운용하였는데, 2004년부터 기존 CPAS 성능을 개량한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각 군 전술C4I체계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도록 발전시켰다.

육군 지상전술C4I체계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로 명명하고,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장기능을 자동화한 것으로 2009년까지 전력화 대상부대를 확대하고 성능개선을 추진했다. 해군 전술C4I체계는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로 명명하고 당시 운용중이던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해상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작전사를 중심으로 2007년까지 구축하며, 2010년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공군 전술C4I체계는 당시 운용중이던 전구항공통제본부(TACC)와 중앙방공관제소(MCRC)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고, 작전제대별 지휘관과 작전요원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등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였다.²⁰⁹⁾

둘째, 군사정보체계 구축 내용을 보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는 당시 각군별, 제대별로 운용되고 있는 정보기능을 통합처리체계로 대체하여 실시간에 전군이 정보를 유통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자동화체계이다. 군사정보를 입력, 저장, 검색, 전파할 수 있는 응용체계 개발은 2008년까지 완료하고, 이에 따른 기반 통신망 구축 등 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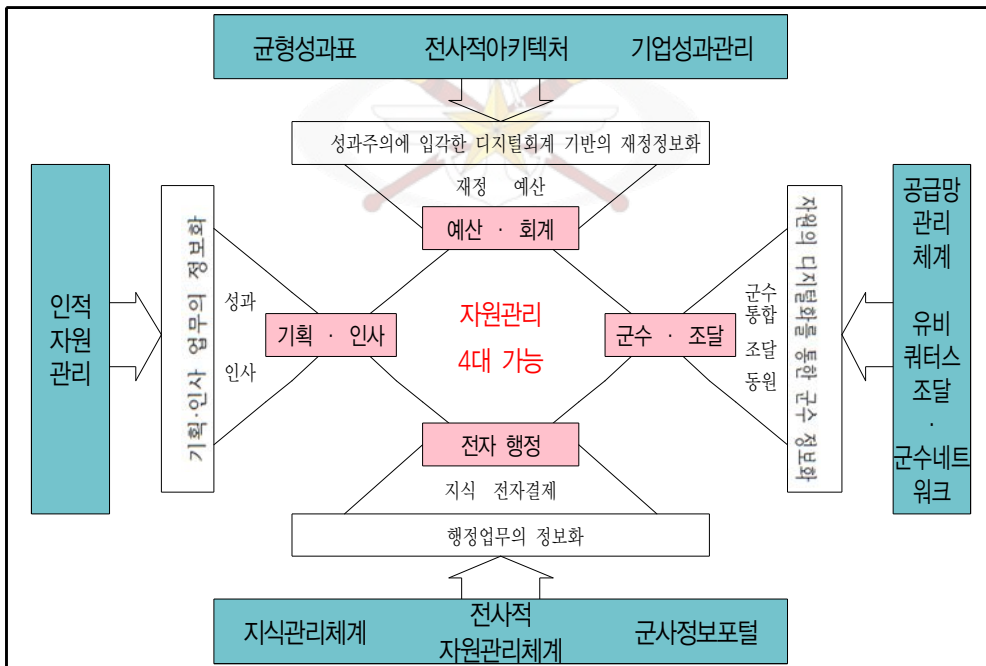
209)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54-155.

웨어 구축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다.²¹⁰⁾

셋째, 모델링 &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사고리, 전장운영개념, 부대구조와 작전계획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체계와 이를 이용하여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 분석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²¹¹⁾

자원관리 정보화 자원관리 정보화는 예산·회계, 기획·인사, 군수·조달, 전자행정 등 4대 기능분야로 구분하고, 전사적 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성과 중심의 정보화 투자 및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국가 재정정보와 국방 재정정보를 연계한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을 이용한 자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 자원관리체계 정보화 기능과 구성은 [도표 4-11]과 같다.

[도표 4-11] 자원관리체계 정보화 기능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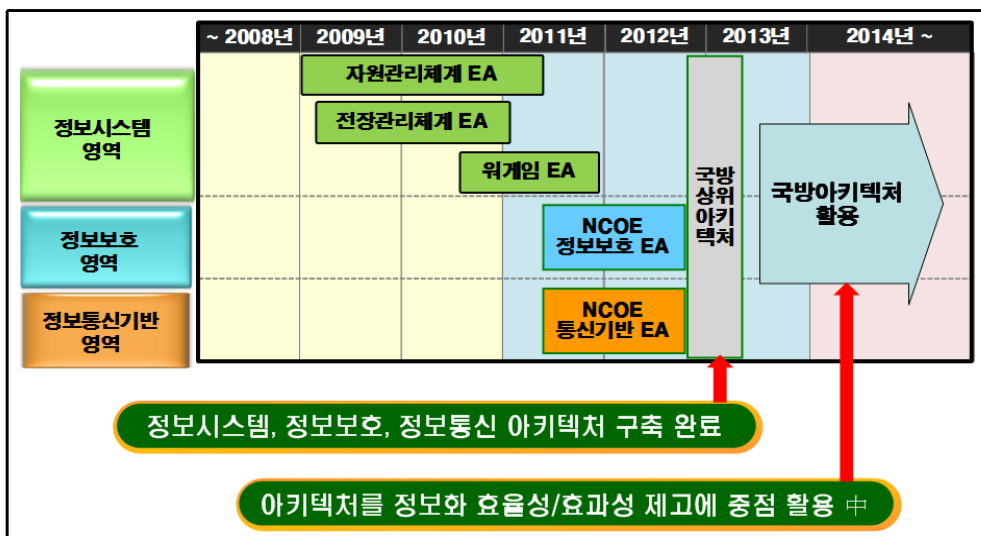
※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156.

210)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155.

211)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55-156.

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전사적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²¹²⁾ 구축을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정보화 소요의 불명확성 해소,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국방정보기술의 청사진이 될 전사적 아키텍처는 범정부 아키텍처와 연계가 가능하고, 각 군과 관련 조직의 아키텍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06년 국방부에 대한 설계를 시작으로 2009년 전군 차원의 전사적 아키텍처를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2004년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시작된 전장관리체계에 대한 전사적 아키텍처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²¹³⁾ 2014년 당시 국방아키텍처 구축현황은 [도표 4-12]와 같다.

[도표 4-12] 국방 아키텍처 구축 현황



※ 출처: 국방부, 『국방부사 제11집(2013~2014)』, p.911.

국방부는 전체 자원을 다양한 수단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으며, 디지털화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행정업무와 연계한 국방통합행정혁신체계, 국가 재정정보업무와 연계한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정보자원관리체계 등의 구축을 계획하였다.

212)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조직 전체의 핵심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조직의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위해 활용된다.(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서울: 국방부, 2019), p.852.)

213)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56-157.

국방통합행정혁신체계는 당시의 전자결재체계, 국방포탈체계에 성과관리체계, 업무관리체계, 지식관리체계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2006년에 핵심체계를 전력화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는 정부회계제도 개편에 따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개념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 회계예산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방자원 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방통합재정정보 체계는 2006년 전반기에 업무절차개선(BPR)/ 정보화전략계획(ISP) 작업이 완료되었다.

정보자원관리체계는 2008년에 핵심기능을 개발하여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자원이 있는 모든 부대로 확장하도록 추진하였다. 자원의 디지털화 수단으로 PC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에이전트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식별(RFID)과 같은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을 국방정보화에 적극 활용하였다.²¹⁴⁾

정보화 환경 조성 정보화 기반체계는 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정보보호체제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정보통신망은 민간자본유치(BTL) 방식으로 2008년까지 야전부대의 노후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국방광대역통신망(WAN)을 증속하여, 독립중대급 부대까지 구축하며, 인터넷음성통신(VoIP)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인터넷망을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컴퓨터체계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과 연계하여 주전산기와 개인용 컴퓨터(PC) 등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는데, 국방통합정보 관리소는 각 군별 1개소의 시험센터를 구축하였고, 전군에 분산된 전산실과 주전산기를 61개소로 통합하는 한편, 응용체계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정보보호체계는 사이버 안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여 사이버 위기 수준별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고, 군단급까지 설치된 컴퓨터침해 사고대응반(CERT)은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등에 따라 편성하여 임무를 확대하였으며, 통합보안관제체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국방인증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완료하였다.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였는데, 정보화실무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2001년부터 정보화 사업 관리자과정과 감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AF), 국방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CBD)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였다.²¹⁵⁾

214)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57-158.

215)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58-159.

2)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 국방정보화 혁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정보통신기술(ICT²¹⁶)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²¹⁷),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지능화할 것이다. 군위성, 정찰기, 무인기(UAV) 등의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ICT 감시정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감시정찰(ISR²¹⁸) 역량을 크게 향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하여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지휘통제를 보장할 것이다. 가상현실(VR²¹⁹) 기술을 적용해 훈련체계를 실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장 환경과 군별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에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 해군에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 공군에 ‘기지작전 훈련체계’ 등을 구축할 것이다. 위협성과 기술 숙련도가 높은 군 장비를 정비하는 교육과 실제 정비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체계는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체계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한 병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진동·열상 감지센서 기술을 활용한 침입 탐지체계와 사물인터넷(IoT²²⁰) 기반의 인원·장비·시설 원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육군훈련소에는 ‘스마트 훈련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교육훈련 평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활용하여 훈련병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실내환경 온·습도 조절을 자동화하여 생활관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할 것이다. 이외에도 무선 LTE를 이용한 원격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위급환자 발생 시 후송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²²¹⁾

초연결 네트워크 및 차세대 컴퓨팅 환경 구축 국방부는 초연결·초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축된 국방광대역통합망은 현재 7,000여 회선을 수용하고 있으며 야전에서도

21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17) Artificial Intelligence

218)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219) Virtual Reality

220) Internet of Things

221)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106-107.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반체계로 자리매김하였다. 향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고속·대용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국방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차세대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cloud) 기반으로 구축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지식정보망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용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국방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여 작전지원 여건도 보다 스마트하게 개선할 것이다.²²²⁾

국방정보시스템 고도화 국방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사, 군수, 동원, 재정 등 주요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 데이터와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공개 소프트웨어를 군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군 주도의 연합연습 및 훈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방 M&S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연합연습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위게임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합성전장훈련(LVC)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²²³⁾

3. 현재의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가. 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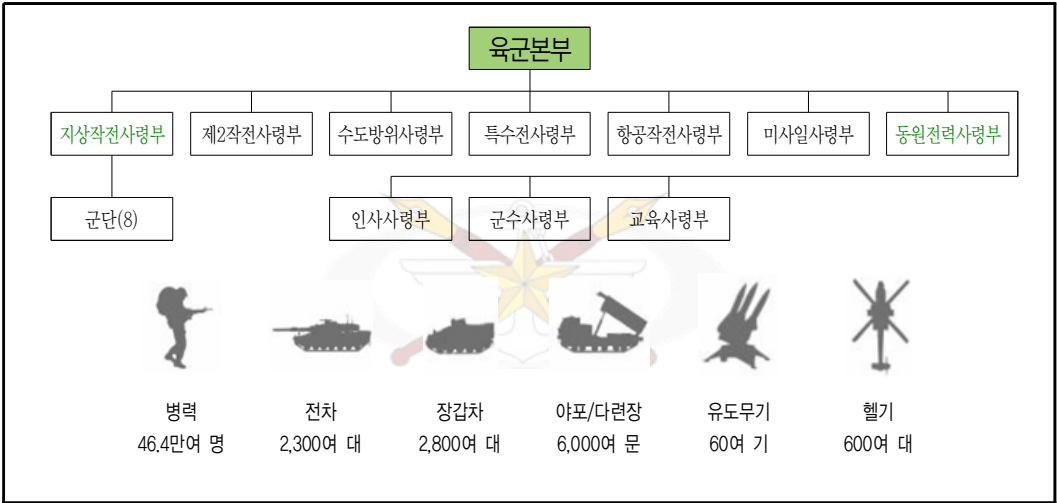
육군은 육군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작전지역 내에서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다양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민·관·군통합작전으로 합동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한다. 특수전사령부는 전시 특수작전과 평시 평화지원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항공작전사령부는 항공작전을 수행한다.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의 평시 전투준비태세

222)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108.

223)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108.

를 완비하여 전시 상비병력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사단 및 보충대대를 군단에 제공한다. 그 외 사령부는 인사 및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래합동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신속결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를 개편하며, 정찰·공격·전자전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봇 전투체계²²⁴⁾ 등 감시·정찰능력과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다련장로켓²²⁵⁾ 등의 기동 및 타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육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은 [도표 4-13]과 같다.

[도표 4-13] 육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43.
 ※ 전차, 장갑차, 야포/다련장은 해병대 전력 포함
 ※ 지상작전사령부 2019. 1. 1.부 창설, 동원전력사령부 2018. 4 .6.부 창설

나. 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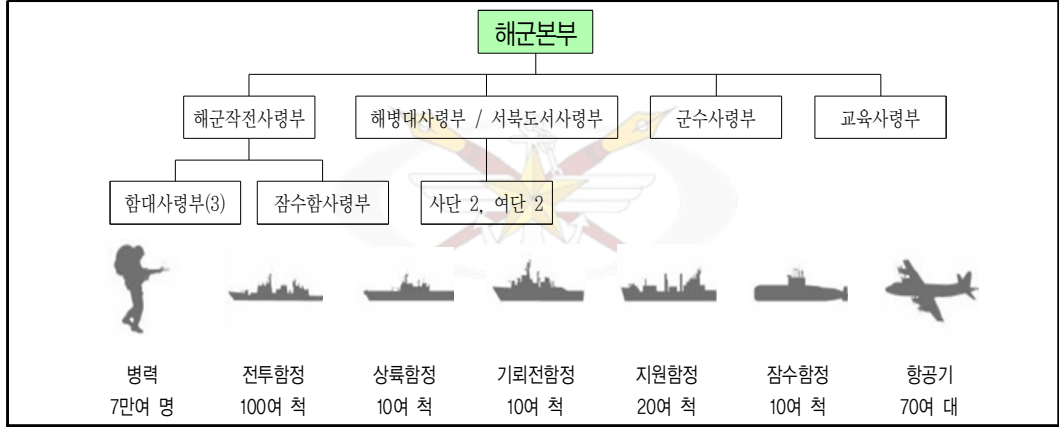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²²⁶⁾, 대잠작

224) 드론(Drone)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유인 전투체계의 능력을 보완·대체하기 위한 유·무인 전투체계
 225)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시스템으로 다량의 화력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무기
 226)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 통제권을 확보·유지하거나 적의 수상세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

전²²⁷⁾, 기뢰작전,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 해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전략도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입체 전력을 통합 운용하며,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 방위 등 다양한 임무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18년 말 현재 해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은 [도표 4-14]와 같다.

[도표 4-14] 해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44.

※ 병력은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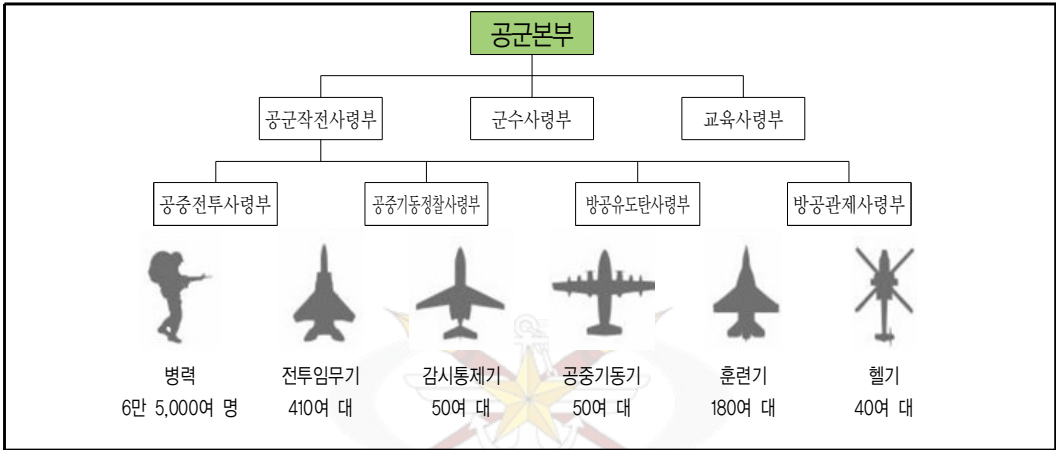
다. 공군

공군은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을 비롯하여 핵·미사일·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공중전투사령부는 공군작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부여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전술임무기의 전투력 발휘

227)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작전

를 보장한다.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공중기동, 감시정찰, 특수임무 및 탐색구조임무를 수행하고, 공중기동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한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탄도탄 및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8년 말 현재 공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은 [도표 4-15]와 같다.

[도표 4-15] 공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45.

라.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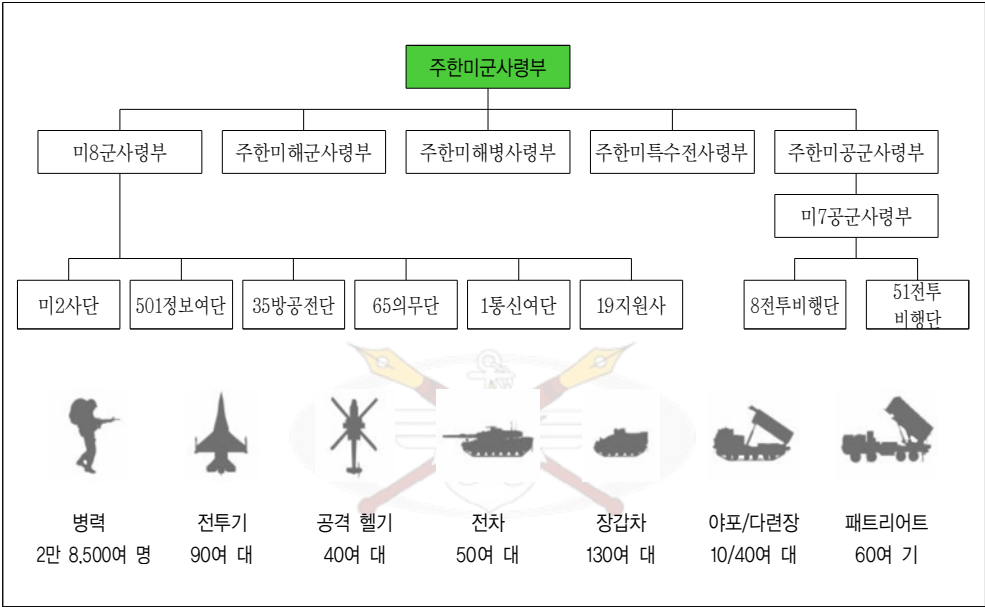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²²⁸⁾’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²²⁹⁾’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228) 연합사의 위기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 방안을 말함. FDO(Flexible Deterrence Option).

229) 한미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을 말함. TPFDD(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 별 부대 전개 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2018년 말 현재 주한미군의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은 [도표 4-16]과 같다.

[도표 4-16] 주한미군 주요 부대 및 보유 전력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45.

제 5 장 국방개혁 추진

‘국방개혁’이란 국방부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방활동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국방활동 전체 혹은 특정 부문에 대하여 의식적, 지속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행위나 노력을 말한다.²³⁰⁾ 오늘날 세계 특히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군은 안보환경이 급속하게 변할 때 제대로 대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국방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국방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계획(일명 818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이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여기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정부별로 국방개혁의 추진 배경, 경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제 1 절 노태우 정부: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818계획)」 추진

1. 추진 배경

우리 군은 창설 당시부터 육군과 해군의 ‘2군 병립제’로 운영되다가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분리하여 창설됨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3군 병립제’²³¹⁾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군은 3군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최고군사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각 군의 개별적인 독립작전 지휘체제로 6·25전쟁을 치렀다. 이후 「국방부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1948년 12월 7일 ‘연합참모회의’가 설치되었으나 1949년 5월 9일 국방부 개편 시 기구 간소화 방침으로 폐지되었다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2년 8월 23일에 ‘임시합동참모회의’를 대통령 직속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여 대통령에 대한 군사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²³²⁾

정전협정 후 각 군의 협조와 연계를 원활히 하고, 용병 및 작전과 훈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1953년 8월 3일 ‘임시 합동참모회의’가 국방부 예하 비상설 기구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임시로 운영됨으로써 휴전 이후 파생되는 주한미군 감축문

230) 민진, 「국방개혁입법 연구」, 『국방개혁과 국방관리체제의 혁신』, 안보연구시리즈, 제6집 1호(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pp.5-9.

231) ‘3군 병립제’란 3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군정, 군령을 통합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32)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1948~1991』(서울: 국방부, 1992), pp.52-53. ‘임시합동참모회의’의 임무는 군사에 관한 대통령 자문, 국방정책 및 계획 건의, 각 군의 훈련 및 작전, 기타 상호 관련사항 심의 등이며, 의장은 각 군 총장이 윤번제로 맡았고 회의장소는 윤번제 의장이 소속된 각 군 본부였다.

제, 한국군 증강문제 등의 협의와 군령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문제점이 많아 1954년 2월 17일 「합동참모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7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비상설 군령 자문기관인 ‘합동참모회의’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후 합동참모회의는 ‘연합참모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5·16군사정변 이후인 1961년 10월 2일 폐지되고, 국방부 직할기구인 ‘연합참모국’으로 축소 개편되어 합동(연합)참모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운영되었다.²³³⁾

1963년 5월 20일 「국군조직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343호)됨에 따라 1963년 6월 1일부로 연합참모국을 폐지하고, 최초의 법률상 군령기관인 근대적 개념의 ‘합동참모본부’가 설치되었다.²³⁴⁾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군령²³⁵⁾에 대한 보좌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3군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미약하여 통합차원의 목표지향적 군사전략과 군구조 개선, 그리고 군사력 건설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다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베트남 파병 국군의 귀국이 검토됨에 따라 자주국방을 위한 새로운 기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방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군 특명검열단’을 통해 국방부에 국방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²³⁶⁾ 그리하여 1970년 12월 군 특명검열단이 통합군체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추진되었으나 각 군 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고, 병원부대와 보안부대의 육·해·공군 기능 통합(국군의무사령부, 군통합병원, 국군보안사령부)과 해병대사령부의 해체(해군에 통·폐합) 등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고 말았다.²³⁷⁾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됨에 따라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한미 공동으로 행사되도록 발전적으로 보완되었으나 합참의 참모편성이 미약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군령 계

233)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조직 및 회의 변천사』(서울: 합동참모본부, 2009), p.10, 17, 19.

234)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 1948~1991』(서울: 국방부, 1992), p.53.

235) 군령(軍令, Military Command)이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능이며, 군사전략기획,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작전계획의 수립,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운용,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전비태세검열 등을 의미하며, 군정(軍政, Military Administration)이란 ①법률의 원리, 원칙 및 전쟁규칙에 의거하여 군 지휘관이 점령지역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통치기능 ②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 유지,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국방정책의 수립, 국방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및 시행, 자원의 획득배분과 관리, 작전지원 등을 의미함(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합동참모대학, 2010), p.54,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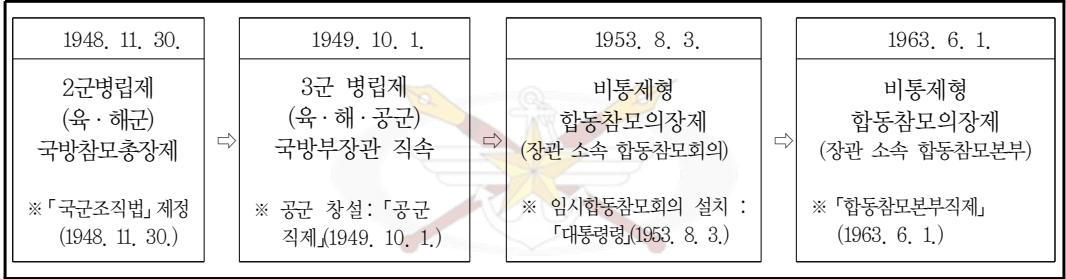
236)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개혁사』(서울: 한성애드컴, 2011. 8. 30.), p.126.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군 특명검열단’에 하달한 기본 지침은 ① 군 지휘통솔의 용이성과 능률성, ② 통합된 전력의 발휘, ③ 경제적인 체제 및 운용, ④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대응 등 크게 네 가지였다.

23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312.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의무사령부령」(1970 12. 31.)에 따라 각 군의 의무기구를 통합하여, 군통합병원은 「군통합병원령」 개정령(1971. 1. 4.)에 따라 8개의 각 군병원을 통합하여 각각 창설되었고, 국군보안사령부는 「대통령령 제 8704호」(1977. 9. 26.)에 따라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창설되었고, 해병대사령부는 정부의 경제 적 군 관리운영을 위해 「국방부훈령 제157호」(1973. 7. 10.)에 따라 해체되어 해군에 통·폐합되었다.

선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미군사위원회(MC)’를 통해 연합사에 ‘전략지시 및 작전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합참이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 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1981년 3월 합참에서 ‘군구조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군체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으나, 전두환 정부 임기 종료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은 했으나, 구미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고, 현대전 특성에 부합되며 3군 통합작전 수행이 용이한 상부지휘구조²³⁸⁾로의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의 군구조 및 지휘체제 아래에서는 군령 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는 있으나 장관의 업무가 과중하여 수행이 제한되고, 합참의장에게는 없기 때문에, 3군 통합작전 지휘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818계획) 이전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도표 5-1]과 같다.

[도표 5-1] 상부 지휘구조의 변천과정(「818계획」 이전)



※ 출처: 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 p.6 참고.

2. 목표 및 추진 과제

1980년대 말 세계적인 탈냉전 정세와 국내에서의 민주화 열망 증가로 국방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1990년 걸프전을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위협을 직시하게 되자 국방부는 국방정책 차원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88년 5월 6일 합참 전략국에서 전력증강 업무보고 시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력 성격에 타당한 전략개념 정립과 군사력 건설 및 한정된 국방자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구조를 종합

238) 상부지휘구조는 일반적으로 군종체제에 의한 유형과 군사지휘체제에 의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군종이란 육·해·공군의 조직적 유형을 말하며, 군사지휘체제란 군 통수권자가 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조직·제도·절차를 망라한 체제를 의미한다.

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태세발전방향 연구를 위한 최초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노 대통령은 7월 7일에는 “우리들의 안보상황,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 불확실해져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제2의 창군’에 버금가는 자세로 ‘군의 체질적 혁신’을 통한 자주적 억제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²³⁹⁾ 국방정책 사업으로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⁴⁰⁾ 이러한 지시와 목표에 따라 국방부는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 연구계획(818계획)」을 준비하여 8월 18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²⁴¹⁾

국방부는 「818계획」 추진 3대 과제로 ①자주적 국방태세의 확립을 위해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독자적 군사전략 정립, ②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군구조 개선, ③공세적 군사력 건설 등을 설정하였다.

연구계획은 3단계로 추진되었는데, 제1단계(1988. 9. 1.~12. 31.)는 기본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제2단계(1989. 2. 1.~12. 31.)는 1단계 연구에 대한 후속 보완 연구, 제3단계(1990. 1. 1.~1991. 12. 31.)는 입법화 및 확정된 군구조 개선방안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중에서 군구조 및 지휘체제의 개선은 「818계획」 연구의 핵심으로 국방조직의 골격이 되는 군구조와 군사지휘체제를 새로운 전략환경과 한국적 여건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⁴²⁾

3. 추진 경과



가. 1단계 연구(1988. 9. 1.~12. 31.): 국방참모총장제 입안

국방부는 1단계 연구로 기본방향 정립을 위해 198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해·공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와 국방연구원 및 국방대학원 전문교수 등 42명으로 ‘818추진위원회’(위원장: 합참의장)를 구성하였다.²⁴³⁾ 818추진위원회는 산하에 군사전략·군구조·군

239)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560.

240) 국방부, 『818계획 요약』 제1집(서울: 국방부, 1991), p.31. 1988년 7월 14일 합참 전략국에서 「장기 합동군전략기획서」 보고서 노태우 대통령은 2000년대의 민족자존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개념과 3군 합동차원의 작전운용 및 군사력건설을 재강조하였으며, 제2창군에 임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민족사적 대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새 국군 건설을 위해 육·해·공군의 최정예 인원을 집결, 한시적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방태세발전방향 연구에 착수할 지침이 마련되었다.

241) 이 계획을 대통령이 재가한 일자도 1988년 8월 18일이기 때문에 ‘818계획’이라고 명명하였다(윤광웅, 「국방조직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 국방조직 발전방향』(서울: 한국군사학회, 2000), p.117).

242)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565.

243)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561.

사력 3개 분과위원회를 편성하여 3대 과제를 연구하였으며,²⁴⁴⁾ 위원회는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적 여건, 국가상황 판단, 한국 고유의 군사사상 및 전통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의 일부분으로서 국방군사전략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군사력 운용개념과 군비지침을 발전시킨 다음, 이를 근거로 군사력과 군구조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는 체계를 정립하였다.

첫째, 군사전략 면에서는 델부릭(Hans Delbrück)의 ‘제한전 사상’과 ‘손자병법’을 참작하여 부전승 억제개념, 이소제대(以小制大)의 신축유연성과 기동마비전 교리, 그리고 화전양면 동시대비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①평시에는 적정수준의 방위전력과 응징보복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도발 규모 및 위협수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선별적 보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하며, ②전면 도발시에는 전략적 중심이 짧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반격으로 수도권의 안전보장은 물론,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마비시키는 전쟁억제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신축성 있는 전략개념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둘째, 군사력 건설 면에서는 종전의 북한 군사력 따라잡기식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방위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장기 구도하에 억제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군사전략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개념을 구상하였다. 상비전력은 필수 수준으로 정예화하고 동원전력을 최대한 강화하며, 군사력 소요는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고가의 고성능 무기와 저가의 저성능 무기를 적절히 배합하는 개념(high-low mix)을 적용하였고, 해·공군의 전력 비중을 점차로 높여 통합차원의 전력 균형을 도모하되, 주한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보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셋째, 군구조 면에서는 문민통제의 원칙하에 합동군제에 의한 지휘체제를 채택하여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하고 제한된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전략상황과 자원관리 및 지휘통제 면을 고려할 때 통합군체제로 발전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동군제를 기본으로 한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²⁴⁵⁾

연구과제 중 군구조 개선은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당시 3군병립 자문형 합참의장제에서 통제형 합참의장제, 합동군제(영국형), 통합군제(이스라엘형) 중 어느 유형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군구조의 선택에 「818계획」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연구결과 군구조 개선 분야에서 과거 3군 분권적 작전 및 지휘체제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244)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561.

245)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562;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315-316.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지휘체제로 ‘국방참모총장제’를 제시하였다.²⁴⁶⁾

1단계 연구결과는 1988년 12월 14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대통령은 기본방향을 승인 하면서 국방참모총장제의 임무 및 권한 부여, 보안 및 정보기능 통합문제, 방공사령부의 합리적인 검토, 교육기관의 조기통합 등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였다. 이에 1개월 간 보완한 후 1989년 1월 24일 전략국장(육군 소장 용영일)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국방참모총장제’, 즉 ‘한국형 합동군제’의 채택을 최종 재가 받았다.²⁴⁷⁾

나. 2단계 연구(1989. 2. 1.~12. 31): 한국형 합동군제(국방참모총장제) 보완

국방부는 1단계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2월 1일 기존 합참의장 중심의 818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818계획추진위원회’로 확대 편성하였다. 1989년 11월 16일 추진위원회는 연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①문민통제의 원칙하에 ‘한국형 합동군제(국방참모총장제)’에 의한 지휘체제를 채택하여 통합전력 발휘 보장과 제한된 국방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②합동군제에 따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③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방참모본부는 개편 전 합동참모본부를 모체로 증편하되, 현 정원범위 내에서 국방정보본부와 특검단 1·2부 기능을 흡수하는 한편, 각 군 본부의 정보 및 작전기능을 축소 조정하여 인원을 충원하고 통합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통제형 본부장제’를 채택하여 4본부 및 4실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방참모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90년 10월 10일 ‘국방참모대학’을 신설하고, 국방참모본부에 부여된 통합작전지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의 기존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하여 국군정보사령부, 국군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을 국방참모총장의 직속기구화하도록 하였다.²⁴⁸⁾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전략상황과 자원관리, 지휘통제 면에서 각국의 장점을 취합한 한국형 합동군제인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하게 되었다.²⁴⁹⁾

246)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314.

2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324.

24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316~317.

24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316;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249.

다. 3단계 연구(1990. 1. 1.~1991. 12. 31): 입법화 및 합동군제(통제형 합참의장제) 채택

「818계획」의 최종 연구안이 1989년 11월 16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방부는 1989년 12월 4일 제147회 정기국회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그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제 148회 임시국회 국방소위원회에서는 회기 내 통과를 위해 국방참모총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국방참모본부를 ‘합동참모본부’로, 국방참모차장 2인을 ‘군을 달리하는 3인 이내의 합동참모차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은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강행 통과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8월 1일 「법률 제4249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0월 1일 국군 최고 지휘기구인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되어 국군 조직이 이날부터 ‘통제형 합참의장제’로 전환되었다.²⁵⁰⁾ 1990년 10월 1일 건군 42주년 기념식전에서 노대통령은 새로 제작된 합동참모본부기를 정호근 합참의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육군 제1·제2·제3군사령부 등 10개 독립작전 부대와 정보사령부 등 3개 직할 합동부대의 작전지휘감독권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하였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국방부는 부대창설 및 기구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 1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818계획기획단과 사업단을 편성하여 잠정적으로 운영하였다. 818계획 기획단 및 사업단은 1990년 12월까지 부대창설과 개편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군구조 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업무협조를 통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잡한 군구조 개편사업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방부본부, 합참본부를 비롯한 주요 상부부대에 대한 증·창설, 통·폐합 작업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818계획」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고 시행 중 미비점과 미래에 대비한 업무를 조기에 발굴 보완하기 위하여 1991년 1월부터 ‘818평가위원회’를 편성, 운영하였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약 1년에 걸쳐 818기본개념에 입각하여 국가안보 수행체계, 군사차원의 대통령 보좌기능, 합참의장과 각 부서의 임무, 기능 및 편성, 국방전략 기획체제, 전시지원 소요판단기능 등 제반 사업추진분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군령·군정권 분리원칙을 기본으로 합동군제를 유지하면서 합참과 각 군 본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재조정하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간에 불필요한 영역다툼 소지를 해소하였다. 또한 군 인사에서 합참의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합참과 각 군 본부 간에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군령·군

250) 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서울: 국방부, 2011), p.6.

정권의 범위를 공통영역에 한해 상호 보완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합참의 지휘체제 및 기구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합참 조직이 기존연구안인 4개 본부장(전략, 작전, 정보, 지원) 중심제에서 7개²⁵¹⁾ 참모형 부장제로 변경되었다.

4. 추진 결과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818계획)은 과거 미국에 의존해 왔던 군사전략, 무기체계, 군구조, 관리운용 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한국방위를 한국화’하고, 격변의 전환기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개혁 움직임으로, 제6공화국 출범, 건국 제40주년, 그리고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개최의 시기적 여건과 어울려 군의 자기쇄신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 예가 되었다. 국군 창설 이후 이 연구 사업처럼 군 통수권자의 직접적인 관심하에 조직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한 일은 드물었다. 이 연구는 과거 군에서 시도되었던 단편적 내지 부분적 개선 노력과는 달리 군사기획의 3대 요소인 군사전략, 군사력(무기체계), 군구조를 상호 연계시킨 가운데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군사전략-군사력-군구조의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개선 대안을 도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군 안팎에서 군구조 분야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분야는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할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으며, 군구조도 자기성찰과 혁신적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장차전에서 요구되는 3군 통합전력의 효과적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²⁵²⁾

제 2 절 김영삼 정부: 「21세기 국방태세 연구」 추진

1. 목표 및 추진 분야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994년 국민의 복지 및 일상생활 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범국민적 생활개혁을 추진하였

251)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 (서울: 공보처, 1992), p.575. 7개 참모형 부장은 합동인사기획참모부, 합동정보참모본부, 합동작전기획본부, 합동군수기획참모부, 합동전략기획본부, 합동지휘통제통신참모부, 합동민사심리전참모부 등이다.

252) 공보처,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 (서울: 공보처, 1992), p.565.

다. 신정부 개혁작업은 먼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를 저지른 인사를 정부의 주요 공직에서 추방하는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개혁은 과거 ‘성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군 내부에까지 비화되어 국방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해지던 불편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하였다.²⁵³⁾

국방부는 우리 군이 좀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스스로의 반성과 각고의 노력으로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군사비밀의 장막에 가려 문제가 커져온 울곡사업(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개혁을 위해 국방부는 1994년 1월 ‘국방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군내외 전문가 및 방산업체 인사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방위력 개선과 군수조달 업무,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연구개발 제도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각종 군기 관련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단기적 대책으로 1994년 10월 각 군 본부에 ‘군 기강쇄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각 군 차원에서 ①병영내 부조리 척결, ②군기 확립, ③예하부대 통솔여건 보장으로 지휘권 확립, ④훈련 및 인성교육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해 11월에는 국방부에 ‘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 대책으로 ①장교 정예화, ②하사관(현재의 부사관) 복무 활성화, ③병 복무적응력 향상, ④처우 및 복지 개선, ⑤민·군관계 신뢰증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군 개혁방안을 연구하였다.²⁵⁴⁾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의 변화추세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태세의 조기 실현과 미래지향적인 군사력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방부 정책실장 조성태 장군을 위원장으로 하는 ‘21세기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1세기 위원회는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어 ‘군축 협의’가 진전될 경우에 대비한 ①효율적인 병력규모 및 군구조 판단, ②적정 군사력 목표 설정, ③국방조직 정비 분야 등을 연구하였다.

2. 추진 경과 및 결과

가. 지휘구조 및 국방 조직 개편

지휘구조 개편 ‘21세기 위원회’는 지휘구조 개편을 검토하여 노태우 정부가 「818계획」

253) 공보처, 『변화와 개혁-김영삼정부 국정5년 자료집-1(정치, 외교, 통일, 국방)』(서울: 공보처, 1997), p.494.

254)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김영삼정부 2년 6개월 무엇을 개혁하였는가』(서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1995), pp.284-287.

추진시 검토한 바 있는 군구조 안과 유사한 ‘통합군제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는 21세기 도래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전제하에 합참기능을 통합군 체제로 전환하고 각 군 본부를 총사령부체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합참의장은 군령, 각 군 총장은 군정 분야를 관할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818계획」의 군구조는 상부지휘권의 이원화로 각 군 예하부대에 혼선과 부담을 초래하므로 합참 기능을 통합작전체제로 전환하여 3군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통합군 안은 군 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고 전 군을 육군화하는 안이라는 해·공군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²⁵⁵⁾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1996년에도 국방 전 분야에 관련된 민간 및 현역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21세기의 통일 대비 국방발전방향’을 연구하였다. 소수정예의 상비군, 첨단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으로서 ‘작지만 강한 군대’ 육성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다.²⁵⁶⁾ 국방부는 장기 국방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국방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이 연구안을 바탕으로 『국방기본정책서』 작성을 추진하였다.²⁵⁷⁾

국방조직 개편 1995년 4월 12일 단행한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화·정보화 등 국방환경의 변화추세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요한 국방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각 군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국방부분부는 자원획득 및 관리 위주로 개편하여 경제적으로 군을 운용하고, 합참본부는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작전체제를 확립, 3군 전력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각 군 본부는 교육훈련 및 부대관리 중심으로 조정하여 각 군의 전력이 최대한 유지·발전되도록 하였다. 국방부분부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였으며 정보화시대의 발전추세에 대비하여 ‘정보체계국’을, 보건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환경관실’을 각각 신설하였고, 특검단을 해체하여 검열기능은 합참으로, 율곡감사 기능은 감사관실로 통합·보강하였다.

합참본부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1994. 12. 1.)²⁵⁸⁾와 관련, 작전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본부장 형태의 참모편성을 합참차장 중심의 일반참모 형태로 조정하여 유사기능과 조

255)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법안 정부제출 검토보고서」(2005. 12. 2.)

256) 국방부,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서울: 국방부, 1998), p.26.

257) 이러한 개혁 노력에 힘입어 김대중 정부 국방부는 1999년 1월 국방정책의 기본 지침서인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부 역사상 최초로 완성하여 국방의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258) 평시작전통제권은 1988년 초부터 미국과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후 1992년 말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

직을 통·폐합하였으며, 무기체계와 전력소요 및 시험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종래 3개 본부 및 4개 참모부를 6개 일반참모부로 개편함으로써 13%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각 군 본부는 군사력건설 소요제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정보·작전, 통신·전산, 각 특과감실을 각각 통합하는 등 각 군 실정을 고려하여 상부구조를 축소하였다. 그 결과 육군본부는 잠정 기구를 포함, 종전 6부 15감실에서 5부 11감실로 축소되어 20%의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해군본부는 5부 12감실에서 4부 11감실로 축소되어 15%의 인력감축을 보았고, 공군본부는 5부 10감실에서 4부 10감실로 축소되어 11%의 인력 감축을 가져왔다.

나. 인사개혁

인사관리제도 개선 이를 위해 1994년 10월 각 군 본부에 ‘군 기강쇄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군 차원에서 142개의 개혁과제를 시행했고, 그 해 11월에는 국방부에 ‘군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101개의 개혁과제를 선정·시행하였다.

첫째, 진급 및 보직관리 등을 개선하였다.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군 진급제도 및 군인사법을 보완 발전시켜 진급제도에 1993년부터 4심제 및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장관급 장교의 진급 및 중요부서의 장 임명 시 제청심의위원회를 국방부에 설치 운영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보직관리 면에서는 계획인사제도를 발전시켜 사전 보직예고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군 간부의 직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을 중령 53세, 대령 56세, 준위 및 원사 55세, 상사는 53세로 2~4년 연장하였다.

둘째, 군내 사조직을 척결하였다. 군의 지휘계통과 무관한 군내 사조직 근절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단행하였고,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는 타 장교와 동일한 조건에서 인사관리토록 하였다.

셋째, 병영생활의 고충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고충처리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전역, 제적, 휴직 등 불리한 인사처분시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개인권익보호를 신장하였다.

국방인력의 정예화 및 군기강 쇄신 정책부서 전문요원과 특수전문요원을 일원화하여 인력 및 조직, 국제관계, 군사전략, 군수 및 방산, 운영체제 및 분석 등 5개 전문영역으로 구분, 유형별 소요직위를 설정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최근 각종 군기 관련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개혁차원의 군기강 쇄신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각 군 본부에 군기강 쇄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영 내 부조리 척결, 군기확립, 예하부대 통솔여건 보장으로 지휘권 확립, 훈련 및 인성교육 강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기대책으로는 국방부에 ‘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교 정예화, 부사관 복무활성화, 병복무적응력 향상, 처우 및 복지 개선, 민·군관계 신뢰증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제도, 법령, 예산 문제 등 다방면에서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다. 율곡 및 군수조달제도 개선

국방부는 1994년 1월 10일 ‘국방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실무부서와 방산업체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율곡, 군수조달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성, 합리성,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율곡사업(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개혁을 위해 전력증강사업과 군수조달 업무,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연구개발 제도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총 129개 추진과제를 선정·시행하였다.

율곡제도 개선 첫째, 율곡 예산편성을 개선하였다. 종전, 총액규모 형식으로 편성하던 율곡예산을 1995년부터는 국가안보상 또는 협상전략상 대외공개가 곤란한 일부사업에 국한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기타 사업은 비목별로 세부 편성하여 국회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율곡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무기체계 획득 관리를 개선하였다. 율곡사업에 대한 책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별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였다. 주요 획득단계별 정책결정 책임부서를 지정, 합참은 소요를 확정하고, 획득방법 및 기종 결정은 국방부본부가, 협상 및 계약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사업관리는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기구로 각각 분담하여 책임체제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단순무기체계의 기종결정 권한을 각 군에 위임하여 각 군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무기개발을 위한 연구기능도 강화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핵심무기개발 위주의 고등연구소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만수 우위 기술 분야는 무기체계까지도 ADD의 관여 없이 방산업체 책임하에 업체주도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개발 단계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산업체의 주도적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향상 및 경쟁력을 신장하였다.

군수조달 업무개선 국방부 승인 대상인 조달통제품목을 각 군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조달계획이 조기에 확정·집행되도록 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품목은 매년 동일한 시기에 계약·납품되도록 하는 품목별 동일 ‘조달주기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표준품목 및 국방규격의 적부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용품목전환 및 KS정부규격전환을 유도하고, 국방부에 집중되어 있는 표준품목 지정 및 규격제정 권한의 일부를 각 군에 위임하였다. 또한 업체 자체 품질평가를 인정하는 ‘품질절차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자율적 품질보증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군수품 하자 발생시 지휘계통 보고뿐만 아니라 사용부대에서 직접 품질관리소로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하자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수조달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방 조달본부의 조직계층구조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조달 행정업무 의사결정체계를 간소화하였고, 외자분야 해외정보기구를 신설(가격정보과)하여 외자구매 업무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방위산업 육성제도 개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 실무 국장을 위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능률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산업체의 시설 및 인력의 파행적인 유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산물자 조달계약시 예산회계법의 특례로 장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거나 조달여건상 장기계약의 적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확정가계약 체결요건을 완화하며, 물가조정단가 계약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한편, 통상산업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업체의 휴·폐업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방산업체의 폐업 승인 시에는 방위산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방산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휴·폐업 시 사전에 적절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병무행정 개선

병역제도 개선 「병역법」과 「병역특례법」을 전면 통합 제정하여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병역복무형태인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병무부조리의 개입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50여 가지의 ‘병무행정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첫째,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였다. 병역 복무기간의 불균형, 현역 기피현상 및 병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도부터 육군과 해병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군은 32개월에서 28개월로, 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4~5개월씩 단축하였다.

둘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상근예비역 복무제도는 소정의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써 1995년부터 신설 시행하였다. 공익 근무요원 소집제도는 1994년 말로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분야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 원칙하에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로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잉여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하였다.

‘독자사유 보충역 제도’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독자보호의 명분 상실과 병역자원 중 독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1975년생부터 복무단축 혜택을 폐지하고 일반 병역의무자와 똑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병역기피 및 국외 미귀국 사유로 병역법을 위반한 자가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31세부터 입영의무를 면제받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1994년부터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연령 상한을 35세까지 연장하였다.

제 3 절 김대중 정부: 「5개년 국방발전계획(1998~2003)」 추진

1. 목표 및 추진 중점

김대중 정부 국방부는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선진 각국은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1세기 정보화된 선진형 신국방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방개혁 5개년 계획(1998~2003)」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방개혁은 미래 한국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목표는 우리 군의 중기발전목표인 ‘선진정예국방’ 건설에 기여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방개혁은 한국적 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군구조로의 개편, 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발전, 공정한 병역제도로의 개선, 효율적 자원운용을 위한 국방관리의 혁신 및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003년까지의 중기 국방목표는 장기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축적된 기반을 발판으로 중기 이후부터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국방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8년 국방부가 설정한 중기 국방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기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국군’, 둘째, 자긍심 넘치고 사명감 투철한 ‘전문 직업군’, 셋째,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군대’, 넷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 등 네 가지였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중점은 장기적으로는 미래 국방환경 및 개념을 설정하고 분야별 군사혁신과 국방의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창출할 수 있는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는 데 두었고, 중·단기적 추진중점은 첫째, 한국적 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군 구조로의 개편, 둘째, 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셋째,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로의 개선, 넷째, 효율적 자원운용을 위한 국방관리의 혁신 등 네 가지였다.²⁵⁹⁾

2. 추진 경과

국방부는 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1998년 4월 15일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방개혁 5개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군도 개혁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각 군 간에 연계성 있는 개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7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착수하였고, 2000년 8월까지 58개 과제 중 총 45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장기적 차원의 미래 국방설계를 위하여 1999년 4월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20~30년 후의 미래 안보환경과 국가발전추세를 분석하여 국방전략을 도출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전장운영, 군사교리, 군사기술, 전력체제, 운영체제, 리더십 및 교육훈련 등의 제 분야에 대한 기본개념과 방향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보다 강도 높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위원장을 장관의 ‘국방정보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9년 12월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정보화 담당분과를 신설하여 운용하였다.²⁶⁰⁾

259)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151 ; 국방부, 『국방부사』 제6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1019-1021.

260)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152 ; 국방부, 『국방부사』 제6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1019-1020.

가. 제1단계

제1단계 개혁(1998. 7.~1999. 7.)은 국방개혁위원회의 출범과 아울러 국방개혁의 큰 ‘틀’을 짜고 그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기간으로 이 단계에서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군 구조와 방위력을 개선하고 국방운영에 혁신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구조 개편, ②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③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 개선, ④효율적인 자원운용을 위한 국방관리 혁신, ⑤신 병영문화 창달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기간 중 추진된 주요 개혁사업으로는 국방부 합참의 조직개편(획득실, 지휘통신참모부 신설),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창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창설, 국군수송사령부 창설, 계룡대근거지원단 통합, 항공의무후송부대 창설, 국방획득업무 조직·제도 정비, 방위산업체 지원 육성, 국방과학연구소 개편, 사전 보직예고제와 명예 진급제 확대시행, 정보화기획관 신설 등의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 기반 구축, 조달개혁을 통한 군수조달 경쟁체제 구축 등이었다.²⁶¹⁾

나. 제2단계

제2단계 개혁(1999. 8.~2001. 4.)은 제1단계 기간 중 이룬 국방개혁의 성과를 보다 가시화하면서 내면적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였던 기간으로서 정보화·과학화된 군 기반 구축을 위하여 ①국방조달업무의 정보화 혁신, ②국방업무체제 정보화·과학화, ③한국적 군사혁신 정책 개발 및 정책화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기간 중 추진된 주요 개혁사업으로는 특전사 부대구조 개편,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의 국방대학교로의 통합, 획득사업 실명제 도입, 국방정보화 조직 및 기능보강, 부서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군 사법제도 개선, 신병영문화 창달 등이었다.²⁶²⁾

다. 3단계

3단계 개혁(2001.5.~2003.2.)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에 따라 국방부가 전환기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신국방’을 정립하여 제시한 단계였다. 따라서 이 단계의 국방개혁은 이러한 새로운 국방운영개념인 ‘21

261) 국방부, 『국방부사』 제6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022.

262) 국방부, 『국방부사』 제6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022.

세기 신국방'의 틀 속에 반영되어 내실 있게 추진되었다. 기간 중 추진되었던 주요 과제는 ① 인사·군수·동원 업무체계 정보화 및 교육훈련 과학화 등 정보화·과학화 기반 구축, ②군사 교육제도 개선, ③비무기체계 획득관리체계 개선, ④조달본부 개혁, ⑤부서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⑥일하는 방식 개선, ⑦비무기체계 획득관리체계 개선, ⑧한국적 군사혁신 추진 등이었다. 아울러 국방개혁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던 '군사혁신기획단'의 연구결과를 「국방기본정책서」 등 장기 기획문서에 반영함으로써 국방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²⁶³⁾

3. 추진 결과

가. 군구조 개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1998년 12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등 상부 기능의 조정 및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조직은 국방정책의 핵심 및 필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고,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위사업실과 합참의 시험평가 기구를 통합한 획득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조달, 품질보증 등과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였다.

합참은 신속한 작전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전자참모부와 작전참모본부의 C4I부를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하였으며, 정보참모본부에 '정보융합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사참모부와 군수참모부를 통합하여 '인사군수참모본부'로 승격시키는 등 합참이 명실상부한 군령의 최고기구로서 통수권자의 전쟁지도를 보좌하고 작전을 기획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각 군 본부는 분산된 C4I기능을 '지휘통신참모부'로 통합하였고, 전투발전과 화생방기능 및 조직을 보강하였으며, 방위력개선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성하였다.

육군의 지휘 및 부대구조의 조정은 보다 더 개혁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4월 지금까지 세대별 분산 및 지상부대 지원위주로 운용되던 육군항공사를 전략적·작전적·공세적 운용이 가능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개편하여 제 병과 및 기능을 통합하였고, 권역별 지원전력과 전략예비전력으로 구분 편성하여 강습여단을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예속 전환하

263) 국방부, 『1998~2003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정책기획국, 2003), p.30 ; 국방부, 『국방부사』 제6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022. 국방부, 『국방부사』 제7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900.

였다. 이에 따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제병협동작전수행체제를 갖추으로써 제한된 독립작전과 공세 주축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단일 형태의 특전사 부대구조를 다양한 위협 및 분쟁과 특히 장차 예상되는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00년 6월 융통성 있는 부대로 개편하였다.²⁶⁴⁾

북한군이 대규모 화생방 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1999년 6월 육군 예하에 ‘화생방방호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전시에 꼭 필요한 육상, 해상 및 공중으로의 전략적 수송 지원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3월에는 육군수송사령부를 모체로 ‘국군수송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 계룡대 동일지역 내에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 군 본부별로 편성, 운용하던 기존의 본부사령실을 단일지휘체제하의 ‘계룡대 근무지원단’으로 통합하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²⁶⁵⁾

아울러 유사·공통기능 통·폐합의 일환으로 1999년 4월 국방정보체계의 다원화된 지휘체제로 일원화하고 정보수집부대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신호·인간·영상정보 등 기능별로 개편하였다. 또한 환자의 긴급 후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 내에 ‘항공의무 후송부대’를 창설하였다. 1999년 1월 국방부 산하의 4개 연구기관은 연구기능이 미약한 ‘국방품질관리연구소’를 비연구기관으로 전환하였으며, 정보체계연구소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국방과학연구소에 통합함으로써 정책연구 중심의 ‘국방연구원’과 무기·정보체계 개발 연구 중심의 ‘국방과학연구소’ 등 2대 기관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학교기관 중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은 2000년 1월 각 기관의 교육목적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안보 관련 종합대학 형태인 ‘국방대학교’로 통합되었다.²⁶⁶⁾

나. 목표 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

방위력개선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고 각종 제도를 혁신하였다.

조직개편은 각 기능별로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던 획득개발 관련조직을 정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획득실’을 신설하였고,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조직은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과정(Process)중심의 통합사업관리 조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264)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153.

265)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p.153-154.

266)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p.153-154.

및 비무기체계의 획득업무가 통합되어 책임제 관리체제로 개편되었으며,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의사 결정시에는 비용분석 및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획득실은 장관의 명을 받아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품질관리소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 및 통제하게 됨으로써 국방정책에 부합되도록 집행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부서 간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정·통제하게 되었다. 획득제도의 제반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8개 협의체 위주의 획득의사결정체제를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3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17개의 획득 관련 법규를 1개로 통·폐합하고, 획득절차도 38단계에서 24단계로 단축하였다. 또한 정책의 책임과 권한은 집중하되 집행은 각 군과 기관에 위임하고 사업관리, 시험평가, 기종결정, 계약단계 등에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²⁶⁷⁾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정비·인력, 기술면에서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없는 분야는 전담체계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첨단산업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계열화 업체의 76%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방산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미래전 양상과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독자적인 핵심기술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공동연구 및 자료공유를 위해 민·군 겸용 기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5개 첨단무기체계와 관련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다.²⁶⁸⁾

다. 국방관리의 혁신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체계 기반 구축 국방정보화의 추진목표는 2015년까지 정보전 수행능력을 갖춘 ‘정예 정보화 군 육성’이었다.([표 5-1] 참조)

[표 5-1] 국방 정보화 추진 목표

1단계(1999~2005)	2단계(2006~2010)	31단계(2011~2015)
기반완성 및 핵심체계 구축	기능확장 및 체계통합	선진 정보체계 완성, 정예 정보화군 달성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157.

267)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155.

268)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155.

국방부는 정보화기획관실을 획득실에서 분리하여 차관직속 기구로 개편(2000. 4.)하고 국방정보화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보화기획관을 민간전문가로 영입하여 최신 전문지식을 국방업무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체계의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국방표준 및 상호 운용성 평가, S/W관리, 정보보호 등 내실 있는 정보화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미 개발된 정보체계와 개발 예정인 정보체계의 관리, 운용유지 및 개선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업무 정보화를 추진할 관리자들에게 정보기술을 이용해 업무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여단급에 정보화 교육장, 대대급에 인터넷 교육장 및 인터넷 면회소, 중대에 PC방을 설치하여 국가정보화 인력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정보체계 형상관리, 보안체계 개선 등 단계적인 국방정보화과제를 추진하였다.

군수조달의 투명성·경쟁력 확보 군수조달은 조달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관이 자유경쟁에 의하여 선정되도록 경쟁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규제 성격의 군납업체 등록제도와 업체실태 조사제도를 폐지하였고 군납 안전진단의 대상업체 및 품목을 1,235개에서 361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자유경쟁 원칙 하에서 많은 민간업체들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조달 관련 정보도 조달본부 종합상담실에만 비치하여 오던 것을 인터넷 ‘조달 홈페이지(www.dpa.go.kr)’를 개설하여 군납 희망 업체들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군 전용품 조달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반상용물자 구매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 중인바, 2000년에는 740개 품목을 이미 이관하였으며, 나머지 미이관 126개 품목은 경제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물자구매시 계약부서와 담당자를 명시하고 동시에 계약서 보관기간을 장비 폐기시까지 연장하는 실명책임제를 실시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나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증대시켰다.

제 4 절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기본 계획」 추진

1.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2020」

가. 목표 및 추진 중점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점과 일부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분석함은 물론 주요 국가들의 개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방개혁 2020」을 작성하였다.

「국방개혁 2020」이 지향하는 장기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자주적 선진국방’의 구현이었다. 이는 미래 안보 상황과 전쟁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군구조와 전력체계를 완성하여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의 요구에 부응한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5년 6월 1일부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개혁안을 작성하였고, 2005년 9월 1일에 「국방개혁 2020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국방개혁의 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 건설’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4대 중점」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구조와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국방의 문민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군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며, 셋째, 첨단 정보과학군에 부합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고, 넷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로 개선함으로써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여 효율적 국방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었다.²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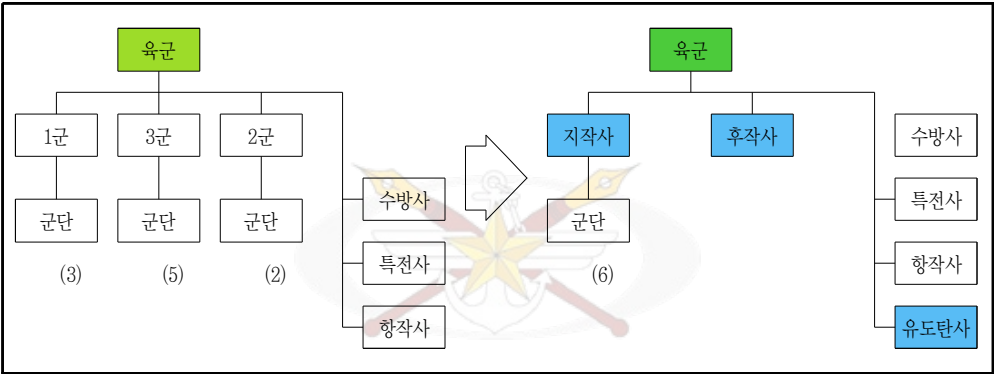
「국방개혁 2020」은 안보상황의 전망과 군의 역량을 참작하여 2020년까지의 개혁구상을 담았으며 국방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군은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질적으로 정예화하여 과학기술군으로 발전시키고, 육군 위주로 병력을 감축하하는 방향으로 2005년 당시 68만여 명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²⁷⁰⁾

269)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37.

270)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37. 2005년에서 2020년 군 병력 감축계획은 총 병력은 68만 1,000명에서 50만 명으로 약 18만 명을 감축하며, 각 군별로는 육군은 54만 8,000명에서 37만 1,000명으로, 해군은 6만 8,000명에서 6만 4,000명으로, 공군은 6만 5,000명을 그대로

합동참모본부는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의 중심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는 줄여 나가되, 단위 부대의 전투력은 2~3배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여 무인정찰기, 차기 전차, 장갑차, 화력체계 등을 증강하고 지휘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현대전 양상에 적합한 조직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특히 1·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2군사령부도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후 50년 이상 유지해 온 GOP 경계체계도 개선하여 첨단 경계 장비를 편제한 ‘경비여단’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경계 병력은 절감하면서 경계의 질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육군 부대구조 변화는 [도표 5-2]와 같았다.²⁷¹⁾

[도표 5-2] 육군 부대구조 변화



※ 출처: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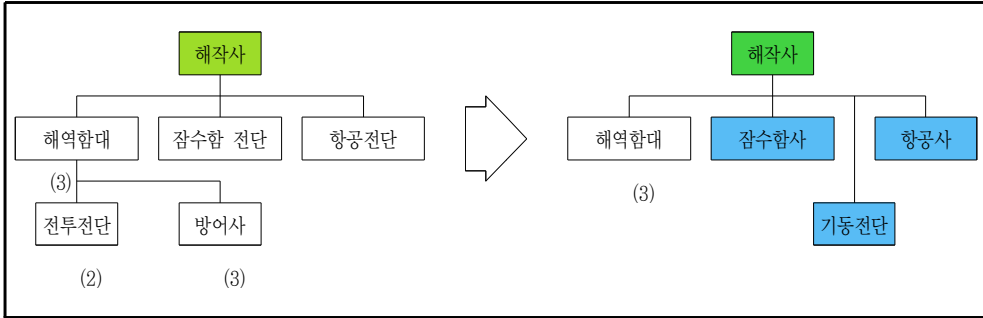
해군은 수중·수상·항공 입체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에서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 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예정이다. 부대 구조는 지금의 3개 함대사와 잠수함·항공 전단체제에서 3개 함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기동전단 체제로 보강·개편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고, 미래 전장에서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군 부대구조 변화는 [도표 5-3]과 같다. 해병대는 입체적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지상작전 등의 임무와 상황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공지기동부대와 전략도서방어 부대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²⁷²⁾

유지하는 계획이었다.

271)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37-38.

272)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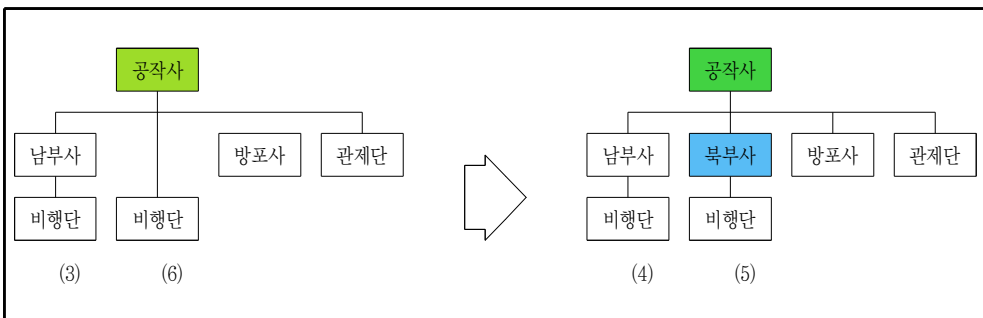
[도표 5-3] 해군 부대구조 변화



※ 출처: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38.

공군은 공중우세와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응징정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지상과 해상작전 수행 여건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작전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반도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부사령부를 창설하여 2개 전투사령부, 9개 비행단, 1개 방공포병사령부와 1개 관제단 구조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군 부대구조 변화는 [도표 5-4]와 같다.²⁷³⁾

[도표 5-4] 공군 부대구조 변화



※ 출처: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39.

예비전력의 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조정하는 동시에 상비군의 대체 전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을 질적으로 정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73)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38-39.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국방인력이 새로운 군구조와 전력구조에 부합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의 구성비를 높이고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추진하며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방관리 전반을 혁신하여 국방운영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병사들이 군복무를 인생의 발전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자율적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학습 체계를 마련하며, 내무반 병영시설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의 내용 중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의 법안으로 작성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안보여건과 국방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추진 경과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법안을 작성할 때에 먼저 국방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되 개혁의 기본 틀과 정신을 반영하는 과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개혁 기본법안」은 대통령의 재가(2005년 12월 2일)를 얻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공청회 실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정부의 기본의무 등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는 국방개혁추진과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방 문민기반의 확대와 국방 인력운용 구조의 발전 등 국방 운영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군구조 개편과 전력체계의 균형발전 및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휘관 균형편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의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에서는 장병들의 군 임무수행 여건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영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⁷⁴⁾

274)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42.

다. 추진 결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12월 1일 법제화 추진과 함께 ‘군구조 개편준비단’을 발족하고 「군구조 개편 종합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2006년 1월 독자적인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1차 합동참모본부의 개편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부대운용개념 및 배치 방안, 동원사단 해체 및 전시 재창설 방안, 후방작전사령부 창설 관련 단계별 개편 방안 및 전력 소요 등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우선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였다. 또한 2006년 1월 1일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을 발족하여 국방운영 분야의 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즉 「국방운영혁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여 전력업무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더불어, 전투근무지원 분야 아웃소싱 추진을 위한 「군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병의 자기계발 여건 조성, 병영시설 개선, 「장병복무기본법」 제정 추진 등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2006년 10월 9일 국방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방개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온 군구조개편준비단과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을 ‘국방개혁 추진단’으로 통합·편성하여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²⁷⁵⁾

2.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목표 및 추진 방향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국방 운영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내외 안보정세의 변화, 2006년 이후의 국방개혁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국방 관련 전문가 토의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공청회 등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먼저, ‘군 구조 개혁’은 우리 군의 구조를 한반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등으로 구분

275)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42-43.

하여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휘구조’ 개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전쟁 기획과 전구작전수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군사지휘체제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작전을 위한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여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부대구조’ 개혁은 미래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기민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중간지휘계선을 단축하고 부대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절감된 병력으로 전투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높여 전투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병력구조’ 개혁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여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역은 전투부대 위주로 운용하며 비전투부대에서는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예비전력은 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정예화하고, 즉응동원태세를 확립하여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전력구조’ 개혁은 현존하는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합동성 강화에 기반을 두고 전력구조를 발전시키며 부대 개편에 필수적인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하였다.²⁷⁶⁾

다음으로, ‘국방운영 개혁’은 조직, 인력, 예산 등 국방운영 분야 전반을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인 선진국방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방자원의 최적화와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 인재 양성과 획득을 위한 맞춤형 인력관리체계 구축, 병영환경 및 복지 선진화, 국방정보화와 과학기술 기반 및 역량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급 및 수송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 운영 분야에 민간의 발전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을 적극 시행한다. 각 군별로 중복 운영하던 유사기능부대를 통합하여 조직을 줄이고 이로써 절감되는 병력은 전투부대로 전환한다. 또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부대를 권역별로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군용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장병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맞춤형 전문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대학 교육 과정에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합참대 교육체계를 개선하며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 교육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셋째, 병영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제반 복지 수준을 사회 발전속도에 맞추어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군 복무 중에 학점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장병들의 생산적인 군복무를 도와준다. 전·평시

276)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108.

양질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군 의무지원체계를 발전시킨다. 또한 장병들뿐 아니라 군 가족들의 복지향상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넷째, 국방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미래전 대비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을 구축한다. 연구개발투자자와 산·학·연 참여 확대를 통해 첨단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며 방산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²⁷⁷⁾

추진 경과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현존하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위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용 병역자원 감소 등 국내외 안보 및 국방환경 변화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천안함피격사건을 계기로 2010년 7월 대통령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고,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기존 국방태세의 미비점을 향후 국방개혁 과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방태세의 문제점은 국방개혁 2020에서 계획한 주요 무기체계들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장거리 투사능력을 지향하는 것이어서, 현존하는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병력감축계획에 따라 서해5도에 배치된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의 병력을 축소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2010년 말까지 활동하면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방개혁 과제 73개를 도출했다.

추진 결과 2010년 이후 2012년까지의 국방개혁 추진 주요 성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국방개혁 추진 주요 성과(2010~2012)

분 야	주 요 성 과
군구조 개혁	• 평시부터 적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 억제’로 군사전략 전환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2011. 6. 15.), 서북도서 방어능력 보강 • 전구작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합참 조직 및 기능 강화 • 상비병력 4만 5,000명 감축 및 간부비율 4.7% 확대 • 사이버사령부 창설(2010. 1. 11.) 및 조직·인력 확대 • 북한 국지도발 대비전력 우선 보강 •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전력 적기 확보 등

277)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p.108-109.

분 야	주 요 성 과
국방운영 개혁	• 병 복무기간 단축 재조정('10년 12월) • 여성 ROTC 선발 제도 시행 및 여성인력 확대('11년 1월) • 출신·기수·진급 연차를 배제한 '능력 위주 진급 선발' 시행('11년) • 합동군사대학교('11년 12월) 및 국방어학원('12년 12월) 창설 • 전술담임 교관제 및 임관종합평가제 시행('12년) • 국군수도병원 등 14개 조직에 대한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 각 군 인쇄창·복지단·시설조직 등 유사기능부대 통·폐합 • 병영시설 현대화(발주·고시 기준 '12년 완료) • 군 선진 의료지원체계 정착 등

※ 출처: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117.

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추진 배경 국방부는 2009년 6월 26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전문가, 예비역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장관 정책자문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국방선진위)'를 설치하였고, 민간 시각에서 바라본 국방개혁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5월에 열린 '국무위원 재정 전략회의'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보완과 관련하여 무리한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2020+10' 계획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실은 2010년 8월 26일에 '2020+10' 개념을 포함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보완방향을 상부에 중간보고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했다.²⁷⁸⁾ 그러나 같은 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더불어 전작권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련의 안보상황과 국방환경 변화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했다.²⁷⁹⁾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도발 후속조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지연과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 및 언론의 관심 증대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안)」에 대한 대

278) 이는 기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에 명시된 개혁과제와 '국방선진위'에서 연구하여 제시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개혁 목표를 2030년까지 연장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안)」을 수립하는 계획이었다.

279) 국방부, 『국방부사』 제10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97-98.

통령 최종보고가 계속 지연되었다. 국방부는 2012년에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국방위에 계류됨에 따라 ‘상부지휘구조 개편과제’는 법령 개정, 개편안 검증 등 단계별로 별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 현존하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위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용 병역자원 감소 등 국내외 안보 및 국방환경 변화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발전적으로 보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안)」을 최종 완성했다. 이 안은 정책회의(2011. 10. 5.), 합동참모회의(2012. 4. 3), 군무회의(2012. 6. 4.), 국방개혁위원회(2012. 6. 2) 심의 등 정책화 과정을 거쳐 2012년 11월 29일에 대통령 최종 재가를 얻었다.²⁸⁰⁾

목표 및 추진 방향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의 목표는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구조 개혁분야’의 추진방향으로 상부지휘구조는 합동성이 강화된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구조로 개편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전구 작전지휘 및 수행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중 병력구조 개편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적정 간부비율을 유지하며 전투부대의 병력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부대구조 개편은 ‘네트워크 기반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하도록 했다. 전력구조는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미래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북한 특수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서북도서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대비 및 전투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전투형 군대 육성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군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유능한 간부를 육성하고 항재전장의 군인 정신과 전사기질이 충만한 전투형 군인을 육성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국방경영 효율화 및 방위산업 선진화는 국가 총력전 개념하에서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군수지원체제의 선진화로 전투준비태세를 제고하도록 했다 군별 유사·중복 기능부대 통·폐합, 운영 효율화와 분산된 주둔지 통합, 재배치에 따른 군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군 복지 향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 조기 현대화와 복지단 경영개선 등을 통한 군 복지를 증진시키고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여 국방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

280) 국방부, 『국방부사』 제10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98-99.

무환경 조성을 추진하도록 했다. 군인 전문성 활용 및 직업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²⁸¹⁾

추진 경과 및 결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6~2020」의 일관된 추진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7년 3월 29일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과제는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상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방개혁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률 개정안」²⁸²⁾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법률 개정 우선순위에 따라 각 법률 개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14일에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최우선 국회 처리를 위해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30일에 19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국방위원 대면설명 등 국회 처리 노력을 경주했다. 국회에서는 9월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였으나, 대선 및 새로운 정부 출범 등으로 법안심사가 지연되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군조직법」 개정 취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합참이 연합사를 대신하여 독자적인 전구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휘체계 및 능력을 구비하여 군사력 운용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동성’ 강화와 군정·군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각 군 본부 및 작전사 기능을 일원화하여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합참의장 임무에 ‘각 군 본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을 추가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지원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 행사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구작전 기획에 필요한 군수·동원소요에 관한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³⁾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결국 제정되지 못했다.

281) 국방부, 『국방부사』 제10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105-106.

282)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대설치법, 사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임.

283) 국방부, 『국방부사』 제10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106-107.

3. 박근혜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가. 목표 및 추진 경과

2013년 이후 북핵·WMD 등 비대칭 위협이 고조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부는 2014년 3월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간부를 증원하는 등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개선하는 데 추진 중점을 두었다. 실전적 교육훈련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원체계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군수운영 혁신 등을 추진하였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서 추진하였던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과제²⁸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현 안보상황이 위중하고, 국회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개혁과제에서 삭제하였다.²⁸⁵⁾

2015년부터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조국방을 추진하였으며, 국방개혁에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기능하였다.²⁸⁶⁾

2016년에는 지난 10년간 국방개혁 성과와 추진 여건을 평가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수정 1호」를 작성하였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최적의 대비방안을 강구하여 부대개편계획을 조정하고, 국가재정 전망을 고려하여 군구조 개편과 연계된 필수전력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래 국방발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선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계획도 반영하였다.

나. 추진 결과

군구조 분야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합동·연합작전 지휘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네트워크 기반하에서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군의 상비·동원사단을 개편하고 해군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제9여단, 공군 전술항공통제단을

284) 합참의장이 전구작전지휘,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 부여, 각 군 본부와 작전부대 일부 기능을 통합·슬림화.

285) 국방부, 『국방부사』 제11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111.

286)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86-87.

창설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상비병력 5만 6천여 명을 감축하였으며, 간부 비율을 6.2% 확대하는 등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해 나갔다.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2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잠수함, 호위함(FFX)과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등을 보강하였다.

국방운영 분야는 여군 활용병과를 전 병과로 확대하였으며 여대 학군단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였다. 동원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험 운영하였으며, 항방예비군의 노후 개인화기를 M-16 소총으로 모두 교체하였다.

합동 상호운용성 기술센터 등 18개 조직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전투분야 군용차량을 상용차량으로 교체하여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병봉급을 인상하고 병영문화 쉼터를 확충하였으며,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통해 군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였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GP·해안초소와 같은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고 의무후송헬기를 도입하여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개선하였다.²⁸⁷⁾

4.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가. 추진 배경

우리 군이 직면한 안보환경을 진단해보면 안보위협 측면에서는 다양한 전방위 안보위협의 대두와 함께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감소되고 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전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변국들 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과 군비 경쟁의 심화로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극단주의 이념 확산, 정보화 속도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 등으로 인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확산되고 있다.

국방 여건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2022년 이후 병역자원의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경제 여건 고려시 국방 분야로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해 국민들은 선진사회에 부합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정치 관여, 방산 비리 등으로 인해 군

287)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87-88.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된 상황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발달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로의 재정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추진에 필수요소인 전력증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국방개혁 2.0」은 국방운영의 효율화 및 인력운영체제의 혁신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하였다. 지속적인 개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60여 개의 법령 제·개정 소요를 식별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성원이기 때문에 국방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²⁸⁸⁾

나. 목표 및 추진 기초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는 데 있다. ‘강한 군대’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의미한다.

「국방개혁 2.0」의 추진 기초는 첫째,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간, 병과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군인과 국방관련 공무원·민간인력의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의 문민화를 지속 이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둘째,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지능화된 감시타격체계, 과학화 훈련체계, 스마트 병영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부대 및 전력구조 정예화는 물론 국방운영과 병영문화를 포함한 국방 전 분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셋째,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생산가능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선도와 방위산업 증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민·군 협력 등을 통한 국가자원을 국방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방재원의 제한을 완화할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 복지 구현과 국방 전반에 대한 개방성 제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²⁸⁹⁾

288)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37-38.

289)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38-39.

다. 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

추진 방향 「국방개혁 2.0」의 추진과제는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구조 분야의 개혁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21세기 우리의 안보여건과 첨단 선진 군사력 발전추세는 전쟁수행개념과 작전개념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 및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군구조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존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군구조 개혁은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의 개혁으로 구분된다. 지휘구조는 지휘통제 체제 구조를 의미하는데, 현대전 수행에 효과적이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작전기능 배분을 통해 전구작전 수행에 최적화되도록 개편할 것이다. 부대구조는 국방부분부와 직할부대, 육·해·공군 부대의 조직 구조를 말하는데,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²⁹⁰⁾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5-5]와 같다. 병구조는 2018년 현재 61만 8,000명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하며,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전력구조는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우선 확보한다.

둘째, 국방운영 분야 개혁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를 구

[도표 5-5]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계획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 작전사 3 → 2	· 작전사 1	· 작전사 1
· 군단 8 → 6	· 해병대사 1	· 전투사/기능사 4
· 사단 39 → 34 * 최종 33개	· 함대사/기능사 4 → 5 * 최종 6개	· 비행단 12 → 13
· 전단 6 → 5 * 최종 4개	· 해병사단 2	
지상직전사령부, 정보·화력여단, 신속대응사단, 참모, 기동사단 개편, 드론봇 전투체계와 위력어플렛 등 첨단장비 도입	수상·수중·항공 통합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

※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개혁 2.0』,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p.6.

290)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개혁 2.0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2018. 7. 27.) ; 송영무, 『선진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서울: 박영사, 2020), pp.31-33.

현하며, 3군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제도 및 의식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고,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하며, 군수 개혁 등을 통한 전쟁수행능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투명하고 청렴한 개방형 국방운영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 시설 조성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운영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국방운영 예산을 철저히 절약하여 전력증강 예산의 증가폭을 늘리고자 하였다.

셋째, 병영문화 분야 개혁은 사회발전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및 복지를 구현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복무가 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국방운영과 병영문화의 개혁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장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병들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병사들의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장병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병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넷째, 방위사업 분야 개혁은 비리·부실의 근본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보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진화적 국방획득을 구현하고자 한다. 국방 연구개발 역량과 방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법」의 전면적 개정 등 법적기반 정비하고,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 등 방위사업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무기체계의 부실을 방지하며, 적기에 전력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을 기술품질 중심, 수출기반 체제로 전환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²⁹¹⁾

중점 과제 「국방개혁 2.0」에 설정된 과제 목록은 4개 분야 16개 대과제와 42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제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일정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과제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1990년대 이후 국방개혁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비록 추진 개념과 중점은 일부 차이가 있었을 지언정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사력의 현대화,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와 방향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국방개혁 2.0」의 대과제 목록 현황은 [표 5-3]과 같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완성 후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은 [표 5-4]와 같다.

291) 송영무, 『선진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서울: 박영사, 2020), p.31-33.

[표 5-3] 국방개혁 2.0 대과제 목록 현황

분 야	대 과 제
군구조	①전방위 안보위협에 탄력적 대응 가능한 군사력 운용개념 수립 ②한미동맹 기반,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 지휘구조 개편 ③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 ④전투조직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⑤사이버,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역량 강화
국방운영	⑥국방운영의 효율화 및 인력운영체계 혁신 ⑦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 ⑧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 및 운영체계 발전 ⑨총수명주기 개념을 적용한 국방 획득 및 운영 관리 강화 ⑩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병영문화	⑪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장병 인권보호 강화 ⑫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위사업	⑬효율적 국방획득체제로 개선 ⑭국방 R&D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⑮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출처: 국방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pp.16-18.

[표 5-4] 국방개혁 2.0 완성 후 미래 모습

구 분		현재 모습	극복요소	구현방법	미래 모습
			현상유지 관성	국방개혁 2.0	
군 구조	위협 인식	북한 핵·미사일, 재래전 위협 중심	양적 과대 평가, 북한 일변도	질적 능력 고려, 위협 다변화	북한, 잠재적,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
	전략 개념	북한 위협 대응 중심 수세적 개념	의존적 전략개념	탄력적 전략개념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유연한 대응 개념
	지휘 구조	연합사 주도 지휘 체계	능력에 대한 의구심	능력 검증, 지휘구조 개편	한미동맹 기반, 우리 군 주도 지휘 체계
	부대 구조	부대수 증시, 편성률 저하	현 체제 유지 관성	편성의 완전성 보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투에 효율적인 부대
	전력 구조	위협 기반의 규모 중심 재래전력	각 군 고정비율 투자	목표 지향적 투자	능력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
	병력 구조	상비군 중심의 비효율적 구조	병역자원 급감	인력구조 재설계	전투효율화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 개편

구 분	현재 모습	극복요소	구현방법	미래 모습
		현상유지 관성	국방개혁 2.0	
국방운영	고비용 저효율의 병력 중심 운영체제	군 특수성 강조, 폐쇄적 국방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을 국방운영에 도입	고효율의 선진화된 운영체제 구현
병영문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권·복지	관리 중심의 군 문화	인권 존중의 군 문화	국민 눈높이의 인권·복지로 사기 및 복무의욕이 충만한 병영문화 조성
방위산업	방위사업 비리, 내수 위주 방위산업 구조	폐쇄적 업무체계	개방적 생태계 조성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 경쟁력 확보

※ 출처: 국방부, 『국방개혁 2.0』,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p22.



제 Ⅲ 부

전쟁 수행과 군사대비태세

제6장 전쟁 수행

제7장 군사대비태세

제8장 교육 훈련

제 III 부 전쟁 수행과 군사대비태세

제 6 장 전쟁 수행

근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은 세 번의 큰 전쟁을 경험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그것이다. 앞의 두 전쟁은 한반도 및 중국 일대에서, 베트남전쟁은 파병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세 번의 전쟁 수행으로 수많은 인명이 손실되었고, 전란에 휩싸인 조국 강산은 초토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는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볼드윈(Hans. W. Baldwin)은 인류 역사 3357년 동안(B.C. 1496~A.D. 1861) 전쟁이 없었던 평화 기간은 227년(7%)에 불과하고 나머지 3130년(93%)은 전쟁 속에 살았다고 했다.¹⁾ 또한,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William J. Durant)는 “역사에 기록된 324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²⁾라고 말했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나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병법에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망각하면 반드시 위태롭다(天下雖安忘戰必危)”라고 하였다. 우리가 겪었던 쓰라린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교훈을 도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 1 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1.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과 군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5일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공포하여 대통령이 원수로서 군 통수권자가 되고 대본영이 군을 통솔하며, 참모부가 국방과 용병에 관한 계획을 맡도록 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제는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대한제국 군대의 편제를 원용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은 1920년 2월 2일 발표된

1) Hans. W. Baldwin, *Strategy for Tomorrow*(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0), p.4.

2) 한국국방연구원, “미래 군사력 설계를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628호(1996. 6. 10.), pp.1-2.

국무원 포고 제1호³⁾와 14개 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정방침」(1920. 3. 2.)에 잘 나타나 있다. 시정방침 중 군사 관계에서 독립전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개전 준비작업으로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의용병을 모집해 훈련하며, 사관학교와 비행기대 설립, 작탄대(炸彈隊) 편성 등이 제시되었다.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위한 노력은 3·1운동 이후 형성된 기존 독립군 부대를 단일한 독립군단으로 통합 편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특별군무 회의에서는 군정부를 폐지(1919. 11. 7.)하고 임시군정서를 두기로 하면서 서간도의 군정부인 대한군정서는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군정부인 북로독군부는 북로군정서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군정서를 독판부, 정무청, 위원회로 구성하고 하부에 군정기구를 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1919. 12. 18.)를 발표해 육군의 편성 및 관제에 포함된 군사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고 독립전쟁을 시행할 육군의 규모를 1~3만 명 내외로 하되 2~5개 여단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시군제에 따라 「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1920. 2.)를 마련해 지방군구사령부 설치에 착수하였다.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노력은 1920년 4월 19일 북간도 군구에서 북로사령부 설치를 합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독립군과의 통합노력은 청산리전투 이후 일본군이 도발한 간도 침략과 경신참변으로 사실상 지속하지 못하였다.

2. 북간도 독립군의 독립전쟁

만주지역의 독립군 총 46개 단체 중 서간도의 경우 한족회, 서로군정서, 대한청년단연합회 등 22개 단체가 있었던 반면, 북간도와 북만주 지역에는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24개 단체가 있었다. 북로군정서는 1개 사단 규모의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사관연성소를 두고 4백여 생도를 교육하였다.⁵⁾

1919년 9월 밀산에서 홍범도가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을 출범시켰고, 이후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 안무의 대한국민회군과 제휴하여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를 출범(1920. 5. 22.)시켰다. 대한북로독군부는 독립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홍범도를 중심으로 두만강 연안 도시인 회령, 종성, 온성 등지로 진입해 국내 진격작전을 전개하며 일본 경찰과 치열하게 접전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20년은 연인원 4,643명의 독립군이 1,651

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161-162.

4) 국회도서관, 『한국 민족운동 사료(중국 편)』 8(서울: 천풍인쇄, 1976), pp.107-111.

5)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63.

회에 걸쳐 진격작전을 전개해 일본 경찰서와 관공서 37곳을 공격하였다.⁶⁾

독립군의 국내 진격작전이 빈번해지자 일본군은 정규군을 직접 파견하여 국경 수비와 독립군 와해에 나섰다. 1920년 6월 대한북로독군부의 홍범도 부대는 봉오동 상촌으로 일본군을 유인하여 기습 공격함으로써 일본군 120명을 사살하였다.⁷⁾ 이에 반해 독립군은 전사 1명, 부상 2명에 그쳤다. 봉오동전투는 우리나라가 병탄(併呑)된 이래 최초로 승리한 전투였다. 봉오동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1920년 8월 ‘간도 지방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수립하여 독립군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제19사단을 주력으로 하여 약 2만여 명의 토벌대를 편성하였다. 이에 반해 독립군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600여 명과 보충병 약 100여 명, 홍범도의 대한북로독군부 400~500명, 그리고 대한국민회군, 대한의군부, 대한신민단, 훈춘 한민회 등 총 2,000여 명 정도였다.⁸⁾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의 연합부대는 10월 21일 중무장한 일본군 추격대가 독립군으로부터 삼도구 청산리 백운평(白雲坪) 부근의 골짜기에서 기습공격을 받고 패퇴한 백운평전투를 시작으로, 1920년 10월 26일 새벽까지 약 6일간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 정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북로군정서의 보고에



〈그림 6-1〉 청산리전투

※ 출처: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따르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일본군 토벌대 600여 명을 사살하는 값진 승리를 거두었다. 독립군의 피해는 전사자 130여 명, 부상자 220여 명이였다.⁹⁾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는 한인 독립군이 월등한 화력과 장비를 지닌 일본 정규군을 패퇴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전투였다.

일제의 대륙 침략은 시베리아 출병으로 본격화되었는데 7만 명 이상의 병력을 연해주를 넘어 자바이칼주나 북만주 일대에 주둔시키면서 무장한 한인 독립군을 섬멸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본군은 1920년 3월 한·러 연합 빨치산으로부터 아무르강 하구인 니콜라옴스크(泥港)에서 참패를 당하자(니항사건) 참혹한 보복전을 전개하였다. 일본군은 4월 초 블라디보스토크 등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한인 2,500여 명을 살상한 ‘4월 참

6)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85.

7) 김정명 편, 『조선 독립운동』 2(동경: 원서방, 1967), p.239.

8) 강덕상 편, 『현대사 자료: 조선 2』(동경: 미즈루書房, 1967), pp.384-393.

9) 김정명 편, 『조선 독립운동』 2(동경: 원서방, 1967), p.246.

변'을 일으켰다.¹⁰⁾ 한인의용군들은 '4월 참변'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적위대를 결성해 러시아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이 후원한 백위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한편 청산리전투에서 참패한 일본군은 간도 일대에 1920년 10월에서 12월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경신참변(일명 간도참변)'이라고 부르는 참혹한 보복전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비무장 상태의 한인 3,500여 명이 살해당하거나 체포되었으며, 민가 3,209동 이외에 학교 36개교, 교회당 14개소 그리고 곡물 5만 4,045섬이 불에 타거나 파괴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¹¹⁾

청산리전투 이후 일제의 초토화 작전이 거세지자 1921년 초 대규모의 항일 독립군들이 밀산을 거쳐 러시아로 넘어갔다. 독립군이 넘어간 러시아령 자유시는 일본침략국으로부터 처음 해방된 도시이자 대일 완충국인 극동공화국 영역이었다. 독립군은 극동공화국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2차례의 무장해제를 당했는데, 첫 번째는 일차 집결지인 이만(Iman)에서 철도편으로 자유시로 넘어갈 때, 두 번째는 독립군단 통합과정에서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 때문이었다. 첫 번째 경우는 절차대로 이동 이후(1921. 3월 중순) 무기를 되돌려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북로군정서계 서일, 김좌진, 이범석, 나중소 부대는 무장해제에 반대하여 만주로 되돌아갔다. 또 다른 무장해제 위기는 상해파 대한의용군이 이르쿠츠크파 고려혁명군 주도의 통합에 반대해 북간도 북귀를 결정했으나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부대 간 충돌로 유혈 참변이 일어났다.¹²⁾

[표 6-1]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의 정치적 차이

구 분	대한의용군	고려혁명군
임정 입장	상해임시정부 봉대(1921. 3월까지)	대한민국의회 봉대
군사지도기관	전한군사위원회	(임시) 고려혁명군정의회
관련 공산단체	러시아공산당 극동국 한인부 아무르주 한인공산당(흑하) 재상해 한인사회당(상해파)	이르쿠츠크 전로한인공산당 중앙총회, 대한국민의회내 공산야체이카(이르쿠츠크파)
후원 세력	러시아공산당 극동국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주요 인물	한인부: 박애, 계봉우, 장도정, 김진 전한군사위원회: 이용, 채영 기타: 박일리아	자유대대: 오하목 그 외: 유동열, 최고려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98.

10) 반병률,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서울: 신서원, 2013), pp.268-300.

11)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41집(2012. 4.), pp.203-234.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95-96.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은 몇 차례에 걸쳐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결렬되자 코민테른의 입장을 따르는 고려혁명군정의회는 독립부대 간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28일 자유시수비대 제29연대로 하여금 대한의용군계의 전한군사위원회를 무장 해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대한의용군 대원들이 희생당하였다. 대한의용군의 「성토문」에 의하면 피살, 익사, 행불자 포함 약 600여 명, 포로 917명 등 약 1,5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자유시참변 결과 니항부대 소속의 포로들은 재판 후 강제노역에 처하거나 고려혁명군 정의회에 고려혁명군으로 흡수되었다.¹³⁾ 결국, 자유시참변은 한국독립운동사의 비극으로 독립군 전력에 큰 타격을 준 참극이었으며, 정치세력 간 아물기 어려운 참혹한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자유시참변 이후 러시아령 이만에 남은 한인 독립군부대는 두 부류로 나뉘어 편제되었다. 한 부류는 고려특립연대로 러시아군 편제에 흡수되어 하바롭스크로 배치되었고, 다른 한 부류는 대한의용군사회로 결집하였다. 이들은 적위군과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백위군과 전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적위군 정규군인 ‘특별보병대대’로 개편되었으나 일본군 퇴각 이후 소비에트 정부의 지도방침에 따라 자진 무장 해제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령 한인 독립군의 독자적인 군사 활동은 백위군 토벌이나 일본군 퇴각 이후인 1922년 10월 이후엔 사실상 소멸하였다.

3. 임시정부의 의열투쟁과 한·중 연합

가. 한인에국단의 의열투쟁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의열투쟁 단체를 지원하거나 산하조직으로 운영하며 항일 투쟁을 지속해 나갔는데, 1926년 1월 조직된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를 지원함으로써 침체한 독립운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만주침략이 본격화되자 의열투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0년 11월경 특무대로 결성된 한인에국단(韓人愛國團)이라는 별도의 비밀결사를 운영하였다.¹⁴⁾ 한인에국단 운영에 관한 한 전권을 위임받은 김구는 약 80여 명의 조직원을 중심으로 특무공작(特務工作)을 수행하였

13)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9), pp. 218-219.

14) 김창수, “한인에국단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p.443.



〈그림 6-2〉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

※ 출처: (사)매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다. 임시정부가 이렇게 의열투쟁에 집중한 이유는 독자적인 군대를 편성하거나 독립적으로 형성된 독립군단을 통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의열투쟁은 소수의 인원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쟁 방식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이봉창의 1932년 1월 도쿄, 윤봉길의 1932년 4월 홍커우(虹口) 공원에서의 의거는 전 세계에 한민족의 독립투쟁 의지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으로 일제가 보복

적인 검거작전을 전개하자 부득이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들은 상해를 떠나 항저우(杭州), 자싱(嘉興), 전장(鎮江) 등으로 청사를 옮기며 검거를 피해 다녀야 하였다.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일제의 만주사변과 상하이 침략으로 높아진 중국인의 항일의식을 촉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협력을 이끌게 하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김구의 요청에 따라 뤼양(洛陽)에 있는 중국중앙육군 군관학교 분교에 한일특별반을 신설해 한국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김구는 중국 난징(南京) 군관학교에도 한인애국단 등을 입교시켜 한인 특무대 독립군을 양성해 나갔다.¹⁵⁾

나. 독립군의 재편과 한·중 연합 군사 활동

경신참변과 자유시참변을 겪은 이후 한인 독립군단 대표자들은 1921년 4월~5월 경 베이징에 모여 통합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1922년 1월 ‘남만한족통일회(南滿韓族統一會)’를 결성하고, 대한통운부를 거쳐 8월 30일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라는 군정부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내부 간부진 사이에 신진 공화주의와 보수 복辟주의(復辟主義) 간의 이념 갈등과 군권을 둘러싼 인사 문제로 유혈 ‘통의부 사태’까지 벌어져 조직이 와해되었다.¹⁶⁾ 이후 임시정부는 1924년 5월 남만주 의용대원들을 군무부 산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로 편제하였다.

북만주에서는 1922년 8월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무장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민력양성(民力養成)을 위해 한인사회의 주민 실업, 교육 개선 등 생활기반

15) 육군본부, 『창군전사』(서울: 육군본부, 1980), pp.227-228.

16)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서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p.6.

마련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종교 민족주의 세력과 결합해 신민부(新民府)를 창설(1925. 3. 15.)하였다. 신민부는 독립군의 편성과 훈련에 주력해 500여 명으로 구성된 무장부대를 키워 국내 진격작전을 하였고 친일파 처단 및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하였다.¹⁷⁾

남만주와 북만주의 군정부들은 서로 통합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으나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만주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부(國民府)를 창설하였다. 국민부는 후일 조선혁명당을 건설해 조선혁명군을 편성하였다. 한국독립당은 항일 무장투쟁 방안으로 한국 독립군을 창설하였고, 1931년 11월 군사위원장 이청천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항일군과 연합하여 1932년 9월~10월 쌍성보(雙城堡)전투, 1933년 6월 대전자령(大甸子嶺)전투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¹⁸⁾ 이즈음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 허난성(河南省)에 있는 중국중앙육군 군관학교 뤼양(洛陽) 분교에 한인 특별훈련반을 세웠는데, 이청천을 비롯한 주요 간부 40여 명을 사관양성소 교관으로 초빙함에 따라 이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계 한국 독립군의 동만주·북만주에서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¹⁹⁾

남만주 일대를 담당한 조선혁명군은 참의부, 신민부 소속 병력을 흡수하여 기존의 6개 단위부대를 10개 부대로 확대하였는데, 3부 통합논의에서 이탈했었던 일파가 1929년 4월 국민부를 거쳐 조선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자 그 휘하로 들어갔다. 조선혁명군 부대는 활동 구역에 맞게 단위부대를 7개로 재조정하여 군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조선 민족혁명당의 지도를 받아 무장투쟁 등 군사업무 일체를 전담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자 남만주 일대에 본거지를 둔 조선혁명군은 신빈현(新賓縣) 사건으로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은 1932년 3월 중국 측 의용군과 함께 2,000여 명 규모의 한·중 연합군인 라오닝(遼東) 농민 자위단을 결성하였다. 한·중 연합군은 1932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신개령(新開嶺)전투, 신빈현성전투, 청원현성전투, 무송현성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패퇴시키는 전과를 올렸다.²⁰⁾ 그러나 한·중 연합군은 중국 측 부대의 패배와 1934년 8월 양세봉 사령관의 피살로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화하였다. 결국, 조선혁명군은 국민부와 통합(1934. 11.)하여 조선혁명군 정부를 구성하기로 선언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중국 관내로

17)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서울: 대한민국 공보처, 1985), pp.114-116.

18)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서울: 대한민국 공보처, 1985), pp.75-180.

19) 장세윤,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천안: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237-238.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 111-112.

이동하거나, 계속 잔류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중국 관내로 넘어간 이들은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관내의 한인들은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펼치기 위해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결성하였다. 조선의용대는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군이 확대 개편한 조직이었으며,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이었다. 조선의용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닌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정치부)의 지휘를 받았다. 조선의용대는 창설 당시 대원 1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1939년 말에는 대원 330여 명 3개 지대로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²¹⁾

1930년대 중반 이후 독립군들은 일제의 만주진출과 탄압의 상황 속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대규모로 전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 중반부터 만주지역의 독립군들은 대부분 근거지를 중국 관내로 옮겨왔는데, 이들은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²²⁾ 1940년 초 일본군의 중국 침략이 거세어지자 조선의용대의 일부 대원들은 뤼양에 집결하였다가 1941년 3월부터 화북지역으로 북상해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되었다. 충칭(重慶)에 본부를 둔 조선의용대 세력은 '9개 준승'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장제스의 지시가 하달되자 「조선의용대 합편결의」(1942. 4. 20.)에 따라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었다.

4. 한국광복군의 대일 선전포고와 대일 항전

가.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대일 선전포고

1940년 8월 4일 임시정부는 광복군총사령부(The Headquarters of Korean Independence Army)를 조직한 후, 9월 15일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의 명의로 「한국 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고 선언하였다.²³⁾ 임시정부는 제4차 개헌(10. 9.)을 통하여 단일지도체제의 주석제를 채택하고 통수체제를 정립하였다. 주석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하였는데 최고통수권자로 김구, 군령의 최고책임자로 유동열, 그리고 이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 113-114.

22) 김준엽·김창순, 『한국 공산주의운동』(서울: 청계연구소, 1986), p.222.

23)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범 김구전집』 제6권(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p.294.

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광복군의 지휘·명령체계를 갖추었다.²⁴⁾ 광복군은 총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곧바로 시안(西安)으로 이동하여 3개월여 만에 제1·제2·제3·제5지대 등 4개 지대로 이루어진 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이후 제5지대장 암살사건(1942. 3.)과 조선의용대의 편입(1942. 4. 20.) 등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3개 지대로 편성을 새롭게 하고, 각 지대에 3개 구대(區隊), 각 구대에 3개 분대(分隊)를 두는 편성으로 재편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군이 미국 해군기지 진주만에 기습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에서는 제20차 국무회의(1941. 12. 9.)를 개최하여 대일 선전포고를 단행하고, 12월 10일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 명의로 [표 6-2]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⁵⁾ 이것은 임시정부가 일본·독일·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전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한 것으로, 비록 무장력량은 제한되었지만 대일 선전포고 이후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²⁶⁾ 임시정부는 일본뿐 아니라 독일에 대해서도 1945년 2월 28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대독선전을 결의하고, 이날로 의정원 의장 명의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결행하였다.

[표 6-2]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

우리는 3,000만 한국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 제국(諸國)의 대일(對日) 선전포고를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쳐부수고 동아시아를 재창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히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낸다.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고, 일개 전투 단위가 되어 축심국(軸心國)에 대하여 선전포고한다.
2. 1910년 합병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거듭 선포한다. 아울러 반침략 국가들이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3. 왜구(倭寇)를 한국·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한다.
4. 맹세코 일본이 비호하여 조성된 창춘(長春) 및 난징 정권(南京政權)을 승인하지 않는다.
5. 나구선언(羅邱宣言) 각 조를 단호히 주장하며 한국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이것으로 인해 특히 민주 전선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 출처: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제5권(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102-103.

24)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호외(1940. 10. 9.)

25)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범 김구전집』 제5권(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102-103.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 153-154.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1941년 여름 이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항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는 영국군 및 미 전략첩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과의 공동작전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연합군과의 합작(合作)은 임시정부가 교전단체로 승인받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것과 더불어,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약속’ 하는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나. 인도·버마 전선에서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

광복군의 활동은 1943년 중반 이후 영·미군 등 연합군과의 합작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초모(招募) 활동과 교육 훈련, 그리고 선전 활동이 중심이었다. 1941년 말 시작된 태평양전쟁으로 광복군은 중국군, 영국군, 그리고 미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이 1942년 말레이반도를 거쳐 버마 전 지역을 점령하자 영국군과 중국군은 인도와 중국 국경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연합군은 버마탈환작전을 계획하고 한국광복군에 연합작전을 제안해 옴에 따라 임시정부는 조선 민족혁명당의 최성오·주세민 등 2명의 요원을 인도에 파견²⁷⁾하였고, 이들은 영국군에 배속되어 선전 활동을 수행하며 기대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1943년 5월, 김원봉은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의 자격으로 인도 주둔 영국군 대표 콜린 매켄지(Colin Mackenzie)와 한국독립을 위하여 한국광복군은 영국군을 지원하고 영국군은 일본에 대항하는 한국광복군의 대일 독립전쟁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김원봉은 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한 상태였으므로 상호 간에 체결된 ‘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朝鮮民族軍宣傳連絡隊)’의 파견 협정은 한국광복군과 영국군의 대일전 합작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²⁸⁾ 광복군 총사령부는 제1·제2지대에서 한지성 등 적합한 인원 9명을 선발하여 ‘인면전구공작대(緬甸全區工作隊, Korean National Army Liaison Unit)’를 편성하였고, 공작대는 인도 주둔 영국군의 동남아 전구 사령부에 소속되어 3개월간 필수 교육을 받고 1944년 초 영국군 제201부대와 함께 최전선인 임팔(Imphal) 전선에 투입되었다.²⁹⁾

광복군 대원들은 일본군에 대한 대적방송, 적 문서번역, 전단작성, 포로신문 등 대적선전공작활동(對敵宣傳工作活動)을 전개하여 1945년 5월 영국군, 중국군, 미국군과 함께 연합군의 버마탈환작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7월에는 일본군을 완전히 패퇴시켰다. 이로써

27) 한지성, “인도 공작에 대하여,” 『독립』 제3권 제75호(1945. 6. 13.)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159.

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160.

광복군의 활동 범위가 인도와 버마전선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능력도 정보·심리전에서 연합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다. 광복군의 한미연합 국내 진입작전 추진

미국은 1942년 1월 스틸웰(Joseph W. Stilwell) 중장을 중국·버마·인도 전구의 미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중국 본토에서의 중일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3월 미군은 국방성 첩보 기관인 전략첩보국(OSS)을 창설하여 인도·버마 전구에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⁰⁾

한국광복군과 미군과의 연합적 관계 형성은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이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에 참가한다고 선언하면서, 임정 승인요청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대상으로 전시 참전외교를 전개한 결과였다. 광복군과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1944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이 중국 전구 OSS의 비밀첩보와 책임자에게 광복군 대원들을 훈련해 전략정보를 수집하는 ‘광복군과 OSS의 합작’을 제의한 데서 비롯되었다.³¹⁾ 중국 전구 미군사령부는 대일첩보전에 중국 내 소수의 한인을 모집하여 직접 훈련하는 비밀작전인 ‘넵코작전(Napko Project)’과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을 수립하였다.

넵코작전은 재미 한인과 전쟁포로들을, 그리고 독수리 작전은 중국관내의 광복군과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한 학도병 등을 선발대상으로 한 특수작전이었다. 독수리작전은 부대원들을 선발하여 3개월 동안 훈련하고 이들을 한반도의 전략지점에 침투시켜 적 후방공작을 전개하는 것이 목표였다.³²⁾ 넵코작전에는 19명, 독수리작전에는 58명의 한국인이 특공대원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독수리작전은 1945년 4월 3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최종 승인을 거쳐 광복군과 OSS의 실질적인 합작 결과로 시행되었다.

독수리작전의 대원들은 5월부터 중국 시안과 입황(立煌) 등 2곳에서 무전 교신과 게릴라 활동을 위한 특수훈련인 OSS 첩보 훈련을 시작하였다. 광복군 제2지대에서 선발되어 훈련을

30) OSS의 임무는 포로 심문, 적 문서번역, 적 방송 및 무전 청취 등을 통해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적 점령지역이나 그 후방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여 파괴 공작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던 광복군의 임무와 유사하였고, 광복군이 수집한 첩보가 OSS 측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31) 「이범석의 광복군과 OSS의 합동작전 제안(1급비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3(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238-239. 이 과정에서 대일전의 승리가 임박해지자 한인들로 구성된 전투부대를 구성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대규모 한인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신에 중국 전구사령부에서는 대일첩보전에 중국 내 한인들을 활용하는 OSS 계획을 승인하였다.

32) 「한미합작에 관한 각서(2급비밀)」,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3(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253-254.

한 50여 명의 대원은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일전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광복을 맞았다. 한편, 이승만 박사는 독자적인 한인부대를 편성하여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미 전쟁부에 요청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광복군과 OSS 간에 이루어진 제1기 첩보 훈련과정이 완료되면서 광복군 정예대원을 선발하여 한국 내로 진공하려는 계획인 ‘국내 진입작전’이 구상되어 8월 초부터 실행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시안에서 훈련을 마친 광복군 제2지대는 미군과 공동으로 국내에 침투하는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하였는데, 8월 7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과 OSS 책임자인 도너번(William B. Donovan) 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작전 회의를 열고 한미 사이에 대일항전을 위한 군사합작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8월 9일 이후 일제의 패전과 항복이 확실해지자 OSS 책임자인 도너번 소장은 독수리 팀을 ‘동북 야전지휘부(North Eastern Field Headquarters)’로 격상하고 독수리 팀에게 일제의 중요 문서를 접수하는 준비작업과 한반도 내 억류된 연합군 포로의 구호와 철수를 돕는 특별명령을 하달하였다. 8월 10일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한 OSS에서는 훈련을 마친 광복군 대원들을 즉시 한국으로 이동시키기로 하자, 8월 11일 임시정부에서는 제2지대 대원을 중심으로 ‘국내정진대’를 편성하여 급히 파견하기로 하였다. 국내정진대는 한국 측에서는 이범석 등 4명과 OSS 측 책임자 버드(Willis H. Bird) 대령 등 18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정진대는 8월 18일 시안에서 출발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군에 의하여 서울 시내 진입이 저지되어 8월 19일 중국으로 복귀하고 말았다. 이로써 광복군 국내 진입작전은 정진대원들이 다시 시안으로 귀환하였고, OSS가 10월 1일 해체됨으로써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국내 진입작전은 광복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직접 참여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렇듯 광복군은 중국 전선에서 정보수집 및 선전 활동을 하고, 인도·버마 전선에서 대적 선전공작, 그리고 국내 진입작전 추진과 같은 연합작전에도 참여하였다. 광복군은 광복을 쟁취할 수 있는 주력군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오늘날 국군은 광복군의 맥을 이어받아 조국 통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세계 평화유지의 역군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 2 절 6·25전쟁

1. 전쟁의 배경

1945년 8월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미군과 소련군은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각각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 점령하였다. 군사적 편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설정된 분할선은 그 후 정치적 경계선으로 굳어져 결국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로 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1945년 8월 28일 38도선 이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을 등장시키고, 다음 해 2월 8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1945년 9월 4일 하지(John R. Hodge) 중장 휘하의 미 제24군단 선견부대가 도착하였고, 9월 7일 맥아더 극동군 총사령관이 남한에 대한 군정을 선포하였다.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 26.)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문제가 논의되자 남한 국민은 범국민적인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모스크바 협정 때문에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결렬되었다.³³⁾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당사국 간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총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유엔총회에서는 공산 진영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지지한 ‘통한결의(統韓決意)’를 절대다수로 채택(1947. 11. 14.)하였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자유 선거(1948. 5. 10.)를 하였으나 북한은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자유 선거 결과 제헌국회가 소집(1948. 5. 31.)되었고 헌법이 공포(1948. 7.)된 데 이어 대한민국이 탄생(1948. 8. 15.)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체제 아래의 북한 정권을 수립(1948. 9. 9.)함으로써 유엔총회의 결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도 부인하였다.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앞서 그들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을 창설(1948. 2. 8.)하였으며 남침에 필요한 전력 강화에 매진하였다.³⁴⁾

1949년 8월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1949. 8. 29.)과 10월 중국의 공산화(1949. 10. 1.)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진영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지역의 역학관계에 일대 전기를 맞게 하였다.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등장으로 공산세력은 극동에서 새로운 팽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소련의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³⁵⁾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군의 근대

33)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69), pp.301-302.

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264.

35) 존 루이스 개디스, 홍지수·강규형 역, 『미국의 봉쇄전략』(서울: 비봉출판사, 2019), pp.146-148.

화 및 전력보강 작업에 착수하였던 소련의 스탈린은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군의 전력화를 구체화하였다. 스탈린은 다음 해 1950년 4월 또다시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함께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³⁶⁾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중국에서의 국공 간의 사태발전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문제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종전 후 급속한 감군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지상 병력이 부족하게 된 미국은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군 철수(1949. 6. 30.) 이후 날로 심화하여 가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불균형과 북한의 남침 징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남한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국군의 증강과 군사원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미국은 소련이나 북한이 남한의 내부적인 혼란을 틈타 간접적 침투나 교란 활동을 벌일 수는 있을 것이나 전면적인 무력침공은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³⁷⁾ 더욱이 미국은 중국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단독 점령한 일본열도를 미국의 전략적 방위선으로 하여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결국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미 극동방위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애치슨 선언’을 발표(1950. 1. 12.)하였다. 이 발표는 남침의 기회를 엿보던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에게는 남침해도 좋다는 ‘청신호(靑信號)’로 받아들여졌다.³⁸⁾

남북한의 정세는 여러 측면에서 상호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후부터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의 적화통일 사상을 주입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급급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여 비교적 튼튼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력을 향상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남한은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화폐 발행고가 불과 2년여 만에 7배로 증가하고 산업 분야도 크게 위축되어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물가는 3년 동안 무려 33배나 폭등하여 국민의 생활고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처럼 남북 간에는 정치와 경제면에서 격심한 이질성과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948년 말경부터 북한은 군사력 증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때부터 북한은 소련제 탱크와 기계화부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북한군에 대해 조·소경제문화협정

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 11-15.

37)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69), p.304.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의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49.

체결(1947. 3. 17.)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장 및 훈련지원을 하였으나³⁹⁾ 미국은 국군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지원을 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다른 정책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당시 대한민국은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던 전차 242대와 야크 전투기를 비롯하여 각종 작전용 항공기 226대, 76밀리 자주포와 122밀리 곡사포 등 각종 대포 748문, 국군의 퇴로를 수원에서 차단하기 위한 540대의 모터사이클 등을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았다.⁴⁰⁾

이처럼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국내정세 등으로 북한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었다.

2. 6·25전쟁의 수행

가. 6·25전쟁의 발발과 초기 지연전(1950. 6. 25.~1950. 7. 3.)

1950년 6월 25일 새벽 04:00시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이라는 제1단계 작전목표를 가지고 제1군단·제2군단이 협조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연천-운천-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전선의 강릉 북쪽에서도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북한군 제2군단은 화천-춘천, 인제-홍천, 동해안 등 총 3개 축선에 각각 1개 사단씩 투입하여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초기 한국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서울고수(固守) 전략을 통해 모든 예비전력을 총동원하여 서울 북방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의정부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군은 의정부마저 피탈(6. 26.)당하자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미아리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차단하려 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북한군이 한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자 국군은 김포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에 방어선이 붕괴하고 말았다.

북한군이 서울의 중심부에 들어온 것은 28일 오전 11시 30분경이었으나 이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서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될 당시 전선은 김

39)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69), pp.306-307.

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533-632.



〈사진 6-1〉 맥아더의 한강방어선 순시

※ 출처: 군사편찬위원회

포-봉일천-서울-홍천-대관령-강릉 선에서 형성되었다. 북한군은 최초의 계획대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국군의 포위에는 실패하였고, 그들이 믿었던 인민보기가 서울에서 일어나기는커녕 국군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6일 새벽 4시에(미국 현지시각 25일 오후 2시) 긴급히 개최되었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안(UNSC-82)을 채택하였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6·26 유엔 결의’를 따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6월 27일 오전 10시(미국 현지시각 26일 오후 9시)에 제2차 블레어 하우스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미 해·공군에게 38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전차·포병에 대한 공격을 허가하고, 한국군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6월 27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라는 결의안(UNSC-83)을 채택하였다.⁴¹⁾ 이 결의안에 따라 미국도 미 해·공군의 작전지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6. 29.~30.)하고 지상군을 참전(7. 1.)시켰다.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사령부 창설을 결의(UNSC-84)하고,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위임했으며, 7월 10일 맥아더 장군이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유엔군도 이 결의안에 근거하여 지원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선을 시찰한 이후 존슨 국방부 장관에게 시찰결과를 보고(6. 30.)하면서 미군 1개 연대를 즉시 한국에 파견하고 계속 2개 사단을 투입하도록 요청하였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한국에 지상군 투입을 승인하고 맥아더에게 전권을 부여하였다.⁴²⁾

나. 연합군의 참전과 반격작전(1950. 7. 4.~1950. 10. 18.)

7월 1일 미군 제24사단 선두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가 최초로 참전하여 부산과 대전을 걸쳐 북상하였다. 평택-제천-울진을 잇는 선에서 무질서하게 철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64-75.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163-164.

수하고 있던 한국군과 연합전선을 형성(1950. 7. 4.)하였다. 7월 5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오산 북방 죽미령(竹美嶺) 전투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7시간 저지하였으나 전사 150명, 실종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철수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혈전으로 10일간의 시간을 벌었다. 이 사이에 미 제24사단 전 병력이 대전에 집결할 수 있었다’라고 회고하였다.⁴³⁾

유엔 안보리 제3차 결의(UNSC-84, 1950. 7. 7.)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를 설치하였다. 맥아더는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에게 주한미군의 작전지휘를 담당(7. 13.)하게 하였고,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7. 14.)받아 17일 제8군사령관과 미 극동 해·공군 사령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될 무렵 국군은 2개 군단, 5개 사단 체제로 재편성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단일 지휘하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조처(7. 14.)를 하였다.⁴⁴⁾ 이승만 대통령은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6일 주한 미 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회답을 보내왔다.⁴⁵⁾ 이로써 한국군은 법적으로는 유엔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제 전쟁은 북한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성격의 전쟁으로 변모되었다.

유엔군은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전투력을 회복하여 반격한다는 전략방침을 수립하였다. 유엔군은 한강 방어선에서부터 낙동강 방어선까지 미군과 유엔군의 증원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공간을 양보’하는 지연작전을 수행하였고, 이어 부산교두보인 낙동강 방어선에서 사활을 건 방어 전투를 전개하였다. 마침내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해·공군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해군이 한국 작전지역에 도착하였고 미 지상군도 3개 사단과 2개 연대 규모로 증강되었다.

43) 스미스 특임부대는 보병 406명, 포병 134명 등 54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의 무장은 M1 소총과 탄환 120발, 2일분 레이션을 휴대하고 있었다. 중화기로는 75밀리 무반동총, 4.2인 및 2.3인치 박격포 2문씩, 2.3인치 패킷포 6문, 60밀리 박격포 4문을 갖고 있었다. 지원 화력으로 105밀리 곡사포 6문에 포탄 1,200발을 휴대하고 있었다. 대전차 포탄은 6발뿐이었다.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p.147.

44) 국방부 전산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1945-1980)』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산편찬위원회, 1981), pp. 629-630.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42.

한미연합군은 1950년 7월 말까지 ‘공간을 내주는 대신 미 증원부대가 한반도에 전개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련제 T-34 전차와 SU-76 자주포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는 쉽지 않았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 증원부대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인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하였다.

한미연합군은 1950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였다. 방어선의 총 길이는 200km였으며, 국군이 80km를 미군이 120km를 담당하였다. 국군은 8월 3일 야간까지 진지전환을 완료하고 방어편성에 주력하였다. 새로운 방어선의 편성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약 68km의 방어 정면을 담당하였는데 제1사단이 42km, 제6사단이 26km를 담당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방어 정면은 약 44km로 제8사단이 20km, 수도사단이 24km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육군본부 직할인 제3사단이 영덕 정면의 16km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⁴⁶⁾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투혼을 다했고, 북한군도 마지막 공격지인 낙동강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북쪽으로 밀려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버텼다.⁴⁷⁾ 워커 장군은 진지 사수 명령(stand or die)을 하달하였으며, 미군은 부족한 전투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기술 및 보급, 행정 요원, 군악대원들까지 전투에 참여하였다.⁴⁸⁾

한 인민군 퇴역 장교의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 경험담은 북한군이 이 전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임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원래 전쟁이 며칠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상황이 악화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책이 없었다. 실패할 때를 대비하지 않고 전투에 임한 것이 불행을 자초했다.”⁴⁹⁾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은 개전 초기부터 공격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여 기세를 유지해 왔으나,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장애물을 활용한 유엔군의 방어작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즉 북한군은 최초 속전속결로 남한을 공격 통일한다는 전쟁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상대적인 전력의 우위를 상실하였고, 병력과 물자 등 전쟁 지원이 적절히 뒤따르지 못하여 공격역량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미군과 한국군의 독립적인 작전 수행에서 벗어나 미군과 단일 대오 아래 한미연합으로 반격작전을 펼쳐 연합 전투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 전쟁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91.

47) 데이비드 헬버스탐, 정윤미·이은진 역, 『콜디스트 윈터』(서울: 살림, 2009), p.393.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 관계사의 형성과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69-75.

49) 데이비드 헬버스탐, 정윤미·이은진 역, 『콜디스트 윈터』(서울: 살림, 2009), p.392.



〈사진 6-2〉 낙동강 전선의 소년병

※ 출처: 군사편찬위원회

워커 미 8군 사령관은 기동방어(機動防禦)와 지역방어를 혼합하여 공간과 시간을 확보했는데, 콜린스(Joseph L. Collins) 전 육군참모총장은 워커 장군의 방어전을 높게 평가하며, 특히 미 제27연대, 제5연대 전투단, 해병대 제1여단 등 3개 예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일권 육·해·공군 총사령관도 그의 예비병력 운용이 기민하고 적절했다고 회고하였다.⁵⁰⁾

낙동강전선에서 정규군 이외에도 학도의용군, 여군, 청년방위대, 대한청년단, 소년병, 지계부대로 불리는 노무부대들이 많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주일군수사령부(JLCOM: Japan Logistical Command)를 창설하여 미 제8군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미 극동공군과 해군을 유엔군사령부 예하 기구로 통합하여 지휘체제의 단일화를 이루었다.⁵¹⁾

북한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점차 공격력이 둔화하였으며, 주·야간으로 계속되는 전투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군이 공세 한계점을 보일 무렵에 소련이 갑자기 외국군 철수를 골자로 한 정전안을 제의(1950. 8. 4.)하였다. 원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했던 소련은 8월 1일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자 유엔에 복귀하였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표들을 유엔에 초청하자고 주장하였다. 소련의 정전 제의에 대해 영국과 인도는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나 미국이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정책목표로 채택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낙동강 방어에 성공한 유엔군⁵²⁾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반격작전으로 전환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81-92.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5(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76-80.

52)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1개 야전군, 3개 군단, 8개 보병사단, 1개 해병사단, 2개 연대전투단 및 극동 해군, 미 제7함대 그리고 극동 공군 (2) 오스트레일리아: 영연방 사단의 일부를 이룬 2개 보병대대, 해군부대 및 1개 전투기 중대 (3) 벨기에: 1개 보병대대 (4) 캐나다: 연방 사단의 일부인 포병과 탱크부대를 포함한 보강된 1개 보병여단, 해군부대 및 수송기 1개 대대 (5) 콜롬비아: 1개 보병대대 및 프리게이트 함 1척 (6) 에티오피아: 1개 보병대대 (7) 그리스: 1개 보병대대 및 수송기 1대 (8) 룩셈부르크: 1개 보병중대 (9) 네덜란드: 1개 보병대대 및 해군부대 (10) 뉴질랜드: 영연방 사단의 일부인 1개 야포 대대 (11) 필리핀: 1개 보병대대와 탱크 1개 중대 (12) 태국: 1개 보병대대, 해군 전투부대, 공군 수송기와 해군 수송선박 (13) 터키: 1개 보병여단 (14) 영국: 영연방 사단 소속인 3개 보병여단, 탱크 1개 여단, 포병연대 1개 반, 전투 공병 연대 1

하여 9월 28일 전쟁 발발 79일 만에 수도 서울을 되찾고 전쟁 전 상황을 회복하였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 구상은 한국전선에 대한 직접 방문의 결과였다. 그는 수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황을 보고 받고 한강 전선이 보이는 신길동 근처까지 직접 와서 전선 상황을 관측(1950. 6. 29.)하였다. 그 후 1951년 4월 유엔군 사령관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한국전선을 10회 이상 방문하였다. 한국군으로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부대는 해병대 제1연대와 육군 제17연대였다.⁵³⁾ 또한, 미 육군 제7사단에 한국 청년 8,637명이 카투스(KATUSA: Korea Augmentation to the US Army)로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각급 미군 부대에는 통역, 정보 등 분야에서 상당수의 한국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이 활동하였다. 상륙부대인 제7합동기동부대(JTF-7)는 미 해군 함정을 포함하여 총 261척이 참가하였는데 한국 해군의 초계함 4척과 소해정 7척 등 15척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륙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에 한국군 정보장교인 계인주(桂仁珠) 대령과 연정(延禎) 소령, 그리고 KLO부대원들이 참여하였다.⁵⁴⁾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함께 9월 25일 서울시가지에 진입하였고, 서울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미 제7사단에 배속된 한국군 제17연대는 미 제32연대와 병행하여 서울 동쪽의 외곽 퇴로를 차단하였다. 유엔군은 성공적인 우회기동으로 북한군의 전선을 단숨에 절단하였으며, 뒤이어 실시한 돌파와 반격 및 추격작전은 전사(戰史)상 가장 경이적이라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이때 북한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본 채 북으로 퇴각하였으며 일부의 패잔병들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으로 잠입하여 게릴라가 되었다.

한국군이 38도선에 도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한국군 통수계통으로 38도선 북진 명령을 하달하였다.⁵⁵⁾ 그는 38도선은 이미 북한군의 남침 시 허물어졌으며 북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미국 정부도 북한군을 격멸하기 위한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은 6·28 유엔 결의에 비추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군 계통으로 북진작전에 관한 훈령을 하달하였고, 또 군사적 점령 후에 예상되는 정치적 통일을 위하여 ‘10·7 통한 결의’를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유엔군이 북진하면 자신들도 전쟁에 개입하

개 반, 기타 지상 지원부대, 극동 함대와 공군부대 (15) 프랑스: 보강된 1개 대대 (16) 남아프리카공화국: 1개 전투비행 중대. 그 밖의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독일 등은 의무부대를 파견하였다.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서울: 국제문화 출판사, 1981), pp.365-3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8-10.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107-109.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138.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353.



〈사진 6-3〉 국군과 유엔군의 평양 입성 기념 퍼레이드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소련은 미국의 결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휴전 및 외국군의 철수를 제의하였다. 소련의 제안은 10월 7일 소련 외상 비신스키(Andrei Yanuar'evich Vyshinskii)가 유엔군의 북진을 다소 지연시키려고 의도한 것이었으므로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서울수복 이후 1950년 10월 1일,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강원도 양양에서 38도선을 넘었고, 9일에는 유엔군도 전면적으로 북진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원산까지 수복하고 다시 전진하여 서쪽으로는 청천강 건너 압록강으로, 동쪽으로는 함흥과 길주·명천을 지나 청진까지 점령했으며 혜산진까지 이르렀다. 이 무렵 김일성은 전쟁지도부를 강

계로 옮기고 청천강, 회천, 강계에 3중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유격전으로 최후까지 저항할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중공군(중국 공산당 군대, 이하 중공군)의 개입이 본격화된 것은 1950년 10월 7일 유엔에서 38도선 북진을 허용한 서방측 결의안이 통과된 그다음 날이었다.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계속 북상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抗美援朝)”라는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였다. 중국이 개입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연대, 김일성과 스탈린의 지원 요청 등도 있지만, 한반도에서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 특히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대거 개입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다시 한번 크게 바뀌었다.

다. 중공군의 참전과 새로운 전쟁 양상(1950. 10. 19.~1951. 7. 9.)

중국은 유엔군의 38도선 북상을 확인한 직후 몇 차례에 걸쳐 소련 및 북한과 논의한 이후 최종 참전을 결정하였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 제13병단 예하의 제38군·제39군·제40군·제42군단의 12개 사단과 포병 제1·제2·제8사단, 1개 고사포연대, 1개 공병대대, 기타 지원부대 등이 압록강을 건넌으로써 6·25전쟁은 국제전이 되었다. 즉 6·25전쟁은 북·중 연합군 대 유엔군의 전쟁, 사실상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바뀌었고 전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지원 등을 고려하면 전쟁의

상황은 냉전 구조 아래의 공산 진영 대 자유 진영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 26일 2차로 중공군 6개 사단이 압록강을 건넌으로써 중공군의 총병력은 18개 사단 20여 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전쟁 기간 참전한 중공군은 연인원 230만 명에 이르러, 당시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전 야전군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 결과 중공군이 공산 측의 전쟁을 주도하였고, 전후에도 1958년까지 북한에 주둔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표 6-3]은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보병부대 전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6-3] 6·25전쟁 시 보병부대 전력 현황⁵⁶⁾

(단위 : 천명)

구분	1950년 6월 25일	1951년 6월 30일	1952년 6월 30일	1953년 6월 30일
미국	500	253,000	266,000	302,000
한국	95,000	273,000	376,000	591,000
기타 유엔군	—	28,000	36,000	39,000
소계(명)	95,500	554,000	678,000	932,000
북한	135,000	218,000	83,000	260,000
중국	—	530,000	590,000	740,000
	5월 11일까지 21,000			
소련	10,000(항공정비)	10,000(항공정비)	10,000(항공정비)	10,000(항공정비)
소계(명)	145,000	758,000	683,000	1,010,000
	355,000			

※ 출처: 베른트 슈퇴버, 황은미·한성훈 역, 『한국전쟁』(서울: 여문책, 2018), p.97.;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127-130.

중공군은 10월 25일 유엔군이 박천-운산-온정리-회천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1차 공세(1950. 10. 25.~11. 7.)를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대부대를 투입하여 유엔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은밀히 밀려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국군은 계속 진격하여

56)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보병부대 병력 현황 중에서 천 단위 이하는 생략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군은 비교적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주역으로서 한반도에서 서로 대치하였다. 더욱이 소련 조종사들은 북한이 군사적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베른트 슈퇴버, 황은미·한성훈 역, 『한국전쟁』(서울: 여문책, 2018), pp.94-95.

제6사단 선두부대가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하였고, 서부지역의 미 제24사단은 신의주 남방 정거동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미 제8군과 제10군단 사이에 공간이 생긴 취약점을 활용하여 진격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각개격파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대규모의 중공군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서부전선에서 온정과 운산 지구에서 북진하는 한국군 제6사단과 제1사단, 미 제1기병사단 등에 타격을 입혔고,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북진을 저지시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역전되었다.⁵⁷⁾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불의의 조우로 인하여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이때 갑자기 중공군이 공격을 멈추고 청천강 북쪽 적유령산맥으로 이동하여 자취를 감춤으로써 일시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중공군이 기만전술과 유인전술을 운용한 것이었다.⁵⁸⁾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전황을 오판하여 중공군의 참전목적과 작전 기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8군의 재공격 준비가 완료되자 ‘11.24 최종공세(일명 크리스마스 공세: Home for Christmas)’를 명령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 규모가 약 42여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만여 명으로 추정하여 적정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으며,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중공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때 전선의 상황은 12개국의 유엔군이 참전 중이었고 정주-영원-장진호-혜산진-함수-청진선을 점령하여 한·중 국경선을 지척에 두고 있었다. 중공군의 2차 공세 시 총 병력은 9개 군단 30개 사단이었고, 병력은 총 38만여 명이었다. 이 중 서부전선에 6개 군단 18개 사단의 23만여 명, 그리고 동부전선에 3개 군단 12개 사단의 15만여 명이 배치되었다. 또한, 전쟁 지원물자를 신속하게 압록강 남쪽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3,000대의 차량을 지원받았다. 특기할 사항으로 이 무렵부터 중공군은 소련으로부터 본격적인 항공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전쟁 동안 기본적으로 2~3개 전투비행사단, 1개 독립야간전투비행연대, 3개 고사포병사단, 1개 고사포탐조연대, 1개 비행기술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급 부대는 평균 8~14개월간의 전구(戰區) 주둔을 마친 후에 교체되었다.⁵⁹⁾ 정보판단에서부터 오류를 범했던 유엔군은 중공군의 2차 공세(1950. 11. 15.~12. 24.)로 큰 손실을 보았다.⁶⁰⁾

11월 30일을 기하여 유엔군의 모든 부대가 무질서하게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57) 육군교육사령부, 『타이거 장군 송요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96), pp.29-304. ; 한신, 『신념의 삶 속에서』(서울: 명성 출판사, 1994), pp.177-196.

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pp.295-380.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263.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pp.389-512.

비로소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반격을 개시한 후 71일 만



〈사진 6-4〉 흥남철수작전

※ 출처: 안재철, 『생명의 항해』(2008)

에 철수작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극동 사령부에서 작전계획 205호(1950. 12. 8.)⁶¹⁾를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계적 철수작전을 하달함에 따라 한국군과 유엔군은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여 12월 말 38도선 부근까지 철수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가 차단되자 미 제10군단은 ‘작전지침 27’(1950. 12. 9.)을 하달하여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해상 철수하였다.⁶²⁾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출현과 공격으로 흐트러졌던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었으며,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장비 대부분과 전략물자도 안전하게 철수하여 유엔군의 사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흥남철수작전으로 병력 10만 5,000명, 35만t의 군수물자, 1만 7,500대의 차량이 안전하게 철수되었으며, 10만여 명의 피란민을 구출하였다.⁶³⁾ 한반도 북동부 전선에 출현했던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전투 때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아 이후 전력 발휘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⁶⁴⁾

중공군은 제1·2차 공세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3차 공세(1950. 12. 31.~1951. 1. 8.; 일명 ‘신정 공세’)를 개시하여 38도선을 돌파하였다. 공격부대의 총병력은 중공군이 6개 군단 23만여 명, 북한군이 3개 군단 약 7만 5,000여 명 등 총 30여 만 명이였다.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주력 부대인 제13병단을 의정부-서울 축선을 향하게 하고 북한군을 보조부대로 춘천-원주 축선으로 향하게 하여 부대를 전개하였다. 결국 유엔군은 1월 4일 서울을 포기(1·4후퇴)하고 평택-삼척선까지 철수를 결정하였다. 중공군의 공세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한국과 다른 유엔군의 소개(疏開)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일본과 평화협정을 조기

61) 극동군 사령관 작전계획 205호는 안재철, 『생명의 항해』(서울: 자운각, 2008), pp.318-328 참조.

6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7(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pp.550-562.

63) 안재철, 『생명의 항해』(서울: 자운각, 2008), p.281.

64) 로이 E. 애플만, 허빈 역, 『장진호 동쪽』(서울: 다트앤, 2013), 이종연, 『아, 장진호』(서울: 북마크, 2010), 왕수평, 나진희·황선영 역, 『한국전쟁』(서울: 글항아리, 2013), 안재철, 『생명의 항해』(서울: 자운각,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 전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참조.

종결한 후 일본에서 경찰력과 자위군의 증강을 서두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4 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유엔군은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기하였으나 중공군의 연속적인 공세에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중공군의 몇 차례 공세를 계기로 한국 국민은 이 새로운 전쟁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계속해서 후퇴하는 상황에서 철수론과 휴전론, 그리고 중립지대안 등 전쟁 주변 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 총력체제를 고려하였다. 한국 정부는 낙동강 전선 이후 제2의 국가적 위기감을 느꼈고 50~100만 명에 이르는 장정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소개(疏開), 그리고 미국에 이들을 무장시킬 무기와 장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⁶⁵⁾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을 무장시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의 하나로 국민방위군을 창설하였으나 국민방위군은 불과 5개월도 못 되어서 해체되고 말았다.⁶⁶⁾

유엔군은 중공군의 병참선 신장을 유도하고 우세한 화력으로 중공군 전력을 약화하며 반격작전을 준비하였고, 중공군의 공세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파악하고 1951년 1월 25일 일제히 반격작전에 나섰다. 중공군이 사라지자 리지웨이(Mathew B. Ridgway) 미 제8군사령관은 위력수색작전을 통해 중공군의 배치 지역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울프하운드작전(1951. 1. 15.~25.), 썬더볼트작전(1951. 1. 25.~2. 10.)을 전개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수원-여주까지 5개의 통제선을 설정하여 전 부대로 하여금 각 통제선 통과 시마다 군단장의 승인을 받게 하면서 적을 소탕해 나갔다. 아군은 2월 10일에는 인천-소사-남한산-양자산까지 진출한 후 작전을 종료하였다. 서부전선에서 썬더볼트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전선에서는 라운드업작전(1951. 2. 5.~7.)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중공군의 의도와 병력 배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중동부 지역의 전선을 흥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받은 중공군은 서부전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동부전선에 대해 집중공격을 준비하였다. 중공군은 4차 공세(1951. 1. 27.~4. 21.: 일명 ‘2월 공세’)를 단행하였지만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4차 공세를 격퇴함으로써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하여 서울을 재탈환(3. 15.)하였고 여세를 몰아 3월 말에 38도선을 회복하였다. 이어서 4월에는 철의 삼각지(철원-평강-김화)까지 확보하려는 작전을 개시하였다.⁶⁷⁾

1951년 4월 중공군은 유엔군의 공격을 조기에 분쇄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

65)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69), pp.435-438.

66) 남정옥, 『6·25전쟁 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0), pp.77-148.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p.218-346.

여 38도선에서 유엔군의 주력을 격멸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 이남으로 공격할 것을 결정하였다.⁶⁸⁾ 이에 따라 중공군 5차 공세(1951. 4. 22.~6. 10.: 일명 ‘4월 공세’)는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 최대병력과 소련으로부터 지원된 최대 규모의 장비를 투입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4월에 서부전선의 개성-화천 방면에, 5월에 동부전선의 양구-인제 방면에 각각 전력을 집중시켜 중공세를 펼쳤다.

중공군 5차 공세 시 한국군 제3군단이 중공군에게 붕괴하여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됨으로써 유엔군의 전 전선이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참전 이래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였다. 이후로 중공군은 재래식 장비와 전술로는 결코 유엔군을 축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규모 공세를 지양하고, 소규모 국지전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유엔군은 중공군의 5차 공세를 물리친 이후 군사적으로 중공군을 압도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계속하여 6월 15일 문산-철원-김화-화천-간성을 잇는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의 개입과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인명손실과 전쟁비용을 감당⁶⁹⁾하면서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할 만큼 한반도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유엔군의 북진을 중단시키고 제한전쟁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중공군의 5차 공세가 한창이던 5월 17일에 전쟁을 군사적 승리가 아닌 정치적 타협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미국은 전쟁 전 상태로 휴전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고, 유엔을 통해 통일국가 수립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명예로운 휴전’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⁷⁰⁾

5차 공세 시기부터 중공군은 6·25전쟁에 참전 이후 공격을 지속 전개할 수 있는 한계점이 노출되었고, 미국 역시 내부적으로 정전 압박을 받아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엔군 측의 휴전 검토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했던 1950년 말경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유엔군 측은 5단계 정전 방안 등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였지만, 번번이 공산군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중공군의 5차 공세 이후에는 유엔군이나 중공군 측에서나 위험한 반격보다는 안정적인 봉쇄나 현상 유지 정책이 타협안으로써 힘을 얻고 있었다.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자 영국

68) 중공군은 미 제1군단(미 제3·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터키여단)과 미 제9군단 예하의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6사단을 주요 공격 목표로 하였다.

69) 1951년 6월까지 미국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7만 8,800명의 인명손실을 보았고, 전쟁비용도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 첫 1년 동안에 발생한 전쟁비용과 인명손실의 두 배가 넘는 규모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402.

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402.

을 비롯한 참전국들 사이에서 전쟁 이전의 원상회복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든 휴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⁷¹⁾

라. 고지 쟁탈전과 휴전협상(1951. 7. 10.~1953. 7. 27.)

유엔군과 중공군은 1951년 6월 한반도 문제를 더는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중공군의 5차 공세가 종료될 무렵에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이 휴전을 위한 미·소회담의 개최를 제의(1951. 6. 3.)하였고,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Yakov A. Malik)는 38도선으로부터 군대의 상호철수를 규정하는 휴전을 유엔군 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⁷²⁾ 이후 6월 30일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휴전회담의 개최를 받아들임으로써 회담이 시작되었다.⁷³⁾ 이에 따라 유엔군 측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 사령관과 중공군 사령관이 주체가 되어 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군사적인 승패가 아닌 정치적 타협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⁷⁴⁾에서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양측은 1951년 7월 26일에 비로소 의제의 선택, 군사분계선 문제, 휴전 감시방법 및 그 기구문제, 포로에 관한 협정, 쌍방 관계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 5개 항의 의제에 합의하였다.⁷⁵⁾ 그러나 최소 6주 정도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였고, 의제마다 장기간 설전을 벌였다. 그 주된 이유는 중공군 측이 협상을 이용해서 손실을 보충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려 하였고, 무엇보다 스탈린이 줄곧 정전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담과 작전의 양면에서 팽팽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길고도 지루한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휴전협상의 지연이 공산군 측에 유리하므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른 시일 내에 협정을 타결 짓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 지속적인 폭격과 전선에서 공세를 통해 압박을 가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는 북한 지역 내 주요 시설에 대한 폭격 우선순위를 항공기, 비행장, 발전시설, 레이더, 공장시설, 통신 시설, 사령부, 철도 수리시설, 차량수리시설, 기관차, 보급품 및 병기, 열차, 자동차, 철교와 터널, 조차장,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827-833.

72)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pp.237-238.

7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서울: 집문당, 1998), pp.108-119.

74) 1950년 7월 1일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제시한 휴전회담 제의를 수락하면서 회담 장소를 유엔군 측이 제시한 원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덴마크 병원선이 아니라 개성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7월 8일 휴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개성에서 가졌다.

75)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p.243.



〈사진 6-5〉 휴전회담 당시의 판문점

※ 출처: 군사편찬위원회

교량 순으로 정하고 1952년 6월 23일부터 폭격을 가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에서는 대대적인 공습과 더불어 전단 살포를 통한 심리전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⁷⁶⁾ 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 회의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무려 25개월이 소요되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휴전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회담 진행 초기과정에서부터 한국 측 의견을 견제하고 배제하였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래 유엔군사령부는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때 미리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였으나⁷⁷⁾ 회담 초기부터 백선엽 장군을 필두로 국군대표가 회담 기간 내내 참석하였다.

양측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군사작전은 계속한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회담 기간에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인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하였다. 전선의 상황은 38도선을 연한 주요 고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상태였으며, 대규모 공격과 철수작전은 없었다.

대체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고,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때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전선의 병력은 한 눈으로는 회담장을 주시하고 또 다른 눈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특이한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그야말로 휴전 천막과 전장 사이를 오가는 지루한 상황이 2년간 지속하였다. 전쟁 양상은 서북 지역에서 공중전이 있었지만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trench warfare) 같이 변하였다. 휴전협정 체결까지 양측은 38도선 상에서 피의 능선고지전투, 단장의 능선고지전투, 편치불전투, 가칠봉전투, 백마고지전투, 저격능선전투, 금성전투 등 수많은 고지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주요 고지를 놓고 하루에도 몇 차례나 주인이 뒤바뀌는 혈전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이 손실되었다. 유엔군은 4,000여 명의 손실을 보았고 중공군은 2만 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⁷⁸⁾

76) 김태우, 『폭격: 미 공군 폭격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서울: 창비, 2013), pp.357-383.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54.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474-476.

한편 휴전회담에서 가장 큰 난제로 주목받은 의제는 포로 문제였다. 유엔군은 포로의 자유 송환을, 공산군은 강제송환을 각각 주장함에 따라 협상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1953년 1월에 이르러 미국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주장을 일축하고 공산군에 정치·군사적 압력을 가중하면서 휴전에 임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론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미국을 압박하였고, 유엔군의 지휘에서 벗어나 한국군 독자적으로라도 압록강으로 진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⁷⁹⁾ 1953년 4월 20일에서 5월 12일까지 전국 각지의 휴전 반대 궐기대회와 민중대회는 7,500회가 넘었고, 동원된 인원은 800만 명에 이르렀다.⁸⁰⁾ 이승만 대통령의 지속적인 휴전 반대 관점으로 곤란해진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상비계획(Operation Everready)’까지 검토하였다.⁸¹⁾ 이후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휴전회담은 급물살을 타게 됨으로써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1953년 6월 8일 1년 반 이상을 끌어왔던 포로송환 문제에 중지부를 찍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동안 휴전을 가로막고 있던 최대의 장애였던 포로 교환문제가 타결된 것에 대해 외신들은 ‘한국전쟁의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휴전을 반대해온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8일 반공포로 2만 7,000명을 석방함으로써 회담을 저지하고자 하였다.⁸²⁾ 평터화이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전회담 이후 가장 강력한 공격작전인 ‘7월 공세’를 취함으로써 한때 위기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중공군의 이 공세는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휴전에 반대해 온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를 꺾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7월 동안 계속된 이 전투에서 유엔군은 6마일(9.65km), 너비 1마일 반(2.4km)에 달하는 지역을 상실하고 1만 4,000명의 사상자를 내었다.⁸³⁾ 반공포로 석방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겪었지만, 휴전협정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군사·경제원조, 그리고 한국군 증강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3. 6·25전쟁의 휴전과 영향

6·25전쟁은 발발된 지 3년 1개월 3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유엔군 측 수석대

79)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69), pp.578-581.

80)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서울: 역사비평사, 2007), p.132.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55.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130-147.

83)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p.284.

표인 해리스(William K. Harrison) 중장과 공산 측 대표인 남일 간에 서명되었다. 가벼운 목례조차 나누지 않은 두 대표가 18통의 협정문서⁸⁴⁾에 서명하는 데에는 12분이 소요되었



〈사진 6-6〉 정전협정 서명식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다. 정전협정문은 오전에 회담대표 간에, 오후에 양측 사령관들의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식 조인되었다. 한국군 육군 소장 최덕신 등 16개국 대표들은 클라크(Mark W. Clark) 사령관이 서명할 때 배석하였다. 정전협정 조인 이후 지상에서의 모든 전투는 중단되었지만, 포격전은 계속되었다. 유엔군 폭격기들은 정전감시단이 임무를 수행할 때

까지 공산군의 전투력을 조금이라도 더 감소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비행장·도로 등을 폭격하였다. 해상에서도 유엔 해군의 전함들이 고성과 원산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22:00시가 되자 한반도 전역에서는 포성이 멎었고 전쟁은 막을 내렸다. 정전협정의 체결 이후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양측이 이행해야 할 정전협정 조항은 모두 5개 조 63개 항이었다.

6·25전쟁 결과 전쟁 이전 38도선과 비교하여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2,201km²(850평방마일) 남진했고, 한국은 동부전선에서 6,086km²(2,350평방마일) 북진했다. 한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북한군의 침략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약 3,885km²(1,500평방마일)의 땅을 더 획득하였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공산군 측이 전전(戰前) 상태 회복을 주장함에 따라 유엔군은 당시 장악하고 있던 38도선 이북의 바다와 도서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⁸⁵⁾ 1953년 7월 27일 이후 1954년 9월까지 정전협정에 따라 육상 군사분계선을 나타내는 표지물이 세워졌다. 임진강 변에 세워진 0001호 표지물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200m~500m 간격으로 동해안에 세워진 마지막 표지물 제1292호까지 1,292개의 표지물이 설치되었다.⁸⁶⁾ 이로써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 접수를 위해 연합국이 설정한 38도선에 의해 분단된 이후 정전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또는 ‘휴전선’이

84) 국문 6부, 영문 6부, 그리고 중문 6부로 되어 있었다. 서명은 휴전회담 양측 수석대표가 각각 9부씩 하고 난 다음 서로 교환하여 다시 9부씩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85) 김명섭, 『전쟁과 평화』(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p.381-383.; 이상철, 『NLL을 말하다』(서울: 살림, 2015), p.15.

86) 김명섭, 『전쟁과 평화』(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p.385.

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또다시 남북이 나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5전쟁은 한반도 지역에 국한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다. 한반도에서 세계 25개국이 직접 참여하는 국제전이었고, 전쟁 수행의 지역과 핵무기 사용을 억제했던 제한전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이념전쟁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6·25전쟁은 유례없이 잔인하고 격렬하게 치러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300만 명 이상으로 이는 당시 약 3,000만 명의 남·북한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남한지역에서는 군인 약 62만 2,000명(전사·사망 13만 7,899명, 부상 45만 742명, 실종 2만 4,495명 등), 경찰 약 1만 7,400명(전사 3,131명, 부상 6,760명, 납치·실종 7,487명), 민간인 약 99만 1천 명(사망 37만 3,599명, 부상 22만 9,625명, 납치 8만 4,532명, 행방불명 30만 3,212명) 등 총 162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⁸⁷⁾

북한 측의 피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은 64만 명(전사·사망 및 부상 52만 명, 실종 12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인의 경우 1954년 북한



〈사진 6-7〉 독일의 의료지원활동

※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2018. 6. 22.)

중양통계국에서 107만 8,000명(사망 28만 2,000명, 실종 79만 6,00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지역에서 최소한 약 173만 8,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⁸⁸⁾

유엔군으로 참전한 22개국(전투부대 파병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⁸⁹⁾)의 인명피해는 전사·사망 3만 7,902명, 부상 10만 3,460명, 실종 3,950명 등 14만 5,312명이었다. 공산군 측에서는 중공군의 인명피해가 전투 손실로 사망 11만 6,000여 명, 부상 22만여 명, 실종 29만여 명 등 총 36만 5,000여 명이었으며, 비전투손실로 사망이 2만 5,000여 명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중공군의 인명피해는 모두 39만여 명에 이르며, 이 통계수치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과 미국 측에서 추정하는 비전투손실 부상자 약 60만 명을 더하게 되면 중공군의 인명피해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소련군의 인명피해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263-275.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449-463.

89) 국방부,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다,” 『보도자료』(2018. 6. 22.)

는 전투 손실 사망이 294명, 비전투손실 사망이 21명으로 총 315명이었다.⁹⁰⁾

인명피해 외에도 전쟁으로 인해 32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1952년 3월 15일까지 전제민 수는 천만 명을 넘어섰다. 정전협정 체결까지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전쟁의 직접 피해자였다. 전쟁으로 인한 물적 피해로 국가 기간산업 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거의 파괴되었다. 남한의 물적 피해는 4,100억 원이었는데 1953년 당시의 시장환율(미화 1달러당 한화 180 원)을 적용할 경우 22억 달러에 해당하였다. 북한의 물적 피해는 1954년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공업 생산량이 약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산업시설물 약 9,000동, 주택 60만 동을 비롯한 총 피해액이 4,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피해액은 1953년 북한의 1가구당 평균소득이 3,388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7년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⁹¹⁾ 군사분계선으로 남과 북이 분단됨으로써 사회·문화적 이질화와 체제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남한에 대해 도발을 지속하면서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⁹²⁾

그러나 전쟁의 피해와 고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과 생존을 위한 정신력은 더욱 강해졌고, 이것은 전후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방국들도 유엔의 이름으로 60개국들이 35억 달러를 구호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지원해 주었다.

[표 6-4] 6·25전쟁 지원국가 현황

구분	지원국가
전투부대 파병(16)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에티오피아,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
의료지원(6)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독일
보급품 및 재정지원(38)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바티칸 시국, 버마(미얀마), 베네주엘라, 사우디, 베트남, 시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란,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칠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쿠바, 타이완,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헝가리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UN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국방부,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다,” 『보도자료』(2018. 6. 22.)

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4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494-499.

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496.

92)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18년 현재 2,002회의 침투와 1,117회의 국지도발 등 총 3,119회의 침투와 국지도발을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267-268.

6·25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전쟁 전 8개 사단에 불과했던 육군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20개 사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49만 7,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순히 외형만 변한 것이 아니라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지휘능력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해군은 전쟁 발발 당시 4개 정대(艇隊)였으나 작전 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하여 전쟁 말기에는 6개 정대를 기간으로 하는 1개 함대로 성장하였다. 병력도 개전 초기 6,956명(해병대 1,241명 포함)에서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4만 2,363명(해병대 2만 7,500명 포함)으로 증강되었다. 공군은 개전 당시 소규모의 비행단 체제로 연락기와 훈련기 등 소형 항공기 22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1개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으로 성장하였다. 병력도 개전 초기 1,897명에서 1953년 6월 30일에 1만 1,481명으로 증가하였다.⁹³⁾ 또한, 6·25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제 3 절 베트남전쟁 파병

1. 파병의 배경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5·16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⁹⁴⁾ 그러나 한·일협상은 과거사 사과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걸려 진척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앞서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먼저 달성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미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남베트남 정부와도 접촉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파병을 위한 노력은 미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한국 정부의 계속된 파병 제안에 대해 당시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함께 중국·소련 등 공산권 국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문제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연합국가들의 지역 안보체제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EATO를 통한 미국의 베트남 정책은 남베트남이 SEATO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프랑스와 파키스탄이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⁹⁵⁾

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800-807.

94)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1995), pp.29-30.

95) 외교부 외교문서, 문서번호-772-1338, “월남 관계 비밀문서,” 1971년 6월, 필름 번호 A-0004, 미

미국 정부가 베트남을 지원할 자유우방으로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 1964년 5월 9일 ‘남베트남 지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2. 베트남전쟁 파병: 제1차 파병~제4차 파병

가. 제1차 파병: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파병

1964년 3월 17일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정부는 베트남사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미국은 베트남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많은 우방국을 끌어들이려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낸다는 ‘More Flags’ 정책⁹⁶⁾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 5월 9일 한국 등 25개 우방국에 베트남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보낸 서한(書翰)에는 1개 이동외과병원을 파병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었다.⁹⁷⁾ 그때부터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공식화되었다. 존슨 미 대통령으로부터 ‘남베트남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한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은



〈사진 6-8〉 제1이동외과병원 창설식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1998)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요청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존슨의 서한을 받기 이전부터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고, 파병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존슨의 서한은 이를 공식화해 명분을 쌓는 것에 불과하였다.⁹⁸⁾

한편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정부가 요청한 ‘1개 야전병원’의 파병은 인도적 차원의 파병으로

국의 월남전개입에 관한 문서(1963-1965) 공개, 1971(외교부 외교사료과)

96) 1964년 4월 23일에 제창된 이 정책의 공식 명칭은 ‘자유 세계 원조프로그램(The Free World Assistance Program)’이며 혹은 ‘Other Flags’, ‘Many Flags’로 불리기도 한다.

97)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eoul Embassy, July 3, 1964, Asia and the Pacific :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filmed from L.B.J. Library No. 5-0649.

98) 강기천, 『강기천 회고록』(서울: 계몽사, 1995), pp.246-247.;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p.673-679.

‘전투병력 파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해외파병에 관한 경험이 없었고, 베트남의 작전 실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지원단 파병은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한국군 파병에 대한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산 침략을 받는 남베트남 사태는 한국의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국가안전 보장 측면과, 6·25전쟁 시 도와준 자유우방에 보답한다는 국제적 신의(信義)의 차원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었다.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는 파병을 위한 조치를 구체화해 130명 규모의 이동외과병원과 10명으로 편성된 태권도 교관단 등 140명을 파병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국방부는 1964년 6월 10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병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7월 9일 김종오 합참의장이 주한 미군 사령관 하우스(Hamilton H. Howze) 대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파병절차를 협의하였다. 한미는 파병 전에 [표 6-5]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6-5] 제1차 파병 시 한미 간 합의사항

1. 증강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지도 요원의 월남파병에 합의한다.
2. 파월부대의 장비, 시설, 보급, 정비 및 급식에 대한 군수지원은 원칙적으로 미군 측이 부담한다.
3. 파월장병들에 대한 보급, 수당 및 출장비는 한국 측이 부담한다.
4. 취사도구 및 한국군 고유의 필요한 식품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
5. 월남 정부에서 정식지원 요청이 있는 즉시 한미합동 선발대를 파견하고 파견될 선발대의 숙영 및 군수지원 등 제반 문제는 월남당국과 주월 미군 간에 협의한다.
6. 파월부대는 월남 정부의 정식지원 요청 후 6주 이내에 파견한다.
7. 부대 수송은 한국 해군 LST 2척을 사용한다.
8. 월남 파견부대와의 연락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한국 공군 수송기를 사용한다.

※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 전사』1(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p.111.; 육군본부, 『군수 변천사』(서울: 육군본부, 1996), p.289.

또한, 1964년 7월 15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하였고, 7월 31일 ‘파병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⁹⁹⁾



〈사진 6-9〉 파병 한국군 태권도 시범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대편성과 훈련을 마친 이동외과병원¹⁰⁰⁾과 태권도 교관단은 LST(Landing Ship Tank) 편으로 부산항에서 출항(1964. 9. 11.)하여 10여 일간의 항해 끝에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Sai Gon)에 도착(9. 22.)하였다. 다음 날 사이공에서 한국군 최초의 파병을 환영하는 행사에 참여한 이후 9월 25일에는 남베트남 육군 정양병원이 위치한 붕파우(Vung Tau)에 도착하였다. 9월 28일 시무식을 하고 주월한국군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태권도 교관단은 9월 23일 사이공에서 환영 행사에 참여한 이후 이동외과병원과 분리되었으며, 남베트남 육군보병학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 각각 3명씩 배치되어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전쟁에서 태권도 교육은 미군과 남베트남군 등 우방국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국군의 강인함을 소개하며 태권도의 세계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남베트남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각종 첩보를 수집하고, 한국인 교포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태권도 교육의 성과에 따라 1967년 9월 29일 최초로 10명(유도교관 3명과 사병 7명)이 파견되어 태권도 교관과 함께 사이공에 5개소, 투득(Thu Duc)에 1개소의 도장을 운영하였다. 1968년에는 비엔호아(Bien Hoa)와 붕파우, 달랏(Da Lat)에 각 1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총 12개소에서 유도교육을 하였다. 유도부는 1969년 6월 19일 태권도단에 통합되어 태권단 유도부로 개편되었다. 1972년까지 파견된 유도부는 총 65명으로 장교 28명과 사병 37명이었다.¹⁰¹⁾

99) 제45회 제1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4. 7. 31.)

100) 이동외과병원은 1964년 7월 15일, 제7후송병원을 모체로 경기도 양주시 창동(현 서울시)에서 창설되었다. 이 병원은 장교 34명(군의 19명, 의정 6명, 통역 3명, 간호 6명)과 사병 96명(자체 경계 요원 24명 포함) 등 총 130명으로 편성되었다.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성남: 국군의무사령부, 2004), pp.84-85.

1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94.

나. 제2차 파병: 건설지원단

한국에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병을 위해 준비하던 중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였다. 1964년 8월 2일과 4일 통킹만 공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을 북베트남 어뢰정이 공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선전 포고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북베트남을 공식적인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8월 5일 항공모함을 급파해 북베트남 내의 유류 저장소를 집중 폭격하였다. 8월 7일에는 미 의회가 ‘통킹만 결의안’을 가결해 베트남에서 전쟁 수행에 관한 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¹⁰²⁾

베트남전이 확대되자,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유우방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후방지역에서 전쟁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남베트남군까지 전선에 투입됨으로써 후방지원 병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였다.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베트남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1964. 12. 18.)하였다.¹⁰³⁾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내부 검토를 마친 이후 김종오 합참의장과 주한 미군 사령관 하워드 대장은 구체적인 파병안을 협의(1964. 12. 22.)하였다. 미국 측에서 요청한 병력은 공병 1개 대대와 수송 및 정비 요원 등 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으로서는 건설지원 활동이 야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체 경계 요원이 필수적이었으며 파병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체 경계를 위한 보병 1개 대대를 추가하고 준장급의 ‘한국군사원조단’ 본부를 편성해 2,000명 규모로 확대된 파병안을 마련한 후 주한 미군 사령관과 합의하였다. 이어서 국방부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군 2차 파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1965. 1. 2.)하였으며, 국회로부터 파병동의(1. 26.)를 받았다.¹⁰⁴⁾

국회로부터 건설지원단 파병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제6사단 사령부에서 ‘한국군사원조단’ 본부를 창설(1. 26.)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뜻의 ‘비둘기부대’로 명명하였다. 예하 부대로 육군 제127공병대대를 기간으로 자체방어를 위한 경비대대, 수송 자동차 중대, 해병 공병대대, 해군 수송분대 등이 편성되었다. 또한, 앞서 파병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통합지휘하도록 하였다.

파병 준비를 마친 비둘기부대는 1965년 3월 10일 인천항에서 미 해군 수송함 T-AP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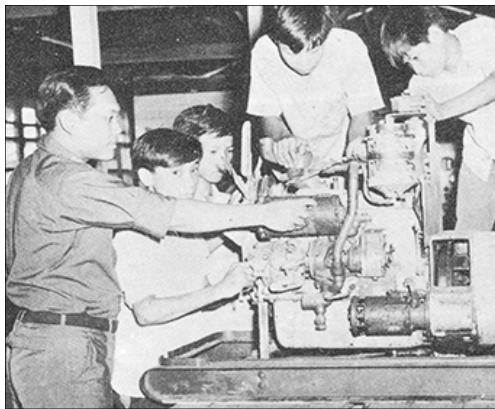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1, 상)』(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8), p.46.

103) 강기천, 『강기천 회고록』(서울: 계몽사, 1995), pp.246-247.

104) 제45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4. 1. 26.)

에 탑승해 미 제7함대 소속 함정과 함재기의 호위를 받으며 출항한 후 3월 16일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사이공에서 한·미·베트남 정부 요인과 주민들의 환영 속에 상륙한 비둘기부대는 시가행진을 마친 후, 사이공 동북쪽 22km 지점의 지안(Di An)으로 이동해 주둔하면서, 사이공 외곽도로 건설과 각종 건설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⁵⁾

한국군사원조단은 파병 이후 의료지원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대민 무료 순회 진료를 비롯하여 원조단 본부 근무대에 대민진료반을 상주시켜 운용하였으며 1966년에는 진료소를 추가 설치하여 9만 2,768명의 대민진료를 실시하였다. 1967년도부터는 남



〈사진 6-10〉 남베트남인에 대한 기술교육

※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1998)

베트남 주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인 등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총 14만 4,222명을 진료하였다. 1968년 7월 1일부로 제1이동 외과병원은 제201이동외과병원으로 개편되어 16만 2,139명을 진료하였다. 1969년에는 10만 6,516명, 1970년에는 17만 4,108명, 1971년에는 10만 9,704명을 진료하였다. 한편 1971년에는 비행(飛行) 간호장교 10명을 선발하여 항공의학연구원 교육훈련부에 입교시켰다. 이들은 고공비행 적응훈련, 항공생리학, 항공의료 후송간호학, 비상착륙 시 비상처리 교육 등을 이수한 후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⁶⁾ 1972년부터 1973년 철수 시까지는 총 16만 8,508명을 진료하였으며 이 중 남베트남 군인은 1만 1명,

민간인 11만 853명이었다.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중 총진료 인원은 95만 7,964명이었다.¹⁰⁷⁾

이밖에도 구호 활동으로서 피난민에 대해 유희지를 농지로 개간해 주었고, 자조사업으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였다. 1968년 4월 영내에 비둘기 기술학교를 설립하여 발전기와 차량 정비 등을 교육하였고, 지안(Di An) 타자(打字)학원과 빈투언(Binh Thuan) 양재학원을 설립하여 총 1,553명을 교육하였다. 타자학원에서는 영문과 베트남어 타자, 양재학원에서는 재봉과 수선 등을 교육하였다. 이들 교육 수료자들은 남베트남의 행정기관과 기업에 50% 이상 취업하여 남베트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0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51-153.

106) 육군본부, 『대한민국 간호병과 60년사』(계룡: 육군본부, 2009), p.95.

1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4), pp.892-893.

다. 제3차 파병: 수도사단(맹호부대) 및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1964년 8월 퉁킹만 사건 이후 미국의 지상군 파병은 예상되어 있었다.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지상군 파병을 늦추고 있던 미국은 1965년 3월 8일 해병 2개 대대를 첫 번째 지상군 전투부대로 다낭(Da Nang)에 상륙시켰다. 이어서 미 합참은 1965년 3월 20일 “베트남에서 더욱 적극적인 작전을 위해서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사단의 파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¹⁰⁸⁾ 이를 계기로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제안과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군의 제2차 파병이 있었던 1965년이 되면서 베트남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었다. 미국의 강력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호찌민루트’를 이용한 북베트남 정규군의 남파가 계속됨에 따라 남베트남의 곳곳에서 지상 전투가 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월 11일 김현철 주미대사는 볼(George W. Ball) 미 국무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병력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진 6-11〉 수도사단 파병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미국을 방문했던 이동원 외무부 장관도 한국은 미국을 돕는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필요하다면 더 큰 부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원 장관은 브라운 주한 미 대사와 협상을 통해 첫째, 파병 병력의 상한선은 5만 명 이내로 한다. 둘째,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셋째, 북한의 침공 시 미국이 즉각 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한다. 넷째, 파병에 드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 다섯째, 남베트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市場) 진출을 보장한다. 등의 파병조건 안을 제시하였다.¹⁰⁹⁾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196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5년 6월 14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전투

108) William C. Westmorland, 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하였는가』(서울: 광명출판사, 1976), pp. 147-149.

109)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54-155.

병력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데 이어 8월 13일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였다.¹¹⁰⁾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심의되고 있는 동안 국방부는 파병부대 선정에 착수하였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파병경험이 있었지만, 전투부대 파병은 비전투부대 파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합참에 ‘파병기획단’을 설치해 더욱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였고,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을 파병부대로 선정하였다.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은 재창설과 같은 수준으로 개편하고,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로 명명한 후 파병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시작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파병부대를 통합지휘할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1965. 9. 25.)하고, 수도사단장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겸임)으로 임명함으로써 한국군 최초의 통합군사령부가 탄생하였다.¹¹¹⁾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임무와 주요 기능은 [표 6-6]과 같다.

이어서 10월 9일 청룡부대가 남베트남 중부의 캄란(Cam Ranh)에 상륙하고, 그 뒤를 이어 수도사단(-)이 11월 1일까지 꾸년(Quy Nhon)에 상륙하였다. 또한, 주월한국군사령부가 10월 20일 사이공에 개소됨으로써 파병된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작전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표 6-6]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임무와 기능

□ 임무

1. 파월 한국군은 남베트남공화국 정부의 요청으로 남베트남공화국의 국가 평정 및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한다.
2.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예하 한국군을 통합지휘하여 남베트남공화국 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지원에 의한 반란과 침략을 진압하여 남베트남공화국의 자유와 안전을 회복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

□ 기능

1. 파월한국군을 대표하여 이를 지휘·감독하며 자유 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 상임위원의 일원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예하 및 배속부대의 인사와 재정지원을 관장한다.
2. 군사령부와 각 부대와의 통신망을 유지하고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베트남군과 파월 미군사령부와 협조한다.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57.

110) 제52회 제1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5. 8. 13.)

111) 주월한국군사령부는 대통령령 제2226호(1965. 6. 29.)와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1965. 9. 20.)에 따라 국방부 직속부대로 창설되었다. 최초 창설 인원은 장교 208명을 포함하여 총 398명이었다.

라. 제4차 파병: 제9사단(백마부대)

1965년 7월 베트남전쟁의 미국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던 미국 정부는 1965년 말까지 18만 4,300여 명에 달하는 미군을 남베트남에 파병하였다. 또한, 동맹국인 한국이 1개 사단을, 오스트레일리아가 1개 대대를 각각 파병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었다. 베트남사태를 미국의 의도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병력 증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 반전여론으로 인해 추가 파병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존슨 정부는 파병된 한국군의 활약을 주시하면서 베트남의 작전환경에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서 베트남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부각하면서 미국 내 반전여론을 무마시키려는 방안 등을 고려해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하였다.

미국 정부의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 파병 요청을 접수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부터 한국군 파병 규모를 5만 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월한국군사령부로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위해 군단급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증파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1개 사단의 증파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제4차 파병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다 명확하게 재확인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더욱 다급한 요청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미국의 러스크(David D. Rusk) 국무부 장관은 1965년 12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 파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동원 장관은 제3차 파병 시 합의하였던 한국군 장비현대화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선(先) 약속이행, 후(後) 증파’를 주장하였다. 반면 러스크 장관은 ‘선 증파, 후 약속이행’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¹¹²⁾



〈사진 6-12〉 백마부대 환송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다급해진 존슨 정부는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Hubert H. Humphrey) 부

112)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서울: 고려원, 1993), pp.105-110.

통령을 특사로 파견해 한국의 안보와 지원을 약속하면서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¹¹³⁾ 아울러 브라운(Winthrop G. Brown) 대사와 이동원 외무부 장관의 협상이 계속되었는데 브라운 대사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약속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1966. 3. 4.)를 보내왔다. 이 각서에는 한국군의 현대화와 함께 월남에 파병하는 병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해 주고 한국군의 대간첩 작전 능력을 개선한다는 것과, 월남에 파병된 기간은 군원이관 계획을 중지한다는 군사적인 조치와, 한국군이 월남에서 사용하는 보급품, 용역, 장비 등을 한국 내에서 조달하도록 한다는 경제적 조치 내용이 포함되었다.¹¹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서면으로 보장함에 따라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 파병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1개 전투사단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1966. 2. 22.)하고¹¹⁵⁾ 국회의 동의¹¹⁶⁾를 거쳐 수도사단 제26연대와 제9사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 후 파병 준비를 마친 수도사단 제26연대는 4월 19일 퀴년(Quy Nhon)에 상륙하였으며 제9사단(백마부대)은 10월 8일까지 닌호아(Ninh Hoa) 일대에 전개하였다. 그 결과 주월한국군은 남베트남 중부 해안의 핵심지역을 담당해 미군과 함께 베트남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제9사단의 파병에 따라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예하 부대의 전투근무지원을 위해 수도사단 예하의 군수지원사령부를 모체로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를 창설¹¹⁷⁾하였다. 해상수송 지원을 위해 비둘기부대 예하의 해군 수송분대를 해군 수송전대(백구부대)¹¹⁸⁾로 개편하였으

113)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p.726-728.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264-267.

1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88.

116) 제55회 제14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6. 3. 19.)

117) 제100군수사령부는 제9사단 파병에 따라, 1966년 6월 1일부로 수도사단 군수지원사령부를 모체로 증·개편되어 주월한국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제1군수지원단은 수도사단과 해병여단, 제2군수지원단은 제9사단을 직접 지원하였다. 제100군수사령부는 한국군 파병 기간 중 남베트남군과 미군 및 한국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았다. 1972년 해병 제2여단의 철수에 따라 이를 지원하던 제11군수지원대대와 제1의무치료중대가 철수한 후, 1973년 한국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6년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군수사령부, 『군사령부 50년 발자취』(대전: 육군군수사령부, 2010), pp.21-70.

118) 한국 해군은 1964년 9월 11일 제101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의 본대를 LST-815(북한함)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에서의 해상수송 임무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5년 6월 20일 LSM-609(월미함)과 LSM-611(능라함)을 증파하기로 하고, 증파된 LSM 2척과 이미 파월된 LST-812(위봉함)로 7월 12일 '해군수송단'을 편성하였다. 이후 1965년 후반 베트남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이 이루어졌다. 수도사단과 해병 제2여단의 파병으로 한국 전투부대 지원을 위한 군수물자의 수송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3월 15일부로 기존 해군수송단대를 해군수송분대로 개편하고 부대 명칭을 '백구부대'로 명명했다. 이어서 1967년 4월 3일부로 해군수송분대를 해군수송전대로 개칭, 증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

며, 근접항공지원 및 공중수송지원을 위한 공군지원단(은마부대)¹¹⁹⁾을 창설해 각각 주월 한국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주월한국군은 군단급 규모 제대로 확장되어 명실공히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베트남전쟁 파병 현황은 [표 6-7]과 같다.

[표 6-7] 연도별 베트남전쟁 파병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규군					기타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1964	140	140	140	—	—	—	—
1965	20,541	20,541	15,973	261	21	4,286	—
1966	45,605	45,605	40,534	722	54	4,295	—
1967	48,839	48,839	41,877	735	83	6,144	—
1968	49,869	49,838	42,745	785	93	6,215	31
1969	49,755	49,720	42,772	767	85	6,096	35
1970	48,512	48,478	41,503	772	107	6,096	34
1971	45,663	45,632	42,354	622	98	2,558	31
1972	37,438	37,405	36,871	411	95	28	33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04), p.196.

마. 제4차 파병 이후 추가 파병 논의

한미 정부가 제9사단 파병에 합의한 직후 1966년 6월 웨스트 모어랜드(West C. Moreland) 주월미군사령관은 “한국군 해병여단을 사단으로 증편하기 위해 한국군 해병 6개 대대의 추가 파병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미 합참에 건의하였다. 미국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군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¹²⁰⁾ 그러나 1966년 미국 정부의 한국군 추가 파병(제5차 파병)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121.

119) 1965년 수도사단과 해병여단 파병 당시 공군 전투부대 파병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대신 참모장교와 전술항공지원반과 공수지원반을 파견하였다. 1966년 제9사단의 추가 파병 및 베트남전쟁의 확전에 따라 1966년 10월 17일 제8공수 비행대대를 ‘은마부대’로 명명해 주월한국군 공수지원을 담당하게 하였다. 공군본부, 『공군사』 제4집(서울: 공군본부, 1977), pp.109-114

1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97.



〈사진 6-13〉 백구부대 함정교대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1966년 10월 3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국 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존슨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기 위하여 귀로(歸路)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요청과는 별개로 3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는 제2해병여단의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4개 대대로 증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7월 해병과 지원부대로 구성된 2,963명을 추가 파병하였다. 정부는 그때의 파병을 ‘병력 교대를 위한 파병’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하

였다. 해병대가 증파된 후에도 한국군 추가 파병을 위한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미국 정부의 집요한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그들의 요청을 계속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였다.

한국군 파병에 대해 북한은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였다. 그들은 남한의 월남파병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북베트남의 호찌민에 한국군 파병과 같은 규모의 북한군 파병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호찌민이 외세의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민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김일성의 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¹²¹⁾

베트남 파병에 실패한 김일성은 1966년부터 대남도발을 급증시켰다. 김일성은 1967년 12월 16일 연설에서 “현재 상황을 좀 더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공작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공언하였다.¹²²⁾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원 31명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이틀 후인 1월 23일에는 동해에서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USS Pueblo)호가 북한 함정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²³⁾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두 사건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 대응 공격을 준비하였으나, 미국의 저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보다는 자국의 함정

1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827-830.

1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99.

1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79-202.

납치와 승무원 송환에 매달렸다. 이를 지켜본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안보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¹²⁴⁾ 남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철수시키지는 않았으나 거론되고 있던 추가 파병안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1968년 상반기 중에 파병할 예정으로 추진되던 1만 1,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은 중단되었다.¹²⁵⁾

이어서 존슨 대통령은 1968년 4월의 호놀룰루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추가 파병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4월에는 남베트남의 응우옌 반 티에 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증파를 간절히 요청하는 공한(公翰)을 보내 왔으나 박 대통령의 추가 파병불가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정부 역시 1968년 1월 감행된 북베트남군과 NLF(Nation Liberation Front: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의한 땃(Tet)공세의 충격으로 베트남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병요구도 없었다.

3.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수행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기 시작하면서 미군 측은 미군·한국군·남베트남군 간의 지휘통일을 강조하면서 주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요구하였다. 미군 측은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주월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진 6-14〉 작전 중인 청룡부대 대원들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 화보집』(1998)

러나 한국은 전술원칙상 지휘를 통합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군에 이양할 경우 공산 측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용병’이라는 그들의 선전을 합리화하게 된다는 점과, 독립국가의 위신과 군의 사기를 위해서는 군사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미군 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¹²⁶⁾

파병을 위한 선발대 및 연락 장교단으로 파견되었던 이훈섭 준장과 이세호 소장 등은 현지 미군 사령관과 협상을 통해 한국군의

124)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805.

125)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309.

126)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352.

독자적인 작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¹²⁷⁾ 이어서 파병된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소장 역시 미군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작전권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주월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문제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 끝에 3개국 군사대표로 구성되는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FWMAPC: Free World Military Assistance Policy Council)의 결정에 따라 한국군사령관이 자주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¹²⁸⁾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파병된 한국군이 예상된 용병 시비를 차단하면서, 독자적인 전술로 작전 성과를 증대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다.¹²⁹⁾ 또한, 차후 해외파병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¹³⁰⁾

주월한국군사령부는 나트랑(nahtrang)에 야전사령부를 창설(1966. 8. 15.)하여 2개의 전투사단과 군수사령부에 대한 효과적인 작전통제와 이들 주요부대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 수행하였다. 주월한국군의 임무는 베트남 내에 있는 베트콩과 월맹정규군을 격멸 또는 축출하여 베트남 정부의 통제지역을 확장하며 아울러 대민지원 및 민사심리전을 수행하여 베트남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베트남 간의 친선유대를 강화하며 나아가서는 베트남정부의 평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임무에 기초를 두고 한국군의 작전개념은 작전에 임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수행에 있어서는 적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신속한 공중 또는 지상기동으로 적을 포위하고 포촉섬멸(捕促殲滅)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적의 섬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베트남 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있었다. 이러한 개념 아래 주월한국군사령관은 지휘방침의 하나로 “월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우선 보호 즉 100명의 적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¹³¹⁾

한국군은 대민지원과 대민심리전을 보다 강화하고 한월친선과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주민과 베트콩과의 관계를 차단하였다. 한국군 작전의 또 다른 특징은 베트남전쟁이 주로 대(對)게릴라전이라는 점에서 소부대전술에 주안을 두면서 점차 대규모 부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파병 기간 한국군의 작전 현황은 [표 6-8]과 같이 한국군사령부 차원의 군단급 규모 작

127) 조성훈 엮음, 『전시동원과 경제건설: 이훈섭 회고록』(서울: 선인, 2017), pp.112-118.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주월 한미군사실무 약정서(1965. 9. 6.)」,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250-253.

129)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서울: 팔복원, 2006), pp.51-56.

1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60-61.

131)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서울: 육군본부, 1989), p.201.

전 4회와 사단급 규모 작전 26회, 연대급 규모 작전 186회, 대대급 작전 955회 등 총 1,175회의 대부대작전(대대급 이상)을 수행하였다. 중대 전술기지 단위로 수행된 분대~중대급 규모의 소부대 작전은 57만여 회에 달하였다.¹³²⁾

[표 6-8] 대대급 이상 부대 작전 현황(파병 이후~1972. 12.)¹³³⁾

(단위 : 회)

구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1,175	15	63	95	170	216	301	257	58
군단	4	—	—	2	—	—	1	1	—
사단	30	—	3	9	7	2	4	4	1
연대	186	2	24	31	48	37	21	15	8
대대	955	13	36	36	115	177	275	237	49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223.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한국군은 미군과 베트남군으로부터 군수지원 및 무기·장비를 지원받았다. 1966년 8월까지 주월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한·미·베트남군 군수업무약정서에 준하여 작성된 미국의 군사원조계획서에 의해 베트남군 군수지원계통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주월한국군이 베트남군 군수지원계통을 통해서 군수품을 획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미·베트남 간에 협조한 결과 1966년 9월 1일부터 주월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주로 주월 미군계통으로부터 받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주월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장비와 보급품의 보급은 주월 미군과 동일한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받았으며, 베트남군으로부터는 베트남군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쌀과 소금 그리고 구형의 공통사용장비와 수리부속품을 지원받았다. 주월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제100군수사령부가 담당하였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부대들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군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았다.

1967년에는 파병 이후 각지에서 실시한 전투에서 얻은 작전경험을 근거로 하여 주월한국군 장비의 기준이 되는 장비편성표가 대폭 수정되었다. 이 수정된 편성표에 따라 주월한국군은 장비를 점차 신형장비로 교체 및 보강하는 장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장비 현

1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223-224.

133) 1973년에는 대대급 이상 규모의 작전은 없었고, 중대급 이하 소부대 전투만 있었다.

대화계획은 총 58개 품목 5,666만 달러에 달하며, 그 주요 장비는 M-16소총, 81밀리 박격포, 4.2인치 박격포, M-60기관총, 각종 차량, 각종 무전기, U-21항공기 및 헬리콥터, M113 APC, 방탄조끼, 플라스틱 수통 등이었다. 주월한국군은 1971년 초까지 장비 현대화 계획의 총 87%에 해당하는 장비를 획득하였고, 그 중 화력장비는 85.6%, 기동장비는 90%, 통신장비는 88%, 공병장비는 100%, 기타장비는 99.7%가 현대화되었다.¹³⁴⁾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FL)의 땃(Tet)공세 이후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다. 공화당의 닉슨(Richard M. Nixon)이 1969년 1월 20일 제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미국의 베트남 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닉슨의 베트남 정책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철수하고, 그 공백을 남베트남군으로 메우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닉슨은 ‘베트남에서 단계적 철군’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참전국들도 미군과 보조를 맞추어 주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에 파병하였던 연합군의 철수가 시작되자, 한국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군 철수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1970년 11월 미국을 방문하였던 최규하 외무부 장관은 현지 점에서 한국군은 철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는 1970년 12월 초까지 철군 문제를 표면에 내놓지 않고 있었다. 당시 정부가 한국군의 철수를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주한 미군 철수문제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는 적어도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동안은 주한 미군 철수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미국은 1970년 7월, 주한 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주한 미군 1개 사단의 철수에 따라 정부도 더 이상 주월한국군의 철수를 미룰 명분이 없어지자 박 대통령은 1971년 1월 11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철군 문제를 공식화하였다. 정부는 미국 및 남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거쳐 1971년 11월 6일 한국군 제1단계 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제1단계 철수작전부대로 제2해병여단과 해군 수송전대 및 지원부대 일부 병력 등 1만 명을 7개 제대로 편성하였고 1971년 12월 1일부터 1972년 4월 13일까지 해상으로 철수시켰다.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제2단계 철수 역시 제1단계 철수와 함께 검토되고 있었으나 제2단계 철군에 대해서는 한·미·베트남 정부의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1972년 말까지 나머지 한국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방침을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철수시기를 1972년 말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남베트남 정부

134)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p.355-361.

는 1973년 말까지 계속 주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주월한국군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1972년 말까지 잔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7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남베트남에 파병한 연합군 중 한국이 가장 많은 병력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1972년 9월이 되면서 베트남 평화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화협정 발표 후 60일 이내에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킨다는 평화협정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해 주월한국군을 신속히 철수시키는 ‘개신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1973년 1월 23일 베트남 평화협정이 조인되고 28일 08:00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남베트남에 파병된 외국군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한국군은 1973년 1월 23일 선발대 125명이 항공기를 이용해 철수하였고, 11개 제대로 편성된 본대는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역시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하였다. 그리고 3월 23일 후발대 118명이 복귀함으로써 8년 6개월 동안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었던 한국군의 철수가 완료되었다.

4. 베트남전쟁 파병의 영향과 의의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에 걸친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국방 및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제3공화국 정부는 국군의 파병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안보동맹 관계를 상호 협



〈사진 6-15〉 파월 개선 장병 시가행진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상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의 원조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미국의 지원과 전쟁특수를 활용한 외화수입으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한국군 등 연합군이 지원하였던 남베트남 정부가 연합군 철수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점령당함으로써 파병의 명분에 손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사태는 박정희 정부가 얻고자 하였던 것을 달성한 후였기

때문에 파병의 의미와 성과 자체가 변질하거나 퇴색된 것은 아니었다.¹³⁵⁾

첫째, 정치·외교 및 대미(對美) 관계에 미친 영향으로 박정희 정부는 파병을 계기로 정

1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143.

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함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 위기설이 난무하던 시기를 무사히 극복해 나가며,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지원을 국가 발전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다. 1960년 초까지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을 대가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보장하면서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였던 한미 관계’로부터 ‘상호이익을 전제로 하는 협상의 관계’로 변화되었다.¹³⁶⁾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국가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반면 한국의 파병은 비동맹중립노선을 추구하던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배척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¹³⁷⁾,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있다.¹³⁸⁾

둘째, 안보·국방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 의료지원단이 베트남에 파병된 1964년의 한반도는 북한의 남침 위협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때였다.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베트남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병력 부족에 시달리게 된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군 2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결행된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을 보장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로 장비현대화 등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¹³⁹⁾

전력증강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군장비현대화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미국이 제시한 협조 14개 선행조건에 따라 3개 예비사단을 전투사단화하여 편제장비를 보유하게 하는 동시에 육군 1개 사단과 해병 1개 여단 등 많은 부대를 증·창설하였고, 베트남 중과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기타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주월한국군의 칼빈(CAR)과 M-1소총을 M-16소총으로 교체하였다.

육군에서는 호크 유도탄대대, 나이키 유도탄대대, 2개 기갑여단 및 1개 전차대대와 1개 어네스트존대대, 1개 175밀리 포병대대와 5개의 8인치 자주포병대대를 창설하였다. 이외에도 M-48전차, 통신차량, 무전기, 곡사화기(105밀리, 155밀리, 8인치) 탄약, 기타 소화기 등을 새로 공급함으로써 지상전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397-398.

137) 육군본부, 『해외파병 40년사』(계룡: 육군본부, 2008), pp.177-179.

138)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pp.236-239.

139)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223-224.

해상전력 향상을 위해서 대간첩작전용 고속정을 건조하기 시작하였고 해군 3개 전단, 해병 1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호위구축함을 비롯한 호위함, 대형소해함, 경비함 등을 도입하였으며, 목포경비사령부를 창설(1969)함으로써 해군의 전투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공군은 1개 전투비행단, 1개 전투비행전대, 5개 전투비행대대, 4개 전술공수비행대대 등을 창설하였고, 작전사령부와 군수사령부를 창설하였다. F-4D 전투기, C-46D/54D 및 S-2A 해상초계기와 F-4D 팬텀 전폭기를 도입함으로써 열세에 놓여 있던 대북한 항공전력을 상당히 보강하였다.¹⁴⁰⁾

베트남전쟁 철수 이후 우리 군은 [표 6-9]와 같이 57개 품목에 걸쳐 총 5,277만 달러 상당의 신형장비를 획득하였다. 나아가 1972년 M-16 자동소총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차례로 각종 화포와 전차, 헬기 등을 양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 체계를 갖추으로써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¹⁴¹⁾ 32여만 명에 이르는 파월장병들의 전투경험은 장병들이 전투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¹⁴²⁾

[표 6-9] 장비 현대화 실적

(단위 : 만 달러)

구분	화력	기동	통신	공병	기타	계
품목 수	5	14	25	5	8	57
금액	714	3,056	1,197	206	102	5,277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757.

또한,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면서 미국 및 남베트남과 연합작전을 수행한 경험은 1971년 한미 제1군단 창설과 운용의 밑바탕이 되었고, 한미야전군사령부(CFA: Combined Field Army)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신뢰 관계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로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하여 불안하였던 1960~1970년대의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140)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p.756-757.

1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416.

1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409-410.

조성할 수 있었다.¹⁴³⁾

셋째,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거액의 외화는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특히 경제·사회발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국군의 파병에 따른 외화수입은 미국의 군사원조와 전쟁특수 등을 통해 대략 5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큰 효과는 외화의 국내유입으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표 6-10] 베트남전쟁 참전 연 병력 및 피해 현황

(단위 : 명)

군별	참전 연 병력	전·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계	전사	순직	사망	계	전투	비전투	
육군	288,656	3,859	3,476	243	140	8,211	5,567	2,644	4
해군 (해병)	35,246	1,240	1,125	29	86	3,021	2,813	208	—
공군	615	—	—	—	—	—	—	—	—
계	325,517	5,099	4,601	272	226	11,232	8,380	2,852	4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429.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을 활용해 차후 중동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파병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효과는 매우 컸다. 한편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표 6-10]과 같이 5,000여 명의 전·사망자와 11,0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오늘날까지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엽제 환자¹⁴⁴⁾ 등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큰 손실이었다.

143)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p.367-389.

1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428.

제 7 장 군사대비태세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 계속하여 전력증강 및 전투 준비태세 보강 활동을 추진해 왔다.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로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육상·해상·공중을 구분하지 않고 군사도발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다. 북한은 군사도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도발까지 점차 도발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1994년 핵합의를 파기하고 핵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침투·국지 도발, 전면전 등 군사적 위협과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방위태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여 군사 공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오늘날 전쟁은 모든 작전요소가 동원되는 총력전의 개념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민·관·군·경의 전 역량을 집중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전쟁을 억제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이 6·25전쟁 이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保衛)하고,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전면전과 침투 및 국지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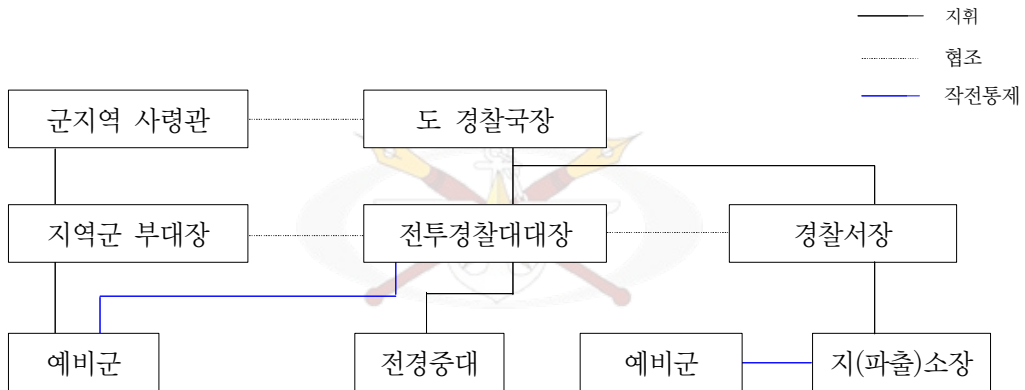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국군을 편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병제에 기초한 「병역법」을 공포(1949. 8. 6.)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제281호로 「병역법 시행령」을 공포(1950. 2. 1.)하였다.¹⁴⁵⁾ 이 시행령은 사단 관내의 병원(兵員)에 대해 사단장이 징집이나 소집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사단에 충원하는 소위 사관구제(師管區制)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제 10만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이 징집의 필요성이 없었고, 지방 병무 행정기구인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마저도 해체(1950. 3. 15.)된 상황이어서 징병을 위한 세무 법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전쟁이 확대되자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 직접적인 병력 보충을 담당하는 편성관구사령부(編成管區司令部)를 설치(1950. 7.)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상당수의 지원병이 자발적으로 입대함으로써 10만 편제의 한국군을 유지하였지만, 한국군과 미군의 증강계획에 의해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하게 되자 응급수단을 강구하여 병력

145) 법률 제41호(1949. 8. 6.) 「병역법」; 대통령령 제281호(1950. 2. 1.) 「병역법시행령」

을 보충하였고,¹⁴⁶⁾ 군인 이외에도 많은 국민이 전투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다.

6·25전쟁 이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는 1968년도에 있었던 무장공비들에 의한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대통령 훈령 제28호(1968. 12. 20.)에 의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¹⁴⁷⁾ 이후 정부는 수차례의 대통령 훈령을 통해서 대비정규전 봉쇄지침 및 능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민·관·군·경·향토예비군의 유기적인 협조로써 북한의 격화된 대남 집단무장공비의 침투와 간첩활동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통령 훈령 제28호 추가 11(1977. 1. 1.)을 통해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설정하였다.¹⁴⁸⁾

[표 7-1] 1970년대 대간첩작전 지휘·협조체계



※ 출처: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p.289.

북한은 이후에도 지상·해상·공중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발 행위를 지속해 왔다. 북한은 군사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12만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군사적 위협 외에 테러,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용 가능한 모든

146)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2), pp.514-5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377-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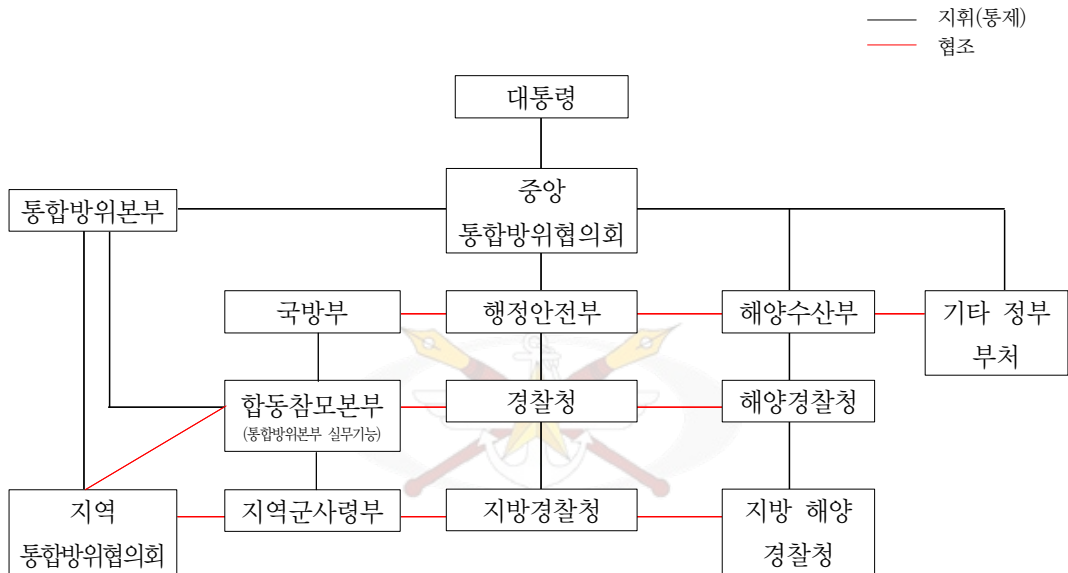
1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79-130.; 205-226.

148) 이 훈령에는 방위협의회 구성 및 임무, 지휘 및 협조, 대비정규전 능력강화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p.288.

역량이 총동원된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방위요소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전력 또는 지원요소를 말하며 국군, 경찰(자치 경찰기구 포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등이 포함된다.¹⁴⁹⁾

[표 7-2] 통합방위 지휘·협조체계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67.

중앙통합방위협의회¹⁵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가적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침,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을 심의·의결한다.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업무의 주무부서로서, 합동참모의장을 통합방위본부장으로 하여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태세의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분석과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침과 계획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 226개의 시·군·구에

149)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통합방위법」

150)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은 기획재정부장 등 정부 부처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67.

설치되며 의장은 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¹⁵¹⁾,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 수립, 취약지역 선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한, 광역시·도지사 및 시·군·구, 읍·면·동장 소속으로 설치된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지역 안보태세확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했다.

정부와 국방부는 통합방위 관련 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하였다. 1960년대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북한의 침투 및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67년 12월 대통령 훈령 제18호인 「간첩봉쇄지침」을 제정(1967. 12. 15.)하였고, 1995년 1월 이를 「통합방위지침」으로 수정하였다. 1996년 9월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통합방위작전과 지원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1997년 1월 「통합방위법」¹⁵²⁾을 제정하였다.

이후 작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7회에 걸쳐 통합방위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2009년에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보완하고, 경계태세와 통합방위훈련,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¹⁵³⁾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통합방위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여 통합방위업무 관계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무를 수행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¹⁵⁴⁾ 또한,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화랑훈련 지원계획 작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화랑훈련 기간 중 경찰이 주도하는 통합방위작전을 24시간 실시하도록 훈련지침에 반영하여 군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고 경찰의 정보력, 기동력, 과학 수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주도하는 작전 시간을 늘렸다. 1960년대에 정립된 통합방위 개념은 북한의 침투와 도발에 주안을 두고 정립되었기 때문에 제47차 중앙통합방위 회의에서 테러,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위협을 고려하여 ‘전방위

151)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시·도 협의회에서만 가능하다.

152) 법률 제5264호(1997. 1. 13.) 「통합방위법」

153)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p.51-52.

154)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54-55.

총력안보'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통합방위본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후방지역 종합훈련인 화랑훈련을 시행하여 통합방위 작전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켰다. 특히 2018년도부터 화랑훈련의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통합방위본부를 주축으로 정부통합평가단¹⁵⁵⁾을 통해 관계기관을 전담 평가함으로써 훈련 통제력을 강화하고 평가 수준을 향상하였다. 아울러 안보환경 변화와 각종 연습·훈련 중 도출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¹⁵⁶⁾

제 2 절 전면전 대비태세

우리 군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¹⁵⁷⁾에 있다. 이 같은 국방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확고한 전쟁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군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해 왔다. 국방목표에 나타난 군사력 운용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에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군의 역할과 군가 보위를 위한 군사력의 적극적인 운영개념이 포함된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에는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억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군사력 운용의 정당성을 밝힌 것이다. 셋째,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은 전시와 평시의 군사력 역할과 군사력 운용의 정당성을 명시한 것이며, 주변 전략과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을 뜻하고 있다.¹⁵⁸⁾

우리 군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통일을 무력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평시에는 전쟁 억제태세를 유지하고 전시로 전환 시에는 공세적 방위개념으로 수도권의 안전을 절대 확보하고, 호기 포착 시에는 즉각적인 반격으로 공세이전(攻勢移戰)하여 북한지역의 실지를 회복, 국토통일의 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이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비태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55)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소방청, 중요시설 소관부처 담당자 30여 명으로 구성

156)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67-69.

157)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33.;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45.

158)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353.

1. 휴전선 및 수도권 도발 대비계획

가. 38도선 방어

우리 군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준비태세는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미군으로부터 38도선 경비 임무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 우리 군은 8개 사단 중 4개 사단을 전방에, 4개 사단을 후방지역에 배치하여 38도선의 경비와 후방지역의 공비토벌 작전을 하였다. 이후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자 우리 군은 [표 7-3]과 같이 부대를 배치하여 38도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후방지역에는 중부지구에 제2사단(제5·제16·제25연대), 영남지구에 제3사단(제22·제23연대), 호남지구에 제5사단(제15·제20연대)이 배치되어 있었다.

1950년대 초 육군본부에서는 적정판단과 주변정세를 토대로 한국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해군의 해안경비계획과 공군의 대공계획, 그리고 각종 부록으로 보완되어 육군 작전명령 제38호로 1950년 3월 25일 각 부대로 하달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이에 따른 전투부대의 방어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방어계획에 따라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북한의 남침으로 대응조치에 큰 차질이 생기고 초기 전역에서 고전을 치르게 되었다.

[표 7-3] 6·25전쟁 전(1950. 6. 24.) 38도선상 국군의 부대 배치 현황

지역	부대	본부
웅진반도	육본 직할 독립 제17연대	웅진읍
개성지구	제1사단(제11·제12·제13연대)	수색
동두천지구	제7사단(제1·제9연대)	의정부
춘천, 원주지구	제6사단(제2·제7·제19연대)	원주
서울지구	수도경비사령부(제3·제8·제18연대 및 기갑연대)	서울
주문진, 강릉지구	제8사단(제10·제21연대)	강릉

※ 출처: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3집(서울: 육군본부, 1977), p.77.

작전명령 제38호에 의한 한국방어개념은 38도선을 고수하는 지역방어로서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중점을 의정부 정면에 두고, 38도선을 연하여 방어지대를 형성한다. 둘째, 방어지대는 경계진지, 주진지, 예비진지로 구분 편성하며, 만약 적이 경계·주진지를 돌파하

였을 때에는 사단 자체 역습으로 방어지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예비진지는 최후저지선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육군 예비대의 역습으로 방어지대를 회복한다. 넷째, 초기전투가 개시되면 주진지 전방의 교량 및 도로를 파괴하고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이 동안에 후방의 3개 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전방에 증원한다.¹⁵⁹⁾

위와 같이 최초의 작전계획은 지역고수를 중심으로 한 작전개념이 중심이 되었으며, 우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탓으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작전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개념적인 계획에 불과하였다. 비록 완벽하지 못한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모든 계획은 한국군 독자적인 연구 끝에 수립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¹⁶⁰⁾ 계획수립 시 미군사고문단 측에서는 38도선의 방어계획이나 적 침투 시의 후퇴작전 또는 공세이전 시의 작전계획 등에 대해서 이를 지도한 바 없었다.

나. 휴전선 방어계획 기동방어에서 고수방어로 전환

1953년 휴전이 성립되어 미군을 비롯한 참전 유엔군 부대가 점차 철수하게 되자 남한은 북한의 재침에 대비하여 전력을 재정비하고 지휘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1953년 12월 제1야전군사령부를 창설(1953. 12.)하여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중동부지역의 방어책임과 작전지휘권을 인수(1954. 3. 21.)하였고, 제2군사령부를 창설(1954. 10.)하여 후방지원, 후방지역경계 및 예비군 관리체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1955년에는 후방에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여 전시에 예비군을 동원하여 전력화하는 전시동원체제를 갖추었다.

1961년에 거점방어개념을 채택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축성 공사를 지양하고 거점 단위의 반(半)영구진지 공사를 시작하였다.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미수사건(1. 21.)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으며,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1968. 10. 30.~11. 2.)을 계기로 민·관·군 협동체제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전 휴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한편 1969년에는 특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후방지역 방어 및 대간첩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 1. 23.) 이후 한미는 연례

15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2), p.24.

16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3집(서울: 육군본부, 1977), p.77.



〈사진 7-1〉 휴전선 철책 경계군무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교체하였다.

다. 수도권 방어계획

우리 군은 1970년대 초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녹지계획(綠地計劃)’¹⁶³⁾을 수립하여 방어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속전속결을 기본 전략으로 하는 북한의 기습남침 야욕을 억제하고 적의 공격을 계획된 방어진지에서 저지, 격멸하여 수도 서울을 고수하기 위하여 수도방위권¹⁶⁴⁾ 내의 모든 방어역량을 최단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도록

161) 한미 양국은 1968년 4월 17일 하와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매년 국방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5월 27일 제1차 한미국방 각료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4차례에 국방 각료회의가 개최된 이후 한미국방연례안보회의(SCM)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162) FEBA(전투지역전단)는 엄호 및 차장부대가 작전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상 전투부대의 주력이 전개하고 있는 일련된 지역의 최첨단 한계를 말한다. 배치지역에 따라 FEBA “A”, “B”, “C”, “D”로 구분하고 있다.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서울: 청미디어, 2016), pp.673-676.

163) ‘녹지계획’은 1975년 4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 시민과 함께 서울을 사수하기 위하여 일보(一步)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수도권 방어계획의 기본지침을 지시함에 따라 수립되었다.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225.

164)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5~30km 핵심 부분으로 이는 각종 형태의 적 침공을 분쇄하여 수도 자체를 방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며 그 한계는 인천 해안선을 따라 김포-법원리-축성-양수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에 최대한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부대들의 운용개념과 지휘체계를 새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단을 증편하고, 후방에 있던 부대들을 추진 배치하여 수도권 예비 또는 후방지역 사단이 전방으로 이동 시 방어 임무를 인수하도록 운용개념을 조정하였다. 즉 평시에는 수도경비사령부가 자체병력과 경찰력으로 사태에 대처하고, 예비군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도군단이 예비군과 경찰을 통합지휘하여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었다.¹⁶⁵⁾

또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 거점 장애물 및 전술 도로공사를 하였고, 경인 지구 주요국가기관 및 산업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역과 예비군으로 고사기관총부대 및 쌍열기관총소대를 편성하여 배치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부대 간의 통신망 유지를



〈사진 7-2〉 주한 미 제7사단 고별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가록사진집)

위하여 남산, 도봉산 등에 왕거미 통신 시설 중계소를 설치하고, 주요 시설은 지하화하였다.

주한미군 제7사단이 철수함에 따라 육군 제1사단이 서부전선에 투입되어 한국군이 전 휴전선의 방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자주적인 국방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¹⁶⁶⁾ 미 제2사단이 예비사단인 미 제7사단 주둔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한미 양국 군의 병력 재배치계획에 따라 미군은 판문점을 제외한 전 휴전선에서 18년 만에 철수하여 제2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한미공동방위체제에서 한국군 단독방위체제로 전환된 휴전선은 한국군의 전술개념에 따라 기동방어에서 고수방어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철책선을 따라 각종 진지와 장애물을 구축하고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종전보다 강력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게 되었다.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에 따라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미 제1군단이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한미혼성 제1군단으로 재편되었다. 한미혼성 제1군단은 UN군 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였으며, 군단의 참모들은 한미 간에 각 1명씩 혼성편성되었다.¹⁶⁷⁾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에

리-광주-신갈-수원 북방에서 해안선을 연하는 일반선내의 서울 근교 지역을 말한다.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3집(서울: 육군본부, 1977), p.241.

165)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p.224-225.

166) 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제2집(경기 파주: 보병 제1사단, 1978), pp.217-222.

167)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발자취』(서울: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1979), pp.5-6.

따라 제3군단사령부, 기계화보병사단과 방공포사령부가 창설되고 1971년 말부터는 수도권 고수 및 현전선 결전개념에 따라 영구진지 공사와 다중장벽개념에 의한 전술 공사를 하였다.¹⁶⁸⁾ 1968년도에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철책에 이어서 동서해안에 철조망과 특수장벽이 구축되었으며 각종 수단으로 공중, 지상 및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봉쇄하기 위해 공수, 산악, 유격, 상륙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모든 훈련은 야간과 동계훈련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 전술을 숙달하고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정예화를 추구하였다. 동원 예비군의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체부대에 소집하여 사단 및 대대 단위로 전술훈련과 특기병훈련을 하였다.

1975년 8월에는 수도방위에 투입되는 부대들의 지휘 통일을 위하여 경인지역방어사령부(경인사)를 수도군단으로 편성하여 수도권 지역의 지휘체제를 확립¹⁶⁹⁾하였고, 현역사단의 추가 증편 및 훈련단을 창설하여 종심 대응전력을 증가하였다. 후방지역에서는 훈련단을 창설하여 예비군의 자원관리 교육훈련과 동원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후방지역에 있는 사단들의 무장 수준을 향상하였다. 이렇듯 미 제7사단의 철수는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전면전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수도권은 계속된 인구증가, 도시의 확대 개발에 따른 작전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북한은 단기 속전속결전과 전 국토 동시 전장화 전략에 입각한 전투력 증강은 물론, 야간 침투능력을 향상하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정부 관련부처, 서울시와 협의하여 방위시설 및 물자, 주민 통제, 민방위, 심리 홍보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방패계획(防牌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¹⁷⁰⁾ 이 계획에 의해 수도권 방위작전 개념을 재정립하였고, 수도방위부대의 임무를 조정하여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방위 전담부대로서 수도방위사령부를 창설(1983. 12.)하여 전력을 증강했으며, 수도권의 대공방어 능력을 보강하였다.

라. 응징보복계획

우리 군은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사태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북한의 각종 폭력 도발 행위가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나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방해로 목적으

16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34-136.

169)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4집(서울: 육군본부, 1984), pp.172-173.

170) ‘방패계획’은 북한의 위협변화, 수도권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1980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수도권 방어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수립되었다.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p.218.

로 더욱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연합응정보복계획인 ‘작계 5021’을 1981년 5월 ‘신작계 5021’로 보완하여 강력한 한미응징보복태세를 구축하였다.¹⁷¹⁾

또한, KAL기 폭파사건과 아웅산사태 등과 같은 폭력 도발 시에 강력한 응징보복을 위해서 기존에 수립된 ‘810계획’(한국군 단독 보복계획)¹⁷²⁾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였다. 새로운 응징보복 계획은 기존의 가정 및 개념을 재설정하고, 도발유형별 우선순위에 의한 타격방안을 사전 준비하였으며, 군단에 1개소의 종합훈련장을 확보하도록 별도의 예산을 조치하였다.

2.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수립

1953년 7월 정전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체제를 형성하여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여왔다. 이러한 억제를 통하여 유사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작전계획¹⁷³⁾으로 구체화하였다.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계획은 국가전략 수준의 최종상태와 목표로부터 도출한 전략지침과 전략지시에 따라 군사적 최종상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수단(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위협을 도발, 공격, 불안정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 즉 북한의 위협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용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를 무력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구상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위협 양상의 변화에 따라 작전계획도 수정·보완되어 왔다.

171) 신작계 5021의 수립은 1981년 4월 7일 청와대 보고 시 전두환 대통령이 “적의 중심 깊은 표적을 포함하여 심대한 타격방안을 연구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한국 합참과 한미연합사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었다.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164.

172) ‘810계획’은 1981년 10월 수립한 ‘한국군 단독보복응징계획’을 말한다. 같은 해 5월 한미연합으로 수립한 한미연합응징보복계획인 ‘작계 5021’에 이어 우리 군이 수립한 작전계획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 또는 특수부대에 의한 후방지역 공격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징보복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 군의 작전계획을 담고 있었다.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164.

173) 작전계획(OPLAN: Operation Plan)은 진술된 가정을 기초로 하여 단일 작전이나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작전을 망라한 계획을 말한다. 이는 예하 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이나 명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급 계대 사령부에서 작성하는 지시이다.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서울: 청미디어, 2016), p.604.

가.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수립의 영향 요인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작전계획은 수많은 내외부의 조건(위협) 변화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정·보완되어 왔다.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을 발전시켜왔으며 이것에 따라 군사력 건설 방향도 영향을 받아왔다. 작전계획은 일반적으로 군사 II급 비밀로 작성되어 관리되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한반도 작전계획의 변화를 유발한 일반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위협 양상의 변화이다. 6·25전쟁 이후부터 북한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해 왔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도발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협 양상이 변화할 때마다 위협을 해소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어작전 위주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이다.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는 수차례 변화해 왔다. 주한미군은 1970년대에 미 제7사단이 철수를 하였고¹⁷⁴⁾, 카터 행정부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추진, 1989년 미 의회의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¹⁷⁵⁾과 1991년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¹⁷⁶⁾ 등에 의해 계속하여 철수해 왔다. 또한, 2004년도에 미 제2사단 예하의 공격헬기 대대 등

174) 주한미군의 철수는 기존 작전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부대를 대체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게 했다. 이에 따라 창설된 한미 제1군단은 미 제2사단과 제6군단(제20·제26·제28사단, 제2기갑), 제1·제25사단, 제2해병여단을 배속한 최대의 단일 군단으로 이후 한미야전사(CFA)로 개칭하여 서부축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92년 해체되어 예하 군단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한국군 제3군사령부로 전환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192-195.

175) 넌 워너(Nunn-Warner) 수정안은 미국 상원 군사위의 민주당 샘 넌 위원장과 공화당 넌 워너 의원이 유럽 주둔 미군과 주일미군, 주한미군,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유지경비 등에 관한 4개 법안을 1990~1991년도 미국 국방예산안에 대한 하나의 일괄수정안으로 1989년 7월 31일 상원 본회의에 제출해 8월 2일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 법안이다. 이 법안 중 주한미군에 관한 사항은 (1) 한국이 자체 안보의 책임을 증대해야 하고, (2) 한국이 주한미군의 직접 비용부담을 증액해야 하며, (3)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가능성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미국 대통령은 그 결과를 1990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176) EASI(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는 1980년대 이후 유럽을 능가하는 미국의 최대 교역대상국들이 포함된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구소련에 의한 전통적 안보위협 감소, 국내 재정 압박에 따른 국방예산의 대폭삭감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태지역에서 미군 주둔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은 1단계로 7,000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2단계로 6,500명, 3단계는 2단계 완료 이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일부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차출되었으며, 종전 이후에 원복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주한 미군의 규모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며, 한국 방어의 핵심전력인 주한미군의 증감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작전계획 수립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왔다.

셋째, 한국군의 주한미군 임무 인수로 한국군의 전·평시 임무의 변화이다. 한국군은 1971년 초에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던 휴전선 방어 임무를 완전하게 인수하였다.¹⁷⁷⁾ 1994년 ‘전략지시 2호’에 따른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에게 독자적으로 한국방위를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쟁 수행 기획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노력(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전략적 전환계획)은 한국군의 전쟁 수행 기획능력을 더욱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¹⁷⁸⁾에서 주한미군 군사 임무 10대 과제¹⁷⁹⁾를 한국군에게 전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넷째,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 관계로 전환에 따른 한국의 역할 변화이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의 성격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성격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핵심축(Linchpin)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연이은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안정정책구상 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반기 및 분기 회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⁸⁰⁾ 2014년 이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한 공동대처,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략동맹 2015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방위지침¹⁸¹⁾ 등을 마련하는 등 한미 공동방위에 대한 양측의 역할과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군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면서 미군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증가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77) 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제2집(경기 파주: 보병 제1사단), pp.217-222.

178)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3. 11. 17.)

179) 군사 임무 10대 과제는 ①JSA 경비 임무, ②후방지역 화생방 제독, ③대화력전 수행본부, ④신속 지상 지뢰 검색, ⑤공지사격장 관리, ⑥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⑦주야 탐색구조, ⑧근접항공지원, ⑨헌병 전장 순환통제, ⑩기상예보 등이었다.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87.

180)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4. 10. 23.),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SAWG: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181)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4. 10. 2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5. 11. 2.);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7. 10. 26.);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8. 10. 3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 10. 31.)

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엔군의 작전계획¹⁸²⁾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서울을 즉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군사력은 장사정포를 포함하여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서울까지 도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장사정포의 수를 1990년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시켰으며, 북한은 12,000문의 자주포와 견인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지변환 없이 시간당 50만 발을 연합군 진지를 향해서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의 단기간 속전속결 전략은 전쟁의 초기 단계에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서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점령하기 위한 기습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상군 전력은 100만 명 이상으로 170개의 보병, 포병, 전차, 기계화 및 특수작전부대의 여단과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약 60개의 사단과 여단이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핵심전력의 절반 이상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즉 현역의 70%인 70만 명의 병력과 8,000문의 포병전력, 2,000대의 전차가 휴전선 근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 전력들은 대부분 지하강도에 있으며 최소한의 진지변환만으로도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군은 부대 재편성이나 진지변환 없이 언제라도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해상전력 430척의 수상함과 잠수함 90여 척 중 60%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 놓고 있다. 아울러 790대의 전투기 중에서 전선에 전진 배치한 40%의 북한 공군 전투기들은 남한 어느 곳이든 단시간에 기습공격 할 수 있다.

한국은 휴전선 이남에 일련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어선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한국군은 이러한 방어선에서 북한의 공격에 저항하고 최소의 부대가 방어선을 지탱하다가 증원부대나 역습부대들이 재탈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전력을 완전하게 동원하거나 미국의 증원전력이 한국에 증원되기 이전에 한국을 공격하여 방어선을 붕괴시키고 전쟁 개시 30일 이내에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개의 전선(2 Fronts)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제1전선은 재래식 전력을 통하여 휴전선에서 방어 중인 한국군을 돌파하고 연합군 전력을 격파하여 신속하게 한반도 남부로 진출하는 것이다. 제2전선은 특수작전부대(SOF: Special Operation Forces)를 활용하여 연합군 후방지역에서 기습과 파괴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182) <https://www.globalsecurity.org>의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대략 한국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64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서울 북방의 지형은 기동을 제한하는 논들이 산재해 있고, 서울의 서부지역에는 적이 공격해 들어 오기 쉬운 평지가 발달해 있다. 북한은 철원이나 문산 축선으로 공격을 가해올 것이며 임진강이나 한강을 도하해야 할 것이다. 동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서부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방어력이 약하게 구축되어 있다.

유엔군의 작전계획은 북한이 서울의 인근 지역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반격작전을 가하여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중요한 문제점은 북한이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확실한 전략정보에 관한 것으로 북한의 공격징후에 대한 경고 시간은 과거 10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에 이를 탐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한미의 방어계획은 북한에 대한 이러한 위협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지형은 기계화부대나 항공 폭격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북한은 과거 6·25전쟁에서 협소한 회랑에서도 대규모 기갑부대를 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미의 방어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제1단계에서 한미연합군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치열한 전방방어를 수행하고, 제2단계에서는 핵심지형을 확보하고 북한군의 추가적인 손실을 강요하며,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3단계에서는 미 지상군의 전개가 완료되고 한국군이 재보급이 될 때 북한군을 괴멸하는 반격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는 미 육군과 해병대가 북한지역에 상륙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한반도 작전계획

작전계획은 적대적 환경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완전한 계획 또는 개념계획 중 하나의 형식으로 준비되며 계획수립 및 승인의 일반적 기준은 적합성(adequacy), 실행 가능성(fea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구분성(difference), 그리고 완전성(perfectness)이다. 적합성은 국가 전략적 최종상태와 목표 충족 여부를,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은 과도한 손실 없이 가용자원으로 목표달성 가능성과 국내·국제법적 부합 여부를, 구분성은 다른 계획과 목표달성 방법, 부대운용 등에서 차별성을 말하고, 완전성은 계획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를 말한다.¹⁸³⁾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위

183)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5-0 『합동기획』(서울: 합동참모본부, 2018), pp.35-39.

의 5가지 기준에 맞추어 수립되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은 북한의 위협변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그리고 한국의 대응양상 변화에 따라 유형별로 변화되어왔다.

1953년 6·25전쟁이 정전된 이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6·25전쟁 초기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에 이양하였기 때문에 정전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에 의하여 한국에 대한 방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의 남침에 대비한 전면전 대비계획은 미8군 작전계획에 의존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은 미8군 작계 60-58 『한국방어계획』, 미8군 작계 62-57 『후방지역 경계계획』, 미8군 작계 20-58 『폭동 진압작전 계획』을 기초로 하여 한국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군은 6·25전쟁 이후 양적인 측면에서 전력증강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계획 수립 등에서는 아직 독자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계획 수립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970년대 초기부터였다.¹⁸⁴⁾ 즉 1953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근 20여 년 동안 한국군은 독자적인 전면전 대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유엔군사령부의 한국 방어계획에 따라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지원자, 조력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은 북한 도발 상황에 따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의미하며, 작전계획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한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과 평시 국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지 도발 대비계획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전면전에 대비한 계획은 북한 핵기지 정밀 공습계획인 작계 5026, 전면전 작전계획인 작계 5027, 북한 우발사태 시 개념계획인 작계 5028,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쟁 예비단계에서 북한 후방지역을 동요시키는 계획인 작계 5030 등 5가지 종류가 있다.¹⁸⁵⁾ 한미 양국은 이 작전계획에 세부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을 담고 있다.

유엔군에 의한 한반도 방어계획은 ‘OPLAN 5027’¹⁸⁶⁾(작전계획 5027, Operation Plan 5017)로 대표된다. 다음 [표 7-4]에서 보듯이 50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 책임 지역에서 적용하는 작전계획으로 미국이 주도되어 수행하는 작전계획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하에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27은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을 가정한 계획이다.¹⁸⁷⁾

184) 조영길, 『자주국방의 길』(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9), p.8.

185) 정희상, “‘욱’해서 전쟁하면 남북한 ‘혹’ 간다,” 『시사 IN』 제169호(2010. 12. 13.).

186) OPLAN: Operation Plan(작전계획)

187) 전현석, “작전계획 번호에 담긴 뜻은” 『조선일보』(2015. 10. 8.), A3면.

[표 7-4] 작전계획의 의미

OPLAN 5027-04 수정 2호	
① 작계	: 작전계획의 줄임말로 부록, 별지를 갖추고 즉각 시행이 가능한 완전한 계획
② 50	: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고유번호 ¹⁸⁸⁾
③ 27	: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을 가정하여 대비한 계획
④ 04	: 작전계획의 승인 및 발간 연도
⑤ 수정 2호	: 작전계획의 수정 횟수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시 작전계획은 미국 측 주도하에 한미연합군사력을 운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평시 작전권을 가진 한국군은 순수 한국군 위주의 평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해 왔다. 정전 이후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발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유사시 반격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수립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OPLAN 5027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OPLAN 5027(CINCPAC¹⁸⁹⁾/CFC OPLAN 5027)의 성격 및 변천 OPLAN 5027은 북한의 100만 명 이상의 병력에 의한 단기 전격적 기습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사의 고강도 전쟁계획이다. 종전 후 지금까지 지속 발전되어온 작전계획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⁹⁰⁾

첫째, 정전 개념 하에서의 전면전 방어계획이다. 냉전 시대 미국의 작전계획은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관점에서 전쟁목적을 설정하였으며, 이 중 한반도 작전계획은 별칭(code name)에서 보여주듯이 경계병(vigilant)으로서 전면전 방어계획이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중의 공세가 아닌 방어로 국한되었다.

둘째, 유엔군과 주한미군이 주도하여 수립한 작전계획이다. 6·25전쟁 중 1950년 7월 14일 지휘권 단일화를 위해 UN군에 작전지휘권이 이양된 이래 작전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한국군의 입장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 1965년 연합참모계획단, 1978년 연합사 창설 등은 한국군의 계획수립과 작전 시행의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수십 년 동안 미군 주도로 작전계획의 수립 시 지원자, 조력자 역할로 인하여 전

188) 미국은 전 세계를 유럽과 중동, 태평양 등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작전사령부마다 고유의 작전번호를 부여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USPACOM)은 5000번대, 미 중부사령부(USCENTCOM)은 1000번대, 미 북부사령부(USNORTHCOM)은 2000번,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은 8000번대를 사용한다.

189) CINCPAC: Commander In Charge PACOM(태평양지역 사령관)

190) 박상선, 「합동/연합작전계획 변천」(논산: 합동참모대학교, 2018)(학습교재)

쟁 기획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충분하지 않다.

셋째, 전쟁 억제에서 출발한 수세적 방어로부터 공세, 자위권적 공세개념으로 작전개념이 진화하였다. 평시 경계작전과 침공 대비 FEBA(전투지역전단)상 중심방어는 지상군 중심 방어로부터 해·공군 전력 통합방어 개념으로, 공세적 방어로부터 자위권적 대응으로, 대칭 위협대응으로부터 비대칭 위협대응으로 발전되어 왔다. 각 시기별 OPLAN 50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¹⁾

[표 7-5] OPLAN 5027의 변천

구분	주요 내용
OPLAN-74	• 기존 수세전략에서 공세전략으로 전환 • 포병, 전차부대들이 군사통제지역(MCZ)의 전방지역으로 전진배치 • B-52폭격기로 북한 전지역 24시간 폭격
OPLAN-94	• 냉전종식, 걸프전쟁 등 전쟁수행 환경과 개념 변화 반영 • FEBA “B”에서 북한군 공격 둔화시킨 이후 반격작전 전개
OPLAN-96	•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활용 계획 반영 • 1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장사정포 개량 후 휴전선 인근 배치 완료 상황 반영
OPLAN-98	• 기존의 공격받은 이후 반격작전에서 보다 공격적인 작전계획으로 변화 • 북한의 불시 화생방 공격 대응계획 반영 • 북한 공격징후 포착 시 선제공격 • 북한 정권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기동과 상륙작전 계획 포함
OPLAN-00	• 미국의 WIN-WIN전략 반영 •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정밀공격개념 반영 : In-Place전력(현재 한반도 배치전력), Pre-Planned전력(상황 발생 시 시차별전개 전력), On-Call전력(요청 시 추가 전개 전력)으로 구성
OPLAN-02	• 미국에 대한 9·11테러 공격 영향 반영 • 북한 정권 제거 계획 포함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위한 작전개념 반영 • RDO(신속결정작전)과 EBO(효과중심작전) 군사교리 반영

191) <https://www.globalsecurity.org>, <http://www.dod.gov>, <http://www.defenselink.gov>, <http://www.pacom.mil>,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백서』 1967~2018; 박상선, 『합동/연합작전계획 변천』(논산: 합동참모대학교, 2018)(학습교재); 이규홍,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변화와 그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하진규, “미국의 군사전략,” 『월간 말』 통권 230호(2005. 8.), pp.66-71.; 서동만·정해구, “작전계획 ‘5027-98’ 관련기사 및 페리보고서,” 『통일시론』 통권 5호(2000. 2.), pp.184-203 등을 참고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OPLAN-04	• 이라크전쟁 교훈 중 합동성과 정보기술(ISR) 반영 • 작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 평시의 여건 조성작전과 군사작전 이후 안정화작전 강조 • 포병 전력을 항공전력으로 대체하여 지상군 증원 전까지 대응력 강화 •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보완 • 강제진입작전(FEO), 합동화력지역(JFA) 개념 등장

라.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변천의 특징

대한민국의 해방과 6·25전쟁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에 따라 한반도 전략과 정책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변화시켜 왔다. 작전계획(OPLAN)의 변천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²⁾



〈사진 7-3〉 전시 미 증원전력

※ 출처: 『국방일보』(2020. 5. 18.)

첫째, 미국의 전략개념은 수세 방어전략에서 점차 공세전략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위협이 위기로 변화되고 남침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한반도 강점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세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저강도 계획의 발전과 하이 로 믹스(High-Low Mix) 성격이 강해졌다. 저강도 계획의 등장과 함께 초정밀 공습 및 공격계획을 위한 고강도 계획은 정밀성과 치명성을 더하였으며, 고·저강도의 조화를 이루는 추세로 발전되고 있다.

셋째,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전략적 최종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수단과 방법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군사적 수단 이외 총력전 개념의 DIME(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Economy: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가 통합을 이루고 있다.

넷째,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개념이 발전되었다. 전략적 억제수단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은 대응범주와 목표, 임무 영역을

192) 박상선, 『합동/연합작전계획 변천』(논산: 합동참모대학교, 2018)(학습교재)

자국의 억제전략으로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위협감소를 위해서 주변국들과 안보협력 및 동맹국 활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3.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5일 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하여 미국이 대한민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8월 8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임시조인한 이후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1954년 1월 15일 한국 국회에서 인준되어 7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 상호비준서를 워싱턴 D.C에서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 이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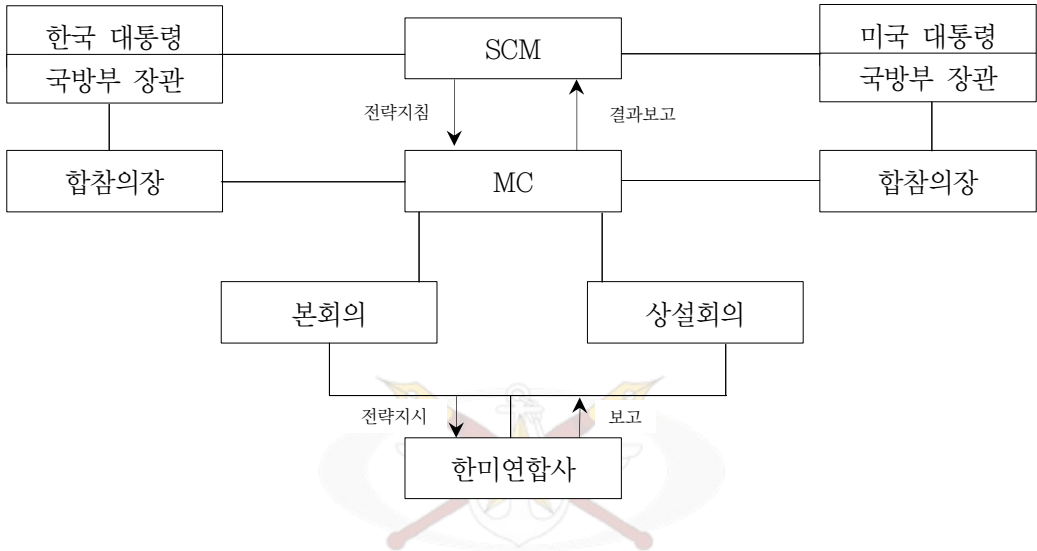
나. 한미안보협의 체제 구축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¹⁹³⁾를 통해 한미안보협력체제를 다져왔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의 창설을 계기로 작전통제권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주관인 UN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되면서 한미 간의 각종 연합훈련을 통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였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 동북아 및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와 공동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및 전달,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용방안 등을 협의하는

193)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 간에 각종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협의기구이다. 이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1월 23일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 한미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제4차 회의(1971) 때부터 양국 외교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안보협의체로 격상되었고, 명칭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되었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기구(NA: National Authority)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에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표 7-6] 한미군사위원회의 지휘 관계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122.

한미군사위원회는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여 설치된 군사기구이다.¹⁹⁴⁾ 한미군사위원회는 한반도 방위문제를 관장하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치 및 군사지휘기구의 실무적인 최고 군령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위원회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군사위협 분석과 군사대비책을 협의하고, 연합전투력 발전실태와 연합군사전략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지시와 작전지침¹⁹⁵⁾을 제공하는 한편, 회의결과를 한

194) 한미군사위원회(MC)는 19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1978년 7월 27일 제11차 SCM에서 MC 설치를 승인하였다. MC는 한국방위를 위하여 상호 발전시킨 작전 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기구로서, 한반도 방위문제를 관장하는 한미 국가통치 및 군사지휘기구의 실무적인 최고 군령기구로 발전하였다.

195) 전략지시(Strategic Directives)는 합참의 군령권 보좌 및 국가 전쟁 지도 주요 기능 수행을 위해 전략 상황 평가 및 판단결과 도출된 전략적인 지침을 지시화한 것으로서, 합참의 국가통치 및 군사지휘기구 승인하에 연합사에 전략지시를 하달한다. 작전지침(Operational Guidance)은 작전의 임무

미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하고 전략지침을 받는다.

초기에 개최된 본회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근거가 된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달하였고,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전력증강 및 작전계획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연합방위 전력증강을 위한 한미 간의 공동노력과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등 정책 차원의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는 한미 간의 안보협의 체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신설하고 합의하여 출범하였다. KIDD는 효율적인 협의와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3개의 위원회¹⁹⁶⁾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구축을 위하여 한미 양국은 각종 한미연합훈련을 해왔다.¹⁹⁷⁾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기술 및 전술습득 등을 위한 단위부대별 소규모 연합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발전

한미 제1군단과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 한미 제1군단(I Corps(ROK/US) Group)은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 제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한반도 억제전력의 보강 차원에서 창설(1971. 7. 1.)되었다. 한미 제1군단은 미 8군사령부의 지휘하에, 미 제2사단을 지휘하고, 국군 제6군단(제20·제26·제28사단, 제2기갑여단), 제1·제25사단, 제2해병여단을 작전 통제하였다.¹⁹⁸⁾ 1973년 3월 국군 제1군단사령부가 가평에서 벽제로 이동하자 국군 제1군단과 예하의 제1·제9·제25사단을 작전 통제하게 되었다. 제3군사령부가 창설(1973. 7.)되면서 중서부 전선에 대한 방어책임이 조정되고, 지휘 관계도 재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제1군단의 작전 통제범위가 너무 커지자, 한미 제1군단을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 ROK/US Combined Field Army)로 개편(1980. 3. 14.)하였다.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는 한국의 서부지역 일부를 방어하는 임무를 전담하다가 주한미군이 재조정되면서 1992년 7월

수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지시 및 협조 사항의 기준 또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본방침이다. 군사용어 대사전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서울: 청 미디어, 2016), p.606, 639.

196)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 전환공동실무단(COTW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97)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제8장 교육 훈련 분야 참조.

198)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발자취』(서울: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1979), pp.5-6.

1일부로 해체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CFC)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한미연합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창설(1978. 11. 7.)되었다. 당시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문제가 공론화되자 유엔사와 별도로 한국방위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창설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반영되었다.

한미 양국은 [표 7-7]과 같이 19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 창설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1년 동안 수차례 협의 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의 임무·기능·조직에 대한 관련 약정과 전략지시 제1호에 서명하였다.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양국의 통합된 군사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실패 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 합참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지속해서 감시 및 평가하고 전시 대비계획의 발전과 한미 연합전력의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표 7-7]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1호

구분	관련 약정(TOR)	전략지시 제1호
체결 일시	1978. 7. 27.(제11차 SCM) * MCM에 전략지침 및 지시 하달	1978. 7. 28.(제1차 MCM) * CFC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 하달
대표	• 한국: 노재현 국방장관 • 미국: 브라운 국방장관	• 한국: 김종환 합참의장 • 미국: 존스 합참의장
주요 내용	• MCM의 임무·기능·편성 • 연합사의 임무·기능·편성 및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기능 • 유엔사와 연합사와의 관계 정립 - 유엔사: 정전협정 준수 - 연합사: 한국 방어 - 관계: 지원 및 협조	• 연합군사령관에게 임무 부여 (한국 방어책임, 서울 방어 중요성) • 전·평시 연합사와 예하 구성군 간의 지휘관계 명시 • 전·평시 연합사 작전 통제부대 목록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598.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과 동시에 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전환되었고,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지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미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의 전략지침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정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지시를 직속 상부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MC)를 통해 하달하고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표 7-8]과 같이 1994년 10월 6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전략지시 제2호’를 하달하였고, 10월 7일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 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부로 국군에 대한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되었다.

[표 7-8]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2호

구분	관련 약정(TOR)	전략지시 제2호
체결 일시	1994. 10. 7.(제26차 SCM)	1994. 10. 6.(제16차 MCM)
대표	• 한국: 이병태 국방장관 • 미국: 페리 국방장관	• 한국: 이양호 합참의장 • 미국: 샬리 캐시빌리 합참의장
주요 내용	• 기존 권한위임사항 내용 추가 보완 - 연합사령관: 정전 시 연합권한 위임 사항 행사 • 연합사 지휘관계 재정립(전·평시 구분)	• 한국군 작전통제 - 정전 시: 한국 합참의장 - 전시: 한미연합사령관 • 전시 작전통제 전환 시기 - DEFCON-III시 연합사령관 작전통제 - DEFCON-III 이전에도 요청 및 승인 하 작전통제 전환 가능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 p.126.

한미연합사단 한미는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의 2개국 혼성 사단인 한미연합사단을 2015년 6월 3일 공식 출범시켰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에는 한미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용되다가, 전시에는 미 제2사단 예하 부대와 한국군 기계화 보병여단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사단은 평시에는 연합연습, 교리발전을 통해 전시 임무 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작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

게 된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¹⁹⁹⁾

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²⁰⁰⁾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이래 6·25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 양국은 유엔군의 한국방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군을 계속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²⁰¹⁾ 아래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는 1987년 8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한편,



〈사진 7-4〉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교환 각서 서명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1998)

미국 내에서도 「넌-워너 수정안」과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따라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양국은 이에 관한 연구 및 협의를 본격화하였다.

1991년 11월에 열린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 회회의(MCM: Military Council Meeting)에서 양국 간 평시 작전통제권을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996년 이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말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되었으며,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과 연합권한위임사항(CODA)²⁰²⁾을 행사하게 되었다.

199)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108.

200) 작전지휘권(OPCOM: Operational Command)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예하 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201)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202) 연합권한 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은 전시 작전 통제되는 한국군 부대에 대하여 평시부터 행사하도록 위임한 권한으로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연습, 연합 3군 합동 교리발전, 한미연합정보 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개 분야이다.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는 2005년 10월에 열린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는데 합의²⁰³⁾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 이후 2006년 9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로의 로드맵(roadmap)」에 합의하였다.²⁰⁴⁾ 합의 내용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2007년 1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MC)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²⁰⁵⁾을 체결하였고, 2007년 2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이행실무단(CIWG: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작성하였고, 2007년 6월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이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연속적인 군사도발로 안보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정상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 합의에 따라 2010년 7월 21일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서 「전략동맹 2015: SA 2015-Strategic Alliance 2015」²⁰⁶⁾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0. 10. 8.)에서 서명²⁰⁷⁾하였다. 이 문서는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문서인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동맹 현안의 발전계획을

국방부, 2008), p.68.

203)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5. 10. 21.)

204)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6. 10. 20.)

205) 2007년 1월 19일, 한미 양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지휘 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목적, 원칙, 주제,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약정

206) 전략동맹 2015(SA 2015: Strategic Alliance 2015)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까지 군사적 조치사항과 동맹 현안의 발전계획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한미연합 전략문서로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문서인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207)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0. 10. 8.)

포괄한 포괄적 성격의 한미연합 전략문서였다. 이 문서는 위상과 이행체계 측면에서 볼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합참 차원을 넘어 국방부와 외교부를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였다.

[표 7-9] 전략적 전환계획과 전략동맹 2015의 차이점

구분	이행 감독체계
전략적 전환계획 (STP)	- 전작권 업무에 국한하여 상설 MC에서 결심 및 승인을 하는 체계 * 공동이행 분야(20개) 주무부서 → 고위대표급(3성급) → 상설 MC
전략동맹 2015	동맹 현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를 2성급 분과위원회(3개)~3성급 조정위원회~차관보급 공동실무단과 상설 MC까지 협의하고 이를 MCM·SCM에서 최종 결심하는 체계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일 합참 전략본부에 설치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단을 2012년 1월 1일부로 합참의장 직속으로 변경하였고, 2012년 3월 21일부로 상부 지휘구조개편 추진단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단을 통합하여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을 설치하였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WMD 위협이 현실화하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하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에 앞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을 실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에 합의²⁰⁸⁾하였고,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승인²⁰⁹⁾하였다.

한미 양국 정상은 2017년 6월 기존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가속할 수 있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발전, 미래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가속화

208)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4. 10. 23.)
 209) 기존의 전작권 전환 기준문서인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문서로 전작권 전환 전까지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군사적 준비 방향과 일정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한미연합 이행계획임(COI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5. 11. 2.)

[표 7-1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일지

일 자	내 용
1950. 7. 14.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 11. 17.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용어 대체
1961. 5. 26.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 4. 17.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 11. 7.	작전통제권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전환
1994. 12. 1.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 9. 16.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한국에 이양 합의
2007. 2. 23.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로 합의
2007. 12. 1.	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단 설치
2010. 6. 26.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1차 연기)
2010. 10. 8.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전략동맹 2015 합의
2012. 3. 21.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 설치
2013. 5. 28.	한국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식제의
2013. 7. 16.	미국,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사실 확인
2013. 10. 2.	제45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과 시기 실무협의 합의
2013. 12. 12.	한미 전작권 전환 실무회의 개최 시기 연장 논의
2014. 4. 25.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재검토' 결정 발표
2014. 5. 31.	한미 국방장관, 제46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결정하기로 합의
2014. 8. 6.	제2차 한미 고위급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
2014. 9. 12.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서 전작권 전환 시기 논의
2014. 10. 23.	제46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2차 연기) 합의
2015. 11. 2.	제47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승인
2017. 6. 30.	한미 정상, 작전권 전환 가속화 협력 지속 협의
2018. 10. 31.	제50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포함 국방 현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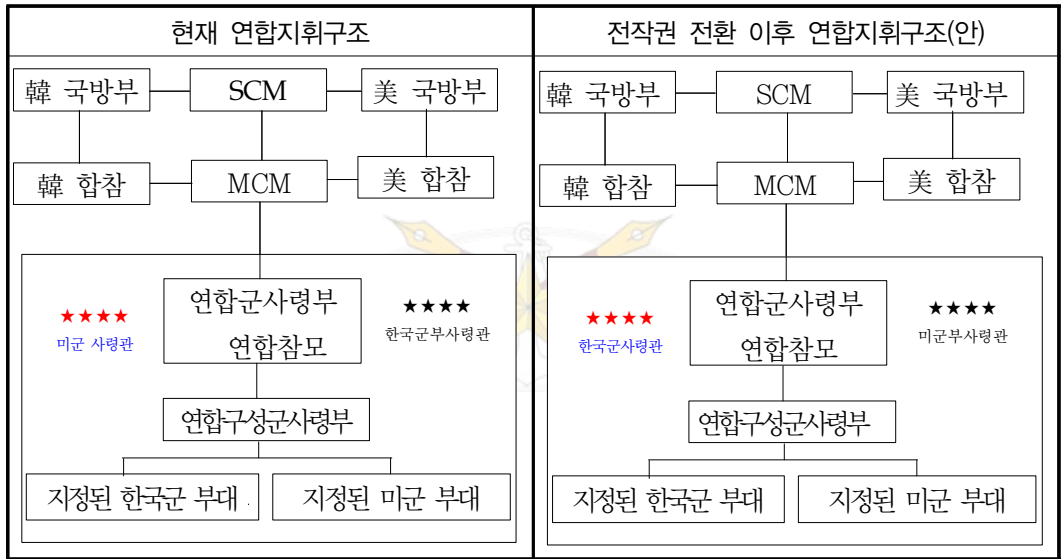
※ 출처: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88-90;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pp.67-70;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p.64-69;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69-75;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114-119;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132-133;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132-134; 합참전작권전환추진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사』(서울: 합동참모본부, 2011), pp.12-18.

등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을 조기에 충족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2018년 10월 개최된 제50차 한

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자세히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²¹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령부는 현재의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에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계로 변경될 예정이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지휘구조(안)는 아래 [표 7-11]과 같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새로운 편성안을 적용하여 연합연습을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에 최종 편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 7-11]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13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핵심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확정 이후 우리 군은 포괄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소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미는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 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를 바탕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 조정위원회 등 연합 이행 감독체

210)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8. 10. 31.)

계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어야 하므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쟁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의의는 다음과 같다.²¹¹⁾ 첫째,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안보 질서를 구축하고, 한미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미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동맹 관계를 재조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이 전투 임무 위주의 강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 전구 작전수행을 위한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미군 전력을 포함한 육·해·공군의 작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제 3 절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침투 및 도발 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해 오고 있다. 6·25전쟁 이전을 제외하고라도 휴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02회의 침투, 1,117회의 국지 도발 등 총 3,119회의 대남침투 및 도발을 자행하였다.²¹²⁾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국지도발대비작전』 교범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도발로 구분하고, 군사적 도발의 유형을 첩보 수집과 사회 혼란 조성 등을 목적으

211)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71-72.

212)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의한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3,119	398	1,336	403	227	250	505
침투	2,002	379	1,009	310	167	94	43
국지 도발	1,117	19	327	93	60	156	462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267.

로 하는 ‘침투’와 정치·경제·군사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도발’로 구분하고 있다. ‘침투’는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우리 영역에 침범한 상태로 때에 따라서는 국지도발의 선행단계로 이루어지며 지상·해상·공중침투로 구분한다. 반면에 ‘도발’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으로 우리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²¹³⁾ 비군사적 도발의 유형은 북한 주민의 의도적인 대량 탈북과 귀순자 발생, 선박과 항공기, 댐과 같은 기반시설, 사이버 공격, 파업·폭동·군사력 이외의 테러행위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국지도발’이란 적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영역의 한정된 지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로 ‘국지전 도발’과 같은 의미이다.²¹⁴⁾ ‘국지도발대비작전’은 적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영역을 침투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에 대비하여 수행하는 작전으로 지상·해상·공중 국지도발대비작전,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도발대비작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상 국지도발대비작전은 다시 점적지역도발대비작전, 화력도발대비작전, 기타도발대비작전으로 구분²¹⁵⁾하고 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던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하여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①1945년~1960년, ②1961년~1970년, ③1971년~1980년, ④1981년~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북한의 대남침투 도발 사례들을 살펴본 다음에 1980년대 이후 주요 국지도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침투 및 도발을 지속하여 왔으며 그 수단과 방법은 점차 다양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1. 대침투작전 수행

가. 1945년~1960년의 대침투작전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38도선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38도선 경비태세를 시험하거나 남한 사회의 혼란을 획책하는 등 침투 및 도발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직접 유격대를 남파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붕괴시키거나 북한의 무력침공 때 후방에서 대한민

213) 육군본부, 야전교범 0-3 『국지도발대비작전』(계룡: 육군본부, 2012), p.4.

214) 육군본부, 야전교범 1-1 『군사용어』(계룡: 육군본부, 2017), p.27.

215) 육군본부, 야전교범 0-3 『국지도발대비작전』(계룡: 육군본부, 2012), p.12.

국을 전복하기 위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6·25전쟁 기간에도 후방지역에서 수많은 양민 학살과 민심을 어지럽히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국군과 유엔군을 기습 공격하여 큰 피해를 줬다. 전쟁 이후에는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혼란 조성 및 정찰 활동, 동조자 포섭 및 지하당 구축을 계속 시도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동·서해의 어선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납북행위를 시작하였다.²¹⁶⁾

6·25전쟁 이전 대남침투 및 도발 미군이 1948년 말 38도선 경비를 한국 측에 이양하자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남북한 간의 충돌사건은 서서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38도선에서 완전히 철수한 이후인 1949년 1월에 접어들면서 38도선에서의 충돌은 매우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38도선 침범 및 도발은 6·25전쟁 이전까지 총 873회에 달하였다.²¹⁷⁾

북한은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게 할 목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특별히 훈련한 정예 유격대원들을 1948년 11월 1차 침투를 시작한 이래 1950년 3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침투시켰다.²¹⁸⁾ 대부분 공비는 우리 군과 경찰의 소탕 작전에 격멸되고 그중 지리산의 제2병단 일부만이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개시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후방에서의 무장봉기나 제2전선은 형성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인민유격대 소탕을 위해 국군 4개 사단(제2·제3·제5·제8사단)과 전투경찰대부분을 후방지역에 분산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은 남한의 38도선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 조성 등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탕 작전에 투입된 부대들이 계획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었다.²¹⁹⁾

6·25전쟁 중 대남침투 및 도발 6·25전쟁 이전 남한 사회는 침투한 남조선노동당 세력에 의하여 극도로 불안정하였다. 제주도를 비롯한 호남과 지리산 지역, 영남과 태백산 지역, 강원도 및 오대산지구 등에서 남로당 세력들이 주도한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²²⁰⁾ 그러나 북한의 유격대는 우리 군과 경찰의 격멸작전으로 궤멸하여 6·25전쟁 개전 때 이들

216) 국군보안사령부, 『대공 30년사』(서울: 국군보안사령부, 1978), pp.100-113, 192-199.

217) 육군정보국, 『괴뢰군 연혁』(서울: 육군본부, 1958), p.47.

218) 육군본부, 『공비연혁』(서울: 육군본부, 1971), pp.227-230.

2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146.

220) 대표적인 것으로 제주 4·3사건, 여순 10·19사건, 국군 제6연대의 대구폭동사건 등이 있다. 국군보안사령부, 『대공 30년사』(서울: 국군보안사령부, 1978), pp.39-57.

에 의한 후방교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제1경비여단과 제5사단 제10연대로 지상공격을 실시하면서 총참모부의 직접지휘를 받는 유격부대를 동해상으로 우회 침투시켜 강릉지역의 정동진과 삼척지역의 임원진으로 상륙시켰다. 즉 해군 소속의 제945육전대를 정동진, 제766부대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중심 깊은 침투를 감행하면서 후방교란을 도모하였다.²²¹⁾

1950년 9월 하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전면적인 후퇴 시 퇴로가 차단되자 남한 점령지역에 있던 각 지방당 조직(도당, 군당 등)이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기 시작하자 군·경은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은 제3군단을 창설(1950. 10.)하여 12월까지 작전하였고, 제5사단이 영남지구, 제9사단은 대둔산 및 경북지구, 제11사단은 호남 및 지리산지구에서 공비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²²²⁾ 국군은 제2전선 형성을 기도하던 게릴라들을 소탕하여, 적의 기도를 분쇄하고 후방지역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유엔군이 전선 지역에서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²²³⁾

한편 전선이 고착기에 접어들었던 1951년 8월 남한 유격대의 총책임 이현상은 지휘체계의 단일화를 이룬 이후 수시로 집단병력으로 소도시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촌락을 일정기간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양민을 납치해갔다. 또한, 전라선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열차를 습격하여 무기와 보급품을 약탈하는 등의 행위로 민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²²⁴⁾ 유엔군은 후방지역 안정을 위해 1951년 12월부터 군단급 규모인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창설하여 집중적으로 호남 및 지리산지구 게릴라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1952년 봄에는 게릴라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감소하여 이후의 작전은 각 지역에 설치된 경비사령부와 경비대대 및 경찰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1952년 후반과 1953년 휴전 이전의 게릴라소탕작전은 이미 대다수 게릴라가 섬멸되고 잔여 공비들은 활동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대규모 소탕 작전보다는 책임 지역 단위로 실시되었다.²²⁵⁾

유엔군의 반격작전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국군의 게릴라소탕 작전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반격작전기와 전선고착기에 우리 군은 후방지역에서 북한군 패잔병을 비롯한 많은 수의 게릴라를 소탕하고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을 지원하였다. 무엇보다 김일성 지시로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며 제2전선 형성을 기도하던 적의 기도를 분쇄하고 후방지역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유엔군이 전선 지역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

221) 육군본부, 『공비연혁』(서울: 육군본부, 1971), pp.265-269.

2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p.151-152.

2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p.176-183.

2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p.183-186.

2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p.183-218.

게 하였다.²²⁶⁾ 게릴라를 모두 소탕하기는 하였으나 북한은 아군의 1개 군단 규모를 전선이 아닌 후방지역 게릴라소탕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제2전선 형성이라는 전략적인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였다. 또한, 초기 게릴라소탕 과정에서 한때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지방당 조직에 가담했거나 협력했던 주민에 대한 군·경의 강력한 색출과 가혹한 징벌 및 작전경험과 작전계획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많은 주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²²⁷⁾

6·25전쟁 이후 대남침투 및 도발 휴전 이후 호남 및 지리산지구에 약 800여 명의 게릴라가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박전투사령부’를 창설하여 1953년 12월부터 이듬해 1954년 5월까지 공비 607명을 소탕하였다. 이후에는 게릴라 위협이 많이 감소하여 ‘남부지구사령부’가 호남지역 게릴라소탕 작전에 대한 임무를 인수하였으나 사실상 남부군을 비롯한 북한 유격대의 활동은 종결되었고, 대부분의 잔존 게릴라들은 ‘망실공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군부대나 전투경찰의 소탕 대상이 아니라 정보 경찰의 수배대상으로 전락하였다.²²⁸⁾

휴전 이후 북한은 1954년부터 일부 간첩을 남파시켜 정세탐지와 전방지역의 군사정찰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6년에 남한의 후방지역에서 6·25전쟁 중에 활동하던 유격대와 지방 게릴라들로 구성된 무장 게릴라의 남은 세력도 대부분 소멸하자, 1957년 여름에 대남공작 기구를 일제 정비하여 무장간첩을 남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남파되는 무장간첩들은 전방 지역에서는 동조자 포섭과 지하당 구축 및 사회 혼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군과 경찰은 이후 1956년까지 전쟁 중에 활동하던 게릴라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새롭게 남파되는 무장간첩의 침투를 저지하고 색출 및 격멸하는 대침투작전(일명 ‘무장간첩봉쇄 작전’)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활동하던 게릴라들이 완전소멸된 1957년 이후에도 무장간첩 침투를 봉쇄하고 색출하여 검거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휴전 이후부터 1960년까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비교적 적었는데, 북한이 전후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인 도발을 할 여력이 부족했고, 박헌영 등 남로당계의 숙청으로 남한 지하당 조직이 완전히 붕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군·경은 군

2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256.

227) 백선엽, 『실록 지리산』(서울: 고려원, 1992), pp.76-7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참조.

2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p. 257-262.

사분계선 지역과 해상 및 해안지역에서 침투하는 무장간첩을 어떻게 봉쇄하고 격멸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개념 설정과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나. 1961년~1970년의 대침투작전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1961년 남한에서 5·16군사정변에 의해 강력한 반공 정권이 등장하자 같은 해 7월에 소련 및 중국과 군사조약을 체결하였다. 1966년 김일성 교시를 통해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베트남전의 영향을 받아 제124군부대 등 비정규전부대를 증강해 대남 침투 및 도발 능력을 크게 강화하였다.²²⁹⁾ 북한은 1966년부터 다수의 무장공비를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서 남파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 1월 19일에는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인 ‘당포함’을 피격하였다.²³⁰⁾ 여름에는 100여 명의 무장공비를 제2군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시켜 사회 혼란을 획책하였다.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 혼란은 1968년에 극에 달했는데 1일 5~7회까지도 비무장지대에서 침투·습격 및 총격 도발을 자행하였고, 1월 21일에는 무장공비 31명의 청와대 기습²³¹⁾, 1월 23일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USS Pueblo)호 납치,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집단침투시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침투는 우리 군에게 체계적인 대침투작전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침투 및 도발 북한은 광복 이후부터 끊임없이 대남침투 및 도발을 자행하였다.²³²⁾ 1960년대는 ‘폭력혁명 추구기’로 북한이 1960년 4·19혁명 이후 위장평화 공세를

229)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 II』(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35.

230) 당포함 피격사건은 1967년 1월 19일 13:55경 동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해상경비와 조업 중인 어선들을 보호하는 어로보호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해군 당포함(PCE-56)이 북한 수위단 부근 해안포대의 집중 포격으로 14:34경 침몰한 사건이다. 여기서 승조원 79명 중 39명이 전사하였고 40명이 부상(중상 12명, 경상 28명)하는 피해를 봤다. 당포함이 피격 시 해군본부에서는 오산 TACC에 항공기 지원을 요청하였고, 공군 F-5A, F-86F, F-86D 등이 현장에 출격하여 구조작업을 엄호하였다. 한미 헬리콥터 각 1대씩이 중환자 후송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일본에서 출격한 미군 C-130이 구조현장에서 조명지원을 하였다. 해군본부, 『해상대침투작전사(1)』(서울: 해군본부, 1988), p.523.

231) 한국사진기자단, 『북괴도발 30년사』(서울: 광명인쇄공사, 1977), pp.78-79.

232) 북한의 도발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해방으로부터 6·25전쟁을 일으킬 때까지를 ‘공산정권 수립기’, 1950년대에는 ‘남침 전쟁과 전후복구기’를 거쳐 1960년대에는 ‘폭력혁명 추구기’, 1970년대에는 ‘화·전양면전술기’, 1980년대에는 ‘대화 공세 추구기’, 1990년대 이후에는 ‘방어적 대남전략 추구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방부, 『국군 50년사』(서울: 국방부, 1998), p.282.

전면에 내세운 채 또다시 전쟁을 통한 폭력혁명을 추구했던 시기이다. 남한에서 발생한 4·19혁명에 고무된 북한은 남한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틈타 사회주의 혁명의 양양(昂揚)기로 삼는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간첩의 대량 투입과 동조세력 확대에 역점을 두고 대남 전략을 구사하였다.²³³⁾

1960년대 북한의 연도별 적 침투사건 현황은 아래 [표 7-12]와 같다. 지상 침투는 798회, 해상·해안침투는 493건으로 총 1,313건이 발생하였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대략 연간 20회 이상의 지상 침투 횟수를 보이다가 1965년과 1966년에 40~50회로 증가하였으며, 1967년 141회, 1968년 285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69년에 118회, 1970년에 65회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7-12] 1960년대 적 침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1,313	85	78	41	52	96	131	236	334	168	92
지상	798	27	20	23	25	51	43	141	285	118	65
해상 · 해안	493	54	53	17	26	45	86	89	47	49	27
불상	22	4	5	1	1		2	6	2	1	

※ 출처: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9년)』 상(계룡: 육군본부, 2012), p.23.;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9년)』 중(계룡: 육군본부, 2013), p.27.

해상 침투로별로는 서해가 259회로 가장 많았고, 동해 138회, 남해 83회로 서해 → 동해 → 남해 순으로 많이 침투하였다. 1966~1967년에 침투 횟수가 증가한 것은 북한이 베트남전에서 월맹군의 전술을 모방한 게릴라식 유격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²³⁴⁾ 해상작전을 통해서 24명을 생포하고, 45명을 사살하였으며, 적 선박 16척을 격침·나포하였으며, 16척을 격퇴하였다. 아군의 피해로 53명이 전사하고 75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선박 2척이 침몰당하였다.²³⁵⁾

북한은 1968년 전 전선에 걸쳐서 남방한계선 철책이 구축되어 철책을 뚫고 후방지역으

233) 중앙정보부, 『북한대남공작사』 제2권(서울: 중앙정보부, 1973), pp.377-389.

234)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중(계룡: 육군본부, 2014), p.27.

235)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중(계룡: 육군본부, 2014), p.343.

로 침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땅굴을 구축하여 침투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처음 시도한 것은 1968년 미 제2사단 지역의 철책 하단을 굴토(掘土)하여 아군 후방지역으로 침투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소형땅굴 구축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원거리인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땅굴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²³⁶⁾

[표 7-13] 북한의 땅굴 침투 현황

(단위 : 갯수)

구분	계	1968	1970	1971	1974	1975	1978	1990
계	10	1	2	3	1	1	1	1
지역		파주	양구, 철원	연천, 인제, 고성	고랑포	철원	판문점	양구
비고		철책 침투용 소형땅굴			남침용 땅굴			

※ 출처: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상, p.507.

1960년대의 대표적인 북한의 침투 및 도발 사례는 1961년 4월 7일 북한해군에 의해 어선 6척이 나포된 사건을 비롯하여 장교 일가족 살해사건, 1967년 1월 동해상 해군 당포함 피격 사건, 1967년 6월부터 8월 제2군 지역 무장공비 100여 명 동시다발 침투사건, 9월 경원선과 경의선 철로 폭파사건, 1968년 1월의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 1969년 3월 EC-121기 격추사건과 12월의 대한항공 여객기 피랍사건, 1970년 6월 국립 현충문 폭파사건 등이 있다.

대침투 작전 수행 결과 1960년대에 대침투작전을 통해서 우리 군은 첫째, 침투 중이거나 복귀하고 있는 공비와 침투에 성공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발견하여 [표 7-14]와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침투 인원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를 시험하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²³⁷⁾ 우리 군은 침투한 적을 대부분 조기에 식별하여 침투를 물리치거나 무력화하였지만

236) 남침용 땅굴은 1974년 11월 발견된 서부전선 고랑포 제1땅굴과 1975년 3월 철원 북방 제2땅굴, 1978년 10월 판문점 제3땅굴, 1990년 3월 양구 제4땅굴이 있다. 이때 구축된 고랑포 제1땅굴은 시간당 1개 연대 병력이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철원 북방 제2땅굴과 판문점 제3땅굴은 높이와 폭이 각각 2m에 달하는 대형 터널 수준으로 시간당 약 3만여 명의 병력과 야포까지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발자취』(서울: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1979), pp.147-157.

237)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p.772-778.

대침투작전을 수행하면서 군·경과 민간인도 큰 피해를 당하였다. 1967년 하계 2군 지역 공비소탕 작전결과 공비 64명(익사체 발견 5명 포함)을 사살하고 26명을 생포하였으나 아군도 전사 42명(군 23명, 경찰 8명, 민간인 11명)과 부상 55명(군 30명, 경찰 11명, 민간인 14명)의 피해를 보았다. 1·21 청와대 기습 무장공비 소탕 작전으로 공비 31명 중 27명을 사살하였고, 1명을 생포하였으며 3명이 행방불명인 상태로 작전이 종결되었다.

[표 7-14] 1960년대 대지상침투작전 전과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침투 인원	2,693	115	104	57	96	142	210	694	601	429	245
전과	소계	1,447	86	92	45	56	85	90	372	406	125
	사살	954	12	26	7	10	21	33	297	94	94
	검거	418	67	57	33	42	48	45	62	26	26
	자수	75	7	9	5	4	16	12	13	5	1
도주	1,246	29	12	12	40	57	120	322	304	304	155

※ 출처: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상, p.515.

그러나 추후 미 제2사단 지역 임진강에서 부패한 시신 1구가 발견됨에 따라 행방불명자는 2명으로 감소하였다. 아군의 피해는 전사 38명(군 31명, 경찰 2명, 민간인 5명)과 부상 55명(군 51명, 경찰 3명, 민간인 1명)의 피해를 보았다.²³⁸⁾ 1968년 연말에 있었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한 소탕 작전으로 무장공비 총 120명 중 사살 107명, 생포 7명(자수 3명 포함), 도주 6명의 전과를 올렸다. 아군의 피해는 전사자 82명(미군 4명, 민간인 사망자 30명 포함), 부상자 67명(미군 1명, 민간인 9명 포함), 피랍 1명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1960년대 북한의 침투 및 도발 행위에 대응하여 우리 군은 본격적으로 대침투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GP와 GOP²³⁹⁾의 방호력은 기

2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120.

239)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는 부대가 정지 시에 혹은 야영이나 숙영지에 주둔할 때 또는 전투 진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 적의 접근을 경고, 지연, 와해시키고 방어계획에 관하여 적을 기만하고 가

초적인 수준의 기본형 철조망과 여기에 덧붙인 나무 울타리(목책)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GP도 대부분 GOP를 담당한 중대에서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으며, 1개 소대 또는 반 개(1/2) 소대씩을 전술 기지(현재의 소초와 유사)로 하여 주요 고지에 배치하고, 이 전술 기지를 목책으로 연결한 목책선을 따라 GOP를 경계하고 있었다.²⁴⁰⁾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다른 해보다 빈번하게 증가한 북한의 도발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육상·해상·해안을 이용한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계획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1960년대 후반 북한에 의한 대표적인 세 가지 침투 사례들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967년 하계 제2군 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7년 하절기에 100여 명의 공비가 제2군 지역 해안²⁴¹⁾을 통해 내륙까지 침투한 이후 소탕 작전을 종료하고 공비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훈령 제18호(1967. 12. 15.) 「대간첩봉쇄지침」을 발령하였다. 이 훈령을 통해서 [표 7-15]와 같이 사태를 갑·을·병으로 구분하고 지휘 책임을 명시하였다.²⁴²⁾ 이 훈령에 따라 대침투작전태세를 갖추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작전 수행본부에 대한 지원체계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각급 부대에 5분대기조와 기동타격대를 보유를 의무화하고 대침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훈령에 따라 해안선을 연한 취약지역에 레이더, 탐조등, 소형 단정을 배치하였고 진해와 포항을 특정경비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능할 때에는 적에게 최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력으로부터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부대를 말한다. 감시초소(GP: Guard Post)는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초소로 일반적으로 위치는 GOP가 남방한계선 내에 위치한다면 GP는 GOP보다 전방인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다. 군사용어대사전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서울: 청미디어, 2016), pp. 25, 673.

240)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p.769-770.

241) 당시 제2군은 4,9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험준한 산악지대로 구성된 광범위한 내륙책임 지역을 담당하였으나 평시 대침투작전에 대한 대비태세는 미약하였다. 동해의 해안선을 연한 취약지역에 겨우 1개의 경비 중대만을 운영하고 각 사단은 책임 지역 해안에 특수편의대를 운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들이 운용하는 초소도 155개소에 병력은 488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제2군 예하 10개 후방경비사단은 모두 완전한 건제 유지 전투부대가 미편성된 기간편성부대였다. 이들의 임무는 현 편제상 예비병의 교육, 부대훈련, ROTC 하계병영훈련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공비들이 수차례 침투하였으나 아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해안에 무사히 상륙하였다.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중(계룡: 육군본부, 2014), p.150.

242)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pp.435-453.

[표 7-15] 대통령 훈령 제18호에 의한 지휘 책임

사태	내용	지휘 책임
갑종	경찰력 또는 일부 소수 군 병력의 단기간 지원	내무부장관
을종	군 병력을 해당 지역에 상당 기간 투입할 경우	내무부장관 (작전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
병종	해당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할 경우	계엄사령관

※ 출처: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중, p.150.

1968년 4월 10일부로 모든 해안에 대한 경비를 사태 구분 없이 군지역사령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어서 4월 26일부로 포항특정경비지역을 나누어 울산특정경비지역을 설정하고 육군이 해병대로부터 울산지역 경비 책임을 인수하여 2개 대대와 2개 고사포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후방에 있는 예비사단에 전투대대 10개 대대를 증편하고 이 중 8개 대대를 해안전담대대로 훈련해 경찰로부터 해안경비 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훈령 제18호 ‘추가 제5호’(1968. 5. 6.)에 의하여 포항특정경비지역과 진해특정경비지역에 대한 경계 및 대간첩작전 책임을 해군이 경찰로부터 인수하였다.²⁴³⁾

대통령 훈령 제24호(1968. 12. 20.)에 따라 동해안특정경비지역(동해안방어사령관 책임), 남부특정경비지역(전투병과교육사령관 책임), 경인특정경비지역(제6관구사령관 책임)을 각각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가옥의 집단화, 전술 도로의 개설, 통신망 확충, 작전 동원예비군의 급식 등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해상에 대한 대침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군 제1·제2·제3·제5해역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부산특정경비지역을 설정하고 1개 전투대대와 1개 경비중대를 지역 내의 해안선에 배치하여 대침투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71년에는 인천특정경비지역을 설정하여 인천지역 해군 선임지휘관 책임하에 두었다.

1·21 청와대 무장공비 기습 미수사건 대침투작전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는 1·21 청와대 무장공비 기습 미수사건이었다. 무장공비 소탕작전²⁴⁴⁾을 수행한 이후 다

243)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pp.435-453. 이전에는 남해안과 서해에서의 전라남·북도 해안, 동해안에서 포항 이남 해안은 경찰에 책임이 있었다.

244) 1·21 청와대 무장공비 기습사건 소탕 작전결과 공비 31명 중 27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3명은 행방불명인 채로 작전이 종결되었으나 추후 미 제2사단 지역 임진강에서 부패한 시체 1구가



〈사진 7-5〉 생포 무장공비 김신조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회보집』(1998)

음과 같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첫째, 정부는 1968년 2월 27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제정하고 3월 7일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3월 15일부터 전국 191개 시·군·구에 현역 대대장이 파견되어 향토예비군 조직을 시작하였고,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거행하였다.²⁴⁵⁾ 국방부는 1968년 4월 1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로 육군본부 병비국을 예비군부로 개칭하여 일반참모부로 승격시켰고 10개 예비사단에 예비군단을 창설하는 등 각급 부대에 과거 병비국 업무와 향토예비군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기구가 창설 또는 증편되었다. 창설 당시 예비군의 규모는 2,716개 지역예비군 중대와 527개 직장 예비군 중대로 총 1,725,867명이었다.²⁴⁶⁾

둘째, 대간첩대책본부를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정부는 1월 21일 청와대를 기습한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작전이 발생하자 1월 22일 대간첩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합참에서는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완 소요를 도출하여 1월 30일 대간첩대책기구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통령 훈령 제18호 ‘추가 1’ 「중앙대간첩협의회 및 대간첩본부 규정」으로 하달하였다.²⁴⁷⁾

셋째, 수도권 방위와 봉쇄를 보강하는 등의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이루어졌다. 대통령 훈령 제19호 「무장공비 봉쇄지침」을 통해 3월 10일부로 10개 예비사단 중 7개 사단(제30·제31·제33·제37·제38·제39·제50)은 경비사단으로, 3개 사단(제35·제36·제51)은 전투준비사단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제2군 지역에 해안 및 내륙 취약지역의 대침투작전 수행을 위해 10개 예비사단에 10개 전투대대를 창설하였다. 이어서 5월 23일에는 10개 전투대대를 추가 창설하여 총 20개 대대로 해안과 내륙지역 대침투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한의 유격근거지로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제36·제38·제50사단에 각각 2개 전투대대씩 6개 전투대대를 추가 창설하여 총 26개 전투대대가 창설되어 서해 및 동해안 지역

발견됨에 따라 행방불명자는 2명이 되었다.

245) 육군본부, 『육군사』 제12집(상)(서울: 육군본부, 1968), p.19.

246) 국방부, 『향토예비군 30년지』(서울: 국방부, 1998), p.7.

2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21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38-140.

에 13개 대대, 내륙지역에 13개 대대가 배치되어 대침투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훈령 제18호 ‘추가 5’에 따라 서해의 전라북도 북단 도경계선부터 경남 울산특정경비지역 이남 해안경계 책임을 경찰에 이양하였다.²⁴⁸⁾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21 청와대 무장공비 기습 미수사건 이후 북한은 같은 해 후반에 울진·삼척에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켰는데 울진·삼척 공비소탕 작전²⁴⁹⁾은 군사적·사회적·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첫째,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1968년 4월 1일 창설된 향토예비군은 열악한 장비와 작전여건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공비들을 사살(17명)하고 생포(3명)하였다.²⁵⁰⁾ 이 작전을 통해서 향토예비군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입증됐지만, 보급 및 급식대책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대통령 훈령 제24호 「대비정규전 능력강화책」이 발령되어 적 특수부대의 비정규전 능력과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훈령이 「대간첩봉쇄지침」(대통령 훈령 제19호)이었으나 변경된 훈령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용어가 ‘대간첩’에서 ‘대비정규전’으로 격상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가 1·21청와대 기습 무장공비 소탕작전이나 울진·삼척 공비소탕 작전에서처럼 게릴라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제는 간첩 봉쇄 차원이 아닌 대비정규전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강화되었다.

셋째, 군사대비태세 강화 면에서 해안경계부대 증강과 특정경비 지역 확대, 전술 헬기장 구축이 이루어졌다. 해안경계부대를 증강 배치하고 연안의 향토예비군을 경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포항지역의 특정경비 지역을 확장하였다. 그동안 경찰 책임 지역인 서해안의 군산으로부터 동해안 양산 지역까지의 해안 가운데 지리산과 직접 연결되는 남해안 일부 지역을 군 책임 지역으로 추가하였다. 전국에 500m 이상의 고지 중에서 전술적 가치가 있는 고지에는 모두 헬기장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보 및 반공의식이 강화되었다. 침투한 공비들이 선량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만행을 지켜본 국민

248)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82), pp.454-47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220-222.

249) 무장공비 총 120명 중 사살 107명, 생포 7명(자수 3명 포함), 도주 6명의 전과를 올렸다. 아군과 민간인 피해는 전사자 82명(미군 4명, 민간인 사망자 30명 포함), 부상자 67명(미군 1명, 민간인 9명 포함), 피랍 1명으로 집계되었다.

250) 울진·삼척 공비소탕 작전에서 향토예비군이 처음으로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작전에 동원된 향토예비군은 연인원 총 1,656,723명, 무기 529,927정에 달했다. 육군본부, 『향토예비군전사』 제1집(서울: 육군본부, 1968), pp.52-77.

의 안보 및 반공의식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민은 해안경계부대의 병력과 장비의 부족, 북한의 특수부대에 맞서 싸울 전담부대의 필요성, 해군 함정의 부족 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북한은 1970년부터 공비침투에 의한 게릴라전으로는 남한의 혁명기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다. 1971년~1980년의 대침투작전

1971년 3월 말에 미국은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시키면서 155마일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에게 전달시키고 제2선으로 물러났다.²⁵¹⁾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는데, 1970년대에 총 190회의 대남침투를 감행하였다.

북한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도발 사례로는 1974년 8·15 광복절 경축기념식 행사에서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저격하였으나 영부인이 사망하였고,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²⁵²⁾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파견되는 등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즉각 대응하여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였고, 국민의 안보의식과 반공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7-6〉 북한 제1땅굴(고량포)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1998)

북한의 침투 및 도발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적의 지상침투는 총 57회가 발생하여 이중 24회의 작전을 하였다. 육상침투는 서부지역으로부터 동부지역까지 전 전선에 걸쳐 시작되었고, DMZ 내에서 아군의 철책을 극복하기 위한 소형땅굴을 이용한 침투가 시도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남침용 땅굴을 굴설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북한의 해상·해안 침투는 총 132회가 있었다. 아군은 해상에서

251) 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제2집(경기 파주: 보병 제1사단, 1978), pp.217-222.

252)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11:00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사천교(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와 흥기로 구타,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명이 피살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279-283.

침투 중이거나 해안에 상륙하는 적을 발견하여 35회의 대침투작전을 실시하였다. 기간 중 북한은 해상침투를 위하여 지속해서 침투 장비를 개량하고 발전시켰으며, 간첩선의 모선으로부터 해안에 침투 시 사용하는 자선은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필요할 때 고속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반잠수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안에 상륙 시 은밀하게 접안할 수 있는 장비로 수중 추진기를 도입하거나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표 7-16] 1970년대 북한의 침투 현황(1971~1980)

(단위 : 건)

구분	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계	190	49	20	20	23	28	8	9	13	5	15
지상 침투	57	22	7	1	5	3	1	3	3	3	9
해상 · 해안	132	27	13	19	18	24	7	6	10	2	6
공중 침투	1	-	-	-	-	1	-	-	-	-	-

※ 출처: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71년~1980년)』(계룡: 육군본부, 2011), p.20.

대침투작전 수행 결과 1970년대 적의 지상침투는 총 57회로 이 중 전방군단 지역에서 서의 대지상침투작전은 24회였으며 침투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내륙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하여 내륙지역에서 대침투작전을 실시한 것은 1회였다. 작전결과 아군은 침투 중 이거나 복귀 중이던 공비 29명을 사살하였고, 작전 중 25명이 전사하였으며, 38명이 부상하였다. 1970년대 북한의 해상·해안침투는 총 132회가 있었다. 침투장소별로는 남해로의 침투가 61회, 서해로의 침투는 53회, 동해로의 침투는 18회가 있었다.²⁵³⁾ 적의 해상·해안 침투작전에 대하여 아군은 총 35회의 작전을 통하여 11척의 간첩선을 격침하거나 나포하였으며, 간첩선 승조원이나 공작원을 포함하여 116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다. 의아선박²⁵⁴⁾을 검색하거나 간첩선과의 교전 과정 및 해안이나 내륙에 침투한 공비의 수색작전이

253)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71~1980)』(계룡: 육군본부, 2011), p.199.

254) 의아선박(Doubtful Ship)은 미식별 선박의 외형, 제원 및 항해 중의 동태 등 제반 특징으로 보아 적 또는 간첩선과 유사한 선박을 말한다.

나 교전 중에 발생한 아군의 피해는 총 40여 명이 전사하거나 순직하였고 부상자도 60명에 이르렀으며 민간인 1명이 납치되었다.²⁵⁵⁾ 우리 군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상, 해안, 도서지역에서 침투하는 간첩선과 공비를 사살하고 북한의 침투 및 도발 의지를 분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라. 1981년~현재의 대침투작전

1980년대는 우리나라는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로 국제적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동맹권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북한은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남북총리회담과 남북대화를 지속하는 등의 위장평화공세를 취하는 한편 테러와 무장공비침투 등 대남도발도 지속하였다.²⁵⁶⁾

1990년대에 북한은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속 고수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릉 무장공비 침투 및 제1연평해전²⁵⁷⁾과 같은 군사도발을 통해 화전양면전술을 지속해서 사용하였다.

2000년대에는 남북 간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2002), 제2연평해전(2002)²⁵⁸⁾, 대청해전(2009), 천안함 피격사건(2010)²⁵⁹⁾, 연평도 포격도발(2010)²⁶⁰⁾, 무인기침투(2014), 파주지역 지뢰도발 및 연천지역 포격도발(2015)²⁶¹⁾,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테러 및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왔다.

북한의 침투 및 도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적의 지상침투 횟수가 7회(1980년대 3회, 1990년대 2회)로 많이 감소하였다. 1980년대 실시된 대지상침투작전은 파주지역작전, 필승교작전, 임월교작전 등 3건이다. 파주지역작전 이후 군은 임진강 변에 철책을 추가 설치하

255)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71~1980)』(계룡: 육군본부, 2011), p.388.

256)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p.52-55.

2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평해전 전투수행자 증언록』(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참조.

258) 천용택, 『나의 삶 나의 희망』(서울: 도서출판 Annd, 2006), pp.214-222.

259)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서울: 대한민국 정부, 2011) 참조.

260) 웅진군, 『연평도 포격사건 백서』(인천: 웅진군, 2011), pp.73-79.

261) 육군 군사연구소, 『연천지역 포격 도발』(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7) 참조.

고 강안경계를 전담할 제101여단을 창설하였다. 필승교작전과 임월교작전을 통해서 임진강 상류와 하류를 이용한 침투대비책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 실시된 대지상침투작전은 은하 계곡작전과 임진강작전 등 2건이 있다.

대지상침투 작전결과 침투한 적 15명 중 8명을 사살하였으나 7명은 도주하였다. 적으로부터 노획한 장비와 물자는 총 324종 3,499점에 달하였다. 아군 피해는 오인사고와 헬기 사고에 의해 15명이 순직하였고, 적과 교전 및 오인 등으로 5명이 부상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과거보다 해상으로 침투하는 횟수가 줄었는데, 1980년대에 25회, 1990년대에는 22회로 총 47회의 침투가 있었다. 이 중 서해로 침투한 횟수는 12회, 동해로는 19회, 남해로는 15회 침투하였다. 침투방법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는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과거와는 달리 반잠수정이나 수중 추진기 등을 더욱 개량하고 발전시켜 침투에 사용하여 당일 밤에 침투하여 곧바로 복귀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1990년대 해상침투 전술 중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잠수함(정)으로 본격적인 침투를 시도한 것이다. 19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을 비롯하여 2010년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까지 다양하게 잠수함(정)을 활용하여 침투 및 도발을 지속하였다.



〈사진 7-7〉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1998)』

에서 노획한 반잠수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대국민 안보전시물로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실시된 대해상·해안침투작전은 저진해안작전 등 총 5건과 1990년대 실시된 작전으로는 양양 근해작전 등 4건이 있다. 기간 중 9회의 작전을 통하여 적 59~62명 중에서 2명을 생포하고 50~51명을 사살(자폭 포함)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7~9명은 도주하거나 복귀하였다. 아군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경정 1척이 침몰하였고 해군 고속정 1척이 일부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양양 근해작전에서 노획한 잠수정과 여수작전

2.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가. 지상 국지도발

1980년대 북한에 의한 지상 국지도발은 접적 지역에서 총 7건의 총격 도발을 자행하였으며,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국립묘지’ 폭탄테러사건을 일으켜 우리 정부의 고위 각료를 포함한 21명을 사망하게 하였고 46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1986년 9월에는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폭탄을 설치하여 5명을 살해하고 29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19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 858기를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폭파해 탑승자 115명 전원을 사망하게 하였다. 1990년대에도 북한은 접적 지역에서 도발을 이어갔는데 1997년 7월 북한군 14명이 철원지역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한 우리 군의 GP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쌍방은 약 30분간 GP 교전까지 벌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해 5도 지역²⁶²⁾에 대한 무력도발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비군사적 도발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의 진화된 도발을 시도하였다. 2009년 7월에는 디도스(DDoS) 공격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요 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고, 2010년 8월부터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교란을 시도하였다. 2014년에는 파주, 백령도, 삼척 등 3곳에 무인기를 침투²⁶³⁾시켰으며, 2016년 7월에는 한탄강과 임진강의 강물을 이용한 대남전단 살포까지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새로운 도발 외에도 과거에 사용했던 재래식 도발을 병행하는 전술을 쓰기 시작했는데 2014년 10월 연천지역에서 민간인 대북 전단 부양에 고사총 도발을 가해왔고, 파주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였다. 2015년 8월에는 파주지역 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매설하여 수색병력을 공격하였고, 연천지역 비무장지대에서는 포격도발²⁶⁴⁾을 감행하였다.

나. 해상 국지도발

해상 국지도발은 적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상으로 우리 영역에 위협을 가하

262) 서해 5도는 서해에서 북한과 근접한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웅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와 강화군의 우도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우도 대신에 소연평도를 포함하여 서해 5도로 부르기도 한다.

263) 국방부,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에 대한 조사결과,” 「보도자료」(2017. 6. 21.)

264) 육군군사연구소, 『연천지역 포격도발』(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5).



〈사진 7-8〉 제1연평해전

※ 출처: 해군본부

는 행위이다. 북한은 인원이나 함정·해안포·유도탄·기뢰 등의 수단으로 아군의 해역·함정·선박 및 도시 등에 위해를 가해왔다.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부근 해상에서 어선 납북 행위를 계속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은 NLL에 접근한 서해 5도 지역에서 NLL 무실화를 위한 군사도발을 자행해 왔다. 서해 5도에 대한 도발 중 가장 많은 것이 NLL 침범이었으나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이후 해전과 함정 공격, 도서공격 등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 나갔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⁶⁵⁾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 도서 통항 질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측이 5개 도서에 출입할 때는 북측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⁶⁶⁾ 이후 더욱 도발의 강도를 높여서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²⁶⁷⁾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연이어 자행하였다.

다. 공중 국지도발

공중 국지도발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중으로 우리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적은 지대공미사일 또는 공중전력을 이용하여 아군의 영공, 항공기, 특정 지역 및 인원·장비·시설 등에 위해를 가해왔다. 1980년 이후 공중 국지도발은 항공기를 이용한 귀순사건이 다수를 이루었다. 귀순사건은 조기에 항적을 식별해 내 귀순기 유도에 성공한 예도 있었으나 실패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1980년 이후 북한공군이나 중국의 민항기가 귀순하거나 납치된 사례는 총 6건이 있었다.

2000년 이후 공중 국지도발 사례는 소형무인기의 영공침투와 정찰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무인기에 의한 도발 사례로는 2014년 3월 파주시 조리읍과 백령도, 4월 삼척 청옥산

265)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서울: 국방부, 2007).; 이상철, 『NLL을 말하다』(서울: 살림, 2015) 참고.

266)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https://nkinfo.unkorea.go.kr/>) (검색일: 2002년 1월 15일).

267)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서울: 대한민국 정부, 2011).



〈사진 7-9〉 인제지역 추락 북한 무인기

※ 출처: 『연합뉴스』(2017. 6. 21.)

진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⁶⁸⁾

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되었다. 9월에는 백령도 서방 해저에서 추락한 무인기 동체가 발견되었다. 2015년 8월에 북한은 소형무인기로 화천 전방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지역을 정찰하였으며, 총 5회나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였다. 이후 2016년 1월, 문산 전방에서 소형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였으며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까지 500km 이상을 비행함으로써 더욱

라. 미사일 및 핵실험 도발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하여 미군은 ‘KN’으로 시작하는 코드를 붙여 명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명을 따라 노동, 대포동 등으로 불렀다가 미국식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군인 화성포병부대에서 운용하는 미사일은 ‘화성’이라 명하고 2016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에는 ‘북극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했고,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1998년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했고, 2012년 이후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탄)급의 KN-08과 KN-14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였다. 이 밖에도 SLBM을 개발하여 시험 발사까지 하였으며 다양한 투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분출시험 등을 지속하고 있다.²⁶⁹⁾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에는

268) 국방부,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에 대한 조사결과,” 『보도자료』(2017. 6. 21.)

269)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27-28.

광명성 4호를 발사하였다. 2017년에는 ‘광 포위사격 방안’으로 미국을 위협하였으며, 순안 비행장에서 화성-12형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하였다.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은 ‘광 포위사격’ 능력²⁷⁰⁾과 ‘태평양 군사작전’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⁷¹⁾ 현재까지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의 종류와 명칭은 [표 7-17]과 같다.

[표 7-17]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명칭

구분	스커드 B	스커드 C	노동	무수단	ICBM	ICBM	SLBM	IRBM	IRBM
북한	화성-05	화성-06	화성-07	화성-10	화성-13	화성-14	북극성-1	북극성-2	북극성-3
미국	KN-03	KN-04	KN-05	KN-07	KN-08	KN-14	KN-11	KN-15	KN-17
사거리 (km)	300	500	1,300	3,500	12,000	9,000	2,500	3,000	5,000

※ 출처: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81년~2017년)』(계룡: 육군본부, 2017), p.587.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였다가 1993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으나 미국과 접촉을 통해서 이를 유보했다.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으로 제2차 북핵 위기가 오면서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은 아래 [표 7-18]에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7-18] 북한의 핵실험 현황

구분	시기	원료	지진 규모	폭발 위력	실험지역
1차 핵실험	2006.10.9.	플루토늄	3.9	1kt	풍계리
2차 핵실험	2009.5.25.	플루토늄	4.5	3~4kt	풍계리
3차 핵실험	2013.2.12.	플루토늄	4.9	6~7kt	풍계리
4차 핵실험	2016.1.6.	플루토늄	4.8	6kt	풍계리
5차 핵실험	2016.9.9.	플루토늄	5.04	10kt	풍계리
6차 핵실험	2017.9.3.	수소탄(북한 주장)	5.7	50kt	풍계리

※ 출처: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81년~2017년)』, p.592.

270)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20-21.
 271) 조영빈, “북 화성-12형 전력화 선언, 광 볼모로 군사 주도권 확보 노려,” 『한국일보』(2017. 9. 16.)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는 폭발 위력이 50kt 이상에 달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1,000kg까지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고, 650kg까지 소형화했다면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하여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는 폭발 위력이 50kt 이상에 달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1,000kg까지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고, 650kg까지 소형화했다면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하여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는 폭발 위력이 50kt 이상에 달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1,000kg까지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고, 650kg까지 소형화했다면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하여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마. 미사일 및 핵 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을 천명한 이래,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2006년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 억제’를 최초로 언급²⁷²⁾하였다. 이후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개최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²⁷³⁾ 맞춤형 억제전략은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에서 발전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부터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하여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²⁷⁴⁾

한미 간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

272)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6. 10. 20.)

273)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9. 10. 22.)

274) EDPC(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설치한 한미 협의체이다. CMCC(Counter Missile Capacity Committee)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전력 발전소요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이다. 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는 EDPC와 CMCC를 통합한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이다.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56-57.

(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수행개념(4D 작전개념²⁷⁵⁾)으로 한미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²⁷⁶⁾하였다. 한미는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4D 작전개념 이행지침²⁷⁷⁾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 통제, 연습 및 훈련, 능력발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동맹의 실행력을 지속해서 제고시켜 나가면서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과의 동맹체계에 의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에 추가하여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축은 킬체인(Kill Chain)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이다. 2축은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이고, 3축은 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를 운영하여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목표로 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이다.²⁷⁸⁾ 2016년 이후에는 한미 간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4D)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형 3축 체제는 기존 북한 위협 중심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타격계획’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²⁷⁹⁾ 이 밖에도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²⁸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45년도부터 현재까지 육상,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침투를 시도하였으며, 우리 군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격멸시키거나 격퇴하였다. 북한의 침투수단과 방법이 다양화, 정밀화,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의 대남전략과 침투전술을 연구하고 이에 걸맞게 대응전략과 전술을 발전시켜 왔다. 과학화 경계시

275) 4D 작전개념(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은 ①탐지(Detect):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운용으로 교란·파괴·방어지원, ②교란(Disrupt):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기반시설 타격, ③파괴(Destroy):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동발사대(TEL) 직접적 타격, ④방어(Defend):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57.

276)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4. 10. 23.);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57.

277)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5. 11. 2.)

278)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58-61.

279)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53.

280)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56-62.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첨단화된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침투사례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군사적 도발에서 벗어나 점차 비군사적인 도발과 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한미동맹에 의한 대비태세 구축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비군사적 침투와 도발에 대해서 이를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제 8 장 교육 훈련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원과 전투부대 육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 훈련²⁸¹⁾을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건반사적이고 강인한 전사 기질의 전투원, 군사 지식과 전투지휘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주도적·창의적 군사전문가, 상시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한 훈련된 정예부대를 육성하고 있다.

교육 훈련은 학교 교육과 부대훈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는 양성 교육(장교, 부사관과 신병), 보수교육(장교, 부사관, 군무원과 국방부 공무원), 전문교육(전문학위, 국외군사교육, 직무향상 및 능력개발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대훈련은 개인 교육(간부, 병), 집체훈련(전술훈련, 연합연습·훈련, 합동연습·훈련)으로, 정신전력교육은 병, 학교,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⁸²⁾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교육 훈련의 원칙은 첫째, 명확한 교육 훈련 목표 설정, 둘째, 측정성 합격제 교육 훈련, 셋째,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교육 훈련, 넷째, 임무형 지휘 개념에 입각한 교육 훈련이다. 우리 군은 학교 교육, 부대훈련,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²⁸³⁾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병 양성을 위한 우리 군의 교육 훈련 변천 과정을 학교 교육, 부대훈련 및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학교 교육 및 부대훈련

1. 독립군 및 광복군 양성교육

1910년대 해외 독립군 기지가 형성된 곳은 독립군 양성기관이 되었다. 독립군 양성을 위

281) 교육 훈련은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교육은 군사 요원에게 군사 지식과 기술을 부여하며, 지적능력, 덕성, 체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및 학습활동이다. 훈련은 개인과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적 숙달 과정을 말한다. 국방부, 『국방교육 훈련 중장기기획서』(서울: 국방부, 1994), p.11.

282) 국방부 훈령 제560호(1997. 6. 20.) 「교육 훈련규정」

283) 학교 교육에는 양성교육(장교, 부사관과 신병), 보수교육(장교, 부사관, 군무원과 국방부 공무원), 전문교육(전문학위, 국외군사교육, 직무향상 및 능력개발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대훈련은 개인 교육(간부, 병), 집체훈련(전술훈련, 연합연습·훈련, 합동연습·훈련), 정신전력교육은 병, 학교,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2270호(2019. 4. 5.) 「국방교육 훈련 훈령」

해서 일찍이 북간도 연길 용정촌의 서전서숙(1906), 블라디보스토크 개척리의 한민학교(1909), 미국 네브라스카의 한인소년병학교(1909), 샌프란시스코 클레어몬트 군사훈련반(1910) 등이 운영되어 미래 전장에 파견할 사관을 양성하였다.²⁸⁴⁾ 이즈음 서간도에서는 신흥강습소(1911)가 개설되어 신흥중학을 거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며 무관 양성의 요람이 되었다. 북간도 밀산학교(1914)와 지린 대전자무관학교(또는 동림무관학교, 1915)가 체계를 갖추 독립군을 양성하였으나, 3·1운동 이후에 더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독립군을 양성한 무관학교는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와 북로군정서에서 운영한 사관연성소가 있었다.²⁸⁵⁾

대전자무관학교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독립전쟁을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915년 6월 나자구에 설립하였다. 제1기 70명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수가 증가하였으나 자금난과 간도 주재 일본 영사관의 압력으로 1916년 6월경 폐쇄되었다.

가. 신흥무관학교와 사관연성소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이상룡 등이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강습소를 설립(1911. 5. 14.)한 데서 비롯되었다. 신흥강습소는 이후 중등교육과 군사훈련을 하는 신흥중학으로 자리잡았다. 1919년 3·1운동 이후 많은 애국지사와 학생, 청년들이 신흥중학에 입교하였으며, 1919년 5월 학교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였다. 신흥무관학교 교원들은 대부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고, 이외에 중국, 일본 등 외국사관학교 출신이 일부 있었다. 중국 운남 육군강무당 출신의 이범석,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김정천(본명 김광서)과 이청천(본명 지청천)이 망명해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1일 14시간 정도의 학교 교육과 70리 야간 행군 등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하였다. 교육내용은 학과 10%, 교련 20%, 정신교육 50%, 건설 20%였다. 당시 무관학교에서 사용한 주요 교재로는 보병조전, 축성교범, 군대내무서, 야외요무령 등이 활용되었다.²⁸⁶⁾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와 버금가게 북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한 기관으로는 북로군정서가 후원하는 사관연성소가 있었다. 사관연성소는 1920년 2월 초 왕청현 서대파 십리평(十里坪)에 설치되었다. 사관연성소 지도부는 대부분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고, 교

2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p.65-66.

2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70.

286)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의 무장투쟁과 외교활동』(서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pp.63-64.

관들은 신흥무관학교와 운남성 육군강무당을 졸업한 인물로 구성되었다.

사관연성소의 교육과정은 6개월간 진행된 사관 교육이 핵심이었으며, 대상자들은 15세 이상 40세까지의 청·장년들이었다. 400명이 입학하여 1920년 9월 9일 289명이 졸업하였다. 졸업생 중 80명은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교성대(敎成隊)를 조직하여 북로군정서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되었다. 교육내용은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역사교육이 주가 되었으며, 일본의 조선 침략사나 세계 각국의 독립 역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내무생활은 육군 징발령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실시하였으며, 군사교육 교재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일본·러시아 사관학교 등의 교재였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보병조전, 육군내무서, 야외요무령, 축성교범, 육군형법, 육군징벌령, 체육, 규령법(卽令法), 부대의 지휘운영법, 중국어, 총창술 등이 있었다. 교재는 총재부 인쇄국에서 인쇄되어 대량으로 보급되었다.²⁸⁷⁾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 간부 양성과 광복군 설립

1919년 말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에 따라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해 청년을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다. 1920년 제1기생으로 19명, 제2기에 24명이 모집되어 졸업하였으나 제3기생을 모집하여 교육 중 재정난으로 폐교되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는 위생병 임무를 수행할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21년 1월 대한적십자사에 간호사양성소를 부설하여 간호 인력을 배출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미래 독립전쟁에서 공군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20년 1월 육·해군 비행대의 편성을 시도하였으며, 노백린으로 하여금 1920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스에서 폐교였던 킨트학교(the Quint School)에 ‘한인 비행가 양성소’를 설립하여 비행사를 양성하였다. 이 비행학교는 1920년 11월 재정난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임시정부는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23년 권기옥을 중국 운남 육군항공학교에 파견하여 비행사로 양성하였고, 중국 보정항공학교에서 1등 비행사가 된 최용덕에게 비행대를 조직하도록 하였다.²⁸⁸⁾

북경에서 활약 중이던 의열단장 김원봉(황포군관학교 제3기생)과 김홍일(당시 중국군 대령)의 노력으로 1932년 10월에 남경 온산(溫山)에 개설된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조선혁명

2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77.

2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 89-91.



〈사진 8-1〉 윌로스 한인비행학교

※ 출처: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간부학교에 117명의 한국 학생이 입학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1933년 10월에 제2기생 17명, 1935년 3월에 제3기생 44명이 각각 수료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군사위원회별 동충대장(軍事委員會別動總隊長) 강택(康澤)은 김원봉과 함께 강서성자군분교(江西省子軍分校)에 군사위원회 정훈반조선학생대(政訓班朝鮮學生隊)를 개설하여 일본군 후방에서 활동할 대적선전공작대(對敵宣傳工作隊)를 훈련했는데 84명이 입교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인원들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기간이 되었다.²⁸⁹⁾

한편 1932년 일제의 만주국 설립 이후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임시정부에서는 한인애국단을 비밀결사로 운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 예로 윤봉길의사가 홍커우(虹口) 공원에서 거사를 한 이후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김구의 요청으로 뤼양(洛陽)에 설치된 중국 중앙군관학교 분교에서 1934년 11월부터 한인군관 훈련반(韓人軍官訓練班)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뤼양 분교는 중국군 기성장교(既成將校)의 보수교육 기관으로서 제1대(隊)부터 제16대까지 있었는데 한인 학생들은 제17대에 편성되었다.²⁹⁰⁾

교육 기간은 6개월 과정으로 제17대장에는 이범석, 교관으로 오광선 등이 선발되었고 교관 중에서 오광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 장교였다. 학생선발을 마친 이후 1934년 11월에 제1기생 104명이 입교하여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방해 공작으로 한인특설반은 1년 후 제1회 졸업생을 내고 더는 유지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김구는 중국 난징 군관학교에도 한인들을 입학시켜 ‘한인 특무대 독립군’을 양성해 나갔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한인 군관 양성이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40년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직후인 11월 규모는 3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45년 8월경에는 총사령부를 비롯하여 3개 지대에 최소 7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군대로 성장하였다. 광복군 대원들은 한국 청년훈련반과 한국광복군훈련반으로 구분하여 약 3개월에서 5개월간 교육 훈련을 진행하였다.

289) 육군본부, 『창군전사』(서울: 육군본부, 1980), p.226.

290) 육군본부, 『창군전사』(서울: 육군본부, 1980), pp.227-228.

이렇듯 임시정부 시기 교육 훈련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체적인 교육기관(학교)을 설립하여 간부를 양성하거나, 중국군관학교 등에 파견하여 양성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은 독립전쟁 시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였고, 1940년대 광복군이 창설된 이후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거나 국내 진입작전에 주력으로 참가하였다.

2. 미국식 교육훈련제도 도입기(광복 이후~6·25전쟁 이전)

가. 미국식 교육 훈련제도로 전환

광복 이후 초창기 우리 군은 일본식 훈련 개념에 따라 과거 일본군이 사용하던 99식, 38식 소총으로 도수 및 집중훈련을 통일된 교안 없이 각 연대별로 교육 훈련을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점차 일본군 교육 훈련체계는 미국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군이 미국식 훈련으로 통일된 교육 훈련을 도입하여 실시하게 된 것은 1946년 9월부터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은 일본식 교육 훈련체계를 하나씩 개정해 나갔으며, 내무위병제도가 1947년 3월 6일부로 미국식으로 바뀌었고, 피복과 총기는 1947년 9월 1일부로 미제(美製)로 교체되었다. 일반적으로 미군 중대장과 1명의 장교, 그리고 수 명의 미군 하사관이 각 연대에 있으면서 국방경비대의 교육 훈련에 관여하였다. 교육 훈련 시 가장 큰 장벽은 상호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미군의 교육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각 부대의 장교들은 구(舊) 일본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들이었는데 미군 하사관들이 훈련과정에 간섭함으로써 종종 상호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²⁹¹⁾ 초창기의 교육 훈련과목은 제식훈련, 집중훈련, 총검술, 폭동진압훈련 등이었으며, 이를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개인훈련 외에 대규모 부대훈련은 제8연대에서 대대 단위의 야외연습을 1947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과 후포 간에서 실시한 바 있다. 또 제5연대에서 연대 기동훈련을 1947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과 진해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장원 고개에서 조우전으로 마지막 결전을 벌인 사례 등 경비대 창설 이래 최초의 대대와 연대 야외 기동훈련을 하였다.²⁹²⁾ 그러나 이 당시는 대부분의 부대가 새롭게 창설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29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12), p.294.; 서갑성 ‘50동우회’ 회장 인터뷰(2017. 12. 13.).

292) 육군본부, 『창군전사』(서울: 육군본부, 1980), p.357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전술 전기를 연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1948년 3월 10일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병력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보병 화기를 비롯한 야포 및 장갑차 등의 중장비 지급과 병력증강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948년 7월 1일 대구에 병기학교, 7월 10일에는 진해에 포병학교를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국군에게 이양할 경·중기관총을 비롯하여 60밀리 및 81밀리 박격포, 105밀리 곡사포 등 각종 장비의 조작 교육을 하였다.²⁹³⁾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우리 군은 국군으로 개편되어 본격적으로 일본식 교육에서 미국식 교육으로 전환됨과 더불어 교육내용이 통일되었으며, 각 병과별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창설되었다. 우리 군 역사상 최초의 보수교육은 초창기 일본식 훈련의 폐단을 지양하고 미국식 교육 훈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시 각 연대에서 기간 장교로 근무 중인 군사영어학교 출신 장교들을 소집하여 경비사관학교에서 1개월간의 미국식 보수교육을 한 것이다. 이때의 보수교육은 미국식 도수 훈련, 집총훈련, 폭동진압훈련, 내무위병



〈사진 8-2〉 K MAG의 기관총 교육

※ 출처: 『국방일보』(2020. 5. 18.)

들이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한국군 기간 장교들은 비로소 미국식 훈련을 완전히 습득하게 되었고, 경비대는 이들이 부대로 복귀한 1948년 9월부터 교육 훈련이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전환되었다.

1948년 4월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이전 한국군에게 미군의 모든 장비를 이양하게 되자 이를 인수하기 위해 보병학교에서 각 연대의 장교들을 소집하여 교육하였다. 교육내용은 M1 소총의 기계훈련, 사격술, 예비훈련 및 사격 등이었다. 또한, 대구에 제1훈련학교를 설치(6. 27.)하고 미 제6사단의 병기교육단 지원을 받아 경·중 기관총, 박격포, 2.35인치 로켓포, 57밀리 대전차포 등의 운용법을 교육하였고, 서울 용산과 진해에도 제2·3훈련학교를 설치하여 미 제6·제7사단의 병기교육단을 지원받아 105밀리 야포 및 57밀리 대전차포 운용법을 교육하였다.

보수교육 과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지휘관과 참모를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해 8주 교육으로 참모학교(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를 창설(1949. 7. 1.)하였다. 당시의

293) 나종남 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12), pp.25-38.

고급지휘관과 참모들은 이미 알고 있는 군사 지식 외에는 별다른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대 군의 지휘관으로서 참모 운용이나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좌하는 것에 대해 기본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의미에서 육군 참모학교의 지휘 및 참모업무의 교육과정은 큰 의의가 있었다. 초반기의 3주는 보병학교의 고등군사반에서 미국식 전술과 화기학을 이수한 다음 참모학교에 입교하여 전술 교리 및 참모업무 등 소정의 과정을 5주간 받도록 하였다.²⁹⁴⁾ 6·25전쟁 이전의 보수교육은 육군참모학교 2개 기, 보병학교 초등군사반(3개월 과정) 5개 기, 고등군사반(3개월 과정) 4개 기를 배출하였으며 각 병과학교에서도 초등 및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1~2개 기를 배출하였거나 교육 중이었다.

1948년 7월 15일 최초의 유학생을 10개월간 미국 군사학교에 보내어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하고 귀국시켜 보병학교에 신설된 초등 및 고등군사반 과정에서 미국식 전술 교육을 보급하게 하였다. 2차에 걸쳐 도미 유학생들을 보냈고, 도미 유학을 하지 못한 상급지휘관은 먼저 보병학교 초등 및 고등군사반 과정에서 3개월간의 미국식 보수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신설된 병과학교에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받아 자질향상에 주력하였다.²⁹⁵⁾

나. 육군·해군·공군장교 양성 교육기관의 설립

광복 이후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사영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²⁹⁶⁾를 시초로 국방경비대사관학교와 해군병학교 등이 설치되었다. 군사영어학교는 미국식 군사교육이 시급함에 따라 영어를 해득할 수 있는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군사영어학교는 110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약 5개월 만에 폐교되었으나²⁹⁷⁾ 실질적으로 초창기 한국군의 간부양성소 기능을 하였다. 군사영어학교가 폐교되자 태릉에 조선경비대 훈련소(Korean Constabulary Training Center)가 설치(1946. 5. 1.)되어 경비대 장교를 양성하였다.²⁹⁸⁾ 한국 측에서는 이것을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라고 호칭하였는데, 국방부가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되면서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1946. 6. 15.)되었다. 이후 조선경비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개칭(1948. 9. 5.)되었다.

294)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48.

2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48-49.

296) 교명은 원명인 'Military Language School'에 충실한다면 「군사영어학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로 영어를 가르쳤으므로 통칭 「군사영어학교」로 부르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50년사』(서울: 육군사관학교, 1996), p.35.

29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28-29.

298) 장창국, 『육사 졸업생』(서울: 중앙일보사, 1984), pp.55-65. 110명의 졸업생 중 23명은 해방병단 장교로 임관되었고, 20명의 경찰과 군정청의 통역관으로 채용되었다.

해방병단 장교양성을 위하여 진해에 해군병학교를 설치(1946. 1. 17.)하고 6월 15일 해안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하였다. 이후 해안경비대학(1946. 8. 10.), 해사대학(1947. 8. 14.), 해군대학(1948. 11. 16.)으로 개칭되었다가 해군이 창설됨으로써 해군사관학교로 개칭(1949. 1. 15.)되었다.²⁹⁹⁾

정부 수립 이후 항공장교의 육성을 위하여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설립(1949. 1. 14.)하여 공군의 창설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이 독립된 군으로 창설됨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로 개편(1949. 10. 1.)되었다.³⁰⁰⁾

[표 8-1] 초창기 육군·해군 주요 군사학교의 창설과 재창설 현황

구분 학교명	창설		재창설		비고
	일자	장소	일자	장소	
육군 사관학교	'46. 5. 1.	서울 태릉	'51. 10. 31.	경남 진해	• '45. 12. 5. 군사영어학교 창설(서대문) • '46. 2. 29. 태릉으로 이동 • '46. 4. 30. 폐교(110명 배출) • '46. 5. 1. 경비사로 창설 • '48. 9. 5. 육사로 개칭
제1훈련 학교	'48. 6. 27	대구	'48. 11. 6.	폐교	• 주한 미군의 중화기 이양에 따라 화기 교육 위해 설치(721명 수료)
제2훈련 학교	'48. 6. 27.	용산	'48. 11. 6.	폐교	• 포병 및 야포교육(미 제7사단 지도)
제3훈련 학교	'48. 6. 27.	진해	'48. 11. 6.	폐교	• 포병 및 야포교육(미 제6사단 지도)
육군 보병학교	'49. 7. 29.	경기 시흥	'50. 8. 17.	경남 동래	• '48. 2. 21. 서울 수색에서 일시 창설 • '48. 7. 1. 폐교 • '50. 8. 31. 육군제병학교로 개칭 • '50. 9. 7. 육군종합학교로 개칭 • '51. 2. 16. 보병학교로 개칭
육군 포병학교	'49. 6. 25.	영등포	'51. 3. 15.	경남 진해	• '48. 11. 20. 서울 영등포에서 육군 야전 포병학교로 발족 • 최초 병기훈련소로 발족 • '50. 3. 8. 명칭 변경
육군 정보학교	'49. 5. 20.	경기 수색	'50. 12. 24. ('52. 3. 6.)	대구	• '48. 11. 15. 수색학교는 38부대로 개칭('49. 6. 6.) • '49. 6. 29. 서울 남산동으로 이동, 육군남산학교로 개칭

299) 해군본부, 『해군십오년약사』(서울: 해군본부, 1961), pp.1-8.

300) 공군본부, 『공군발전 약사』(서울: 공군본부, 1954), pp.1-8.

구분 학교명	창설		재창설		비고
	일자	장소	일자	장소	
육군 헌병학교	'49. 2. 11.	용산	'51. 8. 15.	대구	• '48. 8. 16. 군기학교로 발족(서울 수색) • '50. 8. 27. 헌병교육대로 발족
육군 경리학교	'48. 10. 5.	용산	'51. 8. 15.	경북 하양	• '50. 6. 1. 부평으로 이동 • '50. 9. 18. 경리교육대로 발족
육군 병기학교	'48. 10. 5.	경기 부평	'51. 2. 24.	경남 울주	• 최초 육군자동차학교로 창설
육군 병참학교	'49. 5. 1.	용산	'51. 2. 10.	부산	• 육본병참대대 내에 경리학교로 창설 • '49. 10. 5. 개칭
육군 통신학교	'49. 5. 1.	태릉	'51. 2. 10.	부산	• '47. 1. 20. 통신교육대로 창설 • '47. 10. 23. 태릉으로 이동 • '48. 10. 26. 통신학교로 개칭
육군 군의학교	'49. 11. 25.	경기 부평	'50. 2. 24.	종로	• '50. 12. 14. 경남 동래로 이동 • '52. 9. 17. 경남 마산으로 이동
육군 기갑학교	'53. 5. 15.	전남 광주			• '50. 11. 29. 종합학교 전차과 발족 • '51. 4. 15. 보병교 전차대대 개편
육군 공병학교	'48. 11. 25.	경기 김포	'51. 2. 24.	경남 김해	• '51. 2. 24. 공병 훈련소로 발족 • '51. 3. 10. 육군공병학교로 개칭
육군 군악학교	'48. 4. 1.	서울 장충동	'51. 4. 16.	경남 부산	• '50. 8. 20. 육군 군악대로 개칭
육군 참모학교	'49. 7. 1.	용산	-	-	• 육군본청 내에 설치 • 6·25전쟁으로 해체
여군 훈련소	'50. 10. 12.	부산	'55. 5. 22.	서울 서빙고	• '50. 9. 1. 제2훈련소 내 여군 의용 교육대 설치
해군병 학교	'46. 1. 17.	진해	'49. 11. 16.	진해	• '46. 6. 15. 해안경비대사관학교로 개칭 • '46. 8. 10. 해안경비대학으로 개칭 • '47. 8. 14. 해사대학으로 개칭 • '48. 11. 16. 해군대학으로 개칭 • '49. 1. 15. 해군사관학교로 개칭
육군항공 사관학교	'49. 1. 14.	경기 김포	'49. 10. 1	경기 김포	• '49. 10. 1. 공군 창설로 공군사관학교로 개편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338;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전투발전종합사』(대전: 육군교육사, 1984), pp.119-12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1권(서울: 육군본부, 1956), pp.17-18;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50년사』(진해: 해군사관학교, 1996), pp.32-42;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20년사』(서울: 공군사관학교, 1974), pp.43-45.

3. 미국식 교육훈련체계 모방기(6·25전쟁~1960년)

교육 훈련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동안 정병육성을 위한 국군의 교육 훈련을 담당해 왔던 병과학교들은 북한의 남침으로 일시 휴교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제1훈련소를 대구에 창설(1950. 8. 14.)하여 신병훈련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전황상 일시 휴교하였던 병과학교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교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선에서 체득한 전투경험을 교훈으로 군사교육 훈련에 더욱 매진하여, 전선 및 후방에서 소요되는 병력을 보충하였다. 또한, 전선이 점차 고착되고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철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교육 훈련의 양적인 면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³⁰¹⁾

가. 교육 훈련의 기반조성

당시 교육 훈련에 관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던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은 전쟁 지도 업무로 인하여 교육기관의 통제가 곤란하게 되자 육군교육총감부를 육군본부 직할로 창설(부산 범일동, 1951. 8. 1.)하여 교육 훈련을 전담하게 하였다.³⁰²⁾ 교육총감부는 창설 후 전시 교육 체제하에서 단기간에 대량 양성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각종 교육기관을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적인 면에서 급속히 증강된 국군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 또한 가장 긴급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전시 군 교육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병학교의 확장을 필두로 각 병과학교를 창설 및 확장하였고, 외국 유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³⁰³⁾ 또한, 학교의 추가 창설 및 유사기구의 통폐합, 교육제도 면에서 각 학교 교육과정의 확장 설치 및 교육 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교육총감부는 1951년 11월 경남 부산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보병, 포병, 통신학교를 전남 광주로 옮겨 학교 내부정비 및 교육기구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지역을 「상무대」라고 명명하고 육군의 군사교육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³⁰⁴⁾

301)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69), p.332.

302) 육군본부, 『육군조직변천사』(계룡:육군본부, 1997), pp.91-92. 교육총감부가 창설되기 이전 군사영어학교를 비롯한 11개 학교 교육 훈련에 대한 지휘 통제는 육군본부 작전 교육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서울:육군본부, 1970), p.293.

303) 육군본부,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계룡:육군본부, 2001), p.429.

304)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서울:육군본부, 1970), pp.140-141.

휴전 이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하고 국토통일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교육총감부를 보강하여 각 교육계통의 학교와 신병훈련소를 통합하여 지휘·감독하는 기구로서 교육총본부를 창설(1954. 7. 6.)하였다.³⁰⁵⁾

군의 초창기에 미처 창설하지 못했거나 6·25전쟁으로 필요 때문에 그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교육대로서 교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과에 대해 병과학교를 추가로 창설하였는데 창설된 교육기관 현황은 아래 [표 8-2]와 같다.

[표 8-2] 1951년~1958년 교육 훈련 학교 창설 현황

사령부	학교명	창설근거	창설일	창설장소	비고
교육 총감부	고급 부관학교	국일명 제121호	1951. 8. 20.	경북 달성	부관업무 교육대를 모체로 창설
	제2훈련소	국일명 제160호	1951. 11. 1.	충남 논산	
	수송학교	국일명 제101호	1953. 4. 20.	경남 김해	
	기갑학교	육일명 제139호	1953. 5. 15.	전남 광주	보병학교 전차교육대를 분리 개편
교육 총본부	정훈학교	육일명 제185호	1954. 5. 14.	서울 용산	경북 대구 제1보충대 정훈 교육대를 모체로 창설
	여군훈련소	육일명 제189호	1955. 5. 22.	서울 서빙고	
	항공학교	국일명 제157호	1957. 7. 1.	전남 광주	1952. 1. 15. 포병학교 항공학과로 발족하여 1954. 5. 10. 개편된 항공 교육대를 모체로 창설
	화학학교	국일명 제20호	1958. 9. 30.	전남 광주	보병학교 화학 교육대를 분리 창설

※ 출처: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전투발전종합사』(대전: 교육사령부, 1984), p.123.

교육총본부는 관하 예하 부대의 지휘·감독과 육군본부 및 각 군과의 연락유지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사를 광주에서 대전으로 이동(1956. 10. 10.)하여 교육기관을 통합 지휘 감독하는 사령부로서 기틀을 확립하였다.³⁰⁶⁾ 교육총감부는 군악학교, 육군부사관학교를 해체(1954. 2.)³⁰⁷⁾하였고, 제1훈련소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제2훈련소에 통합(1956. 1.)하였

305) 육군교육총본부, 『교총사』 제1집(서울: 교육총본부, 1958), pp.3-5.

306) 1954년 10월 23일 정훈·정보·경리·헌병·부관·군악학교를 예속하였고, 11월 17일에는 수송·병기·공병·군의·병참학교가, 1955년 2월 28일에는 교재창이, 5월 22일에는 여군훈련소가 교육총본부에 예속되었다. 이어서 1957년 7월 1일에는 육군항공학교를 창설하여 예속시킴으로써 육군대학과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한 16개 병과학교와 4개 부대 등 총 20개 부대가 교육총본부에 예속되었다.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2008), pp.133-134.

307) 육군교육총본부, 『교총사』 제1집(대전: 교육총본부, 1958), pp.499-503.

다. 또한, 정보, 헌병, 경리, 부관학교의 영구 주둔지 공사를 완료하여 영구 주둔지인 경북 영천으로 학교를 각각 이전하였으며, 정훈학교도 이태원으로 이동하여 정착하게 하였다.

교육총본부는 창설 이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미국식 교육의 모방에만 그쳤던 종래의 군 교육 방향을 한국적 특수성에 부합되게, 한국군의 특질과 풍토에 적합한 보다 효율적이며, 독자적인 방향으로 연구·개발하여 이를 각 학교 교육에 반영시켰다. 이를 위하여 전투 발전부를 설치하여 연구기능을 편성하였고, 교육 훈련의 기반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 양성 및 보수교육

이 시기 신분별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교양성과정은 6·25전쟁으로 인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병과학교를 임시폐교 조치함으로써 장교양성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전쟁 초기의 지연 작전과 45일간의 낙동강 방어선의 혈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병력이 손실되었는데 그중 초급장교의 손실이 약 60%에 이르렀으므로 초급장교를 시급하게 보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폐교된 장교양성기관의 부활을 통해 초급장교의 보충과 육군사단의 재건과 신편 사단에 소요되는 초급장교를 획득하기 위하여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설립하였다.³⁰⁸⁾ 이외에 종합학교 양성만으로 부족한 초급장교 보충책의 하나로 육군보충장교령(대통령령 제383호, 1950. 8. 29.)에 의거 현지임관 제도를 도입하였다.³⁰⁹⁾ 1951년도에 들어 전선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종합학교를 폐쇄한 후 육군사관학교를 재개교하고, 갑종 간부후보생제도, 그리고 현지 임관제도를 통해 장교를 양성하였다.

[표 8-3] 광복 이후~1960년대 초의 육군 장교양성 과정

구분	운용 기간	구분	운용 기간
군사영어학교	1945. 12.~1946. 4.	육군종합학교	1950. 10.~1951. 8.
경비사관학교	1946. 5.~1948. 9.	보병학교(갑종)	1949. 7. 1951. 4.~1968. 8.
육군사관학교	1948. 9.~1950. 7. 1951. 10.~현재	현지임관	1950. 8.~1960. 6.

※ 출처: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전투 발전 종합사』, p.134.

308)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실록 6·25한국전쟁과 육군종합행정학교』(서울: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1995), pp.117~118.

309) 이 제도를 통해서 현지 임관한 장교의 수는 1950년 2,112명, 1951년 1,118명, 1952년 95명, 1953년도 735명 등 전쟁 기간 중 4,060명에 달하였다.

하사관(이하 부사관)³¹⁰⁾에 대한 양성 교육은 초창기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병으로부터 소요를 확보하여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성교육제도는 없었다. 군 장비현대화에 따라 정밀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부사관은 1959년에 52주 교육을 통하여 통신 전자분야를 비롯하여 8개 병과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을 획득하였다. 교육목적은 해당 주특기의 부사관으로서 실무근무 능력을 부여하는 데 두고, 해당 주특기 전문지식과 병의 실기지도능력을 부여하고 유사시 차상위 직책의 임무수행 능력 부여에 중점을 두었다.

부사관 보수교육은 1974년도까지 각 부대별로 지휘관에게 위임되어 실시되었으며, 보병 위주의 보수교육이 사단과 군단 부사관 교육대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총감부와 교육총본부 시기에는 학교 교육으로서 기술 특대와 학교에서 특기별 과정을 설치하여 부사관에 대한 주특기교육을 하였다.

신병 양성 교육은 초창기에 지원병제에 따라 현지 모병과 더불어 편성부대에서 교육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급증하는 병력의 소요충족을 위하여 [표 8-4]와 같이 대구 제1훈련소, 부산진 제2훈련소, 구포 제3훈련소, 제주도 제5훈련소, 삼랑진 제6훈련소 및 진해 제7훈련소 등이 설치되어 6개 훈련소에서 신병을 양성하였다.³¹¹⁾ 1951년 1월 제1훈련소가 제주도로 이동하고 같은 해 11월 제2훈련소를 대군 육성을 목적으로 충남 논산에 창설하여 기타 훈련소를 통합하였으며, 1956년 1월에는 제1훈련소를 폐쇄하여 제2훈련소로 통합하였다.

[표 8-4] 육군 신병훈련소 창설 현황

구분 훈련소	창설		재창설		비고
	일자	장소	일자	장소	
제1 훈련소	'50. 8. 14.	대구	—	—	• '50. 7. 11. 제25교육대로 발족 • '50. 8. 11. 중앙훈련소로 개칭 • '51. 1. 22. 제주도로 이동 • '56. 1. 1. 제2훈련소로 통합
제2 훈련소	'50. 8. 14.	부산	'51. 11. 1.	논산	• 제1·제3·제6훈련소 통합
제3 훈련소	'50. 8. 22.	경남 구포			• '53. 11. 1. 해체 제2훈련소에 편입
제5 훈련소	'50. 8. 22.	제주도	—		• '53. 11. 1. 해체
제6 훈련소	'50. 8. 29.	경남 삼랑진	—		• '53. 11. 1. 해체 제2훈련소에 편입
제7 훈련소	'50. 9. 11.	경남 진해	—		• '50. 12. 2. 포병훈련소 발족 • '51. 3. 10. 포병학교로 개칭

※ 출처: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서울: 육군본부, 1970), pp.489-491.

310) 하사관에 대한 명칭은 2001년 3월 27일부로 부사관으로 개칭되었다. 대통령령 제17158호(2001. 3. 27.)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311)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서울: 육군본부, 1968), p.332.

다른 훈련소를 제2훈련소로 통합하게 된 배경은 당시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병력의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병훈련을 전담하던 제1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어 6만~7만 명의 많은 병력을 양성하기에는 훈련장과 병영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였다. 특히 신병 교육 수료 이후 대한해협을 건너야 하는 등 병력 및 보급수송이 많이 불편하였다.³¹²⁾

또한, 점차 전선이 안정을 되찾아 가자 제주도를 ‘최후의 보루’로 고려할 필요성도 약화되었다. 논산의 제2훈련소는 1951년 11월 1일 창설된 이후, 1952년 2월 2일 훈련을 개시하였다.³¹³⁾ 제2훈련소는 포병이나 기술 및 행정병과의 신병훈련을 전담하여 전적으로 전반기 교육인 ‘병 기본 훈련’을 담당하였다. 제2훈련소는 전·후반기 8주의 교육과정으로 총 14,400명을 수용했으며, 8주의 기본교육 훈련을 수료한 일일 200명의 신병을 포병, 통신, 공병학교나 다른 기행 병과로 보충해 주었다.³¹⁴⁾ 1954년 9월 18일에는 훈련소가 육군본부 직할로부터 교육총본부로 예속이 변경되어 1일 입소 인원 500명에 대하여 훈련 기간을 12주에서 16주로 연장하였고 1956년 11월부터 후반기 8주를 4주로 단축하였다.³¹⁵⁾



〈사진 8-3〉 육군 제3훈련소 신병교육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교육총본부에서는 훈련소 8주 신병 교육에 관한 재연구와 검토 끝에 1960년 1월부터 전반기 8주 교육을 6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조정된 신병 교육은 종전의 부적합한 과목을 제거하고 사격술, 제식훈련, 각개전투 등 기타 군의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사병 특기병은 부대 교육대 교육과 특수학교 교육으로 양성하여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일반사회의 기술인력보다 군이 앞서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군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의 양성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특히 운전병의 양성이나 문맹자의 퇴치 등은 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며, 기술인력의 양성 또한 1970년대

산업일꾼들로 크게 이바지하였다.

312) 육군 제2훈련소, 『연무사』(논산: 제2훈련소, 1983), p.27.

313) 육군 제2훈련소, 『연무사』(논산: 제2훈련소, 1983), pp.27-28.

3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②(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44.

315)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서울: 육군본부, 1989), p.356.

해군은 신병을 양성하기 위하여 초창기의 신병교육대를 신병훈련소로 증편(1952. 4. 12.)하여 운영³¹⁶⁾하였으며, 각 기술병과학교육대는 1952년부터 각 학교로 승격시켜 해군종합학교 산하의 학교³¹⁷⁾로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휴전 이후 함정 인수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교육이 요청됨에 따라 소해·기상·전기·시설 등의 학교를 추가로 설치하여 직종별로 기술교육을 하였다. 이처럼 각 기술병과의 학교가 증설되자 교육기관의 총괄 운영을 위하여 신병훈련소와 해군종합학교를 통합하여 해군교육단을 창설(1956. 3. 21.)하였다.³¹⁸⁾

장교양성 교육은 해군사관학교 외에 군의를 비롯한 각 병과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 교육대를 해군사관학교 내에 설치하여 소정의 교육을 한 후에 특별채용하거나 장교로 임관시켰다. 보수교육인 고등군사반 교육은 해군사관학교령에 따라 1951년 4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부사관은 일등 수병이 병과 별로 부사관직을 선택하여 종합학교에서 교육받았고, 신병은 체력단련과 항해학·기관학 등 총 958시간을 교육받았다.

해병대에서는 해병학교(1951. 4. 5. 창설)가 기간이 된 해병대 교육단(1953. 2. 1. 창설)이 해병학교·해병대훈련소·기갑학교·통신학교를 산하단체로 운영하였다. 초창기에는 교육 시설의 미비로 각 군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상륙전 초등군사반을 비롯한 상륙전 고등군사반·부사관 학교·부사관 교관 교육대·야전위생학교가 증설되면서 해병대 교육단의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장교는 해병학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관되었고, 사병교육은 보통과와 전투학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1956년부터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사병들의 대량 전역으로 인한 보충 책으로 기성(既成) 부사관 교육을 중지하고 그 대신 부사관 후보생 교육을 하였다.³¹⁹⁾

공군의 교육제도는 6·25전쟁 중에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에 있던 제1항공교육대가 창설(1951. 4. 15.)되어 각종 부사관 및 일반병에 대한 기본 훈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1항공교육대를 기준으로 항공병학교가 창설(1952. 7. 1.)되어 제1항공교육대의 인원과 장비가 항공병학교로 통합되었다. 항공병학교는 사관학교에 따른 교육체제로 발전하여 각종 보충 장교의 군사 기본 훈련을 담당하였다. 이후 기술학교, 통신학교와 항공병학교를 통합하여 기술교육단을 창설(1956. 8. 1.)함으로써 교육제도가 체계화되었다. 장교는 항공병학교에서 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임관시킨 이후 분야별로 소정 기간의 기술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사병교육은 초창기에는 각단대(各團隊)에서 실시하였으

316)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50년사』(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pp.90-91.

317) 해군종합학교 예하에는 기관, 경리, 보수, 교관, 전담, 포술, 통신, 군악, 항해학교 등이 있었다.

318)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3집(서울: 해군본부, 1961), pp.203-211.

319)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서울: 해병대사령부, 1961), pp.138-141.

나 이후 제1항공교육대에서 일괄하여 하였다. 기술분야 교육은 항공병학교가 창설(1951. 3. 25.)됨에 따라 12주의 교육 이후 기술학교 및 통신 전자학교에서 이수하였다.

각 군 사관학교는 6·25전쟁 발발과 함께 임시휴교하였다가 다시 개교하여 사관생도 양성 교육을 재개하였다. 육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에서 재개교(1951. 10. 30.)하여 정규 4년제 사관학교로서 첫 출발을 하였으며 휴전 이후에 진해에서 태릉으로 복귀(1954. 6. 21. ~24.)하였다.³²⁰⁾ 해군사관학교는 6·25전쟁으로 잠시 정상수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교(1950. 10. 2.)하여 장교양성 교육을 하였다.³²¹⁾ 해군사관생도들은 6·25전쟁이 종전된 이후 1954년도부터 해사 9기생이 처음으로 원양실습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는 약 1개월간의 기간으로 동남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 등을 순방하였다.³²²⁾ 공군사관학교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경남 진해로 이전(1950. 7. 31.)하여 F-51기에 대한 지상 실무교육을 하였고,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10월 초 서울로 복귀하였으나, 중공군의 침공으로 유엔군이 철수하게 되자 대구(1950. 12. 22.)와 제주도 모슬포(1951. 1. 20.) 기지로 이동하였다. 공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현지 실습교육을 위하여 대구(1950. 12. 22.)와 사천(1951. 4. 21.) 기지에 분교를 설치하여 교육하였다. 이후 진해비행장으로 이전(1951. 5. 1.), 대구 및 사천분교를 통합하여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각종 장교후보생의 특수교육도 병행하여 교육하였다. 모슬포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본교가 진해분교를 통합하면서 진해로 이전하여 서울로 복귀(1958. 12. 19.)할 때까지 장교양성 교육을 하였다.³²³⁾ 한편 각 군 사관학교에 대한 교육법은 「법률 제374호(1955. 10. 1.)」로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385호(1958. 9. 4.)」로 제정되어 4년제 대학과정의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국방부는 국가안전 보장에 관여할 간부 요원들의 자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육·해·공 영관급 장교들과 국가공무원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국방대학을 창설(1955. 8. 15.)하였다. 국방대학은 학생들에게 정치·경제·군사 및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기존의 각 군 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원으로 개칭(1957. 1. 14.)³²⁴⁾되었다. 각 군에서는 고급지휘관과 일반 참모에게 고등 군사학을 연구하고 습득시키기 위하여 육군

320)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50년사』(서울: 육군사관학교, 1996), pp.34-193.

321)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50년사』(진해:해군사관학교, 1996), p.93.

322) 해사 생도들의 원양실습은 이후 1970년대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남미 및 북미지역, 1990년대에는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해양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2년에는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였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50년사』(진해:해군사관학교, 1996), pp.447-453.

323)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20년사』(서울:공군사관학교, 1974), pp.39-231.

324) 국방대학원, 『국방대학원 30년사』(서울:국방대학원, 1987), p.15.

대학(1951. 10. 28.), 해군대학(1955. 7. 1.)과 공군대학(1956. 7. 15.)을 창설하였다.

다.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에 의한 집중훈련

6·25전쟁 기간 중 한국군은 미군에 의하여 집중적인 부대훈련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51년 7월 당시 전선에 배치된 13개의 사단 중에서 한국군은 8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1951년 초 미군 지휘관들은 그동안 전선의 경험을 통해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 및 문제점에 관하여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특히 1951년 한국군 제6사단의 패배와 제3군단의 붕괴를 주요 사례로 들면서 한국군이 현재 필요한 것은 인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³²⁵⁾

벤 플리트(James A. Van Fleet)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군을 재편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으로 하여금 한국군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전담하도록 지시하였다.³²⁶⁾



〈사진 8-4〉 도미 유학생 환송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KMAG은 한국군 간부 및 보충병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자질 있는 간부를 육성하고 보충병들이 기본적인 전기를 익힌 후에 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MAG은 간부교육 기간을 16주에서 24주로 연장하였으며, 신병훈련소를 확충하고 교육시간도 늘렸다.³²⁷⁾ 한국군 장교들은 미국의 군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1951년 20명, 1952년에 594명, 1953년에 829명, 1954년에는 1,019명이 교육을 받고 귀국하였다. 이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1950년대 말과

325) R.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5), p.170.

326) KMAG은 한국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첫째, 한국군 보충병에 대한 훈련 강화 및 교육 훈련체계 재구성, 둘째, 한국군 교육 훈련기관의 지휘 통제 일원화, 셋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강화, 넷째, 미 병과학교에서 한국군 장교에 대한 교육 훈련, 다섯째, 모든 한국군 보병사단에 대한 부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Part IV- MAG'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327) 박일송, “전쟁 중국군의 충원과 교육 훈련,”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②(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41-46. 벤 플리트 사령관은 취임 직후 신병훈련소 설립을 지시하고, 신병훈련소를 점차 확대 개편하여 보병학교, 포병학교, 통신학교 등으로 재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141.

1960년대 초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장교들이 코누스(CONUS: Continental United States) 프로그램에 따라 미 육군의 군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미국식 교육을 받은 이들은 한국군 교육기관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거나, 야전에서 교육 훈련체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벤 플리트 장군은 한국군 사단을 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야전훈련사령부(FTC: Field Training Center)를 창설(1951. 8. 12.)하였고, 한국군 제9사단이 최초로 훈련소에 입소(1951. 8. 18.)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는 유사시 48시간 내로 전선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벤 플리트 장군의 의도에 따라 전선 인근 지역인 미 제10군단, 미 제1군단, 한국군 모든 군단의 후방지역에 각각 설치하였다.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가 제공하는 한국군 사단 훈련프로그램을 통과하였다. 백선엽 장군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야전훈련사령부에서 받았던 훈련이 오늘날 육군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되었다”³²⁸⁾라고 술회하였다.

[표 8-5] 야전훈련사령부 훈련 현황

명칭	FTC#1 (제10야전 훈련사령부)	FTC#2 (제20야전 훈련사령부)	FTC#3 (제30야전 훈련사령부)	FTC#4 (제40야전 훈련사령부)
지역	부평리	양양	양구	사창리
지역담당 군단	미 제1군단	한 제1군단	미 제10군단	미 제9군단
국군 부대 훈련 및 훈련 기간	제9사단, 제8사단, 제1사단, 수도사단 (1951. 8. ~1952. 12.)	제3사단, 제5사단, 제11사단, 제12사단, 제15사단, 제20사단, 제21사단, 제22사단, 제25사단 (1951. 9. ~1953. 7.)	제7사단, 제3사단, 제6사단 (1951. 10. ~1952. 3.)	제2사단, 제8사단, 제9사단, 제22사단 (1952. 4. ~1953. 7.)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483.; 유성중,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군사』 제91호(2016. 6.), p.15.

1952년 6월까지 수도사단을 제외한 한국군 9개 사단이 훈련을 종료한 이후 제1·제3·제4야전훈련사령부의 부대들은 각 군단으로 원복하였다. 그러나 제2야전훈련사령부만이 KMAC의 지휘계선상에 잔류하였다가 부대훈련소(UTC: Unit Training Center)로 개칭되

328)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서울: 지구촌, 1999), p.209.

었다. 부대훈련소는 한국군의 보충 연대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하였으며, 1952년 말에는 추가로 창설될 한국군 2개 사단에 대한 부대훈련을 진행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 기간은 2주에서 9주로 매우 다양하여 모든 사단이 9주 동안의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단들이 최소한 2주간의 훈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1주 차에 진행되었던 검열과 재보급의 절차는 반드시 통과하였다. 이 훈련으로 한국군은 충분한 보충을 통해 부대를 정비하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³²⁹⁾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을 통해서 한국군 사단들은 전반적으로 전투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1952년 8월과 9월 공산군의 공세가 매우 격렬해지기 시작하여 10월에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한국군 사단들은 이들의 강력한 공세를 차단하고 격퇴하였다. 한국군 사단들은 전쟁 초기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투 가치를 입증하였다. 미 육군부는 10월 10일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 사단의 능력과 안정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카투사(KATUSA) 인력을 확장하고 한국군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여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점차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달하였다.³³⁰⁾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발전된 한국군 사단의 전투역량은 궁극적으로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계획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4. 교육훈련체계 구축기(1961년~1989년)

우리 군의 교육 훈련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교육각서에 의해 미군의 교육 훈련제도와 그 교리를 준용하였다. 이때까지 우리 군의 교육 훈련은 군별로 학교 설치령 등에 근거하여 교육기관 중심으로 양성 및 보수교육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1962년 1월 군인사법 제정 시 교육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최초로 군의 교육 훈련에 대한 기초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국군교육 훈련의 이념³³¹⁾과 방침을 제정하여 교육 훈련의 체제를 정립하였다.³³²⁾ 우리 군의 교육 훈련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는 1971년 4월 1일 미 군사고문단의 임무와 기능이 주한 미군사령부에 흡수되

329) 한신, 『신념의 삶 속에서』(서울: 명성 출판사, 1994), pp.263-264.

330) "Extension of ROK Army, 1 Nov. 1952,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6, Top Secret Correspondence, compiled 1948-1952, Entry UD 2A, 091 Korea 1951-1952.

331) 교육 훈련 이념은 첫째, 자유와 민주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삼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이 되게 한다. 둘째, 모든 침략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셋째,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민족과 인류 앞에 봉사의 책임과 희생의 정신을 갖게 한다.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185.

332) 국방부, 『국방백서 1967』(서울: 국방부, 1966), p.68.

어 교육각서가 폐기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국군교육 이념을 다시 제정하여 공포³³³⁾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우리 군의 교육 훈련은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군의 현대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 훈련제도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시기였다. 아울러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한미연합작전태세를 유지하고 각종 훈련부대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횟수를 증가하여 입체적인 연합 및 합동작전체제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에는 실전적인 야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훈련 기본지침(1985. 2.)」을 지시하고 제대별 연간 훈련횟수를 통제하였다.³³⁴⁾ 또한, 각 군 간에 합동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상무훈련계획」을 추진(1984)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매 분기 1회씩 주요 축선 및 작전지역을 선정하여 훈련함으로써 합동작전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시기에 팀스피리트(TS: Team Spirit) 훈련, 을지포커스렌즈(UFL: Ul-chi Focus Lens) 지휘소 연습 등 다양한 한미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트남에 파병된 주월한국군은 주월한국군사령부의 통제하에 교육 훈련을 하였다.

가. 양성 및 보수교육

육군은 군수 분야 기술교육 책임이 육군본부 각 병과감실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총본부를 해체(1960. 5. 31.)하고 6월 1일부로 전투병과교육사령부를 창설하였다.³³⁵⁾ 아울러 행정병과학교를 통합한 종합행정학교³³⁶⁾를 창설(1968. 10. 15.)하고 지휘체제를 개선하는 등 대형화되어가는 교육체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군의 현대화계획이 급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한국군의 실정에 부합된 제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³³⁷⁾

육군교육사령부가 창설(1980. 5. 1.)³³⁸⁾되기 이전까지 1960년대의 교육 훈련은 미 8군

333) 국방부 훈령 제66호(1973. 8. 30.) 「국군교육 이념」

334)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p.460-462.

335)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서울: 육군본부, 1970), p.293.

336)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제2·제3사관학교와 육군본부의 각 감과 실에 예속된 군수·정훈·경리·부관·헌병·정보 등 각 학교를 통합하여 창설하였다.

337)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4집(서울: 육군본부, 1984), p.436.

338) 육군교육사령부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1960. 6. 1.), 전투 발전사령부(1967. 4. 1.), 연구발전사령부(1970. 3. 1.), 연구발전사령부 해체(1975. 9. 1.)의 과정을 거쳐 창설(1981. 5. 1.)되어 육군의 전투 발전과 교육 훈련 기능을 통합하였다. 육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부대연혁), <http://educmd.army.milmenu.es?mid=ac0101020000>(검색일: 2020년 1월 10일).

으로부터 훈련통제권을 한국군이 인수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와 유사하게 창설부대형 훈련체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실시하는 교육 훈련 간에 불일치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1970년대에는 예상되는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부대훈련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추구한 결과 1975년도에 육군본부에 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교육참모부를 창설하여 교육 훈련규정, 훈련계획 및 부대훈련 시험규정 등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시작하였다.³³⁹⁾

장교 양성교육제도는 간부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현지 임관제도는 1960년 5월에, 갑종 간부 후보생제도는 1968년 8월에 각각 폐지하였으며 부족한 초급장교의 보충과 우수장교의 군 유치를 위하여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를 1961년부터 시행하였다.³⁴⁰⁾ 이에 따라 갑종 간부후보생제도는 폐지(1968. 8.)되었다. 장교의 임관 구분 및 교육 기관의 단일화와 단기교육으로 인한 군인정신, 군사지식 그리고 지휘통솔의 결함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광주에 제2사관학교, 영천에 제3사관학교를 각각 창설(1968. 10. 15.)하였다.³⁴¹⁾ 그러나 2개 학교의 유사한 성격과 인원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제2사관학교를 제3사관학교에 통합(1972. 4. 26.)하였다.³⁴²⁾ 이후 육군의 장교양성 교육은 정규사관학교, 학군



〈사진 8-5〉 제2사관학교 제3사관학교로 통합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1998)

단, 단기사관, 특수간부, 기술사관 과정으로 실시해 왔으나, 1981년 단기사관 과정을 폐지하고 학사 후보생 과정을 신설하였다. 특수 간부후보생 제도는 법무, 군종, 의무, 경리 등 군의 특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1966년부터 운용하였으며, 기술 사관후보생 제도는 1974년부터 실시하여 보병학교의 기본교육과 각 병과학교의 병과 교육을 이수시켜 임관 배출하였다.

장교 보수교육은 초등군사반(초군반)

339)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4집(서울: 육군본부, 1984), p.647-45.

340) 1961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6개 대학, 1964년 외국어대 등 5개 대학, 1965년에는 단국대 등 6개 대학, 1966년에는 광운공대, 1968년에는 우석대 등 3개 대학, 1970년에는 국민대 등 2개 대학, 원광대 등 4개 대학에 학군단 분단이 설치되었다. 육군본부, 『학생군사교육발전사』(서울: 육군본부, 1986), pp.75-82.

341)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40년사』(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2008), pp.34-39.

342)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40년사』(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2008), pp.111-114.

교육과 고등군사반(고군반) 교육 그리고 육군대학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초군반 과정은 초급장교를 대상으로 17~19주 동안 각 임관 출신별로 분리하여 실시하였으며, 해병대 신입장교들을 위한 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용하였다. 고군반 과정은 19~28주 과정을 운용하다가 1981년도부터 24주 과정으로 단축하여 운용하였다.

부사관의 양성 교육은 양성과정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었고 진급에 의한 현지 임용제도를 적용하여 오다가 1959년 소년병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교육기관에 의한 양성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다. 부사관 보수교육제도는 부대별 위임제도에서 1974년부터 각 병과학교에 초급·중급·주임상사반의 3개 과정을 신설 교육함으로써 비로소 정규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제1·3부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제2부사관학교에 통합하여 육군부사관학교로 개편(1981. 10. 30.)하여 양성과 보수교육을 일원화하여 실시하였다.

[표 8-6] 1960년~1980년 초 육군부사관 교육의 변천

변천		1960	1965	1970	1975	1980
제도						
진급확보제도		□ (~1961, 장단기 구분)				
소년병 제도		■ 8개 병과(~1970)				
복무 유지	현역병 지원	■ 제1부사관학교(1961~1981)				
		■ 제2부사관학교(1966~)				
단기 간부 모집		■ 제3부사관학교(1973~1981)				
		■ 제1·2·3부사관학교(1964~)				
장 학 생	협약 학교	■ 통신전자 : 100(1961~), 8개 병과 39개교(1971~) 8개 병과 68개교(1979~)				
	금오 공고	■ 1976~				

※ 출처: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전투발전 종합사』, p.167.

국방부는 초등학교 정교사의 군입대와 전직으로 인한 교사의 부족난을 해소하고 교사의 자질향상 및 군의 초급지휘자 양성을 위해서 서울교육대학을 비롯한 전 교육대학에 학생군사교육단(RNTC: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을 창설(1969. 7.)하였다.³⁴³⁾ RNTC 제도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에게 소정의 군사교육을 한 이후 예비역 하사로 임용하여, 현역복무를 면제하고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³⁴⁴⁾ 또한, 군은 1970년대 현대화된 장비를 조작할 기술부사관의 소요가 급증하자 금오공고에 예비역무관후보생 과정을 설치하여 전원에게 학생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료자들은 각 군에 기술부사관으로 소정의 기간을 복무하였다.³⁴⁵⁾

신병 양성 교육은 1962년 무기의 발달로 인해 일시의 대량피해를 회피하고 향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2훈련소에서만 실시하던 신병 교육을 각 후방사단으로 소산하여 실시하였다. 1962년 12월부터 제31·제50사단에서, 1963년 3월에는 제39사단에서도 훈련을 하였다. 1968년 5월부터는 전반기 훈련 담당부대를 다시 확대하여 제50·제32·제35·제37 및 제38사단에서도 신병을 양성하도록 하였는데 보병과 특기병 요원을 혼합 편성하여 6주



〈사진 8-6〉 육군 제2훈련소 신병교육

※ 출처: 육군훈련소, 『68주년 기념화보집』(2019)

간 교육하였다. 이후 보병 요원은 각 군의 후반기 과정으로, 기술병과 요원은 각 기술병과 학교와 실무부대로 배출하였다.³⁴⁶⁾ 이후 신병 교육은 1979년부터 전방사단으로 확대 분산하여 교육하였다. 1977년도에는 전반기 6주 교육을 학력에 따라 교육기간을 조정하였는데 고졸 이상자는 4주, 고졸 이하 자는 6주로 차등제 주기를 적용하였으나 1978년 9월부터 4주로 단일화하였다. 1979년에 육군의 교육 훈련제도가 임무 위주 훈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전방사단에 신병교육대가 설치되어 동일기지 개념

(OSUT: One Station Unit Training)에 의한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특기 및 실무기초 4주, 보병소총 및 공용화기반은 8주 동안 교육하였다.³⁴⁷⁾

해군은 1973년 해병대가 해체되어 해군에 통합됨에 따라 해군사관학교는 해병학교의 재

343) 육군본부, 『학생군사교육발전사』(서울: 육군본부, 1986), pp.93-97.

344)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198.

345) 육군본부, 『학생군사교육발전사』(서울: 육군본부, 1986), p.115.

346)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서울: 육군본부, 1989), p.356.

347)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p.304-305.

산 일체와 피교육자를 인수하였고, 해군대학은 해병지휘참모대학(1961. 1. 1. 창설)의 재산 일체를 인수하였다.³⁴⁸⁾ 해군교육단에 해군교육기지사령부의 업무와 해병 신병 교육을 위한 신병훈련소, 제3대대, 제4대대 및 훈련장관리대가 신편되었다.

장교양성 교육은 정규사관, 제2사관학교, 사관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등이 있었으며, 군의, 군중, 법무장교 등의 양성은 국방부 계획에 의거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교육한 후 임관과 동시에 해군에 전입되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해군 제2사관



〈사진 8-7〉 해군사관생도 수업 장면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학교는 중·단기 복무장교의 양성체제 개선방침에 따라 해체(1983. 8. 31.)하였고, 교육단 예하에 병과학교를 창설(1983. 9. 1.)하여 병과교육과 실무 보수교육을 강화하였다.³⁴⁹⁾ 이후 교육단을 해체(1987. 6. 30.)하고 교육사령부를 창설(1987. 7. 1.)하여 교육사령부를 중심으로 대양해군 발전을 위한 정예 해군장병 육성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사관양성 교육은 부사관 지원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발하여 신병훈련소에서 기초 군사교육을 한 이후 특기별로 보통과 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수료하여 하사로 임용 후 해당 부대로 배치되었다. 보수교육은 직별(職別)로 병과학교에서 전문지식과 상위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다.

신병양성과정은 해상병과(수병)는 신병훈련소에서, 상륙병과(해병)는 제2훈련단에서 실시하였으며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이후 실무에 배치하였다. 해군교육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부사관과 신병에 대한 기초군사교육을 전담하던 신병훈련소를 기초군사학교로 개편(1987. 7. 1.)하여 해군장교, 부사관 그리고 수병이 될 자에 대한 신분전환과 기초군사교육을 전담하게 하였다. 또한, 부사관과 수병에 대한 병과별 전문화 교육과 장병의 정신전력 교육을 전담하던 종합기술학교와 장교교육을 전담하던 병과학교를 해체하여 전투분야 병과의 장교, 부사관 그리고 수병에 대한 병과교육을 전담하는 전투병과학교와 행정, 군수, 관리분야 병과의 장교, 부사관 그리고 수병에 대한 병과교육과 정신전력 교육을 전담하는 행정학교 등을 창설(1987. 7. 1.)하였다.³⁵⁰⁾ 위와 같이 해군은 신분별 학교 교육체계를 기능별 학교 교육체제로 전환하여

348) 해군본부, 『해병대 편제 연혁』(계룡: 해군본부, 2003), pp.41-45.

349)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60년사』(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p.259.

350)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60년사』(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p.260.

신병으로부터 중견장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의 장병에 대한 교육체계를 정립하였다.

공군은 전시에 즉각적인 공군전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공군기술고등학교와 학생군사훈련단을 창설(1971)하였고, 기술교육단을 해체하고 교육사령부를 창설(1973. 4. 10.)하여 공군 교육을 일원화하였다. 장교양성 교육은 정규사관, 학군사관 후보, 사관 후보 과정에서 양성하여 배출하였다. 군의, 군종, 법무장교의 양성과정은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 후 임관과 동시에 공군에 전입되었다.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은 직무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중견간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부사관은 기술고등학교 3년 과정과 16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 하사로 임관시켜 배출하는 단기과정을 통해서 양성하였다. 보수교육은 초급, 고급, 고급전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신병은 항공병학교에서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과 4~16주간의 특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무 부대에 배치되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원을 국방대학으로 개칭(1961. 12. 31.)하여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전술의 교육과 연구발전 임무로 변경하여 국가안전 보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치하였다.³⁵¹⁾ 이어서 합동참모대학을 창설(1963. 8. 24.)하여 합동 군사전략의 연구와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하게 하였다.³⁵²⁾ 또한, 학교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방대학원 교육과정은 그동안 3개 정규교육과정을 안보과정으로 단일화(1981)하여 운용하였으며, 사관학교 교수 상호 교환 강의(1986. 9.)를 하였다. 학교 군사교육 훈련의 혁신을 위한 학생 군사훈련 전담기구를 편성하여 그동안 이원화로 인한 교육 훈련 성과 달성의 미흡과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1985년 11월부터 서울지역은 학생중앙군사학교(1985. 11. 1. 창설)가 재경 지역의 학군단을 관장하고, 지방은 육군교육사령부 예하 5개 병과 교가 육군의 지휘체제에 따라 각 군사령관 책임하에 해당 학군단을 통제하도록 하였다.³⁵³⁾ 일반 대학생 전방부대훈련제도는 점차로 교육대상과 시간을 축소하여 1989년 2월에 최종 폐지하였다.³⁵⁴⁾

나. 부대훈련

1978년 육군은 훈련제도를 창설부대형 훈련에서 임무위주 교육 훈련제도³⁵⁵⁾로 전환과 동시에 개인 및 부대훈련 합격 기준의 설정 등을 제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교육 훈련

351) 국방대학원, 『국방대학원 30년사』(서울: 국방대학원, 1987), p.55.

352) 합동참모대학, 『합동참모대학사』(서울: 합동참모대학, 1975), pp.5-7.

353) 국방부, 『국방예산개혁』(서울: 국방부, 1986), pp.52-63.

354) 국방군사연구소, 『국방부사 1986-1988』(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1), p.253.

355) 임무위주 훈련의 개념은 전투임무위주 훈련을 적용하기 전까지 육군에서 적용하였으며, 훈련방법에서는 1982년 ‘제대별 책임제 훈련’과 1989년 ‘과제에 의한 훈련’을 발전시켰다.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변천사』(계룡: 육군본부, 2019), p.245.

저해요소인 영농, 양돈, PX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였고, 교육예산도 대폭으로 증액하는 등 교육 훈련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³⁵⁶⁾

임무위주훈련은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누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임무위주훈련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임무위주훈련을 통하여 개인 및 부대에게 현재 부여된 임무와 장차 예상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필수 임무분



〈사진 8-8〉 해병대 설한지 훈련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야를 훈련하여 연중 균형 잡힌 전투력 유지와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 실질적인 군의 전투력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4월부터 임무위주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대별 책임제 교육훈련제도를 발전시켰다. 이 제도의 핵심은 분대장 교관화 제도와 대대장 중심의 간부교육이었다. 이밖에도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 제대별 동시훈련, 성과위주 훈련을 통해 통합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제대별로 가용한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훈련하게 하였다.³⁵⁷⁾

다. 합동훈련 및 한미 연합훈련

합동훈련과 연합훈련은 1960년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됐으나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8년부터이다. 1968년에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1·23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각종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이 시행되었다. 1970년대 들어와 훈련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지면서 훈련의 효과와 빈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1987년에 유사훈련을 검토하고 통합하여 실전적이고 입체적으로 실시하여 훈련의 질을 향상하였다.

합참주관으로 1977년 최초로 사단 단위부대의 전방 전개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동원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쌍용훈련’을 매년 실시하였다. 또한, 1988년부터는 육군의 상무훈련, 해군의 통해훈련, 공군의 필승훈련을 통합하여 ‘통일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대간

356)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서울: 육군본부, 1989), p.353.

357)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변천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2019), p.246.

첩작전본부 주관으로 후방지역 통합방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도권 대침투종합훈련’(1977~1981)을 연 2~3개의 시와 도가 참가하는 ‘대비정규전훈련’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한미연합사령부(CFC) 창설(1978. 11. 7.)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1970년대에 비해 2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주요 훈련은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팀스피리트(TS)훈련, 독수리(FE: Foal Eagle)연습 등으로 매년 1회씩 일정 기간 실시하였다. 이후 팀스피리트훈련은 4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8월, 독수리연습은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기간 중 세부적인 연합훈련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작전능력의 향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의 방위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군, 주한미군, 해외미군, 기타 유엔군 등이 포함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1960년 1월 미 제8군사령관 지휘 아래 한국 육군 제1군·미 제1군단·유도탄부대 등이 참가하여 ‘이른 새벽작전’이라는 한미기동훈련을 하였다. 1961년 11월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유엔군과 한국군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참가시켜 전투효과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1961년에 최초로 특전단 예하 1개 대대와 미군 1개 지역대 규모가 한미 혼성작전팀을 구성하여 ‘독수리훈련’이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1966년부터는 훈련지역이 2군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미군의 참가 규모도 지역대에서 대대 규모로 증가하였다. 1975년에는 명칭을 ‘독수리연습’으로 개칭하여 한미 연합비정규전훈련으로 확대하였고, 1976년부터는 특전 1개 여단 이상의 규모가 훈련에 참여하여 팀스피리트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독수리연습은 태평양지구사령부 한미연합훈련 61-1(003500-3호, 1961. 2. 27.)에 따른 한미합동비정규전 야외훈련으로서 한미합의각서에 의해서 연합사와 국방부 간에 훈련 일정, 목표, 참가 범위, 전술개념, 통제계획의 작성 책임 등을 명시하고, 이 합의각서를 기초로 훈련 지시 및 최초계획이 작성되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주로 한미합동비정규전 능력을 향상하고, 대비정규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며, 연합비정규전 내규를 검토하는 것에 있었다.³⁵⁸⁾ 1982년부터는 침투훈련 등 비정규전 개념에서 벗어나 정규전개념을 적용하여 특수작전과 후방지역 작전 간 쌍방훈련으로 발전하였다. 이 훈련을 통해 작계 5027상의 연합특수전 부대의 편성, 전개, 지원, 통제, 통신절차에 숙달하였고, 북한의 특수작전부대에 대응하는 각급 부대의 방어계획을 검토 발전시키고 주요 시설에 대한 한미 간의 방호계획을 보완하였다.³⁵⁹⁾

358)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4집(서울: 육군본부, 1984), p.474.

359) 육군본부, 『육군 50년 발전사』(계룡: 육군본부, 1998), pp.562-563.

1962년 2월 한국군 3개 사단과 미군·터키군·태국군이 참가하는 합동기동훈련인 ‘우박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었던 1967년부터 1969년까지 3년간 한미 간 연합훈련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미군의 최신장비와 전술적 운용 외에도 전문성이 높은 미군 지휘관들의 지휘능력과 적극적인 훈련 자세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³⁶⁰⁾



〈사진 8-9〉 한미 포커스 레티나 연습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연합연습·훈련이 확대되었다. 1969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체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한미연합 공수기동훈련인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연습³⁶¹⁾이 실시되었다. 1971년에는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와 관련하여 프리덤 볼트(Freedom Bolt)연습³⁶²⁾을 실시하였다. 1976년에는 한국 정부의 을지연습과 유엔사의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하여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 Ul-chi Focus Lens)이라는 명칭으로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것은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소 연습(Focus Lens, 포커스렌즈)과 한국 정부의 전쟁 지도 연습(Ul-chi, 을지연습)을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던 것을 유엔군사령부 측의 제안에 따라 통합(1976. 7. 10.~17.)한 것이었다. 1978년까지 연 1회씩 3년간 실시되다가 전략지시 제1호(1978. 11. 7.)에 의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연합훈련양해각서」와 「합의각서」에 의해서 군사 분야의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계획을 주관하고, 민간분야의 연습은 안보비상기획위원회에서 계획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 연습을 통하여 한미 양국 군은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계 5027

3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229-232.

361) 포커스 레티나 연습(1969. 3. 15.~20.)은 닉슨 독트린의 선언과 관련하여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의무 수행 결의와 미 본토의 전략예비대병력 공수투입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군의 해외 군소기지 정리 및 지상군 감축 근거를 산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를 검토하기 위해서 유엔군사령부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pp.351-353.

362) 프리덤 볼트 연습(1971. 3. 3.~6.)은 미 제7사단의 철수에 앞서 전략적 시험으로써 대북한 결의를 과시하고 한국과 아시아의 평화유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한미 합참 지원 아래에 유엔군사령부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서울신문사, 1979), pp.365-367.

을 발전시켰다.

또한, 대규모 야외기동연습인 팀스피리트훈련을 1976년 6월에 최초로 시행하였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무력시위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말살하고 한미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지원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특히 카터(James E. Jimmy Carter, Jr.) 미 행정부의 미지상군 철수정책의 발표와 때를 같이 하여 실시되었고 그 후 매년 훈련을 지속하였다. 이 훈련은 미 합참 지시와 미태평양사령부 후원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 간의 합의각서에 의해서 연합사 주관하에 미 본토와 미 태평양지구 미군 병력을 증원받아 실시하는 한미 연합기동훈련으로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기에 미군의 공군력을 증원 투입하여 이를 운용하는 데 주안을 두고 한국의 방위준비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CFC)가 창설됨에 따라 한미연합훈련과 연습의 주관은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한미 간에 연합연습(훈련)의 협조와 통제를 위한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1979. 2. 15.)함으로써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군사 분야 지휘소 연습인 포커스 클리어(Focus Clear)연습을 워게임(War Game)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1988년에는 한미 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의거 한미 양국은 작계 5027의 절차를 연습하였다.³⁶³⁾ 이 연습은 1991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 통합되었다. 1980년대에는 육군 18회, 해군 36회, 공군 35회 등 총 252회의 연합훈련을 시행하였다.

라. 주월한국군의 교육 훈련

한국 정부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 파병하였다. 주월한국군은 월남 내 베트콩과 월맹군을 격멸하고 월남 정부의 통제지역을 확장하여 평정 사업을 지원하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병 기본 훈련과 정규전 및 대비정규전에 필요한 전술훈련을 하였다. 또한, 개인과 부대의 전투력을 계속 배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승하는 데 교육 훈련의 목표를 두었다.

파월 초기에는 훈련시간을 통제함이 없이 모든 교육 훈련은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시간을 이용하였으며, 1969년도에는 총교육시간의 통제는 없었으나 전투부대는 주당 4시간 이상의 전술훈련을 하였다. 1970년에는 전투부대는 주당 16시간, 비전투부

363)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p.167-168.

대(기술행정부대)는 주당 6시간의 훈련을 하였고 1971년부터 철수 시까지 전투부대는 연간 600시간, 비전투부대는 300~400시간 훈련을 하였다. 해군과 공군의 훈련시간은 기술행정부대(기행부대)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³⁶⁴⁾ 교육 훈련 평가는 일반이나 특별참모들로 구성된 교육 훈련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 단위로 각 부대를 순회하며 교육 훈련 수준을 측정하였다.³⁶⁵⁾ 주요 훈련은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기술학으로 구분하고 전투부대는 일반학 10%, 화기학 30%, 전술학 60% 비율로 실시하였으며, 비전투부대는 일반학 10%, 화기학 20%, 전술학 30%, 기술학 40%의 비율로 실시하였다.³⁶⁶⁾

주월한국군에게 미군과 남베트남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교리와 훈련, 참가국에 대한 이해와 언어소통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공중기동에 의한 연합작전, 특수전 훈련 및 베트남어 교육 등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를 위해 주월한국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육 훈련을 하였다.

첫째,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나짱(Nha Trang)에 있는 미 레콘도(Recondo) 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총 341명이 이 교육을 수료하여 정글 지대 작전 수행에 이바지하였으며, 특수작전부대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³⁶⁷⁾

둘째, 남베트남군 공군 제33전투단에서 실시하는 링크(Link) 교육을 받았으며, 제100군 수사령부 제11항공중대에서는 자체훈련으로 12명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육군 항공 전력은 1968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 작전 중이던 12월 12일 헬리콥터 타격 중대를 창설하는 토대가 되었다.³⁶⁸⁾ 이 타격 중대는 베트남전에서 헬리콥터 조정 경험이 있는 조종사와 미국에서 훈련받은 조종사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었는데 육군의 전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셋째, 전투공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각 부대 인근의 미 공병대대 위탁 교육을 통해 밀림 및 교통호 개척 장비 등 신형장비의 조작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신형무기인 토우(TOW) 교육을 받는 동시에 남베트남군 지방군과 민병대의 훈련을 지원하기도 하였다.³⁶⁹⁾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는 남베트남군 민병대를 교육하기 위하여 연대에 1개 중대를

364)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p.1070.

3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152.

366)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p.1071.

3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452-459.

368) 1967년 제11 항공중대를 창설하기 위해 헬기 및 U-8 조종 및 정비 교육을 위해 장교 19명, 부사관 19명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또한, 남베트남 공군에서의 링크 교육은 1967년 2월 23일~12월 30일까지 1명씩 2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

3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4), pp.1077-1083.

지정하여 교육대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남베트남군 중대급 60~70여 명이 교육에 입소하여 1주일 동안 정신교육, 사격술, 수색과 매복, 진지방어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받았다. 교육 인원은 연간 2천여 명이였다.³⁷⁰⁾



〈사진 8-10〉 헬리콥터 중대 창설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넷째, 베트남어 통역관과 베트남어 필수요원을 양성하고 다국적군과 연합작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베트남어 교육을 하였다.³⁷¹⁾

보수교육으로 전입 장병교육은 부대별로 교육대를 설치하여 전입 장교는 1주간, 전입 사병은 2주간에 걸쳐 부대 실정에 부합되게 집체 및 진중근무를 하였다. 특히 전입 장교의 경우 예하 전투사단에 파견되어 1주간의 진중근무를 통해 예하 부대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⁷²⁾ 간부자질 향상을 위해 장교는 차상급 직책 수행능력을 부여하고 부사관은 소대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특히 부대 지휘

및 상황처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귀국 장병 훈련은 귀국 1주일 전부터 중(포)대장 책임하에 주월군의 업적 및 활동상황, 개선 장병으로서의 긍지와 정신자세 귀국 장병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5.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기(1990년~현재)

우리 군은 1980년대 말까지 양성 및 보수교육에 대한 체계를 정립한 이후 19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부대훈련에 집중하여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별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적의 전술을 고려하여 각 군에 부여된 임무 공간에서 전투 임무 수행능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종 훈련을 하였다. 2000년대 들어 군에서는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장차전 양상에 부합된 교육훈련과 유능한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576-577.

3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4), pp.1075-1076.

372)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pp.1074-1075.

가. 합동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방부에서는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0년에는 합동군 구조에 부합되고 연합 및 합동 작전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방참모대학을 설치함으로써 군사 전문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방참모대학은 2000년 합동참모대학으로 개칭되어 합동작전 전문가를 육성해오고 있다. 또한, 양성교육 과정에서부터 각 군의 문화를 이해하고 합동성



〈그림 8-1〉 합동군사대학교 상징물

※ 출처: 합동군사대학교

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에게 2012년부터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³⁷³⁾ 영관급 장교들의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육·해·공군대학을 통합하여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2011. 12. 1.)하였다.³⁷⁴⁾

군사전문 인력 석·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5년 육·해·공군사관학교에 군사과학대학원을 창설하여 운용하였으나 1999년 해체하였다. 2008년 국방대학교에 안보 및 군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박사과정을 신설하였다.³⁷⁵⁾

나. 양성 및 보수교육

육군은 장교양성 교육을 군의 학력 수준 향상에 발맞추기 위해 제3사관학교를 기존의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단기교육을 해오던 것을 1995년도에 재개편하여 2년제 사관생도 과정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간부후보생(OCS: Officer Candidate School) 제도를 신설하여 1996년도에 처음으로 배출하였다.

보수교육으로 고등군사반 교육은 1992년부터 20주로 교육 기간이 정착되었고, 초등군사반 교육은 임관 출신별로 구분하여 교육 기간을 기초군사교육 정도에 따라 다르게 실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육군대학은 1989년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오다가 1996년도에 정규과정과 선발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하였다. 이후 정규과정과

373)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74.

374)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pp.239-242.

375)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p.142.

단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영관장교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장교를 육성하고 있다. 육군대학과 육군의 병과학교에서는 전술담임교관제·교육평정제도를 2011년도에 시험적용을 거쳐 2012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³⁷⁶⁾

부사관교육은 1980년대 말까지 보병반 과정과 특과병반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0년 1월 1일부로 기본과정과 하사반으로 과정명칭을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보수교육은 교육 공백 기간을 해소하고 부사관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육목표 및 중점, 과정의 변천을 거쳐 야전과 연계되고 구체적인 계급별 직책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부사관 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유능한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간부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장교·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임관 전에 종합평가를 통해 일정 자격기준을 통과한 간부만 임관시키고 있다.³⁷⁷⁾ 2014년 60명, 2015년 36명, 2016년도에는 77명이 불합격하여 임관에서 제외되었으며, 28명의 임관종합평가관을 운용하고 있다.

신병양성 교육은 1980년대 정착된 교육체계에 따라 육군 제2훈련소, 전방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이루어졌다. 1995년 신병 교육 기간 중 투철한 군인정신과 대적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훈련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교육목표도 신병 교육 수료 이후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면 조정하였다. 교육시간도 6주간 295시간으로 통일하고 교육과목도 기존 20개에서 핵심과목 위주의 15개로 축소하였으며 체력단련을 강화하였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신병 교육 훈련을 수료한 이후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5주에서 8주(기본교육 5주, 심화 교육 3주)로 신병교육 기간을 연장하였다.³⁷⁸⁾ 이후 2014년부터 5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전 신분에 대해 선교육 후보직 개념을 적용(1995. 1.)하여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무중심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사관 보수교육은 초급과, 중급반, 고급반으로 명칭을 변경(1999. 1.)하여 시행함으로써 양성과정 교육과 연계성을 유지하였다. 여군부사관(2003. 7. 21. 입대)은 ‘여군 인력운용 종합 발전계획(1999. 7. 26.)’에 따라 여군부사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여군부사관은 14주간 남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양성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10주에서 20주간 직별별로 보수교육을 받았다.³⁷⁹⁾ 신병교육 기간은

376)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pp.248-249.

377)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148.

378)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151-152.

379)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50년사』(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pp.310-323.

1993년 8월 이후 입대한 신병은 양성교육 기간을 6주에서 4주로 단축하였으나, 1995년 6월 이후 다시 6주로 환원하였다.

공군은 1995년 항공병학교를 단급부대인 기본군사훈련단으로 승격하였고, 최초로 공군 여군사관후보생(2000. 10.)과 여군부사관후보생을 교육(2001. 2.)하였다. 기본군사훈련단에 ‘병조교 제도’를 도입(2001. 5.)하여 조교를 하사에서 병으로 전환하여 운용하였다. 공군교육사령부는 현대식 시설과 최첨단 교육장비를 갖추고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정예 공군인을 양성하여 배출해 오고 있다.

다. 실전적 교육 훈련

육군은 1990년대부터 중대급 이하 소부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반사적인 전투행동으로 적을 즉각 격멸할 수 있도록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 되는 소부대전술훈련을 강화하였다. 각개병사는 투지력 배양과 전투기술 숙달에, 초급간부는 부대 조직화와 단결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훈련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6년에는 소부대 훈련지침을 통폐합하고, 병 개인훈련은 핵심과제 위주로 단순화시켜 조건반사적인 전투기술을 숙달하도록 부대훈련체계를 개선하였다. 1998년에는 소부대훈련의 실전성 체험훈련을 초급간부 훈련지도와 전투지휘 능력 향상을 위해 부대별 작전환경에 맞게 실전적 사격훈련을 강화하였다. 2002년에는 소부대 전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부대 전투기술 시범을 통해 조기에 야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04년에는 부대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중대급은 소부대 전투기술, 대대급은 전술제대로서 팀워크(teamwork), 연대급은 통합전투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였다.³⁸⁰⁾

또한, 교육사령부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전 교육기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육군의 교육 훈련 및 전투 발전체계를 정립하였다. 1995년도에는 ‘장차전 양상과 전장 실상’ 정립 및 대비책 강구를 위해 현존 군사력과 작전환경 등을 기초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군 전법’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한 훈련방법으로 ‘Top Down식 훈련절차’를 준수하고 전쟁 양상과 전장 실상을 상정한 훈련과 ‘통합 MATRIX 작성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부대 교육 훈련체제 중 부대훈련기능을 교육사로부터 육본 정보작전참모부로 전환하면서 군단 및 사(여)단에 교육 훈련처를 신편(1998. 12. 1.)하여 교육 훈련에 대한 지휘관의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부대훈련의 계획-준비-실시-평가체제를 일원화하여 상·하 부대 간

380)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변천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2019), pp.248-250.

교육 훈련 업무를 활성화했다.

사단 및 군단급 제대의 부대훈련은 지휘소 연습, 지휘조 기동훈련, 사단 야외 기동훈련 그리고 팀스피리트 연습 시에 병행하여 1990년대 전반까지 실시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과학적 기법에 따른 전투지휘 훈련(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백두산 훈련)으로 지휘관 및 참모훈련에 숙달한 이후 작전계획에 의한 임의 기동훈련으로 발전하였다. 연합사 지원 아래에 1992~1994년까지 한국군의 독자적인 BCTP



〈사진 8-11〉 육군 제1군단 BCTP 훈련

※ 출처: 육군본부

전투지휘 훈련에는 육군 자체에서 개발한 ‘창조 21모델’, ‘전투 21모델’과 ‘화랑 21모델’³⁸¹⁾을 적용하였다.

사단급 야외 기동훈련은 군사령부 통제하에 사단장 재임 기간 중 1주 이상 실시하며, 실시간 통합전투 수행 및 화력 운용, 장벽 및 거부, 화생방전, 작전 지속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소부대 전술훈련은 분·소대 팀 단위 전투사격과 마일즈(다중통합레이저 교전체계) 장비를 이용한 쌍방 교전훈련 등 실전성과 상황 조치훈련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였다. 대대훈련은 실병 기동훈련과 상황 조치훈련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연대훈련으로는 제병협동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완성하기 위한 연대전투단 훈련을 매년 12월~다음 해 2월 중에 1주 이상 실시하였다. 교육 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예하 지휘관에게 과감히 위임하여 자율과 창의성 있는 책임제 훈련의 풍토를 조성하였다.

해군에서는 동·서·남해 해역별로 전장 환경에 부합된 실전적 해상훈련을 강화하였다.

381) ‘창조 21모델’은 군단과 상비사단의 전투지휘 훈련 모델, ‘전투 21모델’은 연대·대대의 전투지휘모델, ‘화랑 21모델’은 향토사단의 전투지휘모델을 말한다.

협동·합동훈련은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지·해·공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성분훈련과 해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³⁸²⁾ 사관생도들의 순양훈련은 전 세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항로를 번갈아 90~120일간 실시하였다.



〈사진 8-12〉 육군 KCTC 훈련

※ 출처: 『국방일보』(2020. 5. 21.)

공군에서는 방어제공 훈련, 공세제공 훈련, 항공차단 훈련, 근접항공지원 훈련 등을 통해 모든 상황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위의 전방위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대화력전훈련과 적 특수전부대의 해상침투에 대비한 해상침투저지훈련을 하였다.

각 군에서는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권역별로 통합훈련장의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전문대항군과 실전과 같은 전투 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 Korea Combat Training Center)을 설치하여 운용하였다.³⁸³⁾ 실전적 교육 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표 8-7]과 같이 군단 및 사단급 실전적 훈련장, 해상종합훈련장,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확대 구축하고 마일즈 장비,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훈련 장비를 지속해서 확보하는 것에 두었다.³⁸⁴⁾

[표 8-7] 실전적 교육 훈련 여건조성

사업명	내용	보유	목표
과학화 전투 훈련장 (KCTC) 규모 확장	대대 및 여단급 부대가 교전모의장비를 사용하여 쌍방 교전훈련을 할 수 있는 과학화된 훈련장	2016년 대대급	2017년 여단급

382) 성분훈련은 대함·대잠수함·대공·상륙·기뢰·잠수함 작전 등 전투환경의 특성에 따른 훈련이며, 해상훈련은 함대·해상전투단, 전투전대가 참가하여 실시하는 해양차단훈련 등의 특성화된 훈련을 말한다.

383)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을 구축하며』(강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2006), pp.3-8.

384)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68-74.

사업명	내용	보유	목표
군단급 제병협동훈련장 구축	보병대대급 부대가 제 병과와 협동으로 실 기동 및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	2016년 2개소	2021년 5개소
사단급 실전 훈련장 구축	보병 중대가 실기동 및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	2016년 1개소	2021년 6개소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	협동대잠작전 능력 및 조함 능력 배양을 위한 전술모의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과학화 전술훈련	2016년 2개소	2021년 3개소
중대급 마일즈 장비 확보	실전과 같은 무기효과 및 전장효과를 묘사하기 위해 레이저빔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격을 모의하고 화기사용의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장비	2016년 15식	2017년 20식

※ 출처: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68-74.;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74-75.

라.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

육·해·공군은 태극연습, 호국훈련, 화랑훈련, 군단급 FTX(Field Training Exercise) 등을 통해 전·평시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전력 및 부대구조 발전 소요를 도출하여 왔다.

1990년대 초에 제1차 북핵위기와 관련하여 연합훈련(연습)이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 시행해 오던 팀스피리트훈련이 1994년 중단되었고, 이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군 독자적 연습인 군단급 FTX와 호국훈련이 시작되었다. 호국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대부대 작전계획 시행 절차에 숙달하고, 통합전투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부터 연례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훈련은 1994년부터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95년 사단급 쌍방훈련을 한 이후 1996년 ‘호국훈련’ 명칭으로 군단급 쌍방훈련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1997년도부터 해안 및 내륙 축선별 공·지·해 합동 작전계획 시행훈련으로 조정하여 매년 4월 연합전시증원(RSOI³⁸⁵)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하다가 매년 11월로 훈련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군단급 FTX는 1995년부터 군단급 제대의 통합전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육·공군과 해병대 간에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1995년에는 평시 작전권 환수 이후 한국군의 독자적인 태극연습이 시작되었다. ‘태극연

385) Reception(수용), Staging(대기), Onward Movement(전방이동), and Integration(통합)

습'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합참 주도로 1995년 실무급 연습으로 시작되었다가 1996년부터 '압록강연습'으로 명명하고 연습참가 규모를 작전사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 '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연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화랑훈련(후방지역종합훈련)은 1990년대 초반에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년 단위로 1회 실시해오다가 1990년대 중반에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년 단위로 1회씩 훈련을 하였다. 이후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년 단위로 1회씩 훈련을 하였다. 2008년에는 훈련 규모를 군단급에서 사단급으로 축소하여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 정부 통합평가단을 운용하여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2019년에는 행동화위주 평가로 화랑훈련 통제와 평가방법을 재정립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으로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남북관계 및 대전 엑스포 행사지원 등으로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1994년 이후 재통합하여 매년 8월에 연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 Freedom Guardian)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 한미는 UFG연습을 (2019. 6. 3.)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미는 1995년부터 팀스피리트훈련이 종료(1994)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실시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통합하여 '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RSOI/FE)'으로 전반기에 실시하고, 후반기에는 을지포커스렌즈(UFL)을 실시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개념에 따라 새로운 한미연합연습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연습 명칭을 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을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 Key Resolve/Foal Eagle)'으로 변경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였다.³⁸⁶⁾ 키리졸브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수행 절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고 독수리연습은 후방지역 방호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이었다. 키리졸브연습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종료(2019. 3. 2.)하고 '동맹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은 환태평양훈련(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³⁸⁷⁾에 1990년부터 격년

386)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154-155.;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81.;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78-79.

387) 환태평양훈련(RIMPAC)은 유사시 태평양상의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 국가 간의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미 태평양 합대사령부 주관하에 1971년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참가하여 격년제로 시행하는 연합 해상종합 기동훈련이다. 한국은 1988년도

으로 참가하여 유사시 태평양상의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등 연안 국가 간의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상호협력을 증진하였다.³⁸⁸⁾ 또한, 다자간 연합훈련인 기뢰전훈련, 코브라 골드(Cobra Gold)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향전훈련, 다자간 구조훈련(KOMODO)과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등을 실시하였다.

공군에서는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Max Thunder), 다자간 연합전술훈련(Red Flag-Alaska),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Cope North)을 실시하였다.³⁸⁹⁾



〈사진 8-13〉 한미연합 공중훈련

※ 출처: 『국방일보』(2017. 12. 6.)

등 4건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 연습 및 훈련은 육군·해군·공군이 3개 군 혹은 2개 군 합동으로 국내에서 33건을 시행하고 있다. 합참주관은 호국훈련 등 5건, 육군은 공지합동 훈련 등 4건, 해군은 함대 종합전투훈련 등 15건, 공군은 합동 방공훈련 등 8건, 해병대는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³⁹⁰⁾ 이러한 연합 및 합동훈련을 통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의 임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 중인 연합 및 합동훈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합연습·훈련은 국내 65건, 국외 36건 등 총 101건을 시행하고 있다. 각 제대별 연습·훈련 현황으로 합동참모본부와 연합사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동맹연습) 등 8건, 육군은 칸 퀘스트 훈련(Khan Quest) 등 17건, 해군은 환태평양훈련(RIMPAC) 등 48건, 공군은 국제 우주상 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 등 17건, 해병대는 코브라 골드훈련 등 7건, 합동부대는 한미연합 네트워크 구성훈련

에 처음으로 참관단을 파견한 후 1990년부터 해군 함정이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388) 국방부, 『국방백서 1990』(서울: 국방부, 1990), pp.150-151.

389)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75-76.

390) 합동참모본부, 『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편람』(서울: 합동참모본부, 2020), pp.3-10.

제 2 절 정신교육

1. 군 정신전력 체계

군의 전력(戰力)은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구분된다. 군사력의 요소에는 병력과 무기, 장비, 물자 등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군사력의 모든 요소들에 의해서 갖추어진 전투능력인 유형전력(有形戰力)과 함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능력과 내재적 가치가 결합한 총화로서 형태는 없으나 분명히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적인 힘인 무형전력(無形戰力)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양대 전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전력이 최고 수준으로 도달해 있다고 평가한다.³⁹¹⁾

무형전력은 전기숙달 등의 기술전력(技術戰力)과 전략 등의 운용전력(運用戰力), 군기·훈련 그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본질로 하는 정신전력(精神戰力)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정신전력’은 ‘정신’과 ‘전력’의 합성어로 ‘정신’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개인이 내포하는 군인정신을 말하며, ‘전력’은 군 조직이 갖추어야 할 집단적인 전투 수행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군은 정신전력을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한 전투의지력”으로 정의³⁹²⁾하며, 각 전투 요원들의 의지력을 ‘집단적 의지력’으로 통합하고 발현시켜 나갈 때 효율적으로 정신전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³⁹³⁾

유형전력인 장비나 물자 또는 무형전력으로서의 전기(戰技)는 목표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특별한 물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점검 관리 혹은 보수교육 만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전력은 인간의 정신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적 유인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신전력은 가변적인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전력을 고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력 요소보다 치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391)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서울: 국방부, 1998), p.24.

392)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서울: 국방부, 1998), p.31.

393) 육군본부 정신교육위원회, 『정신전력발전 방향』(계룡: 육군본부, 1992), pp.26-27.

```

graph TD
    A[정신전력 극대화] --> B[정신교육]
    B --> C1[가치관 교육]
    B --> C2[생활교육]
    B --> C3[훈련]
    B --> C4[환경조성]
    C1 --> D1[정훈 교육]
    C1 --> D2[윤리 교육]
    C1 --> D3[인격 지도]
    C1 --> D4[법규 교육]
    D1 --> E1[국가관]
    D1 --> E2[사상무장]
    D1 --> E3[군인정신]
    D3 --> E4[신념]
    D3 --> E5[군기]
    C2 --> E6[지휘통솔]
    C3 --> E7[단결]
    C4 --> E8[사기]
    E4 --> F[이념교육]
    E5 --> F
    F --> G1[민족이념]
    F --> G2[국가이념]
    F --> G3[반공이념]
    F --> G4[통일이념]
    
```

목표

정신전력 극대화

정신교육

구분

가치관 교육

생활교육

훈련

환경조성

중점

정훈 교육

윤리 교육

인격 지도

법규 교육

지휘통솔

요소

국가관

사상무장

군인정신

신념

군기

단결

사기

이념교육

민족이념

국가이념

반공이념

통일이념

지표

지휘관 주관의 종합적 육성·관리

제2절 정신교육 465

국방부의 『정신전력지도지침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신교육의 영역은 [표 8-8]과 같이 가치관 교육, 생활교육, 훈련, 환경조성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생활교육과 정신교육, 훈련, 부대 환경조성 그리고 홍보 활동 등이 전반적으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생활교육’이란 병영 생활 자체를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정신전력의 제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체질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정신교육은 가치관과 태도, 신념 등 도덕적 의식 계발을 목적으로 장병들에게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군인정신을 주지시키고, 이해와 감화를 통하여 군인이 견지해야 할 가치관을 정립하고 행동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각종 ‘훈련’은 전투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병기본 훈련에서부터 대부대 종합전술훈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훈련을 의미한다. 부대 ‘환경조성’은 인사관리와 의사소통 등 심리적 환경과 부대 관리, 복지시설 운영 등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된다. ‘홍보활동’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나아가 장병들이 사명감과 전투 의지를 고양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³⁹⁴⁾

군 정신교육의 중점은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3대 가치영역 교육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군은 정신교육의 목표를 군대의 존립 목적인 평상시 전쟁 예방 및 유사시 전쟁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예 국군을 육성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올바른 안보 상황을 인식시키고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정신자세를 확립하게 하며, 전역 후 건전한 안보관을 견지한 민주시민으로서, 국방정책 및 군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군 신뢰도 증진 및 임무수행 의지를 높이고 있다.³⁹⁵⁾ 이러한 정신교육은 학교 정신교육과 부대 정신교육으로 구분되며 학교 정신교육은 양성 교육과정과 보수과정(補修課程)으로, 부대 정신교육은 일일 정신교육, 주간 정신교육, 집중정신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정신교육은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일제강점기에 광복군이 실시했던 정신교육³⁹⁶⁾으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의 정신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94)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서울: 국방부, 1998), pp.36-38.

395) 국방부, 『국방 정훈 홍보 활동 및 공보규정집』(서울: 국방부, 2001), pp.13-14.

396) ‘정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광복군의 ‘정치공작’ 또는 ‘정치훈련’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6·25전쟁 시에는 ‘정훈공작활동’, 1960년대 이후에는 ‘정훈교육’으로 불리다가 정신전력개념이 대두된 1970년대 중반부터 ‘정신교육’으로 불렸다. 정훈교육은 이러한 정신전력의 한 분야로서 무형전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오고 있다.

2. 군 정신교육의 변천

우리 군의 정신교육 활동은 일제강점기하 민족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높이고 민족의식을 되찾기 위해 전개된 광복군 정훈대의 활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군에 대한 정신교육은 광복과 국군의 창설, 6·25전쟁을 거치면서 충분하지 못한 유형전력을 보충하고 남북이 분단된 이후 반공사상에 토대를 두고 사상통일 수단으로써 큰 임무를 수행하였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군은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국군 정신전력학교 창설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 군의 유형전력이 강화되었음에도 장병들의 국가관, 안보관 및 투철한 군인정신의 함양이 요구됨에 따라 군에서는 각종 정신교육 교재 발간, 교육과정 확대, 전문교관 양성 등을 통해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군에서 정신교육은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특히 정치 상황의 변화에 의해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이 변화하여왔다. 이 절에서는 근현대사 속에서 정신교육 관련 기구, 제도, 교육내용 등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부적인 시기는 첫째, 임시정부 시기, 둘째, 광복 이후부터 6·25전쟁 이전 시기, 셋째, 6·25전쟁 시기, 넷째, 6·25전쟁 후 정비기(1953년~1960년), 다섯째, 민주화 이전 군사정부 시기(1961년~1989년), 여섯째, 냉전종식 및 민주화 이후 시기(1990년~현재)로 구분하였다.

가. 임시정부 시기의 정신교육

1940년 10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수부 관제」를 의결하고 이를 194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포했다. 이러한 통수부 구성과 함께 새로 제정된 광복군 총사령부 조직조례에 따라 총사령부의 간부진을 개편하였다. 이때 6개 처장 중 하나로 ‘정훈처장’이 편성됨으로써 처음으로 ‘정훈’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광복군 정훈처는 민족정신과 자주·독립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³⁹⁷⁾했으며, 이러한 정훈조직과 이념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군의 정훈조직에 이어져 오고 있다.

광복군 정훈부서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외국의 역사, 광복군 사령부의 방침, 의도 등을 교육하였으며, ‘광복군 서약문’을 제정하고 국내외 호소문 방송³⁹⁸⁾과 중국 군관학교 등지에

397)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p.31-32.

398) 1940년 11월 12일 중경시 국제방송국을 이용하여 광복군 당면공작에 관해 장문의 호소문을 국내외와

정훈 공작원을 위탁 교육하여 양성하였다. 정공 간부학교(政工 幹部學校)에 1944년 8월 광복군 제1지대(호남성, 호북성, 강서성지역) 간부 12명을 제5전구 소속 전시 간부훈련단 정공 간부훈련반에 입교시켜 정치공작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1944년 5월 광복군 제3지대에서는 안휘성 임천에 위치한 중국 군관학교 분교에 「한국광복반(韓國光復班)」을 설치하고 일본군에서 탈출한 한국인 학병 33명과 일반 청년 34명 등 77명에게 공작훈련 위탁 교육을 하였다.³⁹⁹⁾ 선전공작 활동을 위하여 대적방송 및 전단작성, 광복군 초모(招募) 공작을 전개하여 한국 국적의 일본군 탈출 학병과 사병들을 광복군에 가담하게 하였다. 문화공작 활동으로 각종 기념일을 전후하여 대민 또는 대군 순회 가극공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애국심과 민족독립심을 배양하기도 하였다.

대적 선전의 효과와 광복군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임시의정원에서 제의되었던 애국가를 광복군에게 전파하였으며, 광복군에게 필승의 신념과 임전무퇴의 기상을 높이기 위하여 군가를 제정하여 보급하였다.⁴⁰⁰⁾ 대표적인 군가로는 매일 아침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제창하였던 「국기가(國旗歌)」를 비롯하여, 「광복군 항일 전투가」, 「광복군 제1·제2·제3지대가」, 「광복군 행진곡」, 「광복군 돌진가」, 「압록강 행진곡」, 「조국행진곡」, 「앞으로 행진곡」, 「광복군 아리랑」, 「세기 행진곡」 등⁴⁰¹⁾이 있었다.

나. 광복 이후~6·25전쟁 이전의 정신교육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광복이 되었으나 대외적으로는 남북의 분단과 대내적으로 남한 내의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당시 국가적으로 일본색 말살 운동에 역점을 두고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독립된 한국을 세우고자 국민 정신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 군도 정신전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46년 남조선경비대 창설과 함께 보도대(報道隊)를 창설했고, 1946년 6월 15일 통위부 내에 보도과를 두었다.⁴⁰²⁾ 초창기의 정훈 활동은 좌우익의 이념적 분열과 대립의 현실에서 장병들의 의식성향과 이념무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본격적으로 정훈 활동을 하게 된 것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였다. 국방부는 정신적

제외동포들에게 방송함으로써 광복군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범국민적 봉기를 촉구하였다.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44.

399)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육군본부, 1991), p.45.

400) 윤무장, “남북화해 협력 시기 한국군 정신교육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18.

401) 독립군가 보존회, 『광복의 메아리』(서울: 교학사, 1982).

402) 국방부, 『정훈대계 I』(서울: 국방부, 1956), pp.A25-A28.

사상훈련을 위한 전담부서인 정치국(政治局)을 조직하였으나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측에서 정치장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제도로써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여 정치훈련의 약어를 사용하여 정훈국⁴⁰³⁾으로 개칭하였다.⁴⁰⁴⁾

초대 국방부 장관 이범석은 2대 지도방침으로 정병양성과 사상통일을 위한 반공정신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사병제일주의와 정훈공작⁴⁰⁵⁾에 주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사상통일은, 국군의 기본정신이 광복군의 독립투쟁심을 계승하여 투철한 애국 사상과 반공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국군이 전사로서의 기본정신을 갖추는 데 핵심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48년 11월 29일 국군의 이념 구현과 반공 민주정신의 함양을 전담하는 국방부 제2국인 정치국을 설치(국방부 직제령은 1948년 12월 7일 정식으로 제정 공포됨)하여 본격적인 정훈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여순10·19사건,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등으로 군의 정신무장과 사상 동향 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1948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내 불순세력 색출을 위한 숙군활동을 전개하였다.⁴⁰⁶⁾ 이범석 장관은 1948년 12월 1일 여순 10·19사건 전몰장병 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국군 삼대선서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문은 국군장병의 상징적 실천 구호로써 전군에 보급되었다.⁴⁰⁷⁾ 군에서는 1949년 초에 내용을 일부 수정 후 ‘국군맹서’로 개정하여 활용하였다.⁴⁰⁸⁾

403) 국방부, 『정훈대계 I』(서울: 국방부, 1956), p.A24.

404) 육군본부, 『병과별 부대 역사』(서울: 육군본부, 1959), pp.215-21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34.

405) 사병제일주의는 정병주의에 따라 사병 개개인의 자질을 조속히 향상해 국군 전체의 질적 수준을 평준화함으로써 선진 민주국가의 우수한 군대와 대등한 자질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병 개개인을 민주주의 이념과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임전무퇴의 강인한 투지를 지닌 전형적인 군인으로 육성하여 국가의 간성으로, 조국 방위의 역군으로 맡은 바 사명 완수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 국군으로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406) 육군본부, 『육군조직변천사』(계룡: 육군본부, 1997), p.44. 4차에 걸친 숙군에 의해 군인 1,327명, 민간인 995명 등 2,322명이 희생되었다.

구분	계	군인	민간인	구분	계	군인	민간인
계	1,148	609	539	계	1,174	718	456
1차 1948. 10.~1949. 3.	364	324	40	3차 1940. 10.~1950. 3.	532	212	320
2차 1949. 5.~1949. 9.	245	215	30	4차 1950. 3.~1950. 6.	186	50	136

407)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서울: 국방부, 1954), p.163.; 육군본부, 『육군역사일지(45~50)』(서울: 육군본부, 1954), p.251.

408)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서울: 육군본부, 1969), p.211.

[표 8-9] 국군맹서(國軍盟誓)

1.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군이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두만강수에 전승의 칼을 씻자.
(제3항 “~두만강 물에 칼을 씻자”는 6·25전쟁 발발 후 “남북통일을 완수하자”로 변경)

※ 출처: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39.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는 정훈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제2국(정치국)을 설치(1948. 11. 29.)⁴⁰⁹⁾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정훈국을 해체하고 육군본부 정훈감실에 흡수·통합(1949. 5. 12.)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정훈국을 재설치하고 육본 정훈감실을 해체하여 이를 흡수·통합(1949. 10. 15.)하였다.⁴¹⁰⁾ 육군 정훈감실은 이후 1950년 초에 재발족하였다.

초창기 정훈 활동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황무지상태에서 정훈 활동을 구상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소련의 정치교육, 중국 국부군의 정훈교육 방식을 모태로 하여 정훈의 최초 문헌인 『정공전범(政工典範)』(1949. 3. 10.)을 작성하였다. 이 교안은 국군 창설 초창기의 열악한 상황에서 정훈장교들에게 정훈의 방향을 제시한 성서(聖書)로 평가되었다.⁴¹¹⁾ 정공전범의 주요 내용은 ①평시 공작: 정공 지도부와 활동(중대부터 여단급까지), 부대훈련(사병, 장교), 간부훈련(군사학교 정치훈련, 정공 간부훈련), 민중 공작, 선전 ②전시 공작: 전투 전(행군 시, 수송 시), 전투 중(공방, 추격, 퇴각 시), 전투 후(작전지역, 후방지역)⁴¹²⁾ 등이었다. 초창기 발간한 정훈 관련 주요 간행물은 [표 8-10]과 같다.

409) 정치국은 당초에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과 참모장인 라이트(W.H. Sterling Wright) 대령, 그리고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대위 등이 군내에 정치장교를 배치하는 제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제도이며, 민주주의 국가나 정치적 중립을 필요로 하는 군대에는 있을 수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정훈국으로 개칭하여 발족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149.

410) 국방부, 『국방의 당면과제』(서울: 국방부, 1955), p.114.

411) 국방부, 『정훈대계 I』(서울: 국방부, 1956), p.A26.

412)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75.

[표 8-10] 초창기 정훈 관련 주요 간행물 현황

구분	내용
월간잡지 『국방』	• 국군 기관지로 정훈국 보도과에서 발간 • 전 장교의 교양지로 발간
화보제작	• 육군 화보의 전신인 배포용 화보 발간, 장병 사기 양양 도모 및 대국민 군 홍보 기여
정훈주보(政訓週報)	• 각 병과 장교의 교육과 정훈장교의 정훈교육 자료 공급
육탄10용사전(肉彈十勇士傳)	• 육탄 10 용사의 충성심과 용감성을 장병들에게 주지시켜 멸공의식의 양양 목적으로 발간
국군의 최초 신문 『철군』 발간	• 육본 정훈감실에서 1949.7.1. 창간하여 주 2회(매주 화, 금) 발간한 국방부 기관지 • 같은 해 제23호부터 『국방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화랑신문』, 『승리일보』로 제호가 변경되었으나 배부지연 등의 문제로 폐간

※ 출처: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p.82-83.; 국방부, 『국방의 당면과제』(서울:국방부, 1955), pp.191-192.; 국방부, 『정훈대계 Ⅰ』(서울:국방부, 1956), p.A28.;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 65년사』(서울:국방홍보원 2015), pp.138-141.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정훈교육을 담당할 정훈장교로 선발된 제1기생 80명(1949. 4. 26.) 중 75명이 육사에서 교육 수료 후 임관되어 각각 예하 부대 정훈부(과)에 보직함으로써 정훈교육체계는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제2기생 44명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일반부대에 배치되었으며 정공전범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였다. 정훈국에 보도과를 편제하고 보도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국방부 훈령 제5호 「군 보도 취급규정(1950. 1. 10.)」⁴¹³⁾으로 제정하여 본격적인 대민 군보도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군예대를 조직하여 지역별 순회공연 및 일반공연을 하여 일반 국민에게 반공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외에도 정세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반공의식 고취와 장병들이 사기 양양을 위한 정훈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여순10·19사건 이후 지리산을 중심으로 준동하는 게릴라소탕작전지원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사상순화와 작전참가 장병들의 사기를 양양하는

413) 군 보도 취급규정은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규정 3조에 의하면 군 보도는 (1) 작전보도 (2) 행정보도 (3) 일반보도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5호(단기 4283. 1. 10.) 「군 보도 취급 규정」

데 목적을 두고 정훈공작대를 구성하여 지방 순회 활동을 하였다. 또한, 월남(越南)군인 환영대회를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실시하여 북한의 실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반공의식을 고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사진 전시회, 전국 중등학교 포스터 전람회, 노획품 전시회, 전몰장병 합동추모회 등을 통해서 반공의식을 드높였다.

정훈교육과는 별개로 각 군에서는 나름대로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교육조직과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육군의 초대 총참모장 이응준은 장병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지침으로 「사병훈」을 배포하여 매일 아침 전(全) 부대에서 낭독하게 하였다.⁴¹⁴⁾

해군은 해안경비대 총사령부에 「공보실」을 설치(1948. 2.)하여 보도업무를 시작하여 해군 창설과 함께 작전인사국 「보도과」로 재편(1948. 9. 5.)하였다. 불순한 좌익사상의 군내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정훈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도과를 해체하고 참모총장 직속으로 행정·보도·지도과로 구성된 「정훈감실」을 창설(1949. 5. 20.)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장병들의 사상교육과 교양 증진, 대외적으로는 해군홍보에 중점을 두으로써 군내 좌익사상 침투방지와 국민의 자부심 및 사기양양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정훈감실이 행정참모부 직속으로 예속·변경되고 조직도 교화과, 보도과 등 2개 과로 축소(1949. 6. 1.)되었다. 이때 신설된 교화과에서 3군 최초로 군목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국군 군목의 시초가 되었다.⁴¹⁵⁾ 정훈장교를 양성은 정훈장교를 모집(1949. 4.)하여 해군사관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과 정훈 활동에 대한 강습과 실습을 한 후에 각 부대에 배치하였다.

초창기 해군의 정훈 활동은 사상교육과 군인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사상교육은 공산주의 모순성을 비판하고 공산당의 허구적, 매국적 행위를 폭로하는 것과 민주주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인 건국이념과 군인정신을 주지시키고,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여 해군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교재는 정훈 기관지인 『정훈주보』를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정훈감실은 매주 「정훈 구호」를 제정⁴¹⁶⁾하여 전 장병들이 제창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훈 활동의 주안점은 장병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정서순화를 위한 활동으로 영화·연극·음악·운동회 등의 「위안활동」도 실시하였다.

해병대는 게릴라소탕작전과 함께 주민질서회복, 선무활동 및 장병의 정신전력강화가 절

414) 이응준, 『회고 90년 이응준 자서전』(서울: 삼아원책사, 1982), p.262.

415)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41.

416) 정훈 구호는 장병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직접 주입하기 위해서 제창하였다.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46.

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50년 5월 1일 해병대사령부와 모슬포부대에 해병 최초의 정훈조직인 「정훈실」을 신설하였다.

다. 6·25전쟁기의 정신교육

정훈 업무가 기틀을 잡아가기도 전에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어 정훈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방부 정훈국은 6·25전쟁 초기 육군본부 정훈감실을 흡수 통합하여 정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쟁 중에 육본 정훈감실을 다시 분리(1951. 1. 15.)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육군 정훈감실에서는 6·25전쟁 기간 중 전시 정훈 활동의 기준 및 규정의 제정, 진중신문의 발간에 관한 통일된 준예규 하달, 정훈공작 업적에 대한 월보 제출 정례화 등을 통해서 정훈 분야의 업무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밖에도 육군 훈령 제106호를 통해서 전투 중 무질서한 후퇴로 인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정훈요원이 정훈교육교재를 준비하여 전투 중 혹은 휴식 시라도 각 조장이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⁴¹⁷⁾ 또한, 육군 규정 85-1을 제정(1951. 3. 20.)하여 정훈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였다.⁴¹⁸⁾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이후 총반격을 개시하여 한·중 국경까지 도달할 시점이 다가오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민 선무공작을 위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정훈 1대대(제722부대), 정훈 2대대(제733부대)를 창설하여 북한수복지역에 대하여 대민정훈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2개의 정훈대대는 육군 정훈대대로 통합(1951. 5. 15.)되어 전선 장병들에 대한 사기 양양, 정신교육 강화공작과 후방지역에서 공비토벌 작전 부대 중인 백야전 전투사령부(백야전사)를 지원하였다. 전투부대에 대한 지원 외에도 정훈대대는 문맹 퇴치, 군가 보급, 진중신문 『참호』 발간⁴¹⁹⁾, 시사 보도, 대민 계몽운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백야전사의 작전이 종료된 이후 해체(1952. 9. 25.)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 군가 보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군 초창기 대부분의 군가가 일본풍의 운율을 답습하고 있었고 가사 또한 미온적인 것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훈감실에서는 군가보급단을 조직(1951. 10. 15.)하고 군가심사위원회를 설치(1952. 2. 8.)하여 「승리의 노래」를 비롯하여 군가를 제정하고 보급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⁴²⁰⁾

417)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p.129-130.

418)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p.279-180.

419) 일선 각 부대의 전공 미담을 모아 수록한 진중 신문 『참호(塹壕)』는 4절지 크기로 호평을 받아 3회까지 발간하였으나, 정훈대대가 백야전사령부 지원 임무로 남원으로 이동함으로써 발간이 중단되었다.

420)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278.

6·25전쟁 기간 중 간행물들은 국방부 정훈국이 주도하여 발간하였다. 주요 간행물로 『승리일보』⁴²¹⁾, 『정훈주보』⁴²²⁾, 월간지 『국방』, 『만화신문』, 『국방화보』 등과 육군본부 정훈감실에서는 『교육강좌』, 『육군화보』, 『주간공보』 등의 정규간행물, 기타 부정기 간행물들을 비롯하여 공보처, 각 신문사, 미 공보원 간행물들을 받아 일선 부대에 80%, 후방부대에 20%씩 할당하는 등 일선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시리즈물로 장병들의 전공기록과 전몰장병 수기를 담은 『국군의 빛』, 장병들의 정서함양 및 간접적 정훈교육의 목적으로 군 내외 문인들이 원고를 작성하여 발간한 『사병문고』, 병기 애호 정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발간한 『군인과 병기』, 장병들의 군인정신 배양을 위한 『군인정신독본』 등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간행물 발간 활동은 재정 관계로 많은 제약을 받아 장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간행물 외에 국방부 정훈국에서는 각 군의 사상통일과 일관성 있는 정훈교육체계를 위하여 정훈교정편찬위원회를 편성하여 『정훈교정(政訓敎程)』을 1권에서 14권까지 출판하였다. 교재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우리나라 역사, 유엔과 대한민국, 공산주의 전쟁 전술, 대한민국 헌법 해설, 한국 독립운동사, 공산주의 비판 등이었다.

또한, 6·25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최초 19명으로 편성된 전사편찬위원회를 발족(1950. 10.)하여 『한국전란 1년지』, 『한국전란 2년지』를 편찬하였다.⁴²³⁾ 6·25전쟁 기간 중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발간했던 정훈간행물 목록은 [표 8-11]과 같다.

421) 『승리일보』는 이전의 국방신문의 제호를 바꾼 것으로 6·25전쟁 발발 이후부터 1952년 4월 15일까지 발간하였다. 『승리일보』는 서울에서 대구로 육군본부가 이동한 이후 당시의 교통난과 장거리 배포문제 등으로 기사의 적시성을 상실하여 폐간하게 되었다. 국방부, 『정훈대계 I』(서울: 국방부, 1956), p.A37.

422) 『정훈주보』는 정훈장교들의 교육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발간 배포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1년 1월 24일부터 속간되었다. 이후 유사한 교육자료인 『교육강좌』가 발간되면서 폐간되었다. 국방부, 『정훈대계 I』(서울: 국방부, 1956), p.A38.

423) 『한국 전란지』는 1954년 3월에 3년지, 1955년 7월 말에 4, 5년지가 편찬되었다.

[표 8-11] 6·25전쟁 기간 중 발간된 간행물 현황

연도별	간행물명	규격	면수	발행부수	발행일자	발행목적	발행처	비고
1950	• 자유경제해설	46판	100	10,000	10. 17.	정신교육교재 3군 교양지	국방부	장병용
	• UN이란 무엇인가	46판	50	10,000	10. 17.			
	• 민주한국은 이렇게 자라났다	46판	50	10,000	10. 17.			
	• 민주주의는 이겼다	46판	50	10,000	10. 17.			
	• 대한민국헌법	국판반	150	5,000	10. 17.			
	• 일민주의란 무엇인가	국판반	50	3,000	10. 17.			
	• 국기제정의 역사적 고찰	국판반	30	2,000	10. 17.			
	• 정신훈화집	국판	250		11. 20.			
	• 화랑도연구	국판	250	10,000	12. 1.			
1951	• 국방	국판	260	6,000	12. 1.	3군 교양지		
	• 정훈주보	46배판	34	10,000	1. 5.			
	• 유모어집	46판	20	5,000	1. 5.			
	• 전공기	46판	20	5,000	1. 5.			
	• 군인정신독본				3. 25.	정신교육교재	육본	
	• 국군의 중흥	국판			4. 15.	국방장관 업적회고	국방부	
	• 정훈공작참고문헌	국판	136		3. 25.	정훈대대원 교재	국방부	
	• 군인과 병기	국판	191		2. 15.	정신교육교재	육본	
1952	• 사병문고 제1,2집					장병교양지	육본	
	• 3군종합군가집	국판반	117	3,000	7. 2.	3군 군가 보급을 위함	국방부	
1953	• 공보장교편람	국판반	145	2,000	2. 5.	공보장교의 공보운영	국방부	장교용
	• 세계정세해설	46판	150	3,000	3. 30.	지휘관의 시사파악	국방부	장교용
	• 정훈업무개요	국판반	220	3,000	3. 30.	정훈요원 교재		
	• 정훈업무실무	국판반	372	3,000	3. 30.	정훈요원 교재		
	• 정훈군사집	46배판	200	1,000	3. 30.	정훈공작 참고자료		

※ 출처: 육군본부, 『정훈 50년사』, pp.247-248.

6·25전쟁 기간 중 해군의 정훈활동은 해군본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정훈감실은 잠정 폐지되었으나 전쟁 양상이 격렬해지면서 해군본부에 '정훈관실'을 설치하였다. 서울수복 이후 참모총장 직속의 정훈감실을 부활(1950. 12. 10.)시키는 한편 전의 교양을 위해 '해군 정훈음악대'와 '해군 어린이음악대'를 조직하여 운용하였다.

해군은 전쟁 중에 정훈장교를 추가 선발하여 대내적으로 적개심 고취 활동, 위안·위문 활동을 하고 대외적으로 민심 수습, 대적 귀순공작, 각종 전시 선전 활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⁴²⁴⁾ 전시 정훈 공작의 목표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해군 정훈 공작 강화 확립방안』을 제작(1950. 9. 12.)하여 전시 정훈 공작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1951년에는 최초의 해군기관지 『해군지』가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장병 정신전력함양은 물론 장병 교양증진,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하고 바다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사단법인 해양문화협회를 조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으며 월간 『해양지』를 발간하였다.

해병대 정훈실은 장병들에게는 사상적으로 강인한 정신무장을 확립하는 한편,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수립되자 대민공작을 위해 선전 전단을 인쇄하고 전투경과를 역사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정훈공작대」를 편성하였다. 최초의 기관지인 「해병속보」는 인천상륙작전 시 창간되어, 전시 장병들의 소식지로서 큰 호응을 얻었다.

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항복권유전단, 귀순증, 포고문, 성명서 등의 수천만 매의 지탄(紙彈)을 전선의 전후방에 살포하는 업무에 참여하였다. 또한, 전란 속에서 정훈업무의 소요가 증가하게 되자 정훈편제와 업무규정을 정하였다.

라. 6·25전쟁 후 정비기(1953년~1960년)

정훈교육을 주도했던 국방부 정훈국은 기간 중 정부조직법의 개정기에 따라 정훈부로 개편되기도 하는 등 총 3회의 개편이 있었고, 육군본부 정훈감실은 정훈교육대의 창설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조직개편이 있었다.⁴²⁵⁾ 국방부의 정훈 업무 기본방침은 「휴전 제2주년 정훈 업무 기본방침」⁴²⁶⁾과 「국방 사상 양양대책」을 정훈 업무 기본지침으로 하고 업무를 추진했다. 또한, 장병들의 자질향상과 복무능률을 증진하고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

424)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63.

425) 육군본부, 『육군조직변천사』(서울: 육군본부, 1997), pp.47-59.

426) 국방부의 「휴전 제2주년 정훈 업무 기본방침」은 1954년 3군 정훈감회의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민교육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특히 1954년부터는 공민교육의 명칭을 군내일반교육으로 개칭하여, 중·고·대학과정까지도 취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 내에 일반교육위원회와 전시군인연합대학(戰時軍人聯合大學)을 설치(1954. 1. 27.)하여 운영하였다.⁴²⁷⁾ 전시군인연합대학은 서울 시내 각 대학교의 교수와 각 대학 저명강사 약 60여 명을 위촉하여 4,000여 명을 교육하였으나 군내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개교 2년 만인 1956년 1월 폐교되었다.

휴전 이후 국방부는 정훈 업무의 기본방향을 “공민교육의 완성”, “대적의식 고조”, “국민단결의 구현”에 두고 군내 급별 일반교육의 강화, 투철한 정신교육, 시정각교육 촉진, 대내외 보도 및 선전 등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철저한 반공교육, 멸공교육과 함께 국민계몽 교육의 목적으로 문맹 퇴치 교육, 일반·중등 및 고등교육 등의 장병 공민교육을 강화했다.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군 단위부대별로 시범부대를 지정하여, 정훈교육을 비롯한 군내일반교육과 대내 공보 및 보도검열·통계업무 등 정훈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⁴²⁸⁾

정훈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3군 정훈감 회의를 국방부 정훈국에서 개최하였으며, 국방 사상 양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정훈장교를 연대급까지 배치하였다.⁴²⁹⁾ 휴전에 따른 정신자세의 이완을 방지하고 철저한 군인정신과 항시 전장의 기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규시간에 정신교육을 하는 한편, 정신문화교육이 지휘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부대별 특성에 따라 3단계 정훈교육과 계단별 정훈교육⁴³⁰⁾이 실시되었으며, 군내 문맹 퇴치를 위한 군내 교육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군가 보급을 위해 레코드판을 제작 보급하고 군가지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극영화 및 교육영화 필름을 획득하거나 제작 보급하여 군인정신 함양과 사기 양양에 이바지하

427) 문교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인문·사회계통은 3학년까지, 자연과학 계통 중 응용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1학년, 기초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2학년 과정까지 각각 수업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은 국방부 일반명령 제110호(1954. 2. 7.)로 하달되었다. 국방부, 『정훈대계 I』(서울: 국방부, 1956), p.A174.

428)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p.282-283. 시범부대는 육군은 사단, 해군은 경비부(함대), 공군은 전대(기지) 단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정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429) 정훈요원은 전방의 경우 연대급 이상 부대에 배치되었고, 후방의 경우 학교, 훈련소, 병원, 형무소 및 각 관구(管區)와 병사구(兵事區)사령부에 배치되었으며, 예비사단의 경우 1명이 배치되어 정훈 활동을 전개하였다.

430) 3단계 정훈교육(정신문화 포함)의 내용은 제1단계: 군인정신 함양과 휴전 중의 임무, 제2단계: 사상 선도와 적개심 고취, 제3단계: 애국심 함양과 민주진영의 우위성 강조였으며, 계단별 정훈교육은 피교육 대상을 성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정훈교육을 말한다. 교육각서 제24호(1955. 8. 20.)에서 명시한 각 계단은 각 학교(육대, 고등군사반, 초등군사반, 간부후보생, 육사) 및 여군, 훈련소, 각 병원, 형무소 등이다.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p.328-329.

였고, 국군의 방송을 전담하는 기구가 KBS 정동 별관에서 발족(1954. 9. 1.)하였다. 국군 방송은 국군장병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와 숭고한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군인정신의 배양과 주체적 국방의식 고취, 정서순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과 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교량적 임무를 수행하였다.⁴³¹⁾

확고한 국가관 확립과 사상무장 및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이 시기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각종 간행물이 발간⁴³²⁾된 것을 비롯하여 정훈교육교재와 일반교육교재⁴³³⁾가 발간되었으며, 특히 정훈의 역사와 50년대 전반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종 분야의 흐름을 수록한 『정훈대계』가 발간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 편찬되기 시작했던 『한국전란 3년지』, 『한국전란 4년지』, 『한국전란 5년지』가 편찬되었다.

이 밖에도 1954년에 육군정훈학교가 창설되어 정훈요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훈학교에서는 정훈교육과정(고급반, 초급반, 정훈장교반, 공보장교반, 공민교관반), 민사군정 및 심리전장교 교육과정, 정훈부사관 교육, 민사군정 부사관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과정별 교육 기간은 3~8주간 이루어졌다.

해군은 1953년 9월 제1함대를 한국함대로 개편하면서 해상 함정 장병의 정신무장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통제부 정훈실과는 별도로 한국함대 사령부에 정훈실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부 정훈감실을 비롯하여 함대 정훈실, 통제부 정훈실, 각 경비부 정훈과 등의 정훈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55년 1월 전사편찬실 업무를 정훈감실로 편입시킴으로써 초창기 군사편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전후의 정훈활동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치중했던 전쟁기와 달리, 점차 본연의 업무인 장병 정훈교육과 대외 공보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위안행사는 최소화하였다. 해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에게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해군 군가를 공모·제작하여 보급하는 데 주력했는데 1956년에 ‘해군가’가 당선되어 해군의 상징적 군가로 자리매김하여 오고 있다.⁴³⁴⁾ 기간 중 해군의 공보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휴전을 전후해서 우리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했던 일본의 평화선·독도 침범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의 침범 현황을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사진반과 보도원을 현지 분쟁 장소에 급파하고 우리 정부 입장의 정당성을 보도함으로써 대내외에 큰 반향

431) 이후 군 방송은 1956년 2월 1일부로 KBS 제1방송에서 제2방송으로 채널을 옮겨 18:15~19:00시에 방송하였다. 국방홍보원, 『국군방송오십년사』(서울: 국방홍보원, 2004), pp.150-153.

432) 6·25전쟁 관련 발간물로는 6·25전쟁 중의 용전분투한 홍보물(국군전공 미담집, 구월산, 한국전선의 영웅들 등)과 군 활동상 소개지(육군신문, 육군화보, 육군지) 등이 있다.

433) 정훈교육교재로는 『교육강좌』, 『정훈교본』, 『정신훈화집』, 『군인의 길』 등이 있으며, 일반교육교재로는 『한글교본』, 『공민독본』, 『고등학교급 교재』, 『대학급 보충교재』 등이 있다.

434)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134.

을 불러일으켰다.⁴³⁵⁾ 1954년 7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자유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를 순방하는 「해양항해 실습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되자 정훈실 기자, 공보사진반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 해군과 우방 국가와의 친선우호를 대내외에 상세히 보도하였다.⁴³⁶⁾

해병대는 1955년 보도과가 공보과로 개편되면서 해병대 정훈감실은 행정·지도·보도·편집과 체제가 되었다. 이 시기 해병대는 다양한 정훈활동과 병행하여 공민학교를 설치함으로써 공민교육을 활성화시켰다. 정훈업무는 정훈교육의 말단침투, 공민학교 설치, 정훈요원훈련, 정훈교재·공민교육교재 발간, 문맹사병퇴치, 보도선전강화, 대외보도계통의 수립과 강화, 기관지의 질적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공군은 서울로 환도한 이후 편제를 개편하고 정훈 업무 관련 인원을 증원하였다. 북한 공산정권의 암흑상을 폭로하여 적개심 고취와 반공사상을 고양하기 위하여 귀순 조종사의 담화 등을 국민과 군에 널리 선전하였다. 또한, 국민 항공사상 고양을 위하여 세계 항공기 사진전을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교육은 기본정훈교육, 공민교육, 문화교육(도서관람, 강연회, 영화상영 등)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반공 민주사상으로 정신무장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사편찬업무를 강화하여 『6·25전란 공군작전사』, 『공군 행정사』, 『공군 후방지원사』 편찬 등을 3대 과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마. 민주화 이전 군사정부 시기의 정신교육(1961년~1989년)

1960년대 정신교육 1960년대의 정훈 활동을 주관하였던 국방부의 정훈국은 6차례의 기구개편을 맞았을 정도로 변화가 많았다. 정훈국은 국방부 본부의 의전·섭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국방부 섭외국으로 개편되었다가 정훈국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정훈국은 정훈과, 보도과, 의전과, 월남과(베트남과) 등 4개의 과로 편성되어 운영되었다. 육군본부 정훈감실은 2차례의 개편을 통해 군내 일반교육을 담당하던 일반교육과가 없어지고 대신 문화과가 신설되었고 육본 보도국은 보도부로 개편되었다. 또한, 1966년도에 정훈병과가 창설되었으며, 1954년 창설된 육군정훈학교가 1968년 해체되고 육군종합행정학교 정훈학부로 통합되었다. 정훈병과 창설에 따라 보병대대급 부대를 포함한 각급 부대에 정훈장교의 직위가 책정되었으며, 병과 창설에 따라 특파제도가 없어지고 1967년부터 전과 제도가 시행되어 300여 명에 달하는 정훈장교가 양성, 배출되었다.

435)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138.

436)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138.

정훈교육은 정규 정훈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4·19혁명, 5·16군사정변, 한·일 회담 및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별교육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정훈교육의 중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8-12]와 같다.

[표 8-12] 1960년대 연도별 정훈교육 중점

연도	교육 중점
1961	‘5·16혁명정신’ 전파 교육, 국가시책(총교육시간의 50%)
1962	‘5·16혁명과업’ 완수교육, 국가시책, 심리전 방어교육
1963	‘5·16혁명이념’ 과 민주적 자각심 고취, 국가 존엄성 교육
1964	심리전 방어교육, 정부시책 홍보교육
1965	한·일회담 관련 교육, 파월장병 특별교육
1966	월남참전 의의 교육, 국토건설단 교육
1967	시국관 교육, 시사홍보교육(조국근대화 적극참여, 선거중립)
1968	월남전 참전 의욕 고취 교육
1969	『정훈독본』 교재에 의한 군인정신 함양, 사상무장, 국가관 확립 교육

※ 출처: 육군본부, 『정훈 50년사』, pp.571-575.

1960년에는 4·19혁명 등 혼란한 사회 정국을 겪게 되자 “군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군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장병들의 동요방지와 확고한 국가관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국방부 정훈감은 「지시각서 34호」를 하달하여 전 장병들에게 매일 1시간씩 1개월 동안 특별정훈교육을 실시하였다.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정신의 고취, 민주이념의 확립 및 군인정신 등을 주안점으로 정훈교육을 실시하여 전 장병이 투철한 사명감을 견지하도록 하였다. 한·일회담이 진행될 시 전 장병에게 한·일회담의 국가적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정훈 교관 요원 293명을 소집 육군본부에서 교육한 이후 한·일회담 종결 시까지 계속 일반 장병에 대해 전과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파병이 시작되자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정훈 활동 강화 계획」에 따라 정훈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군형무소 복역수로 구성된 국토건설단 요원들에게 특별정훈교육을 실시하였다. 베트남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8년에는 장병들에게 베트남 참전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훈장교에 의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군인정신 함양, 사

상무장, 그리고 국가관 확립의 정훈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사들에게 『정훈독본』 교재로 교육을 반복하는 한편, 정훈교육의 수준 측정 및 평가를 위한 개인평가 및 부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8-13] 1960년대 발간 정훈교재 목록

연도	교재명	발간 부수	배부기준
1960	정신훈화집(2)	6,000	중대 2부
	육사 정훈교재(2)	1,000	생도 1인 1부
	정훈교육 패도(1)	5,800	대대 1부
1961	승공독본	6,006	중대 2부
	육사 교재	2,000	생도 1인 1부
	예비병 교재	36,000	예비병 1인 1부
	입원환자 교재	1,000	환자 1인 1부
	훈련병 교재	4,700	소대 1부
	정신교육 패도	804	대대 1부
	정신훈화집	6,000	중대 2부
1961	정훈 교본 개정판	6,000	중대 2부
1962	정신훈화 개정판	6,000	생도 1인 1부
	육사 생도 정훈교재	2,000	중대 1부
	정훈교육 패도	3,000	대대 2부
	승공 만화 패도	1,500	중대 1부
1964	정훈교재	12,000	중대 2부
	정훈 패도	4,200	
1965	정훈교재(개정판)	12,000	
1967	정신훈화 예문집	20,000	
	파월부상 장병용 교재	5,000	
	정훈 패도(공산주의 비판)	3,700	
	정훈 패도(동남아 반중공 세력)	4,000	
1968	만화식 정훈교재(1-12)	각 584,000	분대 1부
	정훈교육용 슬라이드(1-12)	각 30조	사단 1조
1969	정훈독본	30,000	소대 2부
	정훈 문답집	177,000	신병 1인 1부
	승공교육교재	2,000	
	승공교육교재(부록)	2,000	
	승공교육교재(합본)	2,000	
	정훈교재	6,000	
	만화교재(1-12)	37,000	소대 2부

※ 출처: 육군본부, 『정훈 50년사』, pp.605-606.

국방부 정훈국의 정훈과와 육군의 보도국(보도부)이 주관이 되어 기간 중 발생한 4·19 혁명, 5·16군사정변 및 베트남 파병 등으로 군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보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군에서는 군사보안을 유지하고 군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군 보도검열에 관한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 지침에 의거 4·19혁명 시에는 1,173건을 검열하여 850건을 삭제하고, 368건을 보류하였다. 5·16군사정변 시에는 6,269건을 검열하였으며, 1964년 한·일회담 추진에 따른 계엄령선포 시에는 4만 8,433건을 검열하여 5,319건을 삭제하였다.⁴³⁷⁾

간행물은 정과 교육을 위한 정신교육 교재와 시사교육교재 및 특별정훈교육 교재 등이 국방부 정훈국과 육군 정훈감실에서 제작, 배부되었으며, 일반교육을 위해 기술강좌용 교재도 제작 배부되었고, 정훈 관련 교범류도 발간되었다. 1960년대에 발간되었던 정훈교재 목록은 [표 8-13]과 같다. 국군 기관지로 『전우신문』이, 육군 기관지로는 『육군지』가 창간되었다. 『전우신문』은 국군의 의사와 정신을 대변하고 홍보매개물을 통해 각 군의 유대를 입체화하고 그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다.⁴³⁸⁾

해군정훈감실은 참모총장 직속에서 행정참모부장 예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인사참모부장 예하로 변경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육상부서와 각 함정에서는 주 2회 이상 기본 및 시사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정훈교육을 하였으며, 1968년부터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의 방패되자”라는 참모총장의 복무방침 아래 충무공 연구위원회, 충무공 연구세미나, 충무공 정신교육, 충무공 사진 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장병들에게 충무공 정신을 깊이 체득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충무공에 관한 연구의 결실로 『민족의 등불 충무공 이순신』 등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충무공탄신 기념행사는 오늘날까지 해군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해군정훈감실은 거북선과 관련한 광범위한 고증자료를 수집하여 거북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거북선 모형을 제작하여 미 해양박물관에 전시하였다.⁴³⁹⁾ 간행물 발간은 1950년대에 비해 양적으로는 감소했으나, 질적인 면에서 『수군명장전』, 『역대참모총장 훈시문집』, 『해군 화보』, 『해군주보』, 『한국해전사』 등의 우수한 기관지와 간행물이 다수 발간되었다.

해병대 정훈감실은 기존의 행정과를 기획과로, 지도과를 지도교육과로 개편한 이후 정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훈차감을 신설(1969)했다. 이 시기 정훈업무는 시청각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반공의식을 높이며 보도업무와 유기적인 대민공작을 전개하여 민·군간

437)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p.597-598.

438)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 50년사』(서울: 국방홍보원, 2015), pp.159-160.

439)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181.

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공군은 지휘관이 정훈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정훈강좌는 정훈장교가 담당하여 사상을 선도하였으며, 정훈장교들은 이념교육과 더불어 국내외정세 해설 등의 시사교육도 병행하였다. 1965년 이후 공군 정훈교육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사명감을 인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아울러 1960년대 후반 빈번하게 발생했던 도발에 대하여 적개심 고취, 감투 정신과 자주국방 태세 확립 등을 강조하였다.⁴⁴⁰⁾

1970년대 정신교육 1970년대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장병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무형의 정신 분야가 유형의 군사력과 쌍벽을 이루는 전력 개념으로 등장하여 ‘정신전력’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고, 이의 육성강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신교육이 지향하는 기본목표를 필승의 신념을 확립하는 것에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치관 형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첫째, 군인의 본분을 다함에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생관이며, 둘째, 국가의 존립을 개인의 생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관이며, 셋째, 인류의 적인 공산주의를 타도하겠다는 멸공관이었다.⁴⁴¹⁾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정훈조직개편, 정신전력학교 창설 등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국방부 정훈국은 1960년대까지 4개 과로 운영하다가 정훈과와 보도과 2개로 개편 운영하였으며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국군의 철수에 따라 파월지원 담당관직도 폐지하였다. 1970년대 후반 들어 신념, 사기, 단결 등의 모든 무형전력을 망라한 정신전력 개념의 대두와 그 강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정신전력 관계 기구를 증편하게 되었다. 대통령령 제8875호에 따라 정훈국 내에 정신전력과를 신설(1978. 3. 4.)하고 군의 대민 홍보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문화과를 문화 홍보과로 개칭(1979)하였다. 1964년도에 창간되었던 『전우신문』은 인쇄시설의 미보유로 민간 신문사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1977년도에 이르러 자체 운전기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정훈과에서 독립하여 국방부 직할 기구인 국군신문제작소로 승격, 개편(1979)되었다.⁴⁴²⁾

1977년도부터는 국군 정신전력학교의 창설⁴⁴³⁾로 정훈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지휘관들에 대한 정신전력 육성 차원의 지휘통솔 교육이 병행되었다. 국군 정신전력학교의 창설

440)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계룡: 공군본부, 2010), pp.160-161.

441) 국방부, 『정신전력의 지도이론과 실제』(서울: 국방부, 1977), pp.3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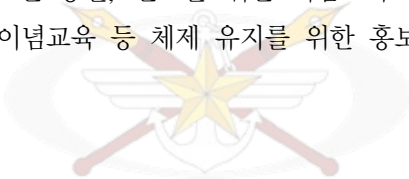
442)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 65년사』(서울: 국방홍보원, 2015), pp.184-188.

443) 대통령령 제8442호(1977. 2. 14.) 「국군 정신전력학교 설치령」

은 제1·2땅굴의 발견, 베트남의 패망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신뢰 실추, 자주국방의 절박함과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의 필요성 등의 배경하에서 추진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를 순시할 때 군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함⁴⁴⁴⁾에 따라 군에서는 ‘군 정신전력 강화 연구위원회’ 등을 편성⁴⁴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통령령 제 8443호에 의해 「국군 정신전력학교 설치령」이 공포(1977. 2. 14.)됨에 따라 국군 정신전력학교가 설치(1977. 4. 1.)되었다.⁴⁴⁶⁾

국방부는 전군에 1977년 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4시간을 ‘정신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정훈교육을 하였다.⁴⁴⁷⁾ 정신교육의 날은 모든 부대 활동보다 최우선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전투부대는 208시간, 기행 및 지원부대는 104시간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⁴⁴⁸⁾

육군 정훈감실은 정신전력지도과 등 4개 과 1개 실로 증편하여 부대 정신교육 기능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휘관 및 정훈장교들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체계적인 이론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의 목적으로 통일 연수원 교육을 시행(1973)하였다. 그러나 이 교육은 최초 교육목표인 통일, 안보를 위한 이념교육 교관화보다는 국내정치 사회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유신이념교육 등 체제 유지를 위한 홍보교육으로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⁴⁴⁹⁾



444)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25-226.

445) 정신전력 강화 위원회는 자유중국의 정치작전제도가 국가목표 달성과 군 정신전력 강화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28일부터 1976년 1월 11일까지 자유중국을 시찰하였고, 시찰 결과와 우리의 현 제도를 토대로 정신전력 강화 간부 요원 양성방안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446) 국군 정신전력학교, 『학교 10년사』(서울: 국군 정신전력학교, 1987), pp.5-14.

44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23-224.

448) 국방부, 정훈 참고 81-1 『정훈 업무 요강』(서울: 국방부, 1981), p.34.

449)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p.727-728.

[표 8-14] 1970년대 연도별 정신교육 목표와 중점

구분	목표	중점
1972	- 국가관 확립 - 사상무장 - 군인정신 함양	1. 『정훈독본』 교육 2. 승전운동 3. 10월 유신 특별교육
1973	- 국가관 확립 - 사상무장 - 군인정신 함양	1. 10월 유신과업 수행이 선봉적 사명감 고취 2. 지도자상(像) 부각 3. 반공교육 강화 4. 한국적 민주주의 우월성 인식 5. 장병 정훈교육의 표준화
1974	- 자주국방의식 고취 - 초전박살의 신념전지	1. 안보교육 강화 2. 국난극복 강조 3. 소집교육 강화 4. 초전박살 견지(棼 조성) * 각종 교육·집회·행사 시 멸공 구호 제창
1975	- 국가관 확립 - 사상무장 - 군인정신 함양 * ‘유신이념’ 구현으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	1. 간부자질 향상 교육 강화 2. 각종 소집 교육 강화 3.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 고급 간부 대상 국가관 확립 교육 강화
1976	- 국가관 확립 - 사상무장 - 군인정신 함양 * ‘유신이념’ 구현으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	1. 기본정훈교재 및 시청각교육 보강 2. 대대 단위 정훈 활동 강화 3. 평가 활동을 통한 정훈 업무 발전책 모색
1977	초전 필승을 위한 정훈 활동	1. ‘유신이념’ 함양과 초전 필승의 정신자세 확립 2. 장병 멸공 사상 고취와 멸공 투 사화 3. 기본 및 시청각 교재보강으로 교육성과 증진 4. 정신교육의 날 실시로 부대 정훈 활동 강화
1978	- 정신교육의 날 정착화 - 장병 전의 고양 활동 강화	1. 간부교육 강화 2. 이념교육 개선 3. 진지고수 전의(戰意) 고양 4. 전투수칙의 구현화 5. 복귀의 취약점 교육 강화
1979	- 시대적 사명감 고취 - 멸공적개심 고취 - 초전 필승의 자신감 제고	1. 실증교육 확대 2. 간부교육 내실화 3. 이념교육의 전문화 4. 민족 정통성 교육 5. 복귀의 취약점 교육

※ 출처: 육군본부, 『정훈 50년사』, pp.761-781.

전군에 정신교육의 날을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념교육과 실천적인 생활교육을 통하여 군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간 교육 훈련시간은 전투부대가 매주 수요일 오전 4시간, 비전투부대는 매주 수요일 오전 2시간으로 되어있었다. 정신교육의 날 시행을 계기로 군 정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편 군 정신전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위한 시도가 군 자체에서 대두되어 이를 실천할 방안으로 1978년도부터는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정신전력 평가 회의가 사단급에서 분기에 1회 실시되었다.⁴⁵⁰⁾

정훈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반 교육은 13주를 실시하다가 국군 정신전력학교가 창설되면서 교육 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정신전력학교에서는 기초반의 교육목표를 대대급 정훈장교의 직무수행 및 정신전력 지도능력 부여와 교관으로서의 자질향상에 두고 1개기에 총 704시간을 교육하였다.

정훈교육은 장병들의 이념무장 강화와 대국민 안보 상황 계도 요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당시는 대외적으로 자유 베트남의 패망과 북한의 집요한 남침 도발, 그리고 국내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교육 활동은 조직체계의 확충과 더불어 국가관 확립과 사상무장, 그리고 군인정신 함양이라는 3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지속하여 왔던 문맹자 교육을 성인교육과 통신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국민교육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0월 유신선포'(10·17특별선언)로 특별정훈교육이 모든 부대별로 활발히 실시되었다. 정훈국에서는 이후 국방비상사태 당위성 홍보와 구체적인 정훈 활동 방향 설정과 지침을 지시하였으며, 각 군을 대상으로 특별선언에 대한 지도급 인사의 특별 순회교육, 고급 간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하였다.

1970년대에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교재와 참고자료들이 다양하게 제작 발간되었다. 특히 그동안 군별로 자체 제작하여 활용했던 정훈 기본교재를 국방부에서 정훈 기본교육 내용을 통일하고자 1976년 정훈 기본교재인 『국군 정훈교정』을 편찬하였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정신교육의 날 시행, 국군 정신전력학교 창설 등으로 정신전력 강화가 강조되면서 정신전력 육성을 위한 지도이론과 실무부대에서의 실천적 활동 방법과 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신전력의 지도이론과 실제』(1977. 6. 30.)를 발행하여 전군에 배포하였다. 또한, 1977년부터 병 기본정훈 교재로 사용 중인 『국군 정훈교정』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1978년부터 기본교재 전면 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3권으로 구성된 『국군 정신전력 교본』(1979. 1. 1.)을 발행하여 교재로 활용하였다.

육군에서는 특수교재 85-3 『정훈교재』를 발간(1973. 4. 1.)하여 병 정훈 기본교재로 활

45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2005), pp.220-224.

용하였다. 이 교재는 총 7권으로 구성⁴⁵¹⁾되어 있었으며 장교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서 정규 교재로 활용되었다. 국방부의 『국군 정신전력 교본』이 발간된 이후 교관들이 정훈 기본 교재를 강의하기 쉽도록 과목별로 참고교재인 『국군 정신전력 교본 교육지도서』를 발간하여 각 중대급에 1부씩 배부하였다. 이외에도 『10분 정훈교재』, 『일일 정신교재』(중대장용), 『전승을 위한 심리지도』(대대장용), 『팸플릿』, 『시사 주보』, 슬라이드 교재, 기타 패도 등을 제작 발간하여 정훈교육을 지원하였다.

해군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해병대 정훈 업무를 해군본부 정훈감실에서 통제하였다. 1977년 해군 전 부대에 ‘정신교육의 날’이 실시되었고, ‘정신전력 지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신전력 업무 및 성과분석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10월 유신 특별정신교육, 반공·승공교육, 충무공 정신교육, 국회의원·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안보 순회강연, 반공 웅변대회, 각종 위탁 교육⁴⁵²⁾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장병들에게는 이론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전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해군은 충무공의 후예로서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고 해군의 정신적 지주로 확립하기 위하여 「해군의 다짐」을 제정하고 장병들의 생활신조로 삼도록 하였다.⁴⁵³⁾ 해군의 다짐은 1950년대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인의 길’과 함께 해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신조가 되었다. 이후 「해군의 다짐」은 1976년에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배포되었으며, 1980년에 2차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군은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경각심, 승공이념의 체질화, 북한의 간첩투입, 파괴 공작 등에 대한 정신무장 등을 중심으로 정훈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신체제가 정립된 이후에 공군에서는 유신이념의 구현으로 정병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방 기본정책에 따라 유신 정병 교육체제로 전환하였다.⁴⁵⁴⁾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강력한 대응으로써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공군 정병 지도서』를 발간하고, 부대마다 정예 공군관을 설치하였다. 베트남의 패망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위장 평화 공세, 주한미군의 철수 등에 따라 정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신교육 방침과 정신교육 3대 지표를 수립하여 시행하였다.⁴⁵⁵⁾

451) 정훈교재의 총 7권 1개의 질로 구성되었다. 1. 우리의 지도자 2. 충무공 정신 3. 한국 민주주의론 4. 공산주의 비판 5. 한국 민족사 6. 정부 시책 7. 정신전력 강화법

452) 위탁 교육은 통일 연수원, 정신전력학교, 유신학술원, 가나안 농군학교, 중앙정보부 등의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453)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186.

454)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계룡: 공군본부, 2010), pp.165-169.

455)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계룡: 공군본부, 2010), pp.173-175.

베트남 파병기의 정신교육(1964. 9.~1973. 3.) 주월한국군의 정훈 활동 목적은 우리 국민에게 역사상 처음인 해외파병의 당위성과 대공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베트남전쟁이 우리의 안보와 직결됨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는 주월군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에 있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전투력을 지닌 최강의 군대임을 세계에 과시할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민에게는 친절하고 베트남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도록 충역량을 경주하여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찬반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정훈교육은 국익 차원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의 의의와 장병들의 전투 의지 고양, 베트남 주민들에 대한 한국군의 신뢰 구축을 위한 주둔군으로서의 자세, 조국에 대한 사랑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교육은 베트남전 파병 준비 기간부터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으며, 귀국을 앞두고는 개선 장병으로서의 의연한 자세 견지와 대국민 신뢰 고양 등의 교육을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표 8-15] 베트남전쟁 기간 중 발간한 정훈교재 현황

교재명	발행 부수	배부 기준	비고
고귀한 희생정신	36,000	분대 1부	육군본부
월남어 회화집	20,000	파월장병	
전투부대 증파 의의	36,000	분대 1부	
이원등 상사의 생애	13,000	소대 1부	
제네바 협정 해설	72,000	파월장병	
귀환 장병 특별정훈교재	40,000	귀환 장병	
월남전과 한국	1,400	장교용	
파월 부상 장병용 정훈교재		각 육군병원	
3훈 5계		파월장병	
사이공 안내서		파월장병	주월한국군사령부
귀국 장병 정훈교재		파월장병	
명예로운 개선과 우리의 정신자세		전입 장교용	

※ 출처: 육군본부, 『정훈 50년사』, p.996.

정훈교육은 장병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파월의 의의와 업적, 주월 군의 사명, 주월 군이 가져야 할 정신자세, 조국에 대한 사랑 등의 과목에 중점을 주고 매주 1시간씩 기본정훈교육을 정규시간에 실시하였다. 또한, 순회강연 및 사진 전시회, 영화상영 시 스폿

교육(spot), 간행물을 통한 월남풍토 소개, 정세와 전쟁 양상 소개, 주월한국군의 실전담(實戰談) 등의 특별정훈교육과 정신훈화는 수시 기회교육으로 시행되었다. 1972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유신이념과 함께 파월의 성과와 철수를 앞둔 자세 등을 교육함으로써 개선 장병으로서의 귀국 후 임무를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⁴⁵⁶⁾ 베트남전쟁 기간 중 군에서 발간하였던 정훈교재는 앞의 [표 8-15]와 같다.

타국의 전쟁터에서 불안과 고립감, 공포심을 제거하고 건전한 정신력과 왕성한 사기 유지를 위해 군가 가창, 영화상영, 위문 공연, 문예 작품모집 등 다양한 문화 활동과 간행물 발간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위문 공연은 일반 연예인단으로 구성되는 특별위문단과 국방부 군 예비 및 주월사 군예대로 구성되었다. 1968년에서 1972년까지 실시하였던 위문 공연 현황은 [표 8-16]과 같다.

[표 8-16] 베트남 전쟁 중 위문 공연 현황

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구분							
공연횟수(회)		411	1,024	985	1,035	924	4,379
관람 인원 (명)	한국군	215,222	537,906	511,343	478,545	451,697	2,194,713
	우방군	34,660	56,204	39,449	29,285	5,336	164,934
	월남국민	62,402	44,076	30,016	25,640	30,271	192,405
	교포	21,450	42,754	33,635	19,346	5,534	122,719
계(명)		333,734	680,940	614,443	552,816	492,838	2,674,711

※ 출처: 육군본부, 『정훈 50년사』, p.1017.

주월한국군의 뛰어난 전공(戰功)과 대민지원 활동 등을 홍보하고 대민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대민심리전은 백 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기본정신 아래 전 장병이 전투 요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사심리전 요원으로서도 활동하였다. 베트남의 허위선전을 봉쇄하기 위하여 베트남 언론인 간부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주월군을 이해시키고 베트남의 허위선전 공세에 맞서지 않도록 유대를 강화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중군 기자단에게 전선을 취재하게 하여 베트남의 허위선전을 봉쇄하였다.

456)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서울: 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p.1072.

1980년대 정신교육 1980년대 국방부 정훈국은 국민 정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986년부터 2년간 국책교육과를 잠정 편성 운용하였고, 국군의 홍보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1년 10월 국군방송실과 국군영화제작소 및 국군신문제작소를 통합하여 ‘국군홍보관리소’를 발족하였다.⁴⁵⁷⁾ 육군본부 정훈감실은 1987년 8월 1일부로 민사심리전 참모부 창설에 따라 정신전력처로 개편된 것을 포함하여 기간 중 6차례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1980년대 추진된 정훈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교육과 국민 정신교육 등을 포함한 상부 지시사항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훈장교의 획득에 있어 병사들의 고학력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석사특임 정훈장교, 고시 출신 장교 임용, 학군장교 및 학사 장교의 임용과 여군 정훈장교를 임용하였다.⁴⁵⁸⁾

정훈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신전력학교 및 통일 연수원 소집 교육, 국내외 민간대학 위탁 교육 및 미국 공보학교 공보과정을 시행하였으며, 실증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전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교육을 지속 추진하였다.

기본정훈교육은 주 1시간씩 연간 52시간 중대장과 정훈장교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국방부 차원에서 통일된 교재인 『국군 정신교육 교본』(1981), 『정신교육 기본교재』(1989)를 발간하여 각 소대급까지 배부하였다. 1989년 후반기에는 『정신교육 기본교재』 각 과목의 내용을 VTR 교재로 제작, 대대급까지 배부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반공교육전서』(1981), 『신 좌경사상의 오류』(1986), 『사상전에서 이겨야 산다』(1988) 등 이념교육 교재를 발간하였다.

10·26사태 발생 이후의 계엄선포에 따른 보도검열 업무지원과 6·25전쟁, 국군의 날 등을 전후한 특집보도로 대민 군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 초에는 국내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계엄하에서 계엄 보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국민 화합과 군의 계엄 활동 협조에 치중하였고, 제5공화국 출범 후에는 국민의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한 군 홍보에 주력하였다. 1987년 6·29선언에 이어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화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으로 군을 매도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치중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실추된 군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군 본연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하여 1989년 4월부터 “우정의 무대”를 방영함으로써 민·군 일체감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해군에서는 정신전력 및 이념교육의 강화를 위해 1981년 정신전력 지도위원회를 함정급

457) 국방홍보원, 『국방홍보원 65년사』(서울: 국방홍보원, 2015), p.204.

458) 육군본부, 『정훈 50년사』(계룡: 육군본부, 1991), p.869.

부대까지 편성했으며, 1986년에는 정신전력지도위원회 폐지와 함께 정신교육 추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정신전력 업무와 홍보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훈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320 정훈병과’를 창설(1983. 12. 31.)하였다. 또한, 간부들의 이념무장과 발표력 향상을 위해서 1980년대 초반부터 특별교육, 초빙 강연, 이념무장 발표경연대회, 지휘 성공사례 발표, 정신전력 강화 논문모집, 이념 교관교육 등을 강화하였다. 민·군 일체감을 조성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군이 함께 애창할 수 있는 새로운 군가를 제정하는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1986년 말에 정신교육 추진위원회에서 ‘해군 10대 군가’⁴⁵⁹⁾를 선정하여 전 장병들에게 애창하도록 하였다. 정훈활동에서 VTR 교재가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1983년 정훈감실에 VTR실이 설치되었고 1986년에는 시청각교재과를 신설하였다.

공군은 1980년대에 대북 우위의 정신전력을 위한 정신교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필승교육 과정(영내 정신교육연수과정)의 신설과 ‘정신전력지도위원회와 정신전력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멸공관’ 건물을 건립하였다.⁴⁶⁰⁾ 또한, 이 시기 대북 사상전에 더하여 국내 좌경세력들의 이론에 대한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였다. 정신교육을 통해서 신좌경사상을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민족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장병들에게 강도 높은 정신교육을 하였다. 보라매수련원의 전신인 정신교육원에서 이념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부대별 교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국토통일원, 국군 정신전력학교와 공군본부 주관으로 전문교관을 양성하여 교관의 수를 300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공군본부에 정신전력지도부를 신설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이념교육지원대’를 운용⁴⁶¹⁾하여 대규모 집체교육에서 벗어나 소단위 수시교육과 순회교육을 하였다.

바. 냉전 종식 및 민주화 이후의 정신교육(1990년~현재)

1990년대 정신교육 1990년대는 냉전의 종식으로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 등으로 시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정훈교육이 요구되었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과 정보화·개방화·민주화 시대의 대두라는 시대 상황으로 대외 홍보 활동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

459) 해군 10대 군가 ①해군 군가 4개: 해군가, 군함행진곡, 바다로 가자, 브라보 해군 ②해병대 군가 4개: 나가자 해병대, 해병대의 노래, 팔각모 사나이, 상륙전의 노래 ③국방부 지정 군가 2개: 조국이 있다, 아리랑 겨레 ④건전 진중가요 4개: 출동 5분전, 브라보 해군, 바다의 노래, 멋있는 해군

460)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계룡: 공군본부, 2010), pp.185-186.

461)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계룡: 공군본부, 2010), pp.207-208.

라 국방부에서는 정보화시대의 국방대응능력 증진과 유사 및 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더욱 전문적인 정신교육을 하고 필요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1990년 12월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편하였다.⁴⁶²⁾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공산주의 허상, 변함없는 북한체제의 올바른 이해 등을 위하여 기본교재 및 VTR 교재의 내용도 대폭 개정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물론 지속해서 해상도발을 감행해오며 따라 주적개념 및 대적관 확립, 햇볕정책과 안보와의 관계, 대북정책의 목표 및 3대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병 대적관 및 안보관 확립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8년 『국군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였는데 3부 7장 3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교류로 대적관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본정훈교재를 전면 개정하고 12개 주제에 대한 개인 소지용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보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신전력지도지침서』를 개정하여 각 군에 배포하였다.

1990년대 각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훈교육은 다음과 같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정책 추진, 신 좌경사상 비판,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연이은 붕괴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이념과 체제 대결은 더욱 심화하여 1990년부터는 ‘간부 이념교육 집단화’의 목표 아래 「공산주의 본질」, 「공산주의 7대 비밀」 등의 이념교육이 정훈교육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공산주의 본질 및 공산주의 7대 비밀 교육은 각 군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 성과를 측정하였고, 성적이 우수한 부대는 참모총장 부대표창을 수여하는 등 이념교육에 매진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종전의 52개 과목으로 편성하였던 『기본정훈교재』를 36개 과목으로 축소·개편하고, 정훈교육의 3대 목표를 변경하였는데 ‘국가관’을 ‘나라 사랑’으로 ‘우리의 적’을 ‘통일안보’로 ‘군인정신’을 ‘군대 윤리’로 재정립하고 교육내용을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이 가운데 통일안보 영역에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할 평화통일의 동반자이지만 대남적화전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군은 선량한 북한 주민을 제외한 노동당 정규군 및 준 군사부대를 타도해야 할 적의 실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⁴⁶³⁾ 교육시간은 연간 37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 시행하였다. 1994년 7월

462) 국방부, 『국방조직변천사』(서울: 국방부, 1992), pp.430-432

463)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계룡: 공군본부, 2010), p.238.; 장영주, “한국군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2008), p.168.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통일 교육 시행지침’(1994. 10. 31.)을 하달하였다. 또한, 1994년 후방부대 해안초소에서 발생했던 하극상 사건(소대장 길들이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 기강확립 강화 특별지시’(1994. 10. 6.)와 ‘군대 윤리교육 강화지침’(1994. 10. 31.)을 하달하였다. 이렇듯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적관 교육과 통일 교육, 군대 윤리 및 인성교육, 시사 안보교육이 정훈교육의 주를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시기의 기본정훈교육은 『국군 정신교육 기본교재』,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⁴⁶⁴,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국군』 등 3종류의 기본교재가 주를 이루었다.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국군’ 교재에서는 ‘북한’ 용어가 다시 ‘북괴’로 환원되는 등 당시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적관 확립 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장병 휴대용으로 발간하여 완전하게 숙지하도록 하였다. 특별정훈교육으로는 햇볕정책 추진으로 신세대 장병들의 주적개념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적관 확립교육과 대북포용정책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국책홍보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시기의 정훈교육의 특징은 기본교재를 두 번 바꾸었고, 과목 수도 종전의 36개 과목에서 12개 과목으로 축소하여 편성하였다. 다른 정부에 비해 남북관계가 많은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과 ‘대적관 교육’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 시기 정신교육 추진의 목표는 장병들에게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정립하고, 안보환경의 변화에 무관하게 투철한 군인정신과 국군의 사명을 견지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동안 군의 정신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던 ‘국방정신교육원’을 남북관계 진전으로 군 정신교육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체(1998. 12. 31.)함으로써 군 정신교육 기능은 각 군으로 분산되었다.⁴⁶⁵

464) 제1부는 ‘세계는 불타고 있다’, ‘북괴의 전쟁 도발 위협’, ‘북괴의 위장평화 공세와 대남도발’, ‘실패한 체제 신음하는 북한 주민’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 ‘북괴군은 우리의 주적, 싸워 이길 수 있다’, ‘주한미군은 왜 필요한가?’, ‘통일의 참다운 뜻은?’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3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좌경용공세력의 실체와 위협성’, ‘민족 수난의 역사와 국방의무’, ‘민주시민의 책임과 임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465)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정신전력원 국직부대 창설백서』(대전: 국방정신전력원, 2016), p.5.

[표 8-17] 1990년대 사병용 기본정훈교육 교재

구분	과목	비고
한반도 전쟁 위협과 대비	1. 냉전 이후 새로운 위협의 도래 2.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와 전쟁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3. 우리의 안보 현실과 주한 미군의 역할 4.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안보태세 강화의 중요성	신설
공산주의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의 선택	5. 북괴의 위장평화 공세의 속셈과 각종 대남도발 사례 6. 북한 주민의 비참한 생활상 7. 좌경 용공세력의 실체와 위험성 8.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도발 사례 보완
위기 상황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	9. 전쟁과 국방의 의무 10. 민족 수난의 역사와 오늘의 국가안보 11. 우리의 주적 북괴군, 싸워서 이길 수 있다. 12. 민주 시민의 책임과 의무	병역의무보완 신설

※ 출처: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336.

육군은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훈교육 기능을 전문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체제로 보강(1996)하였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훈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공보기능은 지휘부 직속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잠정기구인 교육사 정신전력발전처를 해체하여 정훈교육은 정훈공보실로 전환하였으며, 지휘통솔은 교육훈련부 총괄처로 전환하였다. 국방정신교육원이 해체됨에 따라 정훈병과의 교육을 육군종합행정학교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해군의 정훈공보실은 3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친 후 재편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군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올바른 안보관·대적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정신교육, VTR 교재의 개발, 초빙 순회강연, 교보재 발간 등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정신교육 시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시청각교육과 토론식 교육, 해군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해군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국내외 위탁 교육을 통하여 정훈장교들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향상해 나갔는데, 1992년 대만과 국교가 단절되면서 대만 정치작전학교 연수 과정이 중단되어 미국의 공보업무 연수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하였다. 이 밖에도 통일원 안보연수 과정 등에 위탁 교육하여 정훈장교 및 부사관의 기본소양을 높이는데 중점을 주었다. 국방정신교육원이 해체(1998. 12.) 되자 정훈 초군반, 정훈 부사관반 등의 기본보수교육은 1996년 설립된 교육사 ‘충무공 수련원’에서 실시하였다.

해병대는 자체 홍보 및 교육을 위해 VTR교재 제작과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독자적인 기관지 발간의 필요성이 높아져 『해병혼』을 창간하였다.

공군은 특성상 집체교육보다는 소수 인원의 집중교육을 통한 확산 효과를 기대하여 육군과 해군에 없는 공군 특유의 정신교육 방법으로 ‘정신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⁴⁶⁶⁾ 1980년대부터 사회 혼란에 따른 좌경화 현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공산권의 개방 교류 시대에 대공 경각심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 2회씩 실시하였다. 또한, 신세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개혁안을 마련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방안을 모색하였다.

2000년대 정신교육 2000년대는 변화된 세계정세,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라 정훈교육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남북화해 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대적관, 대북관에 혼란이 야기되어 정신교육 3대 기조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훈교육이 이루어졌다. 특별정훈교육은 북한의 핵 개발과 6자회담의 진행 등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2002년부터는 기본교재의 과목 주제에 맞추어 매주 금요일 국방일보를 통하여 표준 교안을 제공하였고, 2005년 12월 5일 국군 TV 방송이 개국됨에 따라 기본정훈교육을 매주 수요일 오전 1교시에 ‘정훈교실’과 ‘명강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전군 동시교육을 실시⁴⁶⁷⁾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전의 ‘대적관 확립’을 ‘안보관’으로 바꾸고, 과목 수도 36개 과목에서 12개 과목으로 축소되었던 것을 18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연간 2회 반복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특별정훈교육으로 『군대 윤리(직업군인의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신규교육으로 2006년부터 ‘병영문화 선진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훈교육 대부분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이념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교육의 3대 기조⁴⁶⁸⁾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대적관 및 안보관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국가관),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며(안보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군인정신)’을 신념화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국가

466)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계룡: 공군본부, 2010), pp.223-224.

467) 국방부, 『2006년 정훈 홍보 활동지침』(서울: 국방부, 2006), p.10.

468) 장병 정신교육 3대 기조는 첫째,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군의 기본 임무와 사명은 불변, 둘째, 군의 대비태세 기본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도(企圖)보다는 군사적 능력(能力)의 변화 여부를 보고 대처해야 함을 인식, 셋째, 공산주의자들의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의 역사적 교훈을 명심 등이었다.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국군』(서울: 국방부, 2001), p.서문.

관 정립을 위해 조국애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국가의 존립과 이익에 심대한 위협을 주거나 이를 지원하고 동조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것을 군의 사명으로 인식하도록 안보관(대적관)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6·25전쟁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북한 실상과 군사적 위협,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각 교육기관에서 간부들은 국가관과 안보관을 신념화하고, 부하 정신교육 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병 정신교육은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⁴⁶⁹⁾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무장에 중점을 두고 정신교육을 강화하였다. 신병 정신교육은 ‘선(先) 정신무장, 후(後) 전투기술 숙달’을 목표로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 과제를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정과교육을 추진하면서, 훈련과 병영 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였다. 학교 정신교육은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을 신념화하고, 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발표·토의식 교육과 교관화 실습교육을 강화하였다. 부대 정신교육은 지휘관 중심의 일일-주간-반기 집중정신교육을 하여 대적 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국방TV와 IPTV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시청하고 장병 스스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현장 체험식 행동화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⁴⁷⁰⁾

2013년에는 각 군에 분산되어 있던 정신교육 기능을 통합한 ‘국방정신전력원’을 대통령령 제24161호로 합동군사대학교 예하 부대로 창설(2013. 12. 2.)하여 ‘국가관’, ‘안보관’ 교육을 강화하면서 야전부대 전투병과 중·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군인정신 사례연구, 역할모델 토의, 전적지 답사 등 군인정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정신전력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정신전력 논문 공모, 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 임무⁴⁷¹⁾를 수행하였다. 이후 대통령령 제26771호 「국방정신전력원령」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로 소속이 변경(2016. 1. 1.)되었다.⁴⁷²⁾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한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⁴⁷³⁾ 장병 정신교육은 장병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하도록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였다. 신병 정신전력교육을 통해

469)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p.144-145.

470)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82-83.

471) 국방정신전력원, 『2017년 부대사』(대전: 국방정신전력원, 2018), p.180-10.

472)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정신전력원 국직부대 창설백서』(대전: 국방정신전력원, 2016).

473)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34.

서 군인정신, 안보관, 국가관이 확립된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병 정신전력 교육은 학교 정신전력교육과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국방TV, IPTV 등 방송 매체와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강인한 군인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장병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확대 시행하였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에 독립군·광복군 역사교육을 연간 10회 이상 반영하고 독립기념관과 업무협업 프로그램을 전 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애국심·자긍심 함양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함으로써 장병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함양하였다. 장병 인성교육을 위해 창의, 용기, 책임, 존중, 협력, 충성, 정의의 인성교육 7대 덕목을 선정하고 인성교육체계를 정립하여 바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훌륭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⁴⁷⁴⁾ 인성교육은 민간 인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집중 교육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화 교육을 통해 추진되었다.



474)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81.

제Ⅳ부

국민과 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

제9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제10장 국방외교와 국제협력 활동

제 IV 부 국민과 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

제 9 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6·25전쟁 이후 군은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이자 가장 잘 정비된 조직으로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군의 문맹자 퇴치를 위한 한글학교 운영, 국토건설, 대민지원 그리고 기술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은 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군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토의 황폐화와 국가 재정의 빈곤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던 군사원조(군원)는 정부의 국고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군원으로부터 국방비를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1970년대 말에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안보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점차 증가하는 복지, 교육, 사회 등에서의 예산 증가는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를 위한 군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자유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병영생활 내에 존재했었던 각종 악습과 폐습 등을 철폐하고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 국군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리 군과 국민이 국방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주요 사례들을 국방비, 병영문화 및 군의료지원체계 개선, 국가시책 지원과 국제스포츠 행사('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지원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국방비와 국민경제

1. 국방비와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과 국방비 국방은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광의의 국방이란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일체의 국가 활동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군사 활동, 경제활동 및 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적 수단 등

모든 것이 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은 협의로 해석할 때는 군사력이나 군사력을 형성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은 주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며, 국방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변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경비도 ‘국방비’ 또는 ‘방위비’¹⁾ 혹은 ‘안전보장비’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사비’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국방비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군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경비를 ‘협의의 국방비’라 하고, ‘광의의 국방비’는 간접적으로 방위에 이바지하는 모든 경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²⁾

또한, 국방비는 국가의 생존, 번영 및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의 물리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과 같은 필수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일차적인 의미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체제 유지비용을 말한다. 이차적인 의미로 국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자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전시에 국방 분야에서의 실패는 국가 생존권의 상실을 의미하며, 평시에도 국방을 소홀히 하면 국익을 수호할 수 없으므로 국방비는 국가재정 중 우선하여 고려해야 하는 예산이다.³⁾

이러한 국방비는 전력투자비와 경상운영비로 구분된다.⁴⁾ 전력투자비는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우선하여 대비할 수 있는 억제전력과 대북 취약전력을 보강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개선에 목표를 둔 소요이다. 경상운영비는 기존 전력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반복해서 지출되어야 할 필수경비로서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다. 즉 병력과 장비 등 기존전력의 규모가 줄지 않는 한 정부 다른 부문의 운영유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복지 수준 개선 등과 연동되어 일정한 증가가 불가피한 비용이다.

국방비의 규모는 안보위협과 경제·사회적 여건, 국가의 정책 방향, 군사동맹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외적 요인으로는 국제 안보정세, 주변국의 군사 동향, 적국의 군사 동향, 군사동맹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국내 경제 및 정부재정 여건, 국방비와 경합 관계에 있는 자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국민적 공감

1) 방위비에는 국방부 소관의 국방비, 병무청 소관의 병무 행정비, 행안부 소관의 해양 경찰비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2)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국방대학교, 2002), pp.268-269.

3) 국방부, 『한국 안보와 적정국방비』(서울: 국방부, 1997), p.1.

4) 국방비는 1999년까지 방위력개선비와 운영유지비로 나누다가, 2000년부터 전력투자비와 경상운영비로 나눈다.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운영유지비에 포함된 장비획득비와 정비비가 2000년부터 전력투자비(방위력개선비)로 이관되었다.

대의 형성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⁵⁾ 국방이 국가의 생존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안보위협’은 국방비를 결정할 때 일차적인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국방비는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므로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이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국방비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 및 정부재정 규모, 환율, 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고려해 가용자원 규모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GDP에 대한 비율이 1980년 5.95%에서 1990년에는 4.51%, 2000년에는 2.88%로 낮아졌고, 정부 예산 점유율도 1980년 36.0%에서 1990년에는 30.4%, 2000년에는 17.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⁶⁾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력투자비의 증가율은 억제됐지만, 경상운영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부는 1979년도부터 도입된 국방기획제도(PPBS)⁷⁾에 따라 합리적인 규모의 국방예산을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국방기획관리를 통해 국방목표와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과 운영 요소를 도출한다. 특히 각 단계의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방비 규모 결정을 위한 자체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PPBS는 기획(Planning), 계획(Programmming), 예산(Budgeting)으로 기획·계획 중심이어서 예산편성과 동시기에 종결되어 집행과정에서는 이 제도의 지속적인 체계성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후 국방기획제도는 예산 집행과정과 이를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인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로 발전되었다.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는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일 나은 방법을 선택하여 더욱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용할 수 있는 기획(P)·계획(P)·예산(B)·집행(E)·평가분석체계(E)를 말한다.⁸⁾ 즉 국가 차원의 안보지침에 따라 현존 군사력의 좌표와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일 나은 방법을 선택하여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가용 국방자원(재원,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

5) 국방부, 『열정과 노력으로 만드는 국방비』(서울: 국방부, 2009). pp.5-6.

6)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 국방비』(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p.7.

7) PPBS는 기획예산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의 시초는 1962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당시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도입한 미국의 국방예산 제도에서 출발했다. 기획예산 제도는 미국이 당시 매년 GNP의 9~10%에 달하는 거대한 군사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경영관리 혁신 방안의 하나로 채택한 제도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몇몇 부처와 주 정부가 이 기획예산 제도를 채택하였고, 현재 세계에서 36개국의 정부가 이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서울: 박영사, 2019), p.273.

8) 국방부 훈령 제700호(2002. 2. 27.)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

[표 9-1] 국방기획관리제도 정비 및 발전과정(1979~2010)

구분	연도	주요 내용
제도 도입	1979. 6. 7. (훈령 제253호)	• 국방기획제도에 관한 규정, PPBS 제도 도입
제1차 제도 정비	1983. 7. 30. (훈령 제308호)	• PPBS에 집행(E), 평가(E)단계 추가하여 PPBEES 체계 정착, 계획평가관실이 평가관리관으로부터 독립 • 국방중기계획 작성: 전력증강계획과 운영유지 통합, 율곡사업으로 국방부 이관 * 국방기획관리제도 최초 규정
제2차 제도 정비	1989. 4. 25. (훈령 제390호)	• 각종 문서 통합 및 발간 시기 조정 - 중·장기 문서 통합 및 간소화 - 합동연구개발 계획서 신규 발간
제3차 제도 정비	1991. 7. 1. (훈령 제421호)	• 3군의 통합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합참 기능 보강 (군사력 소요제기 주체: 각 군 → 합참으로 이관) • 국 인력과 무기체계 발전추세 고려한 신규문서 발간 (국방 중기부대계획서, 국방 중·장기 획득개발계획서) * 국방부 직제개편과 상부 군구조 개선계획(818) 반영
제4차 제도 정비	1995. 4. 30. (훈령 제500호)	• 군사력 소요제기 주체 환원: 합참 → 각 군 이관 • 전력 정비와 예산편성절차 통합: 총액편성 → 5개 항 17개 세항 * 율곡사업 감사원 특별감사와 국정감사 결과 반영
제5차 제도 정비	1997. 3. 31. (훈령 제553호)	• 무기체계 획득단계 단축: 9단계 → 6단계 • 기획 및 계획단계 문서체계 통폐합: 10개 → 5개 • 방위력 개선 예산조정(전력계획관실) 및 집행조정 (사업조정관실)서 단일화: 사업조정관실(예산 + 집행)
제6차 제도 정비	1999~2000 (훈령 제609~제675호)	• 국방개혁 5개년 계획에 의한 개혁 내용 수용 • 방위력 개선사업비 명칭 변경 → 전력투자사업비 • 획득실 설치 및 기능 조정 내용, 문서체계 재정립 반영 • 전시문서체계 작성 시기 및 부서 조정
제7차 제도 정비	2006. 6. 29. (훈령 제792호)	• 국방부 직제개편 및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임무 조정 - 획득실 → 자원관리실, 방사청 신설 • 무기체계 소요 결정 권한: 합참의장 → 국방부 장관 • 방위력개선 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 방사청, 중기계획수립: 국방부 •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요구서 안 작성 : 방사청, 예산요구서: 국방부
제8차 제도 정비	2007. 9. 5. (훈령 제830호)	• 국방 중기계획서에 특별회계와 기금 분야 추가 반영 • 성과관리전략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기획관리체계에 포함
제9차 제도 정비	2009. 5. 8. (훈령 제1054호)	• 전력투자비를 방위력개선비로 개칭
제10차 제도 정비	2010. 6. 21. (훈령 제1252호)	•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권한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환원 • 연구개발정책 및 출연 기관(ADD), 기품원의 관리 감독 기능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

※ 육군중앙경리단, 『국방예산론』(계룡: 육군본부, 2010), pp.57-62.; 육군본부, 『육군기획관리 50년 발전사』(계룡: 육군본부, 2003), pp.21-23.

하는 수단으로서 기획(Planning), 계획(Programmming), 예산(Budgeting), 집행(Execu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하는 일련의 통합적 국방 자원관리 업무체계를 말한다.

우리 군은 1970년 이전까지는 주로 미국의 군사원조(군원)에 의존하여 국방조직을 운영해 왔으나 1970년대 미국의 군원 중단과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로 한국 주도의 자주국방이 제기되면서 국방예산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군원에 의존하던 시기에 한국군은 부분적인 국방 관련 기능만 수행하였을 뿐 기획과 계획기능은 모두 미군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1974년 울곡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 방위세가 신설되어 과학적 예산관리기법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979년 6월 미군의 기획예산 제도(PPBS)를 도입하여 최초로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253호)⁹⁾를 정립하였다. 국방 기획관리체계는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의 [표 9-1]과 같이 정비 및 발전되어 왔다.

2. 미국의 군사·경제원조 지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경제원조는 미 군정 시기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건국, 한국군의 창군과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6·25전쟁 발발과 함께 전쟁 수행, 긴급구호에 이르기까지 국가운영 및 전쟁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한국원조는 「한미원조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한미 양국은 협의를 거쳐 1948년 12월 3일 정식 조인하고, 한국 국회는 12월 11일 이를 인준하였다. 전문 12개 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원조자금, 원조물자 도입과 사용문제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명시되어 향후 미국의 한국원조에 대한 기준으로 운영되었다.¹⁰⁾

우리 군에 대한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 덕분에 당시의 미약한 우리 경제 규모로 1960년대 말까지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군사원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954년 11월 17일 합의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것이었다. 한미 합의의사록은 한국군의 최종적 규모와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등을 규정한 문서이다.¹¹⁾ 한

9) 국방부 훈령 제253호(1979. 6. 7.)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10) 군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9권(서울: 탐구당, 1998), p.549.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 관계사(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733~735. 한미군사합의록에 의해서 미국은 한국에 1955년 회계연도에 4.2억 달러의 군사원조와 2.8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0개 예비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과 약 100대의 제트

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미국은 한국원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경제원조기구도 조정하였다. 이후 미국의 군사 및 경제원조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 다소 변화하는 과정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1948년 체결된 ‘한미원조 협정’과 1954년 서명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에 근거하여 운용되었다. 한미합의 의사록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에 육군 661,000명, 해군 15,000명, 해병대 27,500명, 공군 16,500명 등 모두 72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매년 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규모는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¹²⁾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국고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군원이관에 따라 국방정책의 전환과 아울러 군 조직과 편성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의 군원정책 미국의 우방에 대한 군사원조정책은 대외원조 환경변화에 따라 때때로 변천했으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중·후로 구분할 수 있다. 원래 미국의 대외원조 개념은 세계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우방국 및 동맹국의 안전보장유지 및 인권보장 증진에 기본목표를 두고 원조형태는 군사원조(안보원조), 경제원조(개발원조) 그리고 구호원조가 있으며 그 가운데 군사원조는 무상 군원,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지원 원조 및 초과품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960년대까지 한국군에게 지원되었던 무상 군원은 수원(受援) 국가에 대하여 무상으로 군사품목, 용역 및 군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은 제공한 무상 군원에 대해 상환을 받지 않았다.¹³⁾

미국의 군사원조 기획 및 계획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방부 군원국은 국방정책 및 군사목표를 포함한 기본계획 문서를 작성하여 태평양지구사령부를 거쳐 피원조단 군사고문단 계통으로 하달하였다. 군사고문단은 현행 군원의 요강, 국방부 지침 및 태평양지구의 보충 지시서에 따라 연도별 군원 물자 및 용역 소요를 작성하여 태평양지구사를 거쳐 국방부 군원국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승인된 기획은 각 군사고문단 측에서 회계연도별 군원 지원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

육군의 경우 미군 군사고문단의 군원 계획 작성을 위해 각 병과의 보급관리관이 최신 자산 현황에 기준을 두고 해당 연도의 육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술감이 검토한 이후에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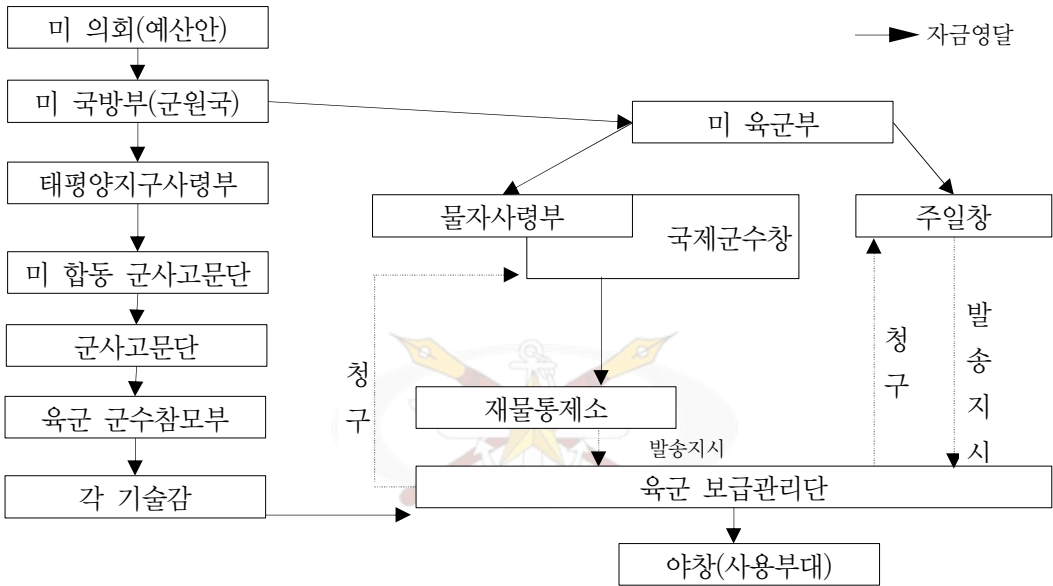
전투기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은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둔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62-63.

13)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계룡: 육군본부, 1997), pp.140-142.

참모부에 제출하여 육군의 요구안으로 심의를 거친 후에 고문단에 제출하였다. 미 군사고문단은 제공된 요구안을 지시된 자금 배정액, 자산 현황, 사업 우선순위 및 각종 소요를 종합 검토한 이후에 작성 계통에 따라 국방부 예산국을 경유 및 의뢰하여 최종 예산안으로 상정하였다.

[표 9-2] 미 군원의 배정 및 국내 도입절차



※ 출처: 육군교육사령부, 「군원연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68), p.17.

미 의회에서 승인된 군원자금은 국방부 군원국으로부터 각 군에 자금 영달서를 발행하여 미 육군부 물자사령부가 물자 성격에 따라 미 육군의 보급기관과 미고문단 계통에 군원자금 영달서를 발취하여 하달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이러한 자금 영달서를 다시 자금 배정 통보로서 군수참모부를 거쳐 각 병과 보급관리기관에 하달되어 물자 청구의 근거가 되었다. 각 보급관리관은 배정된 품목자금의 한도 내에서 미 표준청구절차에 의거 주일창(駐日倉) 또는 국제 군수창에 청구하였으며 각 보급원천은 미 육군부에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접수된 청구서로 이를 조치하였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제공된 미국의 군사원조 성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한 이후 점령지역 주민들의 식량부족과 질병을 구조하는 점령지구 행정구호원조

와 점령지역의 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령지구 경제부흥에 필요한 원조로 전자의 대상품은 식량, 의류, 의약품이었고 후자의 주요 품목은 중유, 철광석, 코크스, 면화 등이었다. 따라서 광복 직후 한국에

증여된 많은 식량, 의약품, 의류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군사원조 내용이었다.



〈사진 9-1〉 한미원조 한미협정서 체결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6·25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세가 긴장됨에 따라 1951년 6월 미국은 공산국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원조에서 상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에 의거 하여 군사원조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즉 국방 예산의 지원과 경제안정에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 시설재 그리고 도로, 항만, 운수, 통신 시설의 건설 등 직·간접적으로 방위문제와

연관성을 맺게 함으로써 방위를 위주로 하는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¹⁴⁾

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의 군사원조는 우리 군이 연합군의 일부로 작전함에 따라 직접 군사지원이 제공되었으나, 휴전 이후에는 미 군원으로 전환되어 1956년도부터는 미 공법 제480조에 의한 잉여농산물이 도입되어 그 판매대금이 우리나라의 국방비 재원조달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1963년 이후 ‘케네디 정책’(경제원조 위주 정책, Foreign Assistance Act)에 의거 수혜국의 자립도를 향상하는 방침으로 전환, 군사원조는 증강보다 유지에 중점을 두고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비물자는 점차 군원이관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군원이관 문제는 1959년도 한국 정부의 재무부 장관과 주한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매그루더(Carter B. Magruder) 대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당시 미국과 합의된 내용은 한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일부 소모성 물자의 군원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 자체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미국 측은 향후 10개년에 걸쳐 연차별 군원이관 계획을 제시하였다. 미국 측에서 제시된 이관계획 대부분이 합의되어 이듬해인 1960년도부터 실천에 옮기기로 하여 1960년도와 1961년도에 급식류와 피복류의 완제품 일부가 군원이관됨으로써 원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군원이관이 시행되자 국방비의 증가가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국고 부담의 과중으로 1961년도 이후 추진 중이던 경제개발계획의 차질을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당시 최

14)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p.408-409.

고 회의 의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군원이관 문제를 교섭함으로써 1962년과 1963년의 2년간은 군원이관이 중단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1964년도부터 미국은 다시 군원이관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미합동군사고문단은 한국의 국내생산과 조달능력을 고려하여 7년간에 걸친 연차별 군원이관 수정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안에는 최초 이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류가 3년간에 걸쳐서 이관하도록 포함되어 있었으며, 1964년 및 1965년에는 이 수정계획에 의거 미국의 군원이관이 다시 시작되었다. 따라서 1960년도 군원이관이 최초로 시작된 후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는 1965년도까지 군원물자가 다수 이관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물자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의 증가로 국고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¹⁶⁾

1959년도에서 1967년까지 미국의 군사원조는 대부분 육군에 투자되었다. 아래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 중 평균 67%가 당시 급격하게 증강된 육군을 무장시키고 현대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군사원조로 지원받은 대부분 금액은 운영유지비로 활용되었다.

[표 9-3] 1959년~1967년 미 군사원조비 운영

구분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총금액 (백만불)	249	230	168	121	164	98	93	125	141
육군 할당	193	186	107	80	88	72	59	83	89
육군비율 (%)	78	81	64	66	54	73	73	66	63
투자	78	93	55	46	61	15	21	32	31
운영유지	171	137	113	75	103	83	71	92	106
기타	-	-	-	-	-	-	1	1	4

※ 출처: 육군 군수참모부, 「군원과 국방비추세(1960년대)」(서울: 육군본부, 1968), pp.13-15.

1960년도 급식, 피복류로 시작한 이관품목은 1965년도에 이르러 일반 차량 타이어를 비롯하여 모포, 경유, 가공비, 건축자재, 사무용품 등으로 그 품목이 계속 확대되었는데 1965년 베트남에 한국군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1966년 3월부터 계획된 군원이관을 일시 중단하였다. 다음 [표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 기간 중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5)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285.

16)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브라운 각서' 제13항, 제14항에 의하여 미국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추가 차관을 받기로 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264-267.

9억 2,75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내정세의 변화 그리고 파월 한국군의 철군에 따라 유보해 오던 군원이관을 재개하여 1971년 7월 1일부터 군원이관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부터 한국 경제발전과 국방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군원은 1976년도를 끝으로 종결되었다.

[표 9-4] 베트남전쟁 시 미국의 한국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지원 종류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전투준비 및 예비사단 장비	6.4	—	6.4	—	—	—	—
해외 복무 수당	130.2	0,367	8,863	29,754	35,848	37,036	18.2
전사 및 신체장애	10.5	—	0.654	1.69	3,439	2,872	1.8
군 출동 배치	5.3	—	3.9	0.7	0.7	—	—
한국군 현대화	20.0	—	10.0	10.0	—	—	—
순증가 경비 재정	44.8	—	—	5,896	14,713	14,824	9.4
부대 재편성	51.9	—	25.6	4.8	9.8	7.4	4.3
침투방지 요청 자금	6.5	—	0.2	0.2	5.4	0.5	0.2
한국 조병창 확장시설	2.6	—	—	2.60	—	—	—
한·월 간 통신시설	1.4	—	—	1,314	—	0.007	0.38
C-54기 4대 관리유지	3.8	—	1.2	0.6	0.4	1.2	0.4
군대 막사 및 휴양시설 개선	1.7	—	—	0.657	0.583	—	0.477
군원 이관 중단	93.2	—	4.6	10.3	18.4	27.1	32.8
전투식량 보급	24.0	—	—	—	6.1	12.3	5.6
대한군수 물자 구매	30.8	—	9.6	11.9	15.2	9.1	5.0
한국 업자 진출	305.4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군용 물자 및 용역구매	144.0	—	32.0	32.0	32.0	32.0	16.0
군사 해상 수송계약	14.5	—	3.0	3.0	3.0	3.0	1.6
공용출장 지원	2.1	—	—	0.9	0.9	0.8	0.4
특별휴가지원	1.4	—	—	—	—	0.7	0.7
기타지원	7.0	0.09	0.7	1.6	2.0	1.5	1.1
총계	9억 2,750만 달러						

※ 출처: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3집(서울: 육군본부, 1977), p.135.

3. 국방예산 편성과 운용의 변천

가.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의 변천¹⁷⁾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규모는 군사부문과 정부 및 민간 부분의 상충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 오고 있다. 국방예산은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 국방예산에 관한 총괄, 절대적 대미 의존기(1949년~6·25전쟁기), 전후 정비기(6·25전쟁 이후~1962년),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1963년~1992년), 군사 첨단화기(1993년~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정책 총괄 우리나라는 국가 방위를 위해 1949년에는 세출예산 총액의 26.3%, 1951년에는 50%를 사용하였다.¹⁸⁾ 6·25전쟁 이후부터 1961년까지 국가 경제의 약 7%, 중앙정부 예산의 약 35%, 1962~1979년 박정희 정부 동안 약 4.3%, 27.3%, 1980~1987년 전두환 정부 동안 4.8%, 28.9%, 1988~1992년 노태우 정부 동안에는 약 3.4%, 24.0%, 1993~1997년 김영삼 정부 동안에는 2.7%, 18.1%, 1998~2002년 김대중 정부 동안에는 2.3%, 13.2%, 2003~2007년 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약 2.3%, 11.4%,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2.4%, 11.6%,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4%, 14.1%를 배분하였다.¹⁹⁾

한국은 과거 70여 년 동안 연평균 GDP 대비 약 4%, 정부재정대비 약 2.4%의 재원을 국방부문에 배분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타 국가들과 비교 시 적지 않은 자원이 국가 방위를 위해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한국의 생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자주국방 능력 확보와 국가 발전 및 사회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GDP는 33.6%, 정부재정은 35.8%, 국방예산은 31.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예산의 장기적 추세를 보면 GDP 대비 기준으로 6% 이상, 4~5%, 2.4~3% 이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GDP 대비 6% 이상은 1953~1962년, 4~5%는 1963~1987년 기

17) 이 내용은 이필중,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2016년 가을호), pp.185-224.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추가 자료를 보충하여 작성하였다.

18)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37-39.

19) e-나라자료(<http://www.index.go.kr>) 자료 참조(검색일: 2020년 1월 15일).

20)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미국이 3%대, 중국 2~3%, 일본 1%, 러시아 2~3%, 이스라엘 6~7%를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e-나라자료 참조(검색일: 2020년 1월 15일).

간으로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 2.5~3%는 1988~1997년간으로 한국군 현대화기, 2.5% 이하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군사력의 첨단화 시기’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재정 대비를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후 정비기’에는 연평균 36% 이상,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에는 약 28%, ‘군사력 첨단화기’에는 15% 이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국방부문에 국가 재원을 배분하였다.

절대적 대미 의존기(1949년~6·25전쟁기) 1949년 우리 정부의 국방예산은 세출 예산 총액의 26.3%인 약 23.9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방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1950년에는 132.4백만 원으로 5.6배 증가하였다. 1951년에는 약 3배가 증가한 329.8백만 원으로 팽창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세출 예산의 50%를 넘는 비중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은 군인 봉급, 급식비, 일부 행정경비를 지출하는 데에 불과한 금액이었다.²¹⁾ 이 시기 대부분의 군사비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주한병참사령부를 통해서 한국군에 지원되는 직접군사지원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건국과 6·25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군사원조는 한국의 경제와 국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후 정비기(6·25전쟁 이후~1962년) 6·25전쟁 이후 파괴된 국가 경제와 사회질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제2남침을 대비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연평균 GNP의 약 7%인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37%를 국방예산에 배분하였다.²²⁾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국방운영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예산도 4분의 3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부터 1955년까지는 미군의 보급 계통으로 장비 및 물자를 한국군에 직접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1956년부터 직접군원(直接軍援)에서 정상군원(正常軍援)²³⁾으로 전환하였는데 연평균 2억 8,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²⁴⁾

21)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38-39.

22) 6·25전쟁 기간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정부는 전쟁의 수행과 전쟁 이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국민총생산(GDP)의 6.1%와 정부 일반재정의 50.7%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에 편성하였다.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435.

23) 미군은 6·25전쟁 시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그들의 육군·해군·공군 예산에서 직접지원(직접군원)하던 것을 1956년부터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대외원조자금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 대외원조자금에 의한 원조를 정상군원이라고 한다.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280.

24)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02), p.413.

[표 9-5] 한국 국방예산의 자체 부담률(1953~1962)

단위 : US\$(경상가격 기준)

회계연도	국방예산(A)	자체부담(B)	B/A(%)	군사원조(C)	C/A(%)
1954	5,991.8	30,033.3	65.4	2,069.5	34.5
1955	29,397.9	5,517.9	18.8	23,880.0	81.2
1956	—	—	—	—	—
1957	33,051.2	6,413.2	19.4	26,638.0	80.6
1958	29,347.8	7,902.3	20.1	31,345.0	79.9
1959	27,704.8	8,619.8	31.1	19,085.0	68.9
1960	19,007.0	9,360.1	32.3	19,646.9	67.7
1961	37,399.2	496.2	1.3	36,903.0	98.7
1962	306,074.0	5,474.0	15.2	30,600.0	84.8
평균			25.5		74.5

※ 출처: 이필중,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2016년), p.193.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도에 82달러에 불과했고 총수출은 4,300만 달러로 수입의 25%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물리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중요 3부문(국방, 경제성장, 사회개선)의 정책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지원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면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부문을 포함한 원조는 절대적이었다. 이 시기는 6·25전쟁 휴전 이후 ‘선 국방 후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간 중 한국 정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은 국방부문(30.6%)과 경제개발(27%)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의 국방비 지출구조를 보게 되면 봉급과 급식비를 포함한 개인 유지비가 전체의 77.2%였으며, 부대 유지비는 17.9%, 전력증강비와 전투 준비비는 2.3% 및 2.6%에 불과하였다.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국방예산의 77.8%, 해군은 10.9%, 공군은 5.7%, 그밖에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가 5.6%의 비율을 점하였다.²⁵⁾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1963년~1992년) 이 기간은 박정희 정부(1961~1979)와 전두환 정부(1980~1987) 시기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원조에서 벗어나 국방비 측면에서 자립

25) 국방부, 『국방사』 제2집(서울: 국방부, 1987), p.436.

함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과 군사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기간이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방비에서 국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병사들의 의식주 비용의 3분의 1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는 국내 재원이 국방 재원의 51.7%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 당시 국방 재원의 대부분은 미국의 무상 군원과 대충자금으로 충당되었지만, 대충자금은 1971년을 끝으로, 무상 군원은 1976년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에 의해 1967년도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이것도 1973년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으로 경제력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19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국방비를 증가시켜 1976년도부터는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6%대로 증가시켰다.²⁶⁾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 동안 국방비는 GDP의 4~5%, 정부 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상회하였다. 이 기간을 국방 능력 기반 구축기(1963~1975)와 대북 군사위협 대응전력 확보기(1976~1987)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방능력 기반구축기(1963년~1975년)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강력한 김일성의 지도로 전후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해 3개년 경제발전계획(1954~1966)과 제1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1957~1961)을 추진하여 괄목한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북한은 개발계획의 목표는 1년 앞당겨 달성하고 4대 군사노선을 7년 경제발전계획(1961~1967)과 병행 추진하기 시작하여 군사력 증강에 재원을 투입한 결과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2.5배가 넘는 국방예산 규모를 유지하였다.²⁷⁾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선(先) 경제 성장과 사회안정, 후(後) 국방력 건설’이라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군사지원과 주한미군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저지하면서 경제개발, 사회개발을 추진하면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닉슨 독트린(1969), 베트남 패망(1975)은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971년부터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추진²⁸⁾하고, 제2차 현대화계획이 시작되는 1975년에 목적세인 방위세²⁹⁾를 신설하여 한국군 현대화

26)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384.

27) 중앙정보부, 『북한대남공작사』(서울: 중앙정보부, 1973), pp.117-119.

28)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서울: 중앙일보사·중앙경제신문, 1993), pp.318-319.

29) 방위세는 국토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매기던 조세로서 우리나라는 일반재정지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압력을 줄여 경제개발의 위축을 피하면서 국방의 자립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하에 1975년 7월 ‘방위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90년 12월 31일 폐기되었다. 1973년 12월부터 벌인 방위성금 모금운동은 1988년 8월까지 총 470억 원이 모금되었고, 기간 중 이자발생으로 방위성금 총액은 615억 원이 되었다.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9-6] 한국 국방예산의 재원조달(1964~1975)

(단위 : %)

회계연도	대체기금	Grant Aids	Credit Finance 1	방위세	예산자립도
1964	60.2	139.2	—	—	16.6
1965	61.9	107.7	—	—	18.3
1966	63.7	119.7	—	—	16.4
1967	49.1	103.2	—	—	24.8
1968	29.7	128.4	—	—	30.6
1969	18.4	56.2	—	—	52.2
1970	12.5	52.0	—	—	57.6
평균(%) (1964~1970)	42.2	100.9	—	—	30.9
1971	5.7	92.4	4.0	—	50.0
1972	0.8	49.3	3.8	—	67.3
1973	—	35.8	4.5	—	74.8
1974	—	14.3	4.5	—	89.9
1975	—	9.4	6.3	14.1	91.7
평균(%) (1971~1975)	3.25	40.24	4.8	14.1	74.74
평균(%) (1964~1975)	33.6	75.6	4.8	14.1	49.2

※ 출처 : 이필중,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p.197.



〈사진 9-2〉 어네스트 존 미사일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박정희 정부는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 미군 1개 사단이 감축됨에 따라 생기게 될 한반도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미국과 제4차 한미 국방장관회담(1971. 7. 13.), 한미 군사실무자회담 등을 통해 한국군 현대화계획(1971~1975)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총 15억 9,6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 기간은 1977년까지 2년이나 연장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지원액도 9억 8,800만 달러만 무상으로 종결

2011), p.54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266-267.

되었고, 5억 2,82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은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으로 대체되어 우리 자체의 제1차 전력증강사업에 포함됨으로써 다소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목표달성에 차질을 초래하였다.³⁰⁾ 한국군은 이 금액으로 F-5A/B, DD급 구축함, 어네스트 존(HJ) 로켓 발사대와 8인치 자주포를 포함한 각종 화력장비, M-48전차, 5t 트럭을 포함한 기동장비, TOW 유도탄 등의 장비를 도입하였다.³¹⁾

[표 9-7] 한국군 현대화계획 자금배정 내역

(단위 : 100만 달러)

구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계
무 상 군 원	투자비	158.5	54.5	77.7	72.1	56.6	52.4	0	471.8
	운영비	106.8	70.2	51.3	4.2	0	0	0	232.5
	교육비	1.5	1.5	1.3	1.3	1.5	2.2	1.4	10.7
	UN지원비	0.3	0.3	0.3	0.3	0.4	0.3	0.3	2.2
	기술 지원비	0.3	0.3	0.1	0.1	0.1	0	0	0.9
	포장 수송비	22.6	23.2	18.3	22.5	24.0	9.2	4.0	123.8
	계	290.0	150.0	149.0	100.5	82.6	64.1	5.7	841.9
	초과품	56.0	68.0	15.0	3.9	3.2	0	0	146.1
	무상계	346.0	218.0	164.0	104.4	85.8	64.1	5.7	988.0
FMS 차관	(15.0)	(17.0)	(24.2)	56.7	59.0	260.1	152.4	528.2	
총계	346.0	218.0	164.0	161.1	144.8	324.2	158.1	1,516.2	
누계	346.0	564.0	728.0	889.1	1,033.9	1,358.1	1,516.2		
현대화 잔액	1,154.0	936.0	772.0	610.9	466.1	141.9	+16.2		
진도(%)	23	38	49	59	69	91	100		

※ 출처: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419.

() 속의 FMS 차관은 현대화계획과 관계없는 FMS 차관임.

둘째, 군사현대화 시기(1976년~1992년)이다. 이 시기에 전력증강을 위한 목적세로 신설된 방위세의 규모는 GNP의 약 2%로 전액을 육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한국군의 현대화와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³²⁾ 1975년까지 국방예산의 운용은

30)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418.

31) 국방부, 『국방사』 제3집(서울: 국방부, 1990), p.282.;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p.420-421.

32) 국방부, 『국방사』 제5집(서울: 국방부, 2011), p.523.

부대운영과 유지에 약 90%를 배분하였고 군사기술 연구·개발 및 무기구입에는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6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30~35%를 군사력 건설과 현대화에 배분하였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대북한 열세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약 1/3을 국방부문에 배분하였는데 전두환 정부는 연평균 약 29%, 박정희 정부는 약 27%의 재원을 배분했다. 두 정부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국방부문의 우선순위가 정부 예산분배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표 9-8]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 국방예산의 재원(1970~1987)

연도	미국 군사원조		방위세	한국의 국방예산 총당률(방위세 포함)
	MAP	FMS		
1970~1971 연평균(%)	25.4	4.8	14.1	74.6
1976	4.4	10.1	78.2	96.1
1977	0.3	8.3	36.0	99.8
1978	0.1	15.3	36.7	99.9
1979	0.02	9.1	41.4	100.0
1980	0.01	3.7	37.9	100.0
1981	0.002	4.0	38.1	100.0
1982	—	3.9	42.6	100.0
1983	—	4.3	37.4	100.0
1984	—	5.3	38.5	100.0
1985	—	5.2	41.4	100.0
1986	—	3.2	42.5	100.0
1987	—	—	40.7	100.0
연평균 (%)	0.8 (1976~1981 연평균)	6.6. (1976~1986 연평균)	38.8	

※ 출처 : 이필중,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p.202.

1970년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지원 정책변화는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 의지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프로그램(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에서 해외군사판매(FMS) 원조로 전환했고 차관원조도 1981년 모두 종료되었다. 이후 미국의 재정지원은 모두 차관이었으며, 이것도 1987년에 종료되었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표 9-8]에서 볼 수 있듯이, 1977년도부터는 한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군원 없이 자체적

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방재원 면에서 처음으로 자립하게 되었다.³³⁾ 이것은 방위세의 징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전 정부들에 비해서 국방부문의 정책 우선순위를 다른 정책보다 낮게 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 배분도 낮아졌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방예산의 배분을 이전 정부들이 상대적으로 지상군의 전력을 건설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었던 것에 반해 해군과 공군의 재원 배분율을 높였다. 해군과 공군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은 걸프전을 통해 세계적 추세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지상군의 감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군사첨단화 시기(1993년~현재)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기간과 비교해서 국방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주요 이슈들은 군사력 건설·전력 운용 및 국방운영 분야의 혁신과 첨단화, 국방개혁 및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고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별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은 전두환 정부에서의 5.69%를 정점으로 노태우 정부에서의 3.95%, 김영삼 정부 3.08%, 김대중 정부 2.63%, 노무현 정부 2.33%, 이명박 정부 2.52%,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3%로 그 추세가 하강하고 있다. 국방예산의 정부재정대비 비중도 역시 전두환 정부에서 34.7%, 노태우 정부에서 30.0%, 김영삼 정부에서 25.1%, 김대중 정부에서 18.3%, 노무현 정부에서 15.3%, 이명박 정부에서 15.0%, 박근혜 정부에서 14.8%,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14.1%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³⁴⁾ 이처럼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국방부문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우선순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의 성장률과 정부 예산의 증가율보다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노태우 정부 들어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군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세 제도가 한시적 목적세로 1992년 말부터 종료되었으며, 율곡사업 비리 등으로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33) 국방부, 『국방사』 제4집(서울: 국방부, 2002), p.398.

34)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235.; e-나라자료, “국방예산 추이”(검색일: 2020년 1월 30일). 각 정부별 재임 기간 중 최고 수치를 반영하여 기록하였다.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이 단순 수치상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는다. 정부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방비 증가 폭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치 줄어들어도 그 액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14.1%에 불과하지만,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었다.

불신이 확산한 것도 국방예산 소요 및 집행 등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방 부문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의 하락은 한국 내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⁵⁾

국방부문에는 1980~1989년간 정부재정의 평균 31%에서 1993~2012년 기간에는 14.7%로 하락하였고, 특히 김영삼 정부 동안의 18.0%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개발 분야의 점유율은 7%, 9.4%, 13%, 22%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의 국방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에는 비(非)국방부문에서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 미국군사기지 이전, 장비 운용에 필요한 연료와 수리부속, 방위비 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표 9-9]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이후 방위력개선비³⁶⁾ 증가율이 전력운영비³⁷⁾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2007년 27.3%에서 2017년 30.2%로 향상되었고, 2018년 31.3%, 2019년 32.9%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³⁸⁾ 국방 연구개발(R&D) 분야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는 핵심·선진기술의 독자적인 확보 비율을 높이고 방산 수출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 향상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기술 면에서 선진국의 약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5) 정치적 요인으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부는 군사정부로, 새로 탄생된 정부는 문민정부로 규정하고 군 개혁 및 군대 내 사조직의 해체,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 등은 군사력 건설, 군 운영 및 군 관련 각종 사업의 소요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국민에게 복지 수준의 향상, 지역 및 계층 간의 격차 해소 요구 등 사회발전의 욕구를 지속해서 분출시켰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방부문의 정책 우선순위를 낮추고 교육·복지, 사회개발 등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정부의 재정 배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6)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드는 장비·물자·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 유지, 노후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37) 전력운영비는 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 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8) e 나라자료, “국방예산 추이”(검색일: 2020년 1월 30일).

[표 9-9] 연도별 국방예산 운용(2000~2017)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00	2007	2011	2017	2018	2019
정부재정	총액	887,363	1,565,177	2,099,303	2,750,104	3,014,172	3,317,773
	(재정대비 국방비, %)	16.3	15.7	15.0	14.7	14.3	14.1
국방비	총액	144,774	244,972	314,031	403,347	431,581	466,971
	전력운영비	91,337	178,165	217,096	281,377	296,378	313,237
	(전력운영 구성비, %)	63.1	72.7	69.1	69.8	68.7	67.1
	방위력 개선비	53,437	66,807	96,935	121,970	135,203	153,733
	(방위력 개선 구성비, %)	36.9	27.3	30.9	30.2	31.3	32.9

※ 출처 : e-나라자료, “국방예산 추이” (검색일: 2020년 1월 30일).

국방비 편성과 운용의 변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비는 각 시기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국방부문보다는 사회, 교육, 복지부문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안보위협에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위협, 주변국에 의한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국가적 위협 등의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우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동향 속에서 남북한 현안을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인권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병들이 안전하게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³⁹⁾

이렇듯 다양한 안보환경 변수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굳건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 부합하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39)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114-115.

4. 국방예산과 국민경제

국방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함께 창출한다. 국방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각종 산업 부문에 지출되어 산업생산과 고용증진에 이바지한다. 특히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은 민간부문으로 파급되어 산업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한다.

국방비 지출이 고용과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방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 한국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국민의 복지, 교육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후생극대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공통과제이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복지, 사회·문화적 발전과 국가안보는 이 공통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경제적 복지는 국가안보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우선주의’ 또는 ‘경제 우선주의’와 같이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우선성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국방비를 결정하면서 안보위협을 무시한 채 경제적 여건만 고려하여 국방비가 과소 책정되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반대로 군사적 소요만 고려하여 국방비가 과다 책정되면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방예산은 한번 집행하고 나면 끝나는 소비성 경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방비를 집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국방 연구개발을 위하여 직접 비용을 직접 지출할 뿐만 아니라 군인이 수요자로서 주둔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주고 있다.

가.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국방 분야의 조직은 효율적으로 조직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의 요소 생산성이 국민 분야의 것보다 높으므로 국방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민간분야의 기술개발에 긍정적인 역할(spin-off)을 한다는 것이다.⁴⁰⁾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는 다른 산업의 수요 창출, 고용 증대 효과, GDP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한, 국산화 개발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40)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국방대학교, 2002), pp.271-273.

며 방위산업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이 이바지하고 있다.

①연구개발투자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효과가 있다. 국방개혁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비 증가분은 약 10조 원으로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연구개발 투자소요액은 35.2조 원(국방비 대비 평균 5.67% 적용)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현 수준 유지 시 연구개발 투자 소요는 같은 기간 동안 25.2조 원에 이른다. 이를 따져보면 국방연구개발비 10조 원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기간 GDP 증가는 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②다른 산업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국방부문의 산업 연관 효과는 산업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방비 1,000원을 지출하면, 1,700원의 생산유발이 일어나고 760원은 국민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국방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709원으로 서비스업의 1,531원, 공공행정 1,448원 등 산업 평균 1,659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국방부문이 0.764, 제조업 0.627등으로 전체산업 평균인 0.7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¹⁾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2.3명으로 제조업 평균 9.4명에 비해 높다.⁴²⁾ 국방기술 진보 효과로 총소요 생산성 분석을 통한 기여효과를 살펴보면 국방연구개발이 총소요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는 21.2%로서 정부의 38.2%, 민간의 40.6%보다 낮지만, 기술진보에 의한 총소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면 국방부문의 연구개발이 GDP 증가에 이바지한 정도는 3.43%로 높은 편에 속한다.

둘째, 국방 분야 기술의 민간분야 이전이다.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과학기술이 민간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⁴³⁾ 후방연관 효과(spin-off)⁴⁴⁾는 군사 분야 기술이 민간경제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는 제트기, 레이더, 인터넷, 컴퓨터, 드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원래 군용으로 연구·개발되었으나 오늘날 민간항공산업과 정보기술산업, 인공지능(AI)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1년에서 2010

41) 국방부, 『열정과 노력으로 만드는 국방비』(서울: 국방부, 2009), p.9.

42) 국방부,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서울: 국방부, 2015), p.41.

43)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이전 현황은 아래 표 참조. 국방부, 『튼튼한 국방』(서울: 국방부, 2011), p.55.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건수	12	3	10	11	13	15	21	24	16	29	154
업체	14	5	11	13	14	19	22	27	18	34	177

44) 군사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관계는 후방연관 효과(spin-off), 전방연관 효과(spin-on), 무연관 효과(spin-away)로 나눌 수 있다. 전방연관 효과(spin-on)는 민간경제 분야의 기술이 군사과학 분야의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화약, 망원경, 비행기, 전자산업 등의 기술이 군사 분야의 기술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무연관 효과는 군사 분야 기술이 민간경제 분야에 아무런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서울: 박영사, 2019), pp.324-325.

년까지 국방기술의 민수 분야 이전 현황 및 파급 사례는 [표 9-10]과 같다. 국방 관련 기술이 민간분야로 파급되는 건수와 업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기술은 다양하게 민간분야의 유사한 업종으로 파급되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표 9-10] 군사기술의 민수 파급 사례

분야	관련 군사기술	민수 파급 사례
금속 / 기계	- 소화기 생산 위한 기계 가공 및 공정설계 155밀리 주퇴복좌기 제작 - 박격포, 발칸포 부품 가공기술	- 연료 분사 장치 및 공기식 공구 생산 - 트랙터, 이양기, 유압실린더 제작 - 선반제작
수송	- 전차생산을 위한 용접, 가공 및 성능시험 - 군용차량, 금형 설계, 차 공구 및 성능시험	- 전동차 및 철도차량 제작 - 트럭제작
통신 전자	- 화포 사격 통제장치 - 신관 AL 소재제작 - 탄도 계산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 무선통신장비 개발 - 전자 유도무기 개발 - 전자 유도무기 및 레이더 기술	- Gas Boiler 통제장치 제작 - VTR, 복사기 드럼 소개 개발 - FDM/PCM 전송 M/W 장치, 무선전화기 - 선박용 레이더, 해양전자장비, 자동차 충돌방지용 레이더 개발
통신 전자	- 전자전 장비개발 - Laser range finder 기술 - 전자광학추적장치 기술	- CD Player - 반도체 조립 장비, 비디오/디지털 카메라
기타	- 전차 포술 시뮬레이터 개발 - 비냉각 열상장비 개발	- 전동차 시뮬레이터 - 의료용 열상장비

※ 출처: 육군중앙경리단, 『국방예산론』(계룡: 육군본부, 2010), p.198.; 국방부, 『열정과 노력으로 만드는 국방비』(서울: 국방부, 2009), p.9.

셋째, 국방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방산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이루는 중요한 근간으로 개혁을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방산 물자 수출액은 1988년 이후 1억 달러 이상으로 2003년 2.14억 달러, 2004년 4.18억 달러로 상승 추세에 있다. 연구개발의 확대 및 전투 투자비의 증가에 따라 국내 장비의 구매 및 수출이 증가하여 방위산업 매출액은 2004년부터 4조 4,440억 원에서 2020년에 약 50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방 연구개발비의 투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수출을 증대시켜 왔다. 방산 수출 실적은 [표 9-11]과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대상국이 유럽, 중동 지역 등 90개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방산 관련 수출 기업도 156개(2015년 기준)가 넘고 있으며 방산 수출

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군사적 교류를 넘어서 외교·경제적 협력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9-3〉 T-50 출고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수산업의 성격상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연구개발의 성공에 따르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진출하기 곤란한 민간기업 대신 국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투자를 보조하면 민간 자본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위험부담 및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준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는 위험 부담이 큰 경우 개발을 꺼릴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군사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그러나 국방 분야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에 따르는 개인적, 사회적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군

[표 9-11] 연간 방산 수출 실적 및 수출 품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액	8.45	10.31	11.66	11.88	23.82	23.53	34.16	36.16
주요 품목	개인 장구류, 항공 부품	P-3C 항공부품, 군용차량	수송용 장갑차	군수 지원함	T-50 고등 훈련기 209급 잠수함	KT-1 훈련기, 군수 지원함	FA-50 경공격기 군수 지원함 / 호위함	초계함, FA-50

※ 국방부,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서울: 국방부, 2015), p.41.

다섯째,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이바지하며 전문 기술인력을 배출한다. 김해, 원주 민·군 겸용 공항 등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공항, 교량, 항만 등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용되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기계, 화공, 전기 등 120여 개 분야에 걸쳐 산업기사, 기능사 등 연간 약 8,300여 명의 국가기술자격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통신·항공·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과 교육을 통해 연간 5만 4,000여 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고 있다.

나. 국방비 절감을 위한 군의 노력

우리 군은 국방비 절감을 위하여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발전된 민간분야의 자원과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더욱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첫째,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방비를 절감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중기계획 수립 및 단연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총 수명주기체계관리를 통해 혁신적으로 국방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총 수명주기체계관리(TLCSM⁴⁵⁾란 군수품의 최초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소요제기, 개발, 양산, 유지, 보수 등 전 과정을 통합하고 관리책임을 일원화함으로써 총비용을 최적화하고 통합된 전력 발휘를 높이고 있다.⁴⁶⁾

[표 9-12] K-계열 궤도 장비 창정비 및 성능개량 사업 통합의 효과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 기간	별도 추진 시 소요액			통합 추진 시	절감 예상액
		계	성능개량	창정비		
계		2조 9,290	1조 6,645	1조 2,645	2조 2,733	6,557
K-200 장갑차	'10~'19	4,139	2,651	1,488	3,550	589
K-55 자주포	'11~'19	1조 5,964	1조 712	5,252	1조 3,146	2,818
K1A 1전차	'12~'18	9,187	3,282	5,905	6,037	3,150

※ 출처: 국방부, 『열정과 노력으로 만드는 국방비』, p.12.

셋째, 군 보유 자산으로 작전수행능력의 대부분을 충족하는 자족적 체제에서 군 보유자산은 전투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지원 기능은 민간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

45)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

46)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pp.315-323.

고 있다. 민간자산 활용의 대상은 시설·외주정비 분야에서 보급, 정비, 의무 등으로 확대하고 활용방식도 위탁경영, 민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넷째, 유사·중복기능부대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군별 별도로 운영하는 근무 지원 분야의 업무와 조직을 통폐합하고 중간 지휘 계층을 슬림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병력과 예산을 절감하였다. 인쇄창(2009), 복지단(2010), 시설조직(2011), 정리단(2012) 등 각 군의 유사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병력 5천여 명, 예산 40여 억 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국방부 근무지원단(2012) 국군체육부대(2014) 등 근무 지원조직 슬림화를 통해 병력 2천여 명 및 예산 70여 억 원을 절감하였다.⁴⁷⁾

다섯째, 효율적인 부대 재배치로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군부대를 대단위로 통합 배치하여 부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군사시설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부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군 병영문화와 복무여건 개선

1. 군 병영문화 개선

가. 추진 배경과 목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복지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우리 군도 그동안 가용한 자원 범위 내에서 장병의 복지와 병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력 신장 및 사회발전 추세와 장병의 기대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장병의 사기·복지는 전투력의 기초로서 유사시 전력 발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군 창설 이래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의 정신을 중시하는 군대문화는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군대문화는 전통적 유교 사상의 토대 위에 구 일본군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미군의 실용주의적 문화가 혼재되어, 고유의 정체성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측면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식과 형태가 군내에 여과 없이 유입됨으로써 군의 전통적 가치관이 혼

47)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pp.358-362.

돈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마저 퇴색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개혁 차원에서 기존의 군대문화 중 긍정적 요소는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부정적 요소는 과감히 버려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정착’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잘못된 군대 문화를 청산하고 건전한 근무 기풍을 조성하며 간부의 직업윤리와 군인 관을 재정립하여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해가고 있다.

군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병영 내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⁸⁾ 또한, 병사들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00년대부터 ‘바람직한 군대 문화 정착’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람직한 군대문화 정착을 통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며 기본임무 및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인으로서 가치관 즉,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위국·위민의 국가관, 생명을 담보로 한 직업군인의 사생관, 자신의 임무에 자부심과 보람을 갖는 직업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군 고유의 정체성이 있는 군대문화를 창출하고 그릇된 관행과 부패·비리·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현시점에서의 가치관으로 재조명하여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재판단하여 건전한 군대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열린 문호, 부하를 리더로 육성하는 지도문화, 민·관과 정보교류 확대 및 개인 능력 계발여건 부여 등 정보지식 사회의 학습문화, 육·해·공군의 순환 교육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3군 합동문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였다.⁴⁹⁾

나. 군 병영문화 개선 경과

우리 군에는 내무생활, 교육방법, 기강 면에서 전통사회의 유습(有習)이나 일본군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특히 초창기 우리 군의 구성원 중에서 일본군에서 생활을 한 유경험자들이 내무생활을 통솔함으로써 일본군대를 모방하여 규율이 엄격한 반면 급여, 급식은 충분하지 못하였다.⁵⁰⁾ 이것은 미국식 부대구조와 교육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했으나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일본식 교육 훈련체계에 익숙한 이들이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문화는 철저한 상명하복에 따라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 복

48)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인권침해 기관으로 1위 군대(42.4%), 2위 구금시설(30.8%), 3위 경찰(26.8%)로 나타났다.

49)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3), pp.117-118.

50) 육군공병학교, 『육군공병학교 30년사』(광주: 육군공병학교, 1981), p.96.

종과 철저한 서열의식, 상하의식만이 강조되었다. 지휘통솔 교육 훈련내용 중 가치관, 윤리관, 의사소통 등에 대한 것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비교하여 중요성이 낮았다. 6·25전쟁에서 한국군을 지도하고 교육했던 주한미 군사고문단들은 한국군에 대해 일본식 또는 한국식 관행들에 의해 개인의 인권과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1970년대 초 스틸웰(Richard G. Stilwell)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지휘관들은 국군 장교의 부하를 대하는 태도에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었다.⁵¹⁾

우리 군의 문화는 폭력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교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적 전통과 일본군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이에 익숙해진 장교집단의 사병에 대한 인식, 사병들의 낮은 학력 수준⁵²⁾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 병사들의 학력 수준이 크게 신장되었고, 사회에도 민주화가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 등 폭력행위가 청산되지 못한 가운데 병영 내에서는 악·폐습이 존재했다.⁵³⁾

1963년에 「군인복무규율」이 제정되었는데, 군기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이유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73년 「국군의 이념」이 제정되었으나 병영 생활 변화에 미친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군에서는 병영 내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가혹행위와 폭력, 성희롱을 막기 위하여 「군인 복무 기본법」을 2007년 초에 제정하였다.

우리 군은 악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병영 부조리 척결 및 사고 예방,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병력·부대 관리 시스템이 발전되고 복무여건 및 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병영 내 폭력을 일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초급간부의 지도력 향상,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 마련, 군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개방과 소통 확대 등의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과거 병영문화 개선 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국가 방위의 최후 보루인 군의 특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병영 생활과 인권 존중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왔다.⁵⁴⁾

우리 정부와 군에서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 관계의 형성과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176.

52)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사관들의 70%가 국졸, 24%가 중졸, 5%가 고졸이었으며, 병사들도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인원이 연대급당 200명에 이를 정도로 학력 수준이 낮았다. 이재전, 『지휘의 참고』(서울: 육군본부, 1967), pp.58-59.

53) 육군본부, 『육군문화혁신 지침서』(계룡: 육군본부, 2007), p.96.

54)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176.

기부터였다. 1999년 이전에 군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마련하기보다는 사고 예방 및 후속 조치에 주안을 두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⁵⁵⁾ 군에서 시행해 온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지침」 제정을 시작으로 「신병영문화창달(1999년)」, 육군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이후 「신진병영문화 VISION(2005년)」, 해병대 기수 열외로 촉발된 총기난사사건 이후 「전투형 군대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대책(2011년)」, 「병영문화선진화추진계획(2012년)」, GOP 총기난사와 윤 일병 가혹행위 이후 「병영문화혁신(2014)」 등 정권과 시대에 따라 군은 대형사건·사고 이후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했다. 부대 관리가 잘 돼야 실전적 훈련이 가능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투 위주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무장한 강한 전투원을 양성함으로써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고자 신병영문화 창달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첫째, 병영 생활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준일과표 및 주간 시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 일과 시간에는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PC, 영어 및 한자학습 등 자기계발을 하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동안 정보화 문맹을 해소하도록 하고 전역 후에 정보화 역군으로 국가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1999년 당시 장병들의 정보화 수준은 컴맹률 34%, 넷맹률 68%로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장병 정보화 교육을 과거 군이 문맹퇴치 노력 및 산업기능요원 양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추진하였다.⁵⁶⁾ 또한, 저녁 점호 방식을 내무사열식 형태로 부터 인원 및 건강상태의 확인 위주로 개선하였다.

둘째, 부대운영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간부들이 오직 전투 임무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각종 보고 및 검열, 지도 방문 등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전투 임무에 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경험이 부족한 초급간부들이 야전 실무현장에서 겪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행동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실무지침서’를 보급하여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으로 부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병영시설 및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요구가

55) 국방부, 『신진병영문화 VISION』(서울: 국방부, 2005), p.6.

56)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2), p.172.

충족될 수 있도록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병역의무 수행을 보다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병영문화 창달’로 병영 생활을 ‘수용’ 개념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수련장’의 개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⁵⁷⁾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후 정부에서 이를 계승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대적 요구와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되고 그 대상과 범위도 병사 위주에서 간부와 지휘관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이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2005년 1월 논산훈련소의 훈련병 인분 가혹행위 사건⁵⁸⁾, 같은 해 6월 육군 28사단 최전방 초소(GP)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는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병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병영문화의 틀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⁵⁹⁾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는 ‘선진 병영문화’를 ‘인권 존중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병영 생활의 총체’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병영문화의 개선’ 방향은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그리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등 3대 목표로 구체화하였다.⁶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였고,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병사들의 부모를 포함한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구성·발족하여 자문기구로 운용하였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도 이 당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조직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치관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장병 정신 교육 및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하기

57)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p.159-160.

58)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병영문화 혁신과제 31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2009년까지 29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병계급구조 개선과제는 2006년 계급구조 축소에 따라 검토가 중단되었고, 군인 복무 기본법 제정은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보류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사 2007~200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795.

59)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 연구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1-15.

60)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61-162.

위하여 인터넷 PC 설치, 지휘관과 주임원사에게 상담용 PC 보급을 통해 병사들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군 e-리닝센터 구축, 군 자격 제도위원회 구성 등을



〈사진 9-4〉 노무현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현장 방문

※ 출처: e영사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받아 자기계발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 법무관리실에 ‘인권팀’을 신설 운용하였으며, 외출·외박제도 개선, 일과 후 취침시간에도 24시까지 자율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자기계발 여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복무 부적합자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징병검사 단계부터 인성검사, 민간병원에 위탁검사 등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향상했다. 사고 예방을 위

하여 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장병 기본권 전문상담관을 연대급에 1명씩 운용함으로써 지휘관에게 사고 예방 활동에 관하여 조언하고 심리치료를 하였다.⁶¹⁾

병영 생활 내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들을 순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병영문화개선 대책 추진지침’을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내무생활은 병영생활로, 내무반은 생활관, 구보는 땀 걸음, 보초는 초병, 사병은 병사, 상황병은 당직병, 군복은 전투복, 군화는 전투화, 게시판은 알림판으로 새롭게 용어를 정립하였다.⁶²⁾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방부는 선진병영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대별, 기능별로 상세하게 규정된 「부대 관리훈령」을 제정하여 시스템에 의한 부대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간부들의 선진형 지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양성과정에서는 초급간부가 가져야 할 자질과 능력을 군별로 구체화하여 지도력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보수교육 과정에서 제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지도력 교육을 정규 교과에 반영하여 의식개혁 및 상담 요령을 교육하였다.⁶³⁾

장병 기본권보장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인권담당관실’을 국방부 본부에 신설하여 기본권정책 및 장병 기본권 증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61) 국방부, 『200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167-168.

62) 육군본부, 『육군문화혁신 지침서』(계룡: 육군본부, 2007), p.99.

63)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p.215.

부터는 각 군 본부에도 인권과를 설치하여 예하 부대 장병들의 기본권보장을 감독하고 기본권 증진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2008년에는 기본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인권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2009년에는 의료·수사·교정·법무·부대 교관 등 인권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부대 관리훈령」을 개정하여 고충 심사 처리대상에 병사를 포함하여 장병 고충 처리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2010년에는 지휘관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국방 인권정책의 청사진인 「국방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표 9-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병영정책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 대통령이 직접 군사 옴부즈맨 설치 및 군 고충 민원의 제도적 개선 지시⁶⁴⁾ •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5명, 임기 5년) 설치 •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위원회(5명) 별도 설치, 조사팀 10명 편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직제 개정 • 군 의사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및 군의문사규명 위원회 설치	• 전(前) 정권과 차별화해 '전투형 강군 육성' 강조 • 국방부장관(이상희): "정상적인 지휘활동하다가 생긴 사고는 징계하지 않겠다" 발표 •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통합 출범 • 군사소위원회 존속시키되 조사부서 규모 축소 • 군 의사사 진상규명특별법 및 군 의사사 진상규명위원회 폐지

※ 출처: 『동아일보』, 2014년 8월 13일, A10면.

국방부는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담학, 심리학 등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시험적용을 거친 후에, 2008년도부터 각 군에 배치하여 병영 내 복무 부적응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지휘관에게 장병 기본권과 관련된 갈등관리에 대해 조언을 하기 시작하였다.⁶⁵⁾ 2011년도부터는 '국군 생명의 전화'를 개설하여 상담 전문가가 24시간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권 관련 법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2011)을 제정하고 「군 인권교육 훈령」(2012)에 개정하였으며, 징계 입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 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2011)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⁶⁶⁾

64)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 연구백서』(서울: 국방부, 2006), pp.43-44.

65)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p.216.

66)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229.

병사 상호 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발생하는 병영 내의 악·폐습을 근원적으로 일소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병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병영 생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군내의 언어폭력을 근절하고 올바른 언어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영상교육자료 ‘병영 생활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⁶⁷⁾

국방부에서는 생명존중의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세대 장병의 특성에 맞는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자 및 복무 부적응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련 자료들을 자동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관심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군 스트레스 진단 점검 도구와 한국군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 7월부터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⁶⁸⁾을 전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현역복무 부적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영 차단 및 조기 분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징병 단계에서부터 복무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복무 부적합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역복무 부적합 자를 제2국민역(전역)뿐만 아니라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관리체계를 통해 다양한 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 사례 자료를 통합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였다. 복무 부적응 병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그린캠프’는 2011년부터 운영 제대를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관리 및 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군에 ‘병역심사 관리대’를 운영하였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등 병사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대급과 소규모·격오지 부대까지 5만 3,000여 대의 PC를 설치하여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구축하였다. 군 복무자를 위한 원격강좌에 참여한 대학을 2009년 41개, 2010년 50여 개로 확대하여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검정고시 지원, 장병 1인 1 자격취득,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을 위하여 전국의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군 특성화 고교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다.⁶⁹⁾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병영문화 혁신’ 방안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병영문화 혁신은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국민 신뢰’는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규정을

67)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p.227.

68) 군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식별-관리-처리’ 단계의 종합적인 시스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사 2007~2009』(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795.

69)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p.208.

준수하여 은폐·엄폐되지 않으며, 부모와 가족들이 믿고 자녀는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열린 병영’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병영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병영의 모습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과 기강,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며 ①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②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③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④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⑤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다섯 가지 중점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갔다.⁷⁰⁾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생활을 위하여 복무기간 동안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였다. 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병무청 심리검사 방법 개선,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현역 입영요건 강화, 신체검사 기간 연장 등 병역 판정검사제도를 개선하였다. 입대 이후에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인성검사, 자살 예방 교육, 관계유형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노후화된 그린캠프 14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였고, 2017년까지 연대급까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병영시설 내 사각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 부대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위하여 중·소대급 부대에 SNS 소통 채널,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영상 공중전화기 설치를 확대하였다. 2016년도부터 다양한 민간단체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장병 사랑 재능기부은행’을 운영하였다.

셋째,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위하여 군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군사법 제도를 개선하였다. 평시 사단급에서 운용하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영관급 중에서 지명하여 운영하던 심판관제도는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 시에만 가중처벌하던 군형법을 개정하여 군대 내에서 군인 상호 간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상호 간 폭행·협박 처벌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군 복무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방 헬프콜 센터의 상담

70)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176.

인원을 증원하였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군 인권지킴이 시스템’과 군인, 부모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된 ‘국방 인권감시단’을 운영하였다.

[표 9-14] 박근혜 정부 병영문화 혁신 방안

구분	추진 내용
GOP(일반전초) 부대 근무여건 개선	• 과학화 장비에 의한 GOP 경계시스템 구축 가속화 • 교대주기 단축으로 GOP 근무 고립·소외감 해소방안 검토 • GOP 부대 근무 병사 면회제도 신설
인권 및 복지	• 병사 상호 간 사적 제재 금지 • 인터넷 통한 인권침해 피해 구제 • 인권감시단 확대 운영 • 제삼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 (‘군 파파라치’ 도입)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 간소화 •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도입
초급간부 역량 강화 대책	• GP(경계초소)·GOP 소대장 장기·복무 연장 • 소대장 직위 우수부사관 보직 확대

※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174-178.

넷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을 위하여 일과 시간 중에는 교육 훈련에 집중하고, 일과 이후에는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을 보장하는 병영 생활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병 휴가 자율선택제, GOP 등 경계부대 휴일 면회제도, 일반부대 평일 면회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이 군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위하여 군의 존재 목적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요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임간부 획득을 대폭 축소시키고 학·군협약대학의 경쟁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대량 획득으로 간부 자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양성·보수교육에서 ‘군대윤리’를 핵심과목으로 편성하여 올바른 군인 가치관을 확립하였다.

각 군은 총 19개 과제로 구성된 혁신안을 통해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병영 내 악습·폐습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이것을 생활화하였다. 이 혁신안에서 주목할 것은 GOP 경계작전시스템 개선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고립된 GP, GOP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방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 GOP 과학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존 병력 위주 경계시스템에서 30~40%의 병력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만큼 병사들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서 피로도를 낮출 수 있으며 교대주기 단축으로 GOP 근무에 따른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⁷¹⁾

첫째,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추진해 온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사건·사고 감소 등 상당 부분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일반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복무 규칙 준수 의지와 임무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배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되,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군복 입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여건을 위해 시범부대 운영과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병사 개인 휴대전화기 사용을 허가하였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2019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표 9-15] 연도별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95	148	207	246	297	346	383	383	522	660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168

둘째,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상관이라도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훈령」을 개정하였다. 전방 및

71)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164-169.

전투부대의 제초, 청소작업 등에 필요한 인원을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셋째,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언어사용, 고충 식별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인성검사, 심리상담과 치유, 국방 헬프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9-16] 연도별 자살 예방 전담 교관 양성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824	1,601	540	434	550	534	653	664	668	822	650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168

또한, 군의 전투력과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는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의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Gate Keeper)⁷²⁾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대급 부대에 자살 예방 전담 교관을 양성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교육하고 있으며, 식별-관리-분리 등 3단계의 자살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군 내 자살사고는 감소하였다.

넷째,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 등 사회적 소수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다른 장병들과 전우로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종 교육체계와 제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정부에서는 사병들의 군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군 사망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⁷³⁾를 보이며, 2011년에서 2015년간의 병의 군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여전히 내무생활을 포함한 병영 생활은 병사들에게 군대 생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인 병사들이 의무복

72) 게이트키퍼는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전문가)에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73) 군 사망사고(자살, 총기, 폭행, 기타) 건수는 2006년에 128명에서 2015년에는 93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통계 유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서울: 국방부, 2016), pp. 100-101.

74) 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팀 조사결과 응답자 1,009명 중 긍정 94%, 부정 3.4%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서울: 국방부, 2016), pp.208-209.

무 중 민주시민으로서 권리가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병영시설 현대화와 군 의료체계 개선

국방부는 국민의 생활 및 의식 수준에 맞춰 낡고 비좁은 병영시설을 개선하여 왔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과 군 주거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여 장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1980년대에 1차로 실시한 이후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동안 약 7.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904동의 병영생활관을 개선하였으며, 편의시설과 개인 생활 및 여가활동시설 등도 확충하였다. 이를 위해 병영시설을 분대 단위 침대로 하고, 병영 생활 구조를 ‘자율’에 의한 능동적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과표를 개선하였으며, 병영 내 여가활동 여건조성과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군 생활이 유익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군 관사와 독신 숙소의 현대화사업은 군 간부 주거시설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개선하여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가.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1차 현대화사업 추진 1948년 국군을 창설한 이후 우리 군은 과거 일본군이 사용하던 병영시설과 훈련장 등을 인수하여 부대를 창설하였고, 소요에 부족한 시설확보를 위해 인근의 국공유지와 민간소유 임야들을 징발하여 시설택지와 훈련장으로 사용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기간 중 많은 부대를 증·창설하게 되어 시설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공공시설을 징발하여 창설하는 부대의 수용시설로 사용하였고, 휴전 후에도 많은 부대의 증·창설로 징발된 국공유지와 공공시설을 상당 기간 군용시설로 사용하였다.

휴전 이후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시설을 한국군에게 인계하였다. 당시 유엔군의 사용시설은 야전용 천막이 대부분이었으며, 콘센트류 등의 임시 시설과 영구 시설은 극소수뿐이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전방지역에 있었으므로 소요가 부족했던 육군 전방부대의 야전용 시설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

1971년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미군 부대의 숙영 막사 시설 등을 인수하게 되어 우리 군의 병영시설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군시설은 전방지역뿐만 아니라 후

방 각지에 산재해 있어서 인수 후 부대 규모와 사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다른 지역에 주둔한 전후방 각급 부대에 할당하여 이축하게 함으로써 부족시설 보강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컸다. 미 제7사단이 철수한 이후 1970년대 중반기까지 일부 미군 철수시설들은 대부분 육군의 전력증강 계획에 의한 부대의 증·창설계획과 연계하여 창설 부대가 현지에서 인수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시설 소요투자비를 다소 절약할 수 있었다.



〈사진 9-5〉 콘센트 막사와 생활관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1998)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각 부대는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여 비규격 건물인 토조막사(土造幕舍)를 건립하여 부족한 시설 소요를 충당하였다. 그 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 건축자재를 관급으로 보급받아 공병부대와 자체병력을 투입하여 군 직영으로 영구건물(블록, 슬레이트)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6년 말에 건축법규가 처음으로 제정됨으로써 그 이전에 건설된 시설은 대부분 건축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동계 시설 보온 면에서 에너지의 낭비가 많았고 비위생적이어서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생활반은 천막 치고 주위를 흙벽으로 쌓아 겨우 추위를 막을 정도였고, 바닥은 흙을 약간 돋워 위에 가마니를 깔고 담요 한 장만을 덮고 겨우 새우잠을 잘 정도로 열악하였다.⁷⁵⁾

1970년대 말까지 군 사용시설은 휴전 이후 미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이축 조립한 콘센트류 건물과 1960년도 이후에 군 자체병력으로 건립한 블록 슬레이트 시설이 약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렀을 때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외국의 최신병영시설 등을 고려할 때 주거시설로는 부적당한 면이 많아 시설개선이 요구되었다.

1982년 모든 병영시설을 50년~100년 이상의 장기 안목으로 ‘현대화 및 표준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수한 시설현대화와 표준화 사업의 추진은 외국병영 시설을 견학하고 국내에서 학술세미나 및 각 군 의견수렴을 거쳐 현대화와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시설현대화는 최초에 1,000개 대대를 목표로 하여 1983년도부터 추진하되 예산은 시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편성, 연차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75)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p.634-635.

사업 초기 단계인 1986년까지는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에 대비하여 통일로 주변 부대의 현대화와 표준화를 우선하여 추진하였다.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방부대에 우선을 두고 건립하도록 하였는데 1986년도에 현대화로 추진 중인 막사를 요새화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역별 시설구조를 조정, 전방지역의 대대 통합막사를 중대 단위로 분산 건립하도록 시설현대화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대대 단위 전체 시설의 현대화에 드는 기간이 연간 25~30개 대대를 건립해도 2010년 이후에 완료되게 되어있는 데 반해 전방지역 병영시설은 절대 부족과 함께 낡은 시설이 과다하여 장병 사기 저하로 정신전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에 병영 필수시설 소요판단을 하여 시설현대화 사업방침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1992년도부터는 시설현대화와 표준화 사업은 사병 필수시설의 신축과 기존 생활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여 연간 118개 대대를 개선하여 1996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⁷⁶⁾

군 주택건설 사업은 1988년부터 조달본부에서 집행하던 아파트 건립사업을 이관받아 전·후방 지역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의 주거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소단위로 분산 건립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시설이 낙후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수혜 면에서 일반사회에 비해 낙후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건립된 주거시설은 대부분 33~56㎡ 규모로 상대적으로 일반사회의 주거시설에 비해 협소하고 열악하여 간부들의 복무 의욕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었다.



〈사진 9-6〉 BTL사업으로 완공된 군 관사

※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2007. 3. 21.)

1993년에 이러한 군 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군 주택 공급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민간아파트 매입, 분양 또는 임대하여 공급하고 세대별 기준 평수를 국민주택 규모인 62~102㎡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 소단위로 분산하여 건립하던 군 주택을 복지단지에 집중하여 건립하였다.⁷⁷⁾

2차 현대화사업 추진 2000년대 들어

서 오래된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전군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국민의식과 생활 수준 향상 등 사회발

76) 육군본부, 『군수변천사』(계룡: 육군본부, 1996), pp.876-878.

77) 육군본부, 『군수변천사』(계룡: 육군본부, 1996), pp.892-893.

전 추세에 따라 군 간부의 협소하고 오래된 숙소와 병영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병영문화 개선 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병영시설의 많은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건설 예산의 부족으로 이들의 조기 극복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육군의 경우 전체 대대급 막사의 30%가 1965년 이전에 건립되어 40년 이상이나 된 건물이었고, 20년 이상의 것을 포함하면 약 50%에 달했다. 전방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여 많은 건물이 임시 건물임에도 수선이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병사들의 생활관 면적도 국방시설 기준 5㎡에 미달하는 1.7~3.3㎡에 불과하였다.⁷⁸⁾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부대통합 및 재배치 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단계(2003~2009) 사업에서 노후·협소한 전방 및 격오지 시설 중 1982년 이전 건립된 생활관을 먼저 개선하였고, 2단계(2010~2012) 사업에서는 1983년 이후 건립된 생활관을 개수 또는 증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3단계(2013년 이후)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량을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인당 전용 면적을 2.3㎡에서 6.3㎡로 확대하고, 소대 단위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하였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 체력단련장,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여성 전용 편의시설도 별도로 설치하였다. 병영생활관의 발전과정은 [표 9-17]과 같다.

[표 9-17] 병영생활관 발전과정

1960년 이전	1960~1970년	1970~1982년	1983~2003년	2004년 이후
천막 / 콘서트 막사	⇒ A형 막사 건립 (블록, 슬레이트) · 소대 단위 수용 · 폐치카 난방	⇒ 통합 막사 건립 (라멘 블록, 평지붕) · 2개 분대~ 1개 소대 수용 · 방열기 난방	⇒ 현대화 막사 건립 (라멘 조적, 경사 지붕) · 1~2개 분대 단위 · 침상형 막사 · 편의시설 확충	⇒ 생활관 건립 (라멘 조적, 경사 지붕) · 분대 단위 수용 · 침대형 막사 · 여군 편의시설

※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200.

78)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pp.18-19.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조 9,763억 원을 투자하여 총 1,975대 대대·동을 개선하였다. 2009년 재정사업으로 6,857억 원을 투자하여 육군 생활관 46개 대대, 공군생활관 1,098개 동을 개선하였다.

[표 9-18]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구분	총소요	확보(~2013년)				2014년 이후	
		계	재정	BTL	기타	재정	BTL
육군 생활관(대대)	702	678	378	200	100	-	24
해·공군 생활관(동)	933	898	683	143	72	35	-
GOP·해(강)안 소초(동)	1,801	970	970	-	-	111	-
계	2,716	2,546	2,031	343	172	146	24

※ 출처: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184.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4,242억 원을 투자하여 육군 생활관 51개 대대, 해·공군 생활관 14개 동을 추진하였고 방위력개선 등의 기타회계로 육군 생활관 14개 대대를 개선하였다. 2003년부터 추진한 소초 개선사업은 2009년 GOP와 해·강안부대 소초생활관 118개 대대, 해·공군 생활관 70개 동을 개선하였으며 2012년 2단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1조 85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이 제한되는 부대와 해체나 이전이 예상되는 부대에는 ‘병영 문화 쉼터’를 설치하여 병영도서관, 사이버 지식 정보방, 노래연습실, 매점, 이발소 등 각종 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장병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경우 2013년부터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는 사용 요금을 지속해서 인하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된 2017년부터 모든 병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병영생활관의 현대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표 9-19]와 같다.

[표 9-19]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구분		현대화 이전	현대화 이후(통합생활관)
병영생활관 내 공간 구분		• (병사) 생활실(내무반) •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 (병사) 생활실(내무반),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대대 참모부 사무실 등
병사 공간	생활실 (내무반)	• 30~50명 소대 단위 침상형 • 1인당 2.3㎡	• 8~10명 분대 단위 침대형 • 1인당 6.3㎡
	위생 시설	• 생활관 외부 별도건물에 위치 • 샤워실, 군화 세척실 없음	• 세면실, 화장실, 목욕탕 등은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생활관 내부에 배치 • 샤워실, 군화 세척실 신설
	편의 시설	• 생활관 외부 별도건물에 위치 • 사이버 지식 정보방,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은 없음	• 도서관, 사이버 지식 정보방, 체력단련장 등을 생활관 내부에 신설 또는 확충 • 생활관 내부에 매점을 배치
간부 공간	행정, 작전 · 훈련 시설	• 중대장실, 중대행정반 생활관 내 위치 • 대대 행정시설은 별도건물 생활관 외부에 위치	• 지휘관실, 참모부 사무실, 지휘통제실, 통신실, 회의실 등 통합생활관 내부에 배치

※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183.

나. 국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국군 의료지원기관의 발전 우리 군의 최초 의무부대는 해방병단 시절 진해해군병원(1946. 2. 21.)⁷⁹⁾과 국방경비대 체제하에서 통위부 내에 의무국을 설치하여 경비대 요원들에게 의무자원을 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수도경비사령부를 비롯한 각 사단에 의무대대(1950. 4. 15.), 육군군의학교를 창설(1949. 8. 9.)하였다. 6·25전쟁 기간에 당시의 인원과 장비로 제1야전 의무단을 창설하고 전방부대를 근접지원하기 위한 7개 육군병원, 2개 병원열차대, 1개 의무대대를 창설하였다. 이후 병원시설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전상 환자와 비전상환자가 증가하자 3개 육군병원을 육군 정양병원으로 개편하여 장기입원환자를 수용하였다.⁸⁰⁾

79)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계룡: 해군본부, 2016), p.52.

80) 육군본부, 『군수 변천사』(계룡: 육군본부, 1996), pp.92-93.

6·25전쟁 이후 전국 각 지역에 병원부대와 의무지원부대들이 창설되어 그들을 통합 관



〈사진 9-7〉 국군의무 통합부대 창설식

※ 출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2004)

리할 지휘부대의 부재로 환자 진료와 의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 의해 의무교육기지사령부가 창설(1954. 3. 15.)되었고, 현재의 국군의무사령부의 모태가 되었다.

의무교육기지사령부는 방역 지원을 통해 결핵,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예방 활동과 동상·성병 예방 등을 실시하였으며,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대민의무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에는 한국군 최초의 파월부대로 60병상(bed)의 이동외과병원을 창설하

여 베트남에 파병하였으며, 육·해·공군 부대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군 상호지원 체제를 1970년대 전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육·해·공군의 의무지원체제를 통합(1984. 9. 1.)한 이후 의무 장비를 현대화하였으나 의료시설의 노후와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병원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전문적인 의무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군군의학교와 공군의무교육대를 폐쇄(1967. 1. 1.)한 이후 육군군의학교에서 3군 통합교육을 실시하다가 국군군의학교로 개칭(1971. 1. 11.)하였다. 육군간호학교도 국군간호학교로 개칭(1971. 12. 7.)되어 간호 인력을 양성해 오다가 교육법상 간호학교라는 명칭이 없어짐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로 개정되었다. 이후 간호장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이 4년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4년제 정규 간호대학으로 학제를 개편(1980. 12. 4.)하였다.

우리 군은 의무요원의 정예화와 군 병원의 현대화, 최신 의무 장비의 도입을 통하여 각종 부상과 질병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국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우리 군은 건강하게 입대한 장병이 건강한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뿐 아니라, 각종 부상과 질병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5년 전역 후 위암 사망 사건과 2006년 디스크 수술 중 혈관 손상 과다 출혈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2006. 1.)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군 의무에 대한 현실태를 종합분석하였다.⁸¹⁾ 국방부 차관과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6명의 민간·정부

81) 국방부, 「범정부(민·관)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 운영계획」(2006. 1. 18.)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전·후방 의무시설을 확인한 결과 군 의료가 1970년대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진료 기본권 및 접근성 보장 등 32개 과제를 개선과제⁸²⁾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⁸³⁾

2011년 4월 군에서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민·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립한 「2012~2016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은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강화, 장병의 진료 접근성 향상, 사단급 이하 의료역량 확충,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⁸⁴⁾

이후 국방부는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신속한 후송과 최선의 진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모든 장병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였으며, 의료종합상황센터 개소, 의무후송항공대 창설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등 장병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였다.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2017~2021)」에서는 군 의료체계의 목표 수준 정립, 군 의료체계 개편, 의료인력 보강,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하였다.⁸⁵⁾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련된 의료인을 확보하고 국군 외상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진료능력을 고도화하고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2008년부터 뇌수막염 백신을 포함한 총 8종의 백신을 도입하였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백신의 종류도 인플루엔자 등 총 4종으로 확대하였다. 국군의학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군 특수의료와 관련된 연구 및 군 의무정책 개발 여건을 마련하였다.

장병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복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대 → 연대 → 사단의 3단계 진료체계를 대대·연대 → 사단의 2단계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대대와 연대 의무실은 환자 식별 및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

82) 32개 과제 중에서 ‘전역 전 건강검진 제도 도입 및 시행’ 등 10개의 단기과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격오지 근무장병에 대한 진료접근성 보장’ 등 21개의 중기과제는 시행방법 연구 및 법제화 추진 등 기반조성 후에 시행하며,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전천후 의무후송헬기 확보’는 장기과제로 2013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범정부 군 의무발전추진위원회,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2006. 8. 31.)

83) 범정부 군 의무발전추진위원회,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2006. 8. 31.)

84)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222.

85)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187

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였고, 군의관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군의(軍醫)업무훈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응급환자의 처치 및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신병 교육기관 및 GOP 등 의무지원 소요가 많은 전방부대는 의료인력을 추가로 증원해 배치하여 운용하였다.⁸⁶⁾

2012년에 창설된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환자지원센터를 2015년에 의료종합상황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이 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구급차, 후송 헬기 등 가용자산을 지원하고, 가용한 군과 민간병원을 준비시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군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후송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였으며, 2015년 응급환자에 대한 헬기후송을 전담하는 의무후송항공대대를 창설하여 후송시간을 단축하고 후송횟수를 증가시켰다.

[표 9-20] 「국군 보건의료발전계획(2017~2021)」 중 군 병원 개편 방향

구분		현재(개)	개편 후(개)
군 병원	계	17	13
	국군수도병원	1	1(예하에 국군 외상센터 신설)
	전방병원	8	5(청평, 원주, 강릉병원 폐쇄)
	후방병원	4	3(부산병원 폐쇄)
	특수목적병원	4	4
외래검진센터		—	3(청평, 부산, 강릉)

※ 출처: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189-190.

군 의료체계를 효율화 및 정예화하기 위하여 군 병원 수는 축소하되 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군 의료기관별 기능을 수준별로 재정립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7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군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13개로 축소하되, 모든 군 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상 최상위 병원으로서, 외상 등 군 내 다빈도 질환과 총상 등 군 특수질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 설립하여 2020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군 병원이 없더라도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 없는 외래

86) 국방부, 『정예화된 선진강군』(서울: 국방부, 2013), pp.422-423.

진료나 건강검진은 장거리 이동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폐지되는 일부 병원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여 지역 내 ‘외래검진센터’로 유지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무자격 의무병’을 단계적으로 자격을 갖춘 간부로 대체해 나갈 것이며, 의료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입대하는 병사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간대학 위탁 교육을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을 연 15~20명, 임상병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의무부사관을 연 20명 내외로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 수행으로 질병을 얻거나 상처를 입은 직업군인⁸⁷⁾이 군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였다.⁸⁸⁾ 치료를 마친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한 경우 질환이 처음 발생했을 때와 같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체장애로 의족이나 의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제한 없이 최상의 의족과 의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⁸⁹⁾

또한, 공상을 입은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신속하게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급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군이 민간병원과 직접 진료비를 정산하는 후급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였다.

제 3 절 국가시책 지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전문화된 직능집단으로 성장한 국군은 고도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라는 고유의 책무를 수행함은 물론, 헌정 수호자로서 정치·사회제도개혁과 경제발전 등 국가·사회 각 부문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바지를 하여 왔다.

휴전 후 1950년대에는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보육원, 도로와 교량의 건설 등 전후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당시 낙후된 국민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병사들에게 한글 및 초·중등 과정의 기초교육을 1970년대 초까지 지속해서 실시함으로써 59만여 명에게 한글을 터득하게 하는 등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였다.⁹⁰⁾

87) 공무 수행으로 질병을 얻은 언거나 상처를 입은 현역병이 군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때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한다. 또한, 전역 이후에는 국가보훈제도에 따라 보훈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8) 「군인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하였다.

89)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191.

90) 국방부, 『국방백서 1988』(서울: 국방부, 1988), p.297.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부응하여 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주특기교육을 함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전역 이후 경제발전의 역군으로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도로 확장·포장 공사, 재해복구 지원, 대민지원은 물론 인구억제·헌혈·저축·새마을 운동·국제 스포츠 행사개최 지원 등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교육 훈련, 임무 수행, 병영 생활 등 단체생활을 통해 애국심, 충성심,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을 배양, 사회에 진출 시킴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삶의 영위는 물론, 사회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우리 군이 국가시책 지원의 하나로 실시하였던 문맹자 퇴치 및 공민교육, 군의 국토개발 참여, 재해복구 및 대민지원, 그리고 국제스포츠 행사였던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문맹자 퇴치와 공민교육

우리 군은 문맹자 퇴치 교육이 사병들에 대한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6·25 전쟁 기간에도 각 부대 단위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병사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했다. 1950년대에는 무학력 병사가 40~50% 이상, 1960년대에는 30% 내외였다. 비록 군사 지식이나 군사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군은 창설 이래 1970년대까지 문맹자나 교육 수준이 낮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글반, 기초반(초등학교 1~4학년 수준), 국민반(초등학교 5~6학년 수준), 중등반(중학교 1~2학년 수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한 장병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자 국가적 시책으로 「전시군인연합대학」을 창설하여 장병들에게 고등학문을 수학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외에도 학업을 중단한 장병들에 대한 '복교조치', 군 통신 교육령에 의한 '통신교육' 등의 다양한 일반교육을 하였다.⁹¹⁾

이러한 교육 결과 1970년대까지 약 100만 명의 병사들이 군에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다. 병사들이 군내 문맹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국민교육 도량으로서 군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 군 공민교육을 통하여 병사들의 일반지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군사훈련이나 정훈교육, 병영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군인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부대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91)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계룡: 해군본부, 1999), p.133.

군은 개개인들이 소양 교육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 군대 문화를 확산시켰다. 군은 1951년에서 1991년까지 기계, 건설, 통신, 전기·전자, 수송, 항공, 항해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총 294만 6,268명의 기술인력을 훈련하여 배출하였다.⁹²⁾

[표 9-21] 국군 창설~1970년 군의 공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한글반	기초반	국민반	중등반	합계
교육주기	6주	12주	12주	15주	
군창설~1952	148,553				148,553
1953	208,023				208,023
1954	76,012	42,338	21,467		139,817
1955	12,685	18,956	14,661	4,939	51,241
1956	23,511	24,422	23,491	9,577	81,001
1957	15,477	12,668	12,098	778	41,021
1958	10,444	8,361	3,510	111	22,426
1959	6,447	8,126	2,474	-	17,047
1960	14,224	6,736	9,724	10,094	40,778
1961	12,677	1,167	1,050	4,209	19,103
1962	16,764	6,752	8,663	3,851	36,030
1963	8,432		3,952	2,319	14,703
1964	2,342		8,392	10,187	20,921
1965	6,155		7,236	12,921	26,312
1966	4,529		5,952	12,004	22,485
1967	4,721		5,809	18,426	28,956
1968	7,785		10,440	15,693	33,918
1969	7,986		12,557	15,373	35,916
1970	531		335	771	1,637
총계	587,298	129,526	151,811	121,253	989,888

※ 출처: 육군본부, 팜플릿 85-기 『정훈』(서울: 육군본부, 1979), p.222.; 육군본부, 『정훈 50년사』(서울: 육군본부, 1991), pp.575-579.

92)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나남출판, 1994), pp.125-127.

2. 국군의 국토개발 참여

군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초반, 민간에 비해 군은 상대적으로 발달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건설에 투입됨으로써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 공헌하였다.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에서는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국방정책의 하나로 ‘군의 국토건설과 대민사업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내세웠다. 이것은 제3공화국의 국정 최고 목표가 조국 근대화와 자립경제 기반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 장비의 효과적인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⁹³⁾

근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초에는 정부와 민간에서 보유했던 건설 중장비는 군이 보유하고 있던 중장비의 규모보다 적었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술인력도 1968년에 6,000여 명, 1970년에 이르러서야 12,826명에 불과한 실정에 있었다.⁹⁴⁾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축적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군은 주로 도로와 교량의 건설, 공공시설의 건축 등의 건설사업과 농경지 정리, 방조제 구축, 개간사업, 조림 및 사방 공사 그리고 하천 정리 등 국토정비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군이 참여했던 고속도로 건설, 전술도로와 교량 건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진 9-8〉 군의 해안도로 개설

※ 출처: 국방부, 『국군 50년사 화보집』
(1998)

1960년대 말 정부는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전장 428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2월 1일부터 1970년 7월 7일까지 2년 5개월간 165만 대의 장비와 연인원 893만 명이 동원된 유례없는 국책사업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국군은 공사에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난공사 구간을 담당하였다. 서울과 수원 사이에 있는 답고개, 수원과 천안 사이의 몽당이 지역, 부산시계 등 국군이 담당할 공사 구간은 고속도로 전 구간의 8%에 불과한

93)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128.

94) 정부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장비는 1961년에 불도저를 포함하여 총 1,100대, 1967년에 2,887대에 불과하였으나 1967년 군에서 보유한 중장비는 약 3,000~4,000대였다.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서울: 나남출판, 1994), pp.75-76.

31.1km이었으나 어려운 공법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난공사지역의 도로건설을 국군이 담당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⁹⁵⁾

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전술도로 건설에 참여하여 1988년까지 총 13개 지역에 1361.5km의 도로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전술도로는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동로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간 교류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군은 경제개발 종합계획의 추진과 함께 전국의 주요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기의 교통망은 일제 강점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부와 민간의 중장비와 기술인력을 대체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와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원, 그리고 춘천 및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일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에 군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도로포장·확장 및 신설 등에 참여하였다. 군의 1958년부터 1992년까지 일반도로 건설현황은 도로포장의 경우 원주~춘천 간 41.6km 외 54건으로 총 1,079.95km, 확장은 현동~울진 간 54.5km 외 1,790.26km, 신설은 제주도 목장도로 24km 외 1,077.67km로 총계 3,947.88km에 달했다.⁹⁶⁾

우리 군은 한미합동으로 도로공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미국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계획의 하나로 한국에 1959년부터 미국 대외지원단(USOM: United States Operating Mission)의 재정지원으로 도로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의 공동재정 투입으로 1960년부터 1972년까지 1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60년 의정부-운천 간 12km의 포장공사를 비롯하여 13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도로포장이 연간 12km, 많은 경우에는 70km 이상 이루어졌으며, 도로확장의 경우는 적게는 수 km부터 많은 경우 50km 이상 이루어졌다. 한미합동 도로공사는 [표 9-22]와 같이 총 51개의 공병대대를 투입하여 포장 571km와 도로 확장 212km를 실시하여, 중소도시의 도로개선은 물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농산물과 공산품의 원활한 수송과 더불어 주변 주둔부대의 보급로 및 기동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⁹⁷⁾

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p.186-187.

96)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서울: 나남출판, 1994), pp.79-81.

97) 육군본부, 『육군 공병 50년 발전사』(계룡: 육군본부, 2000), pp.398-399.

[표 9-22] 한미합동 도로공사 실적

(단위 : km)

연도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계
포장	12.0	67.5	42.5	73.9	69.5	56.7	55.9	35.1	44.5	45.2	30.8	18.8	18.8	571.2
확장	-	8.5	12.8	15.5	4.5	1.1	53.1	30.9	34.1	31.2	12.0	9.1	-	212.8
투입 부대 (수)	1	3	2	3	3	3	7	6	6	6	5	3	3	51

※ 출처: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서울: 나남출판, 1994), p.85.

군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 많은 교량건설을 하였고, 1970년대에는 공사 건수는 줄었으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대형교량 위주로 건설하였다. 1992년까지 250만여 명과 12만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676개의 교량을 건설하였다.⁹⁸⁾

3. 재해복구와 대민지원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외적 위협에 대한 방위태세를 갖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의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위기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대민 재해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또한, 비상경보 통신체제 유지를 통해 중앙 또는 지방재해대책본부로부터 인명구조, 응급복구, 화재진압 등의 긴급요청에 군이 보유한 다양한 장비와 병력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해복구지원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 등이 포함된다. 1960년 이전의 대표적인 재해지원 사례는 1959년의 '사라'호 태풍 시 군은 2,994명대의 장비와 61,828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복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는 재해복구 지원 활동을 더욱 활발해졌는데, 1965년도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에는 10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수만 대 이상의 장비를 동원하여 재

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p.188.

해복구 활동을 하였다. 1970년대에도 약 120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어 연평균 15만 명이 재해복구 활동에 참여하였다.⁹⁹⁾ 1980년대에는 1982~1983년의 극심한 한해 기간에 농업용



〈사진 9-9〉 군의 원유 폐기물 수거작업

※ 출처: 국방홍보원 국방포토 DB(2007)

지하수 개발에 전방에 있는 땅굴 시추장비까지 지원함으로써 가뭄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5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7년 7월 중·남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 시에는 군 총동원령을 지시하여 현역과 예비군은 물론 각종 장비까지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에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과 함께 피해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¹⁰⁰⁾ 1990년 9월 60여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서울 581mm)가 쏟아져 수도권 일대가

침수되자 군은 헬기 178대와 고무보트 549정 등을 동원하여 수도권 지역에서만 12,331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제방 334m를 복구하였다. 2004년 3월 4~5일에 걸쳐 중부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기록적인 폭설(계룡산 62cm)이 내려 주택 95동, 공공시설 102개소, 비닐하우스 2,221ha가 파손되어 6,73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29일간 동안 병력 1만 6,883명과 장비 3,904대를 동원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였다.¹⁰¹⁾ 2014년 2월 6일부터 12일 동안 영동지역에 ‘103년 만의 폭설(최고 307cm)’로 수많은 가옥과 마을이 고립되는 등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군은 공병제설장비 12대와 1,1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서 도로제설 작업과 고립지역 연결, 도시기능 발휘보장 등 대대적인 대민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군은 급속전염병, 해안 지역 유류사고, 산불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가용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1월 포천에서 구제역 발생 시 가축 살처분,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원유운반선(Hebei Spirit)의 원유 유출사건 시 긴급방제작전 및 폐기물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 시 산불진압 요원 및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여 조기진압에 기여하였다. 또한, 군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99)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서울: 나남출판, 1994), p.102.

10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281.

101) 국방부, 『국방재난대응 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92-95.

관리하고 필요한 기능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1994년 6월과 2010년 5월 철도노조 파업 시 연인원 3만 2,796명을 지원하였다.¹⁰²⁾

군의 재해복구 활동은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크기가 커져감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군은 이러한 재해 재난 지원활동을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재해대책업무 처리규정」과 「탐색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¹⁰³⁾

[표 9-23] 군 대민지원 현황(2000~2011)

구분	인원(명)							장비 (대)
	계	태풍	집중 호우	폭설	산불	구제역, AI	기타 (파업, 오염)	
2000	522,309	479,137	-	-	4,172	-	-	3,790
2001	1,843,457	-	341,867	430,127	-	-	1,071,992	66,892
2002	982,060	779,195	177,925	11,028	-	-	13,912	22,872
2003	546,835	517,288	2,412	13,650	-	3,059	10,426	16,818
2004	231,474	28,484	1,908	196,883	-	1,951	1,908	5,054
2005	205,703	21,789	10,637	122,676	48,964	-	1,637	5,587
2006	337,178	10,531	109,175	150,620	1,983	8,585	6,284	13,829
2007	181,972	45,339	2,409	-	545	11,656	122,023	2,607
2008	73,188	-	3,309	2,770	-	15,871	51,238	2,167
2009	59,460	-	10,626	3,894	7,336	-	37,604	1,748
2010	319,117	82,607	14,796	140,007	299	80,678	730	5,500
2011	616,258	100,071	100,060	93,150	4,051	315,763	3,031	12,010

※ 출처: 국방부, 『국방재난대응 백서』(서울: 국방부, 2012), p.8.

국가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전에서 유사시 전 국민의 지지 속에 국가 총체 전력의 발휘를 극대화하여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소 민·관·군의 유대관계를 지속해서 돈독히 다져나가기 위한 ‘대민지원 활동’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았다. 이것은 평시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함을 물론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생산적 기반

102) 국방부, 『국방재난대응 백서』(서울: 국방부, 2012), pp.188-190.

103)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p.193-194.

마련에 이바지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전쟁 수행능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군의 기본적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증진함을 물론 튼튼한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 9-23]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¹⁰⁴⁾

국방부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적기 영농과 농민의 증산 의욕을 북돋우고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군이 작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번기와 모내기, 보리 베기, 벼 베기 지원과 재해 발생 시 침수지 벼 일으켜 세우기, 농경지 보수, 농수로 정리 등 농촌일손돕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위민군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의료상 소외되고 있는 도서지방이나 벽촌을 선정하여 건강상담과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기동방역반을 편성하여 예방접종과 방역함으로써 질병 예방에 이바지하였다.

4.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지원

가.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군 지원체계

제24회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치러진 세계적인 행사로서 서울 및 경기지역과 4개 지방 도시(총 34개 경기장과 72개 연습장 및 각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는 정식종목 23개, 시범종목 2개(야구, 태권도), 전시 종목 2개(배드민턴, 볼링)로 나누어져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게 되었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160개국 총 3만 944명(선수, 임원단: 1만 3,674명, 국제임원: 6,670명, 보도진: 1만 600명)이 참가했고, 대회운영 요원 7만 2,904명, 관중 270만 명, 관광객 24만 명이 참여하여 사상 최대의 규모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총 금메달 237개 중 12개를 획득하여 세계 4위라는 금자탑을 세운 뜻깊은 대회였다.

국방부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법률 제3611호, 1982. 12. 31.) 제2조(협조 및 지원), 제4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9조(경기대회 요원의 파견요청 등)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213호, 1983. 8. 25.)의 제11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5조(각 경기대회 요원의 파견요청승인 등)에 의하여 지원하였다. 법률 외에도 「정부 각 부처 올림픽대회 지원사업 하달」, 「서울올림픽대회 안전대책 기본운영계획

104) 국방부, 『대민지원 활동 지침서』(서울: 국방부, 2000), p.3.

(안전본부, 1987. 5.), 「서울올림픽대회의 대외운영 분야 군 지원에 관한 협약서」¹⁰⁵⁾, 「서울 올림픽대회의 해군지원 세부 협정서」 등에 의하여 올림픽대회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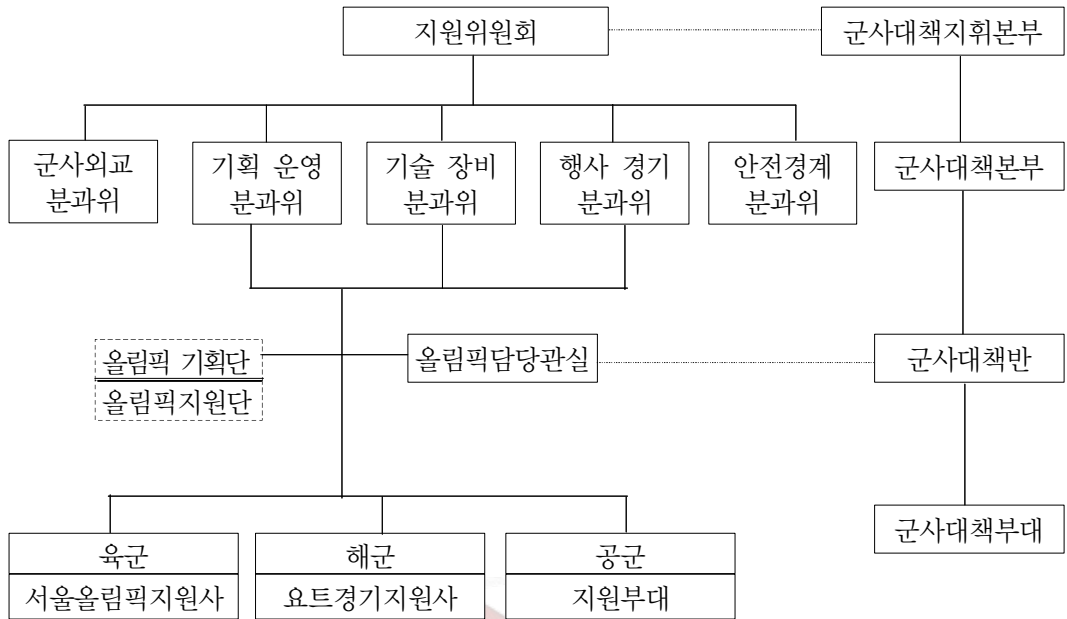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군의 역할은 한반도의 군사적 안전보장을 위해 각종 군사시설 및 전술 공사를 포함한 '88긴요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한미연합전투태세의 완비와 전·후방 경계를 강화하는 것과 올림픽대회와 직접 관련하여 4,163km의 성화봉송로 경계, 264개 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외곽경계, 11개 군 전담 경기장 및 시설의 경비, 200여 개소의 대회 관련 국가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정부지원체계가 구성되고 정부 방침이 설정됨에 따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올림픽지원위원회를 1982년 1월 비상설로 설치하였다. 이후 국방부조직과 기능 체계상 올림픽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제1차관보로 조정(1983. 11. 15.)하였으며, 올림픽기획단 요원도 30명으로 증편하여 '86·'88대회 국방부 지원사업을 안전 분야와 대회운영 분야를 망라하여 수립하였다. 그러나 대회운영 분야는 정부 지원위원회에서 대회 안전 분야는 안전기획부에서 분리 주관하게 됨에 따라 국방부도 1986년 1월부터 대회운영 분야는 기획단에서, 안전경비 분야는 합참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1986년 2월 정부의 지원체계가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대회운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부는 올림픽 기획단에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올림픽 지원단으로 개편하고, 그 예하에 국방부 올림픽 지원부대를 창설하여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였다.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때에는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보다 지원범위가 방대하여 군사대비 대책 및 대회운영 지원체제를 발전 보완하였다. 군사대비를 위해서 합참 작전기획국에 '88군사대책본부를 편성하여 군사대책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하였고, 군별로 군사안전대책을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올림픽대회와 직접 관련된 주요 시설 및 경기장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대책 부대를 별도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회운영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인사국에 올림픽 지원부서, 육군에 서울올림픽지원사령부, 해군에 요트경기지원단을 창설(1988. 2. 23.)하였다.

105) 서울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한 군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조직위원회와 군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의 명을 위임받아 육군참모총장과 조직위원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서는 총 12개조로 구성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군은 인력 8,834명, 물자 88,842점, 장비 545점, 시설 17개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9-24] 서울올림픽경기대회 국방부 지원체계



※ 출처: 국방부, 『서울올림픽 군 지원 활동』(서울: 국방부, 1990), p.122.

나.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군 지원활동

국방부는 조직위원회의 요청(1987. 3. 3.)에 따라 가능한 소요량을 최대한 지원하되 임무에 부적합하고, 미보유 장비를 제외한 인력 9,146명, 장비 731점, 물자 83,661점, 시설 16개소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방부 올림픽 지원단에서 대회운영 분야 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에 하달하였다.

군사대비계획은 합참 작전기획국에 '88군사대책본부를 별도 편성하여 '88군사대책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때의 경험과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군의 역할을 기초로 하여 군사대비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각 군에 하달하였다. 각 군은 전담부대 지정과 지역별, 시설별로 세부 군사 활동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세부 계획을 작성,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각 군의 시행계획을 통합·조정하여 「'88서울올림픽대회 군사대비 세부시행계획(1987. 10.)」을 완성하였으며, 「정부 종합 안전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반영(1988. 2.)하여 유관부서·대회운영위 측과 상호 협조 및 연계된 군사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올림픽대회와 직접 관련된 안전경비와 대회운영 분야에 투입되었던 군의 인력과 장비·물자는 안전경계 10만 3,727명, 대회운영 요원 1,686명 등 인력 총 11만 4,423명, 장비는 항공기 58대 등 851대, 물자는 모포 8만 4,039매 등 9만 1,528점, 시설은 국군체육부대 등 17개 부대를 지원하였다.¹⁰⁶⁾

각 군은 국방부의 올림픽대회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기구를 편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육군은 서울올림픽지원사령부를 편성하였고¹⁰⁷⁾ 해군은 올림픽지원단과 예하 집행부대로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 요트경기지원사령부를 편성¹⁰⁸⁾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공군은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올림픽군사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군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1988년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180여 일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의 대회운영 분야에 지원하였다. 지원된 분야는 식전행사,



〈사진 9-10〉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 식전행사 지원

※ 출처: 국방부, 『서울올림픽대회 군지원활동』 (1990)

대회 경기, 선수촌, 기자촌, 수송, 통신, 의무, 행정 분야 등에 지원하였다. 군은 이러한 운영 분야에 많은 인력과 장비 및 물자, 시설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회 관련 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조직위 임직원과 함께 근무함으로써 민·군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일반 운영 요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심야 근무, 물자운반 등의 과중한 힘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대회운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다. 군 선수단 육성지원

국군체육부대는 1985년 6월에 4개 종목을 추가한 24개 경기종목 선수 380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종목별로 단위 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사격선수 육성은 대한사격연맹과 긴밀한 업무협조하에 추진되었다. 훈련단 창설 이후 민·군 간 국가대표 선

106) 국방부, 『서울올림픽 군 지원 활동』(서울: 국방부, 1990), p.129.

107) 육군본부, 『제24회 서울올림픽 지원사』(서울: 육군본부, 1989), pp.73-75.

108) 대한민국 해군 제3함대사령부, 『해군 제3함대사령부 70년사』(목포: 해군 제3함대, 2016), p.130.

수의 통합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훈련계획 아래 경기 세부종목별로 권총반, 소총반, 이동반 등 3개 반으로 단위대를 구성하여 1985년 6월부터 군 선수 18명, 민간선수 30명을 통합하여 훈련을 시작하였다. 국군체육부대와 육군 88사격훈련단은 '88서울올림픽에서는 14개 종목 50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라.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기간 중 군사대비태세 유지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전후의 제반 안전여건은 역대 올림픽대회 안전여건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불안하고 취약하였다. 첫째, 북한은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제적 위신의 실추와 고립을 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에 실시해 왔던 선전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북한 내부의 갈등과 불만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의 개최를 적극 저지 및 방해하고자 획책하였다. 둘째, 국제테러집단은 국제적 관심이 총집중되었던 서울올림픽경기대회를 그들의 목적과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독자적인 테러 활동을 준비하는 한편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북한의 목적과 그들의 활동을 상호연계하여 조직적인 테러 활동을 획책하고 있었다. 셋째, 국내여건은 1986년 말부터 재야, 학원가, 노동계에서 민주화와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고, 일부 국민은 올림픽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림픽대회의 남북공동개최를 요구하거나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과 일부 좌경화 세력의 과격한 시위 활동 등이 대회 안전을 우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올림픽대회의 안전과 관련된 군의 역할은 휴전선을 포함한 전후 방지역에 대한 정규 및 비정규전 작전태세를 완비하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264개의 대회 관련 경기장 및 시설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제공하고, 기타 대테러작전요소 지원과 관계부처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군은 서울올림픽경기대회의 절대 안전을 보장한다는 기본방침 아래에 한미연합작전태세와 전후방경계태세 강화 등 정규 및 비정규전 작전태세를 동시에 마련하였고,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 활동을 억제하였다. 올림픽대회 전까지 '88간요전력 증강사업과 각종 전술 및 장애물 공사를 조기에 완성하도록 하였다. 올림픽대회 관련 안전경비 활동은 지역별, 시설별로 민·관·군·경이 통합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대회운영 편의를 최



〈사진 9-11〉 칼빈슨 항공모함

※ 출처: 『국방일보』(2017. 4. 10.)

대한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엄격한 경계 및 경비를 하였다.¹⁰⁹⁾ 또한, 올림픽 안전 업무를 위한 대외협력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부서 및 부대의 군사대책 활동을 통합, 기획, 조정, 통제하며 일관된 군사안전대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대책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잠정편성하여 운용하였다.¹¹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서울올림픽 방해 기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보장을 위하여 제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및 제2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양국 장관이 미 측의 군사지원사항을 합의하였다.

세부 합의사항으로 한미 양국은 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단계별로 전투태세를 강화(1단계: '88. 3. 26.~4. 15., 2단계: 4. 16.~7. 31., 3단계: 8. 1.~10. 31.)하고 완벽한 적정 감시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 측의 정보자산을 최대한 보장받고 입수된 첩보 및 정보는 한국 측에 즉각 전파하도록 하였다. 항공정찰을 평시보다 30% 증가 운용하고, 조기경보 통제기(AWACS: Air Warning and Control System)는 주 1~2회 증가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 미 측 전력의 한반도 시현을 증가하였다. 미 해병대 제15항공단, 제51전술비행단, 제8전술비행단의 공중전력을 한국 내 전개하고, 주한 미 공군 비상대기 전력을 증가하여 운용하는 한편, [표 9-25]와 같이 미 해군 전력 시현 및 대참 초계기(P-3)를 운용하였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 응징보복 시행태세를 유지하고, 전구항공통제본부(HTACC: Hardened Theater Air Control Center)와 군단 간 통신망을 유지하였다. 주한 미 전력인 스팅어와 전방지역 경보 레이더의 배치,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의무후

109) 치안본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치안백서』(서울: 치안본부, 1989), pp.252-260.

110) 1987년 2월 1일부로 정부안전대책기구인 안전조정통제본부가 발족하자 국방부에서는 1988년 3월에 장교 6명으로 군사대책반을 편성하여 작전기획국장 통제하에 운영하였다. 각 군과 주요 작전 사령부급 부대에서도 군사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이후 '88 군사대비계획 추가조치(1988. 6. 17.)에 따라 1988년 7월부터 군사대책 시행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장교 22명으로 증편하여 88 군사대책 관련 업무를 총괄로 하여 기획, 조정, 통제하였다. 국방부, 『서울올림픽대회 군 지원 활동』(서울: 국방부, 1990), pp.281-282.

송 헬기 등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보장을 위해 서 미 국방부장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적 도발 억제 및 응징 의지를 표명하였다.

[표 9-25] 미 해군 전력 시험 및 대잠초계기(P-3) 운용

엔터프라이즈 항모단	칼빈슨 항모단	뉴저지 전함 전투단	니미츠 항모단	미드웨이 항모단	대잠초계기
'88. 6. 14.~6. 16.	'88. 7. 2~7. 6	'88. 7. 24~8. 6.	'88. 9. 15~10. 2.	'88. 9. 19~10. 2.	'88. 5. 11~10. 7.

※ 출처: 국방부, 『서울올림픽대회 군 지원 활동』, p.296.

군은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시설물을 경계하기 위하여 경찰과 경비 책임을 분담하였다. 1987년 5월 19일 서울올림픽경기대회 안전대책 및 경비인력 운영 방안 결정 시 경찰 부족 인력 1만 5,400명 중 5,000명은 전·의경으로 증원하고 잔여 부족 인력 1만 400명은 군이 일부 경기장 및 시설에 대한 경비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군은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경기장 8개소, 관련 시설 3개소 등 총 11개소를 군 경비 책임 시설로 지정함으로써 1만 400명의 부족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이 경기장 및 시설에 대한 경비 책임을 담당하였다.¹¹¹⁾ 군은 태릉사격장 등 군 전담 시설에 대한 경계를 위하여 각 경기장 및 시설물별로 전담경계부대를 편성하여 기존 작전 책임부대에 배속시켜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올림픽경기대회는 개최 전에 안전에 대해 내외신에서 크게 우려하였으나 우리 군은 1980년대 초부터 안전위협요소를 연구 분석하여 시행한 제반 군사 사항을 올림픽대회의 안전과 연계 시행하여 대회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전 참가단의 입국에서부터 행사, 경기, 관광과 출국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의 외부 안전경계를 담당함으로써 내외적 방과제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외부의 위해도 사례가 전혀 없었던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군의 안전경계 활동이 이룩한 성과였다.

또한, 군의 11개 대회 관련 시설 전담경비와 대테러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의 특수임무 부대 활동은 대회의 위해(危害) 요인에 대해 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군은 성공적으로 국가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났다.

111) 치안본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치안백서』(서울: 치안본부, 1989), pp.197-204.

제 10 장 국방외교와 국제협력 활동

우리 군은 냉전 종식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 상황과 우리 국방여건을 고려하여 현존하는 북한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평시 및 유사시 우리의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사교류·협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군사교류와 협력정책은 북한의 남침 억제 및 평화통일 여건조성, 국제적인 지지기반 확대 및 유사시 지원확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미 동맹체제를 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주변국들과 균형된 군사외교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군사교류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對) 주변국 군사외교의 목적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교류협력의 내용과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무관부 운용¹¹²⁾,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교류 협력회의, 군사교육·학술교류, 합정 상호방문, 방산기술과 군수 협력, 군사협정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 군비 통제 노력이 한반도 군비 통제와 통일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지역 및 국제 군비 통제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2018년 11월 기준 약 1,000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 등 다양한 파병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제 1 절 국방교류협력 활동

우리 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

112) 무관의 파견은 1950년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법률 제107호, 1950. 3. 9.)이 제정 발효된 이후 1951년 8월 황헌친 육군 준장이 주무 국방무관으로 파견된 것이 무관 파견의 시초이다. 그 후 1970년 대통령령으로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이 제정(대통령령 제4886호, 1970. 4. 9.)되면서 국방부 장관에 의한 공식파견이 법제화되었다.

본, 러시아와 국방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자안보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1. 주변 강대국과 국방교류협력

가. 한·중 국방교류협력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2008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나, 2016년 7월 사드 배치를 결정 시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고, 이후 양국 사이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과 교육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방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간의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등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양국 사이에는 2018년 5월 제16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재개하는 등 국방교류협력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 국방부 장관은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신뢰 증진은 물론 고위 인사교류, 부대 교류 활성화와 공군 방공실무회의의 재개를 통한 공군 간 직통망(hot-line) 추가 개설 추진 등 국방교류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나. 한·일 국방교류협력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2009년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아시아 안보회의 등 다자간회의를 계기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국방정책 실무회의,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18년 3월에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여 만에 개최되어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였다.

다. 한·러 국방교류협력

1990년 수교 이후 한·러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에너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008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와 9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2013년 9월 G20 정상회담과 11월 서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러의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3년에는 우리 국방차관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군사협력 관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국방 당국자가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합참 본부장급 회의, 합동 군사위원회, 각 군 회의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군사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부대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국방 전략대화를 계기로 양측은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략대화의 수준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군 인사교류, 공군 간 직통망(hot-line) 설치,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해상 신뢰 구축을 위한 한·러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지역별 주요 국가와 국방교류협력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 및 ‘신남방정책’ 기조에 따라 안보협력 강화, 대북정책 지지 확보, 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군 고위급 인사교류, 방산 협력 및 수출, 정보교류회의, 다양한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국방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양주지역의 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다양한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주요 방산 수출,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역으로, 국방부는 중동 국가들과 국방교류협력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에는 지난 20년간 폐쇄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한 국방 무관부를 재개하였다. 아랍에미리트(UAE)는 1980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009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2011년 1월에는 아크 부대를 파병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외교·국방 협의체 신설과 함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와 캐나다와는 경제 분야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방 분야에서도 군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국방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15년 4월 페루 현지에서 훈련기(KT-1P) 출고 및 비행 행사에서 양국 대통령은 KT-1P의 우수성을 함께 홍보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정부 합동 중남미 방산 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멕시코를 방문하여 해당국의 방산 분야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와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표 10-1] 국방협력 협정체결 현황

(2018년 11월 기준)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독일	1994. 6.	스웨덴	2009. 7.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2013. 2.	우간다	2016. 5.
캐나다	1995. 5.	요르단 (조약)	2009. 10.	인도네시아 (조약)	2013. 10.	에콰도르	2016. 7.
이스라엘	1995. 8.	싱가포르	2009. 12.	필리핀	2013. 10.	보츠와나	2017. 1.
러시아	1996. 11.	리투아니아	2010. 2.	폴란드 (조약)	2013. 10.	피지	2017. 1.
터키	1999. 11.	인도	2010. 9.	아제르바이잔	2013. 12.	이집트	2017. 3.
몽골	1999. 12.	카자흐스탄	2010. 9.	뉴질랜드	2014. 5.	앙골라	2017. 3.
쿠웨이트	2004. 11.	베트남	2010. 10.	카타르 (조약)	2014. 11.	미얀마	2017. 9.
브라질 (조약)	2006. 3.	루마니아	2010. 10.	체코	2015. 2.	캄보디아	2018. 9.
우크라이나	2006. 9.	가봉	2011. 10.	콜롬비아	2015. 3.	브루나이	2018. 9.
UAE (조약)	2006. 11.	페루	2011. 10.	불가리아	2015. 5.	이탈리아 (조약)	2018. 10.
스페인	2006. 12.	호주	2011. 12.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우즈베키스탄	2008. 6.	태국	2012. 3.	파라과이	2016. 1.		
일본	2009. 4.	중국	2012. 7.	에티오피아	2016. 5.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287.

국방부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과의 국방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6년 말에 발효된 「한·유럽연합 위기관리 기본협정」에 따라 우리 청해부대가 2017년 유럽연합의 대해적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제2차 한·유럽연합 안보국방대화를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우방 국가와 양자 국방협력을 성숙시켜 나가는 한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중유럽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 및 지역별 주요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세계의 많은 국가와 국방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방산 협력 및 군사교류 활동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다. [표 10-1]에서 보듯이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방 외교의 외연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표 10-2]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국방 교류협력 활동을 다변화하면서 양국 및 다자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10-2] 국방 교류협력 현황(2005~2015)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장관 국방 외교활동	9	8	11	10	14	14	17	12	18	26	27
군지도급 상호방문	23	29	25	37	39	35	24	28	29	23	43
국방 정례회의	12	11	14	15	10	14	14	13	25	28	10
외국군 대표단 국방정책 설명회	8	7	3	6	7	4	5	5	11	11	9

※ 출처: 국방부, 『2016 통계연보』(서울: 국방부, 2016). p.26.; 국방부, 『2006년도 국방정책』(서울: 국방부, 2006), pp.33-34.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를 방한한 주요 인사 또는 상대국을 방문할 시 주요 인사와 대담하거나 다자협력 회의에 참여하여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고위급 인사들도 국방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실장이나 국장급의 정례회의인 군수협력회의, 정보통신기술회의, 차관보급 전략대화, 국방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실무진 차원의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방한하는 외국군 대표단에게 정책을 설명하여 한국의 국방 현안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군사교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다양하게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체결과 소관 업무 또는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기관과 업무에 관한 상호이해나 협의를 기록한 기관 간 약정 체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공화국 시기에는 군사외교가 거의 없었고,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는 관계로 그와 관련하여 미군과 체결한 국제 약정이 전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에 따라 제3·4공화국부터 국방 관련 국제 약정의 체결 건수가 증가하였고, 독일에 광부, 간호사 등을 파견함으로써 미국 외에 독일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서유럽 국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제6공화국에서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약정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 군이 체결 주체가 되어 기관 간 약정을 독자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10-3] 국가별 군사조약·약정 체결 현황(1948~2015)

정부	계(건수)	미국	아시아·중동	서유럽	동유럽	기타
제1·2공화국 (1948~1961)	3	3	—	—	—	—
제3·4공화국 (1962~1979)	96	87	3	6	—	—
제5공화국 (1980~1987)	154	141	7	5	—	1
제6공화국 (1988~1992)	270	242	5	19	4	—
문민정부 (1993~1997)	311	263	19	12	13	4
국민의 정부 (1998~2002)	151	113	13	11	5	9
참여정부 (2003~2007)	160	102	30	14	3	11
이명박 정부 (2008~2012)	238	108	51	29	16	34
박근혜 정부 (2013~2015)	117	66	20	13	8	10

※ 출처: 국방부, 『2016 통계연보』, p.29.; 국방부, 『2006년도 국방정책』, pp.35~36.

3. 국제 비확산 · 대확산활동

가. 국제 비확산활동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왔다. 국제 비확산 체제는 국제협약과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검증하기 위한 국제기구, 관련 물자·장비·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비확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비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표 10-4]와 같이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다자수출통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국제 비확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비확산 분야 협약과 국제기구 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군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Proliferation Treaty)을 비롯한 주요 핵 비확산 체제 가입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핵공급그룹(NSG: Nuclear Supply Group)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을 방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확산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1996년 화학·생물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에 가입한 이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다 체계적인 수출통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2002년 헤이그 행동규약(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등 자발적 성격의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여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표 10-4] 우리나라의 국제 군축·비확산활동 참여 현황

구분	참여 활동	가입 시기
핵 군축·비확산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8.
	핵확산금지조약(NPT)	1975. 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1999. 9.
생물·화학무기 군축·비확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87. 6.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7. 4.
미사일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2001. 3.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HCOC)	2002. 11.
재래식 무기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UNRCA)	1993. 3.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2001. 5.
다자수출 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NSG)	1995. 10.
	쟁거위원회(ZC)	1995. 10.
	바세나르 체제(WA)	1996. 7.
	호주그룹(AG)	1996. 10.
유엔 및 기타활동	유엔(총회 제1 위원회 / 군축위원회(UNDC))	1991. 9.
	제네바 군축회의(CD)	1996.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009. 5.

※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82.

재래식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바세나르 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에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을 하였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바세나르 체제 사무국에 반기별로 무기 이전 실적을 통보하고 우리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통제목록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발효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은 7대 무기체계¹¹³⁾와 소형무기·경화기, 탄약 부품의 국가 간 이전을 통제하는 재래식무기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일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원서명국으로서 2017년 협약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¹¹⁴⁾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거래 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수출허가 시 수출대상국의 통제규범 준수 여부, 수출 관련 군사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113)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과 발사대를 포함

114) 핵 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 체제(WA)로 구성되며, 현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Clean Country)는 총 30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한다.

나. 국제 대확산활동¹¹⁵⁾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주도국 모임인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에도 가입하였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훈련을 주관하여 확산방지와 압류처리 등에 대한 토의식 연습과 해양차단·승선 검색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 그룹 회의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이 매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차례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회에 걸쳐 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특히 우리 해군은 2014년과 2016년 해군함정과 승선 검색팀을 미국과 싱가포르에 각각 파견하여 해양차단훈련 국면에 참가하였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2017년부터 대량살상무기 검색팀 일부를 파견하여 한미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참관국 대상 대량살상무기 검색절차 훈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AR: Able Response)을 매년 실시하여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한 국가 통합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ountering WMD Committee)를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¹¹⁶⁾

4. 다자안보협력 활동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표 10-5]와 같이 아·태 지역 내 다자안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우리 정부 안보정책의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다자안보회의체인 할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에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115) 비확산이 전략물자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대확산은 이미 이동 중인 자원(물자, 자금)의 물리적 차단 등을 상정한다.

116)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149.

무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안보회의의 참가와 적극적인 안보협력 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산하고 있다.

2012년부터 국방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차관급 국방 관료들이 참가하는 서울안보 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 대화를 통해 군사적 공동이익과 관심 사항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여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역내 주요 고위급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표 10-5]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¹¹⁷⁾

Track I 다자안보회의	Track 1.5 다자안보회의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IN-Plus)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동경방위 포럼(TDF)	• 서울안보 대화(SDD) • 아시아 안보회의(ASS) •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 동북아협력 대화(NEACD) • 풀러톤 포럼(Fullerton Forum)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44.

이외에도 2003년부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ia Regional Forum),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풀러톤 포럼(Fullerton Forum),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 Tokyo Defense Forum), 중국에서 개최하는 향산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다자안보협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¹¹⁸⁾ 이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맹 및 양자 관계에 치중해왔던 국방협력을 포괄적인 다자안보협력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견해를 관련국들과 공유하고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17) Track I은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다자안보회의를 말한다. Track 1.5는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이다.

118)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146-147.

제 2 절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1. 개요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제5조 1항¹¹⁹⁾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만으로는 해외파병에 대한 실질적인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현장에 명시된 유엔평화활동에 동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1일 해외파병 상비부대인 ‘국제평화지원단’까지 창설하여 해외파병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¹²⁰⁾

[표 10-6] 국제 평화유지활동 비교

구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주체	유엔이 직접 주도	지역 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	파견국 주도
지휘 통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 사령관	다국적군 사령관	파견국 군지휘관
소요경비	유엔에서 경비보전	파견국 부담	파견국 부담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51.

파병절차는 유엔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으면 우리 정부는 파병 후보지 현지조사, 파병 가용부대 및 소요 자원 검토 등을 통해 파병계획을 수립한다. 파병계획을 기초로 정부는 파병동의안을 작성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한다.

2. 부대 단위 파병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의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19)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120) 법률 제13123호(2015. 2. 3. 일부개정)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8211호(2017. 7. 2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재 14개 임무단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를 파견하였고, 현재는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0-7] 국군의 유엔 PKO 부대 단위 참여 현황(2017년 4월 말 기준)

구분	기간	부대 또는 유엔임무단	연인원(명)
부대 단위 파병	1993. 7.~1994. 3.	소말리아 상륙수 부대	502
	1994. 9.~2006. 5.	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542
	1995. 10.~1996. 12.	앙골라 공병부대	594
	1999. 10.~2003. 10.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3,328
	2007. 7.~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6,032
	2010. 2.~2012. 12.	아이티 단비부대	1,425
	2013. 3.~현재	남수단 한빛부대	1,991
	합계		14,414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p.51-54.

부대 단위 평화유지활동은 7개 임무 지역에 14,414명이 참여하였으며 공병 위주의 부대가 4개 부대(소말리아 상륙수부대, 앙골라 공병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보병 위주의 전투부대가 2개 부대(동티모르 상륙수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의료부대가 1개 부대였다.

가.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파병¹²¹⁾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이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된 시점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는 국민이 내전 및 기아로 시달렸다. 이에 유엔은 소말리아임무단(UNOSOM-I¹²²⁾)을 창설하여 지원하였으나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에 12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794호에 의거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UNITAF: Unified Task Force)을 운용하게 되었다.

1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륙수부대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p.54-76.

122)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I 유엔 소말리아 임무단, 약 4,500명 규모였다.

당시 유엔에서는 한국 정부에 2차례에 걸쳐 파병을 요청하였으나 1차 의료부대 요청 시에는 국내 사정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였고, 2차 전부투대 요청 시에는 UNITAF의 신탁기금에 200만 불의 자금을 제공하는 선에서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말리아 내전이 점차 격화되어 감에 따라 유엔은 UNOSOM-I 보다 더욱 증강된 UNOSOM-II를 1993년 3월에 창설하고 한국 정부에도 같은 해 2월 2일 또다시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세계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말리아 PKO 참여



〈사진 10-1〉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창설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UNOSOM-II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 정부는 국방부와 외무부 PKO 실무관 4명의 현지조사단을 소말리아 현지에 파견한 결과¹²³⁾ 현지에서 공병부대가 필요하고 한국의 관점에서 경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병부대 파병이 적합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UNOSOM-II에 250명 정도의 건설공병대대 파병을 결정하고 1993년 4월 3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4월 7일 유엔에 통보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1993년 4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5월 18일 국회 동의¹²⁴⁾를 거쳐 1992년 7월 30일 상륙수부대를 소말리아에 파병함으로써 한국은 최초로 유엔 PKO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륙수부대는 현지에서 UNOSOM-II에서 부여한 도로보수공사를 주로 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숙원사업과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상륙수부대는 도로 보수공사 2건, 관개수로 보수공사 1건, 경찰서 보수 등의 건설 활동과 사랑의 학교 및 기술학교 운영 등 각종 민사활동을 하였다.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의 최대성과는 국위 선양과 이를 통한 경험 축적이었다. 국위 선양 측면에서 첫째,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된 이후 첫 유엔 평화유지활동이었으며 모범적으로 활동하여 유엔, UNOSOM-II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평화 기여 이미지를 고양하였다. 둘째, 평화유지활동 경험 축적이며,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활동법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업무절차, 현지 활동, 국제협력 등 귀중한 경험을 축

123) 한국 정부는 파병부대의 형태를 놓고 보병부대와 의료지원단 파견을 놓고 심층 검토한 결과 임무 수행이 쉽고 예산부담이 적으며 안정성이 높은 의료지원단 파병이 보병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말리아와 UN 본부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124) 제161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3. 5. 18.)

적하여 이후의 해외파병 시 활용할 수 있었다.¹²⁵⁾ 해외 첫 파병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첫째, 상록수부대 편성에 경계부대를 포함하지 않았다.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항상 경계병이 필요했는데 이탈리아군의 경제지원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았다. 둘째, 현지 실정에 적합한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하지 못했다. 사료구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는 현지 도로상 운용이 제한되었으며, 자체 중량이 무거운 차량은 사막 지역 등에서 운용할 수 없었다.

나.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파병¹²⁶⁾

1994년 2월 28일, 유엔은 서부 사하라에 한국군 의료부대의 파병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파병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14일 국회의 동의¹²⁷⁾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국제정세 및 대한민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유엔평화유지군 참여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엔이 걸프전쟁에 파병된 한국의 의료지원단의 의료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의료부대의 파병을 요청해 왔다. 한국 정부는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철수 시 앞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유엔에 전달한 바 있었다. 그리고 유엔과의 외교 강화 측면에서도 유엔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유리했으며, 현지 정세가 안정적이어서 부대 안전과 군수지원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것은 평화 애호 국가로서 위상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유엔이 한국의 참여를 절실히 요망하는 시기와 장소에 지원함으로써 참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¹²⁸⁾

한국 정부는 1994년 2월 28일 유엔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고, 1994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서부 사하라에 외무부와 국방부 실무요원 6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때 1994년 8월 15일부로 의료지원 임무를 스위스 의료지원단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유엔과 합의하였다. 이후 5월 30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4일

1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의 PKO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84-85.

1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유엔평화유지활동법』(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3』(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4』(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p.54-91.

127) 제169회 제1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4. 7. 14.)

1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의 PKO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157.

국회에서 파병동의안¹²⁹⁾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유엔 서부 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Mission de las Naciones para la organization de UN Referendum en el Sahara Occidental)의 일원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여 제1진부터 제23진까지 약 12년간 MINURSO 요원에 대한 전담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지 임무 수행 동안 MINURSO 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았고 한국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군수지원은 육군본부로부터 받았다. 진료 활동은 중앙진료소 운영, 전방진료소 운영, 응급환자후송, 치과 진료, 위생 및 방역 활동 등이었다.



〈사진 10-2〉 국군의료지원단 창설식

※ 출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2004)

국군의료지원단은 단일부대로서 12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3개 진이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위를 선양하였다. 기간 중 누적 환자 5만 8,000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군의료지원단의 친절한 진료에 감사한다는 편지를 많이 받았다. 반면에 사용 경비에 대해 유엔 측으로부터 충분한 보전을 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초기 약정한 후급약정서(LOA: Letter of Assistance)에 의거 임무 수행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우선 구매하고 품목별 실제 구매비용을 사후에 유엔으로부터 보전을 받았는데 제17진까지 이를 적용하였고, 제18진부터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적용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약 111.9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경비보전은 57.2억 원을 보전받아 보전액은 사용 경비의 약 51.1%에 불과하여 향후 계획수립 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앙골라 공병부대 파병¹³⁰⁾

1995년 2월 9일 유엔은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할 한국군 전투 공병 200명의 파병을 요청해 왔다. 이미 정부는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앙골라파병을 고려하고 있었던 차에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부서는 다른 나라의 평화유지활동

129) 제169회 제1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4. 7. 14.)

1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대한민국 공병부대 증언록』(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p.92-106.

파병 실태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 국제정세, 국가 외교 차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한국 군의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파병은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합동조사단을 포함한 현지 합동조사단 7명을 구성하여 1995년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앙골라 현지로 파견하였다. 조사결과 지뢰 제거 임무는 한국에서도 필수적인 전력이므로 제외했고, 교량 설치부대를 고려하였으나 이 부대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제외했다. 결국, 정부는 1995년 4월 29일 지뢰 제거 및 도로보수 임무는 제한되고 200명 규모의 교량 건설부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사항을 유엔에 통보하였으며, 국회에서 파병안이 가결¹³¹⁾되었다. 앙골라 공병부대는 제1113야전공병단을 모체로 하여 1995년 8월 7일 창설식을 하였고, 고유명칭은 ‘제101야전공병대대’로 통상적으로 ‘앙골라 공병부대’로 명명하였다.

앙골라 공병부대는 1995년 10월 4일 제1진 본대 출발로부터 제3진이 복귀한 1996년 12월 22일까지 약 15개월간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요활동은 UNAVEM(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유엔 앙골라검증단)-III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우선 수행하면서 자체적인 민사활동이나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부여된 임무에 대한 실적으로 교량 복구 8개소, 비행장 복구 2개소, 수용시설 등의 용지정리 5개소, 도로 신설 2개소 등을 실시하였다. 대민지원 활동으로 도로보수 및 신설, 의료지원, 사랑의 학교 및 태권도 학교 운영, 영농법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친선 및 홍보 활동 사항으로 벵겔라 지역 홍보 행사, 우암보 지역 한국의 날 행사 등을 홍보하였으며 CNN 뉴스에도 2회 방송되었다.

앙골라 공병부대는 건설공병부대로 교량보수를 주요 과업으로 수행하였다. 대민지원 활동은 소말리아 상륙수부대의 활동을 많이 참조하여 사랑의 학교 운영, 태권도 교육, 의료지원 등을 하였다. 소말리아 상륙수 부대가 경계병력을 편성하지 않아 이탈리아군의 경계지원이 없으면 독립적인 부대 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에 비해 앙골라 공병부대는 경비소대를 본부중대에 편성하여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앙골라 공병부대는 친선 및 홍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었다.

활동할 때의 문제점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 Department of Peace Keeping Operations)에 한국인이 전혀 없어 임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¹³²⁾ 특히 제3진 교대 및 철수 시 단위부대와 참모장교들이 직접 유엔본부 담당 민간직원들과 유선으로 직접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함에 따라 절차상의 혼선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31) 제176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5. 7. 15.)

1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의 PKO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132.

라.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파병¹³³⁾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강제 병합한 이후 동티모르는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1991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시위대에 대한 인도네시아군의 발포로 900여 명이 사망함에 따라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유엔이 개입하여 1999년 9월 4일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였고, 독립 찬성이 우세하자 인도네시아의 지원을 받은 독립반대파 민병대에 의한 유혈 학살이 자행되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9월 12일 국제적 압력에 의해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방침을 수용하였고, 유엔에서는 9월 16일 한국 정부에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9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파병안을 확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상륙수부대의 파병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이었으므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파병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¹³⁴⁾하였다. 전투부대가 파병부대로 결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보병이 임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동티모르 현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무가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체 방호력을 갖춘 보병부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자원 활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쉬웠다. 의무나 공병부대와는 달리 보병은 평상시 갖추고 있는 장비로 효율성이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국제적인 공헌도도 높다는 점이다. 보병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넷째, 파병에 대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군수지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사전 교육, 기후나 지형에 따른 적합성 검토 등이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상륙수부대는 1999년 9월 29일 제5공수특전여단 주둔지에서 창설식을 했고, 고유명칭은 ‘육군 제522평화유지단’으로 별칭(상징명칭)은 ‘동티모르 상륙수부대’로 명명되었다. 상륙수부대 제1진의 편성 인원은 총 419명으로 제3진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제4·제5진은 420명, 제6진은 433명, 제7진은 432명으로 조정되었고, 제8진은 25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임무 수행체계는 최초에 임무 수행 시에는 유엔이 승인한 호주군 주도의 다국적군인 INTERFET(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동티모르 다국적군)에 편성되어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유엔임무단이 UNTAET(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동티모르 유엔 과도정부)로 전환되고 예하에 평화유지군

1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륙수부대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34) 제208회 제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9. 9. 28.)

사령부가 설치됨에 따라 2000년 2월 1일 오후 1시부터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파병은 1964년 베트남전쟁 파병 이후 35년 만에 이루어진 전투부대의 파병이었으며 유엔평화유지군 임무로서는 처음이었다. 주요성과로 첫째, 간접적인 전장 실상을 체험함으로써 전투력 증진에 이바지하였고, 분쟁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할 기회가 되었다. 둘째, 다른 파병과는 달리 동티모르 상륙수부대는 동티모르의 첨예한 분쟁 시기에 현지에 들어가서 ‘띠모르레스테(Timor-Leste)’¹³⁵⁾라는 국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평화유지활동을 종결하고 철수한 최초의 사례였다.

파병 시 미흡했던 사항으로 첫째,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동티모르에 대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군수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다국적군으로서 임무 수행과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 임무 수행에 대한 차이점을 사전에 또는 전환과정에서 분명히 알고 알지 못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유엔경비보전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파병 기간 내내 장병의 복지와 군수지원 등이 열악했다. 넷째, 제7진 임무 수행 시 에카트(Ekat) 강 급류에 휘말려 상륙수부대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¹³⁶⁾



〈사진 10-3〉 레바논 평화유지단 부대기

※ 출처: 육군본부, 「보도자료」(2007. 6. 21.)

유엔 레바논잠정군(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은 1978년부터 레바논에 전개하여 레바논 내전과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중재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2006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로 민간 1,0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701호가 채택되어 UNIFIL의 병력을 기존 3,000여 명에서 1만

135) 동티모르의 정식 국가명칭은 ‘동티모르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이다. 국명이 2002년 5월 20일 독립과 동시에 East Timor에서 포르투갈 표기인 Timor-Leste로 공식 변경되었으나 국제적으로는 East Timor로 통용되고 있다.

136)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152-153. 동명부대는 고구려 건국 시조인 동명성왕(주몽)의 이름을 딴 동쪽 나라에서 파병된 부대로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000명 수준으로 증강하고자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2006년 8월 10일 한국군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6년 12월 22일 국회의 동의¹³⁷⁾를 거쳐 2007년 6월 21일 350여 명 규모의 동명부대를 파병하였다. 레바논 동명부대는 전투부대로서 동티모르 상륙수부대에 이은 두 번째 국제평화유지군 파병이었다.

동명부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01호에 의거 파병되었으므로 최우선 임무인 책임 지역 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 유입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실시하면서, 우호적인 작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군작전, 레바논군 및 타국 군과의 지원 및 협조를 통한 친한화 활동 위주로 부대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민군작전에 레바논 현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한화를 달성하여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위를 선양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활동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11년까지 총 97.6억 원이 사용되었다.

[표 10-8] 동명부대의 주요활동(2018년 11월 현재)

작전 활동	• 작전지역 감시정찰: 36,474회 • 자체 도보·기동정찰과 EOD 정찰: 47,456회 • 레바논군과 연합정찰: 8,714회
민군작전 및 인도적 지원	• 현지 주민 의료지원: 108,386회 • 가축 진료: 33,963두 • 컴퓨터·한글·태권도·재봉 교실 운영: 5개 마을 • 주민 숙원사업: 390건(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 레바논군 지원: 92건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53.

주요성으로 군사작전은 최우선 임무인 유엔군의 평화유지활동이며, 작전지역인 남부 레바논의 리타니강 이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을 감시하고 작전지역 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작전 활동 총 7만 7,000회 이상, 레바논군과의 연합작전 3,800회 이상을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24시간 감시 작전, 기동정찰, 위험지역에 대한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정찰, 도보정찰, 연합기동정찰 등을 실시하였다. 동명부대는 정전 감시활동 외에도 피스 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민군작전 분야는 다른 나라와 차별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

137) 제263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6. 12. 22.)

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레바논군 지원사업은 제1진부터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 제18진까지 총 96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비예산 사업으로 1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수도과 학교시설 개선, 도서관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여건을 개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 교육, 한국어 교실, 재봉·냅킨 아트 교실 등을 열어 친한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결과 동명부대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바. 아이티 단비부대 파병¹³⁸⁾

한국 정부는 2010년 1월 19일, 아이티의 피해복구와 재건지원을 위한 ‘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으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 2월 9일 국회의 동의¹³⁹⁾를 거쳐 ‘아이티재건지원단’을 파병하기로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관련 기관과 면밀한 협조를 하고, 2010년 1월 29일~2월 4일까지 아이티 현지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와 파병 후 수행할 임무를 확인하였다.

아이티재건부대는 2010년 2월 17일 창설되었으며, 2012년 12월 22일 제6진이 철수할 때까지 240명 규모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이티 현지에서 단비부대의 지휘 관계는 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예하 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작전 통제를 결한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단비부대는 제1진부터 제6진까지 총 689건의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단비부대는 현지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주민 친화적 활동’을 기조로 지진 이후 형성된 난민촌과 보육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과 취약학교 지원 사업, 지역 친선행사, 학생 의식개혁 및 자립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되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립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단비부대는 아이티 지진으로 인한 구호지역에 최초로 파병된 평화유지군이었으며, 유엔 요청에 따라 한국군의 역대 파병 중 가장 빨리 전개한 부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사례였다. 단비부대는 제1진에서 제6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대가 작자의 상황에 맞는 재건 임무를 잘 수행하여 현지인들로부터 단비부대를 ‘레오 간의

1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해외파병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p. 107-125. 단비부대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아이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39) 제287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0. 2. 8.)

축복'이라고 칭송받았다. 특히 제4진부터 실시해온 레오 간 난민촌(일명 '코리아 빌리지') 조성은 NGO 단체와 연계하여 용지정리부터 심정개발, 도로개설, 나무 심기를 비롯해 벽화 그리기까지 모든 단계를 패키지로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재건지원의 새 분야를 개척하였다.

단비부대가 임무를 수행할 때 드러났던 문제점으로는 유엔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이후(2010. 1. 19.), 선발대가 2월 10일, 본대가 2월 27일 출발로 비교적 신속하게 출발함에 따라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상으로 장비와 물자 전개도 파병 후에 이루어져서 파병부대에서 선적할 장비나 물자를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부족한 물자나 장비를 현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군이 신속한 파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¹⁴⁰⁾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에서 벗어난 수단은 1955년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남수단은 2011년 7월 9일 수단에서 분리하여 독립하였다. 그러나 내전의 여파와 부족 간의 무력충돌, 주변국들과의 갈등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유엔에서는 남수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수단이 독립하기 하루 전인 7월 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96호에 따라 유엔 남수단임무단인 UNMISS(United Nation Mission in South Sudan)을 설치하였다. 이는 남수단의 평화건설을 지원하고 남수단이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요망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기존의 수단임무단인 UNMIS(United Nation Mission in Sudan)를 남수단임무단으로 축소하여 전환한 것이었다.

2011년 7월 26일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에 해외파병을 정식 요청하였고, 2012년 9월 27일 국회 동의¹⁴¹⁾를 얻어 남수단 재건지원을 위한 해외파병이 추진되었다.¹⁴²⁾ 부대의 고유명칭은 '남수단 재건지원단'으로 상징명칭은 육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한빛부대'로 하였다. 부대편성은 현지 임무를 고려하여 전투력이 우수하고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경험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113공병단 예하 제151공병대대를 모체부대로 하였고, 제2작전사 예하 부대를 모체로 하여 경비대와 작전지원대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140)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153-154.

141) 제311회 제9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2. 9. 27.)

142) 한빛부대는 소말리아(1999~2003, 재건지원), 서부 사하라(1994~2006, 의료지원), 앙골라(1995~1996, 재건지원), 동티모르(1999~2003, 치안 유지 및 국경선 통제), 레바논(2007~현재, 정전감시), 아이티(2010~2012, 재건지원)에 이어 일곱 번째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이었다.

한빛부대는 군수지원 분야를 제외하고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현지에서는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예하 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았다. 한빛부대의 재건지원 활동으로 나일강 범람 대비 긴급 제방 공사 지원, 보르공항 주기장 확장 및 헬기장 보수, 보르시내 및 보르기지 도로보수 등을 통해 남수단 전략 거점화의 시발점을 만들었다. 또한, 민간인 보호와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종합쓰레기 처리장 신설, 보르시 내 긴급도로보수 및 배수 지원, 난민보호소 보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한빛부대의 민군작전은 친한화 활동,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 개발 지원이라는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실시하였다. 남수단 한빛부대 제2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2013년 12월 15일 남수단 대통령 궁에서 부통령 마차르가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이 발생하였다.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UNMISS에서는 위임명령에 명시된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보호소를 운영하였다. 이에 한빛부대는 UNMISS로부터 난민보호소를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방역 및 의료지원, 급수지원, 시신 매장 등을 지원하였다.

주요성과로 재건지원 분야에서 현지 주민의 숙원사업인 보르-망겔라 간 125km에 대한 도로보수공사를 하였고, 백나일강 범람 대비 물막이벽 설치 등 다양한 재건지원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신생국가인 남수단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민군작전을 통하여 한국 특유의 ‘정’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빛 직업학교, 한빛 농업기술연구센터, 한빛농장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제 개발 지원과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남수단 장기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오피니언 그룹과 직업학교 연수생 등으로 방한 연수단을 편성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국가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표 10-9] 한빛부대의 주요활동

재건 지원 작전	• 보르공항 신미터널(12개 동) 신설, 편의시설 설치(정화조, 체육시설, 유류고 등) 및 시설보수(내·외부 진입로, 활주로, 주기장, 울타리 등) • 보르-피보르(197km), 보르-망겔라(125km) 구간 도로 재건 • 보르 지역 도로보수, 배수시설 개선, 수물 지역 배수와 복구 장비 지원 • 기반시설(취토장, 쓰레기 매립장 등) 개설과 유지보수 • 피보르 마을 진입로(200m)와 축구장 보수
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	• 종글레이주 피스센터 설립 • 보르병원 의약품·물자 지원 • 보르·피보르 지역 초등학교 교육물자 지원 • 존가랑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장 리모델링 • 한빛농장 운영: 망고·구아바 묘목 350주 식재

	• 방한 연수: 6회차 62명 방한 • 대민 의료지원: 2만 1,500여 명 • UNMISS 태권도·한국어 교실 운영
난민 보호	• 내·외부도로 보수와 우기 수물 지역 배수 지원 • 난민보호소 시설보수, 방호벽 보강과 경제초소(14개소) 신축
UN군 시설공사지원	• 보르기지 UN 직원 숙소 설치(12동), 보르공항 경계초소와 숙소 설치 • 보르기지 방호벽과 내부도로(4.8km) 보강 • 피보르와 아코보 독립작전기지 방호벽(피보르 2km, 아코보 200m), 외부 해자와 순찰로(1.8km) 보강 • 보르기지 배수로 보수와 발전기 패드 설치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54.

개선헌 사항으로 제2진 파병근무 기간에 남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부대 방호나 개인 방호를 위해서 많은 탄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군의 탄약을 지원받게 되어 국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수단에 대한 파병은 파병부대 중 가장 많이 지연되었는데 유엔으로부터 파병 요청이 있는 지 14개월 후에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3. 개인 단위 파병

국방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군의 유엔 PKO 개인 단위 파병 현황은 [표 10-10]과 같다.

[표 10-10] 국군의 유엔 PKO 개인 단위 파병 현황(2017년 4월 현재)

파병 연도	파병 기관	수행 직책	연인원(명)
1993	유엔 소말리아임무단-II	참모 요원	15
1994	유엔 그루지야 정전감시단	군 옵서버	88
1994~현재	유엔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단장(3명), 군 옵서버	187
2000	유엔 동티모르임무단	참모장, 참모장교	45
2002	유엔 사이프러스임무단	군사령관	1

파병 연도	파병 기관	수행 직책	연인원(명)
2003	유엔 아프간임무단	참모장교	7
2003	유엔 라이베리아임무단	군 옵서버	24
2004	유엔 부룬디임무단	군 옵서버	4
2005	유엔 수단임무단	군 옵서버	46
2007~현재	유엔 레바논 잠정군 사령부	참모장교	37
2007	유엔 네팔임무단	군 옵서버	13
2008	유엔 레바논 잠정군 서부여단	참모 요원	25
2009~현재	유엔 수단 다푸르임무단	참모장교	15
2009	코트디부아르임무단	군 옵서버	12
2009~현재	유엔 서부 사하라 선거감시단	군 옵서버	29
2009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참모장교	10
2011~현재	유엔 남수단임무단	참모장교, 군 연락장교	36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p.193.

유엔임무단 군 옵서버는 분쟁지역에서의 평화협정, 정전협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근무 시에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유엔평화유지군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군 옵서버 파병은 1994년 유엔 그루지야 정전감시단에 처음 파병한 이래 라이베리아·부룬디·네팔·코트디부아르임무단과 서부 사하라 선거감시반 등지에 파병되었다.

유엔임무단 참모 요원은 분쟁지역에서 유엔의 개입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임무단이 창설되어 운용될 때 주로 임무단 예하에 편성된 군사령부의 참모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된 인원이다. 1993년 8월에 최초로 유엔 소말리아임무단-II에 참모 요원 6명을 파병한 이래 동티모르, 아프간, 레바논, 수단, 아이티, 남수단임무단 등에 파병하였다.

제 3 절 다국적군 평화활동

1. 개요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주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평화 강제

(Peace Enforcement)와 이후의 평화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유엔의 승인 아래 주로 지역 기구나 특정국의 주도로 다국적군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유엔의 위임활동으로 볼 수 있다. 유엔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루어진다.

냉전 이후 현재까지 다국적군이 구성된 사례는 1990년 걸프전쟁 다국적군, 1992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미국 주도의 UNITAF, 1999년 동티모르 사태 당시 호주 주도의 INTERFET, 2001년 아프간전쟁 간 나토(NATO) 주도의 ISAF, 2011년 이라크전쟁 다국적군, 2005년 아이티 내전 당시 미국 주도의 MIF,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나토군 등이 대표적이다.¹⁴³⁾ 한국군은 여러 차례 다국적군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으며, 주로 미국 주도의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 대해적작전 등의 다국적군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다국적평화활동(MNFPO: Multinational Forces Peace Operation)은 우리나라가 1991년 9월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해 왔는데, 그것은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걸프전쟁 기간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파병한 것이다.

2017년 전반기까지 26개 임무 지역에 연인원 3만 3,485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부대 단위 평화활동은 12개 임무 지역에 3만 3,177명이 참여하였다. 의료지원 부대가 3개 부대(걸프전쟁 의료지원단, 아프간 동의부대, 이라크 제마부대), 공병 위주의 부대가 2개 부대(아프간 다산부대, 이라크 서희부대), 보병 위주의 부대가 2개 부대(이라크 자이툰부대, 아프간 오쉬노부대), 공군 수송단이 3개 부대(비마부대, 청마부대, 다이만부대), 해군이 2개 부대(해성부대, 청해부대)를 파병하였다.

개인 단위로 파병된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14개 임무 지역에서 368명이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다국적군 사령부의 협조 장교나 참모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재에도 미국 중부사령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 소말리아 해역 CTF-151, 지부티에 있는 CJTF-HOA, 독일에 있는 미 아프리카 사령부 등에 10명의 장교가 참모장교 및 협조장교로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43) UNITF: United Task Force, INTERFET: 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 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t Forces, MIF: Multinational Interim Force, 다국적 임시군

[표 10-11] 국군의 다국적군 평화 활동 참여 현황(2017년 현재)

구분		기간	파병지역, 부대(임무단)	연인원(명)
부 대 단 위	걸프 전쟁	1991. 3.~1991. 4.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	154
		1991. 2.~1991. 4.	UAE, 비마부대	160
	아프간 전쟁	2001. 12.~2003. 6.	싱가포르, 해상부대	823
		2001. 12.~2003. 12.	청마부대	1,245
		2002. 2.~2007. 12.	아프간, 동의부대	786
		2003. 3.~2007. 12.	아프간, 다산부대	1,329
		2010. 7.~2014. 6.	아프간, 오쉬노부대	1,745
	이라크 전쟁	2003. 4.~2004. 4.	이라크, 서희부대	952
		2003. 4.~2004. 4.	이라크, 제마부대	185
		2004. 4.~2008. 12.	이라크, 자이툰부대	17,708
		2004. 10.~2008. 12.	이라크, 다이만부대	1,324
	대해적 작전	2009. 3.~현재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6,706
개 인 단 위	아프간 전쟁	2001. 11.~현재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50
		2002. 3.~2010. 6.	아프간, CJTF 협조만	27
		2002. 3.~2007. 1.	아프간, CFC-A 참모부	6
		2008. 4.~2010. 7.	아프간, 한국 의료직업훈련팀	20
		2009. 9.~2013. 8.	아프간, CSTC-A 참모부	16
		2010. 4.~2011. 3.	아프간, 기지건설지원단	1
	이라크 전쟁	2003. 4.~2008. 12.	이라크, CFLCC/CJTF-7 MNF-I 협조단	49
		2003. 8.~2008. 12.	이라크, CJTF-7 및 MNF/C-1 참모부	82
		2005. 12.~2008. 12.	이라크, RRT	4
	대테러 / 대해적 작전	2003. 3.~2012. 12.	지부티, CJTF-HOA 참모부	15
		2008. 1.~현재	바레인, 연합해군사 참모부	32
		2009. 3.~현재	지부티, CJTF-HOA 협조 장교	20
		2011. 3.~현재	소말리아 해역, CTF-151	45
		2016. 3.~현재	독일, 미 아프리카사령부 협조 장교	1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p.209.

2. 부대 단위 파병

가. 걸프전쟁 파병

1) 국군의료지원단 파견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열강들이 이라크에 즉각 대응하면서 공동전선으로 동맹국의 지원확보에 외교 노력을 집중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이라크의 무력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경고하였다. 한국 정부도 동맹국에 대한 지원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던 중에 1990년 8월 18일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동맹국을 지원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9월 24일 ‘정부의 걸프 사태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걸프 사태 전쟁비용 분담금으로 2.2억 달러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군의료지원단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27일 유종하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총 9명의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조사단은 국군의료지원단 파병을 위한 외교활동과 실무협조를 하고 11월 8일 귀국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90년 11월 29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1991년 1월 15일까지 철수하지 않을 시 유엔회원국에 모든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결의하였다. 이후 미국이 한국에 의료지원단을 조속히 파병해 달라고 요청하자 본격적으로 파병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료지원단 파병 1주일 만에 의료지원단 파병만으로는 다국적군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고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비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2.8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과 공군수송단의 파병 등의 추가지원방안을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1991년 1월 14일에 합참의 전략기획본부 군사협정 과장 등 6명의 협조단을 현지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1991년 1월 15일 알누아이리아 병원에 도착하여 병원 측과 실무협의를와 선발대 업무를 개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성과 외무성을 방문하여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위협정서 및 군사 실무약정서를 체결 후 1월 26일 귀국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1991년 1월 21일 ‘국군의료지원단 파견안(案)’이 국회의 동의¹⁴⁴⁾를 얻게 되자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알누아이리아 병원에 선발대가 먼저 도착해서 1991년 1월 19일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본대와 합류한 뒤 그해 4월 7일까지 79일 동안 의료활동을 하였다. 국

144) 제15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 1. 21.)

군의료지원단과 한국 간의 지휘 통제체계는



〈사진 10-4〉 국군의료지원단 부대기

※ 출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2004)

초기에는 합참의장이 작전본부에 설치된 지휘 통제반을 통하여 국군의료지원단을 직접 지휘하였고, 공군수송단 파병 이후에는 작전본부에 지휘 통제본부를 설치하여 지휘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과 피지원국 간에는 피지원사령부가 작전 통제하게 되어있었다. 국군의료지원단장이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중령인 알누아이리아 병원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여 단장의 권한이 제한되었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의료지원단의 진료현황은 [표 10-12]와 같다.

[표 10-12] 국군의료지원단의 국적별 환자 진료 현황

구분	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기타 다국적군
총계	1,633	969	162	503
내과	610	387	35	188
정형외과	372	219	66	87
일반외과	198	102	42	54
치과	183	95	3	85
기타	271	166	16	89

※ 출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료지원단 걸프파견 역사자료 II』(성남: 국군의무사령부, 1991), p.46.

2) 비마부대(飛馬部隊) 파병과 공중 수송작전¹⁴⁵⁾

비마부대(제56공수비행단)의 파병 결정은 의료지원단이 파병된 후에 결정되어 비마부대 파병에는 의료지원단의 파병 준비과정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국군의료지원단의 파병 추진 위원회를 그대로 재가동하였고, 국방부에서 공군수송단 파병 지침을 하달하자 합동참모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에서는 본격적인 파병 준비에 들어갔다. 국방부 5명, 공군 9명 등 14명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1991년 2월 5일~2월 11일까지 현지조사를 하였다.

145) 공군 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 해외 파병사』(계룡: 공군 군역사기록관리단, 2007), pp.139-212.

공군수송단(비마부대)은 2월 7일 ‘공군수송단 파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¹⁴⁶⁾되자 2월 13일 김해기지에서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비마부대 편성은 C-130 수송기 5대를 운용하기 위하여 총 160명으로 편성하였다.

비마부대는 한국 합참의 작전지휘를 직접 받았으며 공군본부로부터는 그 외 군수지원, 인사지원 등 작전 지원을 받았다. 다국적군으로부터는 알아인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 1630공수비행단으로부터 작전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비마부대는 1991년 2월 26일 첫 임무를 수행한 이래로 4월 3일까지 총 323소트의 공수를 하였으며, 총 461시간 57분의 비행시간 동안 약 24만km를 비행하면서 병력 1,405명과 화물 713.3t을 공수하였다.

3) 걸프전쟁 파병 성과

걸프전쟁 파병 성과로 첫째, 냉전 이후 최초의 파병경험과 실전경험을 축적했다. 첨단무기가 총동원된 걸프 전쟁에 파병됨으로써 계획 분야 종사자는 해외파병에 따른 계획, 준비, 대내외 협조, 파병부대 지휘 및 통제 등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걸프전쟁에 국군의료지원단 154명이 79일, 공군수송단 160명이 37일 동안 참전하였지만, 중동의 특수한 지형과 기상조건 아래에서 그 당시 최첨단장비가 총동원된 초현대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 둘째, 국익증진 및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걸프전쟁에 한국군의 파병과 5억 불에 상당하는 전쟁지원금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 국민에게는 한국이 유엔의 일원이라는 긍지를 심어주었다. 셋째, 전후 중동지역에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굳히게 되었고, 중동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나. 아프가니스탄전쟁 파병

아프가니스탄전쟁 파병은 파병 결정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쟁 초기 다국적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끝난 시점에서 해군의 해성부대, 공군의 청마부대, 육군의 동의부대를 파병한 시기, 둘째, 추가로 육군의 다산부대를 파병한 시기, 셋째, 안정화작전 말기에 한국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운용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위해 오쉬노부대를 파병한 시기이다.

146) 제152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 2. 7.)

1) 해성·청마·동의부대 파병

해성·청마·동의부대의 파병은 9·11테러 이후,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테러’가 더는 어느 국가나 조직의 정쟁적 수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9·11테러 직후 한국 정부는 2001년 9월 23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대테러전쟁 참가 요원들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단과 항공기와 선박을 포함한 수송 자산을 보내기로 하였다. 9월 24일 대통령이 대미지원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10월 17일 정부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계획」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미국이 11월 14일과 12월 5일에 의료지원단과 해·공군수송지원단의 파병을 공식 요청해 오자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파견동의안¹⁴⁷⁾을 가결하였다.¹⁴⁸⁾

해성부대(海星部隊) 파병과 해상 수송작전 정부의 대테러전쟁에 관한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국방부는 2001년 9월 29일 제2차 협조 회의를 통하여 해군의 LST 1척과 병력 171명으로 편성된 해군수송지원단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부대창설은 2001년 12월 18일 진해 서해대에서 실시하였으며 부대 고유명칭은 ‘해군수송지원단’으로, 상징명칭은 ‘해성(海星)부대’¹⁴⁹⁾라고 명명하였다.¹⁵⁰⁾ 부대의 임무는 미국 ‘항구적 자유작전’의 지원을 위하여 대테러전쟁 물자수송, 인도적 지원과 구조작전 등이었다. 부대편성은 상륙함 1척으로 구성된 최초 171명이었으나 제2진부터 제6진까지는 163명으로 편성하였다. 부대는 임무를 개시한 이후 3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성부대는 2001년 1월 27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부터 합참의 작전지휘를 받았으며, 해군본부로부터는 작전지휘를 결한 지휘를,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는 전술 통제를 결한 작전지휘를 받았다. 전술 통제는 싱가포르에 있는 서태평양군사령부(CTF-73)가 행사했다. 합참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국 제7함대사령부는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해성부대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해상수송 임무 15회, 탐색 지원 2회 등 총 17회의 임무를 실시하였다. 15회의 해상수송 임무를 통해 총 92,692NM을 항해하면서 약 5,300여 t의 물자를 수송하였다.

147) 제225회 제2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1. 12. 16.)

1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55.

149) 해성(海星)부대는 “별을 보고 대양을 건너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라”라는 의미에서 ‘해성부대’라고 명명하였다. 해군 작전사령부, 「해성부대 임무 수행 결과」(진해: 해군 작전사령부, 2003), p.2.

1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83.

청마부대(靑馬部隊) 파병과 공중 수송작전¹⁵¹⁾ 2001년 9월 23일 국방부는 파병을 공표하고 국방부에 임무기획단을 편성하여 C-130 수송기 4대를 포함한 150명 내외의 공군 수송지원단을 파병하기로 하였다. 공군은 공군수송단 파병을 위한 청마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원위원회는 2001년 10월 8일 부대 명칭을 ‘제57공수비행단’으로 정하고 상징명칭을 ‘청마부대’로 결정하였다. 청마부대는 2001년 12월 18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부대편성은 병력 78명, C-130 수송기 4대가 편성되었다.¹⁵²⁾ 부대는 임무를 개시한 이후 8개 진이 운용되었으며, 부대 교대는 3개월 단위로 교대하고 각 진에서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병력을 교체하여 운용하였다. 청마부대는 싱가포르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를 왕래하면서 주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였다. 이 부대는 미국 태평양사령부 예하 공중기동작전 통제본부에서 전술 통제를 하고 한국의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지휘(전술 통제 제외)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 합참은 제5전술공수비행단을 작전 통제하고 공군본부는 작전 통제를 결한 지원 분야에 대해 지휘를 하였다.

청마부대는 2001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12월 13일까지 81회의 수송 작전을 하여 총 600명의 병력수송과 310t의 화물을 수송하였으며 비행거리는 약 777,182NM으로 지구를 35바퀴 돈 것과 비슷했다.

동의부대(東醫部隊) 파병 2001년 12월 4일 국방부는 미군 기지가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의료지원단을 파병하기 위해 현지조사단 2명을 파견하였다. 이들의 현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병력을 최초 130명에서 90명으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전투근무 지원계획을 대폭 수정하였다. 2001년 12월 18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수전교육단에서 창설식을 거행하고, 부대 고유명칭을 ‘육군 제924의료지원단’, 통상명칭을 ‘1029부대’, 상징명칭을 ‘동의부대’로 하였다.¹⁵³⁾ 동의부대는 2002년 2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총 11개 진이 6개월~8개월 단위로 부대 교대¹⁵⁴⁾를 하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동의부대장은 제1진에서 제4진까지는 군의병과 대령, 제5진부터는 의정병과 중령을 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경비대는 해병대 인원으로 편성되었다. 제4진부터는 민사반 10명이 편성되어 아프간 지방재건팀으로 재파견되었다. 또한, 동의부대 제6진부터는 ‘단’급에서 ‘대’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반면 다산 제4진은 ‘공병대’에서 ‘공병단’으로 승격하였다. 동의부대에 부여된 임무는 지정된 대테러전쟁

151) 공군 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 해외 파병사』(계룡: 공군 군역사기록관리단, 2007), pp.223-283.

1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 84-85.

1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129.

154) 제1진~제8진 6개월 단위 교대, 제9진~제10진 7개월 단위, 제11진은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여 요원에 유엔 Level-II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각종 예상위협으로부터 부대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며, 필요할 때 명령에 의거 대민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동의부대는 육군본부 예속부대로 창설되어 파병 현지에서 초기에는 미 공군 제376비행단이 전술 통제를 하였고, 합참으로부터 전술 통제를 결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육군본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았다. 이후 2003년 동의부대 제3진 파병 시에는 다산부대 제1진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기지로 주둔지를 옮기면서 지휘 관계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군 지원단(TF-Korea)이 운영되어 CJTF-82 예하의 미군 제455병원의 작전



〈사진 10-5〉 동의부대 개원식

※ 출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2004)

통제를 받고 한국군 지원단의 지휘(작전 통제 제외)를 받았다. 한국군 지원단장은 제1·제2진은 동의부대장이, 제3진부터는 다산부대장이 겸임하였다.

동의부대는 제11진이 철수하기 이전까지 약 25만여 명의 동맹군과 아프가니스탄 군인 및 현지 주민을 진료하였으며, 1일 평균 180여 명을 진료하였다. 다국적군에 대한 의료지원은 키르기스스탄 마나스에 있는 제376비행단이 위치하는 마나스 기지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에 근무하는 동맹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은 동의부대 제1진의 주 임무가 다국적군에 대한 의료지원이었다면 제2진 이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주로 하였다.

2) 다산부대(茶山部隊) 파병

2001년 10월 7일 미국, 영국 등 다국적군이 ‘항구적자유작전’을 개시하여 초기 대규모 군사작전을 승리로 이끈 후,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바그람기지 복구를 위한 부대가 필요하였다. 다산부대의 파병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다국적군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바그람기지 복구를 위해 2002년 8월 한국 정부에 공병부대의 추가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부의 공병부대 파병은 2002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후, 2003년 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¹⁵⁵⁾되었다. 다산부대는 2003년 2월 27일 파병되어 2007년 12월 철수 시까지 동맹군의

155) 제235회 제1차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2003. 1. 16.)

기지건설과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산부대는 2003년 2월 6일 특수전교육단에서 부대 창설식을 거행하였으며, 부대 명칭은 ‘제100건설공병대대’, 상징명칭은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인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본받기 위하여 ‘다산’으로 정하였다. 다산부대의 임무는 아프간 바그람기지 안의 건축, 시설보수, 전기·기계설비, 토목공사 지원과 필요할 때 대민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부대편성은 150명으로 2003년 2월 27일 제1진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총 9개 진이 6개월~8개월 단위¹⁵⁶⁾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진~제2진은 150명, 제3진은 147명, 제4진은 146명, 제5진~제8진은 147명, 제9진은 148명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⁵⁷⁾

다산부대의 임무 수행체계는 다국적군으로부터 아프간 연합합동부대 예하 미 제36공병여단장의 작전 통제를 받았으며, 한국군으로부터는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는 한국군 지원단장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동의부대장이 한국군 지원단장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제3진부터는 다산부대장이 한국군 지원단장의 임무를 겸임하였다.

다산부대는 파병된 5년여 동안 아프간 연합합동부대(CJTF: Combined Joint Task Forces)가 위치한 바그람기지 내 토목, 건축 등 400여 건의 공병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아프간 지방재건팀에 민사반이 참여하였다. 한국군 민사반은 제1진부터 제8진까지 지역 조사, 공사감독, 공사 관련 교육, 사업회의 등 총 1,327건의 민사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산부대는 전쟁 난민과 지역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까지 담당하면서 한국군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3) 오쉬노부대 파병

2007년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철수한 이후 2009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지방재건팀의 소요가 증가하자 각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2009년 10월 8일 한국 정부에도 아프가니스탄 지원 요청을 하자 한국 정부에서는 수차례의 현지 실사를 마치고 2009년 10월 민간주도의 지방재건팀 운용을 발표하였다.

오쉬노부대는 정부가 민간주도의 지방재건팀 운용을 발표한 이래, 창설 준비 기간을 거쳐 2010년 5월 11일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부대 명칭은 고유명칭으로 ‘아프간 재건지원단’, 상징명칭으로 ‘도와주는 친구, 동료’라는 뜻의 ‘오쉬노(Ashena)’로 명명되었다. 오쉬노부대의 임무는 아프간 파르완주에서 재건 활동을 하는 한국의 지방재건팀 호송·경호 활동과

156) 1진~6진은 6개월 단위, 7진~8진은 7개월, 9진은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1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133-135.

주둔지 경비,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 경비 등이었다. 오쉬노부대의 임무는 지방재건팀 요원을 보호하고 기지 방호를 통하여 지방재건팀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¹⁵⁸⁾

오쉬노부대의 제1진은 321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1년 4월 바그람기지 경비중대 창설을 계기로 335명으로 추가되었다가, 제3진은 350명으로 증가하였다. 오쉬노부대는 2010년 7월 1일 제1진이 임무를 수행한 이래 2014년 6월 25일 제8진이 철수 시까지 약 4년 동안 각진은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전투 장비로는 UH-60헬기 4대, 지뢰방호차량(MRAP: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10대, 무인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1식 4대, 81밀리 박격포 3문, K-6기관총 16정 등이었다. 헬기는 주로 지상 이동이 제한되는 구간의 지방재건팀 요원의 수송에 운용되었고, 지뢰방호차량은 재건지원 활동을 위하여 지상 이동 간 운용되었다.¹⁵⁹⁾

제2진부터 제5진까지는 별도로 건설된 오쉬노부대가 차리카기지를 주둔지로 운용하여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였지만, 제6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미군기지인 바그람기지에 주둔하게 됨에 따라 부대편성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 결과 제6진은 61명, 제7진과 8진은 67명으로 편성되었다.

오쉬노부대는 NATO 주도 다국적군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의 2단계 하급부대이고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를 담당하는 동부 지역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 합참으로부터는 다른 파병부대와 마찬가지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민간 주도의 한국 지방재건팀을 지원하였다.

오쉬노부대는 차리카기지 방호활동, 한국 지방재건팀 호송 및 경호 지원(지상 작전 333회, 공중작전 1,066회),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경계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민사활동은 다른 파병부대와는 달리 한국 지방재건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호송과 경호 임무를 위한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4) 아프가니스탄전쟁 파병부대 성과

베트남전쟁 이후 우리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 등 전 군이 아프가니스탄전쟁 파병에 참여하였다. 2001년 12월 18일 창설식과 동시에 출항한 해군의 해성부대, 3일 후인 21일부터 공중수송을 담당한 공군의 청마부대, 의료지원을 담당한 육군의 동의부대, 건설을 담당한 다산부대, 한국 지방재건팀 경호를 담당한 오쉬노부대 등 전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1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253.

1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258.

국제평화 활동이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군은 베트남전쟁 참전 이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실전경험 등 다양한 군사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¹⁶⁰⁾

아프가니스탄전쟁 파병 기간 중 아쉬운 점은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분당 샘물교회 소속 한국인 선교사 23명이 납치되어 한국군 파병 철수가 석방의 협상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군은 2007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파병부대를 철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테러집단의 요구 때문에 한국군이 파병부대를 철수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다. 이라크전쟁 파병

1) 서희·제마부대 파병

2002년 당시 미국 정부는 아프간전쟁을 수행 중이었으며 이라크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추가적인 병력, 군수물자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하였으므로 우방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전쟁을 개시하기 이전인 200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방국들에 전쟁지지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에도 2002년 11월과 2003년 3월 2차레나 전투군무지원 분야 파병, 전후복구, 인도적 지원 등을 요청해 왔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쟁이 시작되자 우리 정부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미국을 지지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고, 2003년 3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¹⁶¹⁾ 이후 국회에서 2003년 4월 2일 파병안이 가결¹⁶²⁾되었다.

서희부대 파병 서희부대의 이라크 파병은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체계적인 파병 전 교육을 진행할 여유 없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4월 2일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되자 4월 7일 현지협조단 3명, 4월 17일 제마부대원 10명을 포함한 선발대 20명을 쿠웨이트에 파병하여 현지의 작전환경과 임무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관계국과 협조하였다. 서희부대는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2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파병을 준비하여 전개하였다.¹⁶³⁾

1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351-370.

1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라크 파병 서희 부대증언록』(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p.9-10.

162) 제238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3. 4. 2.)

1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568-569.

서희부대는 2003년 4월 15일 창설식을 거행하고 부대의 고유명칭은 ‘제1100건설공병 지원단’이라 하였고 상징명칭은 고려 시대 서희 장군의 이름을 따서 ‘서희부대’로 명명하였다. 서희부대는 총 572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진부터 제2진까지 6개월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진은 379명으로 축소되어 편성되었으며, 2004년 2월 23일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인 자이툰부대가 창설되면서 서희부대 제2진은 2004년 4월에 자이툰부대의 직할대인 공병대대(서희부대 제3진이라고도 함)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자이툰 사단의 공병대대는 서희부대 제2진이 주둔하는 텔릴 기지에 와서 임무 인수를 하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4년 7월 19일 ‘신천지작전’을 전개하여 자이툰부대의 주둔 예정지인 아르빌로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서희부대의 임무는 이라크 기간산업 재건을 위한 토목·건축공사 지원과 필요한 시 미군과 동맹군의 기지건설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현지에서는 동맹군의 기지건설 지원과 이를 위한 건설장비와 현지 지역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였다.

서희부대 제1진은 2003년 5월 본대가 도착한 후 초기에는 이라크전쟁 지도부인 동맹군 지상구성군사령부(CFLCC: Coalition Forces Land Component Command)의 지휘통제하에 있으면서 예하 부대인 제1해병원정군의 통제를 받았으며, 본대가 모두 도착하고 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시점인 6월에는 동맹군 지상구성군사령부를 대체하는 CJTF-7이 창설되면서 그 예하 부대인 미 제265공병단의 작전 통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둔지 통합방호는 텔릴 기지에 주둔하면서 외곽경계 책임부대인 제332비행단(AEW: Air Expeditionary Wing)의 통제를 받았으며 전투근무 지원은 기지 내에 주둔하는 제171군수지원단(ASG: Area Support Group)의 지원을 받았다. 서희·제마부대가 동일지역에 주둔함에 따라 중복된 참모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군지원단을 편성하고 서희부대장이 한국군 지원단장을 겸하여 제마부대를 작전 통제하에 두었다. 그러나 서로 부대 임무가 다르고 파병 임무를 작전 통제하는 다국적군의 상급부대가 달라서 서희부대장이 한국군 지원단장으로서 실질적인 통제는 별로 없었다.

서희부대의 재건 활동은 주로 동맹군 기지건설 공사지원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시설을 복구하여 지역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동맹군 기지건설 공사 지원은 총 34건의 사업을 지원하였는데 텔릴 기지 영구기지화 추진계획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향후 미군의 장기 주둔을 위한 기지건설을 위해 텔릴 기지 근무지원단 및 미 제265공병단의 요청에 따라 미 제92공병대대 주둔지 설치 지원, 영내 도로보수, 시설물 보수, 배수로 정비, 부대방호 울타리 설치, 급부보강, 오수관로 교체, 기타 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 재건공사는 서희부대의 자체 경계하에 실시하기도 하였고 필요 시 동맹군 경계협조하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서희부대는 민사활동으로 사랑의 기술학교 운영, 태권도 교실, 한우리 동아리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한우리 동아리 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을 위하여 서희부대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2003년 12월부터 농아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한 구호물자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¹⁶⁴⁾

제마부대 파병 제마부대는 서희부대와 동시에 파병되었으며 파병을 준비하는 장소와 인원만 달랐을 뿐 선발대, 본대 등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이동하였다. 주둔지도 나 시리아 텔릴 기지에 서희부대와 함께 같은 울타리 내에서 생활하였다. 제마부대는 2003년 4월 17일 창설식을 거행하고 부대 고유명칭은 ‘제320의료지원단’으로 상징명칭은 조선 후기 사상의학자인 이제마 선생의 이름을 따서 ‘제마부대’로 하였다.



〈사진 10-6〉 제마부대 1진 파병식

※ 출처: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2004)

제마부대의 편성은 제1진이 100명, 제2진은 85명으로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며 각 진은 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 2월 23일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인 자이툰부대가 창설되면서 제마부대 제2진은 2004년 4월 자이툰부대의 직할대인 의무대대(제마부대 3진 이라고도 함)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자이툰사단의 의무대대는 제마부대 제2진이 주둔하는 텔릴 기지에 와서 임무 인수하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4년 7월 19일 ‘신천지작전’을 전개하여 자이툰부대 주둔지 예정지인 아르빌

로 이동하였다.

제마부대의 임무는 동맹군의 의료지원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의료지원이었다. 제마부대는 최초에는 미 제1해병원정군(MEF: Marine Expeditionary Force) 예하 제1전투근무지원단(FSSG: Force Service Support Group)의 전술 통제를 받다가 2003년 6월 14일 이후로는 CJTF-7가 전술 통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임무 수행은 미군의 통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마부대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미군의 통제에 있기 보다는 미국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¹⁶⁵⁾

제마부대는 2003년 7월 11일 제마병원을 개원하여 이라크 주민, 동맹군과 서희·제마부

16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 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 93-102.

1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174.

대원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였다. 그 후 2004년 8월 17일 자이툰부대의 의무대대로 임무가 전환되기까지 2만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이라크 주민 환자가 70%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이라크 대민 의료지원과 동맹군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LEVEL II(+)급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운용하였다. 기간 중 동맹군 의무부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순회 진료, 임시진료소 운영 등 다양한 의무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자이툰부대 파병

한국군 서희·제마부대 제1진이 이라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라크 나시리야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인 2003년 9월, 미국은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한 사단급 규모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003년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3차례의 현지 조사 활동과 3차에 걸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03년 12월 17일 추가 파병안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추가 파병안은 2004년 2월 13일 국회의 동의¹⁶⁶⁾를 거쳐 베트남전쟁 파병 이후 가장 큰 규모인 사단급 부대를 파병하게 되었다. 베트남전쟁과는 달리 이라크전쟁 파병은 순수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 의해 육·해·공군 합동군으로 편성된 최초의 해외파병이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위해서 군수지원 준비 기간을 국내준비 30일, 해외수송 45일을 고려하여 파병 지원 소요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라크 현지에 군수지원 조사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창설기획단을 편성하여 운용하였으나 파병지역 선정이 지연되면서 선발된 병사 중에서 파병이 종료되는 시기 이전에 전역해야 하는 병사가 발생하여 전역을 연장하거나 파병을 희망하지 않게 되어 교체해야 했으며, 파병교육 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교육받은 내용을 반복 숙달하기도 하였다.¹⁶⁷⁾

자이툰부대는 2003년 2월 23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거행하였고, 부대 고유명칭은 파병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며 파병국에 대한 지원 임무를 부각하고 전투부대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으로 정하였다. 상징명칭은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도록 ‘자이툰(Zaytun)’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의미는 ‘평화를 사랑하는 올리브’였다.

166) 제245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4. 2. 13.)

1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 229-234.



〈사진 10-7〉 자이툰부대 창설식

※ 출처: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자이툰부대의 임무는 책임 지역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활동 지원과 협조, 이라크 치안전력의 질서유지 지원과 지도, 적대세력 공격 시 방어적 조치, 유엔 이라크지원 임무단(UNAMI: United Nation Assistance Mission for Iraq)과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 경계지원 등이었다.¹⁶⁸⁾

부대편성은 여단급으로 2개의 민사여단과 군수지원단이 편성되었고, 대대급으로 통신·공병·의무대대가, 중대급으로 해병·화학중대가 편성되었다. 2004년 최초 전개 당시에는 3,655명으로 편성되었으나 2005년 1월 24일 부대개편으로 3,122명으로 감축되었다. 2006년에는 국방부의 ‘자이툰부대 부대 규모 조정 및 교대계획’에 의거 인원이 다시 2,112명으로 조정되었다. 2007년 5월에는 국방부의 ‘자이툰부대 부대 병력 감축 지시’에 의거 병력은 1,091명으로 감축되었다. 이후 2007년 9월 6일 ‘이라크 파병부대 2차 감축 지시’에 따라 인원은 524명으로 감축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자이툰부대는 2004년 8월 3일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공항으로 출국함으로써 파병이 시작되었는데 파병 제대는 3개 제대로 구분하여 이동하였다. 각 제대는 이동 후에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버지니아에서 차후 이동을 준비하며 기다렸다. 이후 자이툰부대의 본대 1·2제대는 쿠웨이트 대기지역에서 이라크의 아르빌까지 부대를 전개하는 ‘파발마작전’을 9월 3일부터 20일까지 전개하였는데 지상 이동과 공중이동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지상 이동은 3개 제대로 편성하여 캠프 버지니아에서 아르빌까지 제대별 3박 4일간 수행되었다. 장갑차와 차량 394대를 포함한 병력 1,175명이 1,115km를 이동하였는데 이동할 때에는 동맹군인 미군과 영국군이 경계와 엄호를 제공하였다. 공중이동은 본대 인원 974명을 쿠웨이트의 알리 압 살렘 공항에서 미군 수송기인 C-130 23대를 이용하여 아르빌로 이동하였다. 작전 기간 중 50도가 넘는 불볕더위와 사막의 모래폭풍, 끊임없는 테러 위협 등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베트남전쟁 이후 최장 거리와 최대 규모의 지상 이동작전을 단 한 건의 전투력 손실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 207-212.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MNF-I: Multi-National Forces-Iraq) 예하 다국적 군단의 예하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이라크 아르빌 일대를 책임 지역으로 하여 독자적인 임무 수행을 하였다. 한국 합참의 지휘 감독하에 동맹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였고,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국방부의 지침 아래에 임무를 수행하였다. 자이툰부대는 아르빌 지역을 책임 지역으로 할당받아 MNF-I 및 MNC-I(Multi-National Corps-Iraq)의 예하 부대로 편성되었다. MNC-I은 이라크 전구를 총 6개 권역으로 구분, 27개 동맹군 전투력을 작전 통제하여 6개 사단급 주요부대에 각 권역을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자이툰 사단은 북동부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MND-NE 권역을 담당하였다.

자이툰부대는 주둔지 경계작전을 비롯하여 아르빌 공항에 한국군 항공기를 운항할 때 예상되는 적대세력의 휴대용 유도무기와 소화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공항지역 경계제공 작전인 ‘은하수작전’, 영외 호송·경호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경계지원은 적대세력 위협으로부터 한국대사관의 안전과 외교활동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라크 치안전력(ISF: Iraq Security Forces)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원단과 경찰지원단을 편성하여 이라크 치안전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민사 분야의 현지 주요활동으로 ‘그린 엔젤작전’, 의료지원, 취약계층과 자매결연단체 지원, 쿠르드어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그린 엔젤작전은 파병 초기부터 제 기능을 통합 편성한 다기능 대민지원팀을 편성하여 책임 지역 내에 복지혜택이 제한되는 소규모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의료와 정비지원 등을 전개하였다. 사회경제개발 지원사업으로 재건 지원사업, 기술교육대 운영, 새마을 운동 전개, 자이툰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도 친한화활동으로 한·쿠르드 우정의 날 행사, 태권도 교실, 스포츠 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에 대한 홍보와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3) 다이만부대 파병

다이만부대(제58항공수송단)는 2003년 9월 4일 미국이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을 때 한국 합참은 자이툰부대와 함께 자이툰부대의 인원과 물자수송, 다국적군 항공수송 지원 등을 위해 2003년 12월에 다이만부대의 파병을 준비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2월 13일 추가 파병동의안¹⁶⁹⁾에는 다이만부대 파병 내용이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4년 8월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와 함께 파병되지 않았다.

2004년 8월 9일 국방부는 이라크 공군 항공수송단 파병 기본지침을 하달하였으며,

169) 제245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4. 2. 13.)

2004년 9월 7일 미국 합참으로부터 전개 요청서를 접수하고 9월 14일 수용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은 자이툰부대 파병의 연장선에서 보고 국회 본회의의 파병동의 절차는 별도로 받지 않고 다이만부대를 파병하였다.

공군 제58항공수송단인 다이만부대는 2003년 9월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청했을 때 합참에서 파병부대를 검토하면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2004년 2월 13일 추가 파병동의안 제출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군은 2004년 전반기 C-130 수송기를 개조하는 등 파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7월 31일이 되어서야 국방부, 합참에서 파병을 결정하였다. 다이만부대는 8월 31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창설식을 거행하였으며, 부대의 상징명칭은 현지어로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의미를 지닌 ‘다이만(Daiman)’으로 하였다.

다이만부대의 임무는 한국군 병력과 물자수송, 환자수송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운송, 합참 지시에 의거 다국적군 항공수송 지원 등이었다. 즉 다이만부대의 임무는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내 원활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 및 장비의 항공수송 지원 임무와 함께 동맹군에 대해 항공수송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부대편성은 창설 당시에는 4대의 C-130 수송기와 153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파병 기간 중 4차례의 편제 조정으로 인원이 변경되었다. 1차 편제 조정은 2005년 1월 7일 13명이 증가한 166명, 2차 편제 조정으로 9명이 추가된 175명, 3차 편제 조정 시에는 10명이 감축된 165명, 4차 편제 조정 시에는 30명이 감축되어 135명이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⁷⁰⁾

임무수행 체계는 합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툰부대로부터 작전 통제를, 카타르 주재 연합항공작전본부(CAOC: Combined Air Operation Center) 비행 중 임무통제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력운영은 1일 최대 2대 이하, 주간운영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이만부대는 파병 초기에는 C-130 4대를 운용하였고 2007년 1월부터는 이라크 자이툰부대 규모 조정과 교대계획에 따라 4대에서 3대로 전력을 감축하여 운용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제58항공수송단 편제 조정과 파병계획에 의거 최종적으로 2대를 운용하였다.

다이만부대는 2004년 10월부터 임무를 개시하여 2008년 12월 26일 파병 종료 시까지 4년 2개월 동안 6,137시간을 비행하여 베트남전쟁 이후 최장 시간 비행기록을 수립하였다. 자이툰부대와 다국적 동맹군 인원 43,905명과 물자 4,572t을 공수하였다. 다이만부대는 다국적군을 포함한 동아리 운영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의 문화와 한국군을 알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어 학당, 태권도 동아리 활동은 다국적군으로부터 큰 호

1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 428-430.

응을 얻었으며, 한국계 미군 초청행사 등은 다국적군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어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이라크전쟁 파병의 성과

이라크전쟁 당시 한국 정부는 신속히 미국 주도 동맹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기 이전인 4월 17일 서희·제마부대의 선발대가, 4월 30 일에는 본대 제1제대가 이미 이라크 현지로 출발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사행이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우선 고려하여 신속히 한국군을 파병하여 적극적으로 동맹군을 지원하였다.

주요 파병 성과로 첫째, 한국군의 파병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둘째, 창군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의 물자와 장비로 파병부대를 편성한 자이툰사단은 베트남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부대였다.¹⁷¹⁾ 또한, 이라크 현지까지의 부대 전개로 지구의 반 바퀴에 달하는 최장 거리 부대 전개 경험을 쌓았다. 셋째, 새로운 민사작전 모델 창출로 한국군의 위상을 높였다.¹⁷²⁾ 자이툰부대는 현지에 전개한 이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민사작전을 시행하여 이라크 국민을 감동하게 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친구가 됨으로써 이라크 전구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사작전을 시행하는 동맹국으로 칭송받았다. 다국적군 사령관들도 자이툰부대가 수행 중인 민사작전을 모델로 제시하는 ‘자이툰 따라 하기(Zaytun like Operation)’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이툰부대의 기술교육학교, 자이툰병원, 그린 엔젤 작전, 문맹자 교실 등 4개 사업은 다국적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라. 대(對)해적작전 파병

1) 대(對)해적작전 파병 배경

아덴만을 끼고 있는 소말리아 해역은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2009년 청해부대 파병 당시 한국 연간 해운물동량의 26%나 되는 500여 척

171) 이라크평화·재건사단, 『이라크파병 성과 교훈집』(서울: 이라크평화재건·사단, 2008), pp.527-528.

1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p. 485-486.

의 상선이 통과하는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해역이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소말리아 국민의 해적 행위로 인해 이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36호, 1838호, 1848호, 1851호를 통해 영해와 영토를 포함한 소말리아 내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해적퇴치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덴만에서의 해적 활동의 증가와 국제사회의 대해적작전 동참 추세, 과거 한국 선박의 피랍사례 등이 고려되어 국내적으로도 소말리아 해역에 전투함을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2009년 3월 2일 국회에서 「국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안」이 가결¹⁷³⁾되어, 3월 3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투함 파병부대인 청해부대가 창설되었다. 또한, 청해부대의 성공적이고도 적극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연합해군사령부에서 한국 합참의장에게 대해적작전부대인 CTF-151의 지휘를 요청하여 2010년 4월부터 CTF-151에 지휘부를 4개월씩 4차례 파병하였다.

2) 청해부대의 파병과 대(對)해적작전

유엔은 2008년 10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38호를 통해 해적퇴치를 위한 군함과 항공기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해적퇴치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2008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현지에서의 테러 위협, 치안 상황, 항만 시설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2009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와 지부터 CJTF-HOA를 방문하여 현지 협조업무를 수행하였다. 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 날인 2009년 3월 3일 청해부대는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청해부대의 고유명칭은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이며 상징명칭은 ‘청해부대’로 하였다. 청해부대라는 이름은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에서 맹활약한 해상왕 장보고의 본영지인 ‘청해진’에서 났으며, 이는 해적을 퇴치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청해부대의 임무는 소말리아 해역 한국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이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말리아 해역 선박호송작전을 수행하고, 국제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연합해군사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며, 유사시 이 일대 재외 한국인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청해부대는 DDH-II급 1척, 링스헬기 1대 등 약 300명으로 편성되었다. 제1진의 경우

173) 제281회 제1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9. 3. 2.)

총인원 298명으로 편성되었고, 제2진까지 경계는 편성되지 않았다. 제3진의 경우에는 해병으로 구성된 경계부대 8명을 추가하여 306명으로 편성하였다. 4진부터는 수 명 정도의 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조직 구조 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300명 수준으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청해부대는 제1진부터 현재까지 6개월 단위로 부대 교대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임무 수행은 한국 합참의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작전을 수행하였으나, 연합해군 사령관이 주관하는 해양안보작전을 할 때는 연합해군사령부 예하 CTF-151의 전술 통제하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군본부로부터는 군수, 예산, 인사행정 등의 지원을 받았다.

[표 10-13] 청해부대의 주요활동

선박호송		안전항해 지원		해양안보작전	해적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612회(1,827일)	21회/31척
499척	1,087척	15,822척	2,922척		
안전항해 지원					
아덴만 여명작전(2011. 1.)		선장과 선원 전원(21명)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2011. 3.)		우리 국민 37명 리비아에서 몰타, 그리스로 철수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2014. 8.)		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을 리비아에서 몰타로 철수			
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2015. 4.)		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을 예멘에서 오만으로 철수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2018. 4.)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가나테마항으로 호송			

※ 출처 :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56.

청해부대는 호송작전, 해양안보작전, 재외 한국인 보호 활동을 하였다. 특히 청해부대 제6진에서의 ‘아덴만 여명작전’이나 ‘리비아 우리 국민 철수 작전’은 한국군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사례였다. 청해부대는 작전 임무뿐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항지에 들 때마다 기항지 해당 국가의 주요 군 인사들을 예방하여 군사교류를 증진하거나 상호 합정 견학과 축구시합 등 친선활동을 펼치는 등 군사외교 사절로서 역할도 충실하게 하였다. 청해부대가 제1진부터 제14진까지(2014. 2. 10. 임무 교대) 방문한 국가는 15개국 22개 항구이다. 또한, 기항하거나 임무 수행 간 교류한 국가는 31개국에 이른다.

2010년 4월 21일 이범립 준장이 한국 해군 최초로 대해적작전을 지휘하는 연합기동부대(CTF-151)의 사령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이었다. CTF-151은 미국 중부사령부 예하인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편조부대이며 지휘부만 상시 존재하며 운용전력은 연합해군사령부에 소속된 회원국들의 전력을 지원받아 운용하고 있다. 지



〈사진 10-8〉 청해부대 해적퇴치 연합훈련

※ 출처: 『국방일보』(2017. 12. 5.)

휘부도 초기에는 미군에 의해 지휘가 이루어지다가, 2010년 1월부터는 3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다국적군 중에서 일부 지휘능력이 있는 국가만 순환하면서 지휘를 맡게 되었다. 한국 해군도 능력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2017년 전반기까지 4차례나 지휘를 맡게 되었다.

한국 해군이 CTF-151의 사령관으로 지휘를 맡게 되면 대한민국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며, 연합해군 사령관으로부터 전

술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연합해군사령부에 대해적작전을 위해 가입된 국가는 총 31개국이며 CTF-151의 실질적인 직접지원전력은 4개국에서 6개국 정도이며 수상함은 평균 약 6척에서 10척 정도였다. CTF-151는 대해적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상황 발생 시 즉각 작전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대해적작전과 어느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하는 집중작전을 수행하였다.

청해부대의 파병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전투함을 파병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세계 속에서 한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해적작전 전담부대인 CTF-151을 지휘함으로써 대한민국 창설 사상 처음으로 연합군을 지휘한 쾌거였으며 한국 해군의 능력을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1월에는 청해부대 제6진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같은 해 2월 15일 리비아 내 소요사태로 한국 교민이 위협에 처하자 리비아 내 한국 교민을 안전한 곳으로 철수시키는 등 해외에서 한국 교민 보호 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3. 개인 단위 파병

다국적군 개인 단위 파병 활동은 개인 자격으로 다국적군 사령부의 협조단(반), 참모장교 등으로 활동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파견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에도 미국 중부사령부에 2명,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에 4명, 소말리아 해역 CTF-151 지휘부에 1명, 지부티에 있는 CJTF-HOA에 2명, 독일에 있는 미 아프리카 사

령부에 1명 등 10명의 장교가 참모장교나 협조 장교로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0-14] 한국군의 개인 단위 다국적군 파병 현황(2017년 전반기 현재)

구분	파병 기간	파병국	부대 및 역할	연인원(명)
아프간 전쟁	2001. 11.~현재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50
	2002. 3.~2010. 6.	아프간	CJTF 협조반	27
	2002. 3.~2007. 1.	아프간	CFC-A 참모부	6
	2008. 4.~2010. 7.	아프간	한국의료직업훈련팀	20
	2009. 9.~2013. 8.	아프간	NTM-A 참모부	16
	2010. 4.~2011. 3.	아프간	기지건설 지원	1
이라크 전쟁	2003. 4.~2008. 12.	이라크	CFLCC/CJTF-7/MNF-I 협조단	49
	2003. 8.~2008. 12.	이라크	CJTF-7 및 MF/C-1 참모부	82
	2005. 12.~2008. 12.	이라크	RRT	4
대테러 작전	2003. 3.~2012. 12.	지부티	CJCT-HOA 참모부	15
	2016. 3.~현재	독일	미 아프리카사 협조장교	1
대해적 작전	2008. 1.~현재	바레인	연합해군사 참모부	32
	2008. 12.~현재	지부티	CJTF-HOA 협조장교	30
	2011. 3.~현재	소말리아 해역	CTF-151	45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p.423.;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291.

제 4 절 국 방 협 력 활 동

국방협력 활동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이 유엔이나 유엔의 위임을 받은 다국적군의 요청으로 파병한 것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파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재난

구호 등의 활동¹⁷⁴⁾이며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영역이 확장된 형태이다. 국방협력 활동을 위한 파병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개 지역에서 연인원 2,286명이 참가하였다. 현재에도 아크부대에서 149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표 10-15]와 같이 다양한 국방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아크부대와 아라우부대 파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0-15] 국군의 국방협력 활동 현황(2017년 전반기 현재)

구분		기간	파병지역, 부대(임무단)		연인원(명)
부대 단위	군사훈련 협력	2011. 1.~현재	UAE, 아크부대		1,381
	태풍 피해 복구	2012. 12.~2014. 12.	필리핀, 아라우부대		829
	해상탐색	2014. 3.~2014. 5.	말레이 해역	해상탐색 단대	39
		2014. 12.~2015. 1.	인니 해역		21
에볼라 대응		2013. 12.~2014. 3.	시에라리온, 긴급구호대		16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p.442.;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p.156-158.;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137-140.

1. 아크부대 파병

아크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주 배경에는 “한국군이 UAE에 특수전부대를 파견하여 군사훈련을 협력하자”라고 2010년 8월 UAE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¹⁷⁵⁾를 거쳐 2011년 1월에 제1진 13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알아인 지역에 파견하였다. 제5진부터는 15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6년 9월 28일 UAE 총참모부에서 우리 국방부로 아크부대 이전을 요청하여 스웨이하(Sweihan)으로 이전하였으며, 부대시설 공사와 이전 비용 320억 원을 UAE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아크부대의 임무는 첫째, UAE군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지원, 둘째, UAE군 특수

174) 국방부 훈령 제2125호(2018. 1. 25. 일부개정), 「국군의 해외 파병업무 훈령」

175) 제294회 제1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0. 12. 8.)

전부대와의 연합훈련과 연습, 셋째, 유사시 UAE 내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부대 명칭은 ‘UAE군사훈련협력단’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고, 상징명칭은 ‘아크부대’라 하였다.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로 아크부대와 UAE특수전 부대 간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부대편성은 최초 130명으로 편성하였다가 제2진부터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지켜본 UAE 측의 요청에 따라 UDT/SEAL 병력 17명을 추가하여 14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제3진부터는 통신지원대 3명을 추가하여 150명으로 편성하였다. 아크부대는 한국으로부터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특수전사령부로부터는 교육 훈련 지도 감독을 받았다. UAE군과는 상호 협조·지원체제를 유지하였다.

[표 10-16] 아크부대의 주요활동

구분	내용
UAE 군 능력 향상	• UAE 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 훈련체계 개선
우리 군의 능력 향상	• UAE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특수작전 능력 향상 • 약조전하(50℃ 이상 고온, 사막) 생존능력 강화 훈련 시행 • 장거리 사격훈련과 고공낙하 훈련 시행
국방교류 확대	• 우리 군 주요 훈련 시 UAE군 참관, 양국 연합훈련 시행 • 각 군 교육과정에 UAE 장교 수탁교육과 한국군 위탁 교육 시행 • UAE군·가족의 국내 민간병원 진료 등 의료협력 • 방산 수출 협력 등 중동 지역의 국방외교 허브 구축

※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p.158.

아크부대의 주요활동은 UAE군의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공·야간 강하훈련은 국내에서 6~7년이 소요되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실시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특수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육·해·공군의 대표단이 상호방문하여 양국 사이의 군사적 신뢰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아라우부대 파병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의 많은 지역이 폐허로 변하고 수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¹⁷⁶⁾를 거쳐 2013년 12월 공병대와 의무대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합동지원단(아라우부대)’을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냐 다국적군이 아닌 재해 당사국 요청으로 파견된 최초의 파병부대였다.¹⁷⁷⁾ 태풍 피해가 가장 심각한 타클로반 일대에서 피해지역 정리와 공공시설 복구지원, 의료지원과 방역 활동, 중장비 직업학교 운영, 친한화 활동 등을 하였다.

[표 10-17] 아라우부대의 주요활동

구분	내용
공공시설복구	• 학교 28개소, 관공서 13개소, 병원/사회복지시설 6개소, 참전용사 주택 4개소 • 잔해물 제거 19,600t, 전도된 전신주 254개 처리, 붕괴 위험 시설 철거 등
의료지원	• 3만여 명(외과, 내과, 신경외과, 치과 등) 진료, 방역 500여 회
직업학교 운영	• 8개 기수 379명 수료(굴착기, 도자, 로더, 지게차, 크레인 등)
친한화 활동	• 무료급식 46,000여 명 • 한국어 교실(초교, 고교, 성인반) 운영 등

※ 출처: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139.

아라우부대는 2013년 12월 9일 창설식을 거행하였으며, 부대 명칭은 ‘필리핀 합동지원단’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했으며, 상징명칭은 ‘아라우부대’로 명명하였다. 아라우(Araw)는 ‘희망의 빛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현지어로 ‘태양’을 뜻하는 말이었다. 부대편성은 참모부는 육·해·공군 등 합동으로 편성하였고 경비대는 해병대 인원으로만 편성하였다. 부대의 임무는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정리 및 공공시설 위주 복구지

176) 제320회 제16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3. 12. 5.)

177) 국방대학교 PKO 센터, 『아라우부대 2진 파병성과·교훈』(서울: 국방대학교, 2015), pp.1-8.

원, 의료지원과 방역 활동, 친한화 활동 등 3가지 명시된 임무를 부여받았다. 아라우부대는 파병 기간에는 합참으로부터 부대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각 군 본부로부터는 전투근무 지원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지에서 주요활동은 2014년 1월부터 실시했던 피해복구와 의료진료 활동을 ‘아라우 엔젤작전’, 3월부터 아라우부대의 작전지원대 위주로 시행한 작전을 ‘카라바오작전’이라 명명하였다. 카라바오작전은 작전지원대의 통신, 수송, 정비 기능을 인도주의적 지원에 잘 활용



〈사진 10-9〉 아라우부대 수송선 복귀

※ 출처: 『국방일보』 국방포토 DB(2014)

한 작전이었다. 그 외에도 친한화 활동의 목적으로 협조반이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급식이나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라우 직업학교도 열어 지역주민들이 공병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¹⁷⁸⁾

재해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최초 필리핀으로 파병된 아라우부대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양국 간 지원하기로 한 1년 동안의 파병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철수하였다.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주민에 대한 민심획득과 높은 요구 수준을 맞추어가면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준 것에 있었다. 아라우부대는 ‘Help’가 아닌 ‘Repay’의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한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닌 6·25전쟁 당시 필리핀군이 한국에 파병을 와서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필리핀군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아라우부대는 복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178) 국방대학교 PKO 센터, 『아라우부대 2진 파병성과·교훈』(서울: 국방대학교, 2015), pp.314-315.

맺 음 말

맺 음 말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역사 속에서 국방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기 위해 『국방 100년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제 I 부에서 제 IV 부까지 주제별 변천의 역사를 요약하고,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발전방향에 관해 정리하였다.

제 I 부

창군과 이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비폭력의 3·1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 이 3·1운동을 직접 계승하여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임시정부는 9년간 일본제국에 의해 단절되었던 민족 정권의 정통성을 잇는 망명 임시정부였으며, 종래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따라 민주공화제를 지향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일제가 패망한 최후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광복군을 창설하여 국내 진입을 준비한 정부였다.

임시정부 초기에는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오늘날의 국방부)가 설치되었고, 육·해군을 총괄할 ‘군무총장’이 임명되었으며, 군사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운용할 군대와 장비가 준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군대를 창설하고 장비를 획득하기 위한 정부 재정이 빈약했고, 모병과 교육훈련 여건이 불비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민들의 ‘독립전쟁 노선’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지자, 임시정부는 본격적으로 한국광복군 창설을 추진하였다.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한국광복군 창설계획’을 중국 정부에 보냈으나 중국 측은 광복군의 중국군사위원회 예속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광복군 창설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임시정부는 미주지역 교포들의 지원을 받아 단독으로 광복군 창설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식’을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重慶)에서 거행하였다. 광복군은 「한국광복군사령부 조직조례」와 「대한민국 임시통수부 관제」를 제정하여 새로운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는데, 총사령부를 임시정부 주석의 직할로 두어 임시정부의 국군임을 명백히 하였다.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듯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광복군의 창설일을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일’로 보지 않고 이보다 앞선 대한제국군이 해

산한 날인 1907년 8월 1일이라고 선언하였다. 그것은 광복군이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군을 계승했고, 의병 및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사의 정통 국군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 28.)의 총강과 「한국광복군 공약」 및 「한국광복군 서약문」을 보면, 광복군의 정신은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과 ‘자유독립 정신’이고, 광복군의 이념은 ‘자유독립 회복’, 즉 ‘자유독립국가 건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35년간의 일본제국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독립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한국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항복을 받고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이 정치·군사적 판단에 의해 설정한 38도선은 남북을 분단하는 선이 되고 말았다.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 of Allied Powers)의 명령을 받은 미 제24군단은 9월 10일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를 발족하고, 남한에 대한 군정을 실시했다. 주한미육군사령부의 「군정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어떤 외국의 지배도 없이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한국에 수립한다. 둘째, 이와 같이 수립된 한국정부는 한국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민주정부를 보장한다. 셋째, 한국인이 독립된 민주국가로 발전하여 나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과 충분한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돕는다.

미군정청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장차 국군 창설을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여 1945년 11월 ‘국방사령부(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Defense)’와 ‘군무부’를 설치하고 「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경찰예비대’(한국 측은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호칭)를 창설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증편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미군정청은 해안경비업무를 수행할 해방병단(해군의 모체)의 결성을 승인하였고, 그 후 조선경찰예비대와 해방병단은 각각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편)되었다.

3년간의 미군정의 통치가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군’도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춘 군대로 출범하였다. 미군정 아래서 창설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자주독립정신과 민주정신, 그리고 반공정신으로 일체화하면서 정규 국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에서 행한 최초의 시정연설에서 자유우방 여러 나라와의 공존공영의 유대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과의 돈독한 친선 유지를 역설했는데, 이는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 상황에 비추어,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이 없이는 정부 존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데서 연유하였다. 당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

한 공산집단은 소련군의 후원으로 북한 전역을 조직적으로 공산화하고, 군대를 창설하여 대규모의 무장력을 육성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도발 책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개편하여 국군이 출범하자 국군 창설의 방향을 “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천명하고 건국이념인 독립정신과 자주독립국가 재건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국군 창설 정신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훈령 제1호」를 통하여 국군을 ‘국방군(國防軍)’으로 정의하고, ‘진충보국(盡忠報國) 정신’과 ‘국민을 위한 군인 정신’을 강조하였으며, 정병배양(精兵培養)과 사상통일을 위한 반공정신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군정 아래에서 국군의 모체 부대가 창설되고, 국제적으로 이념대립이 첨예화되고 북한 공산정권의 적화통일 위협이 증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자주독립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가 ‘국군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방조직 변천 먼저 임시정부 시기를 군사조직의 변천을 요약 정리해 보면, 1919년 9월 업무를 개시한 통합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공포하여 군 통수체제와 정부 조직 및 제도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임시정부는 항일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으로大本營, 참모부, 군사참의회를 두었는데, 참모부는 ‘국방 및 용병에 관한 모든 계획’을 통솔하도록 하였고, 군사참의부는 임시대통령의 중요 군사 사무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무원의 군무부는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와 육·해 군인 및 군속을 통할하도록 하였고,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당시 육군 임시군제는 대한제국 군제와 유사했고, 국무총리, 군무총장, 군무차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한제국 군대 장교출신이었다. 그러나 군사기구나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정부 재정과 모병 여건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군대를 편성하지 못하다가 1940년 9월 중국의 임시수도였던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광복군은 병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먼저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하부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하향식 편성 방법으로 증편하고자 하였고, 징모분처를 두어 모병에 전력을 기울였다. 1944년 말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군 부대를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입대하는 한인 병사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초모활동도 활발해져 1945년 5월 경, 광복군은 비로소 3개 지대를 완편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조직 변천과정을 요약 정리해 보면, 미군정 시기에 미군정청은 남한 내 경비대책 업무를 담당할 ‘국방사령부’와 ‘군무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정부 수립 후 설치된 국방기구의 근거가 되었다. 군무국에는 육군부와 해군부를 두었

는데, 이 기구는 국군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다. 국방사령부는 정부 수립 후 국군 창설에 대비하여 「뱀부(Bamboo Plan)계획」에 따라 중대-대대-연대-여단 순으로 부대를 증편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 조직 구성과정을 거쳐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방부’가 설치되고, 대한민국 국군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12월 15일부로 통위부가 ‘국방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각각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으로 정식 편입 및 법제화되었다. 「국군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국방기구의 설치 및 조직 편성의 대강(大綱)을 정하고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군을 조직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방부 항공국과 육군항공사령부를 통합하여 공군이 창설됨에 따라 국방부 편제는 명실상부하게 육·해·공군의 3군 체제로 전환되었다.

6·25전쟁 초기 국방부분부는 전투부대의 증·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무, 군수관리, 정훈 등 전투부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구를 보강하면서 국방체제상의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병무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업무를 담당하던 제4국을 ‘병무국’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정보국’은 그 업무를 각 군으로 이관하였고, 육군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 소속으로 예속 변경하였다. 휴전 직후 육군은 증설된 부대들에 대한 지휘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2군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전·후방으로 2원화된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1967년 6월에는 베트남파병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정훈국에 ‘월남(베트남)과’를 신설하여 파병 관련 지원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8년 북한의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대남도발이 격화됨에 따라 이해 2월 합동참모본부에 ‘대간첩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7월에는 ‘예비군국’을 신설하여 예비군(1968. 4. 1. 창설)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기구를 개편하였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방기획관리 기능의 최신화가 요구되어 1979년에 ‘국방기획제도(PPBS)’를 훈령화하고 1980년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1983년부터는 국방기획제도를 보강하여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로 개정하여 1986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818계획(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 최종 연구안이 1990년 8월 국회에서 공포됨에 따라 10월 1일부로 국방조직은 ‘합동군제하의 통제형 합참의장제’로 전환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분부 조직개편은 국방조직의 문민화, 3군 간의 균형화, 그리고 인력의 전문·정예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합동군제 개념에 맞게 군령임무 수

행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편성이 대폭 보강된 최고 군령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창설되었다. 각 군 본부는 필수 정책 위주로 대폭 기능을 감축하여 전력기획참모부와 정보작전참모부로 통합 조정되었다. 그리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와 자주적 합동군사기획 및 통합군사력 운용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5년 조직 및 기능체계를 보완하였다.

국방부는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부응하면서 자주국방태세의 조기 실현과 미래지향적인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1995년 종전에 합참에서 수행하던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기능을 각 군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군 본부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통신 및 전산 기능을 통합하였다. 2006년 1월 ‘21세기 선진 정예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사업을 전담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방개혁 2020」의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 전담기구인 ‘국방개혁실’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였다.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후속조치의 하나인 국방조직 개편은 합동작전 수행여건 보장 및 현행작전 수행기능 강화,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따른 시험평가 기능의 합참으로의 전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1년 초 시행되었다. 2014년 합참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새롭게 부여되는 임무·기능 편성 보강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국방 100년의 역사에서 국방(군사)조직은 우리 군의 군정 및 군령 분야에서 군구조 개선과 기구 편성 및 병력의 확충, 제도 발전을 통해 국방(군사)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국방정책 변천 먼저 임시정부 시기 군사정책의 변천을 요약 정리해 보면,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파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임시정부는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독립청원외교 노선’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파리 강화회의는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그해 6월 「베르사이유조약」을 체결하자, 연해주와 만주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던 이동휘, 이동녕, 이시영 등은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대일 무력항쟁론을 주장하였다.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독립운동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임시정부 국무원은 ‘무장독립전쟁 노선’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삼았다.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 중 군사정책은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인 독립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개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개전 준비작

업으로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의용병을 모집해 훈련하고, 사관학교를 설립하며, 작탄대(炸彈隊)를 편성하고, 비행기대(飛行機隊)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가 충청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1940. 9. 17.)하고 독립전쟁을 본격화할 무렵인 1941년 12월 7일 일제가 미국의 주요 해군기지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생했다. 미·일 간의 전쟁은 임시정부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바였고, 예견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 요인들은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본이 중국, 미국 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연합국들과 함께 대일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독립전쟁전략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했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임시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교전단체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교활동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1941년 이후 광복군은 연합군인 인도 주둔 영국군과 미군 전략첩보국(OSS)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카이로 회담 선언문」(1943. 11. 27.)에서 미·영·중 3대국은 전후 한국의 자유독립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독립을 열망하는 100여 개 약소 민족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국의 자유독립 보장만이 연합국 문서로 약속을 받은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 국방정책의 변천은 시기별 정책과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해 본다. 먼저 시기별 국방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국방정책은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하고, 남북통일의 실현을 위한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 ‘연합국방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국방력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군의 장비·시설 등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반공정신 강화’를 기조로 정병배양과 사병 제1주의에 주력하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군의 군사지원을 받아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둘째, 6·25전쟁기에는 국방정책다운 정책을 정립하지 못한 채 북한의 남침을 당하게 되자,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대미·대유엔 외교활동에 주력하면서 전시 국민총력전체제를 갖추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당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로서,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고, 육·해·공군의 전력증강과 운영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였으며, 군수산업시설을 확충하였고,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방위군 및 여자의용군 창설, 학도군사훈련의 실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전부터 전후 한국의 안전보장 방안으로 미군의 계속 주둔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추구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 정부는 휴전을 전쟁의 종결

로 간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전쟁이 정지된 ‘정전’ 개념에 입각하여 안보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으며, 이 조약은 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국 안보의 근간이 되었다. 셋째,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 5·16군사정부는 국방정책의 목표를 ‘국토방위태세 및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 간접 침략 분쇄’에 두고, 국방체제 정비 및 군장비의 현대화 촉진, 집단안보체제 형성, 군·관·민 유대강화 등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국방시책을 펴 나갔다. 1963년 12월 출범한 제3공화국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대공방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국방정책의 목표를 두고,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에 의한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하며, 베트남파병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조국 근대화와 자립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국토건설 참여와 대민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넷째,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에는 ‘자주국방 강화’와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을 국방정책의 기조로 설정했다. 최초로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를 제정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였으며, 제1·제2·제3차 옹곡사업을 추진했고, 방위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 출범 전후(1980~1985)로 단행된 국방과학연구소 구조조정으로 사업단 축소, 연구인력 감축, 핵심사업 중단, 무기 해외도입 증가 등으로 연구개발정책이 일시 후퇴하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대 들어 탈냉전과 민족자존 및 민주화합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안보상황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및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중적 접근에 의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을 ‘국방정책 기본방향’으로 재설정하여 시행하였다. 다섯째,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김영삼 정부는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국방목표’를 2차로 개정하고 ‘미래지향적 국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방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후 역대 정부들도 우선 현실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미래의 불확실하고도 새로운 전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을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의 좌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 II 부

전력증강 추진 먼저 임시정부 시기 전력증강 추진의 변천을 요약 정리해 보면,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은 ‘개전 준비작업으로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의용병을 모집해 훈련하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작탄대(炸彈隊)를 편성하며, 비행기대(飛行機隊)를 설립하는 것이었고, 1~3만 명 내외의 군단을 편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군사기구 및 제도는 정비되어 있었으나 운용할 실질적인 군대와 장비를 보유하지 못했다. 당시 만주지역에는 약 40여 개의 무장독립운동단체가 분포되어 있었고, 독립군 부대를 결성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임원들을 서·북간도로 파견하여 이들 독립군 부대와 단체들의 통합과 임시정부 지방군구사령부 설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서간도 안동현에 본부를 둔 ‘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은 ‘서간도 군구 지방사령부’로, 북간도 왕청현에 본부를 둔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는 ‘북간도 군구 지방사령부’로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독립군 부대들의 무기는 러시아제 5연발총과 단발총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밖에도 미국제나 독일제, 일제 총까지 실로 다양하였다. 기관총과 속사포 등 중무기와 폭탄이라 부르던 수류탄도 보유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 노력은 1920년 6월과 10월에 벌어진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

1930년대 들어 임시정부는 위축된 독립전쟁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1931년 11월 특무공작대 ‘한인에국단(韓人愛國團)’을 결성하였다. 창설 당시 조직원은 약 80여 명이었고, 대표적인 의열활동은 이봉창의사의 일본 도쿄 일왕폭살 미수사건(1932. 1. 8.)과 윤봉길의사의 중국 상하이 일제천장절행사 폭살사건(1932. 4. 26.)이었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하고 3개 지대를 편성하기 위해 모병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1944년 말 이후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자 일본군 부대를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입대하는 한인 병사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초모활동도 활발해져 1945년 5월 경, 광복군은 비로소 3개 지대를 완편하게 되었다. 총사령부 창설 1년 만인 1941년 말에 광복군은 총 300여 명이었으며, 1945년 4월까지 광복군의 병력은 6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모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만주지역과 달리 인적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 점령지에서 모병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증강 추진을 요약 정리해 보면, 첫째, 국군 창설기(1945. 8.~1950. 6.) 미군정청의 국방사령부는 1946년 1월 15일 국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조선경찰예비대(일명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는데, 서울 태릉에서 1개 중대 규모 창설을 시작으로 증편하였으며,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전 조선경비대(남조선국방경비대의 개칭)는 5개 여단(총 15개 연대)과 항공부대로 구성되었고, 병력은 조선경비대 장교 1,430명, 사병 49,087명 등 총 5만 490명으로 증강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경비대는 부대만 편성되었을 뿐이고, 장비는 1947년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미제 M1 소총과 일제 99식 소총뿐이었다. 조선해안경비대는 1948년 1월 14일까지 LCI 6척, 소해정(JMS 및 YMS) 29척 및 유조선(YO-1) 1척 등 총 36척을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정부수립 직전 당시

7개 기지와 2개 정대를 보유하였고, 병력은 3,000명으로 증원되었다.

정부수립과 더불어 조선경비대는 2년 10개월 만에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고 대한민국 육군으로 재발족하게 되었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된 1949년 6월 말까지 8개 사단 22개 연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육군의 병력은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의 한국군에 대한 장비지원 기준은 65,000명 선을 고수하였으며, 그나마 원조 장비상태가 좋지 못해 상당한 장비 부족현상을 겪었다.

둘째, 6·25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 6.~1961. 5.) 육군은 1950년 7월 지연작전을 수행하면서 초기작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재편성과 증·창설을 거듭하며 부대 증편을 거듭한 결과 1950년 말까지 3개 군단 10개 사단으로 증편하였다.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시작되자 전후 자주국방을 목표로 「20개 사단 확장계획(안)」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정전 당시 육군은 3개 군단 18개 사단의 전투부대와 대대·단·창급 지원부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때 병력은 약 550,000명이었고, M36 전차, 155mm 곡사포, 4.2" 박격포 등 중장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해군은 1950년 8월 16일에는 제1정대를 모체로 제1함대를 창설하고 1951년 1월까지 그 외의 정대도 이에 통합함으로써 해상세력을 함대체제로 발전시켜, 정전 시까지 1개 함대를 주축으로 통제부, 경비부 그리고 창급 지원부대를 갖추게 되었으며, 병력은 14,863명으로 증가되었고, 함정은 PC(경비함)·AMS(소해정)·JMS(소해정) 등의 함대를 도입함으로써 50척의 전투용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병대도 증편을 거듭하여 정전 시에는 제1전투단(4개 보병대대, 1개 포병대대, 1개 전차중대로 편성), 연대규모의 도서부대, 해병막사, 그리고 해병교육단을 편제하게 되었으며, 총 병력은 22,174명으로 증가하였고, M36 전차, 105mm 곡사포 등의 중장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공군은 1951년부터 단독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미 공군으로부터 추가로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하였고, 1952년도에는 「공군 확장 3개년 계획(안)」을 수립 추진하여 정전 시 2개의 비행단과 통신·기상·시설·기지·특무부대 등 지원부대를 갖추었으며, 병력은 11,481명으로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F-51 80대를 포함하여 총 110대로 증강되었다. 이처럼 국군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후의 국방에 대비한 군비확장에 노력하였으며, 총 병력은 약 600,000명에 이르렀고, 장비는 근대적인 중장비와 전투용 함정 및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증강이 한미 양국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1958년에 이르러서는 국군의 병력규모를 720,000명 수준에서 630,000명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이때 국방부는 93,000여 명의 육군 병력을 감원했지만 공군은 3,000여 명을 증원하여 총 90,000명의 병력을 감축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군은 장비의 질적 현대화와 화력의 증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방체제 정립기(1961. 5.~1969. 12.)에는 1961년에 등장한 케네디 행정부가 군사원조보다 경제원조에 더 중점을 두는 외국원조 방침에 따라 미국의 대한 무상 군사원조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66년부터는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북한 무장공비의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갑자기 고조되자 미국은 한국에 추가 군원 1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 추가 군원으로 F-4D 팬텀 전폭기 17대를 도입함으로써 '마하 2'의 공군으로 발전하였고, 고속정, 해상초계항공기를 도입하고, 각 함정의 수중음향탐지기(레이더 소너)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대간첩작전 장비를 도입하였다. 「국군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전차의 질적 향상을 위해 M36 및 M4A3E8 전차를 M47 및 M48 전차와 장갑차로 점차 교체하고 부대구조를 조정함으로써 현대전에 적합한 부대로 개편하였다.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됨으로써 향토방위전력이 조직화되었다.

넷째, 자주국방 강화기(1970. 1.~1993. 2.)에는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 미국은 1969년부터 주베트남미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조건부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한국이 요구한 15억 9,600만 달러 규모의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이 확정되어 F-5 A/B 항공기를 포함한 각종 항공기, DD급 구축함을 포함한 각종 함정, 어네스트 존(HJ) 로켓 발사대와 8인치 자주포를 포함한 각종 화력장비 등이 도입되었다. 1973년 3월에는 주월한국군이 신형 편제장비를 가지고 철수함으로써 한국군 장비현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이 크게 변하고 북한과의 전력 격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되자, 정부는 자주국방을 최고 우위의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병행하여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국방8개년계획, 울곡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1974년 당시 미군의 군원 이관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던 「한국군 현대화계획(1971~1975)」을 바탕으로 수립된 「제1차 울곡사업(1974~1981)」에 이어 제2차 울곡사업(1982~1986), 제3차 울곡사업(1987~1992)을 수립, 추진하였다.

다섯째, 국방태세 발전기(1993. 2.~현재) 초기 국방부는 '자주국방만이 진정한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제로 삼아, 현실적인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의 구축은 물론,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미래의 전략환경에 대비하여 총체적인 안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발전'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이후 역대 정부의 전력증강 계획에 반영되어 전력증강사업 추진,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국방정보화 추진 형태로 지속 추진되었다.

2006년 4월 『국방정보화정책서』를 발간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정보환경 보장’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네트워크중심전(NCW) 개념이 반영되어 정보전 기술, 전자기펄스(EMP), 고에너지레이저 등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독자적인 국방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2006년 국방부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여 모든 획득 업무를 담당케 하였고, 방위사업청은 시장 중심의 방위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1년 전력증강의 우선 순위를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2008년에는 지난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개방 및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우리 군은 2018년 현재 재래식 군사력 건설 면에서 대북 방위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주변국 억제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보복적 억제전력(조기경보, 타격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발전단계 면에서 이미 선진권에 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세계 수준에도 손색 없는 첨단정밀무기체계를 적극 개발하고 있고, 방위산업은 신경제성장 동력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방정보화 면에서도 장기 계획대로 추진되어 현재는 제3단계 차세대 선진체계 구축단계에 와 있으며, 지능화된 선진 정보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이러한 전력증강 면에서의 성과들은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을 추구하는 우리 군의 국방정책의 추진과 통합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 우리 군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지시하면서였다. 국방부는 1970년 12월 통합군체제로의 개편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각 군 간의 이해 상충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정부 및 국방정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818계획)」(1988. 8. 18. 보고)에 의해서였다. 국방부는 자주적 국방태세의 확립을 위해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독자적 군사전략 정립과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군구조 개선 및 공세적 군사력 건설 등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합동군제-통제형 합참의장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국방조직의 골격이 되는 군구조와 군사지휘체제를 새로운 전략환경과 한국적 여건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818계획」은 군구조 분야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전략과 군사력 분야와의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하였으며, 군구조 분야에서도 군정과 군령을 이원화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가 제기되기도 했다.

「818계획」의 미흡한 부분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으나 현재까지 ‘합동군제-통제형 합참의장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개혁을 통해서 군 인사 및 사조직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의혹의 소지가 많았던 울곡 및 군수 조달제도를 개선하여 군 기강을 쇄신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의 근간을 정립했고, 군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김대중 정부 들어 국방부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국방예산 감축과 국방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개혁을 제도화했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방정보화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을 획득실에서 분리하여 차관 직속 기구로 개편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에는 『국방기본정책서』를 공식문서화하여 군구조, 국방관리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국방개혁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였으며, 한미동맹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안보상황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전력체계를 확보하여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정보과학군을 건설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인력운용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체계, 국방정보화 등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질적으로 정예화하여 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2005년 68만여 명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비하며, 합참은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의 중심기관으로서 육·해·공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2006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다양한 군사도발과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요소를 추가로 반영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수립하여 2030년을 목표로 대북억제전력을 적극적으로 구비하고, 북한의 위협과 작전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부대구조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이후 북핵·WMD 등 비대칭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목표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2022년 이후 병역자원의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경제 여건 고려시 국방 분야로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해 국민들은 선진사회에 부합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정치 관여, 방산 비리 등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된 상황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발달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로의 재정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추진에 필수요소인 전력증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국방개혁 2.0」은 국방운영의 효율화 및 인력운영체제의 혁신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하였다.

1990년대 들어 노태우 정부가 전환기 안보상황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및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으로 재설정 한 이래, 국방개혁은 정부 및 국방정책 차원에서 지속 수정·보완되며 발전하였고, 미래의 국방 대비태세 및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핵심정책이 되어 왔다.

제 Ⅲ 부

전쟁 수행 근현대 시기 동안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찾기 위한 독립전쟁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6·25전쟁, 그리고 자유우방을 위해 국군을 해외에 8년 6월간 파병하였던 베트남 전쟁 등을 경험하였다.

임시정부기의 대일 독립전쟁은 군대의 해산(1907)과 국권의 상실(1910) 이후 1919년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3·1운동의 의지를 반영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 9.)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에 의하여 강탈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와 기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국내, 중국, 그리고 해외에서 헌신하였다. 특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군을 비롯한 연합부대의 봉오동전투(1920. 4.), 청산리전투(1920. 10.)는 월등한 화력과 장비를 지닌 일본군에 맞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준 쾌거였다.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방향을 의열투쟁으로 전환하여 비밀결사인 한인애국단을 통해 특무공작을 수행하였다. 의열투쟁은 이봉창(1932. 1.), 윤봉길(1932. 4.)의 의거

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 의지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중국인의 항일의식을 촉발시키고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후 중국 뤼양(洛陽)의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와 난징군관학교 등에 한인애국단원이 입교하여 1936년까지 약 250명이 졸업하였다. 이들은 이후 한국광복군 창설의 기간요원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창설된 이후 공식 군대가 없었으나 군대편성이 본격화된 것은 중·일전쟁 이후부터였다. 임시정부는 1937년 7월 15일 군사위원회규정을 공포하고 ‘군사위원회’를 발족시킨 이후 1940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항전을 계속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광복군은 대한제국의 제도와 계급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복식제식을 갖추으로써 인사제도를 완비하였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 하자 임시정부는 즉시 대일선전포고를 단행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1941. 12. 10.)하였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광복군의 대일항전 수행은 영국군 및 미 전략첩보국(OSS)과 연합작전으로 구체화되었다. 광복군과 미군은 국내진입작전을 통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계획하였으나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광복군은 광복을 쟁취할 수 있는 주력군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오늘날 국군은 광복군의 맥을 이어받아 조국 통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세계 평화유지의 역군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04:00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3년 1개월 3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형태의 초기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맥아더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7. 14.)을 이양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한미연합군은 9월 초까지 T-34로 무장한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낙동강방어선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하여 부산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낙동강 전선에는 정규군 외에 학도의용군, 여군, 청년방위대, 대한청년단, 소년병, 지계부대 등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낙동강 방어에 성공한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함께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전쟁 발발 79일 만인 9월 28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선을 넘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진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유엔군은 38도선 이남으로 다시 철수하였으며, 이후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전선은 중부전선에서 고착되었다. 전선이 고착된 가운데 전쟁을 정치적으로 종결지으려는 유엔군과 공산 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1951년 중반에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까지 25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한국 정부는 휴전회담을 단호히 거부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1953. 6. 18.)을 통해 한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였다.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겪었지만 정전협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군사경제원조, 그리고 한국군 증강 등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6·25전쟁은 한반도를 휴전선을 통해 남과 북으로 분단시켰으며, 당시 남북한 총인구의 10%인 3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외에도 3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였다. 전쟁으로 국가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와 고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과 생존을 위한 정신력을 더욱 강해졌고, 이것은 전후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6·25전쟁 수행을 통해 우리 군의 하드웨어(병력규모·장비·물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교육 훈련·전술교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베트남전쟁 파병은 우리 군 역사상 최초로 전투병을 파병한 사례였다. 한국 정부는 1964년 9월 이동외파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파병을 시작으로 1973년 3월 철수 시까지 8년 6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325,517명을 파병하였으며 1,175회의 대대급 이상 전투를 수행하였다. 베트남전 파병은 국가안전보장 측면과 6·25전쟁 시 도와준 자유우방에 대한 국제적 신의 차원에서 고려되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 수행 간에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여 독자적인 전술로 작전 성과를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미국 주도 관계에서 상호 협상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미국의 지원과 전쟁특수를 활용한 외화수입으로 국가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군은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통해서 장비현대화 등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M-16 자동소총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종 화포와 전차, 헬기 등을 양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 체계를 갖추으로써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파병장병들의 전투경험은 한국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자체적인 작전통제권 행사 경험은 이후 한미 군사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군사대비태세 유지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은 전·평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전 역량이 집중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총력전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국방의 성격

상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방위체계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이 유기적으로 지휘·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안보태세 확립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 거점방어개념을 채택하여 휴전선을 연한 거점단위 축성공사를 실시하였고, 1968년도에는 고수방어 개념으로 한국 방위 전략을 전환하였다. 1971년도에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제7사단이 철수하자 휴전선 방어를 한국군이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한미혼성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또한, 제3군사령부 등의 부대를 창설하여 수도권 고수 및 현전선 결전개념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전면전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은 북한의 도발유형, 공격, 불안정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발전시켜왔다. 한반도 작전계획은 점차 수세전략에서 공세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저강도 계획의 발전과 더불어 하이 로우 믹스(High-Low Mix)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C)를 통해서 한미안보 협력체제를 다져왔다. 2011년부터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운용하여 한미 간의 안보협의체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지휘체계는 한미연합사령부(CFC)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유엔군사령부(UNC)가 한국군을 지휘하였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이전에 한미제1군단이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창설되어 미 8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이후 한국군 제3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중서부 전선에 대한 전선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한미제1군단은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로 개편하여 한국의 서부지역 일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여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을 활성화하여 연합방위태세에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994년 12월 3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전환된 이후 2005년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내외부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이양시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북한은 휴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총 2,002회의 침투, 1,117회의 국지도발 등 총 3,119회

의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을 자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상·해상·공중국지도발대비작전 및 비군사적 도발의 유형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다. 북한의 침투 및 도발행위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육상 및 해상을 통한 침투 행위가 빈번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그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에 입각하여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3축 체제에 의해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교육 훈련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원 및 전투부대 육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 훈련을 해 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밀산학교, 대전자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사관연성소 등을 건설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중국국민당 정부와 협조하여 중국중앙군관학교에 한인훈련반을 설치하여 훈련을 받게 하였고, 난징군관학교에 한인애국단을 입학시켜 한인특무부대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훗날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창설할 때 기간요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 군은 일본식 교육 훈련 제도에서 탈피하여 미국식 교육 훈련제도로 전환하였다. 미국의 장비와 교범 등을 활용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교육과 미국 군사학교에 유학생 파견 등을 통해 미국식 교육 훈련제도가 점차 한국군에 도입되었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각 군에서는 교육 훈련을 총괄하기 위한 기관과 각 병과학교를 창설하여 신병과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전쟁 기간 중에도 미국에 군사유학생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으며, 미군과 협조하여 야전훈련사령부(FTC)를 창설하여 한국군 사단에 대한 집중 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로 한국군은 6·25전쟁 중후반기에 중공군의 강력한 전선 돌파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 군의 교육 훈련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교육각서에 의해서 양성 및 보수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우리 군은 국군교육 이념을 재정립하고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교육 훈련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야간훈련을 활성화하였고, 한미연합작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 횟수를 증가하였다. 한미 간에는 1960년대 말부터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팀스피리트(TS) 훈련, 호국훈련, 독수리(FE)연습 등을 실시하여 작계 5027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보완하였다. 베트남전쟁 파병 시에도 한국군 자체 및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남

베트남 민병대 양성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1980년대 말까지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를 정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부대훈련에 집중하여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각 군에서는 과학적 기법에 의한 훈련 전투지휘훈련(BCTP) 기법을 적용하여 지휘관 및 참모훈련을 숙달하였다.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계획에 따라 연습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유형전력의 건설과 병행하여 무형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정신 전력지도지침서』에 우리 군의 정신교육 영역을 가치관 교육, 생활교육, 훈련, 환경조성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4개 요소들이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 정신교육의 중점은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3대 가치영역 교육에 있으며, 학교정신교육과 부대정신교육을 통하여 신념화하고 있다.

정신교육은 임시정부시기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으며, 광복군 서약문을 제정하여 각종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이후 국군의 상징적 실천구호로써 ‘국군맹서’를 공포하여 전군에 보급하였으며, ‘정공전범’을 작성하여 정훈활동에 활용하였다. 6·25전쟁 기 정훈교육은 전시 상황에 따라 대적 심리전 활동과 장병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군가제작 및 보급활동을 전개하였고, 각종 교육용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장병들의 군인정신 배양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6·25전쟁 이후 국방사상 양양대책과 장병들의 자질향상 및 복무능률을 증진하고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민교육을 증가시켰다. 이를 위해 군내 각급별 일반교육의 강화, 투철한 정신교육, 시청각교육 촉진, 대내외 보도 및 선전 등을 추진해 나갔다. 전쟁 이후 육군정훈학교를 설립하여 정훈요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정훈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훈병과를 창설하여 전문적인 정훈요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혼란했던 사회상을 반영하여 4·19혁명, 5·16군사정변, 한일회담, 베트남전쟁 참전 등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도록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창설하여 정훈요원과 지휘관에게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의 날’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파병기에 정신교육은 해외파병의 당위성과 대공투쟁 측면을 강조하였고, 국제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교육과 국민정신교육 등을 포함한 상부 지시사항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국군홍보관리소를 발족하여 국군의 홍보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냉전의 종식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 등에 따른 장병 정신자세의 이완을 방지하고, 남

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국가관 및 대적관을 확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당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대적관, 대북관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교육 3대 기조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병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신병 군인 만들기, 국방 TV, IPTV 등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현장 체험식 행동화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군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장병 정신교육에 독립군·광복군 역사교육을 연간 10회 이상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 IV 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국방비의 규모는 안보위협과 경제·사회적 여건, 국가의 정책 방향, 군사동맹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과 운용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원이 종료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과거 70년 동안 연평균 GDP 대비 약 4%, 정부재정대비 약 24%의 재원을 국방비에 배분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 비율은 하락하여 최근에는 GDP의 2~3%, 정부재정대비 15% 수준에서 국방비가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970~1980년대에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대북한 열세전력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국방개혁 등의 추진으로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가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으며, 국방분야의 기술을 민간분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증대를 통해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투자하기에 위험부담이 큰 분야에 대해서 국방 분야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다.

군은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방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으며, 위탁경영, 민영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족적 체제에서 벗어나고 전투수행 기능 측면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유사기능의 통폐합, 조직 슬림화 및 효율적인 부대 재배치로 국민편익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

다. 우리 군은 잘못된 군대문화를 청산하고 건전한 군무기풍을 조성하며 간부의 직업윤리와 군인관을 재정립하여 선진병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병영문화 개선 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국가방위의 최후 보루인 군의 특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병영생활과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부대 통합 및 재배치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단계까지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소요는 제3단계 기간(2014~2030)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생활관 개선을 통해 1인당 전용 면적이 확대되었고, 사이버 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었다.

군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2017~2021)」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신속한 후송과 최선의 진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국군외상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진료능력을 고도화하고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위한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1970년대까지 문맹자 퇴치 및 공민교육, 국토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군에서 실시했던 장병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기술 습득 교육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화 사업에 군은 국토건설과 대민사업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제 구축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재해·재난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과 복구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극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우리 군은 1980년대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담 부대를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전후방 경계작전, 주요 경기시설에 대한 외곽 경계지원, 대테러 특공대 및 소요진압 예비대, 태권도 시범, 요트경기 안전지원, 항공수송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서울올림픽경기대회 기간 중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보장하였다.

국방외교와 국제협력 활동 국군의 해외파병은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파병은 부대 단위 파병과 개안 단위 파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2개국에 1,000여 명이 해외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통해서 역내 평화와 안정, 우리 정부 안보정책의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울안보대화, 아시아 안보회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를 통해서 관련국들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UNPKO)에 2017년까지 25개 임무지역에 연인원 15,01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 11월 현재 7개 임무지역에 635명이 임무수행 중에 있다. 부대 단위 평화유지활동은 7개 임무지역에 14,414명이 참여하였으며, 공병위주 부대가 4개 부대(소말리아 상록수부대, 앙골라 공병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보병위주의 부대가 2개 부대(동티모르 상록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의료부대가 1개 부대였다. 개인 단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모 요원 및 연락장교로 활동하였고, 군 읍서버로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부터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참가하였다. 걸프전쟁(1991) 기간 중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파병한 이후 2017년까지 26개 지역에 33,485명이 다국적인 평화활동에 참가하였다. 부대 단위 평화활동에는 12개 임무지역에 33,177명이 참여하였고, 의료지원부대가 3개, 공병위주 부대가 2개, 보병위주 부대 2개 부대, 해군 2개 부대, 공군 3개가 부대가 파병되었다. 이외에도 대해적작전, 개인 단위 파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교류협력활동을 위한 파병은 총 5개 지역에 연인원 2,286명이 참가하였으며 현재에도 아크부대에 149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라우부대 파병, 해상 실종 항공기 해상탐색활동 지원,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활동 등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100년 동안 자주적 국방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국군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사랑,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정예강군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및 찾아보기

제I부 국군이념과 군사정책

1. 1차 자료

- 「13道 倡義大將 李麟榮逮捕의 件」, 金正明 편, 『朝鮮獨立運動』 I, 서울: 원서방, 1967.
- 「건국강령」(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제2권(임정편 I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1.
- 「건군의 기본이념과 군제 편제 : 국방부 채병덕」 1,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8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1953.
- 「대한민국광복군사령부 성립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2권(임정편 II),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 「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1919. 12. 18.),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 서울: 국가보훈처, 1999.
-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1919.12.1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9, 2006.
- 「대한민국임시관제」(1919. 11. 5. 법률 제2호),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서울: 국가보훈처, 1999.
-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2호」(1941. 10. 1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헌법, 공보), 과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2006.
-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施政方針)」(1920. 3. 2.),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국회도서관, 1976.
-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 4. 11.),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정원 문서』,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4.
- 산운기념사업회(汕耘記念事業會), 『회고 90년 1890-1981』, 이응준 자서전, 1982.
-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미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군원에 관한 각서」(1949. 10. 20.).
- 안창호의 1920년 1월 교민단 신년회 연설문, 『독립신문』(1920. 1. 8.)
-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 1(1945-1950)」, 서울: 육군 군사연구실, 1951.
-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 문서(동문편)」, 연세대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문서 제6권』 1, 서울: 중앙일보사,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 「일본공사관 기록 - 제3회 이인영 문답조서」(1909년 6월 21일 조사).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8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집』(국문판)

- 「조선의용대 개편선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 조선주차군사령부, 『朝鮮暴徒討伐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3』, 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 조선총독부 경찰국, 『조선경찰지 개요』, 1925.
-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 「군정 법령 제28호」(1945. 11. 13.).
- _____, 「군정 법령 제42호」(1946. 1. 14.).
- _____, 「군정 법령 제86호」(1946. 6. 15.).
- 「총재접견한국영수회담기요(1943. 7. 26.)」,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범김구선집』, 제5권(대한민국임시정부 II),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 「한국광복군 공약」(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 과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회, 2006.
- 「한국광복군 서약문」(1941. 11. 2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 과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회, 2006.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日本外交文書』, 제41권 1책.
- 「NSC-8」(한국문제와 관련된 미 국가안보회의 보고서, 1948. 4. 2.)
- 「PPS-23」(케난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 1948.
- U.S. Department of State, *MacArthur Hearings, Part 1*.
-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Korea(NSC 8)」(1948. 4.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자료총서: Docu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미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1.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3,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2. 단행본

-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조선 3), 동경: みすず書房, 1970.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1949. 10. 1.~1953. 7. 27.)』, 서울: 공군본부 정훈감실, 1962.
-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1953.
- _____, 『변화와 개혁 김영삼정부 국정 5년 자료집』 서울: 공보처, 1997.
- _____,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5년』, 서울: 공보처, 1992.
- 국방군사연구소, 『진군 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_____,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_____, 『국방조약집 제1집(1945~1980)』,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81.
- _____, 『한민족전쟁통사 IV(조선시대 후편)』,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국방부, 『국방백서 1968』, 서울: 국방부, 1968.
- _____, 『국방백서 1989』, 서울: 국방부, 1989.
- _____, 『국방백서 1992~1993』, 서울: 국방부, 1992.
- _____, 『국방백서 1994~1995』, 서울: 국방부, 1995.
- _____,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 _____,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 _____,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 _____, 『국방부사(1945~1950)』 제1집, 서울: 국방부 정훈국, 1954.
- _____, 『국방부사(1995~1997)』 제5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_____, 『국방부사(1998~2000)』 제6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국방부사(2001~2003)』 제7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_____, 『국방부사(2010~2012)』 제10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_____, 『국방부사(2013~2014)』 제11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국방조직 관련 법령집』, 서울: 국방부, 2010.
- _____, 『국방부 훈령집』, 서울: 동원문화사, 1986.
- _____, 『국방사(1945. 8.~1950. 6.)』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_____, 『국방사(1950. 6.~1961. 5.)』 제2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 _____, 『국방사(1961. 5.~1971. 12.)』 제3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 _____, 『국방사(1982~1990)』 제5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 _____, 『국방조직변천사』, 서울: 국방부, 1992.
- _____, 『국방조직변천사 II (1992~1999)』, 서울: 국방부, 1999.
- _____, 『월간 국방 1949』, 4월호.
- _____, 『한국전쟁사연구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_____,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_____,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_____,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1945~1980)』,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_____, 『독립군항쟁사』, 민족전란사 2,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 _____, 『한국전쟁사 제권(1945~1950.6: 해방과 건국 1)』(서울: 서울 동아출판사, 1967)
- _____, 『의병항쟁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헌법·공보)』,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1.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1(한국광복군 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_____,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 _____, 『자료 대한민국사 제8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_____,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 _____,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한국독립운동사』 제1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 _____,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 _____,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 _____, 『한국사 48(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 _____, 『한국사 52(대한민국의 성립)』,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 _____,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0.
-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 4(독립전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8.
-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 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권석근, 『일본제국군』, 서울: 코람데오, 2007.
- 김광재, 『한국광복군』, 2007.
- 김석영, 『판문점』(1973. 5. 30).
- 김증기 편저, 『한국군사사』(창원: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4), pp.283-286
-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해방 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80.
- 김후향, 『대한민국 독립운동공훈사』, 서울: 대한민국 공훈사발간위원회, 1983.
- 그렉 브라진스키 저, 나종남 역,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서울: 책과함께, 2011.
- 노경채, 『한국독립당 연구』, 서울: 신서원, 1996.
- 대한민국건국10년지간행회,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서울: 대한민국건국10년지 간행회, 1956,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1945. 8. 15.~1954. 3. 31.)』(서울: 국방부 정훈국, 1954)
- 대한민국 국회, 「유엔 한국부흥위원단 보고서」, 1961.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서울: 천풍인쇄, 1976.
-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2011.
-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70년사』, 화성: 해병대 사령부, 201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권(의병항쟁사 1)』,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
금운용위원회, 1970.
- _____,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3권(의병항쟁사 3),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84.
- _____, 『독립운동사』 제4권,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 독립기념관 편역, 『국역 의암집(毅菴集)』, 서울: 제천문화원, 2010.
- 리처드 라우터백, 『한국 미군정사』, 서울: 국제신문 출판부, 1946, 돌며개 재발행, 1984.
- 박동찬,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0.
- _____, 『한국독립운동사론』,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2009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남북협력사업
기초조사·연구비 지원, 2010.
- 박영석, “일제하 재만한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의식 : 경학사의 설립경위와 그 취지서를 중심
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2.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범 김구 전집(白凡金九全集)』 6(대한민국임시정부
3), 서울: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1999.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 브루스 커밍스,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 『분단 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 삼균학회, 『素昂先生文集(소양선생문집)』 상, 서울: 햇불사, 1979.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 서주석,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 과정』,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45-1978』, 서울: 행림출판사, 1979.
-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심현용, 『한러군사관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안중근, 『安應七歷史』, 국가보훈처 편, 『安重根傳記全集』, 서울: 思仁코리아, 1999.

- 양소전,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독립운동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육군본부, 『위국헌신의 길』, 2004.
- _____, 『육군발전사 제1권』, 서울: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5.
- _____, 『육군발전사 상권』, 서울: 육군본부 육군인쇄공창, 1970.
- _____,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 윤병석,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1991.
-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개혁사』, 서울: 한성애드컴, 2011.
- 이상룡, 『석주유고』, 서울: 고려대출판부, 1973.
- 장석홍, ‘안중근 연구의 쟁점과 과제,’ 『제6기 안중근아카데미 강의자료집』, 서울: 안중근의 사기념관, 2014.
- 장철(광복회 회장), 「광복군과 우리 국군의 정통성」, 『국방소식』 제14호, 2002.
- 조이현,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3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6.
- 중앙정보부, 『중·소의 대북한 지원』, 서울: 중앙정보부, 1973.
- 중앙행정기관·총무처행정관리국 편,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 서울: 총무처, 1980.
- 추헌수, 『자료 한국독립운동 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 추헌수 편, 『자료 한국독립운동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서울: 교문사, 1994.
-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 서울: 일조각, 1993.
- 한시준 외, 『대한민국의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 국가보훈처, 2009.
- 한용섭,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3.
- 한표옥, 『한미외교 요람기』, 서울: 중앙일보사, 1984.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교범 10-2, 서울: 합동군사대학, 2014.
- _____, 『합참60년사』,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8.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 서울: 해군본부, 1954.
-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대한민국해군사』 행정편, 서울: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1954.
-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의 원조』, 서울: 박영사, 1962.
- 허경진 역, 『梅泉野錄(매천야록):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개화와 망국의 역사』, 서울: 서해문집, 2006.
-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Dan Cald Well, *American-Soviet Relation: From 1947 to Nixon-Kissinger Grand Design*, Wesport, Conneticut : Green Wood Press, 1981.
-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The Far East/*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Vol VI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Unit 2.
- Hong Kyu Park, *American-Korean Relations, 1945-1953 : A Study in United States Diplomacy*, Texas: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Press, 1984.
-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0~1951*, vol. III,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 Kennan, George F, *Memoirs*, 1925~1950.
- Outline of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Unit 2.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Korea(NSC8)(1948. 4.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자료총서: Docu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Truman, Harry S., *Memoirs by Harry S. Truman*, 1955.
- U.S. *Department of State, MacArthur Hearings*, Part 1
- U.S. JCS, *History of U.S JCS*, 1998.
- Г А Р Ф(국립러시아문서보관소), ф. 102,00.1910, о п. 1910, л. 210, л. 7.
- Р Г И А Д В(러시아극동역사문서보관소), ф. 1, о п. 1, л. 73, л. 37.

3. 논문 및 기타

- 국가기록원, 『울곡감사관계철』(1290816-99999999-1983-000004-001)의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보고」
- 「국군조직법」(1948. 11. 30. 제정, 시행)

- 국방부, 『01~15 획득개발계획서』, 서울: 국방부, 1999.
- _____, 「국방개혁 기본법안 정부제출 검토보고서」(2005. 12. 2.)
- _____, 「국방예산통계(1961~1971)」
- 「국방부 일반명령 제72호」(1949. 12. 1.)
- 「국방부 일반명령 제231호」(1955. 8. 10., ‘국방대학 창설’)
- 「국방부 직제」(1948. 12. 7. 대통령령 제37호)
- 「국방부 훈령 제71-1호」(1971. 8. 30.)
- 「국방부 훈령 제308호」(1983. 7. 30.)
- 「국방부 훈령 제390호」(1989. 4. 25.)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2014. 12. 11. 부 개정)
-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 6. 1. 최고회의령 제42호)
-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회의보 제2호」(1961. 10. 1.)
- 「국군조직법」(1948. 11. 30. 법률 제9호)
- 「국군조직법(개정안)」(1963. 5. 20. 법률 제1343호)
- 「국군조직법(개정안)」(1990. 8. 1. 법률 제4249호)
- 「국무원포고 제1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2호』(대한민국 2년 2월 12일)
- 국방부, 『1966년도 국방기본시책』, 국방부 행정자료실, 1966.
- _____, 『1969년도 국방기본시책』, 국방부 행정자료실, 1969.
- _____, 『1970 국방기본시책』, 국방부 행정자료실, 1970.
- _____, 『1972 국방기본시책』, 국방부 행정자료실, 1972.
- _____, 「중기국방기본정책(1978~1982)」, 1977.
- 「국방부직제」(1948. 12. 7. 대통령령 제37호)
- 「국방부 훈령 제253호」(1979. 6. 7.)
- 「국방부 훈령 제390호」(1989. 4. 25.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개정령)
- 「길림성 주재 일본영사관에서 일본외무성에 발송한 기밀번호 제100호 문건」,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구, 「釋 三 · 一革命精神(석 3 · 1혁명정신)」, 『대공보』(중경: 1943. 3. 1.)
- 김영호, 「한국전쟁 직전 미국 합참의 비상전쟁계획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지원 논문, 2001.
- 「대통령령 제6527호」(1973. 3. 9.)
- 「대통령령 제7769호」(1975. 8. 28.)

「대통령령 제8875호」(1978. 3. 4.)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정·시행),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1#0000>, 검색일: 2020. 4. 10.)

『독립신문』(1920. 1. 8.)

_____ (1920. 3. 4.).

『마산일보』(1952. 1. 15.)

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서울: 한국사연구회, 1968)

_____, 「임시정부와 8·15광복」, 『한국독립운동사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박영석, 「일제하 재만한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의식 : 경학사의 설립경위와 그 취지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서울: 일조각, 1982),

박민영, 「안중근의 연해주 의병투쟁 연구」, 2009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남북협력사업 기초조사·연구비 지원, 2010.

브루스 커밍스,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 『분단 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서울신문』(1948. 8. 16.).

『수산경제신문』(1948. 10. 12.)

윤대원,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의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제133호,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6.

윤병석, 「1910년대 한국독립운동의 시론」, 『사학연구』 27, 서울: 한국사학회, 1977.

_____, 「구한말 군인의 항일의전의 의식」,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백산박성수교수회갑 기념논총, 서울: 백산임성수교수회갑 기념논총발행위원회, 1991.

_____, 「참의·정의·신민부의 성립과정」, 『백산학보』 7, 서울: 백산학회, 1969.

이용희,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국제정치학논총 제6집』, 1967.

「임정의 이념과 건국강령」,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제7권, 과천: 시사문화사, 1990.

「정부조직법」(1948. 7. 17. 제정·시행. 법률 제1호)

정용욱, 「태평양전쟁기 임시정부의 대미외교」,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하)』, 서울: 국가보훈처, 1999.

제성호의 논문,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대응」의 ‘Ⅳ. 2차세계 대전의 전후처리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https://blog.naver.com/dokdowar/100054614238>, 2020년 4월 15일 검색)

「합동참모본부 직제령」(1992. 4. 14, 대통령령 제136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합동참모회의 규정」(1954. 2. 17. 대통령령 제873호)

해군본부, 「해군본부 편제 발령 제6호」, 해병대 편성(1949. 6. 1.)

홍선표, 「한인비행가양성소의 개소와 운영」,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2007.

홍용묘, 「이승만 시대의 한미관계」, 김계동, 『한미관계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2.

Kennan, George F,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 July 1947.

Office of the Chief, KMAG, 「Status of Training, KA」, *Sen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Annex No. V, RG 554, Entry No.A-1 1355, Box 29.



제II부 군비증강과 국방개혁

1. 1차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보고」, 국가기록원 『울곡감사관계철』 (1290816-99999999 -1983-000004-001)
경제기획원, 「예산개요」(1962~1972)」
구상회, 「한국 미사일 개발의 산증인 구상회 박사 회고」, 『동아닷컴』(1999)
「군정법령 제189호」(1948. 5.)
「연합군최고사령부 점령지시 제2호」(1945. 9. 7.)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대한민국 25년 8월 4일)
「미 국무성 본드의 한국회담 비망록」(1950. 5. 10.)
육군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 1(1945-1950)」, 서울: 육군 군사연구실, 1951.
“제1회 이범석 국방부장관 발언,” 「국회속기록」 제100호(1948. 11. 10.)
「Muccio 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1950. 3. 16.)

2. 단행본

-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 건국 10주년』, 서울: 건국기념사업회, 195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1949.10. 1.~1953. 7. 27.)』, 서울: 공군본부 정훈감실, 1962.
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정부 국정5년 자료집』, 서울: 공보처, 1998.
_____, 『제6공화국 실록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 서울: 공보처, 199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약사 제1권』,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1989.
_____, 『국방과학연구소 40년 연구개발 투자효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16.
_____, 『국방의 초석 40년(1970~2010)』,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10.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_____,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서울: 국방부 정책기획국, 2002.
_____,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07.
_____,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 서울: 국방부, 1998.
_____, 『818계획 약사 제1집』, 서울: 국방부, 1991.

- _____, 『국방백서 1988』, 서울: 국방부, 1988.
- _____, 『국방백서 1989』, 서울: 국방부, 1989.
- _____, 『국방백서 1992~1993』, 서울: 국방부, 1992.
- _____, 『국방백서 1993~1994』, 서울: 국방부, 1994.
- _____, 『국방백서 1998』, 서울: 정책기획국, 1998.
- _____,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2000.
- _____, 『국방백서 2004』, 서울: 국방부, 2004.
- _____, 『200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
- _____,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8.
- _____,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 _____,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 _____,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 _____,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 _____,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 서울: 국방부, 2019.
- _____, 『국방부사(1992~1994)』 제4집,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_____, 『국방부사(1995~1997)』 제5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_____, 『국방부사(1998~2000)』 제6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국방부사(2001~2003)』 제7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_____, 『국방부사(2004~2006)』 제8집,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8.
- _____, 『국방부사(2007~2009)』 제9집,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2.
- _____, 『국방부사(2010~2012)』 제10집,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 _____, 『국방부사(2013~2014)』 제11집,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국방사(1945. 8.~1950. 6.)』 제1집,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4.
- _____, 『국방사(1950. 6.~1961. 5.)』 제2집,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7.
- _____, 『국방사(1961. 5.~1971. 12.)』 제3집,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90.
- _____, 『국방사(1972. 1.~1981. 12.)』 제4집,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국방예산개혁』, 1985.
- _____, 『국방정책 1998~2002』, 서울: 국방부, 2002.
- _____, 『국방조직관련 법령집』, 서울: 국방부, 2010.
- _____, 『국방조직변천사 I (1948~1991)』, 서울: 국방부, 1992.
- _____, 『국방조직변천사 II (1992~1999)』, 서울: 국방부, 1999.

- _____,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2집(1988~2003)』, 2016.
- _____, 『대한군원현황』, 서울: 국방부, 1978.
- _____,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2』, 서울: 계획예산관실, 2002.
- _____, 『상부지휘구조 개편』, 서울: 국방부, 2011.
- _____,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군인공제회, 1994.
- _____, 『한국전쟁사연구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6.
-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개혁 2.0 보도자료: 문제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 2018. 7. 2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_____,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 201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_____, 『독립군항쟁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 _____, 『한국전쟁사 제1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국방부 전사편찬회, 『국방부사 제1집』, 서울: 국방부 정훈국, 1954.
-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서울: 국방부 정책기획국, 2003.
- 국정홍보처, 『국민의 정부 5년 국정자료집 1(정치, 외교, 통일, 국방)』, 서울: 국정홍보처, 2003.
- 국정홍보처, 『김대중 대통령 국정운영백서』, 서울: 국정홍보처, 2003.
- 국회사무처, 『국회사(제헌국회, 제2대, 제3대 국회)』, 서울: 국회사무처, 1963.
- 김성호, 『효율적인 전력증강사업관리』, 서울: 국방부정책연구위원실, 1990.
-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김정렴 회고록』, 서울: 중앙일보사, 1991.
- 대한민국국방부, 『국방개혁 2.0』, 서울: 국방부 국방개혁실, 2018.
- 대한민국국방부, 『우리 군을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Strong, Speed, & Slim)』,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1.
-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서울: 천풍인쇄, 1976.
- 대한민국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 70년사』, 화성: 대한민국해병대, 2019.
- 도진순 주해, 김구 저,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1997.
- 미래기획위원회, ‘국방산업 2020 전략 추진방안,’ 보도자료, 서울: 청와대 춘추관, 2010.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서울: 방위사업청, 2008.
- 서동구 역, 『한반도 긴장과 미국』, 서울: 대한공론사, 1977.

- 서용원·김민욱, '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 기술』, 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0.
- 서우덕·신인호·장삼열, 『방위산업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서울: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 송영무, 『선진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서울: 박영사, 2020.
-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엄항섭, 『屠倭實記(도왜실기)』, 서울: 국제문화협회, 1946.
- 육군본부, 『병기병과 50년사(1946~1996)』, 대전: 육군종합군수학교, 2001.
- _____, 『육군발전사 상권』, 서울: 육군본부, 1970.
- _____, 『육군발전사 제1권』, 서울: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5.
- _____, 『육군발전사 제3권』, 서울: 육군본부 군사감실,
- _____, 『육군발전사 제4권』, 서울: 육군본부 군사감실,
- _____, 『육군복제사』, 1980.
- _____, 『육군사 제2집』(서울: 육군본부, 1960.
- _____, 『육군사 제3집』(서울: 육군본부, 1960).
- _____, 『육군사 제4집』(서울: 육군본부, 1960.
- _____, 『육군조직발전사(창군~1995)』(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7)
- _____, 『창군전사』, 서울: 육군본부, 1980.
- _____, 『한국군사사 10(근·현대 II)』,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 육군본부 군사감실, 『공비토벌사』, 서울: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4.
- 윤광웅, 「국방조직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 국방조직 발전방향』, 서울: 한국군사학회, 2000.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 개혁사』, 서울: 한성애드컴, 2011.
- 이원형 외,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국방부, 1994.
- 조영길, 『자주국방의 길』,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 주요한 편저, 『안도산전서』(증보판), 서울: 사단법인 흥사단 출판부, 1999.
-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한국 방위사업 50년사』, 서울: 한국국방안보포럼, 2015.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진회사』, 서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88.
-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5.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교범 10-2, 2014.
- _____, 『합동참모본부 조직 및 회의 변천사』, 서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2009.
- _____, 『합참60년사(1948~2008)』, 서울: 작전본부, 2008.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 계룡: 해군 역사기록관리단, 2016.
 _____,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행정편)』, 서울: 해군본부 전사실, 1954.
 _____, 『해군 30년사(1945-1975)』, 서울: 해군본부, 1978.
 해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 해군사 제3집(행정·작전편)』, 1961.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 1961.
 황민호·홍선표, 「한인비행양성소의 개소와 운영」,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Capt George E. McCabe, USCG, *History of U.S. Coast Guard Detachment
 Korea, 2 sep 1946 to 25 Feb 1947*.
 US JCS, *Directory of United State Military Terms for Joint Usage*, Washington,
 D.C: JCS, 1964.

3. 논문 및 기타

「공군본부직제」(대통령령 제254호, 1949. 10. 1.)
 「대통령령 제52호」(1949. 1. 20. ‘병역임시조치령’)
 「대통령령 제845호」(1953. 12. 14. ‘정규군인 신분령’)
 「대통령령 제1084호」(1955. 8. 30. ‘육·해·공군 기념일 제정’)
 「대통령령 제1229호」(1957. 1. 14., ‘국방연구원령’)
 「대통령령 제1385호」(1958. 9. 4.,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5호」(1995. 4. 12). ‘정보체계국 신설’
 대통령령 제16008호(1998. 12. 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5.12.28., 대통령령 제19200호)
 「브라운 각서」(1966. 3. 4.), 국방부, 『국방사 제3집(1961. 5.~1971. 12.)』,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사관학교설치법」(1955. 10. 1., 「법률 제374호」)
 제성호의 논문,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대응」의 ‘Ⅳ. 2차세계 대전의 전후처리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https://blog.naver.com/dokdowar/100054614238>)
 「제헌헌법」(1948. 7. 17. 제정, 공포)

『조선일보』(2015. 8. 6.)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 「군정 법령 제28호」(1945. 11. 13.)

_____, 「군정 법령 제42호」(1946. 1. 14.)

_____, 「군정 법령 제86호」(1946. 6. 15.)

「합동참모본부 직제령」(1963. 5. 31. 제정)

해군본부, 「해군본부 편제 발령 제6호」, 해병대 편성(1949. 6. 1.)

Richard A. Bitzinger,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at the Crossroad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ummer, 1995.



제Ⅲ부 전쟁 수행과 군사대비태세

1. 1차 자료

- 국방부,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다” 「보도자료」(2018. 6. 22.)
- 국방부,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에 대한 조사결과” 「보도자료」(2017. 6. 21.)
-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호외(1940. 10. 9.)
- 「이범석의 광복군과 OSS의 합동작전 제안(1급비밀)」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 10. 31.)
- 「한미합작에 관한 각서(2급비밀)」
- 서갑성 ‘50동우회’ 회장 인터뷰(2017. 12. 13.).
- 외교부 외교문서, 문서번호-772-1338, 「월남 관계 비밀문서」 1971년 6월, 필름 번호 A-0004, 미국의 월남전개입에 관한 문서(1963-1965) 공개, 1971(외교부 외교사료과)
-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eoul Embassy, July 3, 1964, Asia and the Pacific: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filmed from L.B.J. Library No. 5-0649.
-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Part IV- MAG'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 “Extension of ROK Army, 1 Nov. 1952,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6, Top Secret Correspondence, compiled 1948-1952, Entry UD 2A, 091 Korea 1951-1952.

2. 단행본

- 강기천, 『강기천 회고록』, 서울: 계몽사, 1995.
- 강덕상 편, 『현대사 자료: 조선 2』, 동경: 미즈즈書房, 1967.
- 공군본부, 『공군발전 약사』, 서울: 공군본부, 1954.
- 공군본부, 『공군사』 제4집, 서울: 공군본부, 1977.
- 공군본부, 『공군 정훈 60년사』, 계룡: 공군본부, 2010.
-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20년사』, 서울: 공군사관학교, 1974.

-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 김정명 편, 『조선 독립운동』, 동경: 원서방, 1967.
- 김준엽·김창순, 『한국 공산주의운동』, 서울: 청계 연구소, 1986.
- 국군보안사령부, 『대공 30년사』, 서울: 국군보안사령부, 1978.
-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50년사』, 성남: 국군의무사령부, 2004.
- 국군정신전력학교, 『학교 10년사』, 서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7.
- 국방군사연구소, 『국방부사 1986-1988』,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1.
- _____, 『국방정책변천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 _____,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 _____, 『건군 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_____, 『대비정규전사 I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 국방대학원, 『국방대학원 30년사』, 서울: 국방대학원, 1987.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
- _____,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8.
- _____,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 _____,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 _____,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 _____,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 _____,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 _____, 『국군 50년사』, 서울: 국방부, 1998.
- _____, 『국군 50년사 화보집』, 서울: 국방부, 1998.
- _____, 『국방부사』 제1집, 서울: 국방부, 1954.
- _____, 『국방사』 제2집, 서울: 국방부, 1987.
- _____, 『국방사』 제3집, 서울: 국방부, 1990.
- _____, 『국방사』 제4집, 서울: 국방부, 2002.
- _____, 『국방사』 제5집, 서울: 국방부, 2011.
- _____, 『국방백서 1967』, 서울: 국방부, 1966.
- _____, 『국방백서 1990』, 서울: 국방부, 1990.
- _____,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2000.
- _____, 『국방예산개혁』, 서울: 국방부, 1986.
- _____, 『국방의 당면과제』, 서울: 국방부, 1955.

- _____, 『정훈대계 I』, 서울: 국방부, 1956.
- _____, 『정신전력의 지도이론과 실제』, 서울: 국방부, 1977.
- _____, 『정예화된 선진강군』, 서울: 국방부, 2013.
- _____, 정훈 참고 81-1 『정훈 업무 요강』, 서울: 국방부, 1981.
- _____, 『향토예비군 30년지』, 서울: 국방부, 1998.
- _____,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2007.
- _____, 『국방교육 훈련 중장기기획서』, 서울: 국방부, 1994.
- _____, 『정신전력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1998.
- _____, 국방부. 『국방 정훈 홍보 활동 및 공보규정집』, 서울: 국방부, 2001.
- _____,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국군』, 서울: 국방부, 2001.
- _____, 『2006년 정훈 홍보 활동지침』, 서울: 국방부, 200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6·25전쟁사』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_____, 『6·25전쟁사』 5,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_____, 『6·25전쟁사』 6,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_____, 『6·25전쟁사』 7,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 _____, 『6·25전쟁사』 8,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 _____, 『6·25전쟁사』 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_____, 『6·25전쟁사』 1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_____, 『6·25전쟁사』 1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_____, 『6·25전쟁과 UN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_____,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_____, 『건군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①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_____,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②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_____,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_____, 『한미군사 관계사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_____, 『국방사건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_____,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_____,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_____, 『국군과 대한민국의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_____,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_____,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연평해전 전투수행자 증언록』,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_____,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전 종합연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4.
- _____, 『파월한국군 전사』 1(상),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8.
- _____,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_____, 『장진호 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_____, 『국방사』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_____, 『대비정규전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정신전력원 국직부대 창설백서』, 대전: 국방정신전력원, 2016.
- 국방홍보원, 『국군방송오십년사』, 서울: 국방홍보원, 2004.
- _____, 『국방홍보원 65년사』, 서울: 국방홍보원, 2015.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_____,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13,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국회도서관, 『한국 민족운동 사료(중국 편)』, 서울: 천풍인쇄, 1976.
-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 서울: 청미디어, 2016.
- 김명섭, 『전쟁과 평화』,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 김태우, 『폭격: 미 공군 폭격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창비, 2013.
- 나종남 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12.
- 남정옥, 『6·25전쟁 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10.
-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2011.
- 데이비드 헬버스탐, 정윤미 · 이은진, 『콜디스트 윈터』, 서울: 살림, 2013.
- 독립군가 보존회, 『광복의 메아리』, 서울: 교학사, 1982.
- 로이 E. 애플만, 허빈 역, 『장진호 동쪽』, 서울: 다트앤, 2013.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 서울: 국제문화 출판사, 1981.

반병률,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 서울: 신서원, 2013.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범 김구전집』 제5권,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_____, 『백범 김구전집』 제6권, 서울: 대한매일신보사, 1999.

백선엽, 『실록 지리산』, 서울: 고려원, 1992.

_____,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서울: 지구촌, 1999.

베르트 슈퇴버, 황은미·한성훈 역, 『한국전쟁』, 서울: 여문책, 2018.

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제2집, 경기 파주: 보병 제1사단, 1978.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 서울: 서울신문사, 1979.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서울: 역사비평사, 2007.

안재철, 『생명의 항해』, 서울: 자운각, 2008.

왕수평, 나진희·황선영 역, 『한국전쟁』, 서울: 육군군수사령부, 2010.

웅진군, 『연평도 포격사건 백서』, 인천: 웅진군, 2011.

이상철, 『NLL을 말하다』, 서울: 살림, 2015.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40년사』,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2008.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을 구축하며』, 강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2006.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전투발전종합사』, 대전: 육군교육사, 1984.

_____, 『타이거 장군 송요찬』,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96.

육군교육총본부, 『교총사』 제1집, 서울: 교육총본부, 1958.

육군군사연구소, 『연천지역 포격 도발』,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17.

육군군수사령부, 『군사령부 50년 발자취』, 대전: 육군군수사령부, 2010.

육군본부, 『육군 40년 발전사』, 서울: 육군본부, 1989.

_____, 『육군 50년 발전사』, 계룡: 육군본부, 1998.

_____, 『공비연혁』, 서울: 육군본부, 1971.

_____, 『육군교육사령부 변천사』, 계룡: 육군본부,

_____, 『군수 변천사』, 서울: 육군본부, 1996.

_____, 『대한민국 간호병과 60년사』, 계룡: 육군본부, 2009.

_____,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상, 계룡: 육군본부, 2012.

_____, 『대침투작전사(1961년~1970년)』 중, 계룡: 육군본부, 2014.

_____, 『대침투작전사(1971년~1980년)』, 계룡: 육군본부, 2011.

_____, 『병과별 부대 역사』, 서울: 육군본부, 1959.

- _____, 『육군발전사』. 상권, 서울: 육군본부, 1969.
- _____, 『육군발전사』. 제1권, 서울: 육군본부, 1956.
- _____, 『육군발전사』. 제2권, 서울: 육군본부, 1970.
- _____, 『육군발전사』. 제3집, 서울: 육군본부, 1977.
- _____, 『육군발전사』 제4집, 서울: 육군본부, 1984.
- _____, 『육군사』 제12집(상), 서울: 육군본부, 1968.
- _____, 『육군역사일지(45~50)』, 서울: 육군본부, 1954.
- _____, 『육군조직변천사』, 계룡: 육군본부, 1997.
- _____,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 계룡: 육군본부, 2001.
- _____, 『정훈실무편람』, 계룡: 육군본부, 1991.
- _____, 『정훈 50년사』, 서울: 육군본부, 1991.
- _____, 『학생군사교육발전사』, 서울: 육군본부, 1986.
- _____, 『향토예비군전사』 제1집, 서울: 육군본부, 1968.
- _____, 『해외파병 40년사』, 계룡: 육군본부, 2008.
- _____, 『창군전사』, 서울: 육군본부, 1980.
- _____, 야전교범 0-3 『국지도발대비작전』, 계룡: 육군본부, 2012.
- _____, 야전교범 1-1 『군사용어』, 계룡: 육군본부, 2017.
- 육군본부 정신교육위원회, 『정신전력발전 방향』, 계룡: 육군본부, 1992.
-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서울: 육군사관학교, 1996.
- 육군정보국, 『괴뢰군 연혁』, 서울: 육군본부, 1958.
-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실록 6·25한국전쟁과 육군종합행정학교』, 서울: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1995.
- 육군 제2훈련소, 『연무사』, 논산: 제2훈련소, 1983.
-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창설 68주년 기념화보집』, 논산: 육군훈련소, 2019.
-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서울: 고려원, 1993.
- 이상철, 『NLL을 말하다』, 서울: 살림, 2015.
- 이용준, 『회고 90년 이용준 자서전』, 서울: 삼아원책사, 1982.
- 이종연, 『아, 장진호』, 서울: 북마크, 2010.
- 장세윤,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천안: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장창국, 『육사 졸업생』, 서울: 중앙일보사, 1984.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서울: 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 중앙정보부, 『북한대남공작사』 제2권, 서울: 중앙정보부, 1973.

- 조성훈 엮음, 『전시동원과 경제건설: 이훈섭 회고록』, 서울: 선인, 2017.
- 존 루이스 개디스, 홍지수·강규형 역, 『미국의 봉쇄전략』, 서울: 비봉출판사, 2019.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2.
- 조영길, 『자주국방의 길』,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천용택, 『나의 삶 나의 희망』, 서울: 도서출판 Annd, 2006.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가』, 서울: 대한민국 공보처, 1985.
-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서울: 팔복원, 2006.
-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 서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한국사진기자단, 『북괴도발 30년사』, 서울: 광명인쇄공사, 1977.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서울: 집문당, 1998.
-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발자취』, 서울: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1979.
- 한신, 『신념의 삶 속에서』, 서울: 명성 출판사, 1994.
-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사』,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1.
- 합동참모대학, 『합동참모대학사』, 서울: 합동참모대학, 1975.
-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 서울: 합동참모본부, 1994.
- _____, 합동교범 5-0 『합동기획』,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8.
- _____, 『연합 및 합동연습·훈련 편람』, 서울: 합동참모본부, 2020.
-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50년사』,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제3집, 서울: 해군본부, 1961.
- _____, 『반세기를 넘어서』, 계룡: 해군본부, 1999.
- _____, 『해군십오년약사』, 서울: 해군본부, 1961.
- _____, 『해병대 편제 연혁』, 계룡: 해군본부, 2003.
- _____, 『해상대침투작전사(1)』, 서울: 해군본부, 1988.
-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50년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1996.
-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 서울: 해병대사령부, 1961.
- Baldwin, W. Hans, Strategy for Tomorrow,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0.
- R.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5.
- William C. Westmorland, 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하였는가』, 서울: 광명출판사, 1976.

3. 논문, 법령, 회의록, 기타

- 김창수, “한인애국단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2, 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 박일송, “전쟁 중국군의 충원과 교육 훈련,”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②』,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유성중,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군사』 제91호(2016. 6.).
-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9).
-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권 제1호(1995).
- 장영주, “한국군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2008).
-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41집(2012. 4.).
- 한국국방연구원, “미래 군사력 설계를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628호(1996. 6. 10.).
- 한지성, “인도 공작에 대하여,” 『독립』 제3권 제75호(1945. 6. 13.).
- 법률 제41호(1949. 8. 6.) 「병역법」
- 대통령령 제281호(1950. 2. 1.) 「병역법시행령」
- 법률 제14839호(2017. 7. 26.) 「통합방위법」
- 법률 제5264호(1997. 1. 13.) 「통합방위법」
- 대통령령 제17158호(2001. 3. 27.)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8442호(1977. 2. 14.) 「국군 정신전력학교 설치령」
- 국방부 훈령 제2270호(2019. 4. 5.) 「국방교육 훈련 훈령」
- 국방부 훈령 제5호(단기 4283. 1. 10.) 「군 보도 취급 규정」
- 국방부 훈령 제66호(1973. 8. 30.) 「국군교육 이념」
- 국방부 훈령 제560호(1997. 6. 20.) 「교육 훈련규정」
- 제45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4. 1. 26.)
- 제45회 제1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4. 7. 31.)
- 제52회 제1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5. 8. 13.)
- 제55회 제14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66. 3. 19.)
-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3. 11. 17.)
-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5. 10. 21.)
-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6. 10. 20.)
-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9. 10. 22.)
-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0. 10. 8.)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4. 10. 2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5. 11. 2.)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7. 10. 26.)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8. 10. 31.)
 박상선, 「합동/연합작전계획 변천」, 논산: 합동참모대학교, 2018. (학습교재)
 서동만·정해구, “작전계획 ‘5027-98’ 관련기사 및 페리보고서,” 『통일시론』 통권 5호 (2000. 2.)
 윤무장, “남북화해 협력 시기 한국군 정신교육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규홍,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변화와 그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이정훈, “‘작전계획(작계) 5027’, 북한 소멸로 계획 수정,” 『시사저널』 1590호.
 전현석, “작전계획 번호에 담긴 뜻은” 『조선일보』(2015. 10. 8.)
 정희상, “‘욱’해서 전쟁하면 남북한 ‘혹’ 간다,” 『시사 IN』
 조영빈, “북 화성-12형 전력화 선언, 광 불모로 군사 주도권 확보 노려,” 『한국일보』(2017. 9. 16.)
 하진규, “미국의 군사전략,” 『월간 말』 통권 230호(2005. 8.)
 육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부대연혁), http://educmd.army.mil/menu_es?mid=ac0101020000
 (검색일: 2020년 1월 10일).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https://nkinfo.unkorea.go.kr/>)(검색일: 2002년 1월 15일)
<https://www.globalsecurity.org>. (검색일: 2020년 1월 15일)
 미 국방성 홈페이지(<http://www.dod.gov>, <http://www.defenselink.gov>)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http://www.pacom.mil>)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e영상역사관(정부기록사진집)

제Ⅳ부 국민과 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

1. 1차 자료

국방부, “BTL사업으로 완공된 군 관사” 『보도자료』(2007. 3. 21.)

_____, 「법정부(민·관)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 운영계획」(2006. 1. 18.)

법정부 군 의무발전추진위원회,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무발전 추진 계획」(2006. 8. 31.)

육군교육사령부, 「군원연구」,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68.

육군 군수참모부, 「군원과 국방비추세(1960년대)」, 서울: 육군본부, 1968.

2. 단행본

공군 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 해외 파병사』, 계룡: 공군 군역사기록관리단, 2007.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료지원단 걸프파견 역사자료 II』, 성남: 국군의무사령부, 1991.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2.

국방대학교 PKO 센터, 『아라우부대 2진 파병성과·교훈』, 서울: 국방대학교, 201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6.

_____,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8.

_____,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_____,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_____,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_____,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_____,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_____, 『2006년도 국방정책』, 서울: 국방부, 2006.

_____, 『2016 국방통계연보』, 서울: 국방부, 2016.

_____, 『국방 50년사 화보집』, 서울: 국방부, 1998.

_____, 『국방사』 제2집, 서울: 국방부, 1987.

- _____, 『국방사』 제3집, 서울: 국방부, 1990.
- _____, 『국방사』 제4집, 서울: 국방부, 2002.
- _____, 『국방사』 제5집, 서울: 국방부, 2002.
- _____, 『국방백서 1988』, 서울: 국방부, 1988.
- _____,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2000.
- _____,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서울: 국방부, 2015.
- _____, 『국방재난대응 백서』, 서울: 국방부, 2012.
- _____, 『대민지원 활동 지침서』, 서울: 국방부, 2000.
- _____, 『병영문화 개선 연구백서』, 서울: 국방부, 2006.
- _____, 『서울올림픽 군 지원 활동』, 서울: 국방부, 1990.
- _____, 『선진병영문화 VISION』, 서울: 국방부, 2005.
- _____, 『열정과 노력으로 만드는 국방비』, 서울: 국방부, 2009.
- _____, 『정예화된 선진강군』, 서울: 국방부, 2013.
- _____,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서울: 국방부, 2003.
- _____, 『한국 안보와 적정국방비』, 서울: 국방부, 199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라크 파병 서희 부대증언록』,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_____, 『국군 이라크 자유작전 파병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_____,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국방부사 2007~200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_____, 『상록수부대 파병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_____,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 _____,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증언록 4』,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대한민국 공병부대 증언록』,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_____,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_____, 『한미군사 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_____,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_____, 『한국의 PKO 파병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군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제9권, 서울: 탐구당, 1998.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서울: 중앙일보사·중앙경제신문, 1993.

대한민국해군 제3함대사령부, 『해군 제3함대사령부 70년사』, 목포: 해군 제3함대, 2016.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1994.

육군공병학교, 『육군공병학교 30년사』, 광주: 육군공병학교, 1981.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3집, 서울: 육군본부, 1977.

_____, 『제24회 서울올림픽 지원사』, 서울: 육군본부, 1989.

_____, 『군수변천사』, 계룡: 육군본부, 1996.

_____, 『육군조직발전사』, 계룡: 육군본부, 1997.

_____, 『육군 공병 50년 발전사』, 계룡: 육군본부, 2000.

_____, 『육군기획관리 50년 발전사』, 계룡: 육군본부, 2003.

_____, 『육군문화혁신 지침서』, 계룡: 육군본부, 2007.

육군중앙경리단, 『국방예산론』, 계룡: 육군본부, 2010.

이라크평화·재건사단, 『이라크파병 성과 교훈집』, 서울: 이라크평화재건·사단, 2008.

이재전, 『지휘의 참고』, 서울: 육군본부, 1967.

치안본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치안백서』, 서울: 치안본부, 1989.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청계연구소, 1989.

한국국방연구원,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 국방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 서울: 박영사, 2019.

해군본부, 『반세기를 넘어서』, 계룡: 해군본부, 1999.

_____,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계룡: 해군본부, 2016.

해군 작전사령부, 『해성부대 임무 수행 결과』,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 2003.

3. 논문, 법령, 회의록, 기타

법률 제13123호(2015. 2. 3. 일부개정)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8211호(2017. 7. 2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훈령 제700호(2002. 2. 27.)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

국방부 훈령 제253호(1979. 6. 7.)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국방부 훈령 제2125호(2018. 1. 26. 일부개정). 「국군의 해외 파병업무 훈령」
제15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 1. 21.)
제152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1. 2. 7.)
제161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3. 5. 18.)
제169회 제1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4. 7. 14.)
제176회 제1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5. 7. 15.)
제208회 제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1999. 9. 28.)
제225회 제20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1. 12. 16.)
제235회 제1차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2003. 1. 16.)
제238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3. 4. 2.)
제245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4. 2. 13.)
제263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6. 12. 22.)
제281회 제1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09. 3. 2.)
제287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0. 2. 8.)
제294회 제1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0. 12. 8.)
제311회 제9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2. 9. 27.)
제320회 제16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2013. 12. 5.)
이필중,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2016년 가을호).
e-나라자료, “국방예산 변화 추이” (검색일: 2020년 1월 30일).
e-나라자료(<http://www.index.go.kr>) 자료 참조(검색일: 2020년 1월 15일).

찾아보기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 448
 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 • 41
 공군대학 • 441, 456
 공군본부 • 196, 212, 276
 공군사관학교 • 73, 162, 196, 432, 433, 440
 과학화전투 훈련장(KCTC) • 460
 걸프전쟁 • 236, 388, 576, 587, 589, 591, 635
 경신참변 • 171, 320, 324
 계획예산제도(PPBS) • 86
 교육총감부 • 435, 437
 교육총본부 • 204, 205, 206, 435, 436, 437, 438, 444
 국가통수기구(NA) • 391
 국군간호학교 • 544
 국군 3대 선서(國軍三大宣誓) • 42, 43
 국군맹서(國軍盟誓) • 42, 432, 469, 470, 632
 국군의 날 • 490
 국군의 사명 • 43, 45, 494
 국군조직법(1948. 11. 30.) • 71, 72, 73, 81, 82, 90, 93, 94, 103, 122, 185, 191, 195, 196, 197, 199, 280, 281, 284, 285, 308, 470, 618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 64
 국내진공작전 • 12, 15, 18, 28, 52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 310, 313, 627
 국방개혁 2020 • 245, 247, 249, 266, 267, 299, 302, 303, 305, 530, 619, 626
 국방개혁 5개년 계획 • 98, 293, 626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 303, 305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 • 303, 307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 309
 국방경비대사관학교 • 43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 86, 87, 88, 90, 148, 242, 501, 503, 504, 505, 618
 국방과학연구소 • 216, 217, 218, 220, 221, 222, 227, 243, 245, 246, 248, 258, 259, 290, 294, 296, 297, 621
 국방목표 • 3, 85, 107, 144, 145, 146, 147, 152, 153, 154, 156, 157, 161, 225, 280, 288, 292, 375, 503, 621

국방부 직제(1948. 12. 7.) • 40, 68, 69, 71, 76, 81, 87, 91, 185, 191, 279, 469, 504, 618
 국방부 훈령 제1호 • 42, 72
 국방비 • 4, 125, 126, 132, 151, 161, 163, 164, 165, 169, 210, 226, 240, 245, 299, 486, 496, 501, 502, 503, 506, 508, 512, 513, 514, 518, 519, 520, 521, 522, 525, 620, 625, 633
 국방외교 • 4, 161, 163, 563, 567, 572, 610, 634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 60, 61, 62, 63, 179, 616, 617, 618, 622
 국방정신교육원 • 294, 296, 492, 493, 494
 국방정신전력원 • 97, 493, 496
 국방정책 • 1, 3, 4, 81, 85, 86, 91, 92, 95, 96, 107, 120, 122, 123, 139, 140, 143, 144, 146, 147, 148, 149, 150, 152, 155, 156, 157, 159, 161, 162, 163, 165, 236, 237, 238, 250, 279, 281, 288, 295, 297, 466, 506, 550, 563, 564, 619, 623, 627
 국방참모대학 • 294, 296, 456
 군사력 건설 • 86, 93, 148, 150, 152, 154, 157, 164, 169, 225, 228, 231, 232, 237, 238, 241, 242, 243, 247, 251, 266, 267, 280, 281, 283, 289, 382, 503, 517, 518, 619, 625
 군사분계선 • 348, 350, 378, 405, 417, 419
 군사영어학교 • 431, 432, 436
 군사원조 • 505, 506, 507, 508, 509, 512, 513, 517, 624, 629
 군수기지사령부 • 205, 206, 207
 국제 평화유지활동 • 563, 573
 국지도발대비작전 • 400, 401, 631
 기미독립 선언서 • 21
 김구 • 25, 27, 29, 43, 110, 113, 114, 172, 176, 323, 324, 326, 327, 329, 330, 428
 김대중(金大中) • 95, 98, 153, 156, 157, 240, 243, 263, 292, 493, 511, 518, 528, 529, 530, 626
 김영삼(金泳三) • 236, 237, 260, 286, 492, 493, 511, 518, 519, 621, 626
 김일성(金日成) • 36, 44, 136, 287, 331, 332, 339, 362, 403, 405, 514, 616
 김좌진 • 30, 52, 109, 170, 171, 321, 322, 627

ㄴ

낙동강 전선 • 337, 343, 403, 628
 남대문 전투 • 28
 남조선국방경비대 • 61, 62, 64, 179, 180, 431, 616, 622
 년-위너 수정안 • 382, 395
 네트워크중심전(NCW) • 161, 245, 249, 266, 625
 넵코작전 • 329
 노무현(盧武鉉) • 95, 153, 158, 242, 243, 250, 266, 299, 383, 495, 511, 518, 530, 531, 532, 626
 노태우(盧泰愚) • 4, 149, 150, 152, 231, 232, 279, 281, 287, 395, 492, 511, 518, 589, 621, 625, 627
 녹지계획 • 378
 닉슨 독트린 • 135, 143, 211, 214, 280, 392, 514, 515, 624

ㄷ

다산부대 • 587, 588, 591, 594, 595, 596
 다이만부대 • 602, 603
 대량살상무기(WMD) • 160, 248, 251, 252, 383, 388, 389, 569, 570, 571, 630
 대량응징보복(KMPR) • 253, 422
 대외군사판매(FMS) • 209, 214, 506, 516
 대침투작전 • 398, 401, 404, 405, 407, 408, 409, 410, 411, 413, 414, 415
 대한광복군총영 • 52, 170, 171, 622
 대한민국 건국강령(建國綱領) • 31, 112, 616
 대한민국임시정부 • 1, 2, 3, 4, 5, 9, 18, 21, 22, 23, 24, 33, 42, 47, 50, 53, 54, 107, 112, 169, 171, 173, 319, 320, 323, 324, 326, 327, 425, 427, 428, 467, 615, 620, 627, 628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 24, 112, 327, 620, 628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 • 2, 108, 173, 320, 619
 대한민국 임시통수부 관제 • 25, 53, 615
 대한민국 임시헌법 • 23
 대한민국임시헌장 • 22, 23, 47
 독립전쟁 • 2, 3, 4, 14, 16, 18, 19, 20, 23, 24, 29, 33, 47, 48, 50, 52, 53, 107, 108, 109, 111, 112, 170, 171, 174, 319, 320, 327, 328, 426, 427, 429, 615, 617, 619, 620, 621, 622, 627
 독립전쟁전략 사상 • 620
 독수리작전 • 329

독수리(FE)연습 • 451, 462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 151, 382, 395
 동림(東林)무관학교 • 20, 426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 • 17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 • 28
 동의회(同義會) • 12, 15, 28

ㄹ

리지웨이 • 343, 345

ㄴ

만주사변 • 11, 110, 172, 324, 325, 627
 맥아더(Douglas MacArthur) • 33, 34, 38, 116, 124, 125, 331, 334, 325, 338, 341, 395, 628
 맹호부대 • 357, 358
 무인항공기(UAV) • 104, 218, 252, 255, 596
 문맹자 퇴치 • 501, 548, 634
 문재인(文在寅) • 4, 146, 254, 266, 279, 310, 314, 496, 518, 536, 627
 미 군정청(USAMGIK) • 34, 37, 63, 616, 617, 622
 미사일사령부 • 273, 274
 민영구(閔泳玖) • 26, 30
 밀산(密山)무관학교 • 20

ㄷ

박근혜(朴槿惠) • 159, 163, 250, 251, 266, 299, 309, 496, 511, 518, 533
 박승환(朴昇煥) • 11, 18, 28
 박정희(朴正熙) • 136, 137, 141, 142, 143, 212, 213, 214, 216, 218, 220, 227, 280, 351, 352, 355, 367, 484, 508, 511, 513, 514, 515, 517, 518, 519, 550, 624, 625
 방위사업청 • 243, 244, 250, 253, 256, 303, 314, 504, 569, 570, 619, 625
 방위세 • 226, 227, 229, 505, 514, 515, 516, 517, 518
 방패계획 • 380
 백마부대 • 259, 360
 백야전전투사령부 • 473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 441, 442
 뱀부계획 • 61, 179, 616
 번개사업 • 218, 219
 베트남전쟁 • 4, 135, 136, 319, 351, 352, 354, 359, 360, 361, 363, 365, 366, 367, 368,

369, 370, 453, 480, 488, 489, 509, 510,
580, 596, 597, 600, 601, 603, 604, 627,
629, 631, 632
병영문화 • 294, 299, 302, 303, 310, 311,
313, 315, 495, 501, 526, 527, 528, 529,
530, 531, 533, 534, 535, 536, 537, 538,
541, 542, 634
병역법 • 292, 371, 439
병영생활관 • 538, 541, 542, 543, 634
봉오동전투 • 170, 321, 622, 62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567
북로사령부 • 52, 171, 320
북방한계선(NLL) • 160, 161, 418
북진작전 • 338, 628
브라운각서 • 223, 360, 368, 514
비둘기부대 • 355, 356, 360
비마부대 • 588, 590, 591



38도선 • 32, 33, 34, 37, 64, 124, 182, 200,
331, 334,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8, 376, 377, 401, 402, 616, 628
4대 군사노선 • 136, 368, 405, 514
사관연성소 • 170, 320, 426, 427, 631
상륙수부대 • 574, 575, 576, 578, 579, 580,
581, 635
상비계획 • 347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102, 103, 162, 274, 275, 305
서울진공작전 • 12, 13, 14, 28
서희부대 • 587, 588, 597, 598, 599
손원일(孫元一) • 27, 62, 72, 189, 190
수도방위사령부 • 230, 273, 274, 380, 583
수도사단 • 185, 211, 336, 341, 357, 358, 360,
442
쉬크(Lawrence E. Schik) • 34
신민회(新民會) • 19, 20, 29
신천지작전 • 599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 20, 426
신흥무관학교 • 20, 51, 52, 426, 427, 631
십자성부대 • 360
스미스 특임부대 • 335
스탈린 • 33, 36, 130, 332, 339, 345, 347



아널드(Archibald V. Arnold) • 34
아덴만 여명작전 • 606, 607, 610
아라우부대 • 609, 611, 612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 127, 347
아크부대 • 609, 611, 612, 565, 609, 610, 635
아프가니스탄전쟁 • 591, 596, 597
안중근(安重根) • 15, 16, 17, 18, 19, 28, 29
안창호(安昌浩) • 18, 19, 22, 29, 47, 108, 109,
110, 174, 255
애국기 헌납운동 • 193
에치슨(Dean G. Acheson) • 119, 332
야전훈련사령부(FTC) • 442, 443, 631
연합국방(聯合國防) • 122, 620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 33, 34, 35, 616
연합참모회의 • 68, 69, 81, 279
오쉬노부대 • 587, 588, 591, 595, 596, 587,
588, 591
유동열(柳東說) • 30, 40, 64, 67, 322
유엔군사령부 • 124, 133, 134, 151, 334, 335,
337, 342, 346, 385, 386, 394, 398, 451,
452, 63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589, 605
유엔임시한국위원단(UNTCOK) • 37, 123
유엔 평화유지활동 • 573, 575, 576, 578, 579, 635
육군교육사령부 • 89, 433, 435, 444, 449
육군대학 • 456, 457
육군본부 • 41, 68, 69, 70, 71, 72, 74, 76, 83,
88, 89, 93, 99, 100, 101, 187, 188, 198,
199, 205, 206, 273, 289, 336, 376, 411,
444, 459, 473, 474, 476, 479, 490, 577,
594, 618
육군사관학교 • 30, 61, 354, 426, 431, 432, 436,
440, 458
육군종합행정학교 • 479, 494
육군항공사령부 • 73, 193, 196, 618
육군훈련소 • 272, 545
윤봉길 • 173, 324, 428, 622, 627
을지포커스렌즈(UFL) • 444, 451, 452, 453,
462, 631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462
이동외과병원 • 140, 352, 353, 354, 355, 356,
544, 629
이라크전쟁 • 587, 588, 589, 600, 604, 608
이명박(李明博) • 159, 160, 247, 248, 250, 251,
266, 303, 305, 495, 511, 518, 530, 531,
532, 568
이범석(李範錫) • 122, 176, 322, 329, 330, 426,
428, 469, 617
이승만(李承晩) • 22, 23, 37, 39, 44, 47, 67,
107, 113, 119, 120, 123, 125, 131, 132,
134, 184, 193, 199, 330, 335, 338, 347,

395, 398, 434, 616, 620, 628, 629
 이인영(李麟榮) • 13, 14
 이회영 • 20, 29, 51, 426
 인면전구공작대 • 177, 178, 328
 인천상륙작전 • 202, 337, 338, 473, 476, 628
 임관종합평가제도 • 457
 OPLAN • 386, 387, 388, 389
 연평도포격도발 • 102, 161, 247, 248, 249, 305, 306, 307, 374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 394, 395

ㄱ

자유시참변 • 323, 324
 자이툰부대 • 587, 588, 598, 599, 600, 601, 602, 603, 604
 자주국방 • 229, 235, 236, 244, 280, 287, 369, 413, 444, 483, 484, 485, 505, 511, 514, 516, 517, 523, 563, 618, 619, 621, 623, 624, 625, 626, 627, 629, 631
 작전통제권 • 40, 94, 97, 98, 134, 165, 232, 237, 245, 248, 255, 273, 280, 285, 304, 305, 306, 307, 308, 311, 312, 383, 386, 387, 390,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62, 506, 619, 628, 629, 630, 632
 작전권 • 365, 369, 387, 398, 461, 629
 작전지휘권 이양 • 125, 398
 장기국방태세발전방향(818계획) • 280, 281, 282, 286, 618, 625
 장제스(蔣介石) • 25, 33, 111, 113, 114, 115, 324, 326, 428
 제2훈련소 • 433, 435, 437, 438, 447, 457
 조선경비대 • 40, 41, 44, 64, 65, 66, 67, 68, 71, 179, 180, 181, 183, 192, 431, 468, 616, 618, 622, 623
 조선경찰예비대 • 61, 616, 622
 조선의용대 • 57, 176, 326, 327, 428
 조선해안경비대 • 44, 62, 64, 65, 66, 67, 68, 181, 182, 183, 191, 616, 618, 622
 주월한국군사령부 • 358, 359, 360, 361, 364, 366, 369, 444, 454, 488, 629
 주한미군 • 37, 39, 67, 80, 82, 83, 92, 97, 115, 117, 118, 119, 121, 124, 127, 141, 145, 150, 151, 152, 158, 159, 181, 184, 187, 188, 192, 195, 197, 211, 214, 221, 223, 225, 232, 276, 277, 279, 280, 282, 283, 332, 335, 353, 355, 366, 368, 379, 382, 383, 386, 387, 392, 393, 394, 396, 413, 422, 429, 430, 432, 441, 443, 451, 452, 469, 487, 494,

505, 507, 514, 515, 528, 560, 623, 624, 630, 631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 124, 187, 195, 429, 441, 443, 469, 507, 528, 631
 전두환(全斗煥) • 146, 218, 228, 231, 232, 281, 511, 513, 517, 518, 519
 전략첩보국(OSS) • 58, 328, 329, 620, 628
 전력증강사업 • 89, 92, 146, 148, 215, 223, 224, 226, 229, 231, 236, 237, 241, 251, 287, 290, 368, 516, 559, 624, 629
 전시군인연합대학 • 477, 548
 전투지역전단(FEBA) • 378, 388
 전투지휘훈련(BCTP) • 459, 632
 정부조직법 • 37, 39, 48, 67, 80, 81, 96, 476, 618
 정전협정 • 78, 151, 173, 204, 208, 209, 279, 346, 348, 350, 351, 390, 393, 394, 573, 586, 620, 628, 629
 제1연평해전 • 418
 제2연평해전 • 415
 제2사관학교 • 445, 448
 제3사관학교 • 448, 449, 456
 제1차 울곡사업 • 224, 225, 226, 227, 228, 624
 제2차 울곡사업 • 148, 224, 228, 232, 624
 제3차 울곡사업 • 224, 231, 232, 233, 621, 624
 제마부대 • 587, 588, 597, 598, 599, 600, 604
 제헌헌법 • 37, 38, 39, 42, 67, 618
 지상작전사령부 • 100, 273, 300
 진해공창 • 207

ㄴ

창의대(倡義隊) • 12, 13, 14, 15, 28
 청년방위대 • 199, 200, 337, 628
 창산리전투 • 30, 172, 320, 321, 322, 622, 627
 청룡부대 • 84, 212, 357, 358, 363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 80, 81, 82, 138, 142, 210, 213, 362, 372, 377, 407, 450, 618, 624
 최용덕(崔用德) • 53, 174, 178, 179, 427
 최재형(崔在亨) • 29
 치스차코프(I van M. Chistiakov) • 35, 36

ㄷ

카이로수뇌회담 • 113
 카이로회담 선언문 • 114, 620
 카투사(KATUSA) • 338, 443
 케넌(George F. Kennan) • 116, 345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 • 462

킬체인(Kill Chain) • 251, 422

크리스마스 공세 • 341

ㄷ

태극연습 • 461, 462

태권도 교관단 • 352, 353, 354, 355, 629

태평양전쟁 • 11, 24, 58, 112, 327, 328, 617, 620, 622

통위부(統衛部) • 40, 63, 64, 65, 66, 67, 68, 183, 468, 543, 618

통합방위법 • 374, 375

트루먼(Harry S. Truman) • 33, 117, 118, 124, 334

팁스폴리트(TS) • 444, 451, 453, 459, 461, 462, 631

특수전사령부 • 273, 274, 276, 610

표

4D 작전개념 • 422, 631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 148, 381, 415, 417, 540, 556, 557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 286, 381, 415, 501, 540, 548, 555, 556, 557, 559, 560

파발마작전 • 601

판문점 • 142, 160, 346, 379, 407, 413

푸에블로호 • 81, 82, 138, 140, 142, 210, 213, 377, 407, 450, 618, 624

ㅎ

하얼빈 의거 • 17, 18, 29

하지(John R. Hodge) • 34, 38, 331

한국광복군 • 111, 112, 114, 115, 174, 175, 326, 328, 329, 428, 615, 616, 617, 620, 622, 628

한국광복군 9개 행동준승 • 26, 55

한국광복군 공약(韓國光復軍 公約) • 31, 112, 616

한국광복군 서약문 • 31, 32, 112, 616

한국광복군 선언문 • 25, 111, 326, 628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 • 27, 28, 615

한국군사원조단 • 355

한국군 현대화계획 • 214, 215, 223, 224, 514,

515, 516, 624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 422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175, 176

한미군사위원회(MC) • 146, 148, 281, 391, 394, 395, 399, 560, 630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 148, 394, 395, 399, 560

한미상호방위조약 • 351, 386, 390, 398, 421, 505, 620, 621, 629, 630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146, 151, 214, 383, 390, 391, 392, 393, 394, 396, 397, 398, 399, 421, 422, 560, 630

한미야전군사령부(CFA) • 369

한미연합군사령부(CFC) • 146, 148, 280, 36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453

한인비행가 양성소 • 174, 427

한인애국단 • 110, 172, 173, 323, 324, 428, 622, 627, 628, 631

합동군사대학교 • 162, 306, 456, 496

합동참모본부 • 3, 34, 47, 81, 88, 92, 93, 97, 98, 99, 116, 117, 225, 261, 280, 281, 284, 285, 300, 302, 303, 309, 312, 345, 372, 373, 396, 430, 444, 453, 461, 463, 590, 618, 619

항공기 현대화계획 • 212

화랑훈련 • 374, 375, 461, 462

화전양면전술 • 371, 415

향토예비군 • 142, 212, 213, 219, 224, 227, 234, 372, 411, 412, 624

해군본부 • 102, 189, 274, 275, 289, 476, 487, 592, 606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 264

해방병단(海防兵團) • 62, 63, 64, 181, 432, 543, 616

해병대사령부 • 72, 76, 84, 90, 93, 94, 101, 102, 103, 202, 274, 275, 276, 280, 473, 487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 14

핵확산금지조약 • 135, 415, 420, 569, 570

허위(許藹) • 13, 14, 28

호국군 • 41, 71, 197, 198, 199

홍범도 • 15, 18, 29, 52, 53, 109, 171, 320, 321, 627

■ 집필

김 승 기(국방사부 부장): 제1~5장

최 정 준(국방사부 연구원): 제6~10장

■ 자문/감수

박 민 형(국방대학교 교수)

서 우 덕(고려대학교 교수)

윤 규 식(전 국방정신전력원 교수)

이 필 중(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장 삼 열(전 국방사부 부장)

허 남 성(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 주 미(국립국어원 교수)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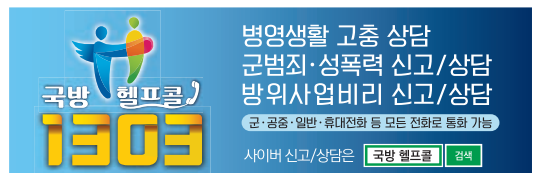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국군인쇄창 편집디자인과
인쇄 국군인쇄창 M20060526



신고유형 군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통/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상급내역 간첩선·간첩: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c.mil.kr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

